

차 례

발간사	1
여수 오동도 동백꽃	2
진 혼(鎮魂)	4

제1장 여명의 여순사건

여수·순천에 있어서의 근대 봉기와 민중

樋口雄一

I. 머리말	7
II. 8·15 이후의 남조선 민중의 봉기	8
III. 봉기와 그 개요	9
1. 민중에 대해서	12
2. 반우파투쟁	12
3. 인민위원회 방위의 싸움	13
4. 봉기 후	14
IV. 맺음말	15

여 순 항 쟁

황 남 준

I. 머리말	17
II. 분단국가의 출범	17
1. 국방경비대(내부조직의 취약성과 군·경 관계)	18
2. 남로당의 조직과 그 한계	22
3. 민생(民生)문제	24
III. 여·순사건	30
1. 해방이후 전남동부지방의 정치	30
2. 사건의 전개	34

가. 반군의 제14연대와 여수읍 장악	34
나. 그 확대	36
다. 진압작전과 게릴라의 출현	38
3. 탈환후의 여·순지구	40
VI. 맺음말	42

여순사건의 배경과 전개과정

안 종 철

I. 머리말	43
II. 여순사건의 발생배경	44
1. 직접적 배경	44
가. 여수 14연대의 창설과 구성	44
나. 군과 경찰의 갈등	48
다. 남로당의 침투와 숙군 작업	50
2. 간접적 배경	53
가. 전남동부지방의 정치상황	53
나. 여수, 순천지방의 정치 사회적 상황과 여순사건	57
III. 여순사건의 전개	59
1. 14연대의 반란	59
가. 여순사건의 발발	59
나. 순천과 인근지역으로의 확산	64
2. 진압군의 출동과 진압과정	66
가. 토벌사령부의 설치와 순천지역의 탈환작전	66
나. 여수와 인근지역의 탈환작전	73
3. 반란치하의 여순지방	78
가. 반란군의 초기 활동	78
나. 반란군의 인민행정 실시	80
IV. 여순사건의 결과	84
1. 여순사건의 영향과 피해	84
가. 반란군 및 동조세력 처벌	84
나. 여순사건의 피해상황	86

2. 여순사건의 정치적 함의	88
가. 우익세력의 조직화	88
나. 여순사건이후의 정세	89
다.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을 제언	90

이승만정부의 여순사건 대응과 민중의 피해

김 득 중

I. 머리말	91
II. 여순사건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대처	92
1. ‘혁명의용군사건’을 통한 김구 세력의 견제	92
2. 여순사건의 주체로서의 공산세력 설정	97
3. 정부와 국회의 대립	102
4. 정부의 계엄령 발포 문제	106
III. 부역자 색출과정과 민중의 피해	115
1. 부역자 색출과정	115
2. 황두연·박찬길·송옥의 경우	123
가. 황두연	123
나. 박찬길	128
다. 송옥	133
3. 학생참가 문제	136
4. 고등군법회의와 민중의 인명·재산피해	146
IV. 맺음말	153

제2장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해법

전남지방의 정치상황과 여순사건

안 종 철

I. 머리말	156
II. 이승만 정권 수립전후 전남지방의 정치지형	157
1. 해방 후 전남지방의 정치상황	157
2. 전남동부지방의 정치상황	160

3. 여순지방의 정치 사회적 상황	161
4. 여수 14연대의 창설과 구성	163
5. 군과 경찰의 갈등	164
Ⅲ. 여순사건의 영향	166
1. 여순사건의 정치적 함의 : 우익세력의 조직화	166
2. 여순사건이후의 정세	167
3.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을 제언	168

여순사건과 군 -육군을 중심으로-

노 영 기

I. 머리말	169
Ⅱ. 여순사건의 배경	170
Ⅲ. 여순사건의 발발과 전개과정	177
Ⅳ. 여순사건의 영향	184
V. 맺음말	188

文獻資料와 證言을 통해본 麗順事件의 피해 현황

홍 영 기

I. 머리말	190
Ⅱ. 문헌자료에 보이는 피해현황	191
Ⅲ. 증언을 통해본 피해현황	198
Ⅳ. 맺음말	203

제3장 여순사건의 진상과 국가테러리즘

여순사건과 제임스 하우스만

김 득 중

I. 머리말	206
Ⅱ. 한국부임 이전의 하우스만	209
Ⅲ. 한국군 형성과 하우스만- ‘국군의 아버지’	210

IV. 여순사건 진압의 계획자 - 학살의 말뚝	215
V. 한국정치사와 하우스만의 개입	225
VI. 맺음말	228

여순사건 왜곡보도의 과거와 현재

정 지 환

I. 프롤로그 : 칼-마이던스 기자의 5가지 시각	230
II. 여순사건 전후 한국 언론의 상황과 논리	232
III. 여순사건 왜곡보도의 과거	235
IV. 여순사건 왜곡보도의 현재	243
V. 에필로그 : 냉전에서 화해로 가는 길목의 3가지 삽화	250

여순사건의 진상과 민간인집단학살

이 영 일

I. 여순사건의 영향	253
II. 여순사건의 진상	256
1. 당시 전남지방을 중심으로 한 남한사회의 사회적 배경	256
2. 국방경비대의 성격과 위상	258
3. 봉기의 배경과 전개 과정	259
4. 진압에 참여한 주요 지휘관들의 성향	266
5. 이승만 정부의 정치적 대응과 국가폭력	268
6. 초법과 무법적인 상태의 계엄법과 국방경비법	272
III. 유형별로 본 여순사건의 집단학살	276
IV. 맺음말	278

제4장 민간인학살 특별법제정실태와 현 주소

여순민중항쟁의 실체와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

허 상 수

I. 사건 실체에 대한 예비고찰	282
-------------------------	-----

II. 여수·순천민중항쟁사건 등 진상규명 및 피해배상특별법 제정의 당위성과 시급성	284
1. 시대적 이유	284
2. 정치적 이유	287
3. 법률적 이유	288
4. 역사적 이유	290
5. 윤리적 이유	291
6. 경제적 이유	292
7. 사회·심리적 이유	292
8. 문화적 이유	292
III. 1980년 광주, 1951년 거창, 1948년 제주4·3사건특별법 제정과 운영의 문제점	293
IV.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및 피해배상 특별법 제정의 기대효과	295
참고자료 :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학살 관련 청원 및 법안 목록	296

조례제정권과 여순사건 조례(안)에 대하여

박 갑 주

I. 머리말	299
II.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등에 대하여	299
1. 조례제정권의 근거와 쟁점	299
2. 조례제정권의 범위	300
3. 조례와 법령의 관계 - 法令優位の 문제	301
4. 法律留保의 문제	302
5. 조례에 대한 사법심사 또는 규범통제	303
III. 여순조례에 대한 검토	303
1. 자치사무인지 여부	303
2. 法令優位の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304
3. 法律留保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305
IV. 맺음말	305
참고자료 1	306
참고자료 2	310

제5장 청산하지 못한 역사, 어떻게 할 것인가?

여순사건 국가폭력의 위법성과 진상규명의 방향

이 영 일

I. 머리말	316
II. 여순사건 국가폭력의 유형과 위법성	316
1. 유형별로 본 여순사건의 집단학살	318
2. 초법과 무법적인 상태의 계엄법과 국방경비법	320
III. 향후 진상규명의 방향과 과제	324
IV. 맺음말	326

제주4·3특별법과 과거청산

김 창 후

I. 머리말	328
II. 과거청산의 의미와 원칙	329
1. 과거청산의 의미	329
2. 과거청산과 관련한 기존 논의	330
가. 주아네 보고서의 인권기준	330
나. 광주민주화운동의 청산 5원칙	330
III. 제주4·3특별법과 과거청산	331
1. 제주4·3특별법의 실행과 4·3항쟁의 과거청산 현실	331
2. 성과	332
가. 정부의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발간	332
나. 제주4·3평화공원 조성 및 제주4·3유적 보존·복원/집단암매장지 발굴 사업	332
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희생자 신원	332
3. 과제	333
가. 4·3특별법의 개정	333
나.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의 문제점 보완	334
IV. 맺음말	336

제6장 학살·청산·화해

여순사건과 민간인학살

김 득 중

I. 여순사건의 영향	338
II. 여순봉기의 우발성과 지속의 불가피성	341
III. 여순사건의 실패와 보복으로서의 민간인학살	344

여순사건과 군대의 변화

노 영 기

I. 머리말	353
II. 여순사건의 배경과 발발	354
III. 제14연대의 경로와 진압군의 대응	356
IV. 진압부대의 주요 지휘관과 미군의 역할	359
V. 맺음말 - 여순사건이 남긴 것	362

여순사건과 4·3항쟁에서의 민간인 학살 유형

김 창 후

I. 머리말	365
II. 미군정 및 이승만(李承晩) 정부의 대응	365
III. 제주도에서의 국방경비대 초기 토벌작전과 브라운 대령의 4·3 진압책	367
IV. 민간인 학살	370
1. 초토화작전의 시작	370
2. 민간인 학살의 유형	371
V. 향후 과제(맺음말에 대신하여)	372

제7장 진실과 화해의 역사를 위하여

해방 후 빨치산 무장투쟁의 역사

김 무 용

I. 머리말	375
II. 해방 후 무장투쟁의 전개과정	376
1. 야산대의 조직과 활동	376
2. 여순민중봉기와 유격전구의 형성	377
3. 9월 공세와 아성공격	379
4. 유격대 남파	380
III. 한국전쟁과 무장투쟁	381
1. 인민군 진격과 당 재건	381
2. 6개도당회의와 남부군 조직	383
3. 제2전선과 유격지대로 개편	384
4. 휴전논의와 유격대 체제 개편	385
5. 휴전 후의 빨치산	388
IV. 맺음말	389

성문화된 관습형법? - '국방경비법'의 인권문제

조 용 환

I. 머리말	390
II. '국방경비법', 왜 문제인가	391
III. 미군정법령과 관보	392
1. 미군정과 관보	392
2. 미군정의 법령체계와 '국방경비법'	393
가. '군정법령'의 종류	393
나. '군정청법령'과 '법률'의 효력	394
다. 미군정의 '죄형법정주의'	395
라. 공포된 군정법령과 법률	395
마. '국방경비법'의 문제	396

IV. 국방경비법, 법인가?	397
1. '남조선과도정부법률'이 아닌 국방경비법	397
2. 1948년 7월 5일에 공포되지 않은 국방경비법	398
3. 국방경비법이 수록된 '법령집'의 문제점	398
4. 미군정의 관보와 법령집	399
5. 국문판법령집과 영문판법령집의 차이	400
6. 미군정의 활동기록과 국방경비법	400
가. 자료대한민국사	400
나. 미군정 활동보고서	401
V. 국방경비법의 법형식상 모순	403
1. 조선경비대, 군대였나?	403
2. 조선경비대와 해안경비대의 변천	403
3. 국방경비법과 조선경비대의 법형식상 모순	404
4. 미군정 당시의 법원과 재판: 군사재판소와 군사재판	405
VI. '국방경비법'의 내용과 형식의 문제	406
1. 미군정법령의 형식	406
2. 국방경비법의 형식과 내용	407
3. 공포일과 효력발생일의 모순	408
VII. 국방경비법에 대한 법무부와 법원의 태도	408
1. 법무부의 주장: 법률의 '추정'?	408
2. 법무부 주장의 모순	410
가. 조선(국방)경비대 및 해안경비대의 설치에 관한 법령	410
나. '계간'의 문제	410
다. 관보와 '추정'의 문제	411
3. 법원: 억지와 무시	412
가. 대법원의 판결	412
나. 대법원판결의 모순	413
VIII. 맺음말	415

지리산과 민중의 역사

이 영 일

I. 머리말	418
II. 지리산과 민중의 역사	419
III. 지리산의 현대사	422
1. 지리산과 빨치산	422
2. 토벌과 집단학살	423
3. 국가폭력과 제노사이드(Genocide)	426
IV. 맺음말	428
1. 민간인학살 문제,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가?	428
가. 정부의 기본입장 정립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428
나. 국회차원에서의 특위구성과 특별법 제정	429
다. 국가의 정보 공개	431
라. 국가의 공식적인 사죄, 피해자 명예회복	432

지역운동과 여순사건

이 영 일

I. 머리말	434
II. 지역의 정체성과 여수의 역사 개론	435
III. 여수의 정체성과 운동의 방향	435
1. 역사적 정체성과 운동의 설정	435
2. 반민족세력 권력과 부의 재생산	436
IV. 여순사건의 개요와 역사적 의미	437
1. 여순사건의 개요와 영향	437
2. 여순사건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관점	440
3. 지금까지의 정부의 대응	441
V.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운동	441
VI. 맺음말	443

麗順事件에 관한 자료의 성격과 연구 현황*

홍 영 기

I. 머리말	445
II. 여순사건에 대한 자료의 특징과 연구시각	446
III. 여순사건의 배경과 원인	453
IV. 여순사건의 전개과정과 성격	459
V. 맺음말	467

발간사

진실의 강, 화해의 바다를 위하여

역사는 뛰어난 정화능력을 가지고 도도하게 흘러가는 살아 있는 강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역사의 생태계가 심각하게 상체기가 나고 악취가 진동할 정도로 오염이 되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원상태는 아니지만 복원될 수 있습니다.

과거 집권세력에 의해 인권이 유린당하고 진실이 감춰진 한반도의 눈물의 역사도 이제 그 진실의 속살이 하나둘 드러나면서 정화의 큰 강줄기를 댔습니다. ‘거창 사건’, ‘제주4·3 사건’, ‘광주민중화운동’ 등에 대한 진실이 밝혀졌고, 작년에는(2005년 5월 3일) 국회에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이 통과되어 구체적인 활동에 들어간 것입니다. 올해부터는 친일재산환수도 가능해졌습니다.

그 동안, 인원과 재정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수지역사회연구소도 여수 순천 사람들이 일으킨 반란으로 매도된 어둠의 강을 복원하기 위하여 공을 들여왔습니다. 실태조사 보고서도 발간했고, 수차례 학술대회도 가진바 있습니다. 해마다 추모행사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아 놓은 자료들은 거의 이런 활동의 결과로 얻어진 성과품입니다. 독자들은 이 논문들을 통해서 그 동안 상상외로 왜곡되었던 여순사건 진실의 강바닥을 어느 정도 들여다 볼 수 있을 것이며 위정자들이 저지른 국가 폭력의 위법성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희생당한 분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화해의 바다로 나아가는 길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는 이 자료가 한반도 눈물의 역사를 닦아주는 세정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연구소의 의미 있는 활동에 기꺼이 참여해 주시고 좋은 논문을 발표해 주신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회원들의 감사한 마음 가득 담아 전합니다. 이 논문집이 나오기까지 당 연구소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국장으로 운동(Movement)의 현장을 옮기신 전임 이영일 소장의 공이 컸다는 사실도 여기에 적시해 두고자 합니다. 편집을 맡은 연구소 회원 여러분들의 수고도 진하게 배어 있습니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앞으로도 ‘더불어 사는 밝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 데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파괴되고 오염된 역사의 강에서 여순사건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찾는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없는 질정을 기다립니다.

2006. 4.

이사장 김 준 옥

여수 오동도 동백꽃

문 병 란(시인)

여수 오동도 동백꽃이
무슨 빛깔인가
붉다 못하여
그 빛깔 사뭇 핏빛인 것을...

누구를 위하여 그는
50년간 피눈물 속
진한 핏빛으로
통곡해야 했는가.

我와 非我的 구분도 없이
敵과 同志의 분별도 없이
남의 총 남의 칼 손에 들고
형제의 가슴에 처절히 뿔었던
민족 분단의 눈 먼 총소리.

옥과 돌이 구분 없이
한꺼번에 마구 타버리고
이념과 사상이
눈 먼 애비가 된 캄캄한 밤
길 잃은 심청이는
애비의 지팡이보다 칼을 쥐고 있었느니라.

하룻밤 폭풍에 찢긴
여수 오동도 동백꽃은
어머니 가슴 쪽빛 바다에
제 그림자 드리우고
갈기갈기 무너진 가슴
갯더미 불바다 위에서
어버이는 땅을 치며 통곡했느니라.

잘못 핀 동백꽃
너무 일찍 핀 진달래
그 눈먼 꽃을 위하여 다시 봄바람 불러오고
그날의 심봉사를 위하여
그날의 심청이를 위하여

여기 부르지 못한 노래를 쓴다
태우지 못한 향을 사르고
흘리지 못한 눈물을 태운다
원수고 동지고 한 자리 불러 모아
역사여, 거꾸로 흐르지 못하는
대하의 강물 줄기여,

오늘 이 자리 고개 숙이고
여수 오동도 동백꽃
이름 없는 돌비 앞에
늦어버린 속죄의 조가를 읊조린다.

“오오 그대들은
이제 죽음 속에 무죄이니라”

진 혼(鎮魂)

- 통곡조차 죄가 되던 세상, 떠도는 혼령이여 -

조 계 수(시인)

시월이 오면
어혈을 풀지 못한
여수 앞 바다는
굽이굽이 갈기를 세워 달려든다.

신월리에서
만성리에서
가막섬 애기섬을 돌아오는
저 외치는 자의 소리여,

그 소리결에
천년을 두고도 늙지 않는 바람이
오동도 시누대 숲을 흔들어 깨운다.
반세기 가려진 햇빛이
비늘을 벗는다.

살아서 죽은 자나
죽어서 산 자나
이제는 입을 열어 말할 때

오! 그날 밤
하늘마저 타버린 불길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었다.

눈먼 총부리에 쓰러진 그들은
제 살 제 피붙이었다.

밤 새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찾아
피문은 거적을 들추는
어미의 거친 손
통곡조차 죄가 되던 세상
그 핏물 스며든 땅에
썸바귀, 지칭개, 민들레
들꽃들은 다투어 피어나는데,

아직도
어두운 흙 속에 바람 속에
두 손 묶여 서성이든 혼령이여,
- 자유하라,
그대들을 단죄 할 자 누구도 없나니 -

허물을 털고 일어서는 진실만이
용서와 사랑의 다리를 놓는 법,
그 다리를 건너오는 아침을 위해
눈감지 못하는 하늘이여,
다물지 못하는 바다여,
50년 바람 속에 떠도는
호곡을 그치게 하라.

제1장 여명의 여순사건

여수·순천에 있어서의 근대 봉기와 민중	7
여 수 항 쟁	17
여순사건의 배경과 전개과정	43
이승만정부의 여순사건 대응과 민중의 피해	91

여수·순천에 있어서의 근대 봉기와 민중

樋口雄一¹⁾

I. 머리말

박정권의 민중에 대한 억압은 변함없이 계속되어지고 있고 이를 지지하고 있는 일본의 정치상황도 변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경제적 日韓一體化의 방향은 게다가 강화되고 있다. 이것을 받아드린 일본인측 중에서도 무관심과 박정권의 억압이 일본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행해지고 있다고 하는 인식은 알고 먼 나라의 일로서 받아드리는 경향이 강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일본인에 있어서 조선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인식하려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일까?

그 하나로써 일본인이 일찍이 조선민중의 지향을 평가하지 않고 일본제국주의 식민지 정책을 기반으로 전쟁의 잘못된 길을 걸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부터 가르치려고 한다는 것이다.

지금부터 현재 필요한 것은 조선인의 지향을 보다 깊숙하게 이해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진다.

이것은 일본인과 일본인의 실정을 어떻게라도 연결해서 일본인의 좌표를 가리키는 것

1) 樋口雄一(히구찌 유우이찌) 선생은 1940년생으로 현재 가나가와(神奈川) 縣立 公文書館 향토 자료과에 근무하고 있으며, 일본에 있는 조선사연구자들의 단체인 '조선사연구회' 회원이다. 1967년에 『麗水・順天蜂起』, 『朝鮮研究』62 라는 논문을 썼고, 1976년에는 『麗水・順天における軍隊蜂起と民衆』, 『海峽』4, 社會評論社를 발표했다. 당시 아무도 여순사건에 관심을 가지지 않던 시기에 선생은, 이 두 논문으로 한일민중간 연대와 박정희 군사정권에 대한 비판을 행한 것이다. 여순사건은 한국 민중에 의한 중요한 운동이라고 생각한 선생은 제대로 된 자료를 구할 수도 없고, 인터뷰도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이나 일본에 있는 자료를 구할 수 있는 데까지 모아 논문을 작성했다고 한다. 이런 사정으로 한동안 히구찌 선생은 한국입국이 거부되었지만, 지금은 자유롭게 왕래하고 있다. 『麗水・順天における軍隊蜂起と民衆』, 『海峽』4, 社會評論社이라는 논문은 몇 년 전까지도 불온문서로 관리되고 있었다. 히구찌 유우이찌의 저서로는 『協和會-전시하조선인 통제조직의 연구』, 사회평론사, 『황군병사가 된 조선인』, 사회평론사, 『전시하 조선의 농민생활지 1939-1945』, 사회평론사, 1998, 공저로는 『조선현대사의 수인』 『神奈川の 한국・조선인』, 편저 자료집으로는 『協和會 관계자료집』, 녹음서방, 『協和會 年鑑 복각판(해제)』, 사회평론사 등이 있다.

에도 연결된다. 그러나 일본인이 일본인의 자아의 모습을 묻기 때문에 조선 민중의 지향, 실정을 받아드리려고 해도 日·米·韓 지배층의 두터운 벽에 의해서 장애를 받아 민중과 대화하고, 그 지향을 아는 것은 곤란하다.

이 쓰여진 글은 조선 민중의 지향을 알기 위한 작업으로서 1945년 이후 조선 민중의 역사적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썼지만, 이 연구는 적다. 이를 위한 시도로써 여수 순천에 이르는 군인 시민의 봉기에 대해서 다루어 보고자 한다.

II. 8·15 이후의 남조선 민중의 봉기

여수 순천봉기라고 말해도 일본에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지만 1949년 10월 19일부터 시작된 광범한 군인, 시민의 반일, 반대한민국, 반미 투쟁을 가리키고 있다.

이 봉기의 전제로서 8·15이후에 이르는 남조선에 이르는 조선민중의 처해진 상황과 그 지향에 대해서 그 개념을 총괄해 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조선인에 있어서 1945년 8월 15일 일본 제국주의 패복은 해방 그것이다. 그날부터 자신의 권력을 확립하기 위한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진다. 다양한 계층을 포함하면서도 각지에 인민위원회가 결성되어, 행정이 행해졌다.

소련 점령하의 삼팔선 이북에서는 문제를 포함하면서도 인민위원회 행정은 진행되었고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사람들은 비판받은 사회체제가 준비되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점령하의 삼팔선 이남에서 실시되어진 군정은 자주적으로 전개하고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던 인민위원회를 부정하는 것이었다. 또, 그 점령행정의 기초에는 일본의 통치기구를 그대로 유지 계속한다고 하는 정책이었다. 이 소련과 미국 점령정책의 차이가 조선민중에 최대 장애를 초래시키는 것이 되었지만, 그중에서도 미국이 일본의 통치기구를 그대로 살려서 통치하는 점령방식은 조선민중에 있어서 참을 수 없는 것이었다. 조선민중에 있어서 강제된 일본 人名을 부정하고 조선 人名을 자신의 이름으로 갖기 시작하면서 생활, 사상 등 모든 사회 상황 중에 포함되어 있는 일본적 영향의 제거야말로 신생 조선국가와 거기에 많은 인간상을 형성하는 위에서 빠트릴 수 없는 기초적 조건이었다.

8·15이후는 반일, 반제국주의 사상이 조선민중의 지향이 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이것을 정면으로부터 부정하는 것이 미국점령 통치였다. 점령기간이 길었지만 점령 그 자체가 일본 제국주의로 바뀌어진 미국적인 식민지 재편논리임에 틀림없는 것이 민중의 눈에 보이게 되어졌다. 남조선에서는 삼팔선 이북에서 실시된 토지개혁을 시작으로 하는 민주적諸개혁과의 差를 眼前으로 해서 미국의 정책에 비판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났다.

조선민중은 반일 반제국주의라고 하는 지향성에 보태어져 반미라고 하는 지향을 가지게 되었다. 반미를 조선민중의 사조의 기조로 하는 것에 결정적인 역할이 되었던 것이 조선의 분단을 고정화시키고 미국의 꼭두각시 정권을 수립하기 위해 남조선만으로 단독선거를 실시한다고 하는 정책이었다. 남조선 민중에서 소위 단독선거 반대투쟁이 광범위한 민중의 참가를 기반으로 일어나게 되었다.

여기에는 우파로 오랫동안 조선의 독립운동을 계속해 오고 있던 김구등도 참가했다. 미국의 정책은 독립하면서도 일본 제국주의가 남긴 경찰력을 중심으로 우익세력의 광폭한 탄압하에 傀儡정권, 대한민국을 탄생시켰다. 중심인물은 오랫동안 미국에서 생활하고 돌아왔던 이승만과 일본에 협력했던 유력지주, 관료에 의해서 구성되었다. 대한민국 치하에 있어서는 남조선노동당은 말할 것도 없이 노동조합, 농민단체는 활동을 할 수 없는 비합법화에 놓여졌다. 신문, 통신사에 대한 탄압이 더해졌다. 민주주의적 자유조차 없는 상황에 놓여진 민중은 반대한민국을 그 기조로 삼게 되었다. 남조선 민중 속에 있었던 일본의 사상적 영향이나 봉건적 諸관계등 負의 조건은 존재했지만 기본적으로는 新생활과 新국가건설을 원했던 민중의 저항은 짓밟혀진 상황 하에 놓여 졌다고 말할 수 있다. 남조선 민중의 눈에는 일본 제국주의 그것에 대한 비판이 민중의 기조, 지향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III. 봉기와 그 개요

민중의 지향이 전혀 부정되어 버렸던 것같이 보였던 1948년 10월 19일은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병사들에 의해 봉기는 행해지게 되었다.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성립하여 불과 65일 후의 일이다. 봉기의 무대가 되었던 여수·순천은 조선남부, 전라남도의 주요 도시이다. 봉기중심이 되었던 여수는 조선有數의 港都였다. 봉기는 조선분단을 결정적으로 한 단독선거에 반대해서 무장투쟁을 전개하고 있었다. 제주도 민중탄압을 위해 출동명령이 내려져 여수에 대기하고 있던 제14연대의 하급병들에 의해서 행해졌다. 봉기는 여수에 멈추지 않고 내륙부의 순천, 보성 등으로 퍼져 전투가 진행되어진 일대 민중봉기였다. 여기에서는 중심이 된 여수 상황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그 봉기가 가진 의미를 밝혀 보고 싶다.

왜, 국가권력에 충실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군이 봉기했던 것인가, 그것은 병사 자신도 민중의 한 사람으로써 그 지향은 軍外민중과 똑같이 반일을 기조로 하고, 통일된 新국가의 건설을 틀림없이 희망했기 때문이었다. 남조선에 있어서 군조직은 미국군의 지휘하에 조직되었다고는 할지라도 새롭게 편성된 조직이기 때문에 군내의 사상은 비교적 자유로운 것이었다. 그 봉기를 지도했던 지창수는 연대의 인사계로, 남조선 노동당의 연대내 조직 책임자

라고 하고²⁾, 또 연대장인 오동기는 이승만 정권에 대립하는 한독당계의 인물이었다고 알려지고 있다.

때문에 이 봉기 후에 4700여명(구성비로 5%)에 달하는 軍內肅清이 실시되어, 軍內部부터 민중적 지향을 가진 사람을 추방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였다. 또, 8만여 사람들이 살해되었다고 불리워진 제주도 민중봉기에 대해 군대의 지휘관에게는 진압측의 군내에 민중에 호응하는 자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일본군 출신자가 그 사상적 建全을 바꾸어서 그 임무에 맡겨졌다고 한다.

게다가, 그 14연대는 광주에 있었던 제4연대의 1개 대대를 중심으로 봉기 전 불과 5개월전의 48년 5월에 새롭게 편성되어진 연대로 하급대원은 민중의 지향을 솔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민중과 가장 가까운 지향을 가졌던 군내 병사의 대부분은 계급적으로도 농민출신자가 많았었다고 하는 요소도 더해져서 조선을 분단하는 단독선거에 반대하는 제주도민중을 살육하는 것에 반대했던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보았다.

비상나팔에 의해 모였던 제14연대 3천여명에게 지창수가 경찰타도 제주도 출동 거부, 남북통일에 의해 인민군으로써 행동하는 것을 호소했을 때 대부분의 병사는 환호로 답한 것은 당연했다³⁾. 여기에 경찰타도의 슬로건이 있는 것은 당시 경찰의 이승만, 미군정의 충실한 하수인으로써 민중에 대한 일상적 억압은 민중, 병사들의 분노를 사서, 군의 병사는 비판적으로 이것을 보고 있던 것을 나타내고 있다. 10월 19일 오후 8시쯤부터 행동을 시작한 병사들은 병기, 탄약을 확보해 연대의 전원이라고 말할만한 3천여명이 일어서서 신월리에 있는 기지에서부터 자동차로 분승해서 여수 시내로 돌입했다. 우선 경찰을 공격하고 경찰서를 점거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시내에 있어서 약 600명의 좌익단체와 학생들은 즉각 반란부대와 합류해 그들의 선도로 각 공관 공서 등 중요기관을 공격했다⁴⁾고 하는 점이다. 또 20일 오전 9시에는 여수를 완전히 장악하고 인민위원회가 조직되어 20일 오전 9시 20분에는 제2봉기의 중심이 된 순천시를 향해서 봉기군의 일부가 나아가고 있었다.⁵⁾ 이 整然으로 한 더구나 준비된 행동이 되어진 것은 남조선 노동당 당원들에서였다.

3천여명의 병사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진 군내의 동원과 여기에 호응할 수 있는 시내 당원들의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整然된 여수 점거가 성공된 것이라라고 말할 수 있을

2) 이 봉기가 빨치산투쟁에 이행되고부터는 김지회 홍순석등 장교가 봉기군을 지휘를 행하고 있었다.

3) 김정곤 著, 한국전쟁과 노동당전략 博英社간에 의함.

4) 김정곤 著, 前掲書에 의함.

5) 이 시간에 대해서는 자료에 의해서는 틀리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김정곤 著의 前掲書에 의했다.

것이다. 이 시기에 남조선 당원과 그 활동가들의 일에 대해서는 불명의 점이 많지만 이것은 당시 어쩔 수 없이 비합법화 지하활동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조선 노동당의 주장은 반일 반제국주의 통일국가건설, 인민위원회 활동지지 등을 통해 대중적 지지를 받은 기반을 가지고 있고 그 영향력은 강했었다고 생각된다.

어쨌든 여수시민에게 이 봉기는 어떻게 받아들여졌던가, 민중의 지향을 어떻게 반영되고 있었던가.

봉기군이 여수를 유지하고 있었던 10월 27일까지의 17일간을 중심으로 그 사실을 검토해 보고 싶다.

민중의 참가 10월 20일 오전, 인민대회의 포스터가 도처에서 붙여지고 前月の 9월 9일에 성립된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가 여수시내에서 펼쳐졌다. 제주도 출동거부 병사위원회가 발표한 성명서가 시내에 붙여졌다. 이 내용도 제주도출동 절대반대, 미군도 소련의 모범처럼 즉시 철퇴해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만세 등이었다고 한다. 남조선 노동당은公然化되고, 당위원회가 설치되고 인민위원회도 발족됐다. 오후가 되자 대모행진이 행해져 3시반에는 중앙동 광장에서 약 4만⁶⁾의 민중이 참가한 인민대회가 열렸다. 이 인민대회에서는 의장에 이용기, 박채영⁷⁾ 등 5명이 선출되어 노동조합, 농민조합, 여성동맹, 청년대표가 각각 연설을 했다고 한다. 연설을 한 사람들은 여태까지 비합법운동으로 쫓겨 당했던 민애청, 합동노조, 교원노조가公然化되고 그 대표자 연설을 했던 것이다. 현재로서는 연설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후에 발행된 여수인민일보에 의하면 대응과 같은 결의를 하고 인민대회는 종료했다.

- (1) 인민위원회의 여수행정기관접수를 인정한다.
- (2)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대한 수호, 충성을 맹세한다.
- (3) 대한민국의 분쇄를 맹세한다.
- (4) 남조선정부의 모든 법령의 무효화를 선언한다.
- (5) 친일파, 민족반역자, 경찰등을 철저히 掃蕩한다 등이었다.⁸⁾

인민위원회의 위원장에는 여수여자중학교 교장 송옥이 취임했다.

그 외 여수 군청 등 행정기관의 접수는 20일 후에 행해졌다.

이후, 27일 오후 1시경까지 여수가 완전하게 정부군의 통치하에 들어갈 때까지 인민위

6) 이 숫자는 金原植 著(실록남로당 新現實社刊에 소개되어 있는 것을 소개한 당시의 여수인구는 약8만명이라고 말하고 있다.

7) 나중 여수인민보의 발행인이 되었던 인물.

8) 결의는 六항목이었다고 한다.

원회를 중심으로 이와 같은 일이 행해졌다.

1. 민중에 대해서

우선, 행정기관의 접수가 행해졌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하부직원은 그대로 근무하고 과장 이상은 能免되었다고 한다. 시민에 대해서는 지하양발을 배급하고 쏘시민 1인당 쌀 3합을 배급했다. 또, 금융기관이나 산업직장은 종업원들에게 그 운영을 위임하고 시민에 대해서 돈의 대출도 행해졌다. 봉기했던 병사들에게는 담배도 배급되었다. 게다가 상세한 내용은 不明하지만 24일에는 여수인민일보가 발행되어 여수인민에 호소한다. 제주도출동거부 병사위원회의 성명이나 20일 인민대회의 모습을 내용으로 한 것이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인민위원회의 행동은 상당히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서 실시된 개혁의 영향도 받고 있었다고 생각되어지지만 민중에 있어서 특히 불리할 것 같은 것도 없었다고 여겨진다. 대중에 해를 가지고 손실이 될 것 같은 행동은 현재 남조선에서 발행되고 있는 남조선의 공포를 강조하는 諸자료에 넣지 않는 것이 그 옳다고 말할 수 있다. 인민위원회의 諸방침은 민중에 있어서 오히려 기쁜 것이고, 당시 민중의 경제생활의 어려운 상황으로 하면 어찌되었던 간에 개혁을 바라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당할 것이다. 민중의 개혁이 희망으로 그렇게 행해졌던 것이다.

2. 반우파투쟁

전에도 언급했듯이 경찰은 일본의 기구와 조직, 인간을 그대로 끌어 들였다. 특히 일본인의 앞잡이로서 조선인 동포의 억압에 가담해하고 있던 조선인 경찰관에 대해 민중의 울분은 무시무시하게 8·15직후에는 몇 명인가가 민중에 의해서 살해당했다. 이들의 경찰관도 미군정의 하수인으로 다시 민중억압에 착수해 가장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었다.

또 우파로써 소련 점령정책하에 토지개혁에 있어 남하해 왔던 일부는 우파 테러리스트로서 경찰과 함께 노동조합파괴활동을 행하고 있었다. 인민위원회 그 자체의 존재도 경찰에 의해서 탄압을 받고(직접적으로는 미군정령에 의하지만) 있었기 때문에 경찰과 고정된 투쟁이 없어서는 인민위원회의 존재도 봉기했던 군·시민들의 소원도 달성할 수 없는 것이었다.

20일에는 여수경찰서장이 처형되고 이후 우파 테러리스트등도 포함해 심사위원회에 올려진 위에서 처형당했다⁹⁾. 합계 수십명에 달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일반 민중이 공포

정치하에 놓여졌다. 혹은 공산주의의 본질을 나타낸다. 상황하에 놓여졌다고 하지만 이 주장은 테러리스트 경찰관측에서만 평가이고, 민중의 평가로는 다른 것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권력자에 의해서 공포정치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은 명백하고 처형상황의 기술에 현재 남조선의 출판물에도 대중이 이유 없이 처형된 기록은 없다.

3. 인민위원회 방위의 싸움

여수에 직접 정부군의 공격이 시작된 것은 24일 되고부터 봉기 후 이미 5일 정도 지난 뒤이다. 정부가 총력을 다해서 공격을 해도 24일까지는 순천 등 点과 線을 확보하는 데에 지나지 않았다. 탄압에 출동했던 군대 그 자체가 봉기군에 협력하고, 일어섰다고 했던 혼란도 있고 해서 여수에는 전혀 손이 닿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순천, 보성예의 봉기로의 전향과 민중의 참가는 진압을 늦게 만들었다.¹⁰⁾

24일의 제1차 여수공격은 여수 교외의 미평리 부근의 전투이고, 그 전투는 정부군 사령관까지 부상당하고, 실패했다. 역시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여수에 있어서 정부군의 전투는 벌써 봉기군이 철퇴했던 후의 시민, 민중에 대한 탄압 전쟁이었다고 하는 것이다.

이 시기의 전투부대에겐 즉결권이 부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각소에서 처형된 예도 있고 시내도처에서부터 총격해움으로써 시민층에 커다란 희생이 생기는 것은 확실하다. 26, 27일의 탄압에서 1200명에 달하는 사람이 학살되었다고 하는 자료가 있지만 이것은 적은 계산이었다고 생각되어진다, 정확한 계산은 현실적으로 不明한 일이다. 어쨌든 봉기군의 병사보다 많은 희생이 민중층에 있었다는 것은 확실하다. 굉장한 저항이 민중층에 존재했던 것이 정확하다. 또 정부군의 공격에 의해 여수 중심가는 모두 타버리고 그 총수는 1500호수 이상에 달했다고 한다. 이것은 민중의 저항을 제거하기 위해 태워 버렸다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인민위원회의 지지기반이 강했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20일부터 조직되기 시작하여 8일간에 걸쳐서 활동했던 여수인민위원회는 파괴되었다고 하지만, 이상과 같은 상황이라면 이 봉기는 넓은 민중들의 지지가 있었다고 단언할 수 있을 것이다.

9) 전남일보사편(광복30년사 여. 순반란)편에 반공이라고는 입장으로 이때의 모양을 묘사한 기술이 보여진다.

단) 일방적 증언집이 되고 있는 자료로 해서는 신뢰성은 극히 적다라고 말할 수 있다.

10) 예를 들면 광양으로 향하고 있던 진압군은 다음과 같은 촌민들을 만났다고 한다. 그때 인민공화국 국기를 들었던 촌민 수백인이 隊伍를 조직해서 순천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만났다. 고 하는 것처럼 봉기군에 협력하는 민중이 많았다고 했다. 佐佐木春隆著 조선전쟁 韓國編上 原書房刊에 의한다.

4. 봉기 후

정부 및 그 부대는 민중에게 어떻게 대응했든가, 이것은 당시에 있어서 민중과 정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므로 여기서 극히 간단하게 예를 들어본다.

다음 자료는 봉기직후에 보도 통제가 행해져, 일단 도시의 진압에 성공해 통제가 시작된 후로 발표된 것이므로 비교적 신뢰할 수 있는 내용과 숫자이다.

봉기 후 1개월 지난 후에 행해졌던 여수 제3차 군법회의는 봉기한 민중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22일 계엄령 지구 법무관 김완용 중령 발표에 의하면, 11일 19일까지 여수지구에 있어서 檢束되어진 지방 폭도 805명에 대한 取調가 끝났지만 299명은 양민인 것이 판명되어서 석방하고 나머지 506에 대해서는 11월 12일, 21일 양일에 여수 제3차 고등군법회의를 開廷해 각각 판결을 내렸지만 그 판결은 다음과 같다.

사형언도 280명, 20년 징역 158명, 5년 형역 108명¹¹⁾이 사형을 언도 받았지만 280명은 당시 상황으로 하면 확실하게 집행되어졌다고 생각되어지고, 징역자에 대해서는 이후 감옥 생활에서 계속 생존했던 사람은 조금이라고 생각되어진다. 이것은 민중에 대한 합법적 살해이고, 민중을 살해한다고 하는 폭력에 의해서만 민중의 지향을 부정하고 지배하려고 했던 정부정책이었다.

봉기했던 군인에 대해서도 똑같이 살육이 행해졌다. 太田에 있어서 개설된 최고 군법회의에서는 487명중 사형선고자 224명, 무기징역 220명 5년형역 30명, 1년 징역 36명¹²⁾ 전원 유죄로하고 사형집행은 近日中에 某處에서 행해졌다고 해져 있는 것처럼 대부분은 살육되었다.

이것은 단지 一端을 소개함에 지나지 않지만 봉기한 민중과 군인에 대한 이 살육은 대한민국의 성립이 얼마나 민중의 지향에서 떨어져 나갔던 것인가를 표시하고 있다.

그 이유로 독립한 권력자의 정권유지는 폭력과 민중의 대량학살을 동반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사실, 대한민국 성립직후부터 반공정책이 계속되었지만, 이 여수. 순천 봉기 후에는 한층 반공체제가 강해졌다. 1948년 10초부터 학교. 관청. 학생. 아동에 이르는 사람들에 대해 철저한 사상조사를 행해졌고 악명 높은 국가보안법은 同年 12월에 시행되었다. 이후, 반공 교육은 철저하게 행해지게 되었다. 이 의미에서 여수. 순천봉기는 8.15 이후의 조선사회의

11) 건설통신 NO51호에 의한다.

12) 前掲建設通信에 의하지만 계산이 맞지 않다.

흐름 중에서 하나의 분수령이 되었던 봉기라고 말할 수 있다.

IV. 맺음말

불과 8일간이라고는 하지만 남조선의 要都에 인민정권이 성립하고 존속한 의미는 크다. 제주도에 있어 전도민의 봉기, 여수. 순천봉기후의 빨치산투쟁에 이르는 광범한 민중의 지지와 그 활동은 1949초부터 강력하게 계속되어졌던 것, 여수. 순천봉기후의 군대의 거둬진 봉기¹³⁾등의 조건은 이 시기 있어서 남조선 민중 속에 남조선전역에 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정권유지를 가능하게 할 만한 역량과 의지가 계속되어졌던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 민중의 지향은 전에도 언급한 듯이 대량살육을 가지고 완전하게 억압을 당해 버렸던 것일까!

똑같은 형태의 봉기는 없다. 그러나 그 민중의 지향은 1960년의 이승만을 타도한 학생들에게 이어졌고 통일로의 민중의 원망은 현재라고 부정할 수 없는 요구가 되어지고 있다. 반미. 반일. 반일의 민중지향과 함께 반경찰이 반 KCIA로써 우파. 지주에 대한 비판이 자본가와 관료에 대한 비판으로써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여수시민과 봉기군인을 살육. 탄압한 당시의 정부군장교의 대부분은 現料體制의 지주로서 활동하고 있다. 8만여가 희생되었던 제주도 토벌에 공이 있던 송요찬은 국방부장. 내각주반을 거쳐 인천체절사장이고 威柄善은 한국 해외개발공사사장이 되었다. 여수. 순천 진압부대의 지휘를 했던 백선엽은 軍主腦를 근무하고 각국대사를 거쳐 現한국총화합공업사장이고 진압군참모였던 김정곤은 軍主腦로서 활동한 후, 현재 반공이론가로서 대학교수의 片書와 저작도 많이 있다. 분명히 박정희 대통령도 여수. 순천진압에 관련되어져 있다고 말 해지고 있다. 다른 데에서 끝없이 예를 들고 있다. 민중살육의 피묻은 손으로 現정권은 성립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이르는 민중의 지배이론도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현재, 조금이라도 저항하는 자에 대해서는 행해지는 가책 없는 탄압은 그들에게 있어서 당연한 이론적 귀결이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민중은 살해당했던 사람들이 민중의 지향에 충실했던 것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고, 현

13) 1948년 11월. 12월. 1월에 군인봉기가 대전을 중심으로 일어났다.

역시 이 봉기의 전체의 흐름은 상당히 불충분하지만, 조선연구 62호로 소개되고 있다. 또 여기서는 남조선에서 발행되어진 자료를 사용했지만, 이것들은 이미 반공이라고 하기 보다는 기본적 이념을 표현하기 위해 쓰인 것이기 때문에 사실 기술에 대해서 역시 실수가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실수는 지적을 받고 싶다.

정권의 위정자들의 과거를 잘 알고 있고 혹독한 비판의 눈을 가지고 보고 있다고 봐야 좋은 것은 아닐까.

현재의 남조선민중이 現한국정부에 협력하고 있는 일본을 호의적으로 보고 있는 등은 있을 수 없다.

여 순 항 쟁

황 남 준

I. 머리말

한국현대사, 특히 해방 이후의 한국사회구성체에 대한 연구는 현 한국사회의 제반 문제에 대한 실천적 인식의 결과물이라는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일정한 제약을 가지고 있는 바, 그 중에서도 대부분 해방 3년사에 논의가 제한되어 현 한국사회를 특징짓는 ‘반공체제’의 구체적 성격과 성립에 관해서는 논의가 활발하지 않는 것 같다.

물론 해방 3년의 시기 동안에 반공의 보루로서의 기초가 다져지고, 한·미관계, 남·북관계의 기본 골격이 엮어졌지만, 이 시기가 ‘반공체제’의 구체적 내용과 모습까지 결정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갖추어지기 시작한 것은 건군이후 ‘여·순사건’을 계기로 적어도 한국전쟁에 이르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 한국사회의 문제를 ‘반공’이라는 주제를 설정해서 논의할 경우 그 범주는 해방 5년 혹은 8년으로까지 논의의 범위가 확대되고, 그 수준이 구체적으로 천착되어야 할 것이다.¹⁾

이 글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서 폭발한 ‘여·순사건’이 단순히 몇몇 좌익계 사병에 의해 주도된 단순한 ‘군부반란사건’이 아니고, 당시의 사회 경제적 조건과 밀접히 연관된 보다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사건이었음을 설명하려 한다. 따라서 ‘여·순사건’이 배태된 해방 이후 건국에 이르는 과정이 먼저 검토되고 다음에 그것이 전남동부지방(혹은 여·순지방)의 특수성과 어떻게 관련되어 전개되어 나아가는 가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그것이 여·순지방과 한국사회전반에 걸쳐 미친 충격, 즉 반공국가의 성립에 관해서 언급될 것이다.

II. 분단국가의 출범

미군정기를 거쳐 1948년 8월 15일 역사적인 대한민국의 수립·선포로 한민족은 비록 반

1) 최장집, 「해방 40년의 국가·계급구조·정치변화의 서설」(최장집편, 『한국현대사』, 열음사, 1985), 손영원, 「분단의 구조」(김홍명외, 「국가이론과 분단한국」, 한울, 1985)를 참조할 것.

쪽이나마 일제 식민통치와 미군정 통치로부터 벗어나 정치적 독립을 달성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승만을 수반으로 하는 제1공화국의 출범은 결코 순탄한 것이 아니었다.

이승만의 정치적 지지기반은 매우 취약했다. 그것은 지주, 보수적 언론인, 지식인을 주축으로 한 한민당, 경제를 지배하고 있던 강력한 관료체제, 단결심이 강하고 외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좌익을 제압하는 데 있어 ‘선봉장’인 경찰조직, 독촉, 대동청, 서북청 등의 청년단체, 농촌지주층, 엘리트층을 중심으로 한 독촉국민회 등의 정치·청년, 사회단체 등이었다.²⁾

그러나 국가형성의 동반자로서 한민당이 이승만의 각료 선임에 불만을 품게 됨으로써 양자사이의 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국회는 9월 7일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사회내의 친일분자 뿐만 아니라 미군정으로부터 계승된 행정관리와 경찰내부의 친일파의 숙청을 요구하고 있었으며, 10월 13일 김구를 추종하는 임정계 및 무소속 혁신파 의원 50여명이 미군철수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함으로써 제1공화국의 권력기반을 위협하고 있었다.³⁾

그러나 제1공화국에 가장 위협적인 세력은 공산주의자들이었다. 경비대내에는 남로당원 및 그 동조세력이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었으며 제주도에서는 아직까지 폭동이 진행중에 있었고 미군정기의 ‘가을폭동’지역인 경상도와 전라도 지방에는 좌익이 잠재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해방이후 절정에 이른 민중들의 민생(民生)문제였다.

1. 국방경비대(내부조직의 취약성과 군·경 관계)

1945년 11월 13일 국방사령부(1946년 6월 소련의 이의 제기로, ‘국내경비대’로 명칭 변경)의 설치에 해방직후의 정치적 상황, 이에 대응한 미군정의 정책적 맥락에서 올바르게 이해될 수 있다.

45년 10월 남원인민위원회 및 국군준비대와 경찰 및 미전술부대가 충돌했던 ‘남원사건’⁴⁾은 당시 남한에 거의 전지역에 걸쳐 인민위원회, 농민조합, 국군준비대 등과 같은 조직이 압도적이었던 해방직후의 정치상황을 대표하는 한 예에 불과했던 것이다. 미군정은 11월 현재 205개에 달한 정당 및 사회단체, 그중에서도 30여개에 달하는 사설군사단체⁵⁾에 대

2) 김정원. 『분단한국사』, 동녘출판사, 1985, 143쪽, 이기하, 「한국정당발달사」, 의회정치사, 1962, 54-80쪽, G. Henkerson, 「Korea : The politics of the Vortex」, Havard Univ. press. 1968, 196 쪽.

3) 국회사무처, 「대한민국 국회속기록, 제1회」참조.

4) 전사편찬위, 『한국전쟁사(제1권, 해방과 건국)』, 264쪽 B. Cuming, 『The Origins of Korean War』, 169-170쪽, 312쪽.

5) 전시동원 현황.

한 적절한 조치 없이는 남한에 질서 정연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정치적으로 우호적인 정권을 수립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미군정은 아직까지 취약했던 경찰과 한민당을 보도하는 우익군사단체에 합법적 공간을 마련해주고, 동시에 좌익적 성향을 띠는 군사단체를 불법화, 해체시키고, 다른 한편으로 이들 인적 자원을 흡수하여 정치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합법적 제도적 장치로서 경비대와 같은 조직이 필요했던 것이다.

<표 1> 연대창설 현황

부대명	창설일·장	부 대 편 성	비 고
제1연대	1916. 1. 15 태능	1946.9.18 연대편성 완료	자원이 많아 당대 완료
제2연대	1946. 2. 28 대전	1946.12.25	4대 정위 최홍희 완료
제3연대	1946. 2. 26 이리	1946.12.25	3대 정위 김백일 완료
제4연대	1948. 2. 15 광주	1946.12.25	2대 정위 정일권 완료
제5연대	1948. 1. 15 부산	1947.1.1	2대 정위 백선휘 완료
제6연대	1948. 2. 18 대구	1948.6.15	6대 소령 김종갑 완료
제7연대	1948. 2. 7 청주	1947.1.15	당대 편성 완료
제8연대	1948. 4. 1 춘천	1946.12.7	
제9연대	1948. 11. 16 제주	1947.3.20 대대편성 완료	1948. 5.15 제 11연대편성
제10연대	1948. 5. 1 강릉	8연대 3대대 기간	1948. 7. 1 태백산 공비토벌참가
제11연대	1948. 5. 4 수원	2·3·4·5·6 연대에서 1개대대씩 차출 편성	1948. 5.15 제 9연대 흡수
제12연대	1948. 5. 1 군산	3연대 2대대 기간	1948. 11 여수반란 진압 출동
제13연대	1948. 5. 4 온양	2연대 일부병력 기간	1948. 7. 5 응진전투 참가
제14연대	1948. 5. 4 여수	4연대 1개대대 기간	1948. 10.28 부대해체
제15연대	1948. 5. 4 마산	5연대 1개 대대병력 기간	1948.11. 3 여수반란진압 출동

구 분	동원수(名)	비 고
학 도 병	4,385	학도동원령(1943. 10. 12)
육군지원병	17,664	육군특별지원병령(1938. 2. 2)
해군지원병	3,000	해군특별지원병령(1943. 5. 11)
육군 징 병	186,980	일반징병령(1943. 8 .1)
해군 징 병	22,290	해군병징모검사(1944. 5. 10)
군 무 원	154,970	해군작업 애국단원 및 포로감시원
합 계	389,289	15만여명은 전사 또는 행방불명

※출전, 대한민국사, 10쪽, 한용원 『장군』, 박영사, 1984, 37쪽에서 재인용
위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사설군사단체는 일제의 전시동원정책에서 직접 유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일제의 의해 동원된 병력뿐만 아니라 중국대륙과 만주지방에서 활약하던 독립군과 게릴라부대까지 합쳐져서 해방 후 남한에서 사설군사단체는 그 규모와 단체수에 있어서 미군정에 커다란 부담이 되었다. 이들은 다른 정치·사회단체와 마찬가지로 좌우로 양국화되었는데 우익단체로는 ‘국군준비대’와 ‘조선학병동맹’이 있었다. 이 중 국군준비대는 45년 末 총 8만여명에 이르는 최대 군사단체였다. 「한국전쟁사」, 247-257쪽, 김남식, 「실록 남로당」(신현실사, 1975), 116쪽, 국사편찬위, 「자료대한민국사」118쪽, 648쪽, 732-733쪽, 한용원, 「장군」(박영사, 1984), 2629쪽. 허장, 「초기로서 군사제도와 군부의 구조형성」, 최장집편, 앞의 책, 339-401쪽.

※출전

- 1) 육군 발달사(상권),
- 2) 육군역사일지, 1945~1950 한용원, 앞의 책, 96쪽에서 재인용

그러나 미군정은 경비대 확장에 적극적일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강대국들 사이의 협조를 통한 ‘통일정부수립’이 워싱턴에 의해 공식적으로 포기된 상태가 아니었으며, 동시에 남한에서 경비대를 장차 국군의 ‘모체’로 창설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천명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미군정은 단지 경찰력을 보조한다는 명분으로 경비대의 창설과 확장에 임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경비대 창설의 목적과 그 한계는 군의 하부조직의 구성과 군·경 관계에 기본적 제약으로 작용한다. 군정법령 제42호(46년 1월 14일)에 의해 조선국방경비대가 설치되고 태능에 ‘조선국방경비대 총사령부’가 설치(46·2·7)되면서, 연대창설 및 모병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연대는 도청소재지별로 창설되어, ‘향토경비대’로 불리게 되었으며, 8개연대 창설작업은 서울에서부터 시작하여 춘천에 제8연대를 창설함으로써 마무리된다. 모병은 홍보활동, 가두모집, 행정관서와의 협조 등으로 활발히 전개되었지만 “경비대는 경찰의 보조기관이며, 정식 군대는 나중에 모집할 것이다”라는 대중의 인식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⁶⁾

초창기의 부대편성은 서울을 제외하고는 대대규모의 충원조차도 어려웠으며, 탁치에 대한 찬반대립, 입대전의 군사단체(즉, 국군준비대 광복군계, 일본군 출신계)간의 상호대립과 갈등, 일본식 군내무생활 및 훈련⁷⁾등으로 탈영과 충원이 계속되었다.⁸⁾ 이에 따라 사상적 성향에 관계없이 사설군사단체 출신자가 주 모병대상이었으며, 경찰의 추적을 받는 정치범과 일반범죄자, 깡패, 실업자 등의 입대도 허락되었다.⁹⁾

따라서 응집력 있는, 좌익탄압의 ‘선봉장’으로서의 경찰은 ‘경찰예비대’¹⁰⁾로서의 경비대를 사상적으로 불순하고, 향토적 색채를 띠는 ‘오합지졸’로서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무기지급, 계급장, 복장, 급식문제에 있어 불만을¹¹⁾ 품고 있던 경비대는 과거 ‘일제의 주구’

6) 『한국전쟁사』, 289쪽, 한용원 앞의 책, 91-93쪽.

7) 『한국전쟁사』, 279쪽, 한용원, 「장군」, 92쪽.

8) 각 연대가 거의 충원을 완료할 수 있었던 시기는 3개연대를 1개여단으로 해서 3개여단의 편성을 한 47년 12월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당시의 병력은 총 2만명을 넘지 않았을 것이다. 한용원, 앞의 책, 96쪽. R.K. Sawyer, 『Military Advisors In Korea』(Office of the Military History, Department of the Army, Washington, D.C, 1962).

9) 『한국전쟁사』 283-284쪽.

10) 내무부 치안국, 『대한경찰전사 제1권 민족의 선봉』(서울, 한국연구협회, 1952).

로서 자신들보다 높은 대우를 받고 있으면서 자신들을 멸시하는 경찰을 증오할 수 없었다. 경비대와 경찰사이의 충돌은, 거의 모든 지역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었지만 좌익세력이 강한 지역, 그리고 분단이 기정사실화되고 경비대가 팽창하면서 심화되어 간다.

그 대표적 사건이 47년 6월 1일 전남 영암에서 외박 나온 제4연대 하사관과 신북지서장 사이의 ‘모표(帽標)전쟁’이 제4연대 300명의 병력과 영암경찰서 사이의 무력충돌로까지 비화된 사건이었다.¹²⁾ 이 과정에서 경찰은 망루대에 설치된 기관총으로 사격하는데 영암경찰서를 포위한 제4연대 병력은 일제 99식 소총, 탄약부족, 지휘관의 무능으로 참패를 면치 못했다. 이 사건은 연대장, 경찰서장, 경찰고문관, 제4연대 고문관 사이의 타협으로 중지되었으며, 제4연대는 사병 6명 사망, 10여명의 부상자, 경찰 측은 사상자가 없었다.

한편 미군정이 <표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48년 5월 6개연대를 신설, 2개여단을 보장함에 따라, 경비대는 비약적인 팽창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팽창에도 불구하고 경비대는 여전히 내부적인 취약성을 지닐 수밖에 없었다.

모병작업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지원자가 부족하였지만, 그나마 덜 어려웠다고 판단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분단을 확정짓는 ‘5·10선거’를 전후해서 모병작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경찰예비대’로서가 아니고 ‘국군의 모체’로서 경비대를 할 수 있었으며, ‘2·7폭동’, ‘5·10단정 단선 반대투쟁’과정에서 대량으로 발생한 경찰의 지명수배자들도 거의 모두 입대가 허용되었기 때문이다.¹³⁾ 동시에 모병은 해외귀환 혹은 월남동포가 대부분을 구성하는 대규모 실업자군, 춘궁기의 식량부족까지 겹쳐진 상황에서 전개되었기 때문에 이전보다 훨씬 용의하게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46년 ‘가을항쟁’, ‘2·7폭동’, ‘5·10단정선거 반대투쟁’이 격렬하게 나타나던 지방에서 창설된 연대일수록 그 하부조직이 좌경화 될 수밖에 없었으며, 이것은 남로당의 군침투공작에 의해 더욱 촉진되었다. 제14연대의 경우 약 반수이상의 남로당·전남도당에 의해 침투되어 있었다.¹⁴⁾ 또한 낮은 대우, 수직적 상승기회의 결여 등에 불만이 누적된 사병들은 잦은 인사이동, 높은 상승기회를 가진 장교들보다는 자신들과 지연으로 맺어져 있으며 자신들의 군대생활을 직접 통제하는 인사계 등의 하사관들과 친밀감을 가지고 있었다.¹⁵⁾ 따라서 장교와 사병사이에는 마찰의 소지가 많았으며 이것은 정치적

11) 한용원, 앞의 책, 98쪽. 경비대의 제복은 초기에 일본군의 복장을 개조해서 사용했으며, 계급장 표식은 경찰간부의 계급장을 장교급의 계급장으로(경찰모자의 귀단추 무궁화표식의 개수로) 부착하였다. 이러한 복장과 계급장제도는 군·경 이간질에 취약했으며 경비대는 경찰의 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12) 김석학, 임종명, 『광복 30년, 제1권』(전남일보사, 광주, 1975), 107-140 『한국전쟁』, 408-412쪽.

13) 김남식, 『남로당연구』(돌베개, 1984), 379쪽.

14) 김남식, 앞의 책, 381쪽.

15) 한용원, 앞의 책, 98쪽.

입장의 차이, 장교들의 부패 등에 의해 더욱 촉진되었다.¹⁶⁾

2. 남로당의 조직과 그 한계

‘유엔한국위원단 반대’, ‘남조선 단독정부수립반대’, ‘양군동시철수’등을 구호로 남로당에 의해 주도된 소위 ‘2·7구국투쟁’(2월 7일~2월 29일)은 주로 파업과 파괴, 그리고 경찰서 습격, 우익에 대한 테러, 선거반대를 위한 선전과 선동의 형태로 나타났다.¹⁷⁾ 그러나 2월 26일 유엔소총회는 ‘선거 가능한 지역만 총선거를 추진한다’는 미국측 제안을 통과시킴으로써¹⁸⁾ 남로당은 본격적인 ‘단독선거 반대투쟁’으로 전환을 모색케 되었다.

‘2·7구국투쟁’과정에서의 당 조직의 파괴와 노출, 잇따른 좌익세력에 대한 대규모 검거 선봉, ‘단선반대투쟁’을 위한 전열정비의 필요성에 따라 남로당은 조직의 수습·강화를 모색치 않을 수 없었다.¹⁹⁾ 이에 따라 남로당은 중앙집권식 하향 체계로 조직을 강화하고 ‘정상조직체계’와 ‘특수조직체계’를 구별하여, 정당조직으로서 남로당 자체 조직을 보존하면서 특수조직으로서 선전선행대(혹은 별동대), 백골대, 유격대, 인민청년군 등의 소규모 무장부대를 조직하여²⁰⁾ 소위 ‘단선단정반대투쟁’을 격렬하게 전개해 나갔다.

48년 3월 이후의 시점에서 남로당은 투쟁의 형태로 비합법적 투쟁을 주로 하고 합법적 총선거란 공작을 중(從)으로 하는 이른바 ‘배합투쟁’²¹⁾으로 전환했으며, 전면적 무장투쟁 형태를 취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단정선거 반대투쟁’과정에서 발생한 제주도에서의 ‘4·3항쟁’은 당시 남로당의 투쟁노선에 배치되는 ‘모험주의적 경향’의 표출로서 중앙에서 계획되고 통제되지 않은 일종의 ‘돌출물’이었다.²²⁾ 이것은 당시 남로당의 중앙집권 하향식 조직의 한계를 노정하는 대표적인 예로서, 지역적으로 ‘서울지도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일수록, 모험주의적 경향이 표출되기 쉬었다.

한편 남로당은 이러한 조직의 정비강화와 아울러 경비대에 대한 침투공작을 활발히 전개했다. 이러한 침투공작은 1947년 말에 소위 ‘인민해방군’사건으로 폭로된 바 있었으며²³⁾

16) 『한국전쟁사』, 399-408쪽. 그 대표적인 예로 ‘제1연대 하극상사건’, ‘제3연대장 배척사건’을 들 수 있다.

17) 김남식, 앞의 책, 305-308쪽, 하성수, 『남로당사』(세계, 1986), 191-192쪽, 스칼라피로·이정식, 『한국공산주의운동사』(해방후편 1945-53), (돌베개, 1986) 390쪽.

18) 동아일보 1948년 2월 28일.

19) 박일원, 『남로당의 조직과 전술』(세계, 1984) 109쪽.

20) 박일원, 위의 책, 110쪽, 김남식, 앞의 책 326-327쪽.

21) 박일원, 위의 책, 111쪽.

22) 하성수, 앞의 책, 223쪽, 227쪽, 김남식, 37쪽.

23) 스칼라피로·이정식, 앞의 책, 391-392쪽.

7월 7일에 당 중앙에 군사부를 설치하여 치밀한 계획하에 경비대 침투공작을 시작하고 있었다.²⁴⁾ 남로당의 군침투 공작은 48년에 접어들면서 본격화²⁵⁾되는 데 5월에 6개연대의 경비대가 창설되면서 절정에 다다른다. 남로당의 군침투공작은 48년 3월 4월에 미군정 정보 보고서에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경상북도와 전남의 공산주의자들은 조선경비대 침투를 목적으로 있다. ……이들은 경비대가 남한에서 권력탈취에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던 대구의 민전부의장이 조선경비대에 입대했으며 그 외 다수가 침투해 있다.’²⁶⁾

남로당의 군침투공작은 이원적으로 장교는 당중앙군사부가, 사병은 원칙적으로 지방당부가 담당했다. 당중앙이 장교를 담당한 것은 장교의 선발과 교육·배치 등의 권한이 중앙사령부에 있고 근무지 이동이 심했기 때문이며, 그 방법은 남로당이 추천한 자를 경비사관학교에 무조건 입교시키고 이미 임관된 장교는 동창·혈연·지연 등의 인간관계를 이용하여 포섭하는 식이었다. 각 지방당이 사병을 담당한 것은 사병모집이 도단위로 행해지고, 또한 연대의 이동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다.²⁷⁾

여수 제14연대의 경우 남로당의 침투공작은 당시 전남도당 조직부 과정이었던 박춘석의 증언을 통해 알 수 있다.²⁸⁾

‘…도당 군사부에서 광주, 목포를 비롯한 각 시·군당 군사부에 사병 추천지시를 하달하면 이들은 면리에까지 다시 지시를 하여 입대자 명단을 받아 도당 군사부에 제출한다. 도당에서는 이 명단을 연대공작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오르그(도당에서 파견된 조직원)에 준다. 이들 오르그는 연대인사계(포섭된 자, 당시 지창수)에 지시하여 대대·중대·소대로 배치한다. …여수 14연대는 약 반수의 사병이 전남도당에 의해서 침투되었다.’

‘2·7투쟁’을 전후해서 변형된 남로당은 남·북에 적대적인 두 개의 분단국가가 성립함으로써 다시 한번 변화의 계기를 갖게 된다. 남·북노동당은 48년 8월 25일 ‘남·북노동당 연합중앙회’를 만들었다. 이것은 남·북노동당의 완전한 합당이 아니었고, 당의 하부조직은 그대로 두고 중앙위원회만 연합하여 남북의 모든 문제를 토의한다는 것이었다.²⁹⁾

24) 하성수, 앞의 책, 2-7쪽.

25) 스칼라피노·이정식, 앞의 책, 391쪽.

26) HQ. XXIV (orps, G-2 Periodic Report. 3월3, 4월 8일).

27) 김남식, 앞의 책, 380쪽, 하성수, 앞의 책, 207-208쪽.

28) 김남식, 앞의 책, 380-381쪽에서 재인용.

29) ‘연합중앙회’의 명분상으로 하나의 정권에 2개의 공산당이 있을 수 없다는 ‘원칙’과 ‘인공’을

김일성을 수반으로 하는 ‘연합중앙위원회’의 설립으로 남로당의 서울중앙위원회는 서울 지도부로 바뀌어 단순한 정책수행기구로 변형되었다. 따라서 적대적인 두 개의 분단국가가 형성된 시점에서 남로당의 활동은 그 이전보다 훨씬 제약되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남로당은 독자적인 중앙위원회의 상실로 정책결정에 있어 북로당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고 둘째, 정책수행에 있어서도 북로당의 소위 ‘권위 있는 선’의 영향을 받아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으며 셋째, 이전보다 훨씬 적대적이고 열악한 조건³⁰⁾에서 보다 힘든 투쟁, 즉 북한공산정권의 정통성 선전(예로 8월 지하선거, 인공기 게양투쟁 등), 중도·우익과의 연합모색(예로 정당사회단체에 대한 프락치 공작, 미군철수공작), 무장투쟁에 의해 정권 전복 등을 전개해야만 했다.

따라서 분단국가의 성립 후 남로당은 상부조직에 있어 정책수립 및 수행의 혼선, 지방의 하부조직에 있어 말단조직의 이탈 혹은 ‘모험주의적 경향’을 동시에 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야만 했다.

3. 민생(民生)문제

해방 후 남한의 경제는 줄곧 구조적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으며, 이것은 48년 중반이후 절정에 도달했다. 자기완결적인 경제 질서를 갖지 못한 한국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일제의 패망으로 일본본토와 만주공업지대로부터의 분업연관 단절, 일제기술자의 본국 귀

‘전 한반도에 걸쳐 인민의 의사를 대표한다’는 대외적인 선전, 그리고 통일적인 대남전략수립이라는 전략상의 요청에 의해 설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남·북노동당이 분단의 시점에서도 완전한 합당을 하지 못한 것으로부터 첫째, 남로당과 북로당 사이의 주도권 싸움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었고 둘째, 북쪽에 소위 ‘민주혁명기지’건설을 통해 정치적 역량을 키워온 북로당이 지도그룹내에서 아직까지 확고한 우위를 점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김남식, 앞의 책, 359-361쪽, 하성수, 앞의 책, 194쪽, 200-201쪽, 스칼라피노·이정식, 397, 484쪽.

30) 미군정 경무부장 조병옥은 48년 4월 중순 5·10선거를 한달 가량 앞두고 선거를 원만히 치르기 위해 ‘향토방위를 견고하게 하고 외래의 불순분자 내지 모략선동공작의 여지를 봉쇄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각 경찰지서 혹은 동(洞), 리(里), 가로(街路) 단위로 ‘향보단’을 설치할 것을 지시하였다. 만 18세 이상 55세 이하의 남자는 거의 의무적으로 동단에 가입케 되었으며, 동단은 경찰관구청장 혹은 경찰서장의 지휘와 명령에 의해 선거를 앞두고 경찰력을 보조하였다. 380만의 규모로 추산되는 동단의 설치에 일제시 ‘국민의용대’의 재판이라는 비판을 받았으며, 그후 향보단은 선거가 끝난 직후인 5월 22일 ‘딘’ 군정장관의 해산명령을 받았으나 좌익의 활동이 치열했던 지역에서는 그 후 ‘의용단’ 혹은 다른 명칭으로 계속 존재했다. 서울신문, 48년 4월 16일, 경향신문, 48년 5월 26일, 문창주, 『한국정치론』(일조각, 1969), 275쪽, 심지연, 『5·10선거와 제헌국회』, 월간조선, 86년 8월호, 468쪽, 전남 보성의 경우 이러한 향보단의 영향으로 좌익의 테러에 대비해 우익청년들에 의해 ‘평화유지단’이 결성되었다. G-2 Periodic Report, 48년 7월 8일.

환, 통화남발 등으로 그 기능이 거의 마비되었다. 게다가 경공업(소비재)과 중공업(생산재)으로 산업구조가 편중해서 분포되어 있는 남·북간의 분단의 고착화, 국가권력을 둘러싼 좌·우익의 치열한 정치투쟁은 경제적 파탄을 더욱 가속화시켰다. 이러한 경제·구조적 위기는 300만에 달하는 귀환동포 및 월남동포의 유입, 물가부족에 따른 매판 자본가들의 매점매석, 누적된 미군정의 재정적자 및 통화팽창, 북한으로부터의 단전 등으로 48년 중반이후 여·순 사건에 이르기까지 대다수 민중들은 세계에서 중국 다음가는 높은 물가상승, 실업난, 식량 문제 등의 ‘민생고’를 겪지 않을 수 없었다.

<표 2> 서울의 생필품 소매물가 지수표

	36년 기준(100)	45년 8월 기준(100)
곡물	54,887	1,160
식료품	66,217	1,898
직물	150,864	5,423
연료	42,269	1,462
잡품	114,349	2,674
평균	85,717	2,524

※출전

조선은행 조사부 물가지수표 / 흥한표, 「물가, 임금, 생활」, 『민성』 1948년 5월호, 28쪽에서 재인용.

<표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45년 8월 이후 48년 1월 현재 만 2년 5개월 동안 서울시 생필품가격은 평균 25.2배나 급등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매물가상승률은 동 기간 동안 평균 73.2배에 달했다.) 그 중 직물값이 최고로 무려 542배나 상승한 반면, 곡물값은 가장 낮은 116배가 올랐다. 도매물가 상승률과 소매물가 상승률의 차이, 그리고 소매물가에 있어서도 경공업제품과 농산물의 상승률에 있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미군정의 농업정책(저곡가정책 및 미곡수집정책)에 따른 농민대중의 희생이 상대적으로 컸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것이다.³¹⁾

31) 흥한표, 앞의 논문, 29쪽.

<표 3> 서울시 물가·임금 지수표

		소매 물가	임금	실질 임금
1944	1	212	210	99.05
	6	266	220	97.34
1945	1	238	246	
	6	259	282	
1946	1	10,913	3,386	
	6	19,876	7,251	
1947	1	45,912	12,580	
	6	51,121	15,812	
	76, 12 998	76,998	17,704	22.99
1948	01	85,717	18,715	21.83

※출전

조선은행 물가·임금 지수표 / 흥한표, 앞의 논문(28-31쪽)에서 재작성

또한 <표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당시의 근로대중들은 높은 물가상승률뿐만 아니라 급격한 실질임금의 하락도 감수해야만 했다. 일제시대 말기에는 임금상승률이 물가상승률과 거의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나, 해방 후 3년도 못되어서 실질임금상승률은 물가상승률의 1/5이하로 떨어지고 있었다. 36년 일제시대의 100원 이상의 봉급생활자(고등관이상의 관리, 기업체의 과장급 이상의 고급기술자)는 48년 1월 현재 18,715원을 받는다 해도 물가상승률로 인해 생계를 겨우 꾸려나갈 정도밖에 안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당시 5,000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었으며, 5,000원의 월급은 당시 5인가족의 한달 쌀값(비급쌀+자유시장쌀 구입비) 비용이 최소한 2,800이 필요했으니 최저 생계비 정도밖에 안되었을 것이다.³²⁾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은 ‘부정부패’에 유혹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며, 대다수의 봉급생활자의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군정청의 조사는 1947년 말 현재 부양가족 5인의 대학교수의 월수입은 2,215원으로 지출은 22,518원, 매달 적자액 2만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³³⁾ 따라서 당시의 봉급생활자 대부분의 집안의 귀중품, 가구 등의 살림도구를 팔아서 가게를 꾸려나가야 했다.

그러나 적자가게에 허덕이는 봉급생활자의 경우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 같다. 미군정 광공국통계에 의하면 47년 11월 현재 남한의 공장 조업률은 최저 4%에서 최고40% 정도였으며, 이에 따라 실업 또한 심각한 상태였었다. 당시 경기도에서만 8만 이상의 실업자가 존

32) 흥한표, 앞의 논문, 30쪽.

33) 김인식, 「화폐인플레이션격화의 민생문제」, 민성, 48년 5월호, 42쪽.

재하고 있었으며 서울시내의 경우(총인구 150만) 10인 사상의 사업체 노동자수는 32,392명, 사무직원 52,392명 그 외에 정업자(定業者)는 45,000여명에 불과했다고 한다³⁴⁾ 따라서 당시 서울시내 가옥의 약 8할 정도가 금융기관에 저당 잡혀 있었다는 말이 금융계에서 공공연히 나돌고 있었다.³⁵⁾

한편, 당시 인구의 8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던 해방 후 남한사회에서 서울 등의 도회지의 민생고는 오히려 부차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농업생산(특히 미곡생산)은 해방이후 공업과는 반대로 오히려 생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농촌의 민중들은 미군정의 미곡수집정책, 저곡가 정책에 의해,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자발적 결사체를 파괴당함으로써 기아·폭력에 맞서야만 했다. 대부분의 지방에서 그들의 저항은 48년 전반기까지 계속되었지만, 자신들의 결사체가 파괴되고 그 대신 경찰력·행정력·우익단체가 침투함으로써 점차 그 힘과 규모는 쇠퇴해갔고 이에 비례해서 그들의 생계조건 역시 악화만 되어갔다.

46년 ‘가을폭동’, 48년 ‘2·7폭동’, ‘단선반대투쟁’에서 “쌀을 다오! 공출반대!” 등의 구호가 반복되었고 습격대상도 공출과 직접 관련을 맺는 경찰·관리·지주였던 점을 감안해 볼 때 농민들은 ‘이데올로기’보다는 자신들이 피땀 흘려 생산하면서도 굶주려야만 했던 ‘쌀’을 위해 저항했는지도 모른다. 그들의 ‘민생고’는 48년 분단국가가 성립되는 시점에서 절정에 달했다.

미군정의 미곡수집정책은 46년 5월 식량 규칙 제2호「미곡수집」(8월 25일 공포)에 의거 46년 10월말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동규칙의 가장 큰 특징은 소작농의 소작료 미곡을 전량 공출하게끔 규정하고 수집량은 지주·소작인등의 지주적 신고에 근거해서 구·읍·면·장 등 주로 지주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지방의 말단관리에 의해 할당을 규정한 점이었다.³⁶⁾ 따라서 기본적으로 소작농이나 빈농에게 매우 불리했으며, 실제 할당과 수집에 있어 친분관계, 정치적 고려 등의 여지가 많았으며, 미곡수집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경찰과 관리에 의해 강제적으로 실시되었다. 따라서 평소 감정이 있다가나, 토지 개혁을 주장하고 미곡공출을 반대하는 좌익활동에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농가는 대개 미곡수집량을 부당하게 할당받는 대신 배급량은 조금밖에 받지 못했으며, 경찰과 관리들이 부여한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농가의 경우 경찰과 우익청년단이 농가의 가축과 재산을 몰수해서 차액을 메꾸었다. 특히 미곡수집은 46년 ‘가을항쟁’이 한창 진행 중이었던 10월말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농민들로부터의 저항이 컸으며, 여기에 경찰·청년단·관리는 강제적으로 실

34) 김인식, 위의 논문, 43쪽.

35) 홍한표, 앞의 논문, 31쪽.

36) 新納豊, 「해방후 한국경제의 구조」, 최장집편, 앞의 책 4562-463쪽.

시켰고, 그 과정에서 부패까지도 극도로 심했다.³⁷⁾

47년도산의 미곡수집(47년 10월부터 시작)은 전년도, 미곡수집과정에서 나타난 농민들의 저항을 극소화하고, 더욱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지방관리의 자문기관으로 ‘미곡수집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할당대상 농가를 자·소작농, 자작지주까지 고려하여 세분함으로써 미곡수집의 공정과 효율을 기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이것은 결코 소작농이나 영세농민의 부담을 경감시켜주지는 않았다. 46년의 경찰력과 우익단체의 보강, 기술적·제도적 보완, 이에 따른 농민의 저항감소로 미군정을 48 미곡년도에 팔목할 만한 97.1%의 수집실적을 올렸다.³⁸⁾

<표 4> 미곡수집 실적의 추이

	수확고(A)	목표(B)	수집실적(C)	(B)/(A)×100	(C)/(B)×100	(C)/(A)×100
	천석	천석	천석	%	%	%
1946년도	12,836	5,511	8,694	42.9	12.6	5.4
1947년도	12,050	4,296	3,558	35.7	82.8	29.5
1948년도	18,850	5,156	5,005	37.2	97.1	36.1
1949년도	15,486	7,500	3,852	48.4	51.4	25.1
1950년도	14,734	3,350	3,256	23.8	93.0	22.1

※ 출전

한국은행 조사부, 『경제연감』, 1965년판, 통계판, 15쪽

한국산업은행 조사부, 『한국산업경제 10년사』, 1955, 970쪽

주 : 연도는 미곡년도(전년 12월 ~당년 11월)이다

新納豊, 앞의 논문, 460쪽에서 재인용

<표 5> 쌀의 자유시장가격 및 수납가격

	(A)자유시장가격	(B)수납가격	B/A×100
1946년도	1,078	1,184	11%
1947년도	6,567	2,146	32
1948년도	11,192	2,368	21
1949년도	17,652	4,440	25
1950년도	19,108	9,620	60

출전

한국은행 조사부, 『경제연감』, 1955년판, 184쪽

37) 조선통신사, 「조선연감」, 1949년판, 215쪽, 조선은행조사부, 조선경제연보, 1948년판, 215쪽.

B. Camings, 앞의 책, 371-379쪽, 新納豊, 앞의 논문, 463-464쪽.

38) 新納豊, 앞의 논문, 464-466쪽.

주 : 1) 자유시장 가격은 200리터당, 수납가격은 석당(1석=180리터)

2) 자유시장가격은 연평균이다

3) 연도는 미곡년도

新納體, 앞의 논문, 461쪽에서 재인용

<표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쌀 생산량은 46년 ‘가을항쟁’시기와 50년 한국전쟁시기를 제외하고는 증가추세에 있었으며, 이에 비례해서 미곡수집량도 계속 증가했음을 할 수 있다.³⁹⁾ 48 미곡수집년은 미곡수집에 있어 절정을 이룬 해였으며, 미군정은 전년에 비해 144만석 증가한 500만석을 증수했으며, 이것은 전체 총생산량의 36.1%에 달하는 양이었다.

그런데,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48년의 수집가격은 자유시장가격에 비해 가장 낮은 것이었으니, 48년에 있어서 농민들은 최대의 부담을 안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농민의 부담은 실제로는 더욱 막중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48미곡년도 최고수집가격은 정조 한가마니당 660원으로 전년대보다 불과 10% 인상된 가격이었는데, 이 가격은 군정청 농무부 조사부의 계산으로는 1/2에 해당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⁴⁰⁾ 즉, 농민은 1/10정도의 가격을 받고 쌀을 미군정에 팔아야 했던 것이다.

48미곡년도의 높은 미곡수집실적, 낮은 미곡수집 가격은 48년 춘궁기에 심각한 ‘식량문제’를 야기시켰다. 그 이유는 47년 말 현재 전농가호수중 지주·자작농이 18.6%, 자·소작농이 38.8% 소작농이 42.5%⁴¹⁾를 차지하고, 또 자작지와 소작지 농(沓)이 각각 32.7% 와 67.3%의 비중을 차지하고⁴²⁾있는 상태에서 48미곡년도의 총수확고의 36.1% 수집량은 소작농과 빈농의 식량문제를 보편화시켰으며, 48년 3할의 춘궁기에 절량농가는 최소한 4할 이상이나 되었던 것이다.⁴³⁾ 이들 농가는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주에게서 고율로 쌀을 빌리거나, 고율의 사채를 얻거나, 그렇지 않으면 들이나 산에서 식량채집을 해야만 했다. 그러나 식량문제가 심각하고, 좌익세력이 강한 지역에서는 농민들의 시위, 지주집 혹은 쌀창고 습격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48년 4월 전남광주부의 식량계는 “식량배

39) 49년도와 50년도에 있어 미곡수집실적이 급격히 저하된 이유는 제1공화국출범후 48년 10월 ‘양곡매입법’ 제정과정에서 미군정하에서의 미곡 공출제도에 대한 비판의 여론이 높자, 자가용 식량의 매매 및 운반을 허용하여 강제적 요소를 다소 완화하였다. 이에 따라 미곡수집실적은 급격히 떨어지고, 동법의 시행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50년 2월 ‘양곡관리법’을 공포하여 양곡의 자유유통을 허용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서 미곡수집제도가 농민들에게 얼마나 가혹한 부담이었던가를 반증할 수 있다. 대한민국국회사무처, 『제1호 국회속기록』, 新體, 앞의 논문, 466-468쪽.

40) 배성룡, 「농촌경제의 근황」, 『민주조선』, 48년 4월호, 10쪽.

41) 김병태, 「농지개혁의 평가와 반성」, 김병태의 『한국경제의 전개과정』(돌베개 1981), 38쪽.

42) 樓井浩, 「농지개혁의 재검토」, 『아시아 경제』(아시아경제연구소, 1976), 108쪽.

43) 新納豐, 앞의 논문, 465쪽, 배성룡, 앞의 논문, 9쪽.

급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담화를 발표⁴⁴⁾하고 있으며, 전남 영암에서는 3월 이후 6월 까지 ‘기아군중이 식량창고를 습격하여 수집미를 탈취하는 사건이 빈발⁴⁵⁾하고 있었다.

미군정은 우익세력의 반대를 무릅쓰고, 48년 3월 춘궁기의 5·10선거를 앞두고 ‘공산주의의 불하를 실시해서 8월 15일까지 신한공사 소유 전·답 총필지의 85%를 불하함으로써 소작농의 자작농화를 촉진시켰다. 귀속농지불하는 해당 농민들에게 커다란 희망을 주었는데도 몰라도 단기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농민들의 부담을 과중하는 결과를 낳았다.⁴⁶⁾

왜냐하면 농민은 매년 연생산고의 2할을 15년간 현물로 납입해야하며, 이전과는 달리 지세, 수리세, 농지수선비, 기타 생산에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게 됨에 따라 거의 1/2에 가까운 생산물을 부담해야만 했다.⁴⁷⁾(불하말기 전에는 3:1제 소작료만 지불하면 되었다) 더구나 미군정 재무부는 지세와 지방세의 대폭인상을 발표했는데⁴⁸⁾, 이것은 신한공사의 토지가 밀집되어 있는 전남과 전북의 농민에 커다란 부담이 되었다.

한편 전남의 농민은 하곡(보리)수집 배당량을 수확량이 전년보다 4할이나 감소한 상태에서 전년보다 3만 5천석이 증가한 19만 8천석을 배당받았다.⁴⁹⁾ 설상가상으로 6월부터 7월 말까지 계속된 태풍과 장마로 전남(전북, 경남)지방은 막심한 피해를 입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그들의 ‘민생고’는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다.⁵⁰⁾

III. 여·순사건

1. 해방이후 전남동부지방의 정치

전남동부지방(여수·순천·광양·구례·곡성)은 46년 ‘추수폭동’ 기간 동안 외딴 섬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전남서부지방에서 전개된 경찰·지방관리·지주에 대한 습격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⁵¹⁾

그 주된 이유 중의 하나는 좌익세력과 우익세력이 긴장·대립관계 속에서도 공존할 수

44) 서울신문, 1948년 4월 21일.

45) 서울신문, 1948년 6월 24일.

46) 樓井浩, 『한국농지개혁의 재검토』, 이정식·서대숙외, 『한국현대사의 재조명』, 429쪽.

47) 동아일보, 48년 6월 23일, 지세의 경우 현행세율의 5배, 지방세의 경우 가옥세는 5배, 임야세는 10배가 인상되었다.

48) 樓井浩, 앞의 논문, 419쪽.

49) 서울신문, 48년 6월 24일.

50) 서울신문, 48년 7월 31일.

51) 46년 10월부터 12월까지 당시의 미군정보고서, 국내신문의 기록을 검토해본 결과 보성을 경계선으로 전남동부지방은 서부지방과는 달리 소요사건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있었던 지방정치의 특수성에 기인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⁵²⁾ 이 특수성은 해방 후 자발적으로 조직되었던 지방 건국준비위원회(후에 지방인민위원회)의 성격, 45년 말부터 46년 전반 기까지 약 6개월 동안 이 지역의 점령정책을 실시했던 제69군정단의 활동과 밀접한 인과관계를 지니고 있다.

동부지방의 인민위원회는 구성인원의 과거 경력, 직업적 출신배경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했으며, 동시에 서울중앙이나 광주의 도인민위원회의 통제를 거의 받지 않은 매우 토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45년 8월 20일 조직된 여수건준의 경우 위원장 정애완은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우익인사였으며(후에 초대군수, 제2대 ~ 5대국회위원), 부위원장 이우현은 큰 정미소를 경영하고 있던 갑부였으며, 관리부장 김경택은 일제시 도평위원을 지낸 친일 유지였으며, 노동부장 이창수는 일제말기부터 좌익계독립운동을 했으며, 치안부장 김수평은 일본 명치대를 졸업한 좌익계 지식인으로 여·순사건과 6·25때 좌익적 성향을 나타낸 인사였다. 또한 여수인민위원회는 군청을 접수하지 않는 채 전남관에 본부를 따로 두고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치안대로 경찰서를 접수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치안업무를 수행하였다. 여수지방인민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에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전남동부지방에서는 좌우익이 공존하고 있었으며, 경찰과 지방 관리와의 큰 마찰 없이 활동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⁵³⁾

또한 다른 군정단과는 달리 비교적 많은 해군장교로 구성되어 있었던 제69군정단은 요원의 잦은 본국귀환으로 일관되고 강력한 정책을 수행하는데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⁵⁴⁾ 제69군정단의 이러한 내부적 문제, 그리고 지역적으로 고립된 지역의 취약한 인민위원회의 활동이 군정단으로 하여금, 세부적인 지방적 문제에 깊이 개입함이 없이 군차원에서 감독하는 역할에 머무르도록 만들었다.⁵⁵⁾ 제69군정단은 점령기간 동안 커다란 어려움을

52) ‘추수폭동’이 동부지방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지리적 조건을 들 수 있다. 왜냐하면 당시의 폭동에 사용할 수 있는 통신수단은 구전(口傳), 봉화 등의 원시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인접지방에서 봉기가 일어났을 경우 경찰과 관리는 발달된 통신수단을 이용해 사전에 방비할 태세를 갖추거나, 무마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쪽(순천)으로는 조계산 줄기가, 동쪽(광양)으로는 백운산이 막고 있으며, 북쪽(구례·곡성)으로는 지리산으로 막혀 있어서 전남서부지방, 전북동남지방, 전북동남지방, 경남서남지방으로부터 상대적으로 고립되어 여수·순천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경제·문화권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여수는 해방 전 중요한 미곡·수산물 수출항이었으며, 동시에 일본인들이 토지와 소비재산업에 투기한 교역·산업금융의 중심지였다. 여수·여천향토지 편찬위원회, 여수·여천향토지(동광인쇄공사, 1982), 437-529쪽.

53) 안종철, 「조선건국준비위원회의 성격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정치학과 석사학위논문(1985), 63-66쪽, 『여수·여천향토지』, 300-301쪽.

54) G. Meade,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In Korea』(King's Brown press, Columbia Univ. 1951), 183쪽.

55) 그러나 이러한 제69군정단의 정책이 ‘중립적’이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그들은 우익세력의

겪지 않았으며 이 지역의 경찰은 46년 5월에야 재조직되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동부지방의 좌익은 다른 지방에서와 같이 심한 탄압을 미군정과 경찰로부터 받지 않았으며 ‘숨쉴 공간’과 자기뿌리를 내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⁵⁶⁾

해방초기 전남동부지방의 좌·우익의 갈등-공존관계는 47년과 48년 초까지도 계속 유지되었다. 그러나 분단이 점차 확실해지면서 좌·우익의 정치투쟁이 격렬해지고 전반적인 민중들이 삶의 조건이 누적되어 극한으로 치닫고 있었던 48년 전반기로부터 전남동부지방의 정치적 특수성은 점차 와해되기 시작하고 있었다.

남로당의 주도하에 주로 경남북 지방을 중심으로 서울·부산 등으로 파급된 소위 ‘2·7구국투쟁’(48. 2.7~2.25)은 3·1절을 계기로 전남지방으로부터 파급되었다.⁵⁷⁾ 전남동부지방과 인접한 서부지방(보성, 고흥)에서 발생한 사건을 미군정 정보 보고서의 기록에 나타난 것을 월별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⁵⁸⁾

- 3월 2일 : 숫자미상의 군정이 고흥군내의 경찰지서 습격
- 3월 14일 : 보성군내의 전화선·전신주절단, 교량파괴, 철도절단
- 3월 14일 : 구례군 산동면 50여명의 군중, 경찰에 투석, 경찰이 지도자 사살함으로써 해산
- 3월 22일 : 보성군내에서 숫자 미상의 군중, 2명의 지주의 집을 습격해서 폭행을 함
- 4월 7일 : 보성군 숫자 미상의 군중들, 선거사무소 습격
- 4월 21일 : 고흥군 북남면 50명의 군중, 경찰지서 습격
- 4월 29일 : 구례군 20명의 군중들, 4명의 우익지도자 습격하여 타살
- 5월 8일 : 순천군내 전선절단
- 5월 19일 : 보성군 수동리 숫자 미상의 군중에 의해 2명의 우익지도자 피습, 1명 사망 1명 부상
- 5월 19일 : 보성군 조성면 숫자 미상의 군중, 우익요인의 집에 방화
- 5월 19일 : 순천군 상사면 숫자 미상의 군중, 대동청년단원의 집 방화하고 살해
- 5월 19일 : 순천군 별량면 숫자 미상의 군중, 마을 유지의 집 습격하여 살해
- 5월 19일 : 순천군 10명의 군중, 향보단원의 집 방화, 전화선 절단.

권력이 침해받지 않은 범위내에서, 그리고 미군정의 전반적인 점령정책의 범주내에서 자유방임정책을 실시했다. C.Meade. 앞의 책, 183, 185쪽.

56) B. Cumins, 앞의 책, 302-303쪽.

57) 서울신문, 48년 3월 7일.

58) G-2, Periodic Report, 3월~7월.

- 6월 16일 : 보성군 미력면 덕림리 10여명의 군중 독촉국민회원 구타
- 6월 16일 : 보성군 반응리 면장 살해됨
- 6월 18일 : 보성군 숫자 미상이 군중이 우익인사와 그의 아들 타살
- 6월 21일 : 순천군 서면 대고리 일본도로 무장한 7명의 군중, 지주의 집 습격, 지주와 그 아들 타살
- 6월 23일 : 보성군 100여명의 군중, 경찰지서 습격, 2명의 군중 사망
- 6월 24일 : 구례군 대산면 20명의 폭도, '밀고자' 구타
- 6월 26일 : 보성군 숫자 미상의 군장, 송곡리지서 공격, 경찰 1명 사살, 9명 체포
- 6월 26일 : 순천군 송광면 숫자 미상의 군중, 전직경관 습격 살해
- 6월 29일 : 보성군 웅치면 유산리에서 경찰은 지서습격을 모의중인 30여명의 군중을 산 속에서 발견. 2명 사살

위의 기록에 나타난 사건을 분석해 볼 때, 3·4월에는 보성·고흥·구례지방에 국한해서 나타나고 있지만 5·6월에는 그 지역이 순천에까지 확대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순천에서 발생한 사건들은 5월보다는 6월의 경우가 좀 더 과격해지고 있었지만 보성군에서 볼 수 있듯이 대규모 군중의 동원에 의한 경찰지서 습격으로까지 격화되지는 않았다.

‘추수폭동’과 ‘2·7투쟁’에서 거의 아무런 소요도 보여주지 않았던 전남동부지방은 2월 26일 유엔소총회의 ‘가능한 지역에서의 총선거’ 발표 이후, 그리고 미군정의 ‘단독선거’가 발표된 3월 중순이후 구례군에서부터 소요가 시작되어 ‘5·10선거’를 전후해서는 순천에까지 파급되었다.

그러나 구례와 순천에까지 파급이 국한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여수에까지 파급되었는데 중학생(당시는 6년제였음)들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었다.⁵⁹⁾ 제헌선거를 앞두고 5월초 전남의 13개 학교가 맹휴를 전개했는데, 다음은 당시 신문지상에 보도된 학교명과 그 내용이었다.⁶⁰⁾

59) 여수지방은 ‘3·1만세시위’에서도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다. 이에 자극받은 여수간이수산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1919년 12월 20일 여수장날을 기하여 독립만세 시위계획을 모의했으나 배반자의 밀고로 미수에 그친적이 있다. 또한 1929년 ‘광주학생운동’이 폭발했다는 소식이 여수에 전해지자 여수수산학교학생 2백여명 공립보통학교에 「광주학생독립운동」에 관한 격문(檄文)이 살포되어, 일경이 수사에 나섰다. 이 사건으로 여수수산학교생중 퇴학 12명, 정학 9명을 당했는데 그중 여·순사건때 ‘인민위원회’의장단의 한 사람이었던 이용기(당시 22세)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살펴볼 때 여수는 지식인 중심의 ‘독립운동’ 혹은 ‘좌익운동’이 강한 전통이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여수·여천향토지』174-177쪽.

60) 국사편찬위원회, 『자료대한민국사, 제7권』62-63쪽.

- 광주사범 : 10일, 30여명, 시내에서 시위
- 광주서중 : 7일 2080명 맹휴
- 송정리중학 : 1일 전교 맹휴
- 송정리여중 : 전교 맹휴
- 목포사범 : 학생 20명, 직원 9명 체포
- 영광여중 : 8일 전교생의 절반 맹휴 참가
- 여수중학 : 8일 전교생 맹휴
- 여수공업 : 8일 전교생 맹휴
- 여수여중 : 8일 3학년 맹휴
- 함평농중 : 6일 일부학생 맹휴
- 예학중 : 전교생 맹휴

위의 기록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여수에서는 가장 많은 3개 학교가 참가했으며 다른 지방의 학교보다도 대규모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맹휴를 전개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제1공화국 수립이후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남동부지방(특히 여수)은 가장 위험한 ‘화약고’로 변해가고 있었다. 농민들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높은 미곡공출, 세금 등으로 ‘민생고’에 허덕이고 있었으며 해방이후 ‘인민위원회’의 명맥은 다른 지방보다 온존한 채로 남아 있었다. 또한 이제까지 잠잠했던 구례와 순천은 3월 이후 과격해지고 있었으며, 여수의 중학교 학생들은 조직적이고 집단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광주 제4연대 제1대대(김지화·홍순석·지창수 등 좌익 군간부가 많았다)를 기간으로 48년 5월에 창설된 제14연대였다. 제14연대는 ‘선거저지투쟁’과정에서 경찰의 추적을 받는 전남의 좌익들, 가난에 쫓기는 실업자들의 은신처였으며, 남로당 도당지부는 이들을 조직적으로 침투시키고 있었다.

2. 사건의 전개

가. 반군의 제14연대와 여수읍 장악

제14연대의 좌익들은 10월 들어 동요하고 있었다. ‘제주4·3폭동’ 후 제11연대장 암살사건을 계기로 미군정은 숙군을 시작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영향은 제14연대에도 파급되어 소위 ‘혁명의용군사건’⁶¹⁾에 연대장 오동기 소령이 연루되어 구속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숙군의 와중에서 10월 15~16일경 제14연대에 여수우편국 일반전보로 10월 19일 20시에 제주도로 출동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다.⁶²⁾ 갑작스런 제주도 출동명령은 좌익들에게 ‘동족상잔’과 ‘반란’중 양자 선택을 강요했다. 한편 제14연대내에는 제주도 폭동 진압을 위해 신식무기(M1, 카빈, 기관총)와 풍부한 탄약이 지급되었으며, 반납해야 할 구식무기(일제식 99식 소총)가 병기고에 그대로 남아있어 연대내 좌익들의 반란을 촉진시켰다.⁶³⁾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 해방과 건군』에서는 제14연대가 반란군으로 돌변하는 상황을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⁶⁴⁾

‘제1대대는 식사 후 출동준비를 하고 있었고 잔류부대인 2대대는 출동부대의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 무렵에 연대 인사계 지상사는 대대 핵심세포 40여명에게 사전의 계획대로 무기고와 탄약고를 점령케 하고 비상나팔을 불게 하였다. 이때 시각이 20:00시경이었다. 출동대대는 지체없이 연병장에 집결하였다. (본래 부대출동시간은 21:00 시로 예정되고 있었다.) 지상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지금 경찰이 우리한테 쳐들어 온다. 경찰을 타도하자. 우리는 동족상잔의 제주도 출동을 반대한다. 우리는 조국의 염원인 남북통일을 원한다. 지금 조선인민군이 남조선 해방을 위해 38선을 넘어 남진 중에 있다. 우리는 북상하는 인민해방군으로서 행동한다”는 등의 선동을 하자 대부분이 “웁소”하면서 찬성을 하였다. 이를 반대한 3명의 하사관은 즉석에서 사살되었다. 이미 탄약고는 점령되었고 각자는 실탄을 최대한으로 휴대하라고 지상사는 외치면서 “미제국주의의 앞잡이 장교들을 모조리 죽여라”하였다. 이리하여 출동대대는 반란군으로 변하여 난동에 들어갔다.’

이어 부대주변에 있던 남로당원 23명과 나머지 2개 대대가 합류하여 반군은 3000여명으로 불어났다.⁶⁵⁾ 20일 새벽 01:00경 반군은 지창수의 지휘하에 차량에 분승하여 서정경찰지서를 탈취하고 이어 200명이 지키고 있던 여수경찰서를 공격했다. 반군은 평소 사병들을 멸시하던 경찰관을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하거나 무차별 사살하고, 고인수 여수경찰서장을 비롯한 많은 경찰관을 포로로 했다.⁶⁶⁾

반군들이 읍내로 들어오자 지하좌익단체 및 학생단체 600여명이 합세하여 무기와 탄약을 지급받고, 이들의 선도하에 관공서, 역, 은행 등 중요기관을 습격하였다.⁶⁷⁾ 20일 새벽 여

61) 『한국전쟁사』, 485쪽, 육군본부, 『공비토벌사』18쪽, J.R. Merrill, 『Internal Warfare in Korea, 1948-1950』, (Univ. of Delaware, PH, D. 1982), 210쪽.

62) 『여수·여천향토지』, 307쪽 따라서 군대기밀이 외부로 노출되어 연대내의 좌익과 여수읍내의 남로당계가 사전에 반란을 모의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았다. 그 당시 왜 ‘일반전보’로 제주도 출동명령이 하달되었는지 그 이유는 분명치 않다.

63) J. Reed. 『The Turth about the Yeosu Incident』, 2쪽 J. R. Merrill. 앞의 책, 214쪽에서 재인용.

64) 『한국전쟁사』, 452-453쪽.

65) 김남식, 앞의 책 382쪽.

66) 『여수·여천향토지』, 309쪽.

수습은 완전히 반군치하에 들어갔다.⁶⁸⁾

이어 남로당 여수지구위원회는 소위 ‘인민위원회’를 구성해서 중요기관을 접수하기 시작했으며⁶⁹⁾ 반군과 좌익청년·학생 등은 숨어있는 경찰관, 각 기관의 장, 우익단체원, 지방 유지 등 소위 그들이 ‘반동분자’라고 낙인찍은 사람들의 수색에 나섰다.⁷⁰⁾ 또한 소위 ‘제주도 파견거부 병사위원회’는 읍내 곳곳에 ① 제주도 출동반대 ② 미군도 소련군을 본받아 즉시 철퇴하라 ③ 인공수립만세 등의 성명서를 읍내 곳곳에 붙였다. 이제 여수읍내에는 경찰서가 전소되고 거리거리에 소위 ‘인민위원회’포스터가 나붙었으며, ‘인공기’가 전 여수 시내에 게양되었다.⁷¹⁾ 반군과 좌익분자들은 가가호호를 수색하면서 피신한 대상자를 찾기에 혈안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마구 살생을 자행하였다.⁷²⁾

‘인민위원회’는 오후 3시 여수읍 중앙로타리에서 약 3만의 군중을 동원해서 소위 ‘인민대회’를 개최하여 의장단으로 이용기, 박채영, 송육, 유목윤, 문성휘, 김귀영 등 6명의 의장단을 선출했다.⁷³⁾

21일부터 좌익분자들은 소위 ‘반역자’적발과 숙청을 계속하면서 소위 ‘인민재판’을 개최했다. 제일 먼저 고인수 경찰서장과 사찰계 직원 10명을 처형하고, 23일 오후 5시에는 대관통에서 수천명의 대중이 동원된 가운데 대규모 ‘인민재판’을 개최했다. 이들은 사형(우익요인), 징역(우익가담자), 취체(남노당비 체납자), 무죄석방 등으로 구분하였지만, 대부분 군중심리를 이용하여 즉석에서 무참하게 총살, 타살, 소살, 교살을 자행했다. 이날까지 ‘인민재판’에서 처형된 사람들은 김영준(한민당 여수지부장), 박귀환(대동청여수지구위원장), 연창회(경찰서후원회 회장), 차활인(한민당간부), 이광선(CIC 여수주재위원), 최인태(우익계인사), 김수곤(우익계인사), 박찬길(경찰요원), 박귀영(경찰요원), 김태업(노총여수지구위원장) 및 그 가족 등 수십명에 달했다.⁷⁴⁾

나. 그 확대

여수읍을 장악한 반군 2개대대 병력(약2천명)은 6량의 객차에 분승해서 9시 30분 순천

67) 『한국전쟁사』, 455쪽, 김남식, 앞의 책, 382쪽.

68) 『여수·여천향토지』, 309-311쪽.

69) 위의 책, 310쪽.

70) 위의 책, 31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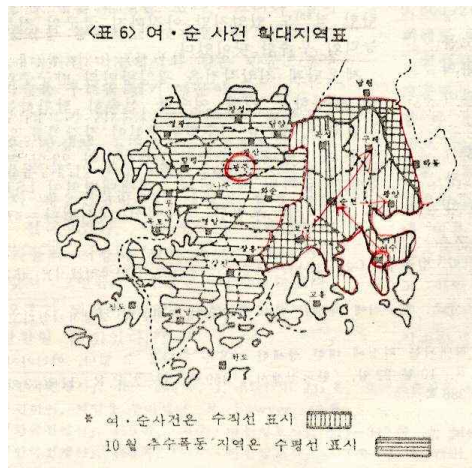
71) 위의 책, 310쪽. 김남식, 앞의 책, 382쪽.

72) 『한국전쟁사』, 455쪽.

73) 김석학·임종명, 『광복 30년, 제2권, 여·순반란편』(전남일보사, 광주, 1975), 55쪽, 『대한민국 제1회 국회속기록』, 790쪽.

74) 김석학·임종명, 『광복 30년 제2회』, 60-68쪽, 김남식, 앞의 책, 384-385쪽.

에 도착하여 중위 홍순석 휘하의 순천주둔 제14연대 2개 중대병력과 합류 순천을 공격했다.⁷⁵⁾ 이때 순천에는 광주 제4연대에서 새벽에 파견된 1개 중대와 순천 및 인근지역 경찰 500여명 방어하고 있었지만 제4연대 1개 중대가 반군에 합류함으로써 오후 3시경 순천도 완전 점령당하였다.⁷⁶⁾



순천에서도 폭도들은 ‘인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인민재판’을 개최했다. 반도들은 여수에서보다도 더욱 잔인하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처형했다. 경찰과 우익 인사들은 재판에 회부되기도 전에 심한 취조를 당했는데, 대부분 인민재판에서 사형을 언도받았다. 특히 순천경찰서장의 경우 죽을 지경에 까지 마구 구타당한 다음, 검은 선글라스를 키고 다니던 눈알을 뽑히고, 의식을 잃을 때까지 군용차 뒤에 끌려 다니다가 끝내는 화형에 처해졌다. 21일까지 400명의 경찰을 포함해서 900명이 처형당했다.⁷⁷⁾

20일 오후 반군은 3개부대로 재편성해서 주력 1000여명은 학구·구례·남원방면으로, 한 부대는 광양방면으로, 다른 한 부대는 벌교, 보성방면으로 경찰서를 습격하면서 분진해 나갔다.

반군주력은 20일 오후 광주에 파견된 미군사고문관이 급조한 제4연대의 임시 편성된 1개 대대와 20일 자정쯤 학구리에서 조우하여⁷⁸⁾, 허리를 잘리고 배후를 차단함으로써 북상을 차단당하고 있었지만, 나머지 2개 방면의 부대는 보성과 광양까지 세력범위를 확장시켰다. 반군의 점령지역은 21일 정오를 전후로 해서 최대로 확장되었는데, 그 범위는 <표6>과 같다. 이 지역 중 여수·순천·보성·광양지역은 거의 전지역이 반군과 토착좌익에 의해 점령당했으며, 하동·남원·구례·곡성지역은 일부지역만이 점령당했다. 이렇게 점령지역이 급작스럽게 팽창한 이유는 첫째, 순천을 방어할 때 경찰병력이 일부 동원되었고 둘째, 이들 지역 대부분이 다른 지역보다 토착 좌익세력이 상대적으로 많이 잔존하고 있어, 반군이 진입하기 전에 반군의 소식을 듣고 경찰지서 등을 습격했기 때문일 것이다.⁷⁹⁾

75) G-2 P.R. 10월 21일, 『한국전쟁사』, 457쪽.

76) J.Merrill, 앞의 책, 218-220쪽. 『한국전쟁사』, 457쪽.

77) J.Merrill, 앞의 책, 222-223쪽, 김석학·임종명, 『광복30년, 제2권』, 11쪽, 『한국전쟁사』, 457쪽.

78) 미군사고문관이 제4연대 임시 1개 대대를 급조, 학구리에 파견한 것이 반군을 봉쇄하는데 결정적이었다고 한다. J.R. Merrill, 앞의 책, 284쪽.

다. 진압작전과 게릴라의 출현

20일 새벽 주한미군임시고문단장 로버츠 준장은 여·순사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비상회의를 요청했다. 국방장관 이범석, 총사령관 송호성, 수명의 미군사고문관 및 한 국인 장교가 참석했던 이 회의에서 작전을 지도할 특수부대를 광주에 파견키로 결정했다.⁸⁰⁾

전반적인 작전계획은 이 특수부대가 20일 오후 광주에 도착한 직후 수립되었다.⁸¹⁾ 당시 경비대 총사령관 송호성 준장을 미군사고문관 하우스만 대위와 그 외의 2명의 미고문관의 작전보조를 받았으며, 그 후 5명의 고문관이 보강되었다.⁸²⁾

육군총사령부는 10월 21일 반군도벌총사령관에 총사령관 송호성 준장을 임명하고, 광주, 마산, 대구, 진주, 군산, 대전에 주둔하는 총10개 대대 병력을 광주, 남원, 하동에 집결시켜 동일 18:00시에 순천, 보성, 광양방면의 반군을 포위하고, 22일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여수, 순천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함으로써 진압작전을 본격화했다.⁸³⁾

순천탈환작전은 제3연대 제2대대, 제4연대 1개 대대, 제12연대 2개 대대가 22일 학구리를 점령하고, 제12연대 2개대(소령 백인엽지휘)가 순천으로 진격함으로써 결정적 계기를 맞는다. 이에 앞서 반군주력 2개 대대는 소규모 단위로 산개해서 광양, 백운산, 벌교, 보성으로 도주했으며, 제12연대 병력이 순천에 진입했을 때는 좌익청년단, 학생단체에 의해 방어되고 있었다. 진압부대는 23일 오전 순천을 완전히 점령했다.⁸⁴⁾

순천은 진압작전에 있어 반군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중간지점이었다. 따라서 전투사령부와 기갑부대, 순천탈환 5개 대대, 경찰부대가 집결하여 제2단계 진압작전에 들어갔다. 진압부대가 순천에 집결하여 부역자 색출 및 치안유지에 힘쓰고 반군을 신속하게 추격하지 못한 이유는 정확한 정보획득의 곤란한 점⁸⁵⁾도 있었지만 아직까지 국군의 전투능력이 부족한 탓이었다.

제2단계 진압작전은 광양방면의 반군주력을 섬멸하는 것과 여수를 신속히 탈환하는 것이었다. 24일 여수탈환작전이 장갑차를 앞세운 제3연대의 증강된 1개대와 23일 부산에서

79) 반란지역이 곡성·구례·남원·하동으로 확대되는 과정에 대한 상세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여러 가지 문헌에서 잠시 언급된 정도이다. G-2 P.R. 10월 22일, 『한국전쟁사』, 458쪽. G-2 P.R. 11월 2일(주한미사령관의 성명), 김남식, 앞의 책, 386쪽.

80) J. Merrill, 앞의 책, 224쪽.

81) J. Merrill, 앞의 책, 225쪽.

82) R. K. Sawyer, 앞의 책, 39쪽.

83) 『한국전쟁사』, 459-460쪽. 『공비토벌사』, 15-16쪽. J. Merrill, 앞의 책, 226쪽.

84) 『한국전쟁사』, 461-466쪽. G-2 P. R. 10월 25일, J. Merrill, 227-228쪽.

85) 『한국전쟁사』, 464쪽.

급파된 제5연대 1개 대대와 23일 부산에서 급파된 제5연대 1개대 병력이 LST로 여수만을 포위한 상태에서 개시됐다. 그러나 미평부근의 교량근처에 매복중인 반군의 기습을 받아 제3연대 병력 270명이 사상 당하고 송호성 총사령관이 부상, 외신기자가 피살된 사태가 발생했다.⁸⁶⁾

미평사건은 국내적·국외적인 불안감을 조성했으며, 따라서 여수탈환작전이 반군추격보다 더욱 시급한 문제로 등장했다. 이에 따라 반군은 추격중인 광양방면의 제12연대 2개 대대를 여수탈환작전에 투입하는 것이 불가피했고, 이러한 정치적 고려는 반군주력이 섬진강을 거쳐 지리산으로 잠입하게 만들었다.⁸⁷⁾ 또한 미평에서 진압군이 주춤하고 있는 사이 여수읍내에 있던 반군 1개 대대가 야음을 틈타 진압군 포위망을 뚫고 벌교와 지리산 방면으로 도주하고 말았다. 이제 여수는 1000명의 노동자, 좌익분자, 학생 및 청년단체에 의해 사수되고 있었다.⁸⁸⁾

진압부대는 25일 오전 장갑차를 앞세우고 제2차 공격을 시도하여 오후 3시경 여수읍 외곽고지를 장악한 다음 시가지에 대한 박격포공격을 가한 다음 장갑차를 읍내에 투입하여 반군에 대한 공격을 했다. 그러나 밤이 되어 공격을 중지하고 고지로부터 철수하였다.⁸⁹⁾ 왜냐하면 미평에서와 같은 반군으로부터의 기습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26일 정오가 지나서 진압부대는 최종 공세를 폈다. 장갑차, LST의 박격포사격의 지원을 받은 제12연대 2개 대대는 제3연대 1개 대대와 제2연대의 일부 병력과 함께 여수읍내로 진격하였다. 이 과정에서 여수읍내의 좌익분자들의 저항이 결사적이었고, 시가전으로 맞서 그만큼 여수읍은 황폐화되었다. 27일 오후가 되어서야 진압부대는 여수를 완전히 재탈환할 수 있었다.⁹⁰⁾

여수탈환을 마지막으로 여·순반란지역은 일단 완전히 진압되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보성에서는 24일 오후2시, 벌교 25일 오전10시, 광양 26일 오후 7시, 구례 27일 오후 2시, 여수 28일 오전 8시에 각각 업무를 재개할 수 있게 되었다.⁹¹⁾

여·순반란사건의 피해가 총체적으로 집계된 자료는 발견할 수가 없다.『한국전쟁사 1권』에는 여·순사건 1주일 현재 여수지구에서 만 관민 1,200명이 학살당하고 중경상사1,150명, 가옥소실 파괴 1,538동, 동이재민 9,800명이 발생하였으며, 순천지구의 인명 피해도 약 400

86) 『한국전쟁사』, 466-469쪽, J. Merrill, 231쪽. 로버츠 준장은 이때 H. E. Fuller 대령을 여수탈환작전에 파견하여, 책임을 부여했다. R. Sawyer, 40쪽.

87) 『한국전쟁사』, 469쪽, 『여수·여천항토사』, 311-312쪽, J. Merrill, 231-232쪽.

88) 『한국전쟁사』, 469쪽, 『여수·여천항토사』, 313쪽, J. Merrill, 232-233쪽.

89) 『한국전쟁사』, 469쪽, J. Merrill, 233쪽.

90) 『한국전쟁사』, 469-470쪽, J. Merrill, 233-235쪽.

91) 『제1회 국회속기록』, 743-745쪽.

명에 달했다고 한다.⁹²⁾

진압작전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미군사고문관들의 원조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⁹³⁾ 하우스만 대위와 몇몇 고문관들은 경비대의 취약성, 즉 부대전투능력의 부족, 유능한 지휘관의 부재, 인접부대간의 상호협동작전의 부재, 광범위한 포위망 형성에 따라 통신두절, 부대에의 좌익의 침투, 장교와 사병간의 일체감부족 등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작전계획수립, 병력집결지 선정, 작전지원 등을 통해 진압작전이 그나마 신속하게 종결될 수 있게끔 했다. 이러한 경비대의 취약성과 제1공화국의 정치적 취약성은 미군의 작전과 장비를 통한 진압작전 원조에도 불구하고 결국 반군들이 지리산을 도주, 유격전구를 마련할 수 있게 해 주었다.

3. 탈환후의 여·순지구

여수·순천지역이 재탈환되자 군과 경찰은 계엄령하⁹⁴⁾에서 가장 먼저 반군 및 부역자 색출에 나섰다. 이것은 반란지역의 치안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군과 경찰이 여·순 사건의 최대의 피해자였기 때문이다.

순천의 경우 23일 오전 약 5만 명의 읍민이 순천북국민학교 교정에 집결되었다.⁹⁵⁾ 여기에서 군용팬티를 입은 자, 머리가 짧은 자, 하얀 고무신을 신은 자들이 1차로 분류되고 2차로 군, 경, 마을 유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 의해 제1급(인민재판에 적극적으로 참여한자), 제2급(소극적으로 참여한 자), 제3급(애매한 자)으로 분류되어 심사를 받았다. 심사는 주로, 외모, 고발, 개인적 감정에 의한 중상모략, 강요된 자백에 근거를 두었기 때문에,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처벌받았다.⁹⁶⁾

이중 반군이나 ‘인민재판’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우익인사의 처형에 앞장섰던 자는 즉석에서 곤봉·개머리판·채인 등으로 무참하게 타살되거나 총살당했으며, 나머지는 계엄군이나 경찰에 넘겨져서 재판을 받았다. 여수의 경우 혐의자는 오동도에 재수용되어 심사를 받은 자가 수백명에 달했으며, 만성리로 가는 터널뒤쪽에는 집단 총살당한 자가 수를 헤아릴 수 없었으며, 백두산 호랑이로 이름이 높았던 김종원 대대장이 중앙교정(中央校庭)의 버

92) 『한국전쟁사』, 452쪽.

93) R. Sawyer, 40쪽.

94) 여·순지구의 계엄령은 게릴라가 거의 궤멸상태에 접어든 1950년 1월 25일 지리산 지구 전투사령부가 해제되고 같은 해 2월 5일에야 해제된다.

95) 김석학·김종명(제2권), 159-160쪽.

96) 김석학·임종명(제2권), 160-165쪽, 「여수·여천향토지」, 134쪽.

드나무 밑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참수즉결처분(斬首即決處分)을 하기도 했다.⁹⁷⁾

반란 참가혐의를 받은 대부분의 민간인은 경찰로 넘겨졌다. 여수와 순천에서만 반군과 좌익가담자에 의해 무참하게 400여명이 피살된 경찰은 혐의자를 때로는 법적인 절차에 상관없이 가혹하게 고문하거나 심지어는 즉석에서 처형까지 했다.⁹⁸⁾

육군사령부는 49년 1월 10일 여·순사건과 관련하여 군사재판에 회부된 군인의 재판결과를 발표했는데, 총 2,817명이 재판을 받아서 410명이 사형, 568명이 종신형, 나머지가 유죄형 혹은 무죄석방되었다고 한다.⁹⁹⁾

여·순지구에는 반군치하에서 해체되었던 이전의 정당·사회단체들이 재조직되기 시작했으며, 자위대·우익청년단체 등은 강화 혹은 신설되기까지 했다. 순천의 경우 ‘충무부대’가 신설되었다. 동단체는 ‘학생연맹’과 청년단출신 총 7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한민당·대한부인회의 지원과 협조하에 반군들에 대한 정보입수, 척후탐지 등을 통해 군·경진압부대를 지원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¹⁰⁰⁾

여수의 경우 폐허화된 여수재건을 위해 ‘여수부흥기성회’(회장 : 문군, 부회장 : 정재완, 초대군수)가 조직되었다. 동단체는 주로 군·관민의 교량역할을 담당하였으며 공지에 빠져있는 지방 유지들을 구출하기도 하였는데 그 대표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김○○ : 반군에게 2백만원을 제공약속했다는 혐의와 그의 집에서 장총 3정이 발각되어 중앙교에서 29일 동안 구치되어 있는 것을 구출

박○○ : 당시 여수금융조합장 이사였는데 ‘인민위원회’의 재정책을 맡았다는 혐의로 공지에 처한 것을 구출

김○○ : 반군에서 서북청년단원의 주거를 가르쳐준 혐의로 체포 대상이 돼있는 것을 구출

그러나 ‘여수부흥기성회’같은 단체들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계엄지역내의 주민들은 타지방과의 교통, 통신이 차단된 채 고립된 생활을 해야만 했다. 그들은 여·순사건이 남기고 간 살인과 파괴, 그리고 이후의 부역자처벌, 군경의 토벌작전, 게릴라의 습격, 우익청년단체의 테러, 이웃과의 불신과 감시 속에서 목숨을 유지해야만 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반공만이 유일한 삶의 길임을 확인해야만 했다. 뿐만 아니라 그들 대부분의 소작료, 양곡매입, 지세

97) 『여수·여천향토지』, 314쪽.

98) 그 대표적인 예가 순천지역 국회의원 황두원과 검사 박창길을 들 수 있다. 조선일보, 11월 12일, J. Merrill, 239-240쪽.

99) National Unification Board, 『An Arthology of Selected Pieces from the Declassified File of Secref U.S Matererials on Korea before and during the Korean War』(Seoul Korea, 1981), 30쪽.

100) 김석학. 임종명(제2권), 165-168쪽.

와 가옥세, 시국대책비, 국민회비, 의용단비 등의 경제적 부담까지 짊어져야만 했다.

VI. 맺음말

해방, 건국, 여·순사건에 이르기까지 전남지역의 민중들은 좌절, 가난, 충격을 숨가쁘게 감내해야만 했으며,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의 ‘한의 모닥불’은 꺼질 줄을 몰랐다. 50년 2월 5일 정부의 계엄령해제로 ‘한의 모닥불’은 약해지는 듯 했다. 그러나 그들은 보다 엄청난 충격, ‘6.25’를 맞이해야만 했다. 그들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볼 때 전쟁은 이미 여·순사건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여·순사건의 여파는 전남지방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었다. 미군철수 연기 및 군원 증강, 반군의 지리산 게릴라기지 구축 및 북한 공산정권의 게릴라 남파, 이에 따른 국내치안의 불안 및 남·북 갈등의 첨예화, 숙군·청년단체 통폐합 및 군대증강, 학도호국단 창설, 국가보안법, 군군조직법, 임시우편 단속법안의 통과 등과 같은 국가제도 및 기구, 그리고 사회구조에 미친 영향 또한 엄청난 것이었다.

여·순사건을 전후한 국가·사회구조의 변화는 물론 그 질과 성격에 있어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여·순사건을 통해 반공국가의 구체적 내용들이 채워지기 시작했다. 제1공화국은 ‘여순사건’을 계기로 명실상부한 반공국가로 존재할 수 있었다.

여순사건의 배경과 전개과정

안 종 철(민주화보상지원단 전문위원·정치학박사)

I. 머리말

1998년 올해는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지 50주년이 된 해이다. 그 동안 수십년간의 군사정부에서 문민정부를 거쳐 국민의 정부로 발전되면서 대한민국정부의 정통성이 상당히 많이 확립되기 시작하였음을 자타가 공인하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도 남북으로 분단된 국가적 상황뿐만 아니라 국내정치적 상황에서는 동서로 나뉜 정치가 아직도 안정적인 정치지형을 만들어내기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러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것은 정치불안을 야기하는 중요요소로 작용되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국가권력의 정통성 문제로 제기되기도 한다. 국가권력의 정통성은 국민들의 지지를 어떻게 확보하고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가 척도로 작용한다. 국가권력이 정통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가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권력은 폭력성을 나타낼 수밖에 없어진다. 그 폭력성은 곧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대한 해를 끼쳐 인권침해로 나타나게 되고 국가와 사회의 비인간화로 귀결된다.

한국현대의 정치는 이러한 국가정통성의 문제로 끊임없는 갈등과 대결의 연속이었다. 해방 3년의 미군정시대를 거치고 제 1공화국이 수립된 후 이에 대한 국가 정통성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그것은 해방이전 모든 민족운동이 독립된 통일 조국을 건설하겠다는 의지의 발로였으나 결국은 해방이후 분단국가로 귀결됨에 따라 국민의 좌절은 이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1948년 제 1공화국이 수립되자 제 1공화국의 정통성확보가 확립되지 못함으로써 이에 대한 저항과 체제위기로 인해 여순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의 발발배경과 원인을 엄밀하게 규명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다. 여순사건이 직접적으로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14연대의 반란으로 촉발되었지만 그것이 여수와 순천 그리고 인근 지방으로 신속하게 확산되었던 상황을 고려해본다면 당시 여순지역 일반주민들의 의식상태와 계급적 상황까지 분명하게 정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본 글은 전문적인 학술논문이 아니므로 여순사건의 발

발배경을 직접적인 배경과 간접적인 배경으로 나누어 통사적 측면에서 평이하게 서술하기로 한다. 사실 이렇게 직접적, 간접적 배경으로 나누는 것은 많은 위험부담을 갖고 있으나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법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 또 당시를 기록하고 있는 여러 자료들 중 서로 상반되게 기록하고 있는 부분들은 엄밀한 검토를 통해 가장 객관성이 크다고 입증되고 있는 부분을 취하기로 한다.

여순사건의 발발원인을 기존 연구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여순사건의 명칭을 규정하는 개념도 이러한 입장에 따라 달라지게됨은 물론이다.

첫째, 돌발적인 사건으로 보는 입장이다. 이것은 제주도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 14연대의 일부 병력을 파견하기로 결정하자 좌익세력들이 반란에 대한 준비를 완벽하게 갖추기도 전에 돌발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이다. 남로당 중앙당에서도 미리 계획을 세웠다는 증거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추후에 이를 수습하는 상황이었고 남로당 전남도당에서는 이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는, 14연대의 독자적인 결정으로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는 주로 미군사고문단의 입장이다.

둘째, 압력분산설이다. 당시 제주도 유격대에 가해지고 있던 정부 당국의 압력을 분산시켜 제주도의 혁명을 성공시키고 이와 더불어 본토에 제 2전선을 형성함으로써 전국적인 혁명을 성공시키기 위해 좌익세력들이 계획적으로 발발시켰다는 관점이다.

셋째, 미국의 결의 실험설이다. 이것은 정치적인 요인에 더 많은 비중을 두면서 당시 반란을 남로당에서 세웠던 계획의 일환이라고 보는 것이다. 즉 미국의 개입정도가 어느 정도일 것인가를 시험해 보는 동시에 새롭게 등장한 대한민국정부의 정통성을 기초부터 흔들여 놓겠다는 일련의 봉기로 보는 입장이다.

이러한 주장들을 뒷받침하기 위해 당시의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기로 하자.

II. 여순사건의 발생배경

1. 직접적 배경

가. 여수 14연대의 창설과 구성

1945년 해방으로 남한에 진주한 미군은 남한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점령기의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한국인에게 권력을 이양하기 위한 일련의 준비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미군의 철수 후를 대비한 한국군 창설이 서둘러 시작되었으며 전국 각 지역에서는

美軍事顧問官이 지휘하는 가운데 한국군의 각 연대가 창설되었다.

미군정청은 해방직후 우후죽순처럼 분출하였던 수십개의 사설군사단체와 좌익 군사조직들에게 군정법령 28호이었던 사설군사단체 해산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1946년 1월 12일 국군준비대 등의 사설군사단체를 해산하고 국방경비대와 조선해안경비대를 창설하였다. 국방경비대는 군정법령 제 42호에 따라 태능에 있는 일제 때의 육군지원병훈련소 자리에 총사령부를 두고 각 지방에 향토연대를 창설하였다. 그리하여 국군준비대에 가입하여 활동하던 일반 병사들은 국군준비대의 해체로 인하여 상당수가 국방경비에 가입하게 되었다.

국방경비대는 당초 미군정청이 경찰의 예비 병력임을 표방하면서 창설하였기 때문에 경찰예비대 또는 향토경비대라고 불리었다. 따라서 경찰의 하부조직 같기도 하고 군대 같기도 한 애매모호한 성격 때문에 일반인들의 기피 현상도 있었고 군대에 대한 인식이 좋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충원에 어려움이 많아 1개 연대를 편성하는데 몇 개월씩이나 걸리기도 하였다. 그래서 경비대의 충원은 거의 가두 모병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또 당시에는 정치적 상황이 좌우의 구별이 확실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지원자의 경력이나 정치적 성향을 따질만한 여유가 없었으므로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던 좌익활동가, 일반 우범자, 먹고 살기 어려운 실업자들이 손쉽게 가입할 수 있었다.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던 자들은 경찰의 체포를 피하기 위한 보호막으로 경비대를 이용할 수 있었고 실업자들은 당시의 생계유지가 극도로 어려운 상태에서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생활수단으로 국방경비대를 이용하였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국방경비대원들에게 애국심이라든지 민족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광주에서는 46년 2월 15일 국방경비대 제 4연대가, 국군준비대의 임시 병영이었던 광산군 극락면 쌍촌리의 일본군 해군 豫科練의 병사에 창설된 A중대의 모병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는 46년 12월 말까지 3개 대대로 편성이 완료되었다. 초대 창설지휘관은 金洪俊부위(만군중위,경북상주출신), 金英煥 참위(학병출신 일군소위), 趙岩 참위(학병출신 함북경성), 최홍희 참위(함북길주 출신), 김현수 참위 등이었다. 미군정청의 루빈대위가 고문으로, 마그넬 중위가 경리책임자로 일했다. A중대에 입대한 대원 가운데 김점곤(학병출신,경비사관 제 1기), 임충식(만군준위,경비사관 제 1기), 전부일, 김재명, 신동금, 김종관, 김련, 한진영(경비사관 제 2기) 등이 있었고, 그 외에도 징병으로 일본군에 갔다 온 귀환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4월경에는 B중대가 편성되어 최홍희 참위가 중대장으로 임명되었으며 5월에는 C중대가 창설되어 오규범 참위(군사영어학교,만군출신)가 중대장으로 임명되었고, 8월경에는 D중대가 창설되어 백인엽 참위가 임명되었다.

8월경의 4연대 편제는 A중대장 김동빈, B중대장 이영규, C중대장 오규범, D중대장 백

인엽 참위였다. 이로써 4연대는 우선 1개 대대의 지휘체계로 출발하였고 당시 4연대 병사는 창설 초기에는 구 일본군 병사를 그대로 사용하는 한편 구 병사 옆에 6개월간의 공사를 진행한 끝에 새로운 병사를 지어서 사용하였다.

정일권 정위는 6월 말경 연대장으로 부임하였다. 실제 발령날짜는 5월 25일이었으나 부임할 당시의 사소한 사건으로 적십자병원에 3주간 정도 입원하였다가 제 4연대로 보직을 받았기 때문에 6월말경이 된 것이다.

당시 4연대 내에는 이질적인 하사관들이 섞여 있었고, 또 일제때의 경력을 앞세우는 고참 하사관들이 많이 있어서 장교들에 대한 태도가 불량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하극상과 같은 사건들이 빈발하고 있었다. 또한 좌익계 병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부반의 안팎에는 공산주의를 찬동하는 뼈라들이 널려있기가 다반사였다. 이들은 동조자를 포섭하기 위해 비밀리에 회합하는 등의 행위들을 많이 보였지만 당시의 사정으로는 이들을 제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었고 상층부의 책임 장교들은 관심도 두지 않은 상태였다. 이 모든 것이 당시에는 좌익활동이 공공연히 진행되기도 하고, 설립될 국가의 성격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가능했었다.

4연대의 창설요원들은 각 경찰서와 군청의 협조를 받아 모병활동에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었다. 국민학교 교정 등에 청년들을 모이게 한 다음 입대연설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었는데, 이들은 진도, 완도까지 순회하는 모병작업을 벌였지만 목표는 달성할 수 없었고 80%정도만 유지하는 형편이었다. 이에는 경찰의 예비대라는 인식이 모병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 때 270여명이 선발되었는데 여기에는 해방 전의 광복군, 일본군, 만주군 장교 또는 하사관 출신과 중학교 이상의 학력자를 우대해서 선발된 것이다. 선발과정은 신체검사와 구두시험이 전부였고 그 중 신체검사는 도립병원(현 전남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최상채 박사의 주도로 진행되었다. 훈련은 초기에는 일본군식으로 진행하다가 얼마 후에는 미군식으로 개편되어 진행되었는데 훈련이 엄하여 이를 견디지 못한 상당수의 훈련병들이 도주하는 바람에 1백여명이 줄어들게 되었다.

정일권 소령이 1947년 1월에 경비사관학교의 교장으로 전출되자 행정관인 조암대위가 대대장이 되었다. 이어서 1946년 12월 14일 경비사관 2기로 임관한 이종국, 조운학, 오익경, 정인규, 임익순, 이관식, 최석락, 김희준, 오익경, 정지웅, 박율선, 김운원, 계창율, 노영목 등이 충원됨으로서 제 2대대의 편성에 착수하였다.

오일균 대위는 2대대장으로 1947년 9월부터 12월 초까지 재직하면서 경비사관학교 구 대장 시절에 의기투합했던 3기생 홍순석, 김지희 소위와 가깝게 지냈다. 제 4연대가 3개 대대의 완전 편성을 마친 것은 1948년 1월 10일이었다. 4연대는 48년 5월 1일에 창설된 제 5

여단에 예속되었고 5월 4일 여수에 제 14연대가 창설되자 제 1대대장 이영순 소령이 연대장으로 보임되면서 안영길 대위 이하 1개 대대병력이 제 14연대로 진출되었다.

1947년 5월 21일 제 4대 연대장으로 부임한 이한림 소령은 48년 8월까지 재직하였고 그 뒤를 이어 이성이 중령이 연대장에 부임하였다. 제 4연대는 여순사건이후 11월 20일 제 20연대로 개편된다.

미군정청이 광주에 4연대 그리고 여수에 14연대를 창설한 것은 주한미군의 철수에 대비하고 한국의 반공국가로서의 안정적인 기반을 다지기 위한 것이었다. 14연대를 창설할 때도 처음에는 4연대에서 차출된 기간요원 중에서 하사관 출신 50여명이 근간이 되었다. 여순사건의 주동이 되는 지창수도 그 중의 한명이었고 그 역시 광주의 4연대 모병 때 입대한 것이었다. 14연대를 창설할 때 광주의 4연대 대원중에서 평소에 까다로운 행동을 하거나 사상이 의심스러운 구성원들이 대부분 14연대의 창설요원이 되었다. 우선 14연대의 신설 대대장으로 보내진 안영길 대위(일본군 해군 主計 중위)부터가 후에 숙군의 대상이 되는 좌경혐의자였고 상당수의 하사관들도 좌경활동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다수 있었다. 14연대는 광주의 4연대와는 다르게 처음에는 제 4여단에 배속되었으나 6월 1일자로 다시 5여단으로 예속이 변경되었다.

14연대의 창설요원으로 뽑힌 800여명의 병사들은 차출 케이스로 뽑혔다는 사실만으로도 동료의식을 느끼고 있었으며 사상적으로도 동질성을 가질 수 있었다. 14연대의 병영은 여수읍에서 4Km쯤 떨어진 여수반도 남단에 위치한 신월리에 있는 구 일본군 항공기지(지금의 한국화약자리)에 자리하였다. 일제하에서 일본군이 태평양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농민들의 마을을 강제로 징발하여 사용하고 있던 곳이 미군의 재점령으로 14연대의 부대 소재지가 된 것이다. 광주로 부터 열차로 800여명의 기간요원이 도착하자 신병모집이 시작되었다. 약 2000여명의 신병을 모집하여 3개 대대를 편성할 목적이었다. 제헌의원선거가 실시된 직후였기 때문에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 반대운동에 가담하였던 청년들이 경찰의 추적을 피해 14연대의 모병에 응해옴으로써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됐던 군대 편성이 의외로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었다.

초대 연대장 이영순 소령은 한달 남짓 근무하다가 6월 18일자로 김익렬 소령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김익렬 소령도 얼마 후 경질되어 7월 15일 오동기 소령이 부임하였다. 오동기 소령은 얼마 후 혁명의용군사건으로 서울로 소환되어 구속당하는 운명이 되는데 실제로 그는 광복군출신으로 군인정신에 투철한 장교였다. 그는 평소에 군장교의 부패 타락을 개탄하면서 군대의 개혁을 외쳤다. 여수의 14연대의 연대장으로 부임하자마자 당시 송호성 육군 총사령관이 독점하고 있던 군대 부식의 납품을 여수 시내 상인들의 공개입찰로 바뀌

서 사병 부식의 향상을 도모하는 조치를 취하고, 장교들에 편중되어 있던 부식비 배정을 모든 장병들이 균등하게 혜택이 되도록 하였다. 이렇게 되자 그동안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던 기존 상인들과 장교들의 불만을 사게 되었고 이것이 결국은 혁명의용군사건이라는 조작된 사건에 연루되어 서울로 소환되는 운명이 된 것이다. 오동기 소령은 9월 28일 송호성장군의 소환을 받고 상경했다가 10월 1일 군사재판에 회부되었다.

결국 오동기 소령은 이렇게 구속되어 10년형을 언도 받게 되고 대신 나이 많은 일본군 출신 박승훈 중령(일본 육사 제 26기)이 10월 7일자로 14연대장에 부임해왔다.

이상과 같이 14연대는 출발부터가 좌익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구성되었으며 그들간의 연대의식은 대단히 강했다.

나. 군과 경찰의 갈등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방경비대는 경찰예비대라는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경찰도 군대도 아닌 애매한 성격의 것이었다. 경찰은 국방경비대를 자신들의 예하기구로 보고 멸시하는 측면이 있었다. 그것은 경찰들은 일정교육을 받은 당당한 치안관리인데 반하여 경비대는 실업자와 우범자가 모인 잡동사니 집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국방경비대 병사들은 상당수가 한글도 깨치지 못한 문맹이었고 농촌의 머슴이나 관공서의 사환 등 경찰로서는 하찮게 볼 수 있는 기층민들이 상당수 있었다. 또한 국방경비대의 복장이 경찰의 복장과 비슷했고 장비에서도 경찰장비가 우수했기 때문에 우월감을 가질 수 있었다.

이처럼 경찰이 국방경비대를 멸시하는 태도를 갖고 있었음에 반해 국방경비대원들은 경찰에 대해 역시 다른 이유로 멸시하고 있었다. 국방경비대원들은 대부분의 경찰들이 일제하의 친일경찰 출신들이고 자신들의 부귀영화를 위해 민족과 국가를 팔아먹은 매국노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또한 ‘군은 경찰의 우위에 있다’는 군국주의적 사고가 그대로 답습되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보다는 우위에 있다는 우월감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객관적 상황과 더불어 국방경비대내에는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는 범법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체포하려는 경찰과 국방경비대간의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이는 여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갈등은 사소한 문제로 폭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예로는 영암, 구례, 순천 등지에서의 국방경비대와 경찰 간의 무력 충돌들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은 결국 군사고문단과 상급기관의 중재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었다.

영암의 군경충돌은 1947년 6월 1일 발생했다. 휴가 나온 국방경비대의 하사관 한명과

신북지서의 지서원들 사이에 사소한 시비가 벌어졌는데 그것은 지서 경찰들이 국방경비대원들이 쓰고 있던 모포가 일본의 사꾸라와 비슷하다는 야유를 보내자 하사와 경찰들간에는 싸움이 벌어졌고 영암경찰에서 출동한 경찰들은 국방경비대의 하사를 입건해버렸다. 이 소식을 들은 광주의 4연대 경비대원들은 구속된 하사의 석방을 요구하기 위해 9명이 영암으로 출동하여 경찰간부들에게 하사의 석방을 요구하자 도경찰청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말에 광주로 귀대하는 도중에 신북지서 앞에서 20 여명의 경찰관들에 의해 출동한 경비대원들이 구타를 당하게 되고 인솔자인 2명의 장교가 시멘트바닥에 무릎을 꿇은 상황으로 까지 급진전되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4연대의 병사들은 6월 2일 저녁 하사관들을 중심으로 8대의 차량에 270명의 병사들을 동원하여 영암경찰서로 출동하였다. 그들의 당초 목표는 영암경찰서를 포위하여 위협함으로서 구속된 하사관을 석방시키고 구타를 주동한 경찰들을 연행하여 혼내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영암경찰서를 포위하여 위협하는 도중 서로 총격전이 벌어져 6월 3일 새벽 3시부터 7시 30분까지 무려 4시간 반이나 상호간에 총격전이 계속되었다. 긴급히 출동한 4연대장과 영암군수, 영암경찰서장의 개입으로 중지되었지만 경비대의 하사 2명과 경찰 1명이 전사하고 수명이 부상당하는 결과로 끝나게 되었다.

구례사건은 1948년 9월 24일 구례읍내의 한 이발관에서 술에 만취한 구례경찰서 수사계 김모 경사가 이발관 주인의 인사가 불손하다는 이유로 그를 마구 구타하자, 휴가중 이발관에서 휴식 중이던 14연대 소속 장병이 이를 중재하였다. 이에 화가난 김경사는 전서원을 비상소집하여 구례읍내에서 휴가 중이던 14연대 사병 9명을 모두 구금하여 구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정보를 입수한 14연대에서는 즉시 헌병들과 일부병력이 구례로 출동하여 경찰서장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동시에 구속 중에 있던 사병들을 인수하는 사건이 있었다.

함평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48년 7월 12일 국방경비대원 18명이 함평군 학교면 학교지서를 무장한 채 습격하여 전화선을 절단하는 동시에 지서원을 철봉과 장총으로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무려 3시간 동안이나 난타하여 경찰서원 2명이 전치 2주의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있었다.

전남지방에서의 이상과 같은 국방경비대와 경찰 간의 갈등 양상은 전국적으로 빈발하고 있었다. 부산역 사건, 장택상 수도청장과 최홍희 소령의 충돌, 대전의 사건, 경북 영일군의 사건, 철도경찰과의 충돌사건, 서북청년단과의 살륙전 등이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다. 남로당의 침투와 숙군 작업

해방직후 좌익세력은 자신의 武裝力을 갖기 위한 준비를 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국군준비대를 창설하여 자신의 무장력을 갖고자 하였으나 미군정의 해산명령에 따라 자신의 군사조직을 상실하게 되자 미군에 의해 창설되는 국방경비대를 자신들의 이용가치로 생각하여 침투공작을 시작하였다. 국방경비대가 창설되면서 남로당 중앙당은 道黨, 郡黨을 통해 조직적으로 좌익인사들 특히 청년, 학생들을 국방경비대에 침투시키는 공작을 진행하고 있었다. 남로당은 군대침투공작을 위하여 중앙당에 특수부를 설치하고 장교책과 사병책을 두었고 그 하부에 육군책과 해군책을 두어 공작을 분담케 하였다.

남로당의 군부에 대한 침투공작은 다음과 같은 몇 개의 수단으로 진행되었다. 장교들에 대한 침투는 1) 실력으로 사관학교에 입교하여 임관되는 방법이었는데 육사 3,4기 중의 좌익장교들의 대부분은 사병 중에서 소속부대장의 추천으로 충당되었다. 2) 추천으로 입교하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서 정부, 군, 정계의 유력인사를 이용하여 추천을 받게 했다. 3) 당수뇌가 군내 당조직에게 추천하여 사관학교에 입교 침투시키는 방법이 있었다. 4) 사관학교 직원으로 있는 세포를 이용하거나 혹은 그들을 매수하는 입교 방법이 있었고, 5) 기성장교의 신원과 인적 배경을 조사하여 접근의 소지나 잠재성분을 내재시키고 있는 자를 포섭하는 방법, 그리고 6) 기성장교들의 대인관계나 지연, 혈연, 인연, 동기동창관계 등 한국의 토착적인 바탕을 이용하여 포섭공작을 확대시키는 방법 등이 있었다.

사병들에 대한 침투공작수단은 1) 부락에서 당성이 강하고 성분이 좋은 분자를 적극적으로 추천하여 입대케 하는 방법, 2) 좌익계 활동에서 노출된 자들을 단위당 - 리, 면, 군, 도 - 를 거쳐 각부대의 조직책에게 추천하여 침투시키는 방법, 3) 경찰과 적대관계나 혹은 반감이 있는 자들을 입대시키는 방법, 4) 기성사병에 대하여 부대내에서 조직에 가담하고 있는 장교나 하사관으로 하여금 포섭케 하는 방법, 5) 조직에 직접 가입시키지는 않더라도 접근의 소지를 가지고 있는 사병들에 대하여 조직에 있는 지휘관이나 하사관 혹은 동료로 하여 인간적 관계의 형성으로 그들을 감화하여 동조케 하는 방법 등이 사용되었다. 또한 그들은 우익계 사병의 군대내 침입을 막기 위하여 혹독한 훈련을 강요함으로써 계속 군에 머물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이들 중에서 도망병이나 탈영자가 나올 경우 이의 보충을 좌익계로 충당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실질적으로 장교는 중앙당의 특수부에서 직접 공작책임을 맡게 하고 사병은 도당의 군사부에서 공작을 위임받아 침투시키는 이원적인 방법이 이용되었다. 장교의 포섭이 주로 중앙당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장교의 임관과 배치가 국방경비대의 중앙사령부에

서 관할하고 있었으며 장교들의 근무지도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었고 근무지의 이동도 자주 변경되었기 때문에 중앙당에서 관리하고 있었다. 반면에 사병들은 도단위로 모병되어 향토 연대에서 수용하고 훈련시킬 뿐만 아니라 연대간의 이동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지역당에서 관리하고 있었다. 도당 군사부는 각 시·군당 군사부에 연락하고 시·군당 군사부는 면·리의 조직에 연락하여 적합한 인물을 선출하여 그들의 명단을 시·군당을 거쳐 도당에 제공하였다. 도당 군사부에서는 이를 각 연대에 침투시켜 놓은 조직책에게 하달하여 입대케 함으로써 침투시키는 방법을 취했다.

남로당의 국방경비대에 대한 침투는 경북지역과 전남지역에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는데 경북지역의 1946년 10월 사태와 기타 지방의 2.7 구국투쟁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지역이 공작을 가능하게 한 지역이었다.

전남지방의 경우 광주의 4연대와 여수의 14연대 사병가운데 반수 이상은 남로당 전남도당에서 침투시키고 있었다. 이미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장교와 사병에 대한 침투가 각기 다른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조직내에서도 장교와 사병들은 자신들 외에는 누가 南勞黨員인지를 알 수가 없었고 이러한 점조직으로의 조직상황은 여순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반란을 일으킨 하사관과 사병들이 남로당에 연결되어 있던 다수의 장교들을 무차별적으로 사살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마는 현상이 되었다.

미군정당국은 1948년 3월부터 남로당의 국방경비대에 침투공작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까지의 남로당은 좌우연합모색, 미군철수주장 등 정치선전공세를 주로하고 야산대, 선행대 등 실력투쟁은 그 보조수단으로 하고 있는 정도였다. 따라서 미군정은 숙군작업을 신중히 준비하고 있었다.

14연대가 창설될 때도 기존 광주의 4연대내에 문제가 있는 병사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고 이들 가운데는 정보기관에 의해 모종의 의심을 받는 하사관들과 사병들이 다수 끼어 있었다. 또한 14연대 병력 중에서 제주도에 파견할 1개 대대의 병력을 구성할 때도 14연대내의 구성 대원들 중에서는 문제가 많은 하사관과 사병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14연대의 하사관그룹 중에서 지창수, 정락현, 최철기, 김근배, 김정길 등이 대표적으로 남로당과 연결된 인사들이었으며 이들은 서로 간에 신분을 알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승만정부에 반대적 성향을 갖고 있는 동질적 인사들이었다.

장교그룹 중에서는 김지회, 홍순석 등이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인사들이었고 그외 다수가 남로당 중앙당과 연결되어 있었지만 이들은 하사관, 사병 그룹과 전혀 연결이 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14연대 반란이 일어났을 때 하사관과 사병들의 장교살상에 죽임을 당하고 만 것이다. 14연대내에 파견된 도당 조직원은 박태남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는 연대

인사계에 지시하여 대대, 중대, 소대로 직원들을 배치하였기 때문에 연대 인사계에 대한 침투, 포섭공작이 가장 먼저 진행되었다.

국방경비대내에서 좌익인사에 대한 사찰을 시작한 것은 태능에 있는 제 1연대에서 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연대장인 이청가 소령은 부대내에 침투하고 있는 좌익인사를 색출하고자 경비사관 3기로 임관한 김창용 소위(관동군 헌병출신)를 발탁하여 정보주임보좌관으로 임명하였다. 그리고 그에게 정보소대를 편성케하여 부대내의 사상사찰을 전담시켰다. 이 정보 소대내에는 과거 경찰출신이나 헌병출신의 특기자들을 채용하는 등 활동가들을 모아 우선 연대내의 좌익인사들을 색출하는 일을 맡았다. 이 부대가 후에 특무대의 골간이 된다.

김창용은 제 1연대의 선임대대장인 이병위 소령을 추적하였다. 그는 정보소대원을 개성, 문산, 포천, 의정부, 인천, 수원 등지에 배치하고 거미줄을 쳤다. 그리하여 노재길, 정국환 등 부대내의 푸락치활동을 하고 있다는 단서를 잡은 8명을 검거하고 문산 다리밑에 숨겨둔 무기 등을 압수하였다.

그런데 배후인물인 이병위 소령은 1947년 3월 18일자로 초대 군기대장, 지금의 헌병대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이병위 소령이 5월 21일 청주의 제 7연대장으로 부임하자 정보대원들은 청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청주에 부임해오는 이병위 소령을 체포하였다. 그리하여 이병위 등 좌익계인사들은 미군정 재판에 회부되어 5년형을 받았고 1947년 10월 2일 파면되었으며 대원들은 3년형을 선고받았다.

1947년 8월 15일 해방 2주년 기념식 행사에 제 1연대가 시가행진을 하게되었는데, 부대내의 푸락치들은 장병들이 낮에 행사에 참가하면 자연히 물을 마시게 되므로 사전에 연대우물에 독약을 타면 이들이 그 물을 수통에 넣어가지고 갈 것을 예상하고 독살할 음모를 하고 있었다. 이 정보를 입수한 김창용은 최희섭 일병 등을 극렬 좌익분자로 위장 침투시켜 행사 3일전에 일당을 검거함으로써 독살계획을 미연에 방지하였다. 이와 같이 1연대내에서는 연대장의 신속한 조치로 좌익세력들을 숙청하고 있었으나 다른 부대에서는 정보과가 하등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와 동시에 김창용대 위는 남로당 군사부 책임자 이재복의 비서겸 연락책임자인 김영식을 서울 삼청동에서 체포하였다. 그로부터 압수한 비밀문서 속에서 군내부에 침투한 남로당을 위시한 좌익계 500여명의 명단이 나왔다. 이 명단에는 좌익적 성향의 고급장교 대부분이 노출되고 있었다. 당시 육사 생도대장 오일균소령, 교수부장 조병건소령, A중대장 김학림소령, 제 4여단장 대리 김종석중령, 제 15연대장 최남근중령, 오규범소령, 최상빈소령, 나학선소령 등 군사영어학교 출신을 위시하여 100여명이 조직상에 나타났다.

육군사관학교 세포책인 오일균소령은 그들의 군내에 및 민간인 푸락치를 육사에 입교

시키는 공작을 하였고 입교 후에는 생도들을 포섭시키는 임무를 수행하게하거나 이를 조종하였다. 그는 1946년 9월부터 1년간 육사교관을 하면서 2기생 3기생에 대한 포섭공작에 큰 역할을 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3기생 가운데 약 60여명이 좌익으로 숙청된 숫자는 이를 증명하는 사실이다. 제 4여단장 대리 김종석 중령은 최기덕기자에게 반란음모의 정보를 제공하고 행방을 감추고 있었다.

군대내의 좌익인사들을 체포하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운 김창용은 김영식의 체포와 좌익명단을 입수한 공로로 대위가 된지 2개월 10일 만인 1948년 11월 5일 소령으로 특진하였다. 그는 이후 한국의 반공체제를 구축하는데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4.3사건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제주도에서 제 11연대장 박진경 대령이 48년 6월 18일 문상길중위에게 피살당하자 연대내의 좌익인사에 대한 숙청이 시작되었고 그것의 여파는 여수 14연대에도 미치고 있었다. 연대장 오동기 소령은 여단 정보처로 부터 김지희중위가 요시찰 인물이라는 비밀 통보를 받고 당시 연대 작전주임보좌관이었던 김지희를 대전차포 중대장으로 임명하여 57mm대전차포의 교육을 위해서 여단에 파견하였다. 당시 14연대에는 대전차포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송호성 준장과 정일권참모부장에게 김지희를 구속하도록 건의하였다. 그러나 불충분한 증거로는 체포할 수 없다고 하자 부연대장 이희권소령과 정보주임 김래수 중위에게 증거를 보강하라는 지시를 하는 한편 헌병대장 이갑수 대위를 서울까지 출장을 보내 김지희의 구속을 호소하였으나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오동기 연대장의 김지희에 대한 이러한 조치를 내막적으로 알게된 김지희와 지창수 등의 좌익세력들은 자신들에 대한 감시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정보를 알게 되었고 숙청과 구속이 임박해 오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순사건이 발생하자 숙청은 더욱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2. 간접적 배경

가. 전남동부지방의 정치상황

해방초기 전남의 대부분 지역은 46년 전반기부터 우익의 우세로 기울어지고 있었다. 미군의 진주로 인민위원회 조직이 해산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조선공산당이 불법화되면서 전남지역에서도 좌익세력이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전남의 동부지방은 해방초기부터 사회경제적인 조건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우익세력에 비해 좌익세력의 힘이 약한 지역이었고 이러한 영향으로 좌익세력이 별다른 활동을 벌일 수 없었기 때문에 미군

에 의한 탄압 역시 미미한 정도였다. 따라서 동부지방에서는 좌우익간의 공존관계가 1948년 초까지 지속되고 있었다. 전남동부지방의 좌우익간의 갈등과 공존 관계는 계속되는 인플레이, 강제적인 미곡수집 등의 누적으로 일반대중의 삶의 조건이 극도로 악화되고 동시에 분단의 기정사실화되기 시작한 1948년 봄부터 와해되기 시작하였다.

1948년 2월 6일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입북을 저지당함으로써 남한만의 단독선거가 거의 확실해지자 민진과 남로당은 2월 7일을 기해 유엔 한위반대 남조선선 총파업위원회의 명의로 전국적인 파업과 파괴, 시위, 맹휴 등을 선전 선동해나갔다.

경인지역 일대를 비롯하여 경남북, 전남북,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인 규모로 파업, 파괴, 시위, 맹휴 지역이 확대되어 갔으며 이에 따라 전국적인 교통과 통신망, 각 생산기관, 행정기능이 일시 마비되기도 하였다. 2.7구국투쟁시기에는 주로 파업, 파괴, 맹휴, 빼라살포, 시위 등이 주를 이루었으며 경남 일대와 수원에서는 경찰서 및 관공서 습격, 우익 테러로까지 발전하였다. 이 시기에 전남지방에서는 습격과 테러사건과 같은 큰 사건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이 기간 동안 전남에서 발생한 확인 가능한 사건은 광주에서의 조선운송, 미창, 인쇄공장의 노동자 파업, 학생 3천명 맹휴, 빼라 52만장 살포 등의 사건, 목포에서 해운, 미창, 대동고무공장 파업, 여수에서 철도와 조선운송노동자 5천명 파업, 빼라 2만장 살포 등의 사건이다. 그 외에는 장성탄광과 화순탄광의 노동자들의 파업과 목포의 기상관측소 일부직원이 파업을 한 정도이다.

그러나 2월말에 들어서면서 전국적인 소요사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2월 26일 유엔총회에서 선거가 가능한 지역만이라도 선거를 실시할 것을 결의한 것을 전후해서 전국적으로 경찰서 및 면사무소 습격, 우익인사에 대한 테러가 속출했다. 25일부터 27일 사이 전북에서만 34건의 경찰지서 습격사건이 발생했고 2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전남에서는 3.1절 국경일에 주한미사령관 하지 중장이 남한내에서의 총선거를 실시를 발표하는 것과 때를 맞추어서 폭력적인 소요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전남에서의 폭력사태는 3월 1일에서 8일 사이에 그리고 3월 13일에서 27일 사이에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남동부지역에서도 소요는 일어나고 있었다. 사건이 발생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군중들의 습격목표는 경찰지서, 대동청년단, 민족청년단, 민주학생연맹 소속의 학생이었으며 그 외 지방관리와 지방유지, 한민당원, 미곡창고에 대한 습격, 테러사건도 빈번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주목할 점은 한독당원이나 사무소에 대한 테러나 습격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황남준, 전남지방정치와 여순사건, 『해방전후사의 인식 3』, 한길사, 1987, 439쪽) 이것은 한독당의 노선이 통일정부를 지향하는 입장이었고 김구 등이 남북협상

운동에 나서고 있었기 때문에 단선과 단정을 반대하는 인사들로 부터 피해를 입지 않게 된 것이다. 이 시기에 군중들은 수백명에서 수천명 정도가 집결해서 유엔한위반대, 양군동시철폐, 단선반대, 인공만세 등의 구호를 외치며 돌, 곤봉, 죽창, 도끼, 일본도, 그외 휘발유,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하여 경찰지서를 습격하였으며 이때 총과 탄약이 탈취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그 외에 구례에서는 3월 1일 지서 습격 2건, 테러가 3건 발생하여 대동청년단원이 4명 부상, 군중 측에서는 사망 12명, 중상 7명, 경상 2명의 사상자를 냈다는 기록이 보인다. 또한 3월 14일에는 산동면 예안리에서 50명의 군중이 10명의 경찰과 투석전을 벌여 경찰의 발포로 1명이 사망하였다.

순천에서는 3.1절 기념식 행사를 마친 남로당원들이 주동이 되어 대대적인 데모가 벌어졌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순천중학을 비롯 각 남여 중학교의 민청학생들이 단독선거반대 구호를 외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와 학련 학생들과 대치, 남로당에 선동된 농민, 노동자들은 삽, 곡괭이, 몽둥이 등을 들고 순천중의 학련 학생들을 포위했다. 사고 현장에 긴급 출동한 경찰의 발포로 2명의 남로당원들을 사살함으로써 사태는 가까스로 수습되었다.

5.10 제헌선거를 위한 유권자 및 입후보자 등록이 1948년 3월 30일부터 시작됨으로써 남로당을 중심으로 한 단선단정반대투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2월과 3월에 걸쳐 전개한 이른바 구국투쟁은 주로 유엔한위 및 미군정에 단선불가를 주장하는 방어적 측면이 강조된 것이었으나 4월에 들어서는 선거를 강행하려는 미군정과 이승만 한민당의 우익세력에 정면으로 대항해서 실력으로 단독선거를 저지한다는 공격적 측면이 강조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로당은 이러한 전술적 전환 그리고 구국투쟁과정에서 생긴 조직력의 손실을 감안해서 정상적인 당조직과는 별도로 중앙당의 지시를 받는 선전선행대와 도당의 지시를 받는 유격대, 백골단, 인민청년군 등과 같은 특수조직을 4월 1일부터 편성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미군정의 경무부장 조병옥은 예상되는 남로당의 단독선거파괴공작을 효과적으로 저지하기 위해 4월 중순 선거를 한달 가량 앞두고 향토방위를 견고히 하기 위해 외래의 불순분자 내지 모략선동의 여지를 봉쇄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각 경찰지서 혹은 동리 가로 단위로 경찰 보조력으로서 향보단 설치를 지시했다.

전남지방에서 남로당의 선거저지투쟁은 4월 5일 부터 시작해서 4월 29일 까지 3월에 비해 비교적 산발적으로 나타났다. 공격대상은 초기에는 선거등록 사무소 습격, 후기에는 우익 및 지방관리에 대한 테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경찰지서 습격은 상대적으로 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었고 경찰서를 습격하는 경우 3월과 마찬가지로 총과 탄약을 탈취

해갔다. 습격군중의 규모는 수십명에서 수백명 규모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같은 시기에 전남동부지방에서는 구례군에서 3건의 테러사건이 있었다. 4월 28일 구례군 토지면에서 숫자 미상의 군중이 우익인사를 타살했으며 동일 광의면에서는 숫자 미상의 군중이 대동청년단 단장과 선거사무원을 습격했으며 4월 29일에는 구례군에서 20명의 군중이 4명의 우익인사의 집을 습격하여 타살했다.

남로당은 남북연석회의의 결정에 따라 남조선단선반대투쟁 전국위원회를 각 시군에 조직하고 선거저지공작을 2단계로 펼쳐나갔는데 선거실시 전까지는 선거를 파탄시키는 투쟁을, 선거가 실시되면서부터는 무효화투쟁으로 전개해나갔다.

본격적인 5.10선거 저지공작은 김구, 김규식 등 단선을 반대하는 우익, 중도계 정당 사회단체들이 남북연석회의에서 돌아온 직후 김구, 김규식 명의로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5월 6일 이후부터 시작되었다. 남로당은 5월 7일을 전후해서 전국적인 파업, 파괴, 맹휴, 시위, 뼈라 살포, 경찰서 습격, 투표소습격, 우익요인 및 청년단 테러 등을 통해 격렬한 선거저지 투쟁을 선전 선동해나갔다.

전남지방에서는 5월 초부터 5월 말까지 전화선 전선 전신수 절단, 입후보자 선거요원 우익인사 청년단원 향보단원에 대한 테러, 투표사무소 경찰지서 습격사건이 계속되었다. 전남도내에서는 2부 13군에서 발생했으며 수십명 규모의 군중은 카빈총, 일제식 소총, 공기총, 권총 등의 총기류까지 사용하여 선거사무소, 투표소, 경찰지서 등을 습격하였으며 선거사무소 및 투표소 습격, 우익인사에 대한 테러가 경찰서 습격보다 더 빈발하게 나타났다. 나주와 보성군에서는 조직적인 무장단체가 경찰지서, 투표소 등을 습격하는 사례까지 있었다. 산악지대에 본거지를 두고 훈련까지 받고 있던 이들 단체는 남로당이 4월 초에 조직한 선전선행대 혹은 백골단, 유격대 등이었던 것 같다. 이들 무장단체는 산악지대 혹은 경찰지서에서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기도 하였다.

5월 전남동부지방에서는 순천, 광양, 여수에서 습격사건이 발생하였다. 순천의 경우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는데 5월 19일 새벽 1시경 상사면에서 숫자 미상의 군중이 대동청년단의 집을 습격하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같은 시각 별량면에서는 마을 유지의 집이 습격당하여 유지가 살해당하고 그의 아내와 아들이 구타당하고 집이 불타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다른 곳에서도 새벽 1시 40분경 10여명의 군중이 향보단원의 집을 습격하여 방화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광양의 경우 5월 9일 새벽 4시경 20명의 군중이 지서를 습격하여 경찰 2명을 부상시키고 2정의 카빈총과 1정의 일식 장총을 탈취 도주하였으며 군중 측에서는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여수의 경우 5월 10일 돌산면 죽포리에서 수십명의 군중이 투표소를 습격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경찰이 출동하여 30명이 체포되었다.

한편 전남동부지방에서는 구국투쟁과정의 구레, 순천을 포함한 4개 군에서 5.10선거 저지투쟁이 발생하였다. 즉 1948년 3.1절을 계기로 구레의 경찰지서 및 우익습격사건, 순천의 시위군중과 우익학생과의 충돌사건을 계기로 전남동부지방의 군중들은 점차 급진화되고 있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5월 10일 제헌 선거를 전후로 해서 더욱 촉진되고 있다. 5월에 들어 3.1절에 격렬한 대규모 시위양상을 보인 순천은 우익테러로까지 발전하고 있었으며 1946년 가을항쟁과 1948년 구국투쟁과정에서 거의 아무런 군중의 폭력사건이 나타나지 않았던 광양과 여수에서는 경찰지서와 투표소 습격사건까지 발생하였다.

나주에서는 5.10선거를 전후하여 살인 방화사건이 발생하였는데 민족청년단 나주군 단장 朴基緒를 살해한 것을 위시하여 삼도면 국민학교장 柳在文을 살해하였으며 5월 18일 봉황지서를 습격하여 소살함과 동시에 경관 4명, 민단원 1명, 지서장 부인 등 6명을 살해하였다. 나주경찰의 체포노력으로 다시면 죽산리 밭에 있는 아지트를 급습하여 무기 다수를 압수하는 한편 문편면 학동리에 거주하는 인민유격대 소속 소대장 奇德範(22)을 체포하였다.

고흥에서 48년 3월 29일 새벽 3시에 安在貞, 高興南, 李某 등 3명이 대서면지서를 습격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들은 9월 3일 수도청 경찰청에 의해 체포되었다.

나. 여수, 순천지방의 정치 사회적 상황과 여순사건

해방직후의 전국적 상황과 같이 일반 농민, 주민들의 생활상은 대단히 궁핍한 상황이었다. 해외에서 돌아온 귀환동포들의 급작스런 증가도 원인이었지만 미군정의 미곡 수집령으로 군정당국에 대한 원성이 높아가고 있었다.

여수에서는 48년 7월 하순 부터 8월 상순까지의 2기분 배급을 주지 않아서 8만 여수읍민의 원성이 높은 실정이었다. 식량영단 당국은 2기분 배급식량으로 백미 2,900포 잡곡 4,200포 등 합계 7,100포를 도정하여 분배하여야 하나 도정공장에서 이윤이 박하다 하여 도정을 하지 않아 여수 군민의 생계가 어려운 실정에 있었다. 뿐만 아니라 식량영단이 가공을 의뢰한 공장에서는 쌀을 빼돌리고 대신 모래를 보충하는가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천가마니씩을 착복하는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또한 비료 값에도 미치지 못하는 쌀 값으로 공출한 쌀을 양정당국의 부주의로 부패시키는 등의 실정을 농민들이 직접 목격함으로써 양식을 굶주리고 있는 상황이었던 여수시민들의 원성은 대단히 높은 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행정당국의 실정과 더불어 48년 7월의 수해로 각 지방에 이재민들이 무더기로 발생하여 많은 재산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순천인근의 주민들은 동정을 요구하고자 救濟會를 조직하고 구제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순천에서도 아래와 같이 금품을 기탁하여 왔는데 일반군민의 따뜻한 동정이 있기를 당국에서는 요망하고 있었다.

대한민족청년단 순천읍단부에서 4240원, 순천전매서직원들이 1000원, 순천상공회에서 5000원을 기탁할 정도로 당시의 수해의 피해는 대단히 컸다. 이러한 수해의 피해로 여수에서는 1948년 7월 7일 벼 707가마가 폭풍우로 인하여 손상당함으로써 여수읍민들의 식량사정이 대단히 좋지 않은 실정이었다.

이미 지척한 바와 같이 전남동부지방은 1948년 초까지 도내 다른 지방에 비해 좌익과 우익이 어느 정도 공존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지역이었다. 따라서 5.10선거 저지투쟁 과정에서 이 지방에서는 군중들의 습격과 테러사건의 빈도가 다른 지방보다 높지는 않았다. 따라서 해방이후 인민위원회와 그에 연계된 조직이 완전히 파괴되지 않고 계속 온존할 수 있었던 전남동부지방에서는 다른 지방에 비해 1948년 중반기의 시점에서도 온건좌익세력 혹은 그 동조세력이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측면은 여순사건 직전 여수와 순천은 빨갱이의 소굴이었다는 기록을 설명해줄 수 있는 단서가 된다.

1948년 전반기의 정치투쟁을 여순사건의 전원이지만 여수에 국한시켜 볼 때 민전과 남로당이 주도한 2.7 구국투쟁의 전국적인 총파업에서 철도 및 항만노조 5천명이 대규모로 참가하였을 뿐 폭력사건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그 후 남로당이 주도한 5.10선거 저지투쟁과정에서 5.10선거 당일 투표소 습격사건 1건이 기록되고 있을 뿐이며 그나마 군중동원의 정도나 폭력의 정도에 있어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그러나 학생들의 맹휴는 다른 지방에 비해 매우 조직적이고 광범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는데 5.10선거 직전에 전남에서 13개 학교가 맹휴에 참가할 정도로 학생들의 동향은 맹렬한 편이었는데, 이는 여순사건 폭발 시 학생들이 선동적 역할을 담당했다는 사실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

1948년 전반기의 정치투쟁과정에서 여수지방은 전남도내 다른 지방에 비해 온건 좌익 및 동조세력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남로당의 영향력이 미약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여수지방의 온건좌익 및 그 동조세력은 5.10선거 후 남로당의 이른바 지하선거, 9월 이후 본격화되기 시작한 이른바 인공기 계양투쟁과 양군철수 주장을 통해 어느 정도 급진화되었던 것 같다.

한편 5.10선거 이후에도 6월과 7월에 걸쳐 군중들 혹은 무장단체들의 경찰서 습격, 우

익테러가 계속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러한 사건들이 빈발하던 지역에서는 5월 22일 향보단이 공식적으로 해체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평화유지단, 의용단 등으로 계속 존속했는데 여수에서는 이러한 경찰보조력 혹은 민간통제조직이 존속했다는 기록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점은 여순사건 발발시 여수에서 군중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이유를 부분적으로 설명해줄 수 있다.

48년 2월 24일 여수읍내 군청 및 학교 및 2층 건물국기게양대에 인공기가 게양되었으며 전신주 등에도 작은 인공기가 부착되고 있었으며 벌교와 인근의 30여 곳에서도 인공기 불온배라가 살포되고 있었다. 역시 10월 2일 오후 2시 동순천역 전구감시초소 위에 게양대까지 설치하여 인공기를 게양할 정도로 좌익세력들의 활동은 대담해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경찰서에 대한 습격사건도 발생하고 있었다. 순천 주암지서에서는 48년 10월 1일 주암면 오산리 부락에 폭도가 잠복하여 지서 습격을 계획하고 있다는 정보를 얻어 본서 형사 8명을 동원하여 주암지서원 4명과 합류하여 이날 오전 6시쯤 오산리 부락을 포위, 수색하여 잠복중인 범인 趙東燮, 趙采燮, 趙龍勳 3명을 체포하여 그 부락 입구에 崔學奎 순경을 시켜 감시중 세 범인이 반항하여 최순경의 카빈총과 탄환 15발을 탈취하여 도주할 즈음 순천경찰서 남순경이 이를 발견하고 즉시 발포하여 조용훈은 즉사하고 조채섭은 중상을 입고 조동섭은 카빈총과 탄환을 가지고 도주하였는데 2시간 만에 총은 회수되고 범인은 체포하지 못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단정단선반대투쟁이 절정을 이루었던 데다가 춘궁기까지 겹쳤던 1948년 5월초에 광주의 4연대 1개 대대를 기간으로 하는 14연대가 여수에 창설되었다는 점이다.

III. 여순사건의 전개

1. 14연대의 반란

가. 여순사건의 발발

이미 살펴보았듯이 1948년 전반기의 순천 여수지방은 전남도내 다른 지방에 비해 온건 좌익 및 그 동조세력이 광범하게 존재하고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남로당의 영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1948년 5월 초에 광주의 4연대 1개 대대를 기간으로 하여 여수에 14연대가 창설되었는데, 이것이 여순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다. 당시 전국 각

지역에서 벌어졌던 군과 경찰의 갈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여있던 군대 내에는 경찰에 반발하고 있던 사병들과 지창수를 비롯한 김지회, 홍순석 등 좌익계의 하사관과 장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던 데다가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었던 좌익 동조자들과 일반 범죄자들까지도 경찰의 추적을 피해 쉽게 입대가 가능하였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적대 감정이 높을 수 있었다.

이러한 14연대의 좌익세력들은 10월 들어 동요하고 있었다. 제주 4.3 사건 당시 제주도에 주둔하고 있던 11연대장 박진경 중령의 암살을 계기로 미군정은 숙군작업을 시작하여 정부수립이후에도 계속 진행해오고 있었으며, 이는 여순사건 직전 14연대에도 파급되어 이미 전 14연대장이었던 오동기 소령도 이른바 혁명의용군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었다. 숙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정보를 알게 된 김지회, 지창수, 홍순석 등의 좌익세력들은 대단히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14연대내의 하사관과 사병들은 시간의 여유가 있을 때마다 모임을 갖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었지만 별다른 대안이 있을 수 없었다. 10월에 접어들면서 이들의 모임은 더욱 빈번해지면서 그대로 숙군의 대상으로 당하기보다는 집단 탈영 등을 통해 목숨을 보존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집단행동을 할 때 여기에 동조할 수 있는 동조자가 얼마나 될 것인지가 불안한 요인이었다. 또 하나의 큰 불안 요인은 집단행동을 할 때 타 지역의 군인들이 얼마나 가담해줄 것인지도 알 수 없는 것이었다. 아직은 입증되지 않았지만 좌익계열 인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남로당 전남도당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10월 15일 14연대장 박승훈 중령에게 육군총사령부로부터 제주도에 파견할 1개 대대를 조속히 편성하여 대기하라는 작전명령이 내려왔다.

연대참모부는 즉시 작업을 개시하여 이튿날까지 1개 대대의 편성을 마쳤다. 14연대에는 미군으로부터 신식무기와 풍부한 탄약 폭탄이 지급되어 있었으며 무기고에는 반납해야 할 3000여정의 구식무기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제주도로 파견할 1개 대대를 편성하는 과정에서 14연대 내에서 문제성을 갖고 있는 다수의 병사들이 주로 차출되었으며 숙군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병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지창수와 장락현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편성작업은 극비리에 진행되었으나 연대본부의 인사담당 선임하사관이었던 지창수는 이러한 상황을 자세히 알고 있었으며 이것은 곧바로 좌익성향의 하사관과 병사들에게 알려졌다.

지창수는 곧바로 10월 16일 밤 긴급히 남로당과 연결되어 있거나 이승만정권에 불만을 품고 있던 하사관 그룹을 소집하여 대책을 논의하였다. 이들의 논의에서 제시된 방법은 대체로 3가지로 정리되었다. 첫째, 일단 제주도까지 간 다음 제주도의 반란군과 합류하는 것,

둘째, 출동을 거부하고 연대내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것, 셋째, 제주도로의 운송도중 해상에서 선상반란을 일으켜 북으로 향하는 것 등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제주에서 반란에 합류하는 것은 제주도가 좁은 섬이라는 불리한 점도 있지만 다른 부대로의 확산도 힘들뿐만 아니라 자멸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제시되었고, 연대내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것은 남로당 중앙당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 선상반란은 성공가능성이 크지만 단지 자신들의 도피 이상의 의미를 찾기가 힘들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논의로 밤새도록 토론을 벌였지만 결론이 나지 않자 상당수의 참가자들이 선상반란을 찬성함에 따라 대강은 결론이 난 셈이었다.

육군총사령부의 작전은 비밀리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제주도 출동예정일이 19일이라는 것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지창수는 남로당 전남도당의 연락책임자와 연결을 하여 선상반란의 계획을 밝히고 도당의 긴급지시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당시 남로당 전남도당은 당시 경찰의 탄압 때문에 거의 와해된 상태에 있었고 결국은 도당에까지 보고되지 못함으로써 지창수 중심의 14연대 좌익세력들의 단독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 것으로 보인다.

1948년 10월 19일 아침 7시에 우체국을 통한 일반전보로 「LST는 19일 20시 출항하라. 제주 경비사령관 김상겸 대령에게 통보될」이라는 내용의 전보가 14연대장 박승훈 중령에게 전달되었다. 지극히 비밀을 요하는 작전명령이 일반전보로 전달됨으로써 14연대장은 비밀이 세어나갔을 것을 염려하여 출항시간을 2시간을 늦추어 저녁 10시로 확정하였다.

14연대장은 오전부터 출동부대의 군장검사를 시작하였다. 저녁 무렵에야 군장검사를 마친 출동부대 병사들은 부대내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여수항구로의 이동을 대기하고 있었다. 한편 반란의 주축세력이 되는 하사관그룹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지창수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편 남로당 전남도당과 연결을 갖지 못한 지창수는 선상봉기를 포기하고 연대내의 반란으로 애초의 계획을 변경하고 10시 10분전 출항 직전에 세발의 총성과 비상나팔을 신호로 해서 반란을 일으키기로 하였다.

이러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음에 따라 14연대중의 1개 대대의 제주도 출동은 14연대내의 좌익계 사병들에게 동족상잔을 위한 제주로의 파병이라는 문제와 이러한 명령을 거부하고 반란을 일으켜야 한다는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대한민국 육군정보국에서 자문역을 맡고 있던 전직 미군사고문단 단원은 다음과 같이 회상하고 있다.(2, 메릴, 침략인가 해방전쟁인가, 과학과 사상, 1988, 198쪽)

‘공산주의자들은 곤경에 빠졌다. 그들은 출동시간보다 앞서서 반란을 일으키던지 아니면 모든 것을 잃든지 양자택일을 해야만 했다. 일단 그들이 제주도로 가게 되면 연대병력이 재편될 것이고 따라서 공산주의자들의 세포조직이 붕괴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장차 있을 유격대 투쟁에 필요한 가능한 한 많은 양의 무기와 탄약을 탈취하여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뿐이었다. 공산주의자들이 결정을 내리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 상륙용 주정은 제주도로 파견할 제 1대대 병력을 승선시키고 있었다.’

남로당 세력들이 반란을 모의하고 있는 시각에 장교들은 장교식당에서 출동장교들의 환송을 위한 환송파티가 열리고 있었고 이는 저녁 7시경 끝났다. 출동부대 장교들은 대대 본부에서 승선시간을 기다리며 쉬고 있었으며 연대장과 부연대장 등은 부대의 승선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여수항으로 나가 있는 상태였다.

한편 지창수를 중심으로 한 반란주도 하사관그룹들은 지창수의 인사계사무실에 모여 최종적으로 반란논의를 하고 있었고, 여기서 지창수는 이미 계획하여둔 상황을 알려주었다. 중심적 하사관들에게 각자가 해야 할 일들을 주지시키고 자신의 위치로 가도록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준비과정에서 중심적인 인물은 지창수였고 김지회나 홍순석의 활동은 전혀 부각되지 않았다. 이러한 발발 과정중, 김지회 등의 남로당 장교그룹은 전혀 반란에 대한 모의와 준비가 없었다는 주장이(이태, 여순병란 상하, 청산, 1994) 있음에 반해 김계유씨 등은 장교그룹과 하사관 그룹 간에는 역할 분담이 있었다는 주장이(김계유, 1948년 여순봉기, 『역사비평』 15호, 1991) 상반되고 있다. 역할분담론의 입장은 사건의 발발과 여수의 뒷수습은 지창수가 책임을 맡으며 순천과 전국으로의 확산은 장교그룹에서 담당하도록 함에 따라 사건이 순천으로 확산될 때도 지창수는 순천으로의 동원부대에 가담하지 않고 신월리의 14연대에 본부에 남아 여수상황을 책임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제주로 출동하는 제 1대대의 사병들은 저녁식사를 마치고 군장을 갖추기 시작하였고 여수에 잔류하는 부대는 출동부대의 뒷처리와 휴대할 도시락을 준비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이윽고 10시 10분전쯤에 비상나팔 소리가 울리자 연병장에는 출동부대와 잔류부대의 전대원 2700여명의 장병들이 집결하였다. 출동부대는 출발이 한 시간 앞당겨진 것으로 생각하고 연병장에 모여 총기의 지급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갑자기 지창수가 연단으로 뛰어 올라가 「지금 경찰이 우리한테 쳐들어온다. 경찰을 타도하자. 우리는 동족상잔의 제주도 출동을 반대한다. 우리는 조국의 염원인 남북통일을 원한다. 지금 조선인민군이 남조선해방을 위해 38선을 넘어 남진 중에 있다. 우리는 북상하는 인민해방군으로서 행동한다」는 등의 선동을 하자 대부분의 사병들이 「웁소」하면서 찬성을 하였고, 이를 반대한 3명의 하사관은 즉석에서 사살되었다. 이로써 14연대 반란은 발발하였다. 이미 탄약고는 지창수의 명령에

따라 좌익계 하사관들에 의해 점령되어 있었고, 실탄은 반란군들에게 최대한으로 지급되어 휴대하게 함으로써 반란은 폭발되고 만 것이다.

이렇게 반란군으로 변해버린 출동부대에 나머지 2개 대대도 합류하여 반란군은 2500명으로 불어났고, 영내에서 반란이 성공하자 이미 연락을 받고 14연대 부근에 잠복하고 있던 수산학교 학생 23명이 합세하여 이른바 인민군으로서의 편성을 끝마치고 자정 무렵 여수시내로 진격해 들어갔다.

23명의 수산학교 학생들은 신월리에서 하숙하고 있던 학생들이었는데 대부분 좌익계 조직이었던 민주학생동맹의 맹원들로서 가깝 14연대에 놀러와 사병들과 자주 어울렸었다. 그러던 중 14연대의 반란이 터지자 이들은 여수시내의 지리에 밝은 이점을 이용하여 반란군들을 인도, 삽시간에 여수시내를 점령하는데 일조를 하였다.

반란에 성공한 지창수는 스스로 인민해방군의 연대장에 취임하고 하사관동조세력들을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분대장으로 임명하여 반란군의 조직을 정비하였다. 곧이어 책임지역을 나누어 영내에 숨어있는 장교들을 수색하여 군의관 등 이용가치가 있는 장교는 우선 창고에 감금하고 기타 다른 장교들은 사살했다. 이때 사살된 장교는 20여명이었다. 차량에 분승하여 여수시내로 향한 반란군은 가장 먼저 여수시의 입구에 있던 봉산파출소를 습격하여 경찰들을 학살한 후 20일 새벽 여수시내로 진입하기 시작하였다. 시내에 진입한 후 이미 연락이 취해진 여수시내의 좌익단체 및 학생단체 600여명에게 무기를 지급하였다.

반란군들의 첫째 표적은 경찰서였다. 여수시내로 진격한 반란군은 가장 먼저 새벽 3시경 여수경찰서를 점령하였다. 19일 저녁 11시 30분경 14연대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정보를 입수한 고인수 여수경찰서장은 경찰관 200여명으로 방어 작전을 폈지만 수적인 면이나 장비면에서 반란군과 대항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M1소총으로 무장하고 있었던 반란군을 99식 소총이나 칼빈 소총으로 무장한 경찰로서는 도저히 당해낼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20일 새벽 3시 30분경에 이미 경찰서는 수십구의 경찰시체만을 남기고 반란군에 점령당하고 말았다. 반란군에 의해 유치장이 열리게 되자 50여명의 수감자들은 그대로 반란군과 합류하게 되었고 이들은 더욱 기세를 부리며 경찰관만 보면 무자비하게 잔인한 보복을 자행하였다. 14연대의 무기고에 보관되어 있던 신식무기와 구식무기 3000여정이 여수시내의 반란동조세력에게 지급되었다.

새벽 5시경 여수시내에 밀어닥친 반란군은 좌익단체의 인도에 따라 군청, 시청, 관공서, 은행, 신문사 등 중요기관을 서둘러 점령하였다. 9시경 여수의 전시가지는 반란군의 수중에 들어갔고 반란군들은 좌익 청년단체들의 선도로 피신한 경찰, 우익요인, 우익청년단 등을 색출하기 시작했다. 체포당한 경찰관과 각 기관장, 우익단체원, 지방유지 등은 반동분자로

몰려 여수 경찰서 뒤뜰에 결박당했고 그 중 반란군에 대해 반감이 심했던 극우적인 인사들이 즉결처분되었다. 거리에는 인공기가 게양되기 시작하여 오후에는 전시가지가 인공기의 물결을 이루었다. 경찰서와 군청에는 오전 10시경부터 보안서 및 인민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반란을 일으킨 14연대병력은 역할을 분담하여 일부는 여수시내를 점령하는 일을 담당하고 반란군의 주력부대는 반란의 확산을 담당하여 순천으로 출발하였다.

나. 순천과 인근지역으로의 확산

여수를 점령한 반란군 가운데 약 700명은 오전 8시 30분 순천행 통근열차로 출발하고 1300여명은 각종 차량으로 순천으로 향했다. 20일 새벽 1시경 여수의 교환원으로부터 14연대의 반란의 소식을 들은 순천경찰은 양계원 경찰서장이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순천으로 들어오는 철도를 절단하고 방어선을 구축한다는 전략에 따라 비상경계태세에 들어갔다. 그러나 철도를 절단하는 일은 상부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중대한 사항이었다. 하지만 당시의 위급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8관구 경찰청으로부터 철도절단에 대한 승인을 얻지 못함으로서 애초의 방어 계획을 수정하여 순천경찰은 경찰서원 전원을 소집하여 여수와 순천의 관문을 차단하기 위해 해룡지서를 사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아침에 여수쪽에서 척후병을 세우면서 천천히 올라오는 반란군대열을 보고는 도저히 대적할 수가 없다는 판단 하에 철수하고 말았다.

순천으로 철수한 순천경찰은 인접 군인 별교, 보성, 고흥, 장흥, 광양, 구례, 곡성 경찰병력의 지원을 받아 약 500명의 경찰력으로 반란군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었다. 한편 순천의 기관장들과 유지들은 여수에서 군인들에 의한 봉기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처음 듣고 당시 빈번하게 발생하던 군경간의 단순한 충돌사건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지방 유지들을 소집하여 군·관·민의 친선을 도모하는 주연준비를 논의하고 있었다. 그러나 반란의 자세한 소식이 전해지자 단순 충돌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혼비백산하였다고 한다. 당시 순천에는 경찰력과 더불어 순천경비임무를 띠고 파견된 14연대 소속의 2개 중대(선임중대장 홍순석 중위) 병력이 주둔하고 있었다.

오전 9시 30분경 반란군 700여 명이 기차로 순천역에 도착하자 순천을 경비 중이던 2개 중대가 반란군에 합류하였다. 순천에 파견된 2개 중대의 선임중대장이었던 홍순석 중위는 자신이 남로당과 연계되어 있었다는 정보가 누설되어 숙군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언제 체포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속에 지내다가 여수에서 반란이 발발했다는 소식에 부대를 순천역 부근에 이동시켜놓고 여수에서 올라오는 반란군을 기다리다 반란군에 합

세하였다. 이같이 홍순석도 김지회와 같이 하사관들이 주동이 된 반란의 모의과정에는 참여하지 못하다가 반란이 발생한 후에 참여하게 된다.

반란군이 순천역에 도착하였을 때는 순천역을 지키고 있던 철도경찰은 혼비백산하여 이미 도망하여 버리고 난 후였기 때문에 어떤 세력으로부터도 저항을 받지 않았다. 통근열차와 군용트럭으로 순천역에 도착한 반란군들은 홍순석의 순천과건 2개 중대와 합류하여 순천의 각 지역을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반란군에 밀린 순천경찰 500여명은 대부분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피신했으며 일부는 전투 중 사망하고 나머지 약 50명은 경찰서로 후퇴하였다.

광주를 출발하여 오전 10시경에 도착한 4연대 지원 병력도 경찰과 합동작전을 전개하여 동천을 사이에 두고 반란군과 대치하고 있었으나, 전투를 벌이지 않고 있다 얼마 후 반란군에 합세함에 따라 반란군의 기세는 크게 오름에 반해 경찰 등의 방어대는 힘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광주로부터 진압차 내려온 4연대의 1개 중대병력도 「군인끼리 싸울 수 없다. 상관의 전투명령이 없다」 라면서 반란군에 합세하고 말았다. 당시 군인들에게 국가의 보존이라는 측면보다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더 중요한 상황이었고 그만큼 당시의 이승만정부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결국 순천은 오후 3시경 반란군에 완전 점령되었다. 순천시내의 좌익세력들도 반란군이 순천에 도착하자 반란군으로부터 무기를 지급받고 함께 경찰, 우익 요인, 청년단원들을 습격하고, 우익인사들을 적발, 처분하는 데 앞장섰다.(광복 30년, 124-5쪽)

순천을 점령한 반란군은 3개부대로 재편성하여 주력 1천여명은 구례, 곡성, 남원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해 학구쪽으로 진격해나갔고, 일부는 광주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해 벌교, 보성, 화순 방면으로, 나머지 일부는 경상도지방으로 진출하기 위해 광양, 하동 방면으로 진격해나갔다. 남원방면으로 진출한 반란군은 20일 저녁 19시 45분 3연대 1개 대대와 순천에서 북쪽으로 10Km 떨어진 학구에서 전주에서 출동한 진압부대와 조우하였다. 광주방면으로 진출한 반란군은 보성인근에서 20일 밤과 21일 새벽 광주에서 진압차 출동한 4연대 2개 중대병력을 매복 기습하였으며, 하동방면으로 진출한 반란군은 광양 동쪽 8Km 지점에서 21일 아침 15연대 1개 대대 병력을 매복 기습하였다.

여순사건은 지역적으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새로운 양상을 띠기 시작하였다. 즉 반란군이 진출한 중간지점에 위치한 군들에서는 반란군이 도착하기 전 경찰관 및 우익인사들이 미리 도주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다른 지방 토착 좌익들은 군중들을 선동해서 경찰서를 공격하는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일 저녁과 21일 사이 남원에서는 반란군의 일부가 도착하자마자 폭동이 일어나고 있었으며 구례경찰지서는 토착좌익들

에 의해 폭동군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수명의 경찰이 피살되어 점령당하고 있었으며 보성에서는 지방토착좌익들이 경찰서를 공격하여 경찰 및 우익요인들이 피신하자 폭동군에 의해 무혈 점령당했다. 또한 사건 과급과정에서 벌교와 조성사이에 있는 새제 터널을 경비하는 제 14연대 병력 그리고 보성에 주둔하고 있던 제 4연대 1개 중대병력이 폭동군에 합류하였다. 고흥에서는 순천에서 진입해 들어온 반란군과 그에 동조한 지방민들이 행동을 같이하여 고흥읍을 점령하고 그에 저항하는 경찰관 7명과 주민 6명을 총살 혹은 타살하였다. (광주신보 48.10.31)

2. 진압군의 출동과 진압과정

가. 토벌사령부의 설치와 순천지역의 탈환작전

광주의 제 4연대 부연대장 박기병 소령은 20일 새벽 1시경 광주 8관구 경찰청으로부터 여수사태에 대한 연락을 받고 제 2대대의 1개 중대 병력을 먼저 긴급 출동시켰다. 당시 광주의 5여단장 김상겸 대령은 제주도 경비사령관으로 부임하여 아직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였고, 참모장 오덕준 중령은 여수 14연대의 출동을 독려하기 위해 여수에 출장 중이었다. 제 4연대장 이서가 중령도 서울에 출장 중이었다. 따라서 경찰청으로부터 14연대의 반란소식을 접한 14연대 부연대장은 시급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박기병 소령은 우선 총사령부에 보고하는 한편 미고문관과 협의하여 즉시 비상소집을 하여 예하 부대를 비상대기 시키고 1개 중대를 차출하여 학구를 경유하여 순천으로 진격하도록 명령을 하달하였다. 그러나 이 출동부대가 화순을 거쳐 순천에 도착한 것은 오전 10시경이었고 이부대는 순천에서 반란군과 교전을 벌이지 않고 있다가 반란군에 합세하게 된다. 출동한 이부대에 남로당과 연결된 하사관과 병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순천에 도착하자마자 장교들을 사살하고 반란군에 합류해버렸다. 그들은 얼마 전까지 동료였던 반란군에게 총부리를 겨눌 수 없다는 심정적 요인도 함께 작용하고 있었다.

한편 20일 새벽 철도경찰대의 경비전화로 여수 14연대의 반란소식이 서울에 전해지자 당국에서도 반란군들을 진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주한 미군사고문단장인 로버츠장군은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소집하였다. 국방장관 이범석을 비롯하여 오전 9시 국방부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국방부 참모장 채병덕, 육군참모부장 정일권, 정보국장 백선엽 등이 참석한 대책회의에서 결정된 것은 우선 현지의 실정을 파악하기 위해 채병덕이 지휘하는 선견대를 광주에 파견하여 사태를 파악하게 하는 것이었다. 현지

보고를 받은 뒤 21일 미군사고문관인 하우스만 대위는 오후에 특별반을 이끌고 광주에 도착하였다. 그는 반란진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젊은 장교였다. 육군총사령부는 10월 21일 토벌사령부를 설치하고 사령관에 송호성 준장을 임명한 후 21일 광주에 파견함으로서 본격적인 반군토벌작전계획이 수립되었다.

이와 더불어 20일 오전 11시 반 국방부장관 이범석은 기자단을 통해서 여순사건의 발발배경을 「14연대장에 대한 체포로 인해 일어났다」고 발표하고 국군당국의 이에 대한 조치 및 경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상당히 긴 내용이지만 당시의 상황을 정부당국에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단서가 되기 때문에 전문을 인용한다.

전남여수에 있는 국군 제14연대의 반란봉기가 있어 방금 광주 등지에서는 폭도측과 이를 진압하려는 국군 사이에 맹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1. 사건 발생 경과-전남 여수에 우리 국군 제14연대가 주둔하고 있는 20일 상오 2시경 공산주의계열의 오랫동안의 책동과 음모로써 반란이 발생되었다. 처음에는 약 40명에 가까운 사병이 무기교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는 교묘한 선동과 위협으로서 일부분 병사를 선동시켜 야반에 다른 병사를 무기로 위협하고 장교 대부분을 살해한 후 곧 여수에 있는 치안 관계 철도 경찰, 일반 경찰을 공격하였는데 동일 상오 10시경에는 여수를 거의 다 점령하였었다. 그리고 반란군은 그 지방의 공산주의자들과 합하여 또 철도 시설을 점령하여 순천행 학생통근 열차 6량에 탑승하여 순천으로 동진 중 역에서 철도경찰과 충돌한 후 지방 경찰을 습격하였는데 이것이 반란 당일인 20일 사태이었다.
2. 폭도 성질-수색전에 공산주의자가 극우 정객들과 결탁하여 반국가적 책동으로 수명이 반란을 책동하였다. 불행하게도 군정 이양 전 그 중 한명이 교묘한 방법으로써 국군의 소령이 되어 정부전복을 책동하였고 그자가 여수 14연대장이 되었던 것인데 그는 방금 심문을 받고 있는 吳東起다. 吳는 여수에 가서 기회를 포착하여 단순한 청년들의 심리를 선동하고 극우 진영, 해외에서 돌아온 국내에 있는 반동분자와 간접으로 연결을 취하여 10월 혁명 전후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기습적 반란을 책동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군정 이양을 받기 20일전에 吳의 체포로 탄로 되었던 것이며 그 후 속속 관련자를 체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상이 금번 반란의 배경인데 이에 관련된 자들이 다소 공포심을 느끼고 있었으며 그중 혐의가 농후한 1개 대대를 모종의 사명을 주어서 다른 곳으로부터 주동적 책동으로 발동하였던 것이다.(광주신보, 48.10.22)
3. 반란경과-그리하여 일부는 여수, 순천을 점령하고 학살 방화 약탈을 감행하였다. 전남 광주에 있는 3개 중대를 순천으로 증파하려 하였으나 시간상 거리가 먼 관계로 순천 역시 20일 하오 10시 10분경에 들어온 정보를 보면 반란군에 점령당하고 있지만 또 밤에 들어온 보고에 의하면 순천의 대부분을 점령한 반란군은 오합지졸을 모아서 약 2천명이 두 길로 나누어서 1중대는 남원으로 또 1중대는 광주로 전진 하였던 것이다. 국군은 20일 하오 1시에 비행기로 전방지휘부 인원을 광주에 수송해서 정보 거래시간을 단축시키고 일방으로 정보수집의 정확성을 기하여 사태 진정에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한 부대의 보고에 의하여 급한 조치로서 광주 남원에 병력을 급파하여 내습하는 적 세력의 대부분은 격퇴되고 반군은 主動으로부터 被動이 되었으며 반군의 방향을 지리산으로 들어가고 있다.
4. 군 당국의 조치. 국군은 이것을 사전에 상상하였기 때문에 산악지대에 강력한 군대를 배치하고 남원과 광주서 이남의 폭도를 서남 해안으로 압박하는 동시에 경남 하동방면으로부터 적의 배후를 기습하고 있

는 중이다. 그리하여 순천 여수폭도는 연락이 끊어졌는데 불원간에 반란군을 박멸하고 치안은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폭도들의 죄상은 아직 숫자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최근 부임한 연대장 이하 수십명을 학살하였고 순천에서 경찰 과반수이상을 학살하였고 또 일부 양민과 수많은 청년을 살해하고 가진 잔악한 형벌을 가하고 있으며 건물 파괴, 민간의 모든 것을 약탈, 강간을 감행하고 있는데 여수도 순천과 같은 현상에 있다. 이 신인공노할 공산주의 도당의 죄악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극우진영이 시대를 몰각한 이 최악적 해동을 조장하고 사리사욕을 채우려 함은 더욱 가증하다고 아니 할 수 없다. 정의에 입각하여 세계 사조에 배합해서 인민의 자유와 평화를 파괴하고 폭동으로써 정치적 기도를 달하려는 이 같은 세력이 자고로 성공한 적이 없다. 이 죄상이 앞날에 전부 폭로되는 날 우리의 대중은 더욱 경계하게 될 것이며 정부는 국가 민족과 자유 평화를 교란하는 도배들의 행동을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사태는 급격히 축소되고 진압은 속한 기간 내에 되리라고 확신한다.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한 것은 본관의 책임적 입장에서는 건국전도를 위하여 대단히 미안하고 유감 되는 바이지만 그 질에 있어서는 극소수의 불순분자가 계획적으로 기도한 것이니 만큼 군은 비교적 단순한 청년들로서 조직되어 있고 방종과 개인의 자유를 어느 정도 억압하고 있는 까닭에 선동에 민감성을 가지고 있다. 또 속한 시일 내에 철저히 숙청할 것을 확신하는 바이다.(호남신문,1948.10.22)

이처럼 여순사건에 대한 발표를 하면서 정부당국은 당시 15개 연대 약 2만 5천명의 육군병력 가운데 3.8선을 방어하는 8개 연대를 제외하고 7개 연대를 여순사건지구에 파견하였다. 육군총사령부는 10월 21일 반군토벌사령관에 소장 송호성을 임명하고 다음과 같이 토벌대를 구성하였다.(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1967,459쪽)

전투사령관 : 육군준장 송호성
제2여단장 : 육군대령 원용덕
제5여단장 : 육군대령 김백일
비행대장 : 육군대위 김정렬
수색대장 : 육군대위 강필원

작전부대

제3연대 (전주 2개 대대) 연대장 : 중령 이성가
제4연대 (광주 3개 대대) 연대장 : 중령 함준호
제6연대 (대구 1개 대대) 연대장 : 중령 김종갑
제12연대 (군산 3개 대대) 연대장 : 중령 백인기
제15연대 (마산 1개 대대) 연대장 : 중령 최남근
L형 연락기 10대 및 장갑차부대 30대
그 후 2연대(대전 1개 대대) 5연대(부산 1개 대대)가 추후 투입되었다.

이처럼 총 10개 대대병력, 장갑차부대, 항공대를 광주, 남원, 하동에 집결시켜 동일 18시경 반군을 완전 포위하는 한편 한국인 장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미군사 고문관들에 의해 재편된 제 4연대 1개 대대 병력이 순천점령을 위한 요충지인 학구에서 21일 자정 무렵 폭동군과 조우함으로써 진압작전은 시작되었다. 평소에는 14연대를 맡고 있었지만 반란이 발생한 날에는 우연히 광주에 머무르고 있었던 3명의 미군사 고문관들이 제 4연대 병력과 행동을 같이 하고 있었다. 광주를 떠나기 전에 3명의 군사고문관들은 4연대 중대장과 그 지역 경찰서장의 자문을 맡아 반란군의 북진을 막을 수 있도록 동천강 하안선을 따라 병력을 배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순천에 도착한 모어중위는 경찰이 설치한 전투지휘소 근처에서 제 4연대 병력을 하차시킨 후 켈소중위와 트럭을 광주로 돌려보냈다. 모어중위와 그린바움중위는 경찰병력과 제 4연대 1개 중대병력을 산개시켰고 순천시내로 들어오는 길목이 되는 다리를 지키기 위해 하상을 따라 기관총과 여러 가지 자동화기를 배치하여 방어선을 구축했다. 모어중위는 그 당시 4연대 병사들은 당황하고 있던 상태로, 이는 반란군 병사들이 다리를 건너오는 것을 그냥 내버려두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 대화를 나누고 음식물까지 나누어 먹을 정도였다고 회고한다. 모어중위와 그린바움중위가 사태를 정확하게 판단하기도 전에 방어군들은 동료들이라고 생각했던 반란군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살해당하고 있었다. 모어는 경찰본서를 방어할 수 있는 정도의 병사들과 경찰관들을 끌어 모아보려고 했으나 곧이어 그 시도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순천전화국으로 후퇴한 모어와 그린바움은 얼마 남지 않은 방어군으로 그곳을 방어하려 하였으나 이들은 곧바로 반란군에 체포되었다.

전투가 일시 멈추었을 때 두 미군사고문관들은 반란군 병사들에게 항복한다는 확실한 표현으로 백기를 흔들면서 걸어 나왔다. 그들은 반란군들에게 체포되었지만 통역관이었던 유창남상사의 기지로 선교사의 사택으로 무사히 피신할 수 있었다. 미군사고문관들이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게 된 것은 아직은 당시 반란군들이 미군에 대한 적대의식을 갖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반란군들의 주 타격대상은 경찰과 이승만정부였고 미군에 대한 적개심은 소수의 공산주의자들을 제외한 다수의 반란군들에게는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여순 반란 기간 동안에 선교사의 사택은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았었고 선교사들은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집마다 성조기를 걸어두고 문밖출입을 삼가면서 피해있을 수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알 수 있다.

반란진압군들의 원래 목표는 광주, 남원, 하동에서 출동하여 폭동군의 주요 활동무대인 여수반도를 포위하여 산악지방으로의 도피를 차단하고 섬멸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20일 저녁 7시 45분경 남원에서 출동한 제 3연대 1개 대대가 약 1천명의 폭동군과 남원 남쪽에

서 조우하여 21일 새벽 5시 30분경 순천방면으로 후퇴시키기는 했으나 그나마 진압작전에 소극적이었다. 보성방면에서는 20일 광주에서 파견된 제 4연대 2개 중대 병력이 보성 북쪽 4km지점에서 폭동군의 매복기습을 받아 서쪽 포위망이 무너졌으며 광양방면에서는 20일 밤 하동에서 도착한 제 15연대 1개 대대가 21일 아침 광양 동쪽 8km 지점 옥곡에서 폭동군의 매복기습을 받아 심각한 타격을 받았으며 연대장 최남근 중령과 제 1중대장 조시형 소위가 반군에게 포로가 됨으로서 동쪽의 포위망도 무너지고 있었다. 즉 21일 오후 반군토벌사령부가 광주에 도착했을 때 진압군 내부에서는 작전진압체계 및 통신의 불비, 지휘 능력과 전투능력의 미숙, 인접부대와의 협동이 부조한 상황과 더불어 일종의 병력붕괴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었다.

쌍방간의 전투는 교착 상태에 빠졌다. 왜냐하면 진압군과 폭동군 양쪽에는 몇 개월 전까지 같은 전우였던 병사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22일 오전까지 초기 진압작전은 큰 성과를 거둘 수 없음에 따라 정부는 22일 여순지구에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계엄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한국전쟁사 1,460쪽)

本官에게 부여된 권한에 의하여 10월 22일부터 別命時까지 左記와 如히 戒嚴令을 선포함. 만일 위반하는 자는 군법에 의하여 사형 기타에 처함.

1. 오후 7시부터 翌日 아침 7시까지 일절 통행을 금함.
2. 옥내외의 일절 집회를 금함.
3. 유언비어를 造出하여 민중을 선동하는 자는 엄벌에 처함.
4. 반도의 소재를 알시 본여단사령부에 보고하여 만일 반도를 隱匿하거나 반도와 密通하는 자는 사형에 처함.
5. 반도의 무기 기타 一切 軍需品은 본사령부에 반납할 것. 만일 隱匿하거나 秘藏하는 자는 사형에 처함.

여순사건에 대하여 이범석 국무총리 겸 국방장관은 23일 반란군에 고하는 다음과 같은 포고문을 발표하였다.(호남신문, 48.10.26)

즉시 투항 귀순하라.-

제군은 지금 불행히도 민족적 양심과 군기를 무시하고 일부 그릇된 공산주의자와 음모 정치가의 모략적 이용물이 되어 실로 천인공로외의 죄과를 이미 범하였고 또 아직도 범하는 중에 있다. 제군은 상관을 살해하였고 관유물을 약탈 또는 방화 소실케 하였을 뿐만 아니

라 무구한 우리의 다수 동포를 학살하였다.

제군은 정부의 기관을 폭력으로 점령한 후 제군 자신조차 신뢰성이 없고 또 인민이 원치 않는 정치 제도를 강요하고 양민과 어린학생을 무력으로 규합하여 반란을 발성하였으니 기 반란적 죄상은 국법이 도저히 용서치 못하는 것이다 관은 즉시 제군의 반란행동을 단시일내에 진압키 위하여 용감하고도 애국적인 압제적인 병력을 동원하여 북은 남원, 곡성, 서는 화순, 보성 등은 하동방면으로부터 대부대가 진격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지리산과 남해안 일대를 안전포위 봉쇄하는 동시 일부병력은 기타 남부해안으로부터 상륙 중에 있다. 여수는 벌써 회복되고 해군은 행동을 같이하는 수천의 반군이 투하되는 중이다. 제군의 운명은 시간적 문제이다.

제군에게 내리는 국가의 관죄는 필히 준열 엄격할 것이며 추후의 관용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본관은 제군의 대부분이 전도요원한 청년이며 또 단순 무지한 병사이며 행동의 동기도 피동적이었음을 안다. 또 전체가 결코 반도가 아님도 잘 안다. 지금은 제군들도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고 자기들의 행동을 반성한 후 회원하여 눈물로써 심려하고 있는 제군의 부모와 처자와 또는 친척을 생각할 때 본관은 최후로 한번 제군이 총살당하지 않을 기회의 여유를 주는 것이니 제군은 즉시 반성하여 한시간이라도 급히 하기의 수단을 취한 후 항거를 중지하고 사죄의 뜻을 표하라. 이것만이 제군이 살아나가는 길이요 제군이 가족이 바라는 방법이요 우리국가가 요구하는 태도이다.

1. 제군은 동지와 상의하여 단체로든지 또는 개인단독으로든지 제군의 양심이 허용치 않는 현재 반란의 지도자를 즉시 총살하고 사과의 뜻을 표하라.
2. 제군이 부득이한 때에는 반군의 폭행에 이용되는 총기, 화약, 탄약 및 기타 군용품들을 즉시 파괴한 후 탈주하라.

진압군 사령부는 최초 탈환목표를 순천으로 정하고 이를 세방면으로 나누어 공격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전투부대를 편성하였다. 주공격은 김백일 부대를 중심으로 하여 학구에서 순천으로 진격하고, 오덕준부대는 보성을 경유하여 별교쪽에서 순천을 공격하며, 최남근부대는 하동에서 광양을 경유하여 동쪽에서 순천을 공격한다는 것이었다. 반란군은 진압하는데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던 학구전투에서 군경진압부대가 반란군의 공격을 물리치고 무사히 방어전을 치룸으로써 반란군의 기세는 꺾이게 되었으며 그 시기부터 전세가 역전되어 반란군이 수세에 몰리기 시작하였다.

순천 탈환공격은 군산에서 출동하여 광주에 도착한 병력이 작전을 전개하기 위하여 다

시 기차편으로 이리를 경유하여 전라선으로 학구 인근에 도착하면서 시작되었으나 이미 학구 인근에는 제 3연대와 4연대의 선발 출동부대가 반란군과 교전 중이었다. 군산에서 출동한 제 12연대의 2개 대대(백인엽 소령 지휘)가 학구에서 폭동군과 교전하면서 대치하고 있던 3연대, 4연대를 지원하여 합동작전을 개시하였다. 진압군의 대규모 반격이 시작되자 반란군은 일부가 투항하고 주력부대는 순천으로 퇴각하였다. 학구가 장악되자 4연대 병력은 학구지역을 계속 잔류하기로 하고 12연대의 주력부대와 3연대병력은 순천으로 추격하여 오후 3시경 순천 외곽지역에서 반란군과 대치하였다. 4연대 병력을 학구에 잔류시킨 것은 이미 4연대의 일부병력이 반란군과 합류한 상태였던 데다가, 4연대는 반란을 일으킨 14연대 병력과 얼마 전까지 동료였기 때문에 사상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어서 순천탈환작전에 참여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22일 오후 3시 제 12연대 2개 대대가 순천읍 공격을 개시하고 1시간 후 남원 방면에서 도착한 제 3연대 1개 대대 병력이 가세하였다. 이때 순천은 약 2개 대대의 폭동군이 방어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진압군과 약 2시간에 걸친 치열한 전투로 순천을 지키고 있었다. 날이 어두워지자 진압군은 전투를 중지하고 순천 북방입구를 점령한 채 폭동군과 200내지 300미터 사이를 두고 대치했다. 이러한 대치상태에서도 폭동군은 진압군에 선전 혹은 타협안을 제시하면서 진압군 내부의 붕괴를 유도하고 있었으나 진압군은 동요가 없었다.

이튿날 새벽까지 제 2연대 1개 대대, 제 4연대 1개 대대, 장갑차 부대, 경찰부대로 증강된 진압군은 순천 주변의 산과 이른바 인민군사령부로 되어 있던 동순천역을 일시에 포위하고 박격포사격과 정찰기의 지원하에 장갑차부대를 선두로 총공격을 개시하였다. 이미 진압군의 총공격을 예상한 폭동군은 수적으로나 장비면에서 대항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정규적인 직접대항을 포기하고 산악지역에서 유격전을 감행하기 위해 김지회 등의 반군지휘관과 순천의 주요 좌익간부들로 구성된 주력부대는 이미 광양방면의 백운산과 지리산 줄기의 인근 산악지대로 도피한 상태였다. 따라서 순천읍내에는 14연대의 정규병력은 이미 도피하고 총과 죽창으로 무장한 치안대, 민애청원, 학생들만이 치열한 시가전으로 맞서고 있었다. 결국 적은 수의 잔류병사들만이 남아서 저항하고 있었기 때문에 몇 시간에 걸쳐서 시가전을 전개한 결과 진압군은 고립된 병사들의 저항을 손쉽게 무력화시킬 수 있었다. 전투 결과 해질무렵에 순천시의 대부분은 진압군들에 의해 탈환되었지만 밤에는 다시 퇴각하여 시 외곽의 보다 안전한 지역에서 숙영하였다.

23일 아침 증원된 1개 대대병력과 장갑차로 보강된 진압군은 아침 일찍 순천을 다시 공격하였다. 장갑차를 앞세운 진압군은 청년들과 좌익세력의 미미한 저항을 받았지만 이를 쉽게 격퇴하고, 오전 11시경에 순천시내의 전역을 탈환하고 오후에는 시가지 소탕전을 완

료했다. 순천을 완전 점령한 진압군은 1개 대대병력이 장갑차를 앞세우고 여수를 탈환하기 위해 여수를 향해 떠나고 나머지 진압군은 반란에 가담했던 자들을 찾아내기 위해 시내 가옥들을 하나하나 수색하기 시작하였다.

순천에서 주둔하였던 진압군은 백운산으로 도피한 반란군을 소탕하기 위하여 2개 대대병력을 광양으로 보냈다. 백운산의 반란군은 진압군을 분산시키기 위해 광양읍내에서 소동을 일으키는 교란작전을 펼치면서 산악지방으로 도주하였다. 이들을 소탕하는 과정에서 진압군은 서로 다른 방면에서 공격을 시작하였는데 상호간에 적으로 오인한 채 치열한 교전을 벌려 아군끼리 막대한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별교지방도 순천에서 급파된 2개 대대병력의 진압군에 의해 탈환되었고 이어서 보성지방도 10월 24일 아침에 탈환되었다. 구례와 곡성도 제 3연대 1개 대대가 순천탈환에 합류하는 과정에서 22일 오전 11시경과 15시경 각각 탈환되었다.

한편 여수에서는 부산에서 파견된 해군부대와 이부 국방경비대 병력이 10월 23일 아침에 육해군 합동으로 여수 항구를 통해 상륙하려 했지만 반란군의 반격을 받고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

나. 여수와 인근지역의 탈환작전

이미 앞에서 살펴 본대로 순천탈환에 성공한 진압군은 광양방면의 폭동군 주력을 섬멸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으며, 다른 한편으로 사건의 진원지인 여수를 탈환하는 동시에 별교, 보성방면의 폭동군을 진압하려 했다. 이에 따라 순천에서는 제 2연대 및 제 4연대 1개 대대를 잔류시켜 경비를 담당케 하고 광양방면 공격에는 제 12연대 2개 대대와 하동에서 재편성한 제 15연대의 2개 대대로 광양 부근을 협격하여 반군주력을 철저히 추격 토벌케 하였다. 또한 여수 공격을 위해서는 제 3연대 1개 대대와 장갑차 부대를 준비하였으며, 별교 보성 방면 공격에는 제 4연대의 1개 대대를 재정비하여 파견하였다.

여수에 대한 공격은 23일 오전 9시 30분에 부산에서 급파된 해군 LST함의 선상 박격포사격 및 제 5연대의 1개 대대의 상륙작전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박격포사격의 부정확과 폭동군의 완강한 저항으로 많은 사상자를 낸으로써 오후에는 공격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24일의 제 2차 공격은 송호성 사령관이 진두지휘하여 공격을 실시하였으나 반란군의 매복 작전에 걸려들어 반란군이 발사한 총탄에 의한 송호성 사령관의 부상과 동행했던 외국인 중군기자의 사망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육해군합동 작전으로 여수에 상륙하려던 작전에 실패하게 되자 일반 국민들은 새로운 의혹과 불안이 조성되었다. 이제 정부는 더 이상

반란을 진압할 능력을 상실한 것처럼 보였다. 여수탈환작전의 시작이 미평전투에서부터 실패를 거듭하게 됨에 따라 새로 출범한 제 1공화국은 국내외적으로 그 존립자체를 의심받게 될 정도로 궁지에 몰리게 되었고, 이에 따라 여수탈환은 초미의 정치적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정부당국에서는 공보처장으로 하여금 23일 다음과 같이 여순사건의 진압상황을 발표하여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했다.

「여수시는 23일 상오 8시 30분에 순천은 동 6시 30분에 각각 완전히 정부군이 탈환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퇴산중인 반란군은 광양과 보성 등지로 몰리고 있다고 하나 일량 일종으로 완전히 점멸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지방에서까지 비상경계를 펴고 있었고 서울의 수도청에서는 지난 20일 오후 6시부터 전래에 없는 삼엄한 청정 비상경계를 실시하였다.」

국방부에서도 23일 오전 10시 여수 순천 방면 사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광주신보, 48.10.24)

1. 22일 하오 4시 30분 제 5여단장 김백일 중령 휘하 정예부대는 순천을 완전 점령하여 목하 사태를 수습 중에 있으며 순천에는 질서 회복 중에 있다. 전과는 폭도 약 600여명 수용하였다.
2. 여수는 22일 상오 3시 30분 탈환하였다는 정보가 입수되었다.
3. 여수 순천의 포위망을 탈출한 반란군은 보성에 약 200여명 광양에 약 400여명 방황하고 있는데 국군은 이를 포착하고 격과 중에 있다.
4. 전주 순천간 철도는 반란군의 북진을 저지하기 위하여 파괴하였는데 반란군의 봉쇄작전이 완성 후 복구 개통케 되었다.
5. 항공대는 반란군의 정찰 수색과 귀순 권고문 살포 등으로 활약 중인데 그 공적은 지대한 것이다.
6. 해군 함정은 전남지구 해안선 일대를 봉쇄

이러한 상황에서 진압군사령부에서는 여수를 탈환하는데 역량을 총 집중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25일 반군 토벌 사령부에서는 광양방면에서 폭동군 주력을 추격하고 있던 당시 최정예부대인 제 12연대 2개 대대를 여수탈환작전에 전용시키기로 하였다. 그 결과 광양과 순천 인근의 산악지역에서 김지회 등이 지휘하는 주력부대는 진압군의 추격을 따돌리고 섬진강을 건너 백운산과 지리산으로 입산함으로써 장기적인 유격전으로 전개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24일 밤 여수반도의 폭동군 주력 일부는 미평전투의 패배로 여수반도의 진압군 포위망이 무너진 틈을 타서 지리산과 별교 방면으로 탈출하게 되었으며, 여수읍내는 제 14연대 반란군 일부 약 200여명, 무장좌익세력 약 1천여명의 좌익 청년, 학생, 노동자 등이 방어하게 되었다.

한편 24일까지 다른 지역에서의 진압상황은 어느 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었다. 보성방면은 24일 12시 30분 제 4연대와 수도경찰대에 의해 진압되었으며 별교방면은 제 6연대와 제 3연대에 의해 13시 50분경 탈환되었다. 고흥방면은 25일 오전 9시경 보성과 별교방면에서 진압군이 들어와 폭동군을 섬멸함으로써 25일 10시 탈환되었다.

광양은 24일 17시 20분 제 12연대와 제 4연대에 의해 탈환되었다. 한편 이승만 대통령은 직접 여순사건에 대해 여순지구의 국민들에게는 경고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타지역의 국민들에게는 해명한다는 생각으로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공산주의자들이 지하에 정당을 부식해서 내란을 일으켜 전역을 혼란에 빠지고 남북을 공산주의국으로써 타국에 부속을 만들려는 계획이 오래 전부터 농후해 가는 것을 세인이 아는 바이다. 불행히 몸에 천진한 분자들이 혹은 국군의 혹은 어떤 단체에서 겨서 반란을 빚어내고 있다가 정부를 기만하고 국권을 말살하려는 음모로 여수 순천 등지에 반란을 일으키고 있으나 국군의 결사적 전투공세로 반도들은 진압하여 가고 있다. 그러나 극소수의 잔존한 반도들이 혹 도망하여 숨어 있는 도당을 피어서 방화와 약탈을 강행하여 치안을 방해할 터이니 방위상태의 방책을 취하지 않고는 후환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정부에서는 단호한 태도를 취하여 치안을 유지하여 인명을 보호 할 것이다. 각 지방 남녀노소는 질서와 안녕을 범하는 자가 없도록 조직적 행동을 하여 주기를 경고하는 바이다.(광주신보, 48.10.26)

제3차 여수 탈환작전은 25일 아침 550명의 병력으로 재개되었다. 진압군은 박격포사격의 지원을 받으며 공격을 시작하자 여수에 남아 여수를 방어하고 있던 1000여 명의 반란군들은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이미 반란군의 주력부대는 여수반도를 빠져나와 산악지역과 백운산지역으로 피해버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압군은 강력한 저항을 받지 않으면서 오후 늦게 여수읍 외곽고지를 점령할 수 있었으며, 장갑차를 앞세움으로서 폭동군의 치열한 저항을 받았지만 여수읍내까지 진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날이 어두워지자 진압군은 곧 철수하였고 외곽고지는 다시 폭동군에 의해 재점령되었다.

이때 진압군이 철수한 상세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대체로 첫째, 전날의 병력손실에 덧붙여 아직 병력증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둘째, 진압군이 진군 도중 촌락마다 수색해야 할 정도로 다른 지방에 비해 좌익동조세력이 광범위했다는 점 셋째, 배수진을 친 폭동군의 저항이 결사적이었고, 넷째 전날과 같은 매복기습을 염려했다는 점 때문인 것 같다.

최후의 본격적인 여수탈환작전은 26일 정오경 광양으로부터 전용한 제 12연대 2개 대대, 순천 경비 중이던 제 4연대 일부병력, 제 3연대 1개 대대, 제 2연대 1개 대대, LST에 승선 중이던 제 5연대 1개 대대, 장갑차부대, 경찰지원부대, L-4 항공기 10대, 진해에서 급파된 충무공호를 비롯한 6정의 경비정이 여수반도를 포위한 가운데 개시되었다.

장갑차부대를 선두로 제 12연대 2개 대대가 주공이 되어 시가지 동쪽을, 제 3연대 1개

대대는 옹호부대로서 종고산을, 제 2연대 1개 대대는 예비대로서 해안 방면을 경계하면서 시가지로 진격하였다. 당시 호남지구 전투사령부의 발표에 따르면 여수에는 반란병사 200여명, 민간무장폭도 1천여명, 동조세력까지 합쳐 총 1만 2천여명이 진압군에 대항하고 있었다 한다.

15시경 구봉산, 장군산, 종고산 등지의 외곽고지를 장악하자 진압군은 곧이어 시가지에 대한 박격포사격을 고지와 바다로부터 개시하였다. 이 박격포사격으로 진압군의 일부가 살상당하기도 했으며 여수읍내의 서동과 교동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주택가로 번져 여수시가 지는 잿더미로 변하였다.

박격포사격에 이어 제 12연대는 장갑차를 선두로 시내에 돌입하였고 제 2연대와 제 3연대는 여수읍을 압축하면서 민가를 닥치는대로 수색하였다. 진압군은 대대별로 소탕전을 전개하여 시민들을 서초등학교, 혹은 진남관 같은 공공시설 등으로 집결시키면서 소탕전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시내에는 아직까지 폭동군 동조세력이 적지 않게 존재하여, 반란병사 1명이 민간폭동군 10명 내지 20명을 지휘하는 식으로 매우 조직적이고 결사적으로 저항하고 있었으므로 밤이 되자 진압군은 소탕전을 중지하고 본부를 서국민학교에 두고 지역경계에 들어갔다. 이때 반란군 일부와 여수 좌익지도자는 미평쪽으로 퇴각했다.

27일 새벽 12량의 장갑차를 선두로 진압군은 여수읍 한복판에 위치한 이른바 인민군사령부를 향하여 4방면에서 포위 공격을 개시했다. 한편 아직 부두에서는 여전히 폭동군의 저항이 치열하여 제 5연대가 승선한 LST가 상륙을 못하고 있었으며 제 5연대는 작전상륙을 위해 81MM 박격포 2문을 갑판위에 설치해 놓고 사격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갑판의 반동으로 탄착점이 형성되지 않아 여수읍내를 더욱 초토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진압군측의 사상자까지도 내게 되었다. 결국 제 5연대는 진압이 완료된 후 무혈상륙을 하게 되었다.

폭동군은 진압군의 공격에 의해 읍사무소 자리에 설치되어 있던 인민위원회 보안서 쪽으로 물리면서도 저항을 계속하여 중앙동, 교동 방면으로 도주하였다. 백인엽 소령이 지휘하는 제 12연대는 폭동의 진원지인 제 14연대 병영으로 돌입하였다. 여수는 15시 30분경 시내가 점령되고 18시 소탕전이 완료됨으로서 완전히 재탈환되었다. 진압군은 여수시내에서 10여명의 반란병사와 민간폭동군 500여 명을 체포하였다. 이렇듯 여수 진압을 마지막으로 여순사건 진압은 일단락되었다. 경찰은 보성 24일 14시, 벌교 25일 오전 10시, 고흥 25일 오전 10시, 광양 26일 19시, 구례 27일 14시, 여수 28일 오전 8시에 각각 업무를 재개할 수 있었다.

진압을 하는 중간단계에 김백일 여순지구 토벌 사령관은 다음과 같이 여순사건의 진압 성과를 발표하였다.

김백일 작전 지휘사령관 발표-순천지구 전투를 개시. 동 4시 30분경 적의 병력 일천에 대하여 아방은 600의 병력으로써 순천시내에 돌입. 당시 적의 주력은 순천에 없었고 그 중 일부는 보성 광양에 있었는데 총병력은 반란군 1500명 일반폭도 500명 총 2000여명 정도였다. 순천에 진입한 최선봉 부대는 백인엽 소령이 지휘하는 군산 제12연대의 약 2개 대대 600여명의 병력이었는데 본관도 동시에 진입하였다. 전투에서 적 사망 100여명, 포로 200여명, 총기 150에 달하였다. 그리고 아방에도 귀중한 전사 3, 부상 7의 손해. 한편 동일 4시 30분경 남원으로부터 송석하소령이 지휘하는 제 3연대 1개 대대도 순천에 돌입하여 전투는 계속 되었으나 밤이 되어 시내 소탕전은 중지하고 순천 북방 출입구를 점령한 채 200~300m를 사이에 두고 적군과 대치. 23일 오후 7시 아군은 순천 주위의 산과 적의 사령부로 되어있는 동순천역을 일시에 포위 섬멸코저 돌격하였다. 그때까지 적은 퇴각하지 않고 모략 선전으로 아군의 반란을 유혹코저 노력하였으나 제3 제12연대 장병의 사기는 더욱 왕성하여 모략 선전에 오히려 분개하고 일층 적개심을 높게 하였다. 총공격 개시 후 시가전을 전개 하였는데 반군외에 무기를 소지한 적의 치안대 학생 민애청원들도 대항하였으므로 가가호호를 수색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리하여 오전 11시경 순천시내를 완전히 탈환하였는데 적의 일부는 포위망을 이탈하여 광양방면으로 퇴각하였다. 그러나 본관은 미리서 그것을 예상하고 이정일 중령이 지휘하는 광주 4연대 1개 대대를 광양에 배치, 공격하여 적의 일부는 하동으로 일부는 해안선으로 도망갔다. 이 전투에서는 일대 시가전과 혼전을 전개하였는데 이때부터 적은 상호 연락을 잃고 혼란상태에 빠져 그들은 하동으로부터 분산하고 순천 구례 하동간의 삼각지대에 있는 백운산 방면으로 다시 도주하였다. 적군의 수괴-김지회(중위) 23세는 현재 백운산에 잠복하고 있으며 동일의 전과는 포로 300, 총기 300에 달하였다. 24일 백운산 방면에 도주한 적의 주력을 포착코자 여수 공격을 일시 중지한 아군은 적을 탐색하여 동일 저녁까지에 포위태세를 완료코 포위권내에 있는 적군에 대하여 25일 오후 소탕전을 개시한다. 별양 보성방면의 적은 약 300인데 그중 100은 별교에 있다한다. 24일에는 이 적에 대하여 우경으로 제3연대 3개 중대 좌편에 제6연대 일부가 진격하여 오전 11시 별교도 완전 탈환하였으며 이에 앞서 보성은 23일 밤 광주부대가 점령하고 보성 별교간의 연락을 완결하였다. 이 전투에 있어서 300의 적병을 포로로 하였으며 적은 현재 300~500 정도이다. 현재까지의 총 전적은 적병 800을 포로로 하였고 죽은 적의 총병력은 800, 일반폭도가 수천이다. 무기 노획은 포로수와 동일하고 소총경기는 대부분 탈환하였다. 현재 백운산의 적은 식량 부족으로 기진맥진하여 총기를 버리고 방황하고 있는데 이로써 본 작전은 대개 일단락 지었다. 따라서 하동 방면 적군의 투항은 목전에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아군의 손해는 전사 10, 부상 30명이고 적이 살상한 양민의 수는 300~500정도로 추상된다.

그러나 무장폭동군은 진압군에 사살, 체포되기도 하였지만 주력 부대는 지리산 방면으로 나머지는 주변 산악지대로 도주해서 유격전을 전개하게 되었다. 광양방면의 폭동군은 지리산 방면으로 순천, 별교, 보성, 고흥, 여수 방면은 주변 산악지대 및 해안지방으로 도주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여순지역에 국한해서 선포했던 계엄령을 11월 1일을 기해 전남 북일원으로 확대선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군정보고서에서는 11월 16일 현재 여순지구 무장폭동군이 백운산 방면에 350명, 별교 200명, 고흥 150명, 보성 300명 정도가 산재해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단선 단정반대투쟁과정에서 입산한 유격대와 합류 군경우익요인에 대한 습격을 계속 전개하였으

며 1949년 초순에 들어서는 군경의 추격으로 점차 소규모화 되어 진도와 무안 등의 섬지방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전남 일원에서 출몰하고 있었다.

진압작전을 전반적으로 평가해 볼 때 미군사고문관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창군된 지 얼마 안 되는 경비대는 군장비 특히 통신장비의 부족, 부대전투능력의 부족, 유능한 지휘관의 부족, 부대간의 협동작전의 부족, 부대내의 좌익침투, 장교와 사병간의 일체감 부족 등에도 불구하고 미군사고문관의 작전지원과 장비지원에 힘입어 여순사건을 그나마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경비대의 이념적 조직적 취약성, 제 1공화국의 정치적 취약성은 결국 반군 주력이 지리산으로 도주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유격전구를 마련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군은 여순사건을 통해 대규모 군사훈련 이상 가는 실전 경험을 쌓게 되었으며 동시에 사건 직후 계속된 숙군작업으로 이념적 조직적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

3. 반란치하의 여순지방

반란지역으로서의 여수순천지방 상황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공통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첫째, 폭동군이 경찰서를 공격하여 한 지역을 점령한 뒤 토착공산주의 세력과 합세하여 경찰, 우익요인, 우익 청년 학생 등을 색출하여 즉결처분하거나 혹은 주요 경찰간부 우익요인 등은 구금하여 며칠 후 인민재판을 통해 처분하는 양상을 띠었다. 둘째, 그 직후 폭동군은 남로당 및 지방좌익과 합세하여 이른바 인민위원회, 보안서, 의용군 등을 구성하였으며 폭동군과 의용군은 전투를 담당하고 인민위원회는 이른바 인민행정과 인민재판을 실시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폭동군 및 공산주의자들의 이러한 행위들, 특히 가장 조직적으로 보였던 인민행정조차도 사전의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실시된 것이 아니었다. 「38선이 터져서 남조선 해방은 눈앞에 다가왔다」 등과 같은 허위선전을 은폐 합리화할 필요성에서 그리고 진압군의 진압진척상황에 대응해서 나타난 즉흥적인 성격의 것이었다. 셋째, 위의 두 과정에서 강압에 의해서건 자발적이었던 간에 군중이 대규모로 참여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들을 중심으로 반란치하에서의 여순지방을 정리해보기로 한다.

가. 반란군의 초기 활동

여수의 경우 폭동군이 좌익청년학생들을 앞세우고 본격적으로 경찰, 우익요인, 청년 등을 색출하기 시작한 것은 20일 새벽 3시 여수경찰서를 점령한 후 7시간가량 지난 오전 10

시부터였다. 경찰은 군중들에게 잡히면 마구 밟히거나 구타당하여 살해되었고 반란병사에게 잡히면 그 자리에서 총살당하기 일쑤였다. 체포당한 사람 중 극우에 해당하는 자는 경찰서 유치장에 나머지는 읍사무소 2층에 가두었다. 그러나 체포된 경찰이나 우익인사들이 모두 처형된 것은 아니었다. 즉결처분이나 인민재판에 의해 죽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들이 이른바 악질반동이라고 낙인찍힌 사람들로서 평소에 충돌이 잦았던 자이거나 경찰간부였으며, 23일 밤에는 즉결처분 혹은 인민재판에서 처형을 면한 경찰과 우익요인 등 약 200여명이 석방되기도 하였다. 폭동, 반란군의 여수점령기간 중 즉결처분 및 인민재판에 의해 피살된 인원수는 200여명이었으며 그중에는 경찰 74명이 포함되어 있다.

순천의 경우는 여수보다 점령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900여명의 관민이 사망했으며 그 중 경찰은 전사자를 포함하여 400여명이 피살되었다. 폭동군은 시내에 숨어있던 경찰관들과 우익인사들을 체포하는데 도움을 얻기 위하여 좌익계 학생들과 교사들을 일본제 소총으로 무장시켰다. 폭동 반란군에 의해 피살된 대부분의 경찰은 주로 신참 혹은 인접군의 응원 경찰들로서 순천지역의 지리와 상황을 잘 모르는 주변지역 출신으로서 체포를 피하지 못한 경찰들이 대부분이었고 고참경관이나 간부는 대부분 피신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즉석에서 사살되기도 하였지만 대부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에 인민재판소에 넘겨져 재판을 받고 처형당했다. 죄가 있다고 판명되거나 단지 경계대상이라고만 판결을 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처형당했다. 일단 반동분자라고 낙인찍힌 사람들은 점령 첫날 은행 앞 광장에서 처형되었다. 순천경찰서장도 두 눈이 뿔히고 온몸이 땀땀 땀땀 채 차 땀땀땀에 묶여 끌려 다니다가 화형 당했다. 여수보다 순천에서 경찰 혹은 우익요인이 더욱 무참하게 살상되었다.

제일 먼저 반란군에게 체포됐던 경찰관들은 무조건 총살되었으며 나중에 체포된 70여명의 경찰관은 순천경찰서 앞마당에서 군중들을 모아놓고 집단학살을 하였다. 또 반도들은 체포된 경찰관을 산채로 모래구렁이에 파묻어 죽이기도 했다. 모래구렁이에 묻힌 뒤 미처 죽지 않고 꿈틀거리는 경찰관은 위에서 죽창으로 푹푹 찔러 죽였다. 여수보다 순천에서 피살된 경찰의 수가 더 많고 더욱 비참하게 살해된 이유는 순천의 반란군들이 이미 신분이 노출된 상태였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여 진다. 이는 또, 해방이후 여순사건에 이르기까지 여수보다 순천에서 정치적 갈등이 심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여수와 순천을 제외한 나머지 군들에서 경찰, 우익요인, 청년단원들은 폭동 반란군의 처형소식을 듣고 대부분 도주하였다. 따라서 벌교, 고흥, 보성, 광양 등지의 경찰서는 폭동군 혹은 지방 토착좌익에 의해 무혈 점령당하였으며 그만큼 여수와 순천보다 피해가 적었다. 이 중에서 보성방면의 피해자수에 대한 기록이 보이는데 경찰은 전사 5명, 피살 39

명(이중 별교서 관내 조성지서에서 나체로 총살된 30명 포함) 총 44명이, 민간인은 15명이 피살되었다.

나. 반란군의 인민행정 실시

여수와 순천을 점령한 제 14연대 병력은 그 지역의 좌익인사들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인민위원회와 인민재판소를 설치하였다. 이러한 행정조직이 형성되기 이전에 이미 20일 아침부터 여수의 중앙동에는 벽보판마다 「미군철수」 「제주도출동거부 병사위원회 성명서」 「인민해방군만세」 「여수인민에게 고함」 「인민군 38선 돌파」 「이승만 일본도망」 「여수인민위원회 성명서」 「토지는 농민에게」 등의 벽보들이 붙기 시작하였다. 또한 중앙동 광장에서 1000여 명이 모인 군중대회가 열렸다. 여기에는 여수의 좌익인사들이었던 이용기, 이창수, 박창래, 주원석, 유목윤, 김상렬, 김현수, 강대훈, 박채영, 문성휘, 김귀영 등이 참여하였다. 남로당 여수군당위원장은 이용기였으며 군중대회에서 지창수가 인사말을 했다. 지창수는 14연대의 일부병력이 순천으로 떠났으나 자신은 여수에 남아 여수를 총괄하고 있었다. 중앙동의 여수시민 군중대회에서 여수의 인민위원회를 이끌어 나갈 의장단으로 이용기, 유목윤, 박채영, 문성휘, 김귀영, 송옥 등 6명이 뽑혔다. 이 자리에서 구성된 인민위원회에서는 6개항의 혁명과업을 채택하여 시민들로부터 승인 받는 형식을 취했다.

인민위원회의 혁명과업 6가지는 다음과 같다.

1. 인민위원회가 여수지구 행정기관을 접수하는 것을 인정한다.
2.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대한 충성을 맹세한다.
3. 대한민국의 분쇄를 맹세한다.
4. 대한민국의 모든 법령을 무효로 한다.
5. 경찰관, 친일파, 모리간상배, 한민당, 독립촉성국민회, 서북청년단, 대동청년단, 민족청년단 등 반동분자들을 철저히 처단한다.
6. 무상몰수 무상분배에 의한 토지개혁을 실시한다 등이었다.

여수인민위원장 이용기는 취임사에서 인민위원회가 실행해나갈 사항들을 제시했는데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다.

첫째, 친일파, 모리간상배를 비롯하여 이승만도당들이 단선단정을 추진하는데 앞장섰던 경찰, 서북청년단, 한민당, 독립촉성국민회, 대동청년단, 민족청년단 등을 반동단체로 규정

하고 그들 중 악질적인 간부들은 징치하되 반드시 보안서의 엄정한 조사를 거쳐 사형, 징역, 취체, 석방 등의 네 등급으로 구분하여 처리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악질경찰은 제외하고는 사형만은 될 수 있는 대로 없도록 노력할 것이며 만부득이하게 될 경우에도 최소화 할 것이다.

둘째, 친일파, 모리간상배들이 인민의 고혈을 빨아 모은 은행예금을 동결시키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할 것이다.

셋째, 적산가옥과 아무 연고도 없는 자가 관권을 이용하여 억지로 빼앗은 집들을 재조사해서 정당한 연고권자에게 되돌려줄 것이다.

넷째, 매판자본가들이 세운 사업장의 운영권을 종업원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다섯째, 식량영단의 문을 열어 굶주리는 우리 인민대중에게 쌀을 배급해줄 것이다.

여섯째, 금융기관의 문을 열어 무산대중에게도 은행돈을 빌려 줄 것이다.

인민위원장의 취임사가 있는 후 박채영의 선창으로 인민공화국 만세삼창이 있는 뒤에 시가행진에 들어갔는데 도중에 많은 사람이 끼어들었다. 이 대회를 계기로 여태껏 지하에서 활동 중이던 민애청, 민청, 학동, 여맹, 합동노조, 철도노조 등 좌익청년단체들 600여명이 자발적으로 인민의용군을 조직하여 무기를 들고 경찰과 우익진영 인사들의 체포와 재산 몰수 활동을 벌였다.

여수에서는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 인민위원회가 조직되어 여수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였다. 인민위원회는 좌익세력들 뿐만 아니라 그동안 군청과 각 면사무소에서 일하던 행정경험자들 중에서 군수, 과장급, 계장급을 해임하고 우익단체에 가담하지 않았던 하위직 인사들로 하여금 출근케 하여 계속적인 행정활동을 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반란지구에서는 대부분 인민위원회와 보안서가 조직되었고 인공기가 게양되었다. 인민위원회는 친일파와 모리 간상배들의 은행 예금고를 조사하고 적산가옥 불하대장을 조사했다. 또, 각 동별로 극빈자를 조사하여 인민증을 끊어주고 그 소지자에 한해서 식량영단에서 1인당 3홉씩을 배급하기도 하였으며 각 금융기관에서는 정상적으로 문을 열어 사건 전에 대출수속이 끝난 사람들에게 대출을 하였는데,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새로운 신청서가 쇄도하여 혼잡을 빚기도 하였다. 각 사업장에서는 종업원들이 직장 자치위원회를 조직하여 주인들로부터 운영권을 인수하여 운영하기도 하였다. 인민위원회와 보안서는 반역자 처벌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숙청대상자를 인민재판에 회부하여 처형하게 하였다. 이 때 강경파와 온건파간에 처형인사의 대상을 대폭으로 할 것인가, 소폭으로 할 것인가의 논쟁이 벌어졌다. 결국 악질적이라고 판단된 우익인사 8명과 사찰계형사 2명이 처형되었다. 처형된 우익인사는 김

영준(천일고무사장, 한민당 여수지부장, 일제 때 비행기 헌납), 차활언(독촉국민회 지부장, 5.10선거 출마자), 김창업(대한노총 부지부장), 이광선(미 CIC요원), 김수곤(미 CIC요원), 김본동(사업가), 서종형(사업가) 등이었으며 경찰관은 박귀남(사찰계형사), 박창업(사찰계형사) 등이었다. 양심적이라고 판정되었던 20여명의 경찰관들은 석방되었다. 반란군치하의 여수 순천지방의 상황을 여러 자료를 종합하여 날짜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10월 20일 : 폭동군과 좌익에 의해 여수 전시가 점령되자 제일 먼저 읍사무소 자리에 보안서가 설치되고 10시경부터 폭동군은 좌익청년 남녀학생, 그리고 라이터돌이나 양담배 등을 파는 날품팔이 소녀 등의 안내로 이른바 반동경찰, 반동분자라고 그들이 부르는 경찰과 우익요인 등의 수색에 나섰으며 각 동에서는 적발 고발이 들어오기까지 했다. 체포당한 경찰은 흥분한 군중에게 밟히거나 물매를 맞고 폭동군에게 잡힐 경우 그 자리에서 총살을 당하기까지 했다. 경찰의 가산은 개방되어 마음대로 가져가게 했다. 또한 인민위원회 간판도 나붙고 각 기관이 좌익들에 의해 접수되기 시작했으며 거리에는 인민대회 포스터, 「제주도출동거부 병사위원회」의 성명서가 나붙었다. 오전에는 이따금씩 보이던 인공기가 오후에는 전시가지에 휘날렸다.

병사위원회는 여수시를 반란군이 장악하고 있던 시기에 발간되었던 「여수인민보」에 14연대가 반란을 일으키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설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병사위원회는 「외세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조국을 수호하고, 단독정부를 수립하여 정부를 팔아먹으려는 이범석, 이승만 등을 처단하기 위하여 봉기를 일으켰다」고 성명서에 밝혔다. 이 성명서에는 제주도 출동 절대반대, 미군도 소련군을 본받아 즉시 철퇴하라, 인공수립 만세 등의 요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제주도 인민들은 제국주의 정책에 대항하여 지난 4월에 무장봉기를 일으켰으며 조국을 수호하는데 목숨을 바치고 있다고 한다. 병사위원회는, 여수에 있는 모든 장병들은 제주도 인민들을 학살하는 것을 거부하며, 앞으로 제주도 파병에 응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위원회의 주장에 따르면 이번 반란이 진정한 조선인민의 군대로 참여하기 위하여 그리고 고국의 진정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일어난 것이라고 한다.

오후 3시 반경 중앙동광장에서는 지하에서 비합법적으로 활동하던 민애청, 학통, 민주여성동맹, 합동노조, 교원노조, 철도노조 등이 깃발을 들고 참석한 것을 비롯하여 약 3만여명의 군중이 모인 가운데 인민대회는 추도가, 해방의 노래 등으로 시작되었다. 이어 노동자 대표 학생대표, 여성대표, 남로당대표 등이 번갈아 “이제 38선은 터졌습니다” 하는 선동연설을 할 때마다 박수가 있었고 청중 가운데 우는 사람도 허다하였다. 그들은 순진하게 남북이 정말 터진 것으로 믿었던 것이다. 이용기, 박채영, 김귀영, 문성희, 유목윤, 송옥 등

인민위원회 의장단과 간부가 선출되고 인공에 대한 수호와 맹세 등 6개 항목의 결정서를 채택하였다. 또한 민청원, 남녀학생, 30세 내외의 장정들에게 경찰의 총 약 200정, 제 14연대에서 트럭 3대로 날라온 총을 마구 분배하여 소위 의용군을 조직하였다. 마지막으로 최후의 결전가로 대회를 끝마치고 군중시위로 들어갔다.

10월 21일 : 인민위원회가 기능을 시작, 친일파 모리배 등의 은행예금 동결령 및 재산 몰수령이 내려지고 이른바 반역자 적발 색출이 계속되었다. 보안서에서는 한독당을 제외한 한민당, 독촉, 대청, 족청, 서청의 간부 혹은 단원의 문초가 시작되었다. 인민위원회에서는 인구조사와 적산가옥조사를 실시했으며 초저녁에는 경찰서 뒤뜰에서 고인수 서장 이하 사찰계 형사 등 약 10명에 대한 총살행이 집행되었다. 이날 2시간의 여유를 준다는 국군의 귀순전단이 살포되었지만 38선이 터졌다는 허위선전에 워낙 흥분한 시민들은 동요가 없었다.

10월 22일 : 식량영단의 창고를 개방하여 1인당 쌀 3홉씩 배급을 시작하였다. 이날도 이른바 반역자의 체포와 문초가 계속되었다. 군청 이하 전 행정기관의 접수를 끝마쳤는데 과장급 이상의 관리는 과면시켰다. 여수역 대합실에서 철도노조의 대회가 있었는데 회의 도중 신성한 대회를 악질 반동을 섞은 채 할 수 없다 고 하여 그들을 추려내어 보안서에 고발하였다. 이날 비로서 국군의 해군함선이 모습을 나타냈다.

10월 23일 : 오후 2시 이른바 최고심사위원회에서 처단 반역자로 결정된 우익인사의 사형이 오후 2시 보안서 앞에서 거행되었다. 처형된 사람은 김영준(천일고무 사장) 박귀환(대하노총 여수지구위원장), 연창희(경찰서 후원회장), 차활인(한민당 간부), 이광선(미군방첩대 여수주재원), 최인태(CIC 요원), 김수곤(상동), 박창길(사찰계 형사), 박귀남(사찰계 형사) 등 9명이었다. 한편 체포된 경찰관과 민간인 200여명이 일단 석방되었다. (후에 국군의 공격이 치열해지자 일부는 재구속되어 즉각처분됨) 쌀배급을 계속했으며 이른바 인민군, 의용군 공무원 등에게 천일고무 창고에서 찌까다비를 분배하였다. 각 금융기관에서는 융자까지 했으며 산업기관은 종업원에게 운영권을 위임하기도 했다. 폭동군에게 전매국에 있는 담배를 배급했으며 돌산도에서는 인민재판이 열렸다.

10월 24일 : 순천방면으로 부터 국군의 공격이 시작되었는데 폭동군이 워낙 압도적이어서 국군은 꽤 큰 피해를 입고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몇명은 포로가 되었다. 폭동군 측에서도 피해가 있었는데 그 중 탄약을 운반하던 민주여성동맹원 정기덕이 사망하였다. 이날도 식량배급이 계속되었으며 각 기관의 사무인계가 완료되었다. 이날 여수인민위원회를 발행인으로, 박채영을 편집인으로 한 「여수인민보」라는 신문이 21일자로 발행되었다.

10월 25일 : 국군의 본격적인 공격이 이날로 개시되었는데 맹렬한 교전 끝에 일단 후

퇴하였다. 폭동군은 병력을 보강 전력을 재정비했으며 오후 1시 보안서 앞 광장에서 정기 덕의 이른바 인민장이 수천명의 시민이 동원된 가운데 진행되었다.

10월 26일 : 국군의 맹공격으로 가장 치열한 전투가 진행되었다. 읍주변의 미평, 오림 리 부근의 주민들은 피신을 해야만 했다. 폭동군은 국군의 공격에 견디지 못하고 구례방면으로 퇴각했으며 여수시내는 대부분 좌익 청년, 학생들이 지키게 되었다. 밤이 되자 여수쪽 하늘이 붉었다. 이날 밤 시장동 일대가 잿더미로 변했다.

10월 27일 : 26일 저녁부터 불이 계속 타오르는 가운데 오전 10시에 국군의 장갑차가 시내로 돌입하였다. 총알과 박격포탄에 죽은 사람, 다친 사람이 속출했으며 집이라는 집에는 모두 구멍이 뚫렸다. 반란병사들은 거의 다 없어지고 학생, 청년들 10명 내지 20명씩 한조를 맡아 지휘하는 극소수가 남아 있을 뿐이다. 오후 2시경 시내를 완전 탈환하고 3시 반경 전 여수읍이 재탈환되었다.

IV. 여순사건의 결과

여수와 순천이 탈환되었다고 해서 여순사건이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었다. 진압부대에 의해 읍소재지 및 그 주변지역은 탈환되었지만 폭동, 반란군은 그 주력 및 중요간부들이 주변 산악지대로 도주해서 지속적인 유격전을 전개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1949년 전반까지 계속 진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전남지방은 경직된 반공체제로 구축되어 갔다. 이 반공체제는 여순지역 탈환직후의 철저한 폭동군 및 부역자 색출과 처벌, 국가통제 및 우익단체의 강화, 남로당을 위시한 좌익세력의 붕괴 등의 과정을 거쳐 완성되어갔다. 이 과정에서 민중들의 민생고는 더욱 악화 일로를 걷고 있었다.

1. 여순사건의 영향과 피해

가. 반란군 및 동조세력 처벌

여순지역이 재탈환되자 군정은 계엄령 하에서 가장 먼저 폭동군 및 이에 가담한 부역자를 철저히 색출하는 작업에 나섰다. 그러나 폭동군 및 좌익지도부는 대부분 산악지대로 도주했기 때문에 폭동지역내에는 주로 소수의 폭동군 잔류자와 민간인협력자 소위 부역자가 남아 있었을 뿐이다.

폭동군치하의 부역자가 적지 않은 상태에서 제 1공화국의 철저한 처벌정책은 민중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진압의 대상으로 취급했다. 이와 더불어 중요한 문제점은 민간인 참여자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누가 부역자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 우익요인, 청년단원 등 폭동군 치하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집단들에 의해 색출 및 적발작업이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외모, 고발, 강요된 자백이 중요한 근거가 되었으며 여기에서 개인적 감정, 혹은 정치적 중상모략 까지 겹쳐져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거나 목숨을 잃어야만 했다.

폭동군 및 부역자 색출작업은 2단계로 진행되었다. 제 1단계로 시가지를 탈환하면서 거의 전 읍민을 학교 또는 공공시설에 집결시켜 주로 외모(머리가 짧은 자, 군용팬티를 입은 자, 손바닥 총을 든 흔적이 있는 자, 흰 지까다비를 신은 자 등)와 경찰관, 청년단원, 학련생, 우익요인 등의 적발을 통해 폭동군과 부역자를 색출해냈다. 폭동군의 즉결처분에 가담하거나 인민재판에서 처형에 앞장섰다고 적발된 자는 즉석에서 곤봉, 개머리판, 체인 등으로 무참하게 타살되거나 혹은 총살을 면치 못했으며 나머지는 따로 수용되어 재심사를 받거나 계엄군이나 경찰에 넘겨 저서 심문과 재판을 받았다. 제 2단계 작업은 제 1단계에서 애매하다고 판단된 자, 그 후 고발된 혐의자를 대상으로 행해졌으며 이들은 재심사 혹은 심사를 받아 즉석에서 총살되거나 군경에 이첩되거나 아니면 석방되었다. 이 과정은 수개월간 계속되었다.

순천의 경우 23일 오전 약 5만 명의 읍민이 순천북국민학교 교정에 집결되었다. 먼저 40세 이하의 남자 중 군용팬티를 입은 자, 머리가 짧은 자가 따로 분리되어 경찰, 대동청년단, 학련생 등에 의해 폭동군 및 부역자가 적발되고 그 다음 각 동네별 지방유지, 우익인사에 의해 부역자가 적발되었다. 부역자는 제 1급(인민재판에 적극 참여자) 제 2급(소극적 참여자) 제 3급(애매한 자)로 분류되어 처벌 혹은 재심사를 받았다. 이중 경찰은 악질적이라고 판단한 12명(박창길 검사 포함)을 10월 25일 순천농업중학교 교정에서 총살하였다.

여수의 경우 27일 오후 여수읍민 약 4만 명을 서국민학교와 인근 국민학교에 분산 수용하여 생존경관, 관공서원, 청년단원, 학생연맹원들에 의해 폭동군 및 부역자가 색출되어 일부는 교사 뒷편에서 즉결 총살당하고 백두산 호랑이로 소문난 제 5연대 김종원 대대장이 교정의 버드나무 밑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즉결 참수처분을 하기도 하였다. 혐의자들은 다시 동국민학교, 종화국민학교, 진남관, 공설운동장, 오동도 등에 재분리 되어 심사를 받았으며 그 중 다수는 만성리로 가는 터널 뒷쪽에서 집단 총살되어 그 수효를 헤아리기 힘들었다고 한다.

28일 여수군청에 계엄사령부가 설치되어 본격적인 부역자 색출작업이 시작되었다. 그 방법은 두 가지 었는데 하나는 종산국민학교(중앙국교)로 잡아온 장정들을 닥달하여 자백

을 받아내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시민들의 제보를 받아내는 일이었다. 취조과정은 인간이하의 대접을 하는 잔인한 방법이 사용되었다. 취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생사를 결정하는 불법적인 심사가 진행된 것이다. 개인적인 원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함적인 투서에 의해 좌익 부역자로 몰려 죽임을 당한 사람들도 부지기수였다. 일부의 자료에서는 여수 여자중학교의 송홍교장이 인민위원장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그것은 잘못된 기록이며 송홍은 오히려 우익인사였으나 개인적인 감정을 갖고 있던 인사의 모함에 의해 목숨을 잃은 대표적인 사례였다. 박창길 검사가 사이가 좋지 않던 경찰들에 의해 좌익으로 몰려 죽임을 당한 경우 그리고 황두연 국회의원이 인민재판의 배석판사를 지냈다는 이유로 죽음 일보직전에 구출된 경우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타난 것이었다.

적발된 폭동군은 계엄군에 넘겨져서 주로 대전에서 재판을 받았으며 민간 혐의자는 경찰에 넘겨져서 심문을 받아 일부는 즉결사형을 받기도 했다. 재판은 광주, 여수, 순천 등 현지에서 진행되었으며 총살형은 공개적으로 진행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방식에 의해 무리하게 조직된 가담자들은 정확한 숫자를 알 수 없으나 당시의 신문보도에 의하면 11월 3일부터 11일까지 전남도경에 검거된 가담자는 모두 3539명이었고 그중 여수출신이 3279명이라고 발표되었다. 순천에서 열린 고등군법회의에서 결정한 판결 결과는 총 458명이 재판에 회부되어 190명이 양민으로 판명되어 석방되었고 102명이 사형, 20년 징역이 75명, 5년 징역이 79명, 무죄가 12명이었다.

육군사령부는 1949년 1월 10일 여순사건과 관련하여 군사재판에 회부된 반란군 혐의자의 재판결과를 발표했는데 총 2817명이 재판을 받아서 410명 사형, 568명 종신형, 나머지는 유죄 혹은 석방되었다고 한다.

나. 여순사건의 피해상황

여순사건 때 인명피해나 물질 피해를 정확하게 기록한 자료는 아직 없고, 또 사건 자체가 정확하게 알 수도 없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14연대의 주동세력이 백운산, 지리산으로 도피한 상황이고 관변측 자료와 시민측 자료가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14연대 치하의 인민공화국하에서는 경찰관이 72명, 민간인이 16명이 피살되어 모두 88명이 희생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군의 진압과정은 토벌위주의 강압적인 진압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가 있었다. 해군함정의 무차별한 함포사격으로 인해 그리고 2차 공격 때 무차별한 사격으로 시내의 전건물이 파괴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상당수의 시민이 사망했으리라는 추론은 쉽게 내릴 수 있다. 계엄사령부에서 발표한 여순사건의 피해상황은 다음과 같다.

여수지구의 피해상황

반군에게 피살된 관민	1,200명
중상을 입은 관민	1,150명
소실 파손된 가옥	1,548동
이재민	9,800명

순천지구의 피해상황

사망	1,134명
행방불명	818명
전파가옥	13동

전라남도 보건후생부에서 이재민의 구호자료로 발표된 피해 상황은 다음과 같다.

인 명 피 해					가옥, 재산 피해			
지역	사망	중상	경상	행방불명	소실	전파	반파	피해예상액
여수	1,300	900	350	3,500	1,538		198	37억 3천만원
순천	1,135	103		818	13			1,350만원
보성	80	31	30	7		3	2	200만원
고흥	26	42	8					
광양	57							
구례	30	50	100			38		1,460만원
곡성	6	2				4	6	450만원
계	2,634	1,128	488	4,325	1,550	45	206	37억 6,460만원

다음은 현지를 답사하고 쓴 일선 기자의 글인데 이는 여순반란사건의 참혹성을 어느 정도 짐작하게 해준다.

‘인심 좋은 순천(順天)은 역천(逆天)되고山高水麗하다던 여수(麗水)는 악수(惡水)로 변했지라우, 군인의 거리가 되어버린 듯한 순천을 찾아든 기자는 이런 말을 먼저 들었다. 구명난 유리창은 종이로 발리워졌고 시내에 즐비한 시체는 화장, 매장, 혹은 거리 밖으로 다 처치되었다. 지나가는 완장 찬 학생에게 그 전날의 사태가 어떠하였는가를 물어보았다. 단번에 모른다는 대답이었다. 반만 열어 놓은 한약방을 찾아 인사를 나눈 후 같은 말을 물어보았다. 역시 모른다는 대답이었다. 웅기종기 모여 있는 조무래기들을 보고 한번 더 물어보았다. 서로들 얼굴만 쳐다 볼 뿐 주저주저한다. 너희 집은 별고 없는가 하고 유도 질문을 하여 보았다. 한 아이가 고개를 푹 숙였다. 다시 한 아이는 고개 숙인 아이를 가리키며 아버지가 죽었다고 말한다. 다음 아이는 저집 아저씨도 죽었다고 길 건너 집을 가리킨다. 이 애도 저 애도 연이어 말문을 연다. 저 집 2층에서도 저 길에도 이 옆집에도 죽은 이가 있다고 말한다. 너희 아버지가 순사냐고 물으니 아니라고 말한다. 왜 죽었느냐고 물으니 마루 밑에 숨어 있다가 날아 온 총알에 맞았다고 한다. 다시 발을

웁기어 반란군이 들어왔을 때 처단 받았다는 경관복 입은 시체를 보았다. 남편 시체 옆에서 뉘 앓고 우는 젊은 아내의 목매어 부르짖는 소리는 갈까마귀의 지저귀는 소리와 함께 고막을 무자비하게 두드리는 것이다. 왜 시체가 아직도 남았느냐고 물은 즉 경관이 죽기는 죽었으나 죽은 이는 다른 곳에서 응원 온 이가 더 많아 유가족 오기를 기다려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

2. 여순사건의 정치적 함의

가. 우익세력의 조직화

폭동군이 산악지역으로 잠입하여 유격전을 전개하자 정부는 여순지역에 국한해서 선포했던 계엄령을 1948년 11월 1일을 기해 전남북지역으로 확대 선포하였다. 또 여순지역에서는 폭동군 치하에서 해체되었던 정당, 사회단체들이 재조직되기 시작하였으며, 우익 청년학생단체는 강화 혹은 신설되기까지 했고, 5.10선거를 전후해서 존속했던 향보단과 같은 경찰보조단체는 민보단 혹은 의용단이라는 명칭으로 재조직 강화되었다.

순천의 경우 충무부대가 신설되었다. 이 단체는 순천경찰서 사찰과 산하의 단체로서 학생연맹과 청년단 출신의 대원 총 7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한민당, 대한부인회 등의 지원과 협조하에 폭동군에 대한 정보 입수, 척후 탐지 등을 통해 군경진압부대를 지원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광주의 경우 학련결사대가 조직되었다. 이들은 군정보처와 밀접한 협조하에 광주시내의 좌익학생들의 동향에 대한 정보보고, 광주에까지 잠입한 폭동군에 대한 색출작업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또한 여순지구에 원정하여 좌익학생들에 의해 파괴된 학련동지를 재규합하고 군사령부 직속으로 정보교환, 민애청 등의 좌익학생 색출, 진압군의 후원(의복, 음식제공, 침식제공 등) 등의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여수의 경우 폐허화된 여수재건을 위해 10월 28일 여수부흥기성회라는 민간단체가 조직되었다. 회장에 문균, 부회장에 정재완, 총무부장에 정경수, 재무부장에 박홍근, 선전부장에 장기 등이 중심이 된 이 단체는 주로 군관민의 교량역할을 하였다. 계엄사령부 관계자들의 숙소, 식사 등의 뒷바라지는 물론 시민들의 희생을 줄인다는 목적과, 중앙에 건의하여 복구자금을 타내는 활동을 벌였다. 또한 부흥보라는 기관지를 발행하여 시민사상선도에 앞장섰으며 부역자 색출과정에서 궁지에 빠져있는 우익 지방유지를 구출하기도 하였다.

한편 제 8관구 경찰청장 김병완은 11월 11일 시장, 군수, 중등교장 및 각 정당, 사회단체장과 회의의 석상에서 여순사건의 사후대책을 논의하였는데, 그 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력을 대규모로 증원하여 각 경찰서에는 50명 내지 100명, 각 지서에는 20명 정도의 결사기동대를 설치하고,

둘째, 각 군마다 민보당을 결성 경찰력을 보조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1월 23일 광주에서 1635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의용단 결성을 필두로 12월 중에 전남도내 각군에 의용단이 결성되었다.

이와 같은 우익단체 및 국가통제력의 강화는 전남도내에서 인민위원회 간판이 가장 늦게까지 걸려 있었고 게릴라들의 내습이 가장 빈번했던 지역 중의 하나인 구례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구례에서는 1949년 1월 현대 대동청년단 산하에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성인 남자 1600명의 읍민이 800명씩 격일제로 동원되어 죽창을 들고 군경의 경비업무를 보조하고 있었으며 구례읍 주변의 언덕과 동산에는 경비선이 내외선으로 깔려 있어 그야말로 완전 전시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또 구례군의 모스크바로 불리었던 산동면의 경우 일반 부녀자들로 구성된 부녀죽창부대까지 등장하고 있었다.

나. 여순사건이후의 정세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낸 제주도 43사건과 여수반란사건이 있는 후 좌익은 이제까지의 국지적인 무장투쟁을 남한전역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1949년 7월에는 「남조선 인민유격대」를 조직하고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소위 「7월 공세」와 「9월 공세」라는 대규모 무장유격전을 전개했다. 이러한 무장유격전은 민중봉기를 유도하는 한편 정부병력을 공비준동지역에 고정 배치토록 함으로써 38선 지역의 국군병력이 약화되도록 하려는 목적을 띠고 있었다.

좌익세력은 이상과 같은 무장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동시에 정치투쟁을 전개했다. 총선 이후 그 결과를 부정하고 단독정부수립을 비난하는 집회, 시위, 동맹휴교 등 각종 소요를 주도했던 것이다.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후에도 단정반대를 주장하던 좌익은 1948년 9월 9일 북한공산당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을 공식적으로 (「인공」은 실제로는 남한의 단정수립 이전부터 기능하고 있었다.) 선포하자 「인공지지투쟁」으로 전환되었다. 좌익은 북한의 인공이 한반도 전역으로 통치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또 북한공산정권의 노선을 지지하기 위해 그러한 투쟁으로 전환한 것이다. 좌익의 인공지지투쟁은 인공기 계양투쟁, 인공지지파업, 정치인 포섭 등 여러 형태로 전개되었다.

이와 같은 좌익세력의 이승만정권의 체제전복을 위한 폭력적, 정치적 도전은 역으로 이승만 정권으로 하여금 더욱 극심한 반공주의를 내건 국가로 공고화시켜주는 계기가 되었

다. 이러한 사정 속에서 우익정치인사들로 구성된 국회와 행정부는 반공노선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고 1948년 12월의 국가보안법이 그 구체적 예로서 나타나게 되었다.

다.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을 제언

1998년 국민의 정부가 수립되면서 그동안 잠복해있던 정치적 미완의 문제들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군사정부의 반공정책으로 인한 삼엄한 분위기하에서는 도저히 제기할 수 없는 역사의 소용돌이들이 돌출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발맞추어 해당지역의 국회의원들도 50년 전의 해원을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으며 특별조사단을 구성하여 당시의 상황을 규명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 함평, 영광, 나주지역 등 각 지역들이 독자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보다 바람직한 방향은 지역들간의 연대를 통하여 총체적으로 풀어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그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 노력이 기본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일차적으로 당시를 경험한 분들이 고인이 되기 전에 그들의 생생한 증언을 시급히 수집해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80고령에 접어든 분들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잘 아는 전문가들이 동원되어야 하고 이들의 엄밀한 검증을 통한 증언 채록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제주의 4.3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들은 민간차원의 연구소를 만들어 자체적으로 그동안 많은 자료집을 출간하였고 이를 통해 국제연대활동 뿐만 아니라 국제학술회의까지 수차에 걸쳐 치루었다는 점은 여순지방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광주 전남지방은 다른 지방에 비해 개방적인 분위기가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당시를 체험한 분들의 이야기를 이끌어내기가 좋은 환경이다. 또한 많은 인사들이 생존해 있음을 본인의 경험으로 확인하였다. 이들의 경험을 대중화시켜 역사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면서 이들의 활동을 복원시켜주어야 한다. 언론의 역할은 이러한 분야에 집중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승만정부의 여순사건 대응과 민중의 피해

김 득 중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I. 머리말

1948년 10월 19일 여수 신월동에 주둔했던 제14연대의 반란으로 일어난 여순사건은 전남동부 지역 수개 군에 파급되면서 큰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정부가 수립된 지 2개월 만에 일어났다는 점에서 새로 출발한 이승만 정권의 정통성에 회의를 제기하는 한편 정부의 능력을 시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여순사건은 군과 경찰의 알력이 작용하였기도 했지만 제주 4·3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거부하면서 발발한 것에서도 잘 나타나듯이 분단정권반대, 친일파 척결 등 해방 후부터 쌓인 여러 불만이 폭발된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14연대라는 물리력은 민중이 참여하게 된 밀바탕이 되었지만, 가장 오랫동안 지속된 곳조차 1주일을 넘지 못하였고 수많은 민간인의 희생을 불러오게 되었다.

여순사건은 80년대 중후반 이후 생산된 해방공간에 대한 수많은 연구 성과에 비하면 아직도 미흡하다. 해방이후 현대사를 다루는 개설서에는 빠짐없이 등장하는 여순사건이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연구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 여순사건 연구의 어려움은 신문 등 1차 자료의 부정확성과 편향적으로 쓰여진 2차 기록에 기인한다. 1차 자료인 신문조차 부정확하고 뜬소문을 기사로 내놓은 것이 많다. 이후의 여순사건 서술들도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몇 사람의 증언에 근거하여 쓰여지고 또 이런 서술이 반복 생산되는 과정에서 마치 굳건한 사실인 것처럼 인식된 점이 많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여순사건은 아직도 확인되어야 할 많은 과제를 남기고 있다. 이 논문은 여순사건이 일어났을 때 신생 이승만 정부가 어떻게 대응했는가, 정부의 진압작전에 따른 민중의 피해를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승만 정부는 14연대 반란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즉각 김구세력을 탄압하는데 이용하려 하였고 군대를 지휘하는 정부의 책임을 결코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정부의 이러한 정치적 이해를 앞세운 태도는 계속되는 정부 각료의 사실 은폐와 거짓말 그리고 양민에 대한 강경한 진압작전으로 나타나게 된다.

II. 여순사건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대처

1. ‘혁명의용군사건’을 통한 김구 세력의 견제

여순사건이 정부수립 2달 만에 일어났다는 사실은 이 사건의 성격을 규정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사건을 진압하는 방식 그리고 사후처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1948년 5·10총선거와 제헌헌법 제정을 통하여 수립된 제1공화국은 남한만의 정권수립에 동의하는 이승만과 한민당 세력의 연대로써 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조각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계기로 한민당은 이승만에 등을 돌린 채 야당의 위치를 찾고 있었고, 외군 철수 등을 주장하며 왕성한 활동을 펴나가고 있던 국회 소장과세력 또한 이승만 정부를 계속 곤혹스럽게 하고 있었다. 그러나 제일 큰 우환은 역시 남한단독정권을 반대하며 남북협상을 이끌었고 단독선거를 보이코트한 김구였다. 그는 아직도 대한민국정부를 인정하지 않은 채 제도권 바깥에 머무르고 있었지만, 국민으로부터는 신망을 받고 있었고 국회의원 등 정치인으로부터는 반이승만 세력의 구심점으로 자리 잡으면서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순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있던 정부는 이틀이 지난 21일 오전 11시 이범석 국무총리 발표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이범석은 국군이 일으킨 반란은 “공산주의자가 극우의 정객들과 결탁해서 반국가적 반란을 일으키자는 책동”이며, 그 주모자는 여수 연대장이었던 오동기(吳東起)라고 밝혔다.¹⁾ 오동기는 국내외의 극우 진영의 정객들과 연락을 취하여 러시아 10월 혁명과 비슷한 전국적인 반란을 기도했다는 것이었다. 정부를 떠받치고 있는 핵심 조직인 군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이 사건에 공산주의자뿐만 아니라 “국가, 민족을 표방하는 극우파가 가담”했다는 국무총리의 발표는 일반인을 더욱 놀라게 하였다.

이범석 국무총리는 22일 ‘반란군에 고한다’는 포고문에서도 반란군이 “일부 그릇된 공산주의자와 음모정치가의 모략적 이상물”이 되었다고 언급하였는데,²⁾ 국무총리가 지목한 ‘극우정객’과 ‘음모정치가’가 누구인지는 이 날 각 신문에 일제히 보도된 김태선 수도청장의 혁명의용군사건 발표를 통해 분명해졌다. 김 수도청장은 혁명의용군사건의 주모자가 최능진(崔能鎭), 오동기(吳東起), 서세충(徐世忠), 김진섭(金鎭燮) 등이 남로당과 결탁하여 무력혁명으로 대한민국정부를 전복하려 했다고 발표했다.³⁾ 이들은 ‘김일성 일파와 합작하여 자

1) 서울신문, 1948. 10. 22.

2) 서울신문, 1948. 10. 24.

3) 서울신문, 1948. 10. 23(국사편찬위원회, 1998, 『자료대한민국사』, 821~822쪽).

기들 몇 사람이 숭배하는 정객(政客)을 수령으로 공산정부를 수립하려고 공모'하였다는 것인데 최능진과 오동기는 이미 10월 1일 혁명의용군사건의 주모자 혐의로 8연대 소속의 5명, 민간인 4명과 함께 수도경찰청에 체포되어 있었다.⁴⁾ 정부는 여순사건은 이들 주모자가 체포된 뒤에 나머지 말단 세포분자들이 일으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능진 등이 사건을 일으키기 전에 토의하였다는 구체적인 혁명방법을 보아도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허무맹랑한 것이 많았다. 수사결과 밝혀진 이른바 혁명 세칙의 두 번째 항은 '경무대와 중앙청을 점령하여 각 국무의원을 처치할 것'이었고 세 번째는 '국회를 점령하고 국회에 대하여 자기들이 기도하는 정체(政體)와 정강(政綱)을 결의발표'케 한다는 것이었는데, 행정부와 입법부를 일거에 점령하는 혁명을 일으킨다는 계획은 당시 최능진과 그 주모자들의 규모로 보아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무모한 것이었다.⁵⁾ 또 혁명의용군의 계획에는 중앙방송국과 수도청을 점령하며 남북통일을 위해 혁명을 일으켰다는 호소문을 방송한다는 계획도 들어 있었다. 그러나 남한의 수도 서울에서 400km나 떨어진 남해안 여수반도에서 반란을 일으켜 서울의 주요기관을 나머지 세포분자들이 점거한다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 점이었다.⁶⁾

국회에서든 의문이 제기되었다. 한 의원은 국방장관은 발표에서 이미 20일전에 '극우진영의 반민족적 음모'가 있는 것을 알았다는 했는데, 그 사실을 이틀 전에만 알았다 하더라도 방어할 수가 있을 텐데 20일 전에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로 사전에 방지하지 못했는가를 밝히라고 요구했다.⁷⁾

여순사건의 주모자를 혁명의용군으로 지목한 정부의 주장은 내무부의 국회보고에서 다시 드러났다.⁸⁾ 국군이 여수에 보이지도 않던 10월 21일 여수서를 탈환하고 계속 상륙 중이라는 허위보고 내용이 들어있던 내무부보고는 여순사건의 원인과 배후관계에 대해서는 오동기가 장병을 사주하고 선동하던 중 최능진이 혁명의용군에 관련하여 체포되자 연대내의 과격분자 약 40명이 주동이 되어 사건을 일으킨 것이라고 보고했다. 결론적으로 사건 배후는 '최능진 오동기 등이 수모(首謀)로 된 혁명의용군과 좌익계열의 선동에 관련됨이 확실'하다는 것이 내무부의 입장이었다.

4) Joint Weeka, 1948. 10. 10, p. 185.

5) 한 신문은 혁명의용군사건관련자가 최능진을 비롯하여 현역군인 오동기 등 무려 2천여 명에 달한다고 보도했다(국민신문, 1948. 10. 23).

6) 미군은 여순사건의 발발과 진압을 볼 때, 군대 안에 공산주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대한민국 정부를 협박할 만큼의 충분한 추종자는 얻지 못했다고 평가했다(Joint Weeka, 1948. 10. 31, p.250).

7) 이정래의원 발언, 『국회속기록』제1회 제94호, 752쪽.

8) 『국회속기록』제1회 89호, 649~650쪽.

항간에서는 ‘극우정객’이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10월 29일 대통령기자회견이 열렸을 때, 전남지구 반란사건 배후가 극우진영과 좌익계열의 합작이라는李국무총리의 발표가 어느 정도 사실인가라고 기자들이 질문하자, 이승만은 “이번 반란사건에 있어서 국무총리로부터 일부 극우분자와 좌익계열의 합작이라고 말한 데 대해서는 좌익계열이라고 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일부 극우분자라고 한데 대해서는 국무총리로부터 이에 대한 해명이 있을 줄로 믿는다”라고 말하여 자신이 직접 확인하지 않고 책임을 국무총리로 떠넘기면서도 좌우의 합작을 부정하지 않았다.⁹⁾

최능진에게 죄가 있다면 그것은 선거에서 이승만에 대항한 죄였다. 최능진은 유엔감시하의 정부수립을 방해하고 남북협상이 실패한 후에는 마지막 수단으로 국방경비대를 이용하여 무력혁명을 감행하려한 인물로 발표되었는데, 남북협상 등의 정치적 입장은 당시 김구와 한독당 세력이 취했던 노선이었다. ‘국부 이승만’과 감히 경쟁하려 했던 최능진을 한번 손봐주려 했던 수사는 선거운동원으로 참가했던 군인을 신원 보증했던 오동기로 이어졌고,¹⁰⁾ 여순사건이 오동기가 근무했던 14연대에서 일어나게 되자 뜻하지 않게 무력혁명의 죄까지 뒤집어쓰게 되었던 것이다. ‘극우정객’이란 통일정부수립을 도모하고 남북협상에 참여했던 세력 즉 김구 등의 한독당 세력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한편 극우정객으로 지목된 당사자인 김구는 10월 27일 중앙사 특파원과 회견에서 극우세력이 관련되었다는 정부발표에 대해서 선뜻 부정하였다. 김구는 “나는 극우분자가 금번 반란에 참여했다는 말을 이해할 수 없다. 그들은 극우라는 용어에 관하여 다른 해석을 내리는 자신의 사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자신에 대한 모략선전을 적극 부인하였다.¹¹⁾ 그러면서도 김구는 순진한 청년들이 ‘용서할 수 없는 죄’를 범하였으며 당국발표에 의하면 ‘반도들의 목적은 북한정권을 남한에 연장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하였다. 여순사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인지는 몰라도, 10월 30일 여순사건에 대한 담화에서도 여수·순천 등지의 반란을 ‘집단테러활동’이라고 표현하고 “부녀, 유아까지 참살하였다는 보도를 들을 때에 그 야만적 소행에 몸서리쳐지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였다. 김구는 이 담화에서 국민에게 감정을 억제하고 동족상잔에서 동족상애의 길로 매진할 것을 호소하고 사건이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고 있었지만 여순사건에 대한 인식은 정부가 발표한 맥락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¹²⁾ 국회에서 정광호 의원도 극우가 참가했다는 국방부 발표 때문에 대단

9) 한성일보, 1948. 10. 30.

10) 오동기가 구속된 것은 그가 소개하여 입대한 두 사람이 최능진의 선거운동을 도와줬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오동기는 최능진과 만난 적도 없었다.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67, 『한국전쟁사1:해방과 건군』, 485~486쪽을 참고.

11) 한성일보, 1948. 10. 28.

12) 서울신문, 1948. 10. 31(국사편찬위원회, 1998, 『자료 대한민국사』8, 896쪽). 김구가 자신의 정

히 인심이 나쁘다며, 극우가 참가했다는 발표는 정정 발표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윤치영은 극우가 참가한 것만은 사실이라고 계속 주장할 뿐이었다.¹³⁾

그러면 당시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고 있었으며 여순사건이 일어나던 당시까지도 군을 지휘를 하고 있었던 미군은 여순사건의 주동자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었을까? 미군은 기본적으로 김구의 한독당 세력과 진보적인 소장파세력을 이승만 정권을 위협하는 불안요소로 지목하고 있었다. 분명하게 밝히지는 않았지만 미군은 반란이 김구세력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라거나 김구의 쿠데타 설이 나돈다는 식으로 김구의 혐의를 계속 주목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¹⁴⁾ 이런 기본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미군은 여순사건을 김구세력이 일으켰다고는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주한미군사령관 콜터 소장이 여순사건의 경위에 대한 10월 23일 발표문에는 반란을 일으킨 주동자는 제주도로 떠나기 위해 대기 중이던 장교와 경비대원이라는 언급만을 하여 정부발표와 대조를 이룬다. 대한민국 정부측을 인용하여 말한 대목에서조차 “이번 반란은 반란을 구실로 제주도에 출전하였던 경비대원 중 사상을 달리하는 자들에게 의한 것이고 그 혼란을 신속히 이용하는 민간 공산주의자들의 가담에 기인한 것으로 사태는 곧 진압할 수 있다 한다”고 하여 반란의 주모자를 일부 군인들로 국한시키고 있어 극우정객이나 혁명 의용군 등 정부가 반란의 핵심분자로 지목한 인물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¹⁵⁾

한편 순천이 진압된 뒤인 24일 이곳을 방문하였던 서울주재 미 외교관은 반란지의 실정을 국무성에 보고하였다. 27일 미국무성 맥더모트 대변인은 여순사건에서 남로당이 활동하였다고 발표했다.¹⁶⁾ 이 같은 미국 측의 파악은 당시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던 반란 원인, 주체세력의 내용과는 꽤 큰 차이가 있었다.

또한 당시 언론도 김태선 수도청장의 발표 자체는 크게 보도하였지만 이후에는 반란사건에 우익정치인이 관련됐다는 식으로 보도하지는 않았다. 반란이 일어난 지 8일이 지난 27일 서울신문은 사설에서 ‘북한과 통보하거나 좌익분자의 사주를 받아서’ 반란을 일으킨 병력은 대개 20대의 청소년으로 파악하면서 질서가 회복되고 이들이 속히 귀순할 것을 당부하였지만 반란군을 부추긴 책임이 일부 우익 정치인들에게 있다는 식의 비난은 없었다.¹⁷⁾ 동아일보도 “이번 반란사건은 현정부를 반대하는 좌익분자와 극우분자의 합작”이라

치적 입장을 정리하여 발표한 자유신문, 1948. 11. 1(국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2쪽)도 참고.

13) 『국회속기록』제1회 90호, 678~679쪽.

14) 이에 대해서는 서중석, 1997,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2, 역사비평사, 178~180쪽을 참고.

15) 세계일보, 1948. 10. 24.

16) 조선일보, 1948. 10. 28.

17) 서울신문, 1948. 10. 27.

는 정부측 발표를 인용하였지만 우익 정치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은 채 사설의 실내용에 있어서는 “확실히 이번 전남사태가 일어나게 된 원인은 국련결의를 거부하는 피방 좌익에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러나 이 사태수습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저버릴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여 반란의 주동을 군인으로 파악하고 반란의 구조적 원인과 책임은 이승만 정권에 돌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혁명의용군사건으로 기소된 최능진은 국가전복이라는 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3년 6개월이라는 가벼운 형량을 받았고, 서세충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석방되었다. 하지만 최능진은 김구암살 직후 옥중에서 단식투쟁을 했다는 이유로 2심에서 징역 5년으로 형량이 늘어났다.¹⁸⁾ 오동기는 1948년 10월 1일 구속되어 남로당으로부터 전향한 박일원(수도청 사찰과 정보주임)으로부터 혁명의용군사건의 내용과 배후를 고백하라는 혹독한 고문을 당하였고, 1950년 2월 19일 군법회의에서 검사에게서 무기징역을 구형받았으나 재판에서 10년을 선고받았다.¹⁹⁾

생면부지의 사람이 모여서 국가전복이라는 엄청난, 그러나 실제 내용은 허술하기 짝이 없는 엉성한 계획을 꾸몄다는 혁명의용군 사건은 이후 재판과정에서 무력공산혁명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이 조작되었다는 점을 증명하였다.²⁰⁾ 국방부 기록에서도 오동기가 생면부지인 최능진과 결탁하고 14연대의 김지회와 반란을 음모하기에는 14연대장 시절부터 한국전쟁 동안의 행동거지가 너무나 명백하다고 밝히면서 그가 ‘무고하게 역적의 죄인’이 되었다고 적고 있다.²¹⁾

정부의 입장변화는 김구세력에 대한 공격이 분명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일반여론도 이에 동조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반이승만 정치세력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윤치영 내무장관은 29일 국회본회의에서 ‘의원의 자격’으로 반란사건에 관련된 정보를 비공식으로 발표했다. 윤치영은 28일 오후 기관총 2정을 휴대한 무장 폭도 약 40명이 강화도에 상륙하였고 북측으로 향하는 것 같아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병력 300명이 파견되었다고 말하였다.²²⁾ 또한 서울 시내에서 남로당원이 열아홉 살 아이를 포함해

18) 전쟁이 일어나자 서대문형무소에서 풀려났던 최능진은 1950년 11월 다시 김창룡에게 체포되었다. 1951년 1월 20일 사형을 언고받은 최능진은 2월 11일 경북 달성면 가창리에서 가족들도 전혀 모르는 가운데 총살되었다(안진, 1996, 『미군정기 억압기구 연구』, 새길, 245~269).

1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485~486쪽.

20) 1949년 5월 1심공판에서 미군정법령 19호를 적용, 김진섭 징역3년 6월, 최능진 3년, 서세충 무죄로 판결. 상고심에서는 무력공산혁명 혐의가 없어 정치적 조작의 혐의를 질게 했다. 유건호, 1982, 『여순반란사건』, 『전환기의 내막』, 조선일보사, 163~164쪽.

2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67, 『한국전쟁사1: 해방과 건군』, 488쪽. 청렴한 우익으로 지낸 오동기의 14연대장 시절과 전쟁 직후의 일화에 대해서는 같은 책, 486~488쪽을 참고.

가족 네 사람을 찢어 죽인 사건이 있었으며 동대문 밖에서는 민애청원이 수류탄을 잘못 던져 자신이 죽은 사건이 있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이 사건들은 윤치영 그 자신의 발언 말고는 신문에 다른 소스를 인용하여 보도되지 않았다. 즉 사실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의 발언 중 압권이었던 것은 국회의원들 6, 7명을 3일 간격을 두고 사형 처분하려는 음모가 있다는 사실을 밝힌 것이다. 국회의원과 내무부장관을 겸임하고 있으면서 이승만을 열렬히 추종하던 윤치영은 마치 험악한 사태가 국회의원들에게 곧 닥쳐올 마냥 떠들어대면서 정부의 여순사건 대응방식에 비판적인 국회의원들을 위협했던 것이었다.²²⁾ 국회의원들의 신분이 위험한 상태에 있다면 그것은 국내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내무장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처리해야 할 일이었지만, 윤치영은 그것을 공개된 석상에서 언급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을 협박하고 공포스런 분위기를 연출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우리는 윤치영의 이러한 발언이 국회 내에 있는 어떤 세력을 위협하려는 의도에서 나왔음을 감지할 수 있다. 결국 이승만 정권의 주요한 공격방향이었던 것은 국회에서는 소장파세력이었고 원외에서는 김구 등의 한독당 세력이었다. 정부는 여순사건을 이들 세력을 제거하는 계기로 이용하려고 애를 썼던 것이다.

여순사건이 14연대의 봉기와 이에 따른 지방 좌익세력 참여로 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순사건 직후의 정부 대응은 김구 등 한독당 세력의 정치적 반대세력을 고사시키는 의도를 분명히 보여준 것이었다. 이를 통해 이승만 정권은 혼란스럽게 남아있던 우익 지배층 내부를 재편함으로써 이승만의 의지가 관철될 수 있는 ‘안정적인’ 정치지형을 만들고자 했다. 정부는 여순사건을 정부의 실정에서 비롯된 밑으로부터의 저항이 아니라 일부 우익세력에 의한 쿠데타적 행동으로 국민에게 광고하고, 이를 계기로 삼아 정치세력을 재편하는데 활용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계기는 성공하지 못한 채 이듬해의 김구 암살과 국회프락치사건을 기다려야 했다.

2. 여순사건의 주체로서의 공산세력 설정

김구의 명백한 부인과 일반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자 권력에서 소외된 극우정객과 공산주의자들이 합동으로 반란사건을 일으켰다는 정부의 초기 발표는 민간 공산주의자들의 행동으로 그 범위가 점차 변화하게 된다. 김형원 공보처차장은 일반인들은 여수 14연대가 반

22) 서울신문, 1948. 10. 30.

23) 『국회속기록』제1회 제91호, 686~687쪽.

란을 일으키고 민중이 여기에 호응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사실은 ‘전남현지에 있는 좌익분자들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소련의 10월혁명 기념일을 계기로 일대 혼란을 야기시키려는 음모를 획책하고 그들이 일부 군대를 선동하여 일으킨 것이다’라고 하였다. 공보처차장은 여수에서 사건이 시작될 때 같은 시각에 연락원이 병사로 뛰어 들어와 인민공화국 만세를 큰 소리로 외치었고 또 600명의 군중이 삼시간에 모여 시위를 벌였으며, 반란군이 순천을 점령하자 이미 조직되어 있던 인민위원회가 행동을 개시하였고, 보성에서는 반란군이 점령할 적에 보성 시민들이 환영하여 무혈 진주하였다는 것”에서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반란의 주체는 14연대 장병도 아니고 다른 아닌 민간 좌익들의 조직적인 계획 하에 일어났다는 것이 발표의 요지였다.²⁴⁾ 이 발표는 정부조직인 국군 내부로부터 반란이 처음 일어났다는 점을 애써 외면함으로써 반란의 초기 주체가 국군임을 부정하고 그 책임을 민간인에게 떠넘기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다.

여기서 ‘연락원’이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또한 600명의 군중이 시위를 벌였다는 점도 사실과 다른 점이다. 또한 반란군이 순천, 보성 등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민간인들이 호응한 것은 미리 계획된 봉기였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 여순사건이 확산되면서 일어났던 하나의 특징적인 양상일 따름이었다. 즉 여수가 반란군에 무력으로 점령되고 그 세력이 커지자 인근 지방에서는 반란군이 진입하기도 전에 이미 그 지역에서 지하활동을 벌이고 있던 토착 좌익세력이 기초적인 무장을 한 채 스스로 봉기하여 경찰서 등을 점령하는 일들이 일어나곤 했던 것이다.²⁵⁾

공보처장의 발표는 우익과 공산주의자들의 연합으로 사건이 발생했다는 정부의 초기 발표를 사실상 수정하고 사건의 주체를 민간 공산주의자로, 14연대 군인은 이에 종속되는 지위로 파악한 것이었다. 반란이 일어난 바로 그 여수의 14연대장이었던 박승훈(朴勝勳) 중령도 중앙청 기자단과의 회견에서 여순사건은 ‘적색분자들의 계획적인 행동’이고 반란에 가담한 군인은 일개 대대의 병사 5백 명이었다고 밝혔는데,²⁶⁾ 이는 정부의 입장과 동일한 것이었다.

정부가 여순반란을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으로 선전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불뚝은 북한 공산주의세력으로 번져 나갔다. 극우정치세력의 세계관에서 이 같은 전개는 어찌보면 당연

24) 서울신문, 1948. 10. 29.

25) 황남준, 1987, 「전남지방정치와 여순사건」, 『해방전후사의 인식』3, 448~449쪽.

26) 서울신문, 1948. 10. 29. 박승훈중령은 옷을 갈아입은 후 몇 명의 호위병과 함께 22일밤 목선을 타고 목포로 탈출하였다. 박중령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던 채병덕이나 정일권의 기자회견이 보통 지방 현지에서 이루어진 것에 비해 박중령의 기자회견이 중앙청 기자단과 이루어졌다는 점은 특이하다.

한 것이었음은지도 모르지만, 이에 따른 피해는 여순지역의 민중이 고스란히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 진압군이 순천과 여수를 완전히 점령한 뒤인 11월 3일 국방부는 ‘전국동포에게 고함’이라는 벽보를 각지에 살포하였다. 이 벽보에는 먼저 여순사건을 ‘민족적 양심을 몰각한 공산도당의 조직과 명령을 통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파괴’하는 것이라 비난하는 한편 ‘소련제국주의의 태평양 진출정책을 대항하려는 공산당 괴뢰정권의 음모’라고 규정했다. 이제 여순사건은 반도 남쪽의 한 지방에서 이승만의 실정에 반항하여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지배권을 확대하려는 소련의 대외정책을 한반도에서 수행하는 국제 공산주의운동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²⁷⁾

여순사건의 주체에 대한 규정은 이런 식으로 냉전적 설정으로 이동했다. 이런 뒤바뀐 은 내부 갈등의 책임을 밖의 확인되지 않은 실체에게 떠넘김으로써 지배층의 실정을 은폐하는 효과와 함께 내부 갈등 때문에 폭발한 운동주체의 정당성을 박탈해버리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물론 남한의 지배 정권이 소련-북한 등의 공산주의세력을 적으로 상정하는 것은 당시에 의심할 바 없었다. 따라서 그들에 대한 대응 또한 분명하게 취할 필요가 있었다.

여순사건을 이승만 세력이 실제로 어떻게 인식했건 간에 국민을 향한 이 같은 발표는 이승만 정권에게 분명한 태도를 강요했다. 적을 창조하는 작업은 적에 대한 대응을 동반하게 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두 달이 조금 지난 뒤에 발생한 이 사건의 처리야말로 정부의 통치 능력을 대내외에 보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나 다름없었다. 더욱이 정부를 와해시키기 위해 북쪽에서 끊임없는 준비를 진행 중인 북한과 연계되어 있는 남한의 좌익들이 일으킨 사건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응당 철저한 진압이 필요할 것이었다.

이승만대통령의 11월 4일 담화는 이러한 시각 속에서 나온 강경한 입장 표명이었다. 이 담화에서 이승만은 “모든 지도자 이하로 남녀아동까지라도 일일이 조사해서 불순분자는 다 제거하고 조직을 엄밀히 해서 반역적 사상이 만연되지 못하게 하며 앞으로 어떠한 법령이 후 발표되더라도 전 민중이 절대 복종해서 이런 비행이 다시는 없도록 방위해야 될 것”이라는 말하였다.²⁸⁾ 불순분자 제거를 위해서는 어린아이까지 일일이 조사해야 한다는 강도 높은 표명은 대통령의 직위에서 맞지 않는 고압적이고 격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다.²⁹⁾

27) 평화일보, 1948. 11. 5.

28) 국제신문·수산경제신문, 1948. 11. 5.

29) 이승만은 여순사건이 발생한 지 12년이 지난 1960년 4월 15일, 4월혁명이 있기 며칠 전 다시 여순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격렬해지는 마산시위의 배후에는 공산당이 있는데, 이들이 어린아이들을 선동하고 있다며 “과거 전남 여수에서 공산당이 일어나서 수류탄을 가지고 저희 부모들에게까지 던지는 이런 불상사는 공산당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것”이라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서울신문, 1960. 4. 15. 석간) 여수에서 어린아이가 자기의 부모에게

국회 발언을 통해 국회의원 암살계획이 있다고 위협했던 윤치영 내무부장은 이제 국회차원을 넘어 국민과 전 사회를 향해서 발언하기 시작했다. 11월 8일 윤치영은 북한의 최소한 8개 도시에서 공산지배에 반대하는 광범한 폭동이 1주일 전부터 일어났다고 발표했다. 그는 “평양, 신의주, 원산, 함흥 기타 4개 도시는 폭동에 휩쓸려 들어갔으며 원산의 6천 명의 반도 전부는 학살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였다.³⁰⁾ 폭동이 일어나 원인은 ‘소련지구’의 배고픔, 빈곤, 압박 때문이며 이 폭동은 비조직적이어서 실패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름을 밝히지 않은 정부 각료 중 한 사람은 “폭동은 4일 전에 발생하였으며 19만 명이 이에 참가하였다. 함흥시의 1만 2천 명의 폭도는 북한인민군 기관총 지점을 점령하고 기관총으로 말살하려는 인민군의 기도를 물리친 다음 시를 돌격 점령하였다”라고 하여 윤치영이 밝힌 것보다 더 큰 규모의 폭동이 일어났음을 시사했다.

남한의 남안(南岸)에서 군 반란이 터진지 며칠 안 된 이즈음 북한에서 폭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은 빅 뉴스였다.³¹⁾ 더욱이 소련군 철군이 있을 즈음에 19만 명의 인민이 폭동을 일으켰다면 여수순천의 전 인구를 합한 것보다도 많은 대단한 규모였고, 평양의 8개 도시라면 북한의 주요도시는 거의 포함된 셈이었다. 윤치영은 북한 지역의 폭동을 남한지역에서 발생한 반란과 연관시켰다. 즉 윤치영은 청진·함흥·원산·해주·평양 등지로 확대되어 가는 북한의 대소동은 순천·여수 반란사건으로 인한 남한 공산화를 우려한 민중들이 각지에서 호응하여 일으킨 것이라고 원망(願望)을 섞어 자의적으로 해석했다.³²⁾ 윤치영은 이 보도의 출처를 말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정보를 독점하였지만,³³⁾ 더욱 더 중요한 문제는 북한에서는 이러한 폭동이 일어난 사실이 없다는 점이다. 이 시기 북한에서는 어떠한 폭동이 발생하지 않았다. 사실상 북한에서는 아무런 상황도 발생하지 않은 채 조용하게 시간은 지나가고 있었다.

수류탄을 던졌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이승만의 이때 담화가 처음(?)인데, 이렇게 이승만은 자기 입맛에 맞게 역사를 창조했다.

30) 경향신문, 1948. 11. 10.

31) 북한폭동에 관한 기사는 AP-함동 발과 고려-중앙발 두 기사로 공급되었다. 남한의 거의 모든 일간지는 일제히 1면 또는 사회면을 통해 이 두 가지 기사를 크게 보도하였다. 서울신문·한성일보·민주일보·독립신문·평화일보·대한일보, 1948. 11. 10; 호남신문·동광신문, 1948. 11. 11.

32) 이에 대해 한독당은 “이 사건에 대하여 아직 무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런 사건은 발발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덧붙이기를 “우리 한독당의 당세는 남한보다 북한에서 더 강력하다는 것만은 밝힐 수 있다”라고 하여 암시적으로 북한에서의 폭동을 한독당의 위세와 관련시켜 해석하기를 요구했다. 조민당 선전부장도 “이런 사건이 있음직도 하고 앞으로 계속하여 발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여 정부 발표를 인정하는 태도를 취했다. 경향신문, 1948. 11. 10.

33) 그러면서도 윤치영은 북한 폭동은 ‘근거 있는 사실’이라고 계속 강조했다(경향신문, 1948. 11. 10).

그럼에도 11일 공보처는 북한 폭동설을 다시 한번 주장했다. 그러나 이 발표에서는 북한의 8개 도시 폭동은 전혀 언급도 되지 않은 채 단지 청진에서 폭동이 일어났다는 말을 김관영이라는 사람이 ‘들었다’고만 발표되었다.³⁴⁾ 북한 폭동설의 진위에 대한 의심은 처음 보도 때부터 흘러나왔다. 윤치영 발표를 보도하면서 통신사는 ‘다른 소식통으로부터 확인을 할 수 없다’거나 ‘월남민은 이에 관해 아무 것도 모른다’는 식으로 언급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는 단편적 지적이었을 뿐이었다. 그러던 중 38선 경계를 책임지고 있어 이북으로부터의 소식을 민감하게 점검하고 있던 제1관구 경찰청의 사찰과는 10일 ‘이북폭동에 대하여 하등의 정보가 입수되지 않았다’고 하여 사실상 윤치영의 발표를 부정했다.³⁵⁾

미군도 내부의 정보보고서에서 윤치영의 발표 내용은 확인되지 않은 것이라며, 그의 발표는 이전에 작성된 미국의 북한정보 보고서와 같은 내용일 것이라고 추측했다.³⁶⁾ 2주 전 작성된 미군보고서는 북한에서 발생한 10여명 학생들의 체포 소식과 10월 19일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참가한 폭동소식 두 건을 전하고 있었다. 미군은 이런 종류의 보고가 최근 11건이 접수됐지만 북한에 조직된 저항이 있다는 것은 의심스럽고 북한인들이 잠재적으로 적대적일지라도 감옥으로 가게 되거나 노예노동 같은 이송 그리고 식량배급증 박탈이 두려워 자제하고 있다고 논평했다.³⁷⁾

최소 8개 도시, 6천명 사망이라는 윤치영의 북한 폭동설 발표는 내무부장관으로서 엄청난 거짓말을 한 셈이었다. 윤치영의 이와 같은 허황된 발표에 대해 미군은 ‘남한에서 광범한 폭동이 일어났다는 북한 주장에 대한 보복수단’이라고 평가했지만, 실제 이 발표의 수신인은 북한이 아니라 남한 민중이었다. 즉 윤치영은 남한의 여순사건이 가져올 신생정부의 위약성과 정통성 부재를 외부의 북한정권에 대항한 더 큰 규모의 반란에 관심을 돌리게 함으로써 문제를 회피하려 했던 것이다. 북한에서 공산정권과 소련군의 학정에 반대하는 수만 명의 봉기가 일어나는 판에 남한에서 공산주의적 색채를 띤 반란은 용납될 수 없다는 근거도 이 발표는 제공하고 있었다.

34) 대동신문, 1948. 11. 12. 이 발표를 통해 한국정부가 어떻게 북한폭동설을 입수했는지 밝혀졌다. 이 소식을 알린 사람은 평북 의주군에 거주하는 김관영인데, 그는 11월 1일 신의주를 출발하여 원산을 거쳐 5일에 서울로 왔다는 것이었다. 그의 경로나 처지로 볼 때 그 정보는 대단히 신뢰하기 어려웠다. 실제로 공보처 발표문에서도 주요한 내용은 북한 폭동이 아니었다. 이미 그것은 쏙 빠져 버린 채, 소련군의 철군이 민중생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이 나열되었다. 이 발표를 통해 정부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남북을 대조하면 북은 강제적으로 형성이나마 질서가 잡히고, 남은 한계 없는 자유로 국가를 좀먹는 도배(徒輩)가 없지 않은 것은 비통한 일이다.”라는 발표문 마지막 부분에 있었다.

35) 세계일보, 1948. 11. 12.

36) Hq. USAFIK, Intelligence Summary North Korea, #165, p.30.

37) Hq. USAFIK, Intelligence Summary North Korea, #163, p.33. 미군은 이 두 가지 정보에 대해서 F-6, F-4라는 낮은 등급의 신빙성을 부여했다.

비록 정보에 대한 사실 파악은 달랐을지언정 북한의 침략성을 강조하는 것을 통해 내부 갈등을 봉합하고 적을 단일화시키는 전략은 미국 측의 한국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과 동일한 것이라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주한특별대표부 무초는 국무장관에게 보내는 11월 19일자 전문에서 콜터 장군과 무초 자신은 한국의 대통령, 국무총리, 내무장관에게 “오늘날 가장 필요한 것은 냉정한 자신감과 정부 내외의 비공산주의자들에게 공산주의자들이야말로 진짜 적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던 것이다.³⁸⁾

3. 정부와 국회의 대립

이승만 정부가 발표했던 여순사건의 주체는 맨 처음에는 ① 우익과 공산주의자의 연합이라는 초기 발표에서 ② 민간인 공산주의자가 주동이 되고 군인 일부가 일으킨 것으로 변화되었고 마지막에는 북한으로 그 화살을 돌려 ③ 소련-북한-남한의 공산주의자들로 이동했다. 초기에 김구세력을 공격하려는 시도가 실패로 끝나자 공산주의자들로 그 방향을 바꾸었던 것이지만 정부책임을 회피하려 한 점은 정부의 일관된 의도였다고 볼 수 있다. 신생정부의 근간인 군 내부에서 반란이 터져 나왔다는 것은 정부의 통치력에 결정적 흠이 될 수 있었다. 또한 반란에 민간인까지 가담했다는 것은 반란에 대한 민간인의 광범한 지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한편으로는 이승만 정부의 실정을 의미했다.³⁹⁾ 따라서 이승만 정부는 유엔의 한국승인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지 못한 허약한 정부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고 이를 은폐시키려는 시도가 필요했던 것이다. 10월 23일 공보처장은 22일에 여수와 순천이 탈환되었다고 거짓으로 발표하였고 대통령 또한 여수가 진정되었다고 기자회견에서 말하였다.⁴⁰⁾

정부는 여순사건의 원인을 정확히 알리지 않고 계속 이를 감추려 하였다. 여순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는 경찰의 학정이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⁴¹⁾ 여수 14연대는 경찰의 이러한 약점을 무기삼아 14연대의 일반 장병을 선동했고 많은 병사들이 이에 동조했다. 당시 군인들이 갖고 있던 반경 감정은 초기에 14연대가 봉기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

38) FRUS 1948, pp.1332~1333.

39) 여순사건은 발생에 대해 서울 AP특파원은 “이 반란사건은 지난 8월 15일에 겨우 수립된 대한민국에 대한 최초의 큰 시련이었다.”라고 논평하였고 미국의 포스트지는 “이승만 박사의 정부가 반란에 대하여 확고한 태도로서 처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즉 안전과 독립을 요구하는 대한정부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그리고 동 반란사건은 한국문제가 토의를 기다리고 있는 유엔총회의 행동에 필경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라고 보도했다(경향신문, 1948. 11. 3).

40) 동광신문, 1948. 10. 24.

41) 이에 대해서는 김계유, 1991, 『여순봉기』, 『역사비평』 겨울호, 256~257쪽.

이다.⁴²⁾ 그러나 정부는 경찰의 반민중적 행태나 군경간의 마찰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김동성 공보처장은 11월 13일 항간에서는 군대와 경찰의 알력이 심하여 가끔 충돌이 있는 듯이 말하고 있으나 이는 군경을 중상하는 낭설이며 사실과는 먼 이야기라고 말하였다.⁴³⁾ 권력과 무력을 갖고 있는 경찰이 욕을 먹는 것은 당연하다고 인식한 공보처장은 사건의 와중에서 경찰의 희생이 많았기 때문에 경찰에 많은 성원과 원조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순사건에서 왜 수많은 경찰이 무참하게 죽어야 했는지에 대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현지의 순천서장이 “경찰은 언제나 민중과 적대관계에 있는 것이다. 예수나 공자님이 경관이 되더라도 별수 없는 것이다”라고까지 말하면서 한국경찰이 처한 어려운 처지를 실토했지만⁴⁴⁾ 정부는 친일적 경찰이라는 오명을 벗기고 민주적으로 경찰을 개조하기보다는 오히려 경찰 병력의 증강에만 골몰하고 있었다. 경찰을 책임지고 있는 윤치영 내무부 장관은 국회에 나와 “나는 당장 내일부터 다량의 우량 경찰관을 뽑고 적극 여기에 대비하려고 합니다. 조금도 의심할 것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영장교부도 경찰에서 해야 할 것이라고 과감하게 주장했다.⁴⁵⁾ 1948년 11월 현재 경찰관 총수는 약 3만 5천명이었다. 여순사건 뒤 내무부 치안국에서는 경찰관 대모집을 하기로 하였는데, 중앙에서만 약 1만 5천 명을 모집하고 각 관구청에서도 상당수의 경찰관을 신규 채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⁴⁶⁾ 미군정기부터 남한은 ‘경찰국가’라는 지적을 받아왔지만,⁴⁷⁾ 이승만 정권은 경찰을 자신의 물리적 배경을 삼아 4월혁명으로 정권이 몰락하기 직전까지 이를 이용하였다.

정부 책임에 대한 본격적인 추궁은 정부에 대해 가장 비판적 세력으로 존재했던 국회에서 터져 나왔다. 여순사건이 발발하자 10월 30일 국회에서는 20명의 의원들로 ‘시국수습

42) 종군기자들과 함께 현지로 내려가는 도중 국방부 인사국장 강영훈중령은 기자와의 대화에서 군이 반란을 일으킨 이유는 국군 병사들이 행정관리나 경찰의 부패를 보면서 완전히 목표를 잃어버린 것에 있고, 수입 부족을 비행으로서 보충하는 경관들은 묵묵히 일하고 있는 국군 병사를 경멸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군병사들도 반경찰 감정이 있지만 이는 사상적인 것이라거나 불순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강영훈은 제주사태 진압이 어려운 것은 경찰의 비행 때문이라고 경찰의 부패를 지적하자, 최천은 오히려 국군의 무분별한 모병을 비난하면서 빨갱이가 아니고는 경찰을 공격할 수 없다며 ‘국군의 8할이 의심스럽다’고 흥분했다(설국환, 『반란지구 답사기』, 『신천지』 1948. 11월호).

43) 대동신문, 1948. 11. 14.

44) 민주일보, 1948. 11. 12.

45) 『국회속기록』 제1회 제90호, 677쪽.

46) 국제신문, 1948. 11. 12.

47) 메논, 『국제연합임시조선위원단 의장으로서의 소총회에서의 성명』, 모윤숙(편집), 1948, 『메논박사 연설집』, 서울문화당, 56쪽.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위원회는 결의안을 11월 5일 국회 본회의에 제출하였다. 총8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결의안은 이재민을 위해 위문품을 모금하고 양곡매입은 신중히 하라는 건의와 함께 7항으로는 '각 애국정당 사회단체 연합회의를 개최하여 시국수습에 관한 국론을 통일케 할 것'과 8항으로 '정부는 금번 사건에 책임을 지고 거국적 강력 내각을 조직하여 민심을 일신케 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두 항목은 군 반란으로 일어난 여순사건의 책임을 정부에 묻고 있었을 뿐 아니라 정부수립 후 쌓여온 정치적 과실에 대한 책임도 추궁하기 위한 것이었다.

건의안의 내용들 대부분은 평이한 내용들로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었으나, 정부는 제8항을 문제로 삼았다. 이날 이승만대통령은 중앙청 기자회견에서 정당이나 언론 기관들이 도각(倒閣) 운운하는 것은 국법 위반이므로 '이 나라에서는 부지 못하게 될 것'이고 '상스러운 언행'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⁴⁸⁾ 또한 김구의 한독당과 소장파의원들을 겨냥하여 현정부가 통일정부가 아니라는 주장은 '반정부행위'라고 경고했다.

시국 수습안 토의에서 조현영 의원은 정부가 약체인가 강력인가 하는 것은 국민이 지지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점으로 판정된다고 하면서, 현정부는 민족반역행위자에게 정권을 갖게 하는 한편 친일반역자 처벌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공산당 앞잡이, 민족분열을 일으키는 악질도배로 몰아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국 수습안의 목적은 민중이 신뢰할 수 있는 정부, 정부와 국회 그리고 전국민이 혼연일치가 될 방법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결코 대외적으로 정부를 불신임한다든지 탄압한다든지 공격을 한다든지 도각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민중의 요구를 반영시켜 대통령과 정부 당국자에게 선처를 요망하는 것이 이 제안의 정신이라고 주장했다.⁴⁹⁾

이러한 제안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은 의원들의 내각 '개조'요구를 국회의 정부에 대한 '탄압'으로 이해하면서 개각요구를 거부했다. 이승만은 지금 유엔에서 대한민국 승인을 기다리고 미군으로부터 정권이양을 받는 이때 소련주장에 동조하면 안되며, 정부당국이 아무리 무력하고 무능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월 8일 열린 국회는 출석의원 145인 중에 가 86표, 부 24표, 기권 35표로 결의안 가운데 제8항을 통과시켰다. 국회 토론에서 이재형 의원은 내각개조의 구체적 방향은 정부가

48) 국제신문, 1948. 11. 6.

49) 『국회속기록』 제1회 제97호, 797~802쪽. 그는 여순사건에 민중이 참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폭발물에 불을 대는 것은 공산주의자이지만 폭발되도록 하는 요소는 민중의 불만과 불평이며, 하늘에 번개가 치면 피뢰침으로 막는 방법이 있고, 주전자에 구멍을 내면 불을 때더라도 터지지 않는다며 정부가 중대한 실책을 범했다고 주장하였다.

민중으로부터 이탈된 경찰을 조속히 개선하는 성의를 보이는 것이라고 촉구했다.⁵⁰⁾ 소장파 노일환(盧鎰煥)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은 민주주의적으로 제정되었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반 민주주의적이고 가장 악독한 파쇼의 영향을 받고 있다며, 최근 대한제국 광무 11년 법까지 동원하여 언론을 탄압하기 시작한 것은 그 예라고 하였다. 또한 정부는 민주주의적 방법으로 여순사건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탄압정책을 노골적으로 펴나가고 있으며, 민중의 독재정치에 반대하는 민주주의적 방향을 경찰독재로써 억누르는 반민주적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비판하고 수습안은 민주주의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유엔의 한국정부 승인을 핑계로 국회의 비판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엔이 전 민중을 탄압하는 비민주주의적 정부와 그 전제 밑에서 잠자고 있는 국회가 있는 대한민국을 승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금이야말로 민주주의적으로 정부를 개조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역설했다.⁵¹⁾

이와 같은 지적은 일반 여론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었다. 한 신문은 여순사건 처리에 중요한 것은 친일 잔재 차단과 민심 수습이라고 하면서, 국군을 신중하게 편성하는 한편 경찰을 비롯한 각 관공리의 재정리와 또한 그 등용에 있어서의 인사를 현명히 하여야만 민중이 위정당국을 신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반 민심을 안도시키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악질적인 친일잔재를 완전히 소탕하고 양심적이고 애국적인 인물을 많이 등용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지적하여 여순사건 수습의 핵심을 짚고 있었다.⁵²⁾

이승만대통령은 제8항이 통과된 이날 즉각 도각은 이적 행위이며 정부는 반란에 책임 없다는 담화를 발표한 뒤,⁵³⁾ 10일에는 서울 중앙방송국 마이크를 통하여 ‘정부를 옹호하자’는 장문의 담화를 발표하였다.⁵⁴⁾ 그는 먼저 우익정치인들을 소련과 같은 목표를 갖고 있다고 비난했다.

‘...우리가 가장 신뢰하던 애국단체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여 소련의 목적을 이루어 주고 우리를 해하려는 분자들로 하여금 승리를 얻게 하려는 공작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함은 누구나 경악치 않을 수 없는 바입니다. 소위 우익진영이라는 단체에서는 종종 남북통일이라는 미명하에서 소련의 계획을 절대 지지하며 총선 거도 반대하고 미국정부도 인증하지 아니하여 유엔에 글을 보내서 소련계획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 (외군철퇴안)이 실령 이 뜻대로 진행되어서 미군이 다 철퇴하고 이북 공산군이 남한으로 내려온

50) 『국회속기록』 제1회 제98호, 815~817쪽.

51) 『국회속기록』 제1회 제98호, 821~822쪽.

52) 한성일보 1948. 11. 5.

53) 국제신문, 1948. 11. 9.

54) 동아일보, 1948. 11. 12.

다면 국회의원들이 민족의 생명과 치안을 보호할 방법은 무엇인가. 민족의 생명은 어찌되었던지 공산군이 내려오기만 원하는 것인가. 이런 안전을 제출하는 이들은 필경 무슨 내용이 있어서 하는 것이겠지만 뒤를 따르는 의원들은 무슨 의도로 이와 같이 하였는지 우리는 좀 알고 싶어 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이 이승만은 국회가 행정부를 시비하고 공산분자들의 반란에 대해 정부에 책임을 묻는 것은 공산분자를 돕는 것이라고 이해하면서 ‘밖에서 공산당이 치고 안에서 국회가 쳐서’ 안팎으로 국가운영이 위태롭게 되었다고 비난했다. 그리고 일부 국회의원들의 계획은 이후 대통령에 대해 불신임안을 제출하고 정부 파괴를 통해서 이것저것을 마음대로 해보자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런 내용을 안다면 수습안에 찬성표를 던질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승만의 언급에서 우리의 주의를 끄는 것은 이승만이 국회의 개각요구를 ‘도각’으로 이해했다는 점이다. 이승만에게서는 국회를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았고 의원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국회가 정부 각료들을 불러 많은 질문으로 장시간을 허비한다거나 몇몇 사람의 연설에 이용되어 나라를 해롭게 하였다고 지적한 것이다.⁵⁵⁾

이승만대통령은 여순사건은 공산당이 일으킨 반란인데 정부가 책임지라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공산당의 죄를 정부에 씌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순사건 발발 이래 정부는 한 번도 국군이 일으킨 반란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사과하거나 반성한 적이 없었다. 정부는 여순사건을 공산주의자의 난동으로 몰면서 시민, 학생까지도 이에 포함시켜 자신들의 잔인한 진압작전을 정당화했던 것이다.

공보처장 또한 정부가 반란사건을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담화를 발표했다. 9일 공보처장은 국군이 반란을 먼저 일으켰다는 사실을 의식하였던지 국회가 국군조직법을 아직 처리하지 않은 만큼 정부가 책임질 수 없다고 하였다.⁵⁶⁾ 하지만 아직 국군조직법이 만들어지지 않았더라도 통수권이 대통령에게 있는 군대는 존재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가장 상위의 조직 책임자인 대통령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강변하고 오히려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국회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 책임을 미루는 인상을 주었다. 공보처장은 유엔총회에 우리의 문제가 상정되기까지는 여하한 정치행동이든지 용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4. 정부의 계엄령 발포 문제

여순지역에 계엄령이 선포되었다는 사실이 처음 알려진 것은 육군참모장 정일권 대령

55) 국제신문, 1948. 11. 9.

56) 독립신문, 1948. 11. 11.

의 10월 26일 국방부 출입기자단과의 회견에서였다. 정일권은 “금번 폭동지구에 실시된 계엄령은 작전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 처리를 적절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간략하게 발표하였다.⁵⁷⁾ 여순지역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계엄령이 과연 언제 내려진 것이며, 계엄령이 내려지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이 취해지는지 등에 대한 보도는 전혀 없었다.

계엄령은 순천에 대한 작전이 이루어지고 있던 10월 22일 현지사령관에 의해 처음 내려졌다.⁵⁸⁾ 계엄선포문에는 ‘본관에게 부여된 권한’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과연 누가 이 권한을 부여한 것인지, 어떤 근거에서 부여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은 채, 반도를 은닉하거나 밀통하는 자에게는 사형에 처한다는 강도 높은 조치를 포함하고 있었다. 중앙정부가 내린 것도 아니고 현지사령관의 판단으로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이 계엄령은 아무런 법적인 근거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⁵⁹⁾

57) 자유신문, 1948. 10. 27.

58) 계엄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엄령 선포

본관에게 부여된 권한에 의하여 10월 22일부터 별명(別命)시까지 좌기(左記)와 여(如)히 계엄령을 선포함. 만일 차(此)에 위반하는 자는 군법에 의하여 사형 기타에 처함.

기(記)

1. 오후 7시부터 익조(翌朝) 7시까지 일절 통행을 금함(통행증을 소지한 자는 차한(此限)에 부재(不在)함).
2. 옥내 외의 일절 집회를 금함.
3. 유언비어를 조출(造出)하여 민중을 선동하는 자는 엄벌에 처함.
4. 반도의 소재를 알 시(時) 본 여단사령부에 보고하여 만일 반도를 은닉하거나 반도와 밀통하는 자는 사형에 처함.
5. 반도의 무기 기타 일절 군수품은 본 사령부에 반납할 것. 만일 은닉하거나 비장(秘藏)하는 자는 사형에 처함.

제5여단 사령부 여단장 육군대령 김백일(사사키 하루다카, 1977, 『한국전 비사』 제1권, 병학사, 354쪽). 당시 계엄사령관은 송호성이었는데도, 계엄령을 김백일 제5여단장이 선포한 점은 당시 계엄령선포의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준다. 한편 사사키 하루다카, 위의 책, 354쪽 ; 대한민국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67, 『한국전쟁사1:해방과 건군』, 460쪽 ; 육군본부 전사감실, 1954, 『공비토벌사』, 부록1쪽 등에는 이 계엄령선포문이 10월 22일 이승만대통령이 선포한 것으로 잘못 적혀있다. 김석학·임종명, 1975, 『광복 30년』 제2(여순반란편)권, 전남일보사, 168쪽에는 10월 22일 오전 내무부, 국방부 관계자와 서울에 있던 국회의원들의 연석회의에서 계엄령을 선포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를 이대통령에게 요청하여 22일 정오 계엄이 선포됐다고 나와 있으나, 이 또한 사실 파악의 오해이다. 최윤동의원의 국회보고에 의하면 22일 비공식적으로 위원장실에 모인 수 십명의 의원들은 국회를 급히 소집하고 내무, 국방위원들은 항시 대기하라는 의장의 말을 들은 다음 사태를 파악하기 위해 내무부, 국방부 보고를 듣기로 결론을 내렸다 한다. 황희찬 내무부차관과 채병덕 국방부 참모장의 보고를 들은 것은 23일 이었다(『국회속기록』 제1회 제89차, 643쪽).

59) 이승만대통령은 10월 22일 “계엄령을 내렸다고 외국에서 전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사령관이 내린 것은 해당지구에만 내린 것이다”라고 하여 계엄선포 사실을 확인했다(경향신문·동광신문, 1948. 10. 23).

한 기록에 의하면 계엄령은 4연대장 부연대장 박기병 소령이 군과 경찰에 의한 이원적 작전 혼란을 해소하고 작전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정일권 참모부장에게 건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⁶⁰⁾ 황남준은 순천에 대한 초기진압작전이 큰 성과가 없고 오히려 병력 붕괴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어서, 이에 따라 22일 여순지구에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⁶¹⁾

순천을 국군이 완전히 점령하고 여수에 대한 공격이 감행되기 시작한 10월 25일, 계엄령은 ‘국무회의’ 결의를 통해 공포됐다.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 제13호로 발표된 계엄령은 “여수군 및 순천군에서 발생한 군민 일부의 반란을 진정하기 위하여 동 지구를 합위지경(合圍地境)으로 정하고 본령 공포일로부터 계엄을 시행할 것을 선포한다”고 밝혔다.⁶²⁾ 이 ‘계엄선포에 관한 건’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국방장관 겸임) 그리고 11명의 장관들이 참가한 국무회의를 통해서 결정되었다. 계엄령이 통과된 후 호남방면사령관은 26일자로 여수·순천지구에 임시계엄을 선포했다. 이 선포문은 군사에 관계있는 행정·사법사무는 계엄사령관이 담당한다고 명시하였다.⁶³⁾

그러나 당시는 계엄법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였다. 계엄법이 아직 제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국무회의가 이를 ‘제정’하고 ‘의결’했던 것이다. 국무위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는 있지만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따라서 관보의 문구로 본다면 계엄령은 명백한 헌법위반이었다.⁶⁴⁾ 국무회의가 여순지구에 대한 계엄령 발표 한 뒤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계엄령에 대해 추가적인 조치가 취해진 적은 없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해 발표 한 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계엄령은 5일 뒤인 11월 1일에는 호남방면사령관 원용덕에 의해 여순지역에서 전남북으로 확대되었다.⁶⁵⁾ 계엄령 확대조치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도 아니

60) 김석학·임종명, 1975, 『광복 30년』 제2권(여순반란편), 전남일보사, 137쪽.

61) 황남준, 1987, 「전남지방정치와 여순사건」, 『해방전후사의 인식』3, 452쪽. 그러나 이 같은 점은 계엄령선포의 이유가 되기에는 미흡하다. 계엄령선포를 통해 작전의 용이함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군 전력의 강화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계엄령은 군 작전의 용이함과 함께 점령 이후 수습조치에 대비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62) 관보 제10호, 1948. 10. 25. 여수순천지구 계엄령은 3개월 10일이 지난 1949년 2월 5일 대통령령 제51호로 해지되었다.

63) 계엄포고문은 다음과 같다. “계엄고시 대통령령으로 단기 4281년 10월 25일 순천, 여수지구에 임시 계엄이 선포되고 따라서 해작전지구 일대내 지방행정사무 및 사법사무로서 군사에 관계있는 사항은 직접 본관이 관장하며 특히 군사에 관계있는 범죄를 범한 자는 군민을 막론하고 군법에 준거하여 엄벌에 처할 것을 이에 고시함. 4281년 10월 26일 대한민국 호남방면 군사령관“(동광신문, 1948. 10. 28).

64) 한편 여순지구에 내려진 계엄령 문구에는 계엄사령관이 누구인지도 분명하게 적시하지 않고 있었다. 11월 17일 대통령령 31호로 공포된 ‘제주도지구 계엄선포에 관한 건’에는 “계엄사령관은 제주도 주둔 육군 제9연대장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65) 동광신문, 1948. 11. 5. “포고문.

었는데, 이러한 사실조차도 즉각 보도되지 않다가 10여 일이 지난 11월 13일에야 신문에 보도됐다. 전라북도지역으로 계엄령 확대로 전남 이리읍은 10일 경부터 국군의 삼엄한 배치 아래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되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군은 이 조치가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미연 방지책”이라고 해명했지만⁶⁶⁾ 계엄령의 확대는 일반국민의 불안감을 더욱 더 확대시키고 있었다.

이와는 별도로 14연대 잔여병력이 지리산방면으로 이동하여 전투가 발생하자 남원지구 사령관은 11월 1일 0시를 기해 남원지구에 계엄령을 발포하였고,⁶⁷⁾ 호남방면 작전군사령관은 11월 5일 전라남북도 지역에 통신제한 계엄령을 별도로 발포하였다가 6일이 지난 11일 상오 8시에 해제하였다.⁶⁸⁾ 이같이 계엄령은 특정한 지역에 대해서 내려진 것도 있었고, 통신분야 같은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발포되기도 하였다. 이는 지역 군사령관의 필요에 따라서 계엄령이 취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었다.

여순지역에 계엄령이 발포되었지만, 일제시대에 적용된 계엄령은 조선에서 한 번도 실제로 발포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작전을 수행하는 군 관계인물까지도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였다.⁶⁹⁾ 이런 상황을 의식해서인

-
1. 전라남북도는 계엄지구이므로 사법 급 행정 일반은 본 호남방면 군사령관이 독할 함.
 1. 관경민은 좌기 사항을 철저히 준수 이행할 것을 명령함.
 - 1) 관공리는 직무에 충실할 것
 - 2) 야간 통행시 제한은 20:00시부터 5:00시로 함
 - 3) 각 시군동리에서는 국군주둔시 혹은 반도 번거 접근지역에서는 항상 대한민국기를 게양할 것
 - 4) 대한민국기를 제식대로 작성하여 게양하며 불규남루(不規襠襖)한 국기를 게양하는 경우에는 국가민족에 대한 충성이 부족하다고 인정함
 - 5) 반란분자 혹은 선동자는 즉시 근방 관서에 고발할 것
 - 6) 폭도 혹은 폭도가 지출한 무기, 물기, 금전 등을 은닉 우(又)는 허위 보고치 말 것
 - 7) 군사행동을 추호라도 방해하지 말 것
 - 이상 제항에 위반하는 자는 군율에 의하여 총살에 즉결함
 - 단기 4281년 11월 1일 호남방면 사령관 원용덕(元容德)”

66) 자유신문·경향신문, 1948. 11. 13.

67) 평화일보, 1948. 11. 3.

68) 서울신문, 1948. 11. 14·17. 11월 5일 내려진 통신기관제한 계엄령의 내용은 “1. 위체(爲替)를 제외하고 일반우편물 취급을 금지함. 2. 군용, 전신, 전화(경찰용 포함) 이외의 통신을 금지함. 3. 경비전화관계 군용의 공용전화 이외의 통신을 금지함. 4. 차 경우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군법에 의하여 엄벌에 처함. 5. 차 명령은 전달완료시부터 유효함. 단 작전사령부의 허가있는 경우에는 차한에 부재함”이었다. 이 내용은 11일 목포우편국에서 시외전신전화 기타 일반우편물 등의 사무를 종전과 같이 취급함에 따라 해제 조치되었었다.

69) 계엄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는 구체적인 지침도 내릴 수 없었다. 제주도에서 계엄령을 발포하려 했을 때, 계엄사령관 자격을 갖고 있었던 송요찬 제9연대장은 “위에서 계엄령을 내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거냐”고 물었다고 한다(제민일보 4·3취재반, 1998, 『4·3은 말한다』5, 전예원. 389쪽). 더욱이 여순지구 계엄령이 제주지역보다 더 먼저 발포되었다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여순지구 계엄령에 대한 자세한 법적 규정은 진압군 측

지 계엄령선포 후 한 신문은 계엄령에 대한 일반의 인식을 촉진하기 위해서라며 계엄령을 소개하였는데, 그 내용은 일제시기 계엄령의 내용 그대로였다.⁷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지만 아직 계엄령은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더욱 혼란스러운 것은 이 기사가 ‘현재 전라남북도 일원에는 임전지구 계엄령이 시행되고 있으며, 해당지구의 사법, 행정사무 일반은 호남방면 군사령관이 독할(督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는 점이다. 중앙정부가 내린 계엄령은 분명 합위지경이었지만 신문에는 임전지경으로 한 단계 뛰어 올라 있었고, 계엄 하에서도 행정·사법권은 여전히 그대로 지속된다는 국회에서의 법무부장관의 공식적인 답변과는 달리 행정·사법이 해당 군 지역사령관의 관할하는 영역으로 보도되었다. 이런 사실 등을 통해 볼 때, 당시의 계엄령은 해당 지역규정이나 해당되는 내용 모두에서 지극히 혼란된 채 사용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법령 없는 계엄령 선포’라는 상황에 대해 국회는 의문을 제기하고 정부를 추궁했다. 먼저 문제가 된 것은 정부가 어떤 법에 근거하여 계엄령을 발포했는가하는 점이었다.

헌법에 따라 본다면 정부가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몇 가지가 있었다. 헌법 57조는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긴급명령, 긴급재정처분’을 규정하고 있고, 헌법 64조에는 ‘계엄 선포권’ 조항이 있으며, 헌법 72조는 국무회의가 계엄안을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국무회의의 권한’ 조항이 있다.⁷¹⁾ 그런데 정부에서 발포한 것은 계엄령이 분명

도 알 수 없었을 것이다.

70) 「계엄령이란 무엇인가?」, 동광신문, 1948. 11. 9. 메이지 15년(1882)에 포고되어 1913년부터 조선에 적용된 계엄령의 내용은 김순태, 1999, 「제주4·3 당시 계엄의 불법성」, 『제주4·3 연구』, 역사비평사, 172~174쪽을 참고. 동광신문은 이 법의 주요부분을 요약한 것이다.

71) 이해를 돕기 위해 계엄령과 관련된 헌법 조문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헌법 57조 ‘긴급명령, 긴급재정처분’ 조문에는 “내우, 외환,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제(際)하여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을 발하거나 또는 재정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전항의 명령 또는 처분은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만일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하며 대통령은 지체 없이 차를 공포하여야 한다.”라고 하였다. 헌법 64조 ‘계엄선포권’ 조문에는 “대통령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한다.”고 되어 있다.

헌법 72조 ‘국무회의의 권한’ 조문은 “좌의 사항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경하여야 한다.

1. 국정의 기본적 계획과 정책 2. 조약안, 선전, 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에 관한 사항 3. 헌법개정안, 법률안, 대통령령안 4. 예산안, 결산안, 재정상의 긴급처분안, 예비비지출에 관한사항 5. 임시국회의 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6. 계엄안, 해엄안 7.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8. 영예수여, 사면, 감형, 복권에 관한 사항 9. 행정각부간의 연락사항과 권한의 확정 10.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청원의 심사 11. 대법관, 검찰총장, 심계원장, 국립대학총장, 대사, 공사, 국군총사령관, 국군참모총장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과 중요국영기업의 관리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2.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13. 기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다.

하였으므로, 이는 헌법 5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긴급명령, 긴급재정처분’과는 다른 경우이므로 정부가 이 조문에 근거하여 계엄령을 발포 할 수는 없었다. 그렇다면 헌법 64조와 72조가 사용될 수 있는 헌법조문인데, 당시에 계엄법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또한 계엄령 발포의 법적 근거로는 사용될 수 없었다.

임시 휴회되었던 국회가 13일의 공백을 끝내고 다시 소집되었던 10월 27일 89차 본회의에서 조현영 의원은 정부가 계엄령을 발포하고도 왜 국회승인을 받지 않았는가를 잠깐 질문한 적이 있었다.⁷²⁾ 그러나 이 질문은 큰 주의를 끌지 못한 채 더 이상 논의되지 못하였다.

그 뒤 이범석 국방장관은 10월 28일 국회에서 반란사건보고를 하는 도중 사건을 용이하게 처리하기 위해 반란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지나가면서 언급하였다.⁷³⁾ 그러나 그것뿐이었다. 계엄령이 누구에 의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느 지역에 선포되었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보고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되자 국회의원들은 10월 30일 계엄령의 근거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⁷⁴⁾

조현영 의원은 만약 계엄령이 헌법 57조에 근거하여 대통령령으로 임시비상조치를 내렸다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72조에 근거하여 발포했다라도 계엄령은 국무회의에서 결의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조문이 있으므로 이 또한 당연히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정부는 국회의 사후 승인을 반드시 요청해야 하는데도, 국회가 개회한지 사흘, 나흘이 되어도 아직까지 계엄령에 대해 아무 말이 없는 것은 어찌된 일이며, 어떤 식으로 법을 해석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정부를 추궁했다. 또한 대통령 맘대로 계엄령을 내려 국회의 승인을 얻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⁷⁵⁾ 한편 유성갑 의원은 조현영 의원이 헌법 57조의 긴급명령과 제64조 계엄령을 혼동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문제는 계엄령을 법률로 정해 뒀느냐 정해놓지 않았느냐가 문제라고 밝혔다.

이러한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인 법무부장관은 여수와 순천지구에 대한 계엄령 선포는 대통령이 하는 것도 아니고 헌법 57조에 의한 것도 아니며, 반란상태를 수습하기 위

72) 『국회속기록』제1회 제89호, 656쪽.

73) 『국회속기록』제1회 제90호, 673쪽.

74)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계엄령의 합법성에 대한 독자적인 의안으로 상정되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계엄령은 국회의원 신분을 가진 황두연의원을 어떻게 체포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는 도중에 제기되었던 것이다. 즉 황두연의원에 체포령이 내려졌다면 그것은 어떤 근거에서 내려진 것인가를 의원들이 따지는 과정에서 계엄령이 불거졌고, 이는 계엄령의 법적 근거를 추궁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75) 『국회속기록』제1회 제92호, 706~707쪽.

해 현지 군사령관이 ‘계엄법’에 의해 발동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는 계엄령이 군 작전을 위한 실무적인 차원에서 사용된 것이라는 해명이었다. 그는 또한 계엄령이 동란을 방지하는 긴급조치의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합위지대(合圍地帶)에서는 일반 행정과 사법권은 정지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⁷⁶⁾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엄령은 10월 25일 대통령이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이미 통과된 것이었고, 이 자리에는 물론 이인 법무부장관도 참석하였다. 또한 이범석 국방부장관은 10월 28일 국회 여순사건보고에서 여순사건을 용이하게 처리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계엄령을 발포했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기도 하였다.⁷⁷⁾ 현지에선 군사령관이 행정권과 사법권 일체를 장악한 채 작전을 펼치고 있었다.⁷⁸⁾ 이 인은 계엄법이 없는 상태에서 내려진 계엄령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현지사령관에게 떠넘기려 하였다.

그럼에도 이인 법무부장관이 계엄령은 현지 군사령관이 하는 것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국회에서 답변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였을까?

이 인은 자신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서명까지 한 계엄령이 대통령령으로 발포되었다고 할 경우, 당연히 국회의 사후승인이 필요한데, 이를 승인 받으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궁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만약 계엄령을 헌법에 근거해 발포했다고 할 경우 국회의원들로부터 쏟아질 공격을 감당할 수 없고 더욱 더 문제를 확대시킬 소지를 갖고 있다고 이 인은 판단했을 것이다. 그러나 국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국회의 승인도 얻지 않고 계엄령을 그대로 방치한 것은 정부가 헌법을 위반한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었다.

계엄령이 법무부에서도 내무부에서도 한 것도 아니고 현지군의 합위지대 내에서 계엄법에 의지해 가지고 발포한 것이라는 법무부장관의 답변에 대해 김병희 의원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계엄법이라는 법률은 없다고 반박했다.⁷⁹⁾ 그리고 헌법 64조에는 ‘대통령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해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계엄법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계엄령선포는 헌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순천 여수반란

76) 『국회속기록』제1회 제94호, 748쪽. 최용덕 국방부차관도 이인장관과 같이 반란군을 숙청하는 동안은 현지 사령관이 책임을 져서 반란군의 모든 문제는 그 사령관에게 책임이 있다고 답변했다.

77) 『국회속기록』제1회 제90호, 673쪽.

78) 동광신문, 1948. 11. 5. 이 기사는 “호남지구 일원에는 계엄령이 선포되어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로서 군사에 관계있는 것은 일체를 계엄지구 총사령관이 장악할뿐더러 특히 군사에 관계있는 범죄는 군민을 막론하고 군법에 준거하여 처단하게 되었다”고 보도하였다.

79) 『국회속기록』제1회 제94호, 756~757쪽. 그는 “지금 일본에 시행하고 있던 법률을 어느 정도 우리 대한민국 하에서 그 효력을 가지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제시대의 법률을 보더라도 명치년도에 계엄에 관한 특별법이 있을 뿐이고 그 외에는 계엄령이라는 것은 없습니다.”고 하였다.

은 수습이 필요하므로 이럴 때에는 헌법 제57조 긴급명령권을 이용할 수 있지만, 국회가 개회되면 반드시 사후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도 정부는 계엄에 대한보고도 없고 승인도 요청한 일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다른 국회의원은 법무부장관이 계엄령은 우리가 모르는 것이다, 현지군인이 합위지대 내에서 임시 조치를 한 것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계엄은 어디서 유래한 것인가 어떤 법에 근거한 것인가 라고 추궁했다. 계엄의 유효시기와 그 지역범위도 문제가 됐다. 계엄이라면 그 시기는 언제까지인지, 구역은 여수 순천에만 한한 것인지 아니면 남한 전체에 한한 것인지 또 그 효력은 어떠한 것인가가 문제되었다. 김병회 의원은 국회의원이라도 계엄지구에서는 당연히 처단을 받아도 좋다는 윤치영 내무부장관 말을 지적하면서 계엄상태에서는 양민을 잡아다가 총살해도 좋은 것인가 라고 질문했다.⁸⁰⁾ 이는 계엄령이 여순지역의 시민에게 의미하는 핵심적인 문제임에 틀림없었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발포된 계엄령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조차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엄령은 현지 군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운용되었고 이에 따라 즉결총살이 부지기수로 이루어졌다.

국회의원들의 계속되는 질문 앞에서 이인 법무부장관은 계엄령은 헌법 57조에 의한 비상조치가 아니며 동란이 일어나던가 안녕 질서를 유지 못하고 경찰과 민간의 힘으로 도저히 방지 못할 사태가 일어났는지 하는 급박한 때에 현지 군사령관이 발동하는 것이라고 다시 반복하여 답변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점 대단히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계엄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하여 계엄법 제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인정했다.⁸¹⁾ 그의 발언은 같은 날 앞서 행했던, 현지사령관이 ‘계엄법에 의해서’ 계엄을 내렸다는 스스로의 발언을 뒤집는 것이기도 하였다. 이인 법무부장관의 국회 답변은 ‘거짓’과 ‘자기도 순’을 보이고 있었다.

이 문제는 법무부장관이 미안하다는 말로서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즉 제헌헌법 46조는 ‘대통령은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당시 정부의 계엄령 선포 행위는 이에 해당할 수 있었고 이는 중대한 헌법위반 사항이었다.

80) 윤치영은 계엄형태에 있으므로 헌직검사로서 인민재판관을 지낸 박찬길을 사형에 처했다고 말했다(『국회속기록』 제1회 제90호, 675쪽).

81) 『국회속기록』 제1회 제94호, 757쪽. 이인 장관의 이러한 답변은 계엄령이 일제시대의 구법인 계엄에 의해 근거하고 있다는 법제처의 제민일보(한겨레신문) 보도에 대한 반박이 될 수 있다. 즉 당시 법무부장관 이 인이 국회에 나와 직접 계엄법이 없다고 확인하였던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민일보 4·3취재반, 「부록1 왜 ‘4·3계엄령은 불법인가」, 1998, 『4·3은 말한다』5, 전예원; 김순태, 1999, 「제주 4·3당시 계엄의 불법성」, 『제주4·3연구』, 역사비평사를 참고.

그럼에도 국회의원들이 이를 끝까지 추궁하지 못했던 것은 14연대가 일으킨 여순사건에서 좌익세력이 주도했다는 언론보도와 이에 대한 진압 필요성에 어느 정도 공감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공산당 척결이 시급하다는 국회에 대한 정부의 공세는 국회가 더 이상 운신하지 못하게 하는 쐐기로 작용했다.

이범석 국방부장관은 “지금은 민족국가는 생사의 관두이고 정부이니 국회니 민중이니 하고 이상론을 부르짖을 때가 아니고 독선(을) 확대하고 권리를 논할 때가 아닙니다. 다 죽느냐 사느냐하는...”이라면서 분위기를 몰아갔고⁸²⁾ 윤치영 내무부장관도 국회에서 회의가 진행되는 도중 갑자기 ‘급보!’라고 외치며 강화도에 반란군이 나타났다고 말한 다음 “여러분 그쯤 아시고 아까 말씀한 공산당 취체법과 경찰진영에서 경찰이 인권유린(한다고 사람들이) 말을 하지만 그것을 곧 제정해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에서 알 것 없고, 정부에서 필요한 법은 공산당 취체법이니, 빨리 제정했으면 좋겠다는 윤치영의 발언은 완전히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였다.⁸³⁾ 끈덕지게 황두연 의원의 부역혐의를 들먹인 것으로 알 수 있듯이 정부각료들의 분위기 조성은 이루 열거할 수도 없었다.

계엄령은 그 내용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계엄령이 발포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여순사건 진압에 큰 영향을 미쳤다. 군과 경찰 등 진압군 측은 부역자를 색출과정에서 양민과 폭도를 제대로 구별하지 않은 채 의심되는 사람은 자세한 조사 없이 즉결처분을 단행하였다. 군경이 이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규정자체가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사용된 계엄령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주로 여순지역에서 이루어진 부역자색출 과정의 특징은 일반적인 법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는데 있었다. 여순진압작전에서 ‘인권’은 아득히 먼 나라의 이야기였고 부역혐의가 있다는 다른 사람의 지적만으로 죽음의 길로 들어섰고,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 의심받아 사형 당하는 무법천지가 되었는데, 계엄령은 이런 일을 군경이 할 수 있게끔 한 ‘마법의 카드’였다.

82) 『국회속기록』제1회 제90호, 673쪽.

83) 『국회속기록』제1회 제90호, 679쪽. 윤치영의 거짓과 과장 그리고 공갈보고에 대해서는 서중석, 1997,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2, 역사비평사, 168쪽을 참고.

III. 부역자 색출과정과 민중의 피해

1. 부역자 색출과정

여수순천 진압작전과 뒤이은 부역자 색출은 이 지역에 큰 상흔을 남겼다. 만주 토벌 같은 초토화작전과 자의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부역자 색출은 14연대가 점령했을 때보다 더 큰 피해를 남겼던 것이다. 애당초 진압군의 순천, 여수작전은 반란을 빨리 진압해야 한다는 정치적 목적에다가 14연대 동향에 대한 정보부족이 겹치면서 빚어진 과잉작전이었다.

순천으로 진입했던 김지회 지휘의 14연대는 진압이 시작되기 전 이미 광양지역으로 달아났고 추격하던 12연대조차 여수작전에 투입되자 섬진강을 건너 백운산으로 입산하였다. 한편 여수지역에 남아있던 지창수 지휘하의 14연대 군인들도 24일 해군과 육군이 여수를 공격하자 본격적인 진압이 시작될 것임을 예감하고 24일 밤에 포위망을 뚫고 백운산과 벌교방면으로 이동했다.⁸⁴⁾ 이와 같이 양 지역에서 반란이 확산되는데 가장 중요한 물리력으로 존재했던 14연대라는 전문적인 전투병력은 진압군이 들어오기 전 이미 달아난 뒤였고, 남아있던 사람들은 소수의 군인과 이 지역 좌익계의 활동가들 그리고 분위기에 따라 반란군에 협력하고 있었던 청년들이었다.⁸⁵⁾

그러나 진압군의 작전은 정규 반란군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시민을 반란군으로 간주하고 이들을 모두 적으로 삼는 무차별적인 공격이었다. 진압군은 전 여수를 포위하며 압축해 들어갔다. 25일 여수시민은 서국민학교 뒤쪽의 한재와 미평가도를 통해 피난길에 나섰는데, 진압작전이 가져올 예기치 못할 불확실함과 위험성에 대한 공포를 느꼈기 때문이었다.⁸⁶⁾ 여수가 완전 진압되기 하루 전인 26일에는 시민들이 배로 피난하려 하자 진압군은 구봉산 쪽에서 사격을 가했다. 반란군이건 시민이건 움직이는 모든 것에 대한 사격한다는 진압군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⁸⁷⁾

27일 여수 전 시내를 포위하면서 잔여세력의 저항을 완전히 제압한 진압군은 기관총을 난사하며 제압하는 동시에 시민을 집밖으로 몰아내고 민가를 살살이 수색했다. 시내로 압

84) 전남일보 광주전남현대사 기획위원회, 1991, 『광주전남현대사』, 실천문화사, 153쪽; 김계유, 1991, 앞의 글, 277쪽. 이들은 지리산에서 합류하여 게릴라투쟁을 전개하게 된다.

85) 광주전남현대사 기획위원회, 앞의 책, 153쪽. 따라서 이들을 ‘반란군’으로 표현한다거나 여순 진압작전에서의 전투가 ‘반란군’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실제로 반군이 가장 많이 포로로 잡힌 곳은 여수나 순천이 아니라 순천과 광양이었다(홍한표, 1948, 「전남반란사건의 전모」, 『신천지』 11월호).

86) 김낙원, 1962, 『여수향토사』, 여수문화원, 68쪽.

87) 광주전남현대사 기획위원회, 앞의 책, 154쪽.

축해 들어온 진압군은 집집이 들이닥쳐 느닷없이 방문을 덜컥 열어젖히면서 “손 들었”하는 짙은 외침소리와 함께 싸늘한 충구를 가슴에 들이댔다. 집안에 있으면 반란군으로 여겨 무조건 쏘버린다고 경고하고는 집밖으로 내몰았다. 반란군으로 의심되는 조금의 저항이라도 보이면 기관총 세례가 가해졌고, 조금이라도 의심나면 사살되었다.⁸⁸⁾ 나이 어린 한 학생의 손목을 잡고 뱀새를 맡아보던 진압군인은 화약 냄새가 난다며 끌고 가죽이기도 했다.⁸⁹⁾

이같이 과도한 진압작전이 전개된 것에 대해 당시의 군인이나 이후 군 인사들에 의해 쓰여진 기록물들은 그 책임을 반란군과 민간인 참가자들이 잔인한 행동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변명하고 있다.⁹⁰⁾

당시 한 신문에 보도된 순천탈환전에 참가했던 작전참모의 말을 들어보자.

‘나는 상사의 명령으로 순천탈환전에 참가했을 때에도 솔직히 말하면 반군에게 아무런 증오감도 느끼지 않았다. 병사들도 모두 나와 똑 같은 심정이었다. 더구나 14연대의 병사들은 내가 직접 가르친 부하들이요 전우였으므로 나는 그들을 살해할 의사는 조금도 없었다. 그러나 정작 순천시에 돌입하여 시가 대로상에 동지들의 시체가 늘비하게 널려 있는 것을 보고 나서는 병사들이나 나 자신이나 별안간에 불길 같은 증오감이 솟아올랐다. 하지만 순천을 완전 점령한 지금에도 나는 ‘점령’이라는 말을 결코 쓰려고 하지 않는다. 동족 간에 자국 내에서 일어난 반란을 진압하는데 점령이 무슨 점령이란 말인가? 나로서는 피눈물 나는 싸움이었다.’⁹¹⁾

이 군인은 같은 민족 내부에서 벌어진 참혹한 싸움을 직접 경험하면서 애타는 심정을

88) 다음의 에피소드는 당시 진압작전이 한 줌의 인간적인 동정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진압이 끝난 뒤 중군한 기자가 이번 사건에 부상한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 파견된 구호반의 책임자에게 “여기에 반란군측 환자는 없습니까?”하고 물었다. 책임자는 “처음에는 있었소. 그런데 당국에서 그들은 반역자니 치료해서는 안되고 받아서도 안 된다는 주의를 받고” 적십자사의 입장이나 의사의 입장으로 그럴 수 없다고 하였으나, 의사가 통하지 않아 그렇다면 돌아가겠다고 항의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동행했던 우익 P신문의 명성적 존재인 한 주필은 “아까 의사가 말한 것은 잘못이다. 그런 반역자들을 치료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허(容許)할 수 없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기자가 법은 법이니 의사는 의사의 본분을 지키고 당국은 당국대로 취조할 일이 있으면 취조하면 될 것 같은데 라고 말하자 그는 “아 그럴 것 없어요. 그자...” 이러면서 지면으로 옮기기 어려운 심각한 언사를 하였다. 기자는 백주에 행해진 이 일을 보고는 남모르게 눈물이 나왔다고 적고 있다. 흥한표, 165쪽.

89) 전석영씨 증언, 광주전남현대사 기획위원회, 앞의 책, 140쪽.

90) “반군들과 폭도들의 만행이 문자 그대로 천인이 공노할 참극을 초래했기 때문에 진압군의 감정 또한 격화되었다”는 기술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전사편찬위원회, 1967, 『한국전쟁사-해방과 건군』제1권, 464쪽).

91) 「정비석 : 여·순 낙수(2)」, 조선일보, 1948. 11. 21; 「고영환 : 여순잡감(1)」, 동광신문, 1948. 11. 30.

피력하였지만 한쪽에서 솟아오르는 ‘증오감’을 숨기지 않았다.⁹²⁾ 실제로 반란군이 잔혹하게 사람을 죽인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옮겨지면서 과장된 경우가 많았다. 더욱이 이런 사실들은 확인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번져나갔다. 한 신문은 ‘믿을 만한’ 관리에게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었지만 현지에서 실제로 조사해보면 사실과 전혀 다르거나 과장이었다고 보도했다.⁹³⁾ 그러나 사실이 어찌되었든 군이나 경찰 등 진압에 참가했던 사람들의 이러한 복수심에 불타는 멘탈리티는 순천과 여수에서의 민간인 희생을 불러왔다.

순천과 여수를 점령한 진압군은 제일 먼저 전 시민을 국민학교 같은 공공장소에 모이도록 명령했다. 순천에서는 23일 시민들을 북국민학교에 모이게 했다. 여수에서 진압군은 26일 화성기로 모이라고 방송하였는데, 시민들은 국군이 젊은 사람만 보면 총살하는 장면을 많이 보았고, 나오지 않으면 반란군으로 간주된다는 말을 듣고는 만일 진압군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감에서 모두 모이라는 장소에 나왔다.⁹⁴⁾ 길거리에는 골목마다 무장군인들이 총을 들고 서서 이탈자를 감시하였다. 줄에서 이탈하면 반란군으로 쫓겨버린다는 것이었다. 진압군은 서국민학교에 본부를 설치하고 동정 공설운동장, 진남관, 중앙교(현 중서국민교), 동교, 서교 등 다섯 군데에 시민들을 모두 모이게 했다.⁹⁵⁾

이곳에서 본격적인 부역자 ‘심사’가 시작되었다. 23일에 탈환된 순천을 취재하기 위해 어렵게 내려간 조선일보 기자는 진압군에 의해 벌어지고 있던 부역자 색출장면을 맨 처음 보았다.

그곳은 순천북국민학교 교정이었다. 23일 토벌부대가 순천을 탈환한 후 국군은 작전을 계속하고 경찰대가 순천읍민만을 이곳으로 모아 놓은 것이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대부분 한데 모여 있는데, 그렇지 않은 집단도 있다. 주로 청년들만 모아 놓은 곳이 있는가 하면 남녀학생들만 모인 곳, 또 팬츠만 입고 벌벌 떨고 있는 벌거숭이 집단도 있다. 경찰대가 구분해 놓은 것이다. 주위를 경찰대가 둘러싸고 있다. 남녀노소의 혼성 집단은 읍내 치안이 아직 불안하기 때문에 집에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임시수용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집단은 심사중, 혹은 심사가 끝난 폭도 혐의자들이다.

92) 여순사건을 토대로 한 전병순의 소설에는 “빨갱이 새끼는 모조리 죽여야 돼. 반란을 일으킨 이런 도시 하나쯤 대한민국 지도에서 지워버려도 상관없어.”라는 구절로 당시 진압군의 심정을 표현했다(전병순, 1987, 『절망 뒤에 오는 것』, 중앙일보사, 18쪽). 백선엽, 1992, 『실록 지리산』, 고려원, 180쪽도 참고.

93) 예를 들면 순천에서는 여순경이 옷을 벗기우고 서장과 같이 조리를 돌린 다음 능욕을 당하고 총살당하였다고 하는데, 기자는 그 여순경을 찾아 옷을 얼굴로 이야기 할 수 있었고 사진까지 찍었다고 한다. 「반란지구 답사기」, 민주일보, 1948. 11. 12.

94) 광주전남현대사 기획위원회, 앞의 책, 154쪽.

95) 김계유, 앞의 글, 283쪽; 광주전남현대사 기획위원회, 앞의 책, 154쪽.

심사 중인 그들 앞에는 경찰관에게 끌려나온 사람이 총혈 된 눈으로 이 얼굴 저 얼굴을 번갈아 훑어보면서 누군가를 찾고 있고 웅크리고 앉아서 떨고 있는 사람들은 고개를 숙인 채 그 시선을 피하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다. 얼굴을 들었다가 그와 시선이 마주쳐서 ‘저 놈이다’ 손가락이 가리키기만 하면 끝장이 나는 것이다. 이것이 정확한 정황과약도 제대로 못한 채 천신만고 사건현장에 도착한 기자의 눈앞에 전개된 첫 광경이었다.

읍민들이 수용되어 있는 북국민학교 교정 남쪽에서 탕, 탕, 탕 카빈 총소리가 들렸다. 언제 파놓았던 것인지 구덩이가 패어져 있는 앞에 손을 뒤로 결박당한 청년 5명이 서있고 약 10m 떨어진 거리에서 5명의 경찰관이 총격을 가했다. 제2탄, 제3탄이 계속 발사되었다. 이 총살형은 계엄사령관의 명에 의한 것이라고 했고,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벌거숭이들이 모두 일단 폭도로 인정된 자들이다.⁹⁶⁾

이날 진압군과 경찰은 북국민학교 운동장에 시민들을 수용하여 부역자를 적발하기 시작했다.⁹⁷⁾ 노인과 부녀자들은 운동장 모퉁이로 가게 한 후 20~40대 남자들은 옷을 벗고 팬티만 입게 했다. 순천을 점령한 정부군은 이미 반란군에 가담한 혐의자 22명을 사형했다. 이 시신 옆에서는 5,000여명의 심문이 진행 중이었다. 한 신문은 일본군 철모를 쓴 경관 한 명이 혐의자를 취조하고 있으며, 학교 교정 담 뒤에서는 부녀들이 매 맞는 것을 보고 있었다고 보도했다.⁹⁸⁾ 24일 하오 4시 다른 기자가 찾아갔을 때에도 6백여 시민이 남아 심사를 받고 있었다.⁹⁹⁾ 순천에 종군하여 취재한 타임라이프 기자 칼 마이던스(Carl Mydans)는 “순천을 탈환한 국군은 처음 몇 시간 동안 공산당이 한만큼 야만적이었다.”고 하면서 “순천 농림학교 넓은 교정에 우리는 순천의 전인구가 나와 있는 것을 보았다. 어린애들을 업은 부인네들이 그들의 남편과 아들이 곤봉과 총대와 쇠파구로 매 맞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24명의 남자가 가까운 소학교로 끌려가는 것을 보았고, 뒤이어 그들은 죽이는 ‘라이플’총의 일제사격의 총성을 들었다”고 타임지에 기고했다.¹⁰⁰⁾

이러한 상황은 여수에서도 똑같이 벌어졌다.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끌려왔던 사람들은 곧 ‘심사’라는 것을 받게 되었다. 그제서야 여기 끌려온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생존 경찰관을 선두로 우익진영 요인들과 진압군 병사로 이루어진 5~6명의 심사요원들이 시민들을 줄줄이 앉혀 놓고 사람들의 얼굴을 쑥 훑고 다니다가 ‘저 사람’하고 손가락질만 하면 바로 그 자

96) 유건호, 「여순반란사건」, 『전환기의 내막』, 148~149쪽.

97) 이날 북국민학교에 모인 순천시민의 수가 5만 명에 달한다고 하였지만(김석학·임종명, 앞의 책, 164쪽), 이는 과장으로 보인다. 당시 순천시민 인구는 4만 5천명이었고 학교 운동장에 그렇게 많은 숫자가 모이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98) 세계일보, 1948. 10. 28.

99) 홍한표, 1948, 「전남반란사건의 전모」, 『신천지』 11월호

100) 이 기사의 내용은 민주일보, 1948. 11. 14.를 참조.

리에서 교사 뒤에 파놓은 구덩이 앞으로 끌려가 불문곡직하고 즉결처분(총살)되어 버렸다. 그 자리에는 일체 말이 필요 없었다. 모든 것이 무언(無言)인 가운데 이루어졌다. 사람을 잘못 봤더라도 한번 찍어버리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임사호천(臨死呼天)이라고 사람이란 누구나 죽게 되면 하늘을 부른다고 했다. 그때 여수사람들의 심정이 바로 그랬다. 이런 공포분위기 속에서 정문에서는 간혹 소탕작전에서 잡혀오는 것으로 보이는 파리한 몸골의 앓된 젊은이들이 2~3명씩, 혹은 4~5명씩 묶여와 교사 뒤로 끌려가면 어김없이 탕 탕하는 기분 나쁜 총소리가 뒤따라 사람들의 가슴을 얼어붙게 했다.’¹⁰¹⁾

진압군은 먼저 사건 가담자라고 판단되는 사람이 붙잡히면 학교 건물 뒷편 등에 마련된 즉결 처분장에서 개머리판, 참나무 몽둥이, 체인으로 타살되거나 곧바로 총살했다. 나머지 사람들은 수용되어 재심사 또는 계엄군, 경찰에 넘겨져 심문과 재판을 받았다. ‘백두산 호랑이’로 악명 높던 김종원은 중앙국민학교 버드나무 밑에서 일본도를 휘두르며 혐의자들을 즉결 참수했다.¹⁰²⁾

부역자를 지목하는 일은 반란에서 살아남은 그 지역의 경찰, 우익인사, 우익단체 청년들이 맡았다. 이들이 가리킨 단 한 번의 손가락질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사를 갈랐다. 외부에서부터 작전에 참가한 경찰관들은 며칠 밤을 새운 탓에 피로하고 과도한 긴장으로 흥분된 한 상태였다. 충혈 된 눈으로 사나워진 경찰들은 순천에서 총살된 채 썩고 있는 동료들을 보고 나서는 감정이 더욱 복 받았다.¹⁰³⁾

그러나 운동장에 모인 그 많은 혐의자 중 누가 과연 반란군에 협조했는가를 정확하게 골라낼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사실상 없었다. 살아남은 경찰은 사건 당시에는 숨어 있었거나, 탈출했거나,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부지한 경우였으므로 반란 협조자를 일일이 구별해낼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지 못했다. 물론 붙잡힌 경찰 중에는 자신을 체포한 좌익 인물들 정도는 알 수 있었겠지만 주요 좌익인물들은 14연대와 함께 이미 탈출한 뒤였다. 증거도 없이 심증만으로 이루어진 색출은 얼굴이 비슷하다하여 적발되는 등 술한 피해를 가져왔다.

그에 비해 양민들은 공포에 사로잡혔다. 죄 없는 양민이라도 혹시나 남의 손가락질을 받거나 앓을까 하는 두려움에서였다. 혹 운수가 나쁘면 그들의 착각이나 혹은 개인감정에 의해서 죽음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었다. 부역자 색출의 후유증은 사건이 종결된 뒤에

101) 김계유, 앞의 글, 283~284쪽. 다른 글에서는 색출 방법이 조금 다르게 되어있다. 즉 조그만 통로를 마련해 놓고 그 가운데로 수용된 시민들을 지나가게 하고, 줄의 좌우에는 우익 청년단체 청년, 경찰 가족들이 서서 자신들이 목격한 좌익부역자들을 손가락으로 지적하거나 몰래 군경에게 말해주면 그들을 따로 가려냈다고 한다(광주전남현대사 기획위원회, 앞의 책, 157쪽).

102) 김낙원, 1962, 『여수향토사』, 여수문화원, 71쪽.

103) 홍한표, 1948, 「전남반란사건의 전모」, 『신천지』 11월호.

도 계속해서 여수시민들을 괴롭혔는데, 그 이유는 누가, 어떻게 참여했는지에 대한 객관적 기준도 서있지 않은 상태에서 색출작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당시 심사의 기준이 된 것은 교전중인 자, 총을 가지고 있는 자, 손바닥에 총을 쏜 흔적이 있는 자, 흰색 지까다비(地下足袋: 일할 때 신는 일본식 운동화)를 신은 자, 미군용 군용팬티를 입은 자, 머리를 짧게 깎은 자였다. 주민들 가운데 흰 고무신을 신고 있는 사람은 반란군으로 간주되었다. 흰 고무신은 반란군에 처형당한 우익인사 김영준이 운영하는 천일고무공장에서 제조한 것이었는데, 반란 기간에 인민위원회가 이를 배급했기 때문이었다. 또 국방경비대가 입고 있던 군용 표시가 있는 속옷을 입고 있는 사람도 혐의대상이었다. 반란이 끝난 후 겉옷은 버릴 수 있지만 속옷은 갈아입지 못했을 것이라는 추측에서였다.

이렇게 심사는 외모나 다른 사람의 고발, 개인적 감정에 의한 중상모략, 강요된 자백 등의 기준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억울하게 처벌받는 것이 많았다. 군경은 가담자를 색출하기 위해 시민들로부터 투서를 받았다. 이 때문에 개인감정 등에 따라 생사람을 잡는 허위투서가 난무하여 무고한 민간인들이 수없이 희생당해야 했다.¹⁰⁴⁾ 이러저러한 주위 상황은 고려되지 않았고, 누군가가 ‘저 사람은 부역했다’라는 언질만 있으면 충분했다. 이런 자의적 판단 때문에 부역자를 가려내는 과정에서는 무고한 노인에게도 모진 전기고문을 가했다.¹⁰⁵⁾ 단순히 당시 인민위원회에 출입했던 사람이나 반란 때 밥을 얻어먹으려 좌익을 따라다닌 사람 등 반란군이나 좌익과 인연이 있는 사람은 모두 혐의를 받았다.¹⁰⁶⁾

부역자로 몰리는 것은 이처럼 쉬웠다. 반란에 협조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은 쉬웠으나 혐의자로 몰린 사람이 그렇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웠다. 하지만 그것은 생명을 건 방어였다. 요행히 우익인사 중에 아는 사람이 있어 구출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얼굴이 비슷하여 혐의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진압군의 혐의를 전연 받지 않으려면 국군이 올 때까지 완전히 숨어 있어야만 했다.¹⁰⁷⁾ 반란군이 들어왔을 때, 오직 경찰관과 우익요인들만이 가담하지 않았고 이렇게 저렇게 연관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진압군과 경찰의 부역자 색출은 처지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전 시민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공포에 떨어야만 했다. 더욱이 부역자 색출이 정치적이나 사업상의 경제적 관계 등 개인적인 감정이 개재되어 이루어지면서 민심은 극도로 피해해졌다. 민족청년

104) 군경의 이런 조폭한 처리는 결과적으로 민원을 살 우려가 있다고 한 기자는 지적하였다. 홍한표, 1948, 「전남반란사건의 전모」, 『신천지』 11월호.

105) 광주전남현대사 기획위원회, 앞의 책, 140·149쪽.

106) “이래서 당시 호박잎 하나라도 반란군에 준 사람은 모두 부역자로 몰렸습니다. 당시에 활발한 행동을 했던 똑똑한 사람들은 모두 다 죽었습니다.”(광주전남현대사 기획위원회, 앞의 책, 166쪽).

107) 홍한표, 1948, 「전남반란사건의 전모」, 『신천지』 11월호.

단 지도자와 심한 언쟁을 한 적이 있는 한 사람은 부역자로 지목되어 경찰에 의해 오동도로 끌려갔다.¹⁰⁸⁾

우익인사라도 예외일 수 없었다. 순천의 대표적 우익인사 한 사람은 톱밥 속에 숨어 묻혀 지내다가 국군이 들어온 뒤 이젠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반란치하에서 ‘마차조합장’으로 부역했다고 경찰서로 끌려가 곡괭이 자루로 맞았다. 그를 취조한 사람들은 목포에서 온 경찰관이었다.¹⁰⁹⁾ 끌려온 시민들은 학교운동장에서 한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다. 학교 정문에는 담을 높이 쌓아올려 중기관총을 높이 걸어놓고 시내 쪽을 향해 병사들이 총을 겨누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끌려와 웅크리고 앉아있는 운동장 주위에는 무장군인들이 뺨 둘러서서 삼엄한 경계를 폈다. 26일 여수 서시장에서 밤새도록 불이 나고, 27일째는 충무동 시민극장 주변에서 불이나 여수시내는 불구덩이 같았는데도, 시민들은 불 끌 엄두를 내지 못했다. 시민들은 수용소에서 조금만 나가도 죽을 상황이었기 때문이다.¹¹⁰⁾

이와 같이 부역 혐의를 받았던 사람들 모두가 실제로 반란에 협조하였거나 공산주의자는 아니었다. 부역자 색출 당시 사상적으로나 현실행동에서 좌익에 진정으로 봉사했던 사람들은 극소수였다. 이들 부역자로 분류된 사람들은 사상적인 교육도 못 받은 사람들이었다.¹¹¹⁾ 단지 며칠에 불과했지만 반란군이 물리력으로 행정을 장악하고 통치하는 상황에서 일반 시민들은 생존을 위해서라도 반란군에 협조할 수밖에 없었다. 반란군이 내세운 정치적, 경제적 주장들이 일정하게 시민들의 공감을 얻은 것 또한 사실이었다. 그러나 진압군에게 비친 여수는 완전한 좌익 소굴이었다.¹¹²⁾ 국민학교 등에 수용되었던 여수시민들 중 40대 이상의 사람들은 이틀 밤을 꼬박 운동장에서 세운 뒤인 28일에 풀려났지만, 군경은 40세 미만의 사람들은 반란가담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젊은 남자들 600여 명을 따로 가려냈다. 혐의자는 오동도에 재수감되거나 종산국민학교(현 중앙초등학교)로 끌려갔다.¹¹³⁾

108) 광주전남현대사 기획위원회, 앞의 책, 158쪽.

109) 광주전남현대사 기획위원회, 위의 책, 148~149쪽. 그는 노총위원장의 보증으로 풀려날 수 있었다.

110) 광주전남현대사 기획위원회, 위의 책, 155쪽.

111) 지방좌익세력은 진압군의 작전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14연대 병사들을 따라 산으로 입산했다(광주전남현대사 기획위원회, 앞의 책, 165쪽).

112) 광주전남현대사 기획위원회, 앞의 책, 163~4쪽. 여수 신월동의 김봉련은 “여순사건 당시 좌익에 진정으로 봉사했던 사람들은 극소수일 겁니다. 다만 그들이 주장이 심한 현실고에 시달리고 있는 시민들에게 많은 공감을 주었던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고, 모든 물자를 그들이 쥐고 있는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반란군에 봉사한 사람도 다수 있었죠”라고 증언하고 있다.

113) 김계유, 앞의 글, 289쪽. 발생날짜가 분명하지 않은 한 기사는 종산국민학교 뜰 안과 교실에 문초받을 사람들 천여 명이 서리가 내리는 밤에 뜰 안에 꿰어앉아 자기의 앞에 가로놓인 운명의 흑백에 불안한 밤을 새고 있으며, 오동도에는 학생이 약 2백 명, 일반인이 약 6백여 명이 수용되어 있다고 보도했다(조선일보, 1948. 11. 2). 다른 신문은 오동도에 수용

진압군의 부역자 색출과정은 12월 중순까지 약 한달 반 동안이나 계속 되었고, 이로 인해 시내는 공포분위기로 완전히 뒤 덮였다.¹¹⁴⁾ 14연대는 이른바 ‘반동분자’인 경찰관, 우익인사, 우익 청년단체원들만을 지목하여 처벌했고 일반 시민들은 처벌대상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큰 우려를 갖지 않았다. 하지만 국군은 전 시민을 일단 혐의자로 의심하고 조사했기 때문에 이러한 공포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되었다.¹¹⁵⁾

그러나 진압군이 들어오면서 사라졌다. 시민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진압의 대상’이었다. 가담자 색출작업은 같은 민족으로서는 도저히 하지 못할 일이었다. 무자비한 몽둥이 고문에 견디지 못한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설새없이 흘러나왔다. 참수, 즉결총살 등으로 여수 시내 중심부의 시청과 경찰서 주변에는 시체가 아무렇게나 뒹굴고 있었고 경찰서 뒤편에는 시체가 대강 정렬돼 있거나 혹은 난잡하게 포개져 있어 그 처절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또 만성리로 가는 터널 뒤편에는 집단 총살된 사람의 수가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¹¹⁶⁾ 여수는 공포와 죽음의 도시가 되었다.

부역자 색출과정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나 방법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다. 계엄령이 내려져 있던 상황이라도 군이나 경찰이 수많은 인명의 생사를 자의적으로는 결정할 수 없다. 전투과정에서 사상자가 나는 것은 당연하지만, 현지 전투가 아닌 부역자 색출과정은 법의 기준에 입각해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수, 순천에서는 최소한의 인간의 기본 권리조차 완전히 무시되었다. 이 과정에서 혐의 사실을 증명하는 주위 정황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이나 기준은 찾아볼 수 없다. 부역자 색출은 단지 믿음직하지 못한 혐의만으로도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¹¹⁷⁾ 무리한 진압작전과 뒤이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진행된 부

된 인원이 1,063명이라고 보도했다(경향신문, 1948. 11. 2).

114) 김계유, 1991, 「내가 겪은 ‘여순사건’」, 『월간예향』1월호, 175쪽. 김계유는 14연대 반란군이 들어왔을 때에는 각급 기관장이나 우익진영의 유력 인사를 빼곤 민간인들의 피해가 거의 없었는데, 주로 처형된 것은 원성을 사고 있던 약 70여 명의 경찰이었고 희생된 민간인은 20여 명이 채 안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115) 한 기자는 순천여수에 들어가기 전에 반란군들이 방화, 강도질, 강간, 시체파괴, 살해를 여지없이 하였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나 현지에서 부녀자나 노인의 시체는 거의 볼 수 없었고, 시체에 손을 댄 흔적도 별로 보지 못하였다고 하였다(홍한표, 앞의 글).

116) 김계유, 1991, 「여순봉기」, 『역사비평』겨울호, 289쪽. 1998년 10월 12일 여수시 호명동 야산 계곡에서는 주검 3구가 발굴됐다. 총탄흔적으로 보이는 구멍이 뚫려있는 두개골 등 3명의 유골과 손목시계가 발굴된 것이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여순사건 당시 이 지역에 70~100구의 주검이 집단 매장돼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한겨레신문, 1998. 10. 13. ; 1998년 10월 12일 MBC 뉴스데스크). 만성리는 아직도 발굴되지 못한 상태이다.

117) 색출된 좌익과 부역자는 시민을 3등급으로 분류했다고 말하고 있다. 1급은 살인과 인민재판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 2급은 소극적인 참여자, 3급은 애매한 자이다(김석학·임종명, 앞의 책, 164~165쪽 ; 광주전남현대사 기획위원회, 앞의 책, 148쪽).

역자 색출과정은 군경 그리고 이를 지휘하는 정부에 대해 겉으로는 함부로 드러낼 수 없는 내면화된 반감을 불러일으켰다. 같은 지역 공동체 성원간에 이루어진 ‘손가락 총’은 그 자체가 인간성 말살과 공동체의 붕괴를 뜻하는 것이었고 이로 인해 이루어진 공포와 죽음 뒤에는 인간불신이 내면화되었다. 결국 부역자 색출은 작게는 여수순천이라는 지역사회를, 크게는 민족공동체의 단합을 저해하는 깊은 상처로 남게 되었다.¹¹⁸⁾

2. 황두연·박찬길·송옥의 경우

가. 황두연

황두연은 1948년 5·10선거에서 순천 갑구에서 출마하여 당선된 국회의원이었다. 그런데 10월 30일 평화일보에 ‘순천반란지구 인민재판에 국회의원 황두연이 배석판사로 활약하였고 이 때문에 윤내무 장관이 체포령을 내렸다는 기사가 실리면서 그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현역 국회의원이 인민재판에 판사로 참가했다는 중앙일간지의 보도는 사람들을 당혹시켰다. 황 의원의 반란참가 활동 혐의는 꽤 구체적이었다. 황 의원이 받았던 혐의내용을 정리해 보면 ① 반란 당시 3일에 걸쳐 집에 인공기를 걸었다. ② 백미 한 말로 밥을 지어 반란군을 대접했다. ③ 반란군과 사전 연락이 있고 인민재판에 배석판사로 일을 보았다. ④ 5·10선거 당시에 민족진영으로부터 추천을 거절당하였다. ⑤ 5·10선거 당시에는 이번 반란 사건에 가담하여 총살당한 여류성악가 오경심 석방운동을 했다. ⑥ 황 의원 보다 낮은 지위의 사람들도 살해되었는데 그는 죽지 않았다. 반란군이 그의 집에 빈번하게 출입하였고 또 반군의 무기를 감추었다가 국군에게 압수당하였다. ⑦ 반란에 주동역할을 한 순천검찰청 검사이며 인민재판의 재판장인 박찬길과는 친척관계가 되며 반란군에 가담하여 활약하

한편 부역자 색출단계도 1단계는 학교나 공공시설에 수용해 적발하고, 2단계는 애매한 자나 이후 고발된 자가 대상으로 하여 심사에서 부역자로 판명될 경우 즉살되거나 군경에 이첩 또는 석방되는 2단계로 구분하고 있다(황남준, 앞의 논문, 470쪽 ; 광주전남현대사 기획위원회, 앞의 책, 159쪽). 그러나 이런 분류는 이후 생긴 유형화에 불과하다. 당시에 부역자 색출은 어떤 기준이나 형식에 따라 처리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이런 유형화는 당시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이해하는데 유용할지 모르나 마치 당시 색출작업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사실과는 다른 인식을 하게 할 우려가 있다.

118) 여수 순천지방에는 아직까지 서로 결혼하지 않는 집안이 있다고 한다(김석학·임종명, 앞의 책, 261쪽). 또 당시에는 ‘여수에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나돌았다(광주전남현대사 기획위원회, 앞의 책, 164쪽).

는 분자들을 황 의원 집에 감춰 두었다는 것이었다.¹¹⁹⁾ 황 의원이 서울에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평화신문의 보도는 의혹을 증폭시켰고 황 의원에 대한 여러 풍설은 삼시간에 그를 ‘빨갱이’와 ‘반도(叛徒)’로 만들어 버렸다.

그러나 이런 기사와 소문은 날조된 것이거나 전후 사실에 대한 확인이 없는 과장 보도였다.¹²⁰⁾ 이승만과 가까운 관계였던 양우정이 사장으로 있는 평화일보가 황 의원이 인민재판에 참가했다는 10월 30일 기사는 이미 3일전인 27일 순천에서 이지웅 기자가 보낸 것이었다. 양우정 사장은 ‘이런 악질행동을 한 자를 숙청하는 의미’로 대대적으로 보도하라고 지시했으나 황 의원의 아들 황현수가 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사건을 부인했고, 국회출입기자도 사실이 아니라고 하여 게재가 보류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29일 중앙청 출입기자와 양우정 사장은 사실임이 틀림없다고 다시 주장하였고 사장은 황 의원에 대한 기사를 실을 것을 지시했다.¹²¹⁾ 이와 같은 신문게재 경위는 배후에 깔린 정치적 목적을 의심하게 하였다.¹²²⁾ 더욱이 이 기사를 송고했던 이지웅이라는 기자는 인민재판에서 석방된 어떤 시민한테서 황 의원 혐의사실을 들었을 뿐이고 다른 확인절차를 취했던 것도 아니었다.¹²³⁾

여순사건이 일어나기 전 황 의원은 국회휴회 기간을 이용하여 조봉암 농림부장관의 부탁으로 정부 미국매입 강연차 오석주 의원과 같이 10월 19일에 서울을 떠나 순천에 머무르고 있었다. 순천에 반란군이 들어오던 20일 아침 9시경 그는 순천역 쪽에서 반란군의 총소리를 듣고는 안전을 위해 크레인선교사¹²⁴⁾ 집에 갔다. 거기서 그는 아고, 그린바움 두 명의 중위와 같이 피신하여 반란이 끝날 때까지 내내 집에만 숨어있었다. 따라서 반란에는 일체 가담하지 않았고 사전에 연락이 있었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았다.

진압이 끝난 뒤인 23일 오후 4시 크레인의 집에서 나온 황 의원은 다음날에는 사태수습을 위해 주민에 대한 식량배급과 진압군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동회장들을 모으는 등의 일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그는 특별조사국에 끌려가 인민재판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다짜고짜 구타를 당하고 취조를 받았는데, 이 소식을 들은 크레인선교사가 송호성 사

119) 이상은 석성인(石星人), 1948, 「화제의 인물 - 황두연과 순천사건」, 『민성』5-1, 12월호를 참조.

120) 김호석내무부장관은 황두연의원이 인민재판에 배석했다는 것만은 허위인 것이 확실하다고 하였다(『국회속기록』제5회 제14호, 287쪽).

121) 김동성공보처장 발언, 『국회속기록』 제1차 94호, 쪽.

122) 김병희의원은 원래 이틀이나 보류되었던 것을 사장과 기자가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이것을 내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니, 신문사는 어디서 증거를 얻었는가 하는 것을 공보처가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속기록』제1회 제94호, 756~757쪽.

123) 『국회속기록』제1회 제94호, 쪽.

124) 그의 한국이름은 具來忍(김석학·임중명, 앞의 책, 180쪽) 또는 具裕仁(석성인, 앞의 글)이다. 그는 제조사 과정에서 황두연의 결백을 증명해준 중요한 증인이었다.

령관에게 그의 결백을 주장하게 되었고 황두연은 송호성의 도움을 받아 광주까지 가족과 함께 오게 되었다.¹²⁵⁾

광주를 거쳐 31일 서울에 도착한 황두연은 ‘빨갱이 국회의원’ 소문을 해명하기 위해 다음날 국회에 직접 출석하였다. 11월 1일 국회에 다리를 절며 나타난 황 의원은 20일 총소리를 들은 다음 국회의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크레인선교사 집에서 미군 고문인 모어, 그린바움, 김상권, 김규당 목사(크레인목사의 서기)와 같이 숨어 지냈고, 국군이 반란을 진압한 다음인 23일 오후 4시에야 집에서 나왔는데 신문이 인민재판 배석판사를 지냈다고 보도한 것은 한탄할 일이라고 하면서 그간 자신의 행적을 밝히고 오해받고 있는 억울한 심정을 피력했다.¹²⁶⁾

인공기를 집에 달았다는 점은 사실과 달랐다. 황 의원이 선교사집에 숨어있을 때, 반란군은 각 집에 인공기를 달 것을 수차례 강요했으나 그의 아내는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나 심부름하는 아이가 강요에 못 이겨서 이웃집 학생에게 얻은 인공기를 22일 저녁에 달아놓았는데, 그의 아내는 이것을 다시 떼어 부엌에 놓은 사실이 있었다. 또 반란군이 밥을 내놓으라고 하기에 백미를 지어갔지만 반란군은 황두연의 집에서 지어온 밥은 더러워서 받지 않으니 도루 가져가라고 호통치는 바람에 아내가 도망한 사실이 있었다.

황두연이 반란군에 협조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심정적 근거에는 다른 사람은 다 피해를 입었는데, 어째서 국회의원 신분을 가지고서도 무사할 수 있었느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만큼 억지 주장은 없었다. 죽거나, 다치거나 해야 반란군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반란에 동조하지 않는 무고한 많은 양민도 하루아침에 반란군에 가담한 사람이 될 것이고 여기서 벗어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¹²⁷⁾ 실제로 국회의원 가족들

125) 경향신문, 1948. 10. 31. 송호성은 새벽 5시에 트럭을 타고 황두연의 집을 찾아와 여기 있다가 또 봉변을 당할지 모르니 바로 서울로 갈 것을 요청했다. 신변을 보호하려고 해도 모락이 심해서 안되겠다는 얘기였다. 당시의 분위기를 잘 알 수 있는 일화이다. 황두연은 이 때 재빨리 몸을 피해 총살을 모면할 수 있었다(김석학·임중명, 앞의 책, 190쪽).

126) 『국회속기록』 제1회 제93차, 723~732쪽.

127) 황두연은 “살해를 안 당했다고 해서 반란에 참가한 자라고 할 것 같으면 민족진영인물로 피해없는 자는 다 반란군에 가담한 자로 볼 것인가. 그러니 이것도 억울하다.”고 말했다. 또 집에 인공기가 달린 것을 보았다는 증언이 있는데, ‘도망가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반란군에 가담했다하니 자기가 도망가지 않고 어떻게 20일부터 23일까지 있었으며, 또 있었으면 자기가 반란군에 참가하였다는 증거밖에 되지 않는다’고 역공하였다.(석성인, 앞의 글, 55쪽).

반란군 치하에 있었는가, 도망갔는가하는 터무니없어 보이는 이 같은 논리가 2년후 한국전쟁 때 도강파(渡江派)와 잔류파(殘留派)라는 공식으로 다시금 나타난다는 점은 주의해볼 필요가 있다. 인민군이 들어왔는데도 한강다리를 건너지 않았으니, 공산정권에 부역한 것 아니냐는 도강파의 유아적 흑백논리가 전면으로 나서면서 서울에 있던 사람들은 삼시간에 부역하지 않았던 사실을 ‘증명’해야만 했다.

이 반란지구에서 무사한 것은 황두연 뿐만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유독 황두연에게 화살이 겨누어진 것은 어찌된 일일까?

국회에서 황두연 의원이 미소양군 철퇴를 가장 열렬히 부르짖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10월 13일 제87차 국회에 47인 연서로 ‘외군철퇴 요청에 관한 긴급동의안’이 제출되었을 때, 황두연은 도장을 찍은 일이 없었다.¹²⁸⁾ 이 문제로 국회에서 격론이 벌어졌을 때도 황두연은 오히려 이 문제를 보류하자고 주장하여 그 동의가 가결된 적이 있었다.¹²⁹⁾

그러나 황두연 의원은 당시 진보적 활동을 펼치고 있었던 소장파에 속해 있었다. 순천 지역 우익세력은 황두연을 ‘우익단체원이나 경찰의 좌익사건 수사에 방해활동’을 하고 좌익에 동조적인 사람으로 보고 있었다. 그는 민중지향적 성향과 강직한 성격 때문에 경찰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양곡공출이 강제로 이루어져 끼니를 굶는 농민이 생기자 그는 경찰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이에 항의하기도 했다.¹³⁰⁾ 황 의원이 어려운 곤경에 빠지게 된 것은 다른 우익정치단체와의 갈등도 작용했다. 황두연은 기자인터뷰에서 자신이 선거과정에서 경쟁했던 대한노총 관계인사가 자신을 모함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 사람은 20일부터 23일까지 황 의원 집에 달린 인공기를 보았다는 사람이었다. 11월 2일 순천 우익8개 단체가 내무부장관에게 올린 보고서에는 황두연의 다섯 번째 죄목으로 ‘박찬길 검사와 같이 인민재판시 배석판사격으로 진언하였기 때문에 황두연 반대파의 선거활동분자들에 대한 살상을 공공연하게 표시하게 되었음’이라고 지적하는 문구가 있는데, 이것으로 보아도 선거 당시 반대파가 황두연에 대한 모략에 적극적으로 개입했음을 알 수 있다.¹³¹⁾

국회에서 황두연의 부역혐의가 논란되었을 때, 김웅진 의원은 국회의원이 선거에 나와 세 네명의 입후보자와 경쟁해서 당선되면 의례히 정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하였고,¹³²⁾ 신성균 의원은 여러 가지 모략중상이 중간에 있으며 국회의원이라 해서 그 지방사람 모두가 좋아하지는 않는다고 말하였는데, 이러한 발언들은 황두연의 부역혐의가 정적에 의해 제기되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었다.¹³³⁾

실제로 황두연이 순천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은 의외일수도 있었다. 왜냐하면 순천에는 널리 알려진 김양수라는 한민당의 우익 거물이 존재했기 때문이다.¹³⁴⁾ 황두연이 군

128) 신문은 이 긴급동의 안이 44명 연서로 제출되었다고 보도하면서 그 명단을 실었다. 이 가운데 황두연의 이름은 올라와 있지 않다(세계일보·한성일보, 1948. 10. 15).

129) 이 보류동의는 찬성 68표, 반대 10표로 통과되었다. 『국회속기록』제1회 제87호, 600쪽.

130) 김석학·임종명, 앞의 책, 179~180쪽.

131) 평화일보, 1948. 11. 9.

132) 『국회속기록』제1회 90호, 664쪽.

133) 『국회속기록』제1회 92호, 699쪽.

특별조사국에 조사 받으러 끌려 들어갔을 때, 거기에는 황두연을 도와주었던 선거운동원 5명이 끌려와 곤욕을 치른 뒤였다.¹³⁵⁾ 황두연은 대한독립노총 순천지부장을 지냈고 독촉농총의 공천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되었다. 그러므로 선거 당시 공천을 받지 못했다는 것도 사실과는 다른 점이었다. 황두연은 “나를 모해하려는 사람들 가운데 정○○은 나의 선거진영인 반대자 대한노총 오진파인데 20일부터 23일까지 내 집에 인공기 단 것을 보았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민족진영인사들은 다 도망갔다.”고 주장했다.¹³⁶⁾

인민재판에 재판장으로 참가했다고 잘못 알려져 총살까지 받은 박찬길 검사와 친척이 된다는 점도 과장이었다. 박찬길은 황 의원의 조카인 황성수(2대 국회의원)와 결의형제를 맺고 있어서 황 의원을 숙부라고 부르고 있었다.¹³⁷⁾ 박찬길은 황두연이 선거에 출마했을 때 도움을 준 적이 있었고 이런 인연으로 황두연은 박찬길을 경찰 요직에 써 달라고 내무부장관에 추천한 일이 있었다.¹³⁸⁾ 황두연에 적대적인 사람들은 박찬길이 인민재판에 참가했으니 황두연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었다. 5·10선거 때 오경심 석방운동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황두연은 당시 선거 참여자를 늘리기 위해 구속된 사람을 석방한 것은 미군정의 일반적인 방침이었지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또한 무기와 총탄을 집에 감추었다가 국군에게 압수당했다는 점은 특별조사국에서 매를 맞아가며 취조 받을 때에 무기 운운은 전혀 없었다며, 만일 무기를 압수당했다면 내 자신이나 가족에게 증거로 현품을 보였어야 할 것인데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¹³⁹⁾

자신이 부역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구절절이 변호하면서 황두연은 “그러니 모두가 억울한 것뿐이다”이라고 한탄했다. 황 의원은 국회에 나와 공식적으로 자신의 거취를 해명하며, 인민재판 운운은 터무니없다고 반박하고 “말로는 가슴이 벅차 이루 말할 수 없다. 억울하다”며 눈물을 흘리었지만, 평화일보의 악의적인 보도는 멈추지 않았다. 황두연이 국회에 직접 나와 해명하고 정부 각료들도 국회에서 황 의원 혐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평화일보는 국민회·대동청년단·전국학련 등의 순천 8개 정당과 사회단체가 내무부장관에게 진

134) 5·10제헌국회의원선거에서 김양수는 11,508표를 얻었는데, 황두연은 14,677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김양수는 일제때 조선어학회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경력이 있는 우익인사였다. 건준 설립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였고 한민당 지방조직으로서는 맨 처음인 한민당 순천지부를 만들었다. 김양수는 제헌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황두연에게 패했고 1950년 제2대 국회의원이 되었다. 김양수에 대해서는 안종철 외저, 1995, 『근현대의 형성과 지역 사회운동』, 새길, 241~247을 참고.

135) 김석학·임종명, 앞의 책, 187~188쪽.

136) 석성인, 앞의 글.

137) 김석학·임종명, 앞의 책, 179쪽.

138) 신성균의원 발언, 『국회속기록』제1회 92호, 699쪽.

139) 석성인, 앞의 글.

상보고서를 올렸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황 의원을 기회주의자라고 규정하면서 그가 반란군에게 식사를 제공했고, 집에다가 좌익측 살상분자 10여명을 은닉하였으며, 인공기를 게양하였다는 혐의를 다시 반복하면서 곧 국군 제2여단 특별조사관 김용주 대위가 증인신문 조사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¹⁴⁰⁾ 이 날짜 다른 기사에서는 황의원이 ‘여하한 변명을 한다 하여도 백일하에 폭로된 그 죄상으로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실임’으로 국군 군기대가 제8관구 경찰청에 의뢰하여 황두연을 체포하도록 하였고 근일간 사령관의 권한으로 처단될 것 같다고 보도했다.¹⁴¹⁾

여순사건을 계기로 황두연은 유명인이 되었지만, 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김양수에게 패해 낙선했다. 황두연 의원의 경우는 정치적 견해 차이로 갈등하는 반대파의 음모와 근거 없이 조작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평화일보의 보도가 맞물려 일어난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 정치적 해프닝은 이승만 정권 하에서는 그 지위가 어떠한 간에, 정부와 우익단체와 상이한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면 ‘빨갱이’로 몰아 뿌리 뽑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실례였다.

나. 박찬길

박찬길은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의 차석 검사였는데, 순천이 진압된 24일 오전 경찰에게 총살당했다.¹⁴²⁾ 그의 죄목은 반란군에 협조하여 인민재판에서 재판관(장)을 지냈다는 것이었다.¹⁴³⁾ 그러나 이러한 혐의는 후일 근거 없이 조작된 것임이 밝혀졌다.¹⁴⁴⁾

140) 평화일보, 1948, 11. 9.

141) 평화일보, 1948, 11. 9.

142) 순천에서 인민재판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즉결처분된 검사의 이름은 박찬길(朴贊吉)이다. 몇몇 책에는 그의 이름이 박창길(朴昌吉)로 나와 있는데, 이는 여순사건에 대해 가장 폭넓게 서술하고 있는 김석학·임종명, 1975, 『광복 30년』제1,2(여순반란편)권, 전남일보사가 박찬길을 박창길로 표기한데서 연유하는 것 같다. 『국회속기록』이나 『광주고등검찰청사』 등에는 박찬길로 표기되어 있다. 박찬길은 1947년 11월 경 순천지검에 부임했던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처리한 범죄 통계를 기록하고 있는 「검찰관 수사사건표」, 『법무부관계서류: 통계에 관한 기록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MF22657, 1977. 11. 19, 정부기록보존소)에는 1947년 11월까지 윤기출(尹箕朮)과 정태호(鄭泰濤)검사가 담당했던 것이 12월부터는 박찬길과 윤기출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143) 이와는 다른 증언도 있다. 당시 순천경찰서 사찰과 형사였던 김봉운은 국군 12연대가 반란군 혐의자 30명을 용수동 수원지에서 총살할 때, 이 가운데 한 사람의 옷 주머니에서 각 직장별 인물들을 나열하고, ○△×표시를 해놓은 명단이 나왔으며, 여기에 박찬길은 좌익분류자인 ○ 표시가 되어 있었다고 증언했다.(김석학·임종명, 앞의 책, 200~201쪽) 하지만 이 증언은 증언자의 직책이 박찬길을 총살시킨 경찰이었다는 점과 증언내용의 정황진술이 납득되기 어려운 점이 있어 믿기는 어렵다.

144) 권승렬법무부장관·윤치영 발언, 『국회속기록』제5회 14호, 280·281쪽.

그가 총살된 진짜 이유는 경찰이 검거한 좌익인사를 법규정대로 처리하면서 빚어진 경찰과의 갈등 때문이었다. 총살당하기 며칠 전에도 박 검사는 경찰의 원한을 샀다. 산으로 달아나던 좌익을 경찰관이 총을 쏘아 다리를 맞힌 다음 쓰러진 사람을 더 한방을 쏘아 결국 이 사람은 죽고 말았다. 그런데 죽은 사람은 좌익이 아니라 산림을 도벌하던 민간인이었다. 이 사건을 취급하게 된 박 검사는 경찰관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그날 바로 순천 경찰은 박찬길이 ‘적구(赤狗)검사’라는 보고를 검찰청에 올렸다.¹⁴⁵⁾

조만식의 제자이고 기독교도였던 박찬길¹⁴⁶⁾은 엄격한 법의 기준에 따라 좌익사건을 처리하곤 했는데, 좌익타도에 앞장섰던 경찰은 박찬길이 엄중하게 처벌해야할 좌익을 가벼운 형벌로서 처리하자 그를 ‘좌익검사’로 여겼던 것이다. 경찰과 박찬길의 갈등은 여순사건을 기화로 폭발하였다. 경찰은 여순사건을 진압하면서 이 기회에 박찬길을 죽여야겠다고 마음먹었다. 10월 23일 경찰은 순천북국민학교에 순천 시민을 모두 모이게 했다.

진압군은 순천을 점령하고는 바로 박찬길을 찾기 시작했다. 박찬길 검사는 이틀을 장작더미에서 숨어 지냈고 잡히기 전날은 다른 사람 집에서 기거했다. 자택인 검사관사에 숨어 있다가 잡혔는데, 여기서 이미 반죽음이 되도록 맞아서 북국민학교로 갔다가 현지 경비사령부가 있는 순천농림학교로 옮겨졌다. 한 기록에는 박찬길이 자신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당시 이곳을 방문했던 황두연과 부역자색출을 맡고 있던 최천 부청장에게 호소했다고 한다. 그러나 박찬길 검사는 10월 23일 총살되었다.¹⁴⁷⁾

박찬길이 처형되었을 때는 순천 점령 직후여서 종군기자들도 취재차 이 지역을 방문했는데, 사형이 집행되기 직전의 정황을 기록한 기자의 글들이 남아있다. 서울로부터 출발한

145) 권승렬법무부장관 발언, 『국회속기록』제5회 제14호, 282쪽.

146) 황해도가 고향인 박찬길은 송의실업학교, 재령의 명신중학교에 다녔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장로교 총회에서 주는 장학금으로 일본 중앙대학 법과를 졸업했다. 해방된 뒤에는 부인과 3남매와 함께 월남하여 서울에서 법관시험에 합격했다. 유족들은 박찬길이 사리원에서 공산당에게 쫓겨 월남한 반공인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성격이 원만하고 독실한 신자로서 평소 주위로부터 인격자란 말을 들었고, 약자에겐 약하게 강자에게는 강하게 대하는 성품이었다고 한다(김석학·임종명, 앞의 책, 199쪽).

147) 「반란지구답사기」, 대동신문, 1948. 10. 28. 내무부 치안국, 『한국경찰사(1948.8~1961.5)Ⅱ』와 순천문화원, 1975, 『순천승주향토지』, 109쪽에는 박찬길 검사가 10월 25일경 순천농림학교 교정에서 총살되었다고 기록하였으나, 박검사가 총살된 것은 23일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10월 23일에는 박찬길과 순천인민위원회 부위원장, 한 명의 순경, 몇 명의 남녀학생 등 모두 22명이 총살되었다(「반란지구답사기」, 동광신문, 1948. 10. 29). 당시 순천농림학교 교장이 남긴 일기를 보면 24일에는 최천의 지휘하에 일제조사가 있었고 오후에 5명이 총살당했다고 한다. 25일에는 총살형이 없었고, 오후 5시 혐의자 전부를 경찰서로 이송한 뒤에는 군인이 주둔했다. 한편 권승렬법무부장관의 국회보고에서는 같은 보고임에도 불구하고 총살 일자가 23일 오전과 24일 오전 두 가지로 나와 있다(『국회속기록』제5회 제13차, 265~266쪽).

기자는 24일 먼동이 터올 때 학교 운동장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기자가 맨 처음 만난 사람이 바로 최천이었다. 그는 ‘모표는 떨어져 나갔으나 금테는 남아있고 망토자락을 뒤로 걷어 제친’ 모습을 하고 있었다. 말채찍으로 자기 종아리를 탁탁 때리면서 기자 앞으로 다가온 최천은 기자의 완장을 보고는 ‘선생, 어디서 온 기자요’하고 묻고는 자기는 제8관구 경찰청(전남경찰국) 부청장 최천(崔天)이라고 소개를 한 후 카메라를 가지고 왔느냐고 물었다. 카메라가 없다는 것을 알자 그는 실망한 표정으로 ”좀 있다가 총살형을 집행할 예정인데...“하고 아쉽다는 듯 혀를 찼다.¹⁴⁸⁾

최천은 ‘국군의 8할이 의심스럽다’며 경찰에 우호적이지 않은 세력을 모두 빨갱이로 몰았지만, 외지에서 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현지 사정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었다. 현지 사정에 대한 파악은 현지 경찰이나 청년단원, 우익세력에 의해 이루어졌고, 최천 부청장은 이런 보고들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사건 당시 박찬길은 줄곧 숨어 지냈다. 그럼에도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게 된 까닭은 현지 경찰 등이 올린 조작된 정보 때문이었다. 순천이 점령되었을 때, 박찬길은 올곧은 검사를 제거하려는 지방경찰의 의도된 지목으로 제일 먼저 뽑혔던 것이다.¹⁴⁹⁾

검찰에 대해 경찰이 우위에 있다는 점은 형사가 판사 2명을 요시찰자라고 구금한 대구경찰서 사건에서도 잘 드러난다. 11월 5일 대구경찰서 사찰과 형사 다섯 명은 대구지방법원 판사 김기석 등 2명을 아침에 구속했다가 오후에 석방하였다. 경찰이 영장도 없이 판사들을 임의로 체포한 이 사건은 경찰 권력이 미치는 범위를 잘 보여준다. 김병로 대법원장은 영장도 없이 체포한 것은 유감이라는 담화를 발표한 정도에서 그칠 수밖에 없었다.¹⁵⁰⁾

박찬길 검사 총살사건은 유족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당시 경찰책임자를 의법 조치해달라는 탄원서를 법무당국에 올리면서 다시 불거졌다. 1949년 3월 검찰 내부보고가 있는 뒤인 6월 박찬길이 속해 있던 조직인 법무당국은 현지에 군·경·검 합동수사반을 파견해 진상조사에 나섰다.¹⁵¹⁾ 검찰 측은 순천 사찰계 형사들과 경찰간부를 한 명씩 불러 진술을 듣고 서명날인을 받았다. 그러자 경찰 측에서 참석한 김남영은 이에 반발하여 순천서장에게 따로 반증자료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름대로의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했다.¹⁵²⁾ 약 2주

148) 유진호, 1982, 「여순반란사건」, 『전환기의 내막』, 조선일보사, 148쪽. 최천은 제8관구경찰청 부청장으로 근무하기 전에는 제주도 경찰국장(1948.4.17~1948.6.17)을 지냈고 이후에는 경북 경무과장(1949.4.14~1950.5.4), 경남 경찰국장(1950.7.27~1950.11)을 지냈다.

149) 김봉조의원 발언, 『국회속기록』제5회 14호, 278쪽.

150) 세계일보, 1948. 11.12.

151) 합동조사반원은 법무부검찰과장 선우종원 검사, 대검찰청 정창운 검사, 국방부 정훈감 김종문 육군중령, 내무부 치안국수사지도과 김남영 총경 등 4명으로 구성되었다(내무부 치안국, 1973, 『한국경찰사(1948.8~1961.5)Ⅱ』, 149쪽).

152) 김태선, 「국립경찰 창설」, 중앙일보, 1974. 11. 22.

일의 조사 끝에 법무부는 박 검사의 총살책임을 당시 경찰책임자였던 전남경찰청 부청장 최천 총경(조사 당시는 경북경찰국 경무과장)에게 물으려 했다.¹⁵³⁾ 그러나 경찰 쪽에서는 최천에게 책임을 지울 경우, 여순사건에서 희생당한 경찰에 대한 모욕이며, 경찰의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독자적인 경찰보고서를 치안국장에게 보고했다. 박검사 총살사건은 검찰과 경찰조직간의 대립이라는 방향으로 왜곡될 소지를 갖고 있었다. 경찰은 여순사건에서 수많은 경찰관이 희생되었는데, 검사 한 명 죽은 것이 무슨 큰 문제인가라고 반발했다. 검찰조직에서 보면 이 사건은 불명예가 될 수 있었지만, 경찰은 무고한 검사를 보복 총살시킨 혐의를 받고 있었다.

국회에서 박찬길 총살이 논란되었을 때 김봉조 의원은 박 검사가 군정시대부터 경찰의 무모한 체포에 비판적이었는데, 좌익에게 죄를 주지 않고 그대로 석방한다는 점이 경찰의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밝혔다. 또 박찬길이 죽은 이유는 이런 갈등 도중에 “마침 그러한 반란 사건이 일어나니까 경찰에서 제일 먼저 생각하기를 무엇이었느냐 하면 좌익 검사였던 박찬길을 죽여야겠다”고 결심한 것에 있었다고 폭로했다.¹⁵⁴⁾ 한편 경찰을 비호하는 입장에서 발언한 조영규 의원은 박 검사가 즉결 총살처분을 받은 것은 ‘과거에 좌익을 도와주고 될 수 있으면 좌익을 석방’시킨 행동 때문이라며 박 검사에 대한 총살은 검찰 진영에 대한 ‘캄플 주사’이고 ‘그런 (좌익 옹호적인) 사람을 훈계하는 위대한 한 방법’이라며 총살형을 적극 옹호했다.¹⁵⁵⁾

1949년 국회에서 박 검사사건이 논란되었을 때, 즉결 총살집행을 내린 것이 누구인가라는 책임문제가 대두되었다. 권승렬 법무부장관은 당시 국민학교 운동장에 모이라는 지시를 내린 사람은 제8관구 관구경찰청 부청장 최천이며, 경관 수백 명이 죽는 혼란상황에서 애국심의 발로로 도를 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고 말함으로써 경찰에 책임이 있음을 넉넉히 비추었다. 그러나 경찰은 총살형은 군 지휘하에서 이루어졌다고 발뺌했고, 군은 사형집행장을 주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어느 쪽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의 입장을 고려한 법무부장관은 이 문제는 조사중이라는 말로 얼버무렸다.

정부각료와 의원들은 이 사건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았을까? 박찬길 총살은 충분한 조사 과정이나 재판을 거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집행되었고 법률적 절차는 완전히 무시된 경우였다. 권승렬 법무부장관은 이 사건을 개인으로서의 ‘박찬길 사건’ 이라기보다는 헌법에 의거하지 않고 재판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형집행을 한 것은 만년을 두고 보아도 죄

153) 조국현·조한백의원 발언, 『국회속기록』제5회 15차, 302쪽·306쪽.

154) 『국회속기록』제5회 제14호, 278쪽. 권승렬은 박검사가 좌익사건 처리에서 다른 검사와 큰 차이가 없었으며, 좌익사상에 불공평한 일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155) 『국회속기록』제5회 제14호, 277쪽.

라며 이 문제를 헌법 유지와 인권 옹호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말하였다.¹⁵⁶⁾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한 김봉조 의원은 이 사건으로 좌익을 옹정한다는 정치적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만약 이런 식으로 하면 법치국가의 인권은 무너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¹⁵⁷⁾

이와 같이 정부 각료들은 헌법과 법률적 견지에서는 분명 잘못된 일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최철을 처벌하기 어렵다는 이중적 입장을 보였다. 권승렬은 고양이가 쥐를 찾기 위해서 냄새를 맡고 쫓다가 물건을 해치면 이 고양이를 어찌 할 수가 없다며 반란진압에서의 경찰의 공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최철을 처벌할 뜻이 없음을 비추면서 대한민국은 어린이로 치면 겨우 돌이 지난 것밖에 안되니까 국가를 방비를 위해서는 다소간 인권을 유린하는 것도 도리가 있다고 주장했다.¹⁵⁸⁾

당시의 긴급한 상황을 핑계삼아 즉결총살을 합리화하고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을 반대하는 논리는 국회의원들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다. 조국현 의원은 동료나 친척을 잃은 군경의 심리가 ‘백퍼센트 환장이 되었을 그 판’에 옥석을 가리울 여유가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¹⁵⁹⁾ 한발 더 나아가 그는 전남 7,000명의 경관이 모두 사기를 잃고 다 죽을 판인데, 법무부장관이 헌법 운운하며 따지는 것은 ‘정치적 수완이 가장 졸렬’하고 ‘대의에는 우매’한 것이라며 빨리 이 사건을 종결지으라고 다그쳤다. 한민당 조현영 의원도 시국 수습의 책임을 맡아 가지고 목숨을 걸어놓고 싸운 최철 경북 경무과장의 구속 영장을 발부하였다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이러한 조치는 평상시의 법치국가만 생각했지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 사태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난했다.¹⁶⁰⁾ 조한백 의원은 ‘공산당과 투쟁하는 사람을 죽인다면 국가의 치안을 혼란케 할 것’이라고 경찰측의 논리를 그대로 대변했다.¹⁶¹⁾

하지만 이 사건이 유가족의 진상요구에 의해 재조사되었을 때부터 그 책임은 최철에게 묻고 있었다. 그런데 순천경찰서 사찰과장 등 4명이 검찰에 의해 구금되는 사태가 벌어지자 전남의 경찰은 총기와 각종 장비를 경찰청 뒷마당에 버려놓고 일체의 훈련과 작업을 중지하는 보이코트를 단행했다. 급기야 치안업무가 공백에 빠지고 검·경의 대립이 날카로워지자 이범석 국무총리의 각부 장관 중재로 4명은 구금된 지 하루 만에 풀려났다.¹⁶²⁾ 검찰은 이 사건을 최철의 근무지가 있던 대구지검에 이송하였으나 치안국은 어떤 일이 있어도

156) 『국회속기록』제5회 제15호, 309쪽.

157) 『국회속기록』제5회 제14호, 278~279쪽.

158) 『국회속기록』제5회 제15호, 283·305쪽.

159) 『국회속기록』제5회 제15호, 302쪽. 윤치영의원도 당시의 총살처분은 여러 사람이 총살당하는 게엄령 상태였다고 주장하면서 박찬길 총살을 옹호했다.

160) 『국회속기록』제5회 제15호, 303쪽.

161) 『국회속기록』제5회 제15호, 306쪽.

162) 전남 경찰관들의 항의에 대해서는 『국회속기록』제5회 제15호, 302쪽을 참고.

검찰의 계획을 저지하라고 지시했다. 결국 경북경찰국이 강력히 항의하는 바람에 검찰의 계획은 좌절되고 말았다.

결국 박찬길 검사 사건은 국회 논의를 통해 인민재판 판사를 지냈다는 혐의는 풀렸지만, 검찰과 경찰 조직 간의 대립으로 그 초점이 변질되면서 박찬길 검사 총살의 진상규명과 의미 규명 그리고 처벌은 유야무야되었다.

다. 송옥

여순사건의 총지휘자로 보도된 사람은 송옥 여수여자중학교 교장이었다. 교육자가 반란에서 주동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은 언뜻 이해되지 않지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당시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고 정부의 강경한 대처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범석 국무총리는 국회 연설에서 송옥을 ‘민중을 총연합 지휘하는 최고사령관’이라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이번에 기가 막힌 것은 교육진영 즉 여수 순천의 중학생 놈들이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16, 17세 된 놈들이 수류탄을 들고 돌격하고 고식총(古式銃)을 들고 사격하는데 이것이 대항력이 제일 강하여 열광적이었다고 그래요. 여기에 교수놈들이 영도하고 여수의 반란군이 민중을 총연합 지휘하는 최고사령관은 여수 여중학교의 교장이던 자이고 지금 그 자는 아마 잡혔거나 그렇지 않으면 죽었을 것입니다.¹⁶³⁾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아직도 많은 기록에서는 송옥을 여순반란의 총지휘자로 서술하고 있다.¹⁶⁴⁾ 송옥이 여순사건의 민간인 총지휘자로 알려지게 된 것은 10월 26일 정일권 육군총참모부장의 발표를 통해서였다. 이날 정일권은 여수 제14연대장 박승훈이 구사일생으로 목포에 어제 도착했으며, 그의 말에 따르면 ‘여수반란 총지휘 책임자는 여수여자중학교장’이라는 것이었다. 각 신문은 발표문에 있는 이 짤막한 문장에 근거하여 이 사실을 크게 보도했다.¹⁶⁵⁾ 그러나 정작 박승훈이 서울에 올라와 가진 기자회견에서 송옥에 관한 얘기는 아무 것도 없었다.

163) 『국회속기록』제1회 제90호, 669쪽.

164) 전사편찬위원회, 1967, 『한국전쟁사-해방과 건군』제1권, 470쪽; 사사키 하루다카, 앞의 책, 321쪽; 장창국, 1984, 『육사졸업생』, 중앙일보사, 165~166쪽; 백선엽, 1992, 『실록 지리산』, 고려원, 158쪽. 송옥이 반란에 참가했다는 점을 부정하는 글은 반충남, 1993, 「여수 14연대 반란과 송옥교장」, 『월간 말』 6월호가 유일하다.

165) 민주일보, 1948. 10. 27. 『한국전쟁사』에는 “함병선소령이 여수여중을 1개 소대병력을 지휘하여 수색하였을 때 여수반란의 민간 총지휘자가 동교 교장 송옥임을 알게 되었다.”(469쪽)고 적고 있다. 한편 지리산 쪽의 게릴라를 쫓고 있던 호남지방 북부지구 사령부 작전참모 김종문소령은 여수 14연대에서 반란을 시작하였을 때 여수여중교장 송옥이 들어가 ‘인민위원회 정치지도부’(sic)를 조직했다고 부풀려 말하기도 했다(동광신문, 1948. 11. 7).

몇몇 언론에 처음 보도된 송옥동(宋玉童)은 송옥의 아명이었다.¹⁶⁶⁾ 송옥은 광주서중 교두로 있다가 여수여중으로 왔는데 그가 부임한 후 여학생들의 품행이 아주 달라져 학부모들에게 호평을 받았다고 한다. 그런 이유로 여순사건이 일어나기 한달 전 그가 광주로 전근하게 되자 학부모들이 회의를 열고 광주도청에 진정을 하여 그의 유임을 부탁할 정도였다. 결국 송옥은 발령까지 났던 것을 취소하고 여수여중으로 돌아 왔지만, 그것이 그에게는 불행이었다.¹⁶⁷⁾

송옥이 반란군의 지도자로 알려지게 된 것은 인민대회에 송옥이 나온다는 말 때문이었다. 당시 여수여중에 근무했던 한 좌익교사는 학교 교장으로 인격이 높고 명망 있던 송 교장의 인기를 이용하려고 그를 인민대회 연사로 먼저 광고하였다. 그런 다음 교섭을 하였지만 송옥은 내가 무엇을 아느냐하면서 “나는 대중연설 같은 것은 할 줄 모른다”고 끝끝내 거부하였다. 세상의 권력이 하루아침에 바뀐 당시 상황에서 반란에 협력하라는 요구를 거부한 것은 매우 당당한 우익적 태도였다.¹⁶⁸⁾

그 뒤 그는 외출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인민대회 광고에 그의 이름이 버젓이 올라와 있었으므로, 제대로 사정을 알 수 없는 일반인들과 진압군은 이 사실을 그대로 믿고 있었다.¹⁶⁹⁾ 진압군이 들어오자 여수일보 사장 정재완은 송옥에게 “송 교장이 반란주동자란 말이 있으니 미리 진압군사령부에 나가 서 해명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충고했고, 이 말을 들은 송옥은 자진하여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그가 찾아간 여수여자중학교에는 불행하게도 ‘백두산 호랑이’ 김종원 대위가 지휘하는 제5연대와 경찰사령부가 자리 잡고 있었다.¹⁷⁰⁾ 정재완과 몇 사람의 유지들이 찾아가 모두 소개를 하고 송옥 여수여중 교장을 소개하자, 김종원은 권총을 빼들고 발 아래로 난사했다. 송옥은 곧바로 체포되었다.

166) 송옥은 고창중학(1935)과 보성전문 법과(1938)를 졸업했다. 1938년 서울 상명여학교에서 교사를 지냈고 조선어학회사건에 연루되어 서대문형무소에서 복역하던 중 해방을 맞았다. 상명여학교에 복직한 그는 1945년 고향에 처음으로 설립된 영산포여중 교장으로 초빙되었고 1946년 광주서중 교감을 거쳐 여수여중 교장으로 재직하였다. 당시 나이 36세였다(세계일보, 1948. 10. 27; 동광신문, 1948. 10. 28).

167) 「반란지구 답사기」, 민주일보, 1948. 11. 12.

168) 반충남, 앞의 글, 218쪽. 송옥의 우익성향은 중학교에 다니던 막내 동생이 좌익 학생동맹에 가입했다는 말을 듣고 반공호 속에 가두어 놓은 채 밥을 날라둔 일화나 여수여자중학교 영어선생 백승보가 동맹휴학을 선동했다고 하여 여수수산학교로 내쫓은 일화에서 잘 드러난다. 이복출신인 백승보는 송옥을 의장단에 추천한 사람이다(김계유, 앞의 글, 291쪽).

169) 한 특파원은 경찰서, 군청, 읍사무소 등에 인민대강연회 강사가 송옥, 이용기라는 벽신문이 붙여 있는 것을 보고는 학교 교장인 송옥이 강연회를 개최한 것은 사실이라고 보도했다(동광신문, 1948. 10. 31).

170) 세계일보, 1948. 11. 9; 반충남, 앞의 글, 220쪽. 김종원은 그 뒤 전북 경찰국장(1952.7.28~1953.4.26), 과 경북경찰국장(1954.8.28~1955.2.15), 치안국장(1956.5.26~1957.3.11)을 거쳤다.

10월 30일 채병덕 참모총장은 송옥이 김종원 대대에 의해 ‘체포’되어 ‘준엄한 취조’를 받고 있다고 발표하였다.¹⁷¹⁾ 이 때 송옥은 광주호텔에서 헌병 3명의 감시를 받으며 감금되어 있었다.¹⁷²⁾ 송옥은 광주호텔에 감금된 뒤에는 호남신문사 사장 이은상에게 구명을 부탁했다. 그러나 이은상은 한숨만 쉬다가 “나도 송 교장이 거기에 있다는 것은 듣고 있다. 그러나 지금 나도 송 교장의 구명운동을 나서고 어찌고 할 처지가 아니다. 그리고 구명운동을 한다 해도 이미 때가 늦은 것 같다”고 말하였다. 당시 노산 이은상은 한독당 전남지부장을 맡고 있었는데, 여순사건이 일어나자 광주 5연대로 연행되었다. 김지희의 신원보증인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이은상은 당시 4연대장이던 이한립 소령의 해명으로 무사할 수 있었다. 이은상은 정부가 여순사건을 이용하여 김구와 한독당 세력의 정치생명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송옥 교장의 구명에 나서달라는 말을 듣고도 “송 교장의 운명을 하늘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말하였다고 한다.¹⁷³⁾

송옥이 사건의 주동자라는 사실은 그 당시에도 의문이 제기되었다. 정일권의 발표가 있는 뒤 송옥과 같은 학교에 다녔던 사람은 송옥은 공부는 곧잘 했지만 평범한 학생이어서 반란군에 가담했다는 것은 의외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여수에서는 누구나 그를 인격자로 대우하며 그런 일에 주동을 할 사람은 못된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여수경찰서 보안주임도 ‘내가 알기에도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은 아닐 것이다. 젊은 사람인데도 대단히 인격이 있어 여수에서도 인기가 있는 사람인데요’ 하고 말하였다.¹⁷⁴⁾ 송옥이 군기대에 넘어갔을 때, 여수의 각 학교, 학생단체에서는 송옥이 반란에 참가할 사람이 아니라고 진정서를 냈다.¹⁷⁵⁾ 당시 여수여중 음악교사는 송옥이 밖으로 한발자국도 나간 적이 없고 도리어 좌익계 교사들에게 협박을 당하는 처지였다고 말하고 있고, 당시 여수여중 교사로 근무했던 전병순도 송옥이 반란군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다.¹⁷⁶⁾

그러나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송옥을 살리려는 구명운동은 아무 소용이 없었고, 송옥은 대구로 이송된 뒤 처형되었다 한다.¹⁷⁷⁾ 황두연은 사건 직후에 직접 국회에

171) 조선일보·국제신문, 1948. 10. 31. 일부 신문에는 그가 ‘여수순천 총지휘관 송옥동’으로 보도되었다. 이제 송옥은 여수지역 뿐만 아니라 여수순천지구 전체의 민간인 지휘자가 된 것이다(서울신문·세계일보·동아일보, 1948. 10. 31).

172) 반충남, 앞의 글, 219쪽.

173) 반충남, 앞의 글, 220쪽. 송옥은 여수일보 사장 정재완과 14연대장 오동기와 친하게 지내 술자리를 같이 하면서 시사문제를 논의하고 시회(詩會)도 즐겼다고 한다. 송옥이 가깝게 지낸 정재완과 오동기 그리고 이은상은 모두 한독당 계열이었다(김계유, 앞의 글, 291~292쪽).

174) 「반란지구 답사기」, 민주일보, 1948. 11. 12.

175) 정광현, 「반란지구 그 뒤의 모습」, 95쪽.

176) 반충남, 앞의 글, 218쪽. 전병순(田炳淳)은 진압군이 여수를 점령한 뒤의 참혹한 상황을 『절망 뒤에 오는 것』, 중앙일보사, 1987이라는 소설에서 묘사하고 있다.

출석하여 해명함으로써, 박찬길은 그 후 유족들의 항의에 의한 재조사를 통해 죄가 없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송옥 교장은 여순사건 당시에는 총지휘자로 보도되었지만 그 후에는 아무 소리없이 사라져버렸고 이후 여순사건을 다룬 많은 책들에는 아직도 반란 주모자로 기록되고 있다. 황두연과 박찬길은 지방 우익세력과의 알력이나 경찰과의 갈등 때문에 피해를 당한 경우였다. 황두연은 다행스럽게 순천을 빠져 나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만 박찬길은 경찰의 표적이 되어 즉결처형을 당해야만 했다.

한편 송옥의 경우는 다른 적대적인 세력과의 갈등이나 경찰과의 마찰 때문이 아니라 단지 떠도는 허위사실 때문에 진압군에 잡혀 인생을 마감해야만 했고, 체포된 이후의 행적조차 아직까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들 세 사람은 각각 지방에서 존경받는 인사였지만 조그만 트집이라도 잡아 처벌하려는 정부와 진압군의 강경 진압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세 사람의 정치성향이 한독당 계열과 그 맥을 같이 하는 반이승만 노선을 취하고 있었다는 점은 이들이 정부(진압군)의 표적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희생되었던 이유였다.

3. 학생참가 문제

여순사건에 학생들이 가담했다고 알려진 것은 국방부 발표를 통해서였다. 10월 28일 국방부는 제7호 발표를 통해 여수의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여학생과 소학생까지도 반란군에 합류했다고 밝혔다.¹⁷⁷⁾ 같은 날짜의 신문에는 ‘죽창들은 여학생’이라는 제목 아래 “홍안의 여학생들이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죽창 혹은 총을 들고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또 다른 신문은 무려 남녀학생의 80%가 반란군에 가담해 싸웠다는 설이 유포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¹⁷⁹⁾

학생들의 반란 가담은 반란군의 선동에 따른 것이라고 발표되고 보도되었다. 반란군은 여수를 점령한 다음에는 38선이 터지고 중앙에 새 정권이 섰다고 선전하는 한편 인민위원회를 만들어 기초적인 행정을 실시하였는데, 여기에는 18세부터 25세까지의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인민군을 강제로 만들었다는 것이었다.¹⁸⁰⁾

사건이 진압된 11월 5일 국방부가 서울 시내를 비롯한 남한 각지에 비행기로 살포한 ‘전국동포에게 고함’이라는 글에서도 반란군이 “철모르는 중학생에게 무기를 주어 국군에

177) 김계유, 앞의 글, 292쪽.

178) 경향신문, 1948. 10. 29.

179) 동광신문, 1948. 11. 2.

180) 「박종화 : 남행록(3)」, 동아일보, 1948. 11. 18.

대항케 하고 양민을 도살케”하였기 때문에 “선동에 빠진 중학생들은 토벌부대의 본의 아닌 총탄의 희생이 된 것이다”라고 하였다.¹⁸¹⁾ 이같이 순진한 학생들의 사건 가담이라는 틀거리는 이범석 국무총리가 반란 직후 발표한 포고문에서 대다수의 14연대 대다수의 군인들은 ‘단순무지’하고 ‘피동적’인 선량한 군인들이며, 문제가 되는 것은 일부분의 극소수 군인들이라는 선전과 그 맥을 같이하는 것이었다.¹⁸²⁾ 즉 반란의 주동자와 추종자를 분리함으로써 그 세력을 축소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선전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순진하게 동원된 학생’이라는 이미지는 현지에서 진압작전이 진행되면서부터는 ‘반란군보다 더 악랄하고 무자비한 학생’이라는 이미지로 바뀌어갔다. 진압작전에 참가했던 12연대 백인엽 소령은 여수에서는 반란군보다 오히려 남녀학생들이 더 용감하게 저항했다고 말하였다.¹⁸³⁾ 그리고 이와 같이 된 이유는 단순한 선동과 사주에 의한 일시적 흥분이 아니라 평소 공산계 반동교육자에 의한 지시를 받아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¹⁸⁴⁾

현지 전투지휘사령부 김백일 사령관은 23일 순천 시가전에서는 반군 외에도 무기를 소지한 치안대, 학생, 민애청원들이 대항하였기 때문에 가가호호를 수색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밝혔다.¹⁸⁵⁾ 진압군 사령부와 채병덕, 송호성 등 군 고위인사들도 여수의 14연대 반란 사병의 수는 2, 3백 명에 불과했지만, 남로당원과 민애청원을 포함한 학생과 시민의 저항세력 약 1,000여 명이 건물 등의 지형을 이용한 채 조직적 저항을 시도하여 진압작전이 어려웠다고 토로하였다.¹⁸⁶⁾ 반군이 포로로 체포된 사람들 중에는 중학생과 여학생들이 포함되어 있었다.¹⁸⁷⁾

여순사건에 남녀학생들이 가담하여 극렬하게 싸웠다는 기록은 여순사건을 다루고 있는 기록물 등에서도 술하게 보인다. 『한국전쟁사』는 남녀중학생들이 칼빈총을 가지고 게릴라전을 수행하고 국군을 유인하는 등 지능적으로 행동했는데, 그들이 비록 “나이는 어리다고 하지만 그들은 오장이 적색사상으로 감염됐기 때문에 총뿌리 앞에 쓰러지면서 인민공화국 만세를 불렀다. (따라서) 진압군들도 단호하게 그들을 소탕했다”고 적고 있다.¹⁸⁸⁾

181) 호남신문, 1948. 11. 6.

182) 이범석 국무총리는 반란군이 ‘일부 그릇된 공산주의자와 음모정치가의 모략적 이상물’이 되었다고 하였다(「반란군에게 고한다」, 서울신문, 1948. 10. 24).

183) 동광신문, 1948. 11. 3.

184) 대동신문, 1948. 11. 14.

185) 동광신문, 1948. 10. 27.

186) 서울신문, 1948. 10. 29·30·31. 실제로 여수진입시 국군은 시내에 81mm 박격포와 30mm 중기관총을 사용하였고, 이 때 일어난 화재는 전 시가를 검은 연기로 뒤덮었다. 이 때문에 남해안의 항도여수는 잿더미의 폐허가 되었다.

187) 호남신문, 1948. 10. 30.

당시 신문에 보도된 진압과정의 한 일화는 학생의 가담을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작전참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공산주의 사상이 한 번 머리에 들어가면 어떻게 사람이 지독하게 되는 것을 아십니까? 여수 진주에서 생긴 일인데 여학생들이 카빈총을 치마 속에 감추어 가지고 우리들 국군장교와 병사들을 유도합니다. 오라버니! 하고 재생의 환희에서 부르짖는 듯 우리들을 환영합니다. 무심코 앞에 갔을 때는 벌써 치마 속에서 팽! 소리가 나며 군인들은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끔찍한 일을 보십시오. 이것들은 나이 겨우 열여덟, 열아홉살 되는 것들입니다. (중략) 이러한 여중학생 몇 명을 잡아가고 고문을 했습니다. 그 꼴을 보느라고 너는 총살이다 위협했더니 처음엔 부인을 하며 엉엉 울다가 하나 둘 셋하고 구령을 불려서 정말 총살하는 듯한 모양을 보였더니 ‘인민공화국 만세’를 높이 부릅니다. 기막힌 일이 아닙니까? 평시에 학교 교육이 얼마나 민족적인 육성에 등한시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남는 노릇이올시다. 학교에 다닐때 하고 공산주의의 이념만을 머리에 집어넣는 공부를 한 셈이올시다.¹⁸⁸⁾

학생들의 극렬한 반란 참가를 상징하는 이 일화는 조금씩 차이를 보이지만 여순사건을 다룬 많은 책에 실려 회자되었다.

그렇다면 이 같은 기록들은 과연 사실에 근거한 것인가?¹⁸⁹⁾ 남학생도 아니고 중학교 여학생이 진압군을 유인하여 총을 쏘았다는 것은 상식으로는 쉽게 납득되지 않는 일이기에 의문은 커질 수밖에 없다. 또 학생들이 반란에 가담했다면 얼마의 숫자가 참여했고 참여 정도는 어느 정도였는가? 남녀학생들의 전투참가의 진상과 그 의미를 규명하기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란 초기로 거슬러 올라가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여순사건 진행과정에서 14연대가 점령했을 때의 학생들의 역할과 국군이 여순에 진격했을 때의 학생 활동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고, 반란에 학생들의 역할이 컸다고 강조하는 것은 진압군 작전실패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학생의 반란참가는 여수 14연대가 맨 처음 반란을 일으켰을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14연대가 반란과 동시에 주변에 인접한 여수수산학교 학생들이 동참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¹⁹¹⁾ 학생들은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가장 잘 조직적으로 움

188) 전사편찬위원회, 1967, 『한국전쟁사-해방과 건군』 제1권, 464쪽.

189) 「박종화:남행록(完)」, 동아일보, 1948. 11. 21. 이 부분은 동광신문(1948. 11. 2) 등에 보도되었던 기사를 소설가 특유의 문체로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동광신문 기사는 다음과 같다.

“관군이 여수시가에 돌입하였을 때 조그마한 여학생 하나가 “아저씨!”하고 뛰어나와서 한 병사한테 달려들었는데 그 병사는 인민군에 납치되어있던 여학생인줄 알고 “걱정마라! 적은 우리의 손아귀에 있다”하고 외치자마자 스커트 밑에 감추었던 권총을 쏘아서 그 병사를 죽인 예가 있다.”

190) 반충남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전투에 참가했다는 사실을 부정하면서 진압군이 유포한 ‘환상의 여학생부대’를 비판하였다.

191) 반충남, 1993, 「여수 14연대반란과 송옥교장」, 『월간 말』 6월호, 226쪽; 김계유, 앞의 글,

직일 수 있는 계층이었기 때문에 여수와 순천 시내에 14연대가 들어온 뒤에는 이들의 도움을 받았다. 학생들은 지하에 잠복해 있던 기존의 민애청 조직을 이용해 조직되었지만, 모든 학생이 그렇게 조직된 것은 아니었다. 20일 여수에 들어온 14연대는 읍사무소와 백두회관 앞에 99식 소총과 칼빈총을 산더미 같이 풀어놓았는데, 청년과 학생들은 군인들을 제쳐놓고 앞장서서 총을 메고 경찰과 우익진영 사람들을 잡는다고 나섰다.¹⁹²⁾ 이와 같이 아직 질서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분위기를 따라 앞장서 나선 청년학생들도 상당수 있었던 것이다.¹⁹³⁾ 민애청은 기존 조직복구와 함께 군대가 살포한 총으로 무장한 일반 학생들의 가담으로 그 세가 확대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지하에 있던 민애청, 민청, 학동, 여맹, 합동노조, 교원노조, 철도노조 등이 자발적으로 인민의용군을 조직하여 일제에 협력했던 친일분자나 경찰, 우익청년단체 등의 반동 우익분자를 색출하였는데¹⁹⁴⁾, 학생들은 이러한 일을 도와주거나 길을 안내하는 등 14연대를 보조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이다.¹⁹⁵⁾

그러나 국군이 순천과 여수에 대한 진압작전을 시작하면서 학생들의 역할과 비중은 이전에 비해 완전히 달라진다. 순천에 대한 진압군의 탈환작전은 22일부터 시작되었지만, 김지회 등의 반군 지휘관과 순천의 주요 좌익간부들로 이루어진 주력부대는 이미 광양방면의 백운산과 지리산 줄기의 인근 산악지대로 도피한 상태였다. 순천에는 14연대 정규병력은 별로 없고 경찰무기나 죽창 등 간단한 무기로 무장한 좌익학생이나 좌익 단체원들만이 남아서 순천을 지키고 있었는데 큰 위협이 될 수는 없었다.¹⁹⁶⁾ 그 결과 정부군은 고립된 시민학생들의 저항을 손쉽게 무력화시키면서 비교적 용이하게 순천 시내를 점령할 수 있었다.¹⁹⁷⁾ 23일 11시 하루만에 ‘시내의 상점 유리창과 문과 벽에 총 맞은 흔적을 거미줄같이’ 내며 순천을 완전 점령한 진압군은 반란군에 동조했던 인사들을 가려내기 위해 집집마다 직접 수색했다.¹⁹⁸⁾ 민가를 일일이 수색하는 소탕전이 이루어진 것은 14연대 반군 주력이

255쪽에서는 민애청 서종현 등 23명이 미리 연내에 들어와 있다가 14연대를 안내한 것으로 되어 있다.

192) 김계유, 위의 글, 256쪽.

193) 분위기에 휩쓸린 동조적인 학생들은 미처 조직되지 못하였거나 느슨하게 묶였을 것이다. 한편 학교장과 교사 등 교무원들은 인민위원회 지시로 직장위원회를 조직하였다.

194) 김계유, 위의 글, 262~263쪽.

195) 대동신문, 1948. 10. 28. 그러나 여기에서도 여학생들이 반란군에 가담했다는 사실은 보도되지 않았다.

196) 백선엽, 1992, 『실록 지리산』, 고려원, 180쪽.

197) 당시 진압군의 말을 보도했던 신문들은 전투가 치열했다고 기록했지만, 미군 보고서는 “세발의 박격포탄을 발사한 후 시내에 진입하자 별다른 전투를 치루지 않고서도 방어선이 무너졌다”고 기록했다(존 R. 메릴, 1988, 『침략인가 해방전쟁인가』, 과학과 사상사, 210쪽). 동일한 전투상황에 대한 상이한 평가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진압군이 왜 전투가 어려웠음을 강조해야만 했는가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키는데, 이는 학생들의 극렬한 저항을 강조하는 것이 진압군의 무리한 작전에 대한 하나의 변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산악지대로 퇴각하여 주적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란군 소탕’이라는 측면에서 눈에 보이는 뚜렷한 성과를 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남아있는 저항세력 대부분이 민간인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은 시내 소탕작전의 주 대상을 남아서 주요한 전투력을 이루고 있던 양민과 학생층으로 설정하게끔 했다. 여수도 이와 비슷했다. 육해군을 동원한 23일 여수 진압작전은 반격을 받고 쉽게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 24일 공격 또한 여수 초입 미평에서 반란군의 기습작전에 걸려 송호성 사령관이 부상당한 채 퇴각하였다. 이 작전은 ‘반란 1주일이 지나도록 여수를 탈환하지 못하다니 이게 무슨 창피냐’는 정부의 채근과 송 사령관의 개인적인 공명심이 빚어낸 무모한 작전이었다.¹⁹⁹⁾ 이제 정부는 더 이상 반란을 진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본격적인 진압작전을 예감한 반란군은 미평전투의 패배로 여수의 진압군 포위망이 무너진 틈을 타, 이 날 밤에 지리산과 벌교방면으로 탈출하였다.²⁰⁰⁾ 진압군은 26일 광양에 나가있던 12연대를 불러들여 선발부대로 삼았고, 12연대는 기갑연대 장갑차를 끌고 장군봉을 점령하러 나섰다. 이 때 ‘반란군은 의외로 저항다운 저항도 없이 달아나 버렸다.’²⁰¹⁾ 따라서 27일 진압군은 여수 시내에 들어갈 때, 반란군 주력은 이미 퇴각한 후였고 시내에는 ‘반란군 2백 명, 민병 1천으로 구성된 무장세력’이 있다고 진압군은 파악하였다.²⁰²⁾ 진압군은 민간인 1천 명의 주요한 참가자를 학생들로 파악하고 있었는데, 학생들 중 많은 부분은 민애청원으로 파악된다. 병기교육 한번 받아보지 못했던 학생들이, 여학생은 더욱 그러한데, 진압군이 발표한 바와 같이 요소 요소에 배치된 몇몇 반란군의 지휘하에 일사분란하게 싸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²⁰³⁾ 정부는 학

198) 진압군은 순천 소탕전 때, 죽창과 총으로 지방폭도들과 학생들이 무모한 저항을 시도하다 죽었고 사실상 양민과 폭도를 구별하기 어려웠다고 한다(전사편찬위원회, 1967, 『한국전쟁사-해방과 건군』 제1권, 463쪽) 당시 진압군은 양민과 폭도를 구별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들어 양민이 모두 폭도였다는 식으로 몰아갔지만, 이것은 반대로 저항이 심각하지 않았다는 점을 의미하였다.

199) 백선엽, 1992, 『실록 지리산』, 고려원, 185쪽.

200) 황남준, 앞의 논문, 454쪽.

201) 백선엽, 1992, 『실록 지리산』, 고려원, 186쪽. 인민위원회가 있던 군청은 의외로 저항력이 약하여 교전 5분만에 점령되었다. 호남신문, 1948. 10. 30.

202) 물론 이 숫자는 정확한 것이 아니다. 한 신문에는 25일 국군이 반란군 200여 명 남녀학생 700여 명의 반격으로 일단 물러났지만, 장갑차대와 기관총을 설치한 썰 6대로 편성된 기계화부대와 박격포 공격으로 반란군의 약 반수를 감소시킨 다음, 27일 아침 시내로 돌입했다고 보도했다(동광신문, 1948. 11. 7).

203) 순천이 점령된 뒤 순천경찰서 뒤뜰에는 수백명의 청년 학생, 노동자들이 웃옷을 벗긴 채 열을 지어 앉아 있었는데, 이 중에는 15, 6세 되어 보이는 어린 여학생들도 있었다. 기자가 무엇 때문에 잡혀왔느냐고 묻자 “민애청 완장을 두르지 않으면 죽인다 하기에 민애청 완장을 두르고 있다가 잡혀왔어요”하고 울먹이며 대답했다고 한다(동광신문, 1948. 10. 30).

생들이 좌익교사 밑에서 교육받았기 때문에 이들이 적화되어 반란군에 맞서 지독하게 싸울 수 있다고 강변했다.

진압군은 이들의 저항을 극렬한 저항으로 표현했지만 실상은 진압군의 공격을 즉창이나 총으로 방어하는데 급급한 비조직적인 무모한 저항일 뿐이었다. 여수에서는 반란군이 탈출한 후에도 행동대장 서종현(일명 OB)이 좌익 조직원과 학생들에게 99식 소총에 실탄을 장전하여 사격을 몇 번 시켜보는 정도의 훈련을 시키기도 했지만, 우수한 장비와 이미 훈련된 진압군이 들어오자 모두 달아나 버렸던 것이다. 오히려 이들은 계속 숨어있었던 탓에 많이 살아남았다고 한다.²⁰⁴⁾ 제대로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시민이나 학생들의 전투가 명령 체계를 갖춘 정식 군대와 맞서 조직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었다. 또한 이들은 ‘오장이 붉은 공산주의자’도 아니었다.²⁰⁵⁾ 정규군을 상대로 한 시민과 학생들의 전투는 더 이상 도망갈 곳 없는 남해안 반도라는 지리적 여건과 이미 신분이 노출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생존을 위한 ‘무모한 방어’였던 것이다.

이제 현지 전투과정에서 주요한 적은 바뀌었다. 여수를 점령하여 포로를 체포하였을 때 반군은 단 10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5백 명은 시민이었다.²⁰⁶⁾ 이는 결국 여수진압작전이 반란군을 대상으로 한 전투가 아니라, 시민을 대상으로 한 전투였음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당시 진압군 장교들도 이런 현상을 지적했다. 25일 여수진압작전 중에 고막이 터지는 상처를 입고 퇴각한 육군 총사령관 송호성 장군은 이 전투가 반군진압작전에서 봉기시민 소탕으로 완전히 변하였다고 인정하였다.²⁰⁷⁾

반란군의 저항이 거세고 진압작전이 원활하지 못해 작전은 매끄럽게 전개되지 못하여 치열한 전투가 이어졌다고 발표하였지만²⁰⁸⁾ 학생들의 ‘완강한 저항’을 강조하게 된 것은 정부 진압작전의 무리한 전개와 그 실패를 덮어버리려는 시도였다. 진압군은 순천을 진압한 뒤인 24일부터 계속 여수를 공격했으나 반란의 본거지를 탈환하는데 실패했다. 이것은 비교적 쉽게 이루어진 순천 작전과도 비교되는 것이었다. 이미 반란은 1주일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연속된 초기 여수공격 실패는 이후 작전을 혐의자에 대한 대량검거, 즉결사형처분, 시내를 완전히 초토화하는 방향으로 이끌었다. 여수 공격에는 비행기 정찰 후 바다에서는

204) 반충남, 1998, 「여순반란사건, 인민재판은 없었다」, 『말』11월호.

205) 당시 작전에 참가했던 백선엽은 “나는 지금도 그렇게 많은 ‘빨갱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단순가담자의 대부분은 핵심 좌익계인물들의 선전과 현실적인 신변의 위협 속에서 나름대로 살길을 찾아 나섰던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였다. 백선엽, 1992, 『실록 지리산』, 고려원, 192쪽.

206) 설국환, 1948, 「반란지구 답사기」, 『신천지』11월호. 이러한 점 때문에 작전사령관 김백일중령은 체포된 혐의자를 골라내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고충을 토로하였다.

207) 부산신문, 1948. 10. 31.

208) 서울신문, 1948. 10. 31.

해군의 사격과 육지에서는 기갑부대가 참가하였고, 이 같은 총공격으로 여수시내는 완전히 초토화되었다.²⁰⁹⁾ 진압 군인들은 시내에 들어가 가가호호를 직접 수색하였다. 군대는 모든 시민을 각 학교운동장에 불러내어 부역 여부를 심사하였고, 혐의를 벗기 위해서라도 시민들은 운동장에 나와야만 했다.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수진압은 이렇게 철저히 이루어졌다.

진압군은 반란군 주력이 이미 탈출한 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적절한 작전을 전개하지 못한 채, 시급한 점령 필요성에만 이끌려 무차별공격에 치중했던 것이다. 반란군 체포 또한 성공하지 못했다. 반란군 주력은 이미 지리산 등의 산악지대로 탈출해버려 장기간의 토벌 작전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점은 반란의 지역적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 불안 요소가 잔존하게 됨을 뜻하였다.

여학생의 전투참가의 실상 또한 모호하다. 여기서 송옥 교장사건이 송옥 개인에게서 끝나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송옥 여수여자중학교 교장이 인민위원회에 참여했다고 알려진 것은 교육계에 적화사상이 침투한 대표적 사례로 알려지면서 교육계 전반으로 확산되었다.²¹⁰⁾ 교사들이 반란군에 협조했으니 그 지도를 받은 학생들 또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단순한 연결고리가 만들어졌다. 물론 처음에 학생들의 행동은 자율적 행동으로서가 아니라 공산주의자와 일부 교사들의 조종 아래 이루어진 행동으로 보도되었으나,²¹¹⁾ 점점 나이 어린 학생들이 어찌 그런 놀라운 행동을 할 수 있는가하는 식으로 변해갔다.

다음과 같은 이른바 ‘환상의 여학생부대’는 1차로 신문에 보도되어 활자화되고, 2차로는 이것이 근거가 되어 입에서 입으로 덧붙여 옮겨지고, 3차로 또다시 여순사건을 언급하는 이후 기록에서 활자화되면서 실재하는 ‘신화’가 되었다.

여수시내를 순찰하다 저격을 당한 일이 있다. 전봇대 뒤에서 날아온 총알은 나를 빗나가 지프차 차양기둥을 맞고 튕겨 나갔는데 아찔했다. 잡혀온 것은 자그마한 여학생이었다. 내가 ‘나를 죽일 셈이었느냐’고 버럭 고함을 치는데도 눈 하나 깜박하지 않고 ‘내일이면 인민군이 와서 우리를 해방시킬 것’이라며 오히려

209) 초토화작전의 결과 일반 시민은 막대한 재산피해와 함께 전쟁같은 공포를 체험했다. “시내는 이곳저곳에서 불길이 충천하고 총소리와 불에 타는 기왓장 터지는 소리 등 쿵쿵뚱뚱하고 화약냄새와 화재의 불길과 연기로 타는 냄새는 숨이 막히었다. 피난민은 이불을 이고 옷보통이를 들고 두손을 들고 눈물이 글성글성하면서도 울지도 못하고 공포에 가득차서 떨리는 걸음으로 딸을, 아들을 업고, 이끌고 갈팡질팡 피난소로 미친 사람 모양으로 걸어간다. 불 속에서 아버지를 찾고 어머니는 아들을 찾아 불 속으로 무서운 줄도 모르고 뛰어 들려고 한다.” (서울신문, 1948. 10. 30).

210) 광주에서 제1차 고등군법회의가 끝난 뒤 법무총감 김완룡중령은 발표를 통해 피고 중에는 전문대학 출신이 다수 있고 대부분이 교육자이며, 이들은 학생을 동원하고 무기를 주어 양민을 대량 학살케 하고 학생들에게 안내하게 했다고 밝혔다. 다른 신문에는 중등학교 교원들이 치안대 취조위원으로 활약했다고 보도됐다(『여수·순천 등 피난 지구 답사기(4)』, 민국일보, 1948. 11. 26).

211) 서울신문, 1948. 11. 6.

큰 소리를 쳤다. 아연할 지경이었다. 그 학생을 끌고 여수여중으로 갔는데 약 2백 명의 같은 패거리들이 모여 있었다. 한참동안 그들을 혼계해 집으로 돌려보냈다.²¹²⁾

당시 작전에 참여했던 함병선의 이 글에서는 잡혀온 총을 쏜 사람이 여학생이라는 것조차 확실하지 않다. 왜냐하면 진압군 장교를 조준 사격하여 죽이려 한 정도의 행위면 당시 상황에서 이는 즉결처분을 당하거나 사형감이었다. 그런데도 함병선은 이 여학생을 혼계만 하고 돌려보냈다고 하니, 그 자신도 이 여학생이 총을 쏘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듯하다. 또 눈길을 끄는 것은 함병선이 여수여중에 모여 있던 200명의 여학생들을 현장에서 붙잡힌 여학생과 ‘같은 패거리’라고 표현한데서 알 수 있듯이, 이들 모두를 반란군에 동조했다고 판단한 점이다. 아마 그들이 그런 오해를 받았다면 그것은 그들이 단지 송옥이 교장으로 있던 학교의 학생이었기 때문이거나, 이쪽과 저쪽을 분명히 하는 단순한 군대식 논법에 그렸을 것이다.

여수여중 학생들이 많이 가담했다고 보도됐지만, 다른 기사에 의하면 겨우 10여명만이 가담했다고 한다.²¹³⁾ 당시 여수여자중학교 교사로 근무했던 전병순은 재 소집된 학생들은 소문과는 달리 재적인원에서 꼭 두 명밖에 부족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한 명은 모 은행 지점장의 딸인데 사건 직후 고향으로 전학시키기 위해 데려갔기 때문이었고, 또 한 명은 그 가족이 전혀 혐의가 없어 건재한 데 이유 없이 행방불명이 되었다는 것이다.²¹⁴⁾

학생들의 동태를 알아볼 수 있는 자료로는 당시 순천농림학교장이 사건 당시에 기록한 일기가 있다.²¹⁵⁾ 사건이 진압된 후 순천농림학교에서는 출석상황을 파악했다. 이를 보면 교사는 총 52명 중 45명이 출석했는데, 검거나 행방불명이 3명이었고 나머지는 병고, 가정보호, 여행 중이었다. 학생은 총 848명 가운데 635명이나 결석하여 무려 75%의 결석률을 보이고 있어 얼핏보면 많은 학생이 사건과 관련 있는 듯이 보인다. 하지만 여순사건과 관련하여 결석한 학생은 검거도피로 파악된 22명에 불과하였고, 202명이 병으로 결석하였고 112명은 가정보호 하에 있었으며, 나머지는 행방불명(7명)이거나 사망한 경우(8명)확인되지 않은 경우(284명)이었다.

그런데 개학하기 전 중학교 당국은 등교소식을 읍내 요소에 광고문을 붙이고, 교사들이 가정방문을 하여 알리기로 하였지만 사건에 가담한 직원도 있고 가정과 학생 자신의 공포감으로 등교가 쉽지 않을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²¹⁶⁾ 11월 1일 개학한 결과 등교한 순천

212) 백선엽, 1992, 『실록 지리산』, 고려원, 191쪽.

213) 「박종화:남행록(3)」, 동아일보, 1948. 11. 18.

214) 전병순, 1987, 「작가의 딸」, 『절망 뒤에 오는 것』, 중앙일보사.

215) 「박종화:남행록(完)」, 동아일보, 1948. 11. 21.

216) 국민학교는 여수가 진압되자마자 10월 28일 개학했지만 중학교는 11월 1일 개학을 하기로

농림학교의 학생 숫자는 그리 많지 않았지만 4일이 지난 11월 5일 등교율은 40%에 이르러 1일에 비해 무려 15%가 증가했다. 이 같은 등교율 증가현상은 시일이 가면서 더욱 높아졌으리라 생각된다. 11월 5일 현재, 순천 각 학교의 학생 출석률은 초등학교가 100%였고, 순천중학교 35% 매산중학교 40% 여자중학교 60% 사범학교 45% 농림중학교 40%였다.²¹⁷⁾ 학교에 출석하지 않은 학생들이 모두 반란에 가담한 것은 아니다. 기숙사에 있던 학생들은 반란사건이 진정되면서 학교가 휴교상태에 있었으므로 급히 가정으로 돌아간 후였다. 이런 처지의 학생들은 사건이 진 지역을 휩쓸고 간 뒤라 학교에 등교할 만큼 여유가 없었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에게는 통학기차 같은 교통수단이 마련되어있지 않았다.²¹⁸⁾

진압군과 정부가 퍼뜨린 여학생들의 반란가담의 진상은 1949년 봄 여수군 장학사 오길언이 여수여중에서 열린 여수지역 교원세미나에서 ‘반란사건에 대한 조사보고’에서 잘 드러난다. 그는 항간에서 떠돌고 있는 것과 같이 여학생들이 총을 들고 싸우고 국군에게 오빠하고 달려가서 치마 속에서 총을 꺼내 국군을 죽였다는 말들은 사실무근한 낭설이라고 하였다. 그는 문교부 지시에 의해서 학생 한사람 한사람의 소재를 확인해보았는데, 조사한 결과 여학생 가운데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하였다. 여학생이 총을 들고 가담했다면 죽은 사람도 있고 군 당국에 처형당하거나 군법회의에 넘겨졌어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다. 1949년 당시 여학생 수가 많이 줄었고 고학년에는 나오지 않는 학생도 있으나 모두 집에 무사히 있는 것을 직접 확인했다는 내용이었다.²¹⁹⁾

결론적으로 학생들이 여순사건에 가담하게 된 것은, 정부의 극과 극을 오가는 선전처럼, 순진한 상태에서 군인이나 좌익의 권유에 이끌렸던 것도 반란군인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앞에 나서서 진압군에 맞섰던 것도 아니었다. 학생의 여순사건 참가에 대한 대조적으로 구별되는 양극적 이미지 모두는 정부와 진압군의 용도에 따라 퍼뜨린 것에 불과하였다. 순진한 학생이라는 이미지는 사건에 가담한 학생들을 분리시키기 위해서였고, 극렬한 학생이라는 이미지는 여순 진압작전의 무모함 때문에 생긴 양민피해 즉 작전실패를 합리화하려는 호도책의 일환이었던 것이다.

하였다.

217) 독립신문, 1948. 11. 11. 한 신문은 오경심(36)교사를 위시로 하여 순천사범학교 학생 60%가 반란에 참가하였고 순천농중, 순천중학, 매산중학 순위로 참가자수가 많다고 위의 신문과는 다르게 보도하였다(세계일보, 1948. 11. 2).

218) 11월 26일 제5여단 정보부참모 김창선대위는 중학교 학생들이 12월 1일까지 등교하지 않으면 폭도로 처단한다는 경고문을 발표했는데, 이는 학생에 대한 진압군의 시각을 잘 보여준다(동광신문, 1948. 11. 28).

219) 반충남, 1993, 「여수 14연대반란과 송옥교장」, 『월간 말』6월호, 216~217쪽. 반충남은 무장 여학생을 직접 본 목격자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하지만 여순사건에 교사와 학생이 가담했다는 보도는 정부가 강경한 대응책을 내놓을 수 있는 훌륭한 배경이 됐다. 이승만대통령은 11월 4일 여순사건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앞잡이’가 되었고 여학생들도 심하게 반란군에 가담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대통령은 순진한 자녀들이 이같이 된 것은 부모와 교사에게 그 죄가 있는 것이므로 우선 각 학교의 각 정부기관에 모든 지도자 이하로 남녀아동까지라도 일일이 조사해서 불순분자는 다 제거하여 반역적 사상이 만연되지 못하게 하며, 앞으로 어떠한 법령이 발포되더라도 전 민중이 절대 복종해야 한다고 하였다.²²⁰⁾

학생들의 참가에 대한 놀라움과 노여움은 먼저 여순사건에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교원에 대한 교직원을 파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²²¹⁾ 기존의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철저한 ‘국가지상, 민족지상’ 교육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한 신문은 학생들의 반란참가문제를 다룬 사설에서 ‘순진하여야 할 남녀학생이 참가하였다는 것은 불상사중에도 더욱 놀라운 일’이며, 이를 계기로 문교당국은 교육에 대한 심각한 고구(考究)와 강력한 실천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는 학생에게 건전한 국민주의를 고취하여야 하고, 교사들의 생활을 보장해야 하며, 학과주입에 치중하기보다는 사회생활·정서교육에 치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²²²⁾

그러나 한 작전장교가 말한 것을 소설가가 윤색하여 정리한 다음과 같은 말은 여순사건을 겪은 이후 남한의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선언 같았다.

우리 민족은 이렇게 나가야 하고 이렇게 싸워야 하고 이렇게 살아야 하고 이렇게 죽어야 하는 것을! 확고부동하게 조직적으로 체계 있게 머리 속에 깊이 넣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공연한 미국식 민주주의, 미국식 자유주의가 이러한 혼란을 일으켜 놓은 것입니다. 이 악랄한 세계제패의 공산주의자의 사상은 학교 뿐 아니라 군인과 사회 속 각종 각 방면에 침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 불행한 이 반란을 일으킨 원인입니다. 정부에서는 우리 민족이 가져야 할 국시를 하루바삐 명확하게 세워서 3천만 전 민족의 머리 속에 깊이깊이 뿌리박고 일어나도록 교육하고 선전해야 할 것입니다.”²²³⁾

정부는 여순사건 후 학생군사훈련 실시 계획을 마련했다.

220) 국제신문·수산경제신문, 1948. 11. 5.

221) 세계일보, 1948. 11. 21.

222) 조선일보, 1948. 11. 2.

223) 「박종화:남행록(完)」, 동아일보, 1948. 11. 21.

4. 고등군법회의와 민중의 인명·재산피해

진압 후 부역자 색출과정에서 즉결처분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후 군사재판에 넘겨졌다. 어찌보면 재판정에 선 사람들의 숫자를 분명히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지도 모른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전투에서나 부역자 색출과정에서 즉결처분을 받고 죽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자신들의 직권 아래 구금되어 있던 사람들을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부분 무참하게 즉결처형 했다.²²⁴⁾ 14연대가 게릴라가 된 다음에도 즉결처분은 계속 이어졌다. 정식 재판을 거쳐 처형한 이외에도 재판이 열리기 전 진압작전 중이나 그 후에도 탈출 또는 반항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총살은 이루어지고 있었다.²²⁵⁾

순천을 점령한 정부군은 혐의자 22명을 사형했다.²²⁶⁾ 10월 25일 여수에서는 600명의 반란군이 체포되었다고 하지만, 이 날 저녁 10시 40분 대전에 도착한 숫자는 400여 명에 불과했다.²²⁷⁾ 순천으로부터 탈출한 반란군을 쫓고 있던 구례의 국군 12연대는 지리산 노고단 일대에서 소탕전을 전개하여, 11월 4일 약 400명의 포로를 광주 대전으로 압송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막대한 수의 포로를 현지에서 처별’했던 것이다.²²⁸⁾

이처럼 재판에 회부되기도 전에 죽은 반란군과 민간인 수는 혼란된 상황으로 말미암아 그 숫자조차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어느 한 기관도 정확한 피해를 집계하지 않았다. 때때로 신문에 피해가 보도되기는 했지만 어림잡아 짐작으로 보도했을 뿐이고 발표 시기에 따라 들쭉날쭉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 점은 인명피해는 물론 재산피해 역시 당시에 남긴 자료마다 각각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²²⁹⁾

군기대는 반란지구에서 체포된 시민들을 광주나 대전 등 군법회의가 설치된 곳으로 이동시켰다. 미군트럭에는 남녀 젊은이뿐만 아니라 60이 넘는 늙은이, 어린 학생까지 실려갔다.²³⁰⁾ 한 여학생은 인공기를 들고 협력한 혐의를 받고, 수염 난 노인은 3·1운동 때의 투사였지만 인민위원장을 지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으러 갔다.

군법회의는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에서 진행되었다. 계엄지구 내의 행정사무와 사법사무 일체를 계엄지구 총사령관이 장악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여순사건에 관계있는 범죄는

224) 광주전남현대사 기획위원회, 앞의 책, 94쪽.

225) 동광신문, 1948. 11. 6.

226) 세계일보, 1948. 10. 28.

227) 24사단 작전참모부(G-3 Section, X X IV Corps), 1948. 11. 10, 「국방경비대 제14연대와 제6연대 반란사」.

228) 동광신문, 1948. 11. 7.

229) 광주전남현대사 기획위원회, 앞의 책, 93쪽.

230) 정광현, 「반란지구 그 뒤의 모습」, 95쪽.

군인과 양민을 막론하고 군법에 준거하여 처벌하게 되었다. 군법회의는 일반인은 물론이고 신문 기자의 방청까지도 금지하였다. 군법회의가 열리는 장소와 시간까지도 비밀에 부쳤고 신문기사도 국방부의 검열을 받은 뒤에야 보도가 가능했다.

다만 군법회의의 결과로 총살형의 언도를 받은 자가 있게 되면 그 집행만은 사람들이 앞에 공개하겠다고 10월 29일 호남방면 계엄지구 총사령부에 도착한 법무총감 김완룡 중령은 밝혔다.²³¹⁾ 사형장면을 공개한 것은 국가에 대항하는 “범행의 근절을 위함”이며 다음부터는 다시금 도발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한 “반도에 대한 응징의 의미”였다. 그러나 이런 발언에도 불구하고 재판 뒤에 결과의 집행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군법재판은 ‘살해’ ‘방화’ ‘강간(sic) ‘선동’ 등의 죄에 대한 ‘근절’과 ‘응징’이라는 방침 하에서 진행되었다.²³²⁾ 육군고등군법회의의 재판장 이지형은 기자회견에서 “반군들이 감행한 천인공로 할 무자비한 참상에 비추어 그 죄과에 상당한 형의 응보적으로 언도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군 형사정책상으로 보아 절대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11월 한달 동안 군법회의가 진행된 상황을 살펴보면, 11월 4일부터 25일까지 사건 현 지인 여수, 순천 뿐 아니라 계엄사령부가 있었던 광주, 중앙고등군법회의가 설치된 대전에서 재판이 열렸다. 군법회의는 사건 관계자가 검거되는 대로 재판을 열었기 때문에 11월에 만 대전에서의 육군중앙고등군법회의를 포함하여 모두 5차에 걸친 재판이 있었다. 다음은 신문기사에 근거하여 11월 한달 동안 열린 재판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 여순사건 관련 군법회의와 형량 내용 >

	형 량									출 전
	사형 선고	무기	20년형	5년형	1년형	무죄	보류	양민 판형	총계	
제1차 고등군법회의 (광주, 11. 4)	12	9	11	4		12			48	동광신문 1948. 11. 6 호남신문 1948. 11. 6-13 독립신문 1948. 11. 16
제2차 고등군법회의 (순천, 11. 13 ~ 14)	102		79	75		12		190	458	동광신문 1948. 11. 17
육군중앙고등군법회의 (대전, 11. 6 ~ 11. 20)	224	110		30	28	24	1		417	동광신문, 독립신문 1948. 11. 27
제3차 고등군법회의 (여수, 11. 20 ~ 21)	280		118	108				299	805	동광신문 1948. 11. 24
제4차 고등군법회의 (순천, 11. 24 ~ 25)	73		48	42				40	203	동광신문 1948. 11. 27
총 계	691	119	256	259	28	48	1	529	1,931	

군법재판은 2,000여 명의 관계 혐의자들을 빠른 속도로 짧은 기간 안에 처리해갔다. 광

231) 동광신문, 1948. 11. 5.

232) 당시 어느 신문을 보아도 여수 14연대나 반란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강간을 했다는 기록은 없다.

주와 여수, 순천에서 열린 재판은 무려 1,500명을 단 7일 만에 그 죄상을 분류하여 판결했고 대전에서 열린 중앙군법회의는 11월 6일부터 20일까지 10차례에 걸친 재판 끝에 224명에게 사형을 언도하는 등 약 400명에게 형량을 언도했다.

재판에는 총 1,931명이 회부되었다. 재판 결과 사형이 691명, 무기징역이 119명, 20년형은 256명, 5년형이 259명, 1년형이 28명이었다. 한편 보류가 1명이었고 무죄로 판명된 사람은 48명, 양민으로 판명된 사람도 529명에 달했다.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언도받은 사람이 거의 700명에 달하였지만 아무런 혐의가 없어 석방된 사람도 500여 명이 넘었다.

1차 고등군법회의에서 재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14연대 군인은 물론 남녀노소 양민이 모두 포함되었는데, 고학력층이 많았다. 사형선고를 받은 28명중에는 전문이상 대학을 졸업한 자가 다수이며 교육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고, 여성이 4명이나 포함되어 있었다.²³³⁾ 정부는 이들이 교육계에 침투한 좌익세력이고 이들이 학생들을 사주하여 사건에 가담시켰다고 선전했다. 그 중의 한사람이 제1차 고등군법회의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유명한 여류 소프라노 오경심(吳敬心)이었다.²³⁴⁾ 1938년 동경 제국음악학교를 졸업하고 그 해 6월 조선일보 제1회 신인음악회에 출연하여 일약 음악계에 명성을 날리게 된 오경심은 서울의 보육전문대(현 중앙대학교)에서 교편을 잡다가 해방될 즈음 순천중학교로 내려왔는데, 해방 후에는 순천사범 음악선생님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오경심은 신인음악회에서 긴박감 있는 오페라 아리아를 잘 불러 ‘드라마틱 소프라노’로 이름이 높았다.²³⁵⁾ 오경심이 여순사건 때 어떤 일을 했는지 밝혀진 것은 없다. 다만 당시 ‘3일 군수’로 불리었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의 남편 박만고는 활발한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오경심은 이와 연관되어 무기징역을 받은 것이 아닌가 추측할 따름이다.

한편 미군 G-2보고서에는 1948년 11월 29일 현재 50명의 민간인을 포함하여 총1,700명이 재판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가운데 866명은 사형선고를 받았고, 67명은 사형이 집행되었다. 또한 150명은 무기징역, 541명은 공소사실이 기각되었다. 나머지 혐의자들은 1년에서 20년 징역을 선고받았는데, 이 때 900명의 혐의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

233) 동광신문 1948. 11. 6. 제1차고등군법회의의 선고형량은 이후 변화되었다. 표에 나와 있는 숫자는 최종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234) 호남신문 1948. 11. 13.

235) 민주일보, 1948. 11. 17. 광주 수피아 여중과 이화여자전문학교 음악과를 졸업한 오경심이 좌익활동을 하게 된 것은 순천 감부의 아들이었던 박만고(朴萬古)와 결혼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한 박만고는 좌익성향이었다. 제1차고등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언도받은 오경심은 바로 단체의 청원과 아버지의 도움으로 처형되지 않고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다. 전쟁이 일어나 풀려났으리라고 짐작되지만 그 후 행방은 알려지지 않았다. 오경심에 대해서는 정근식 외 저, 1995, 『근현대의 형성과 지역 엘리트』, 새길, 258~264쪽; 김석학·임종명, 앞의 책, 123~124쪽을 참고.

다고 한다.²³⁶⁾ 또한 1949년 1월 미군 보고서는 여순순천 재판 완료됐다는 1월 10일 경비대 사령부에서 발표를 인용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총 2,817명이 재판을 받았다고 한다. 이 가운데 410명이 사형, 563명이 무기징역을 받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더 가벼운 형을 받거나 풀려났다.²³⁷⁾

한 신문은 1949년 2월에 군법회의 결과를 보도하였다. 이 기사를 보면 2월까지의 모두 9차례에 걸쳐 재판이 열렸고, 혐의가 없어 불기소 석방된 사람이 전체의 20%나 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기사는 군법회의의 혐의자와 불기소 석방자로만 나누어 놓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형량에 따른 인원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 여순사건 관련 군법회의의 혐의자, 불기소석방자 수 >

	혐 의 자	불기소석방자	총 인원
제1차 군법회의	55	12	67
제2차 군법회의	458	190	648
제3차 군법회의	617	110	727
제4차 군법회의	203	40	243
제5차 군법회의	448	114	562
제6차 군법회의	423	117	540
제7차 군법회의	526	130	656
제8차 군법회의	438	185	623
제9차 군법회의	547	137	684
총 계	3,715	1,035	4,750

* 출전 : 「그 후의 반란지구 모습」, 주간 서울, 1949. 2. 제2주 25호

필자는 여순사건에 관련되어 과연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군사재판을 받았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었다. 국방부에서는 11월에 재판을 진행하면서 그 결과를 간간히 발표했지만 이는 중간발표였을 뿐이고 12월에 가면 재판결과도 제대로 보도되지 않았다. 따라서 재판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통계를 알 수가 없는 것이다.

236) Hq. USAFIK, G-2 Periodic Report(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주한미군 정보일지』)1948. 12. 4일자. 632쪽. 존 R. 메릴, 1988, 『침략인가 해방전쟁인가』, 과학과 사상사, 219쪽의 서술은 이 자료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번역과정의 오류로 재판에 회부된 숫자가 17,000명으로 적혀 있으나 이는 1,700명의 오역이다. John Merrill, 1989, Korea : The Peninsular Origins of the War, Associated University Presses, Inc. p. 113을 참조. 이를 인용한 광주전남현대사 기획위원회, 앞의 책, 94쪽도 마찬가지로 오류를 범하고 있다.

237)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49. 1. 12. #1035.

재판이 끝난 뒤에는 사형이 때때로 집행되었다. 제1차 고등군법회의에서 사형언도를 받은 12명에 대한 사형집행은 11월 16일 오후 3시 광주군 지산면 계금산 산록에서 이루어졌다. 제5여단 사령부 군기대에 의하여 집행된 사형장에는 군경 및 신문기자가 입회하였다.²³⁸⁾ 제2차 군법회의 집행은 11월 24, 25일에 걸쳐 대전과 광주에서 집행될 예정이라는 기사가 나왔으나 실제로 집행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²³⁹⁾ 대전의 육군중앙군법회의에서 사형언도를 받은 224명 가운데 사병 50명에 대한 사형집행은 11월 27일 오전 10시 40분 대전에서 실시되었다.²⁴⁰⁾

사형집행은 다음 해도 이어졌다. 1949년 1월 17일 대전형무소에서는 14연대 출신 군인들에 대한 사형 집행이 있었다. 이날 아침 10시 30분부터 시작하려던 사형집행은 의무장교가 없고 집행할 사수도 부족하여 잠시 중지되었다가 사수 10여 명을 보강하여 1시간이 지난 11시 30분에야 준비가 끝났다. 총살은 첫 번째 그룹 20명, 두 번째 그룹 18명, 세 번째 그룹 18명, 네 번째 그룹 13명의 차례로 진행되어, 모두 69명의 군인들이 총살되었다. 시작 45분만인 12시 15분에 총살이 끝났는데, 이들 대부분은 18세 가량의 젊은 청년들이었다. 죽음을 앞두고 한 젊은이가 공산주의 노래를 부르자 마지막 그룹도 노래를 따라 불렀다. 총살 장면을 기록한 한 문건은 그들은 자신들이 묶여 총살될 말뚝으로 끌려왔을 때 군가를 불렀고 피살당한 수감인 대다수가 자기들은 무죄라고 말했다고 하였다.²⁴¹⁾

진압작전 과정에서는 인명피해도 많았지만 가옥이나 재산피해도 엄청나게 발생했다. 반란군들에 의한 피해는 14연대가 산악지대로 도망가면서 가져간 금융기관의 현금과 쌀 정도였다. 국방부는 반란군이 여수에서 3,550만원, 순천에서 500만원 등 총 4,000만원을 가져갔다고 발표했다.²⁴²⁾ 다른 지방에 보내려고 여수항에 내렸던 쌀 5천석 가운데 약 천여석이 없어졌다.²⁴³⁾

이 외의 심각한 재산상의 피해는 없었다. 그러나 진압군의 공격으로 발생한 시민들의 피해는 이에 비할 수 없이 막대했다. 전투과정에서 길가의 집들과 주요 건물들에는 별집 뚫어지듯 총구멍 자리가 나 있었다. 그러나 진짜 큰 피해는 전투과정에서 생긴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진압군이 시내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했던 것이다.

238) 서울신문·자유신문, 1948. 11. 19.

239) 대한일보, 1948. 11. 20.

240) 서울신문, 1948. 11. 30. 한편 독립신문, 1948. 11. 21일자 11월 23일에 1차로 8명, 2차로 (일자 미정) 20여 명이 처형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241) 「검거된 군인들의 총살의 건」(1949. 11. 17), 제2여단장 고문 육군소좌 아르노 뵈. 모우이츠 보고 총집에서. 로동신문, 1950. 8. 11.

242) 「10월 29일 국방부 발표 제6호」, 평화일보, 1948. 10. 30; 서울신문, 1948. 11. 9.

243) 조선일보, 1948. 11. 2.

여수에 진압군이 들어왔던 26일 여수 서시장, 27일의 충무동 시민극장 주변의 화재는 여수시내의 중심가를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었다. 이 화재로 서교동, 중앙동, 교동, 수정동이 전소됐고 석천동, 덕대동, 철산동은 일부가 불탔다. 이 지역이 시내 중심가였던 만큼 은행, 금융조합, 경찰서, 우편국, 토지행정처, 여수일보사, 금강·여수호텔, 여수극장, 각 병원 공장 등 각종의 근대적 건물들이 완전히 불에 타 여수읍의 가옥소실은 2천여 호에 이르렀고 피해액만도 100억원에 이르렀다.²⁴⁴⁾

이 화재의 원인에 대해서는 진압군의 포격 때문이라거나, 반란군이 최후 발악으로 석유를 뿌리고 달아나면서 방화했다거나 진압군이 의도적으로 불을 놓았다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그러나 잔여 반란세력은 이들에 걸쳐 방화할 수 있는 전투력이나 여력을 전혀 갖고 있지 못했다. 더욱이 27일은 시내에서 저항이 거의 사그라진 뒤였다. 또한 불이 난 시각은 어두워서 진압군이 박격포를 쏘지 않을 때였다. 또한 박격포격으로는 그렇게 큰불을 낼 수는 없었다. 26일의 불이 난 서시장은 서국민학교에서 25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는데, 당시 서국민학교에는 진압군이 주둔하고 있던 곳이었다. 그럼에도 저녁 8시에 불은 불은 진화작업을 하지 않아 서교동 일대로 번져 밤새도록 타다가 다음 날 아침 10시경에야 넓은 도로를 넘지 못하여 꺼졌다.²⁴⁵⁾ 27일 화재도 8시경에 발생했다. 이 불은 교동을 태우고 해안으로 번져 휘발유통을 연달아 터뜨리면서 중심가를 완전히 태웠다.

당시 불이 났을 때 소방서장이 불을 끄려고 사람들을 모으자 5연대장 김종원이 총대로 서장을 구타하여 쫓아냈다는 증언은 이틀 동안 여수 중심가를 전소시킨 이 불이 진압군의 의도적인 방화였다는 추측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불을 끄러 나갈 수 없었고 여수 시민들은 두 눈을 뜬 채로 집과 재산이 불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²⁴⁶⁾ 당시 제주토벌작전에서는 태워 없애고, 굶겨 없애고, 쏘아 없애는 삼광삼진(三光三盡)방식이 사용되었는데, 여수진압에서도 불을 질러 진압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되었다.

244) 조선일보, 1948. 11. 21; 서울신문·독립신문, 1948. 11. 9. 여수가 순천보다 재산피해가 막심했던 것은 이 화재 때문이었다.

245) 김계유, 앞의 글, 285~286쪽.

246) 광주전남현대사 기획위원회, 앞의 책, 156쪽. 이 화재로 2천여 호가 타버려 이재민 4만여 주민들은 가산을 소실 당하고 맨 알몸이 되었다(조선일보, 1948. 11. 2).

다음은 11월 1일 현재 전남도 보건후생당국이 집계한 인명, 재산피해 통계이다.²⁴⁷⁾

<여순사건 당시 인명 및 가옥·재산피해>

지 역	인 명 피 해					가옥·재 산 피 해			
	사망	중상	경상	행방불명	총계	소실	전 파	반 파	피해예상액(만원)
여 수	1,300	800	350		2,450	1,538	-	198	373,600
순 천	1,134	103	-	818	2,055	13	-	-	1,350
보 성	80	31	30	7	148	-	3	2	200
고 흥	26	42	8	-	76	-	-	-	-
광 양	57	-	-	-	57	-	-	-	-
구 례	30	50	100	-	180	-	38	-	1,460
곡 성	6	2	-	-	8	-	4	6	450
계	2,633	1,028	488	825	4,974	1,551	45	206	377,060

11월 4일 현재 여수의 피해액은 무려 100억원을 넘고 이재 호수는 1,600여 호에 약 1만여 명을 넘으리라고 추측되었다.²⁴⁸⁾ 재산피해는 가옥에만 그치지 않아서 여수지역의 수산관계 피해액은 총 4억원에 이르렀다.²⁴⁹⁾ 또한 10월 29일 국방부 발표에 의하면 여수에서 3,550만원, 순천에서 500만원을 총 4,000만원을 반란군이 가져갔다고 한다.²⁵⁰⁾

이같이 여순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한 것으로 드러나고 집 없는 사람이나 가장을 잃어 살길이 막연한 사람들이 추위에 떨며 거리를 방황하자 기획처에서는 응급구호대책을 세우기 위하여 두 명을 현지에 파견하고 2억 5천만원을 구호비로 책정했다.²⁵¹⁾ 그러나 피해 복구를 위해 구성된 여수부흥기성회가 더 많은 구호자금을 타내기 위해 국군 진압과정

247) 호남신문, 1948. 11. 5. 대동신문, 1948. 11. 9일자에도 이 통계가 실려 있으나 호남신문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반란피해 구호 예산안은 서울신문, 1948. 11. 16을 참조.

248) 독립신문, 1148. 11. 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1, 452쪽에는 여수에서 관민 1,200명이 죽었고, 경상자는 1,150명, 가옥소실 파괴 1,538동, 이재민은 9,800명으로 되어 있다. 한편 서정태 편, 1957, 『민주경찰』 제3권 제1호에 따르면 11월 3일 현재 여수지역 피해는 가옥 피해가 전소가옥 1,384호, 반소가옥 54호이고 인명피해 사망자는 469명, 부상자 510명, 이재민 10,065명, 가재 잃은 세대가 1,921세대여서 피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42억 2,645만 8천원이라고 하고 있다.

249) 수산경제신문 1948. 11. 9; 동광신문, 1948. 11. 10. 전라남도 수산당국의 조사한 수산관계 피해 내역을 보면 어업용 자재나 생산제품 등 어업관계 피해가 1억 9,600만 원이고, 어업 조합 피해가 7,500만 원, 조선수산 등 기타 수산기관 피해가 1억 3,775만 원이어서 총 4억 850만 원의 피해액이 집계되었다.

250) 평화일보, 1948. 10. 30; 서울신문, 1948. 11. 9.

251) 자유신문, 1948. 11. 13.

의 인명피해까지도 14연대 치하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조작했다는 지적도 있다.²⁵²⁾ 이듬해인 1949년 7월 9일 국회는 17억원의 여수재해복구비를 10년 기한 할부로 융자한다는 정부안을 통과시켰으나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흐지부지되었다.²⁵³⁾

IV. 맺음말

여순사건은 당시의 정치 사회적 지형을 변화시키면서 전쟁 전 남한사회의 기본질서가 잡히는 과정에서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다. 그러나 여순사건이 일어난 지 50년이 지났지만, 이 사건의 사실과 실체에 대한 규명은 아직도 요원하다. 50년이 지나도록 묻혀있는 죽은 자와 산 자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는 날은 언제인가? 1948년이라는 같은 해에 일어난 ‘제주4·3의 현재적 움직임은 여순사건을 돌이켜보는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여순사건의 많은 사실들은 과장되거나 은폐되고 근거 없이 확대되면서 어느 것이 사실이고 어느 것이 허위인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의 신화가 되었다. 당시 신문은 사실 확인 없는 보도를 양산했고 이후 관련 기록들은 한쪽의 일방적 시각 밑에서 서술되었다. 여순사건 연구가 먼저 사실에 대한 규명부터 출발하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순사건이 일어났을 때 정부는 이를 김구 한독당 세력을 압살하는 계기로 활용하고자 했으나 여의치 않자 일반 민간인의 반란과 북과 연결된 공산주의자들의 소행으로 몰고 갔다. 이는 군 내부에서 발생한 반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정부의 일관된 방침이었다. 정부는 군경의 마찰이나 민중에 대한 경찰의 가혹한 행정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오히려 여순사건을 기화로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고 학생들을 학도호국단으로 편성하거나 경찰 증원으로 대응해갔다.

이 같은 정부의 대응이 불러일으킨 가장 큰 피해는 민중에게 모두 전가됐다. 여순사건이 휩쓸고 지나간 지역의 주민들은 ‘부역자’ ‘빨갱이’로 몰리면서 술한 인명 피해와 재산피해를 감수해야만 했다. 강화되는 반공체제 앞에서 다른 목소리는 허용되지 않았다. 아무 근거 없는 누명 때문에 국회의원은 빨갱이로 몰리고 검사와 학교 교장은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다. 이름 없이 죽어간 수많은 사람의 숫자는 아직도 알 수 없다. 또한 여수순천지구에 내려진 계엄령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중대한 헌법위반 사항이었으나, 정부의 위협과 강경한 분위기 조성으로 정부에 비판적인 국회조차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정치적 압력에 쫓긴 현지의 무리한 진압작전의 실패의 후과(後果)가 지역 주민의 피해

252) 김계유, 앞의 글, 295~296쪽.

253) 경향신문, 1949. 7. 10.

로 전가됐다는 점은 여순사건에서 가장 가슴 아픈 측면임과 동시에 당시의 정부 태도에 대한 엄격한 비판이 필요한 지점이다. 진압군과 정부는 학생들이 반란에 열렬히 참가하고 끈질기게 저항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의 강경하고 탈법적인 부역자 색출을 합리화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 한 번에 목숨이 오고가는 긴박한 상황에서 지역공동체는 산산조각 났으며 일반 민중의 마음 또한 분열되었다. 여순사건에서 나타난 민중억압의 양상은 여순사건 이후 더욱 체계적으로 강화되었고 당시의 한 국회의원이 지적했듯이 파시즘과 유사한 길을 가고 있었다. 여순사건은 지역사회에서 출발했고 거기서 그치기는 하였지만 그 성격은 전국적인 범위에서 규정되었고 그 영향 또한 그러했던 것이다.

제2장 여순사건의 진상규명 과 명예회복을 위한 해법

전남지방의 정치상황과 여순사건	156
여순사건과 군 -육군을 중심으로-	169
文獻資料와 證言을 통해본 麗順事件의 피해 현황	190

전남지방의 정치상황과 여순사건

안 종 철(민주화보상지원단 전문위원:정치학박사)

I. 머리말

최근 들어 양민학살 문제가 언론의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과거 억압 정권기에는 제기하기가 어려운 문제들이었는데 그것이 가능한 정치공간이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생각될 수 있다. 그렇지만 아직도 국가권력의 성격상 백일하에 그것을 밝혀내기에는 많은 난관이 있음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군의 노근리 양민학살사건이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하였을 때 국가가 보여주었던 자세들에서 아직도 우리는 자유롭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미 한국현대사의 진행과정에서 국내의 각 지역에서 발생하였던 양민학살문제가 지역민들에 의해 제기되었지만 별다른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다가 미군의 양민학살 문제가 가시화 되면서 더불어 노정될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의 슬픔이 아닐 수 없다.

한국현대사는 해방직후부터 국가정통성의 문제로 끊임없는 갈등과 대결의 연속이었다. 해방 3년의 미군정시대를 거치고 제1공화국이 수립된 후 국가 정통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그것은 해방이전 모든 민족운동이 독립된 통일 조국을 건설하겠다는 의지의 발로였으나 결국은 해방이후 분단국가로 귀결됨에 따라 국민의 좌절은 이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1948년 제1공화국이 수립되어 2개월이 지나자마자 제1공화국의 정통성 확보가 확립되지 못함으로서 이에 대한 저항과 체제위기로 인해 여순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의 발발 배경과 원인을 엄밀하게 규명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다. 여순사건이 직접적으로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14연대의 반란으로 촉발되었지만 그것이 여수와 순천 그리고 인근 지방으로 신속하게 확산되었던 상황을 고려해본다면 당시 여순지역 일반주민들의 의식상태와 계급적 상황까지 분명하게 정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본 글에서는 여순사건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전남지방의 정치상황과 여순사건을 연계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당시를 기록하고 있는 여러 자료들을 엄밀하게 검토하고자 한다. 당시를 기록하고 있는 문

서들은 많지 않아 어려운 점이 많으나 아직까지 광주민보, 동광신문, 호남신문이 보존되어 있고, 미군정 정보보고서에서 관련기록들을 탐색하여 정리하였다. 이들 중 서로 상반되게 기록하고 있는 부분들은 엄밀한 검토를 통해 가장 객관성이 크다고 입증되고 있는 부분을 취하기로 한다.

II. 이승만 정권 수립전후 전남지방의 정치지형

1. 해방 후 전남지방의 정치상황

8·15해방 직후의 한국사회는 일본제국주의의 통치기구가 붕괴된 후 그 정치적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전국 각지에서 광범위하게 건준 조직과 인민위원회조직이 민중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조직되기 시작하면서 한국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지방정치가 활성화된 시기였다. 일제의 갑작스런 항복은 일시적인 치안의 공백상태를 가져왔으나 건준의 지방조직과 자치위원회, 인민위원회 등으로 불리우는 여러 지방조직들이 인민위원회로 통합되었다. 중앙의 건준 및 인민공화국이 좌우파 명사 중심의 조직으로 출발하였다면 지방의 인민위원회는 오히려 민중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하여 밑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었다. 인공의 중앙조직이 중앙과 지방간의 조직적 제휴형성에 실패하고 서울을 중심으로 한 정치에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즉 예정된 미군정에 대항하여 평화적인 정치활동을 하는 데에만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중앙은 비효율적이 되기 쉬웠는데 반해 지방인민위원회는 여전히 전국에 걸쳐 강력하고 적극적이었으며 다른 어떠한 조직도 당시 1946년 12월까지 인민위원회에 대항할 만한 것은 없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군정의 고위관리까지도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곧이어 진주한 미군정은 자신들이 미리 준비한 대한정책에 따라 점령지역에 대한 점령정책을 시행하였다. 친미적이고 반공적인 정권이 들어서야 한다는 기본적인 구도로 인해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던 좌익세력을 배제하는 정책이 강력하게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상황과 더불어 전남지방에서도 1946년 전반기부터 우익의 우세로 기울어지고 있었다. 미군의 진주로 인민위원회 조직이 해산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조선공산당이 불법화되면서 전남지역에서도 좌익세력이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남의 동부지방은 해방초기부터 사회경제적인 조건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우익세력에 비해 좌익세력의 힘이 약한 지역이었고 이러한 영향으로 좌익세력이 별다른 활동을 벌일 수 없었기 때문에 미군에 의한 탄압 역시 미미한 정도였다. 따라서 동부지방에서는 좌우익간의 공존관계가 1948년 초까지 지속되고 있었다. 전남동부지방의 좌우익간의 공존 관계는 계속

되는 인플레이, 강제적인 미곡수집 등의 누적으로 일반대중의 삶의 조건이 극도로 악화되고 동시에 분단이 기정사실화되기 시작한 1948년 봄부터 와해되기 시작하였다.

1948년 2월 6일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입북을 저지당함으로써 남한만의 단독선거가 거의 확실해지자 민전과 남로당 세력은 2월 7일을 기해 유엔 한위반대 남조선 총파업위원회 명의의 전국적인 파업과 파괴, 시위, 맹휴 등을 선전 선동해나갔다.

경인지역 일대를 비롯하여 경남북, 전남북,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인 규모로 파업, 파괴, 시위, 맹휴 지역이 확대되어 갔으며 이에 따라 전국적인 교통과 통신망, 각 생산기관, 행정기능이 일시 마비되기도 하였다. 27구국투쟁시기에는 주로 파업, 파괴, 맹휴, 빨라살포, 시위 등이 주를 이루었으며 경남 일대와 수원에서는 경찰서 및 관공서 습격, 우익 테러까지 발생하였다. 이 시기에 전남지방에서는 습격과 테러사건과 같은 큰 사건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이 기간 동안 전남에서 발생한 확인 가능한 사건은 광주에서의 조선운송, 미창, 인쇄공장의 노동자 파업, 학생 3천명 맹휴, 빨라 52만장 살포 등의 사건, 목포에서 해운, 미창, 대동고무공장 파업, 여수에서 철도와 조선운송노동자 5천명 파업, 빨라 2만장 살포 등의 사건이다. 그 외에는 장성탄광과 화순탄광의 노동자들의 파업과 목포의 기상관측소 일부직원이 파업을 한 정도였다.

그러나 2월말에 들어서면서 전국적인 소요사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2월 26일 유엔총회에서 선거가 가능한 지역만이라도 선거를 실시할 것을 결의하고 강행할 것을 결의하는 시기를 전후해서 전국적으로 경찰서 및 면사무소 습격, 우익인사에 대한 테러가 속출했다. 25일부터 27일 사이 전북에서만 34건의 경찰지서 습격사건이 발생했고 2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전남에서는 3.1절 국경일에 주한미사령관 하지 중장이 남한내에서의 총선거 실시를 발표하는 것과 때를 맞추어서 폭력적인 소요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전남에서의 폭력사태는 3월 1일에서 8일 사이에 그리고 3월 13일에서 27일 사이에 발생했다.

5.10 제헌선거를 위한 유권자 및 입후보자 등록이 1948년 3월 30일부터 시작됨으로써 남로당을 중심으로 한 단선단정반대투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2월과 3월에 걸쳐 전개한 이른바 구국투쟁은 주로 유엔 한위 및 미군정에 단선 불가를 주장하는 방어적 측면이 강조된 것이었으나 4월에 들어서는 선거를 강행하려는 미군정과 이승만 한민당의 우익세력에 정면으로 대항해서 실력으로 단독선거를 저지한다는 공격적 측면이 강조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로당은 이러한 전술적 전환 그리고 구국투쟁과정에서 생긴 조직력의 손실을 감안해서 정상적인 당 조직과는 별도로 중앙당의 지시를 받는 선전

선행대와 도당의 지시를 받는 유격대, 백골단, 인민청년군 등과 같은 특수조직을 4월 1일부터 편성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미군정의 경무부장 조병옥은 예상되는 남로당의 단독선거 파괴공작을 효과적으로 저지하기 위해 4월 중순 선거를 한달가량 앞두고 향토방위를 견고히 하기 위해 외래의 불순분자 내지 모략선동의 여지를 봉쇄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각 경찰지서 혹은 동리, 가로 단위로 경찰 보조력으로서 향보단 설치를 지시했다.

전남지방에서 남로당의 선거 저지투쟁은 4월 5일부터 시작해서 4월 29일 까지 비교적 산발적으로 나타났다. 공격대상은 초기에는 선거등록 사무소 습격, 후기에는 우익 및 지방 관리에 대한 테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경찰지서 습격은 상대적으로 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었고 경찰서를 습격하는 경우 3월과 마찬가지로 총과 탄약을 탈취해갔다. 습격 군중의 규모는 수십명에서 수백명 규모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남로당은 남북연석회의의 결정에 따라 남조선단선반대투쟁 전국위원회를 각 시군에 조직하고 선거 저지공작을 2단계로 펼쳐나갔는데 선거 실시 전까지는 선거를 파탄시키는 투쟁을, 선거가 실시되면서부터는 무효화투쟁으로 전개해나갔다.

본격적인 5.10선거 저지공작은 김구, 김규식 등 단선을 반대하는 우익, 중도계 정당 사회단체들이 남북연석회의에서 돌아온 직후 김구, 김규식 명의로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5월 6일 이후부터 시작되었다. 남로당은 5월 7일을 전후해서 전국적인 파업, 파괴, 맹휴, 시위, 빼라 살포, 경찰서 습격, 투표소습격, 우익요인 및 청년단 테러 등을 통해 격렬한 선거저지 투쟁을 선전 선동해나갔다.

전남지방에서는 5월 초부터 5월 말까지 전화선 전선 전신주 절단, 입후보자 선거요원 우익인사 청년단원 향보단원에 대한 테러, 투표사무소 경찰지서 습격사건이 계속되었다. 전남도내에서는 2부 13군에서 발생했으며 수십명 규모의 군중은 카빈총, 일제식 소총, 공기총, 권총 등의 총기류까지 사용하여 선거사무소, 투표소, 경찰지서 등을 습격하였으며 선거사무소 및 투표소 습격, 우익인사에 대한 테러가 경찰서 습격보다 더 빈발하게 나타났다. 나주와 보성군에서는 조직적인 무장단체가 경찰지서, 투표소 등을 습격하는 사례까지 있었다. 산악지대에 본거지를 두고 훈련까지 받고 있던 이들 단체는 남로당이 4월 초에 조직한 선전선행대 혹은 백골단, 유격대 등이었던 것 같다. 이들 무장단체는 산악지대 혹은 경찰지서에서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기도 하였다.

2. 전남동부지방의 정치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전남동부지역에서도 소요는 일어나고 있었다. 사건이 발생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군중들의 습격목표는 경찰지서, 대동청년단, 민족청년단, 민주학생연맹 소속의 학생이었으며 그외 지방관리와 지방유지, 한민당원, 미곡창고에 대한 습격, 테러사건도 빈번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주목할 점은 한독당원이나 사무소에 대한 테러나 습격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것은 한독당의 노선이 통일정부를 지향하는 입장이었고 김구 등이 남북협상운동에 나서고 있었기 때문에 단선과 단정을 반대하는 인사들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게 된 것이다. 이 시기에 군중들은 수백명에서 수천명 정도가 집결해서 유엔한위반대, 양군동시철수, 단선반대, 인공만세 등의 구호를 외치며 돌, 곤봉, 죽창, 도끼, 일본도, 휘발유,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하여 경찰지서를 습격하였으며 이때 총과 탄약이 탈취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그 외에 구례에서는 3월 1일 지서 습격 2건, 테러가 3건 발생하여 대동청년단원이 4명 부상, 군중 측에서는 사망 12명, 중상 7명, 경상 2명의 사상자를 냈다는 기록이 보인다. 또한 3월 14일에는 산동면 예안리에서 50명의 군중이 10명의 경찰과 투석전을 벌여 경찰의 발포로 1명이 사망하였다.

순천에서는 3.1절 기념식 행사를 마친 남로당원들이 주동이 되어 대대적인 데모가 벌어졌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순천중학을 비롯하여 각 남여 중학교의 민청학생들이 단독선거반대 구호를 외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와 학련 학생들과 대치하였고, 농민, 노동자들은 삽, 곡괭이, 몽둥이 등을 들고 순천중의 학련 학생들을 포위했다. 사고 현장에 긴급 출동한 경찰의 발포로 2명의 남로당원들을 사살함으로써 사태는 가까스로 수습되었다.

같은 시기에 구례군에서 3건의 테러사건이 있었다. 4월 28일 구례군 토지면에서 숫자 미상의 군중이 우익인사를 타살했으며 동일 광의면에서는 숫자 미상의 군중이 대동청년단 단장과 선거사무원을 습격했으며 4월 29일에는 구례군에서 20명의 군중이 4명의 우익인사의 집을 습격하여 타살했다.

5월에 순천, 광양, 여수에서 습격사건이 발생하였다. 순천의 경우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다. 5월 19일 새벽 1시경 상사면에서 숫자 미상의 군중이 대동청년단의 집을 습격하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같은 시각 별량면에서는 마을 유지의 집이 습격당하여 유지가 살해당하고 그의 아내와 아들이 구타당하고 집이 불타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다른 곳에서도 새벽 1시 40분경 10여명의 군중이 향보단원의 집을 습격하여 방화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광양의 경우 5월 9일 새벽 4시경 20명의 군중이 지서를 습격하여 경찰 2명을 부상시키고 2정의 카빈총과 1정의 일식 장총을 탈취 도주하였으며 군중 측에서는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여수의 경우 5월 10일 돌산면 죽포리에서 수십명의 군중이 투표소를 습격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경찰이 출동하여 30명이 체포되었다.

한편 구국투쟁과정에서 구례, 순천을 포함한 4개 군에서 5.10선거 저지투쟁이 발생하였다. 즉 1948년 3.1절을 계기로 구례의 경찰지서 및 우익습격사건, 순천의 시위군중과 우익학생과의 충돌사건을 계기로 전남동부지방의 군중들은 점차 급진화되고 있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5월 10일 제헌 선거를 전후로 해서 더욱 촉진되고 있다. 5월에 들어 3.1절에 격렬한 대규모 시위양상을 보인 순천은 우익 테러로까지 발전하고 있었으며 1946년 가을항쟁과 1948년 구국투쟁과정에서 거의 아무런 군중의 폭력사건이 나타나지 않았던 광양과 여수에서는 경찰지서와 투표소 습격사건까지 발생하였다.

3. 여순지방의 정치 사회적 상황

해방직후의 전국적 상황과 같이 일반 농민, 주민들의 생활상은 대단히 궁핍한 상황이었다. 해외에서 돌아온 귀환동포들의 급작스런 증가도 원인이었지만 미군정의 미곡 수집령으로 군정당국에 대한 원성이 높아가고 있었다.

여수에서는 1948년 7월 하순부터 8월 상순까지의 2기분 배급을 주지 않아서 8만 여수읍민의 원성이 높은 실정이었다. 식량영단 당국은 2기분 배급식량으로 백미 2,900포 잡곡 4,200포 등 합계 7,100포를 도정하여 분배하여야 하나 도정공장에서 이윤이 박하다 하여 도정을 하지 않아 여수 군민의 생계가 어려운 실정에 있었다. 뿐만 아니라 식량영단이 가공을 의뢰한 공장에서는 쌀을 빼돌리고 대신 모래를 보충하는가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천가마니씩을 착복하는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또한 비료값에도 미치지 못하는 쌀값으로 공출한 쌀을 양정당국의 부주의로 부패시키는 등의 실정을 농민들이 직접 목격함으로써 양식을 굶주리고 있는 상황이었던 여수시민들의 원성은 대단히 높은 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행정당국의 실정과 더불어 48년 7월의 수해로 각 지방에 이재민들이 무더기로 발생하여 많은 재산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순천인근의 주민들은 동정을 요구하고자 救濟會를 조직하고 구제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순천에서도 아래와 같이 금품을 기탁하여 왔는데 일반군민의 따뜻한 동정이 있기를 당국에서는 요망하고 있었다.

대한민족청년단 순천읍단부에서 4240원, 순천전매서직원들이 1000원, 순천상공회에서 5000원을 기탁할 정도로 당시의 수해의 피해는 대단히 컸다. 이러한 수해의 피해로 여수에서는 1948년 7월 7일 벼 707가마가 폭풍우로 인하여 손상당함으로써 여수읍민들의 식량사정이 대단히 좋지 않은 실정이었다.

이미 지척한 바와 같이 전남동부지방은 1948년 초까지 도내 다른 지방에 비해 좌익과 우익이 어느 정도 공존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지역이었다. 따라서 5.10선거 저지투쟁 과정에서 이 지방에서는 군중들의 습격과 테러사건의 빈도가 다른 지방보다 높지는 않았다. 따라서 해방이후 인민위원회와 그에 연계된 조직이 완전히 파괴되지 않고 계속 온존할 수 있었던 전남동부지방에서는 다른 지방에 비해 1948년 중반기의 시점에서도 온건좌익세력 혹은 그 동조세력이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측면은 여순사건 직전 여수와 순천은 빨갱이의 소굴이었다는 기록을 설명해줄 수 있는 단서가 된다.

1948년 전반기의 정치투쟁을 여순사건의 진원지인 여수에 국한시켜 볼 때 민전과 남로당이 주도한 2.7 구국투쟁의 전국적인 총파업에서 철도 및 항만노조 5천명이 대규모로 참가하였을 뿐 폭력사건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그 후 남로당이 주도한 5.10선거 저지투쟁과정에서 5.10선거 당일 투표소 습격사건 1건이 기록되고 있을 뿐이며 그나마 군중동원의 정도나 폭력의 정도에 있어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그러나 학생들의 맹휴는 다른 지방에 비해 매우 조직적이고 광범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는데 5.10선거 직전에 전남에서 13개 학교가 맹휴에 참가할 정도로 학생들의 동향은 맹렬한 편이었는데, 이는 여순사건 폭발 시 학생들이 선동적 역할을 담당했다는 사실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

1948년 전반기의 정치투쟁과정에서 여수지방은 전남도내 다른 지방에 비해 온건 좌익 및 동조세력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남로당의 영향력이 미약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여수지방의 온건 좌익 및 그 동조세력은 5.10선거 후 남로당의 이른바 지하선거, 9월 이후 본격화되기 시작한 이른바 인공기 계양투쟁과 양군철수 주장을 통해 어느 정도 급진화 되었던 것 같다.

한편 5.10선거 이후에도 6월과 7월에 걸쳐 군중들 혹은 무장단체들의 경찰서 습격, 우익테러가 계속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러한 사건들이 빈발하던 지역에서는 5월 22일 항보단이 공식적으로 해체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평화유지단, 의용단 등으로 계속 존속했는데 여수에서는 이러한 경찰보조력 혹은 민간통제조직이 존속했다는 기록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점은 여순사건 발발 시 여수에서 군중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이유를 부분적으

로 설명해줄 수 있다.

48년 2월 24일 여수읍내 군청, 학교 및 2층 건물 국기게양대에 인공기가 게양되었으며 전신주 등에도 작은 인공기가 부착되고 있었으며 별교와 인근의 30여 곳에서도 인공기, 불온 뼈라가 살포되고 있었다. 역시 10월 2일 오후 2시 동순천역 전주감시초소 위에 게양대까지 설치하여 인공기를 게양할 정도로 좌익세력들의 활동은 대담해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경찰서에 대한 습격사건도 발생하고 있었다. 일례로 순천 주암지서는 48년 10월 1일 주암면 오산리 부락에 폭도가 잠복하여 지서 습격을 계획하고 있다는 정보를 듣고 형사 8명을 동원하여 주암지서원 4명과 함께 이날 오전 6시쯤 오산리 부락을 포위, 수색하여 잠복중인 범인 3명을 체포하여 감시하던 중 범인들이 반항하여 그중 일부가 즉사하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단정단선반대투쟁이 절정을 이루었던 데다가 춘궁기가 지 겹쳤던 1948년 5월초에 광주의 4연대 1개 대대를 기반으로 하는 14연대가 여수에 창설되었다는 점이다.

4. 여수 14연대의 창설과 구성

1945년 해방으로 남한에 진주한 미군은 남한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점령기의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한국인에게 권력을 이양하기 위한 일련의 준비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미군의 철수 후를 대비한 한국군 창설이 서둘러 시작되었으며 전국 각지역에서는 美軍事顧問官이 지휘하는 가운데 한국군의 각 연대가 창설되었다.

미군정청은 해방직후 우후죽순처럼 분출하였던 수십개의 사설군사단체와 좌익 군사조직들에게 군정법령 28호이었던 사설군사단체 해산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1946년 1월 12일 국군준비대 등의 사설군사단체를 해산하고 국방경비대와 조선해안경비대를 창설하였다. 국방경비대는 군정법령 제42호에 따라 태능에 있는 일제때의 육군지원병훈련소 자리에 총사령부를 두고 각 지방에 향토연대를 창설하였다. 그리하여 국군준비대에 가입하여 활동하던 일반 병사들은 국군준비대의 해체로 인하여 상당수가 국방경비에 가입하게 되었다.

국방경비대는 당초 미군정청이 경찰의 예비 병력임을 표방하면서 창설하였기 때문에 경찰예비대 또는 향토경비대라고 불리웠다. 따라서 경찰의 하부조직 같기도 하고 군대 같기도 한 애매모호한 성격 때문에 일반인들의 기피 현상도 있었고 군대에 대한 인식이 좋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충원에 어려움이 많아 1개 연대를 편성하는데 몇 개월씩이나 걸리기도 하였다. 그래서 경비대의 충원은 거의 가두 모병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또 당시에는

정치적 상황이 좌우의 구별이 확실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지원자의 경력이나 정치적 성향을 따질만한 여유가 없었으므로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던 좌익활동가, 일반 우범자, 먹고 살기 어려운 실업자들이 손쉽게 가입할 수 있었다.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던 자들은 경찰의 체포를 피하기 위한 보호막으로 경비대를 이용할 수 있었고 실업자들은 당시의 생계유지가 극도로 어려운 상태에서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생활수단으로 국방경비대를 이용하였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국방경비대원들에게 애국심이라든지 민족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5. 군과 경찰의 갈등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방경비대는 경찰예비대라는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경찰도 군대도 아닌 애매한 성격의 것이었다. 경찰은 국방경비대를 자신들의 예하기구로 보고 멸시하는 측면이 있었다. 경찰들은 일정교육을 받은 당당한 치안관리인데 반하여 경비대는 실업자와 우범자가 모인 잡동사니 집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국방경비대 병사들은 상당수가 한글도 깨치지 못한 문맹이었고 농촌의 머슴이나 관공서의 사환 등 경찰로서는 하찮게 볼 수 있는 기층민들이 상당수 있었다. 또한 국방경비대의 복장이 경찰의 복장과 비슷했고 장비에서도 경찰장비가 우수했기 때문에 우월감을 가질 수 있었다.

이처럼 경찰이 국방경비대를 멸시하는 태도를 갖고 있었음에 반해 국방경비대원들은 경찰에 대해 역시 다른 이유로 멸시하고 있었다. 국방경비대원들은 대부분의 경찰들이 일제하의 친일경찰 출신들이고 자신들의 부귀영화를 위해 민족과 국가를 팔아먹은 매국노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또한 ‘군은 경찰의 우위에 있다’는 군국주의적 사고가 그대로 답습되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보다는 우위에 있다는 우월감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객관적 상황과 더불어 국방경비대내에는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는 범법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체포하려는 경찰과 국방경비대간의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이는 여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갈등은 사소한 문제로 폭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예로는 영암, 구례, 순천 등지에서의 국방경비대와 경찰 간의 무력 충돌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은 결국 군사고문단과 상급기관의 중재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었다.

영암의 군경충돌은 1947년 6월 1일 발생했다. 휴가 나온 국방경비대의 하사관 한명과 신북지서의 지서원들 사이에 사소한 시비가 벌어졌는데 그것은 지서 경찰들이 국방경비대원들이 쓰고 있던 모표가 일본의 사꾸라와 비슷하다는 야유를 보내자 하사와 경찰들간에는 싸움이 벌어졌고 영암경찰에서 출동한 경찰들은 국방경비대의 하사를 입건해버렸다. 이 소

식을 들은 광주의 4연대 경비대원들은 구속된 하사의 석방을 요구하기 위해 9명이 영암으로 출동하여 경찰간부들에게 하사의 석방을 요구하자 도경찰청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말에 광주로 귀대하는 도중에 신북지서 앞에서 20여명의 경찰관들에 의해 출동한 경비대원들이 구타를 당하게 되고 인솔자인 2명의 장교가 시멘트바닥에 무릎을 꿇은 상황으로까지 급진전되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4연대의 병사들은 6월 2일 저녁 하사관들을 중심으로 8대의 차량에 270명의 병사들을 동원하여 영암경찰서로 출동하였다. 그들의 당초 목표는 영암경찰서를 포위하여 위협함으로써 구속된 하사관을 석방시키고 구타를 주동한 경찰들을 연행하여 혼내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영암경찰서를 포위하여 위협하는 도중 서로 총격전이 벌어져 6월 3일 새벽 3시부터 7시 30분까지 무려 4시간 반이나 상호간에 총격전이 계속되었다. 긴급히 출동한 4연대장과 영암군수, 영암경찰서장의 개입으로 중지되었지만 경비대의 하사 2명과 경찰 1명이 전사하고 수명이 부상당하는 결과로 끝나게 되었다.

구레사건은 1948년 9월 24일 구례읍내의 한 이발관에서 술에 만취한 구례경찰서 수사계 김모 경사가 이발관 주인의 인사가 불손하다는 이유로 그를 마구 구타하자, 휴가 중 이발관에서 휴식 중이던 14연대 소속 장병이 이를 중재하였다. 이에 화가 난 김경사는 전 서원을 비상소집하여 구례읍내에서 휴가 중이던 14연대 사병 9명을 모두 구금하여 구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정보를 입수한 14연대에서는 즉시 헌병들과 일부병력이 구례로 출동하여 경찰서장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동시에 구속 중에 있던 사병들을 인수하는 사건이 있었다.

함평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48년 7월 12일 국방경비대원 18명이 함평군 학교면 학교지서를 무장한 채 습격하여 전화선을 절단하는 동시에 지서원을 철봉과 장총으로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무려 3시간 동안이나 난타하여 경찰서원 2명이 전치 2주의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있었다.

전남지방에서의 이상과 같은 국방경비대와 경찰간의 갈등 양상은 전국적으로 빈발하고 있었다. 부산역 사건, 장택상 수도청장과 최홍희 소령의 충돌, 대전의 사건, 경북 영일군의 사건, 철도경찰과의 충돌사건, 서북청년단과의 살륙전 등이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III. 여순사건의 영향

1. 여순사건의 정치적 함의 : 우익세력의 조직화

여수와 순천이 탈환되었다고 해서 여순사건이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었다. 진압부대에 의해 읍소재지 및 그 주변지역은 탈환되었지만 폭동, 반란군은 그 주력 및 중요간부들이 주변 산악지대로 도주해서 지속적인 유격전을 전개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1949년 전반까지 계속 진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전남지방은 경직된 반공체제로 구축되어 갔다. 이 반공체제는 여순지역 탈환직후의 철저한 폭동군 및 부역자 색출과 처벌, 국가통제 및 우익단체의 강화, 남로당을 위시한 좌익세력의 붕괴 등의 과정을 거쳐 완성되어갔다. 이 과정에서 민중들의 민생고는 더욱 악화 일로를 걷고 있었다.

폭동군이 산악지역으로 잠입하여 유격전을 전개하자 정부는 여순지역에 국한해서 선포했던 계엄령을 1948년 11월 1일을 기해 전남북지역으로 확대 선포하였다. 또 여순지역에서는 폭동군 치하에서 해체되었던 정당, 사회단체들이 재조직되기 시작하였으며, 우익 청년학생단체는 강화 혹은 신설되기까지 했고, 5.10선거를 전후해서 존속했던 향보단과 같은 경찰보조단체는 민보단 혹은 의용단이라는 명칭으로 재조직 강화되었다.

순천의 경우 충무부대가 신설되었다. 이 단체는 순천경찰서 사찰과 산하의 단체로서 학생연맹과 청년단 출신의 대원 총 7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한민당, 대한부인회 등의 지원과 협조하에 폭동군에 대한 정보 입수, 척후 탐지 등을 통해 군경진압부대를 지원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광주의 경우 학련결사대가 조직되었다. 이들은 군정보처와 밀접한 협조하에 광주시내의 좌익학생들의 동향에 대한 정보보고, 광주에까지 잠입한 폭동군에 대한 색출작업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또한 여순지구에 원정하여 좌익학생들에 의해 파괴된 학련동지를 재규합하고 군사령부 직속으로 정보교환, 민애청 등의 좌익학생 색출, 진압군의 후원(의복, 음식제공, 침식제공 등) 등의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여수의 경우 폐허화된 여수재건을 위해 10월 28일 여수부흥기성회라는 민간단체가 조직되었다. 회장에 문 군, 부회장에 정재완, 총무부장에 정경수, 재무부장에 박홍근, 선전부장에 장기 등이 중심이 된 이 단체는 주로 군관민의 교량역할을 하였다. 계엄사령부 관계자들의 숙소, 식사 등의 뒷바라지는 물론 시민들의 희생을 줄인다는 목적과, 중앙에 건의하여 복구자금을 타내는 활동을 벌렸다. 또한 부흥보라는 기관지를 발행하여 시민사상선도에 앞장섰으며 부역자 색출과정에서 궁지에 빠져있는 우익 지방유지를 구출하기도 하였다.

한편 제8관구 경찰청장 김병완은 11월 11일 시장, 군수, 중등교장 및 각 정당, 사회단체장과 의 합동회의 석상에서 여순사건의 사후대책을 논의하였는데, 그 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력을 대규모로 증원하여 각 경찰서에는 50명 내지 100명, 각 지서에는 20명 정도의 결사기동대를 설치하고,

둘째, 각 군마다 민보당을 결성 경찰력을 보조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1월 23일 광주에서 1635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의용단 결성을 필두로 12월중에 전남도내 각 군에 의용단이 결성되었다.

이와 같은 우익단체 및 국가통제력의 강화는 전남도내에서 인민위원회 간판이 가장 늦게까지 걸려 있었고 게릴라들의 내습이 가장 빈번했던 지역 중의 하나인 구례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구례에서는 1949년 1월 현대 대동청년단 산하에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성인 남자 1600명의 읍민이 800명씩 격일제로 동원되어 죽창을 들고 군경의 경비업무를 보조하고 있었으며 구례읍 주변의 언덕과 동산에는 경비선이 내외선으로 깔려 있어 그야말로 완전 전신탈세를 갖추고 있었다. 또 구례군의 모스크바로 불리었던 산동면의 경우 일반 부녀자들로 구성된 부녀죽창부대까지 등장하고 있었다.

2. 여순사건이후의 정세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낸 제주도 43사건과 여순사건이 있는 후 좌익세력은 이제까지의 국지적인 무장투쟁을 남한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1949년 7월에는 「남조선 인민유격대」를 조직하고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소위 「7월 공세」와 「9월 공세」라는 대규모 무장유격전을 전개했다. 이러한 무장유격전은 민중봉기를 유도하는 한편 정부병력을 공비준동지역에 고정 배치토록 함으로써 38선 지역의 국군병력이 약화되도록 하려는 목적을 띠고 있었다.

좌익세력은 이상과 같은 무장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동시에 정치투쟁을 전개했다. 총선 이후 그 결과를 부정하고 단독정부수립을 비난하는 집회, 시위, 동맹휴교 등 각종 소요를 주도했던 것이다.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후에도 단정반대를 주장하던 좌익은 1948년 9월 9일 북한공산당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을 공식적으로 (「인공」은 실제로는 남한의 단정수립 이전부터 기능하고 있었다.) 선포하자 「인공지지투쟁」으로 전환되었다. 좌익은 북한의 인공이 한반도 전역으로 통치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또 북한공산정권의 노선을 지지하기 위해 그러한 투쟁으로 전환한 것이다. 좌익의 인공지지투쟁은 인공

기 계양투쟁, 인공지지파업, 정치인 포섭 등 여러 형태로 전개되었다.

이와 같은 좌익세력의 이승만 정권의 체제전복을 위한 폭력적, 정치적 도전은 역으로 이승만 정권으로 하여금 더욱 극심한 반공주의를 내건 국가로 공고화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사정 속에서 우익정치인사들로 구성된 국회와 행정부는 반공노선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고 1948년 12월의 국가보안법이 그 구체적 예로서 나타나게 되었다.

3.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을 제언

국민의 정부가 수립되면서 그 동안 잠복해있던 정치적 미완의 문제들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그 동안 군사정부의 반공정책으로 인한 삼엄한 분위기하에서는 도저히 제기할 수 없는 역사의 소용돌이들이 돌출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발맞추어 해당지역의 국회의원들도 50년 전의 해원을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으며 특별조사단을 구성하여 당시의 상황을 규명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 함평, 영광, 나주지역 등 각 지역들이 독자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보다 바람직한 방향은 지역들간의 연대를 통하여 총체적으로 풀어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그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 노력이 기본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일차적으로 당시를 경험한 분들이 고인이 되기 전에 그들의 생생한 증언을 시급히 수집해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80고령에 접어든 분들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잘 아는 전문가들이 동원되어야 하고 이들의 엄밀한 검증을 통한 증언 채록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제주의 43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들은 민간차원의 연구소를 만들어 자체적으로 그동안 많은 자료집을 출간하였고 이를 통해 국제연대활동 뿐만 아니라 국제학술회의까지 수차에 걸쳐 치루었다는 점은 여순지방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광주 전남지방은 다른 지방에 비해 개방적인 분위기가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당시를 체험한 분들의 이야기를 이끌어내기가 좋은 환경이다. 또한 많은 인사들이 생존해 있음을 본인의 경험으로 확인하였다. 이들의 경험을 대중화시켜 역사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면서 이들의 활동을 복원시켜주어야 한다. 언론의 역할은 이러한 분야에 집중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순사건과 군

-육군을 중심으로-

노 영 기(조선대 강사)

I. 머리말

1948년 10월 19일, 전남 여수 주둔 육군 제14연대에서는 대한민국에 반대하여 군인들이 봉기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제주도 파병을 앞두었던 제14연대의 봉기는 격렬한 태풍처럼 순식간에 인근의 전남 동부지역을 휩쓸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군은 이전부터 실시해왔던 숙군(肅軍)을 보다 강력히 전개하여 ‘반공의 보루’로써 대한민국 정부를 지탱하는 물리적력으로 기능할 수 있게 되었다. 여순사건을 겪으면서 이승만 정권은 국가보안법 제정으로 상징되는 극우반공체제의 강화를 꾀하였다. 그 결과 취약했던 정권의 기반을 안정시킬 수 있었고, 군은 여순사건이 끝난 뒤 국내 치안의 확보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민간 사회에 개입하는 등 군의 정치 참여를 시작하였다.

이렇듯 여순사건은 우리 현대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¹⁾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여순사건이 군 주도의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체였던 군을 중심으로 접근한 연구가 드물다. 주로 관변측의 주도로 이루어진 연구는 이념적 편견에 따른 사실을 왜곡하거나 일면적으로 접근하였다. 그 외 연구들은 정치사적 접근인 탓에 군을 중심에 놓기보다는 당시의 여순지역을 중심으로 살피고 있다. 하지만, 기존연구들은 군이라는 특수한 집단의 연구에서 나타나는 연구의 제약과 자료상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였다.

이 글에서는 기존 연구의 한계에 유념하여 군을 중심으로 여순사건을 재구성하겠다. 여순사건이 발생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며, 여기에 정부는 어떻게 대응했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군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살펴보겠다. 이 글에서 다루는 시기는 여순사건이 일어난 배경이었던 국방경비대 창설로부터 여수가 정부군에 의해 다시 탈환되는 1948년 10월 27일

1) 여순사건의 연구사 정리는 다음을 참고. 홍영기, [여순사건에 관한 자료의 성격과 연구 현황].

까지 다루고, 그 영향에서는 이후 육군에 미친 영향에서 1949년까지 다루겠지만 제14연대 병사들이 입산하여 김지회가 죽게 되는 1949년 5월까지의 빨치산 투쟁은 다루지 않겠다.

II. 여순사건의 배경

1946년 1월 15일 제1연대 창설로부터 만들어진 국방경비대는 미군정의 대한정책이 반영된 결과로 만들어졌다. 미군정에서는 원래 장래 수립될 국가의 군대 창설을 계획하였으나, 소련의 반대를 예상한 미국의 제한으로 그 성격이 ‘경찰예비대’로 약화된 국방경비대를 창설하였다. 국방경비대를 창설하면서 미군정에서는 특별한 제한이나 사상검열이 없이 ‘불편부당·정치적 중립’을 내세우며 국방경비대원들을 모집하였다.²⁾ 이 때문에 국방경비대에는 다양한 세력들이 참여하였다. 일제시기 일본군·만주군·중국군 등에서 군대 경력을 쌓았던 세력들이 참여하였고, 미군이 진주하기 전부터 사설군사단체에서 조직·활동했던 세력들도 참여하였다. 미군정은 국군준비대·학병동맹 등과 같이 해산명령을 거부했던 사설 군사단체 조직들을 군정 경찰을 동원하여 강제로 해산시켰고, 다른 한편으로 이들을 국방경비대 내부에 편입시켰다. 미군정의 이 같은 정책은 모든 사설군사단체의 해산을 가져왔고, 이 단체들에서 활동하였던 세력들은 국방경비대에 참여하거나 다른 부문에서 활동하였다.

한편 국방경비대는 만들어질 때부터 향토연대로 편성되었다. 미군정에서는 국방경비대 창설 계획인 ‘뱀부계획(Bamboo Plan)’을 수립하여 각 도에 1개 연대씩 편성하였다. 각 연대의 장교들은 통위부와 국방경비대 총사령부의 통제를 받았지만, 각 연대 사병들의 모집과 훈련 그리고 예산 운영과 활동은 지역 차원에서 해결하였다.

‘경찰예비대’로 창설된 국방경비대는 많은 제약이 있었다. 국방경비대의 무기는 일제가 남기고 간 일제 99식·38식 소총이었고, 통위부는 국방경비대가 경찰예비대이기 때문에 개인 화기 이외의 다른 무기 훈련을 금지하고 제식훈련과 ‘폭동진압법’만을 훈련시켰다.³⁾ 그러나 많은 제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경비대 대원들은 국방경비대를 ‘군대의 모체’로 인식하였다. 국방사령부 고문 이응준은 “앞으로 정부가 서면 우리나라의 정규군으로써 군인이 될 기초를 삼으려 하는 것이다”라고 하여⁴⁾ 국방경비대가 장래 국군의 모체가 될 것으로

2) 국방경비대 창설 당시 국방사령부 고문이었던 이응준은 신원조사를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미군정 관리는 군내 사찰기구의 활용 등을 이유로 내세웠고, 그뒤의 과정에서 볼 때 미군정 관리의 말이 실행되었다.

3) Robert. Sawyer, 1962, *Military Advisors in Korea ; K MAG in Peace and War*, Washington, USGPO, 24쪽.

4) 『동아일보』 1946. 4. 15(국사편찬위원회, 『자료대한민국사』 1권, 410~411쪽).

전망하였다. 또 사설군사단체 성원들도 그 조직이 해산된 후 ‘국방경비대가 군대의 모체’라는 생각으로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였다.

다양한 세력의 국방경비대 참여와 향토연대, 국방경비대가 국가가 수립되면 만들어질 ‘군대의 주역’이라는 의식 등은 국방경비대의 특성이 되었다. 특히 향토연대와 ‘군대의 주역’이라는 의식은 국방경비대가 당시 민중들에게 친일 집단으로 지탄받고 있었던 경찰과 다른 성격의 집단으로 규정할 수 있는 요인이었다. 경찰은 “국방경비대는 빨갱이 소굴”이라고 비난하였고, 국방경비대는 경찰을 “일본놈 앞잡이 하던 사람들”이라고 맞섰다.⁵⁾ 경찰은 미군정에 국방경비대를 비방하는 보고를 제출하였다.⁶⁾ 이렇듯 국방경비대는 경찰과 극우 성향의 우익 단체 등과 미군정기 내내 끊임없이 대립하였다.⁷⁾

1947년 9월 미국은 미소공동위원회를 통한 한국 문제의 해결을 포기하고 이 문제를 유엔에 상정하였다. 한국 문제의 유엔 상정은 소련의 반대가 예상되었고, 이는 남한만의 단독선거 추진과 단독정부의 수립을 의미하였다. 국가가 수립되기 위해서는 그 안전을 보장할 군대가 필요하였다.⁸⁾ 하지는 1947년 9월 27일 육군부에 보내는 전문에서 “기존의 경비대를 장차 수립될 한국 군대의 핵심으로 삼는다”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미국의 육군부도 국방경비대의 증강을 통해 국내외의 적으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군대를 상정하였다.⁹⁾ 1947년 말부터 국방경비대를 ‘경찰예비대’에서 ‘군대’로 변화시키는 몇 가지 조치가 취해졌다.

우선, 국방경비대 조직이 확대, 재편되었다. 1948년 상반기에 제10연대에서 15연대까지

5) 짐 하우스만·정일화 공저, 1995, 『한국의 대통령을 움직인 미군대위』 한국문원, 138쪽.

6) 미군 방첩대는 경찰이 국방경비대 관련 보고를 어떻게 왜곡하는지를 각 지방의 방첩대 지부에 주지시키기 위하여, 광주의 제4연대에 관한 경찰의 의도적 왜곡 보고 사례 7가지를 제시하였다. 이 때문에 미군 방첩대는 경찰과 국방경비대 관련 개별 보고는 그 정보의 원천을 추적해야 하며, 서로를 비난하려는 것이지 파악해야 한다고 각 지부에 지시하였다. *Weekly Information Bulletin(이학 Bulletin)*, #12, 1947. 7. 10.

7) 국방경비대 제1연대 연대장 베로스(Russel D.Barrows)중령은 국방경비대와 경찰의 대립이 “일주일에 한 번꼴(about once a week)”로 발생한다고 말하였다. United States Army Forces, Korea Counter Intelligence Corps Seoul District Offices Apo 235, *Korean Constabulary, Conflict Between Korea Police and Summary of Information*, 7 Jan. 1947.

8) 정부수립 후 미국 육군부에서는 국방경비대의 임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① 대한민국 정부에 충성스러우며, 어떤 정파 또는 개인의 쿠데타 시도를 격퇴하고 ② 정치투쟁과 선동된 무질서에서 치안을 유지할 수 있고 ③ 국경(38선:인용자)을 경비하며 적어도 북쪽의 침략을 대항할 수 있고 ④ 평화적인 목적을 나타내며 북에 대한 ‘위협’을 배제할 수 있어야 한다. 「*The Secretary of State to the Secretary of the Army(1948. 9. 17)*」, 『*FRUS*』 1948, VOLUME VI, 1302~1303쪽.

9) 국방경비대의 강화에 관한 제24군단과 육군부·맥아더 사령부의 논의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조이현, 1996 「1948~1949년 주한미군의 철수와 주한미군사고문단(KMAG)의 활동」 『한국사론』 35, 291~295쪽.

6개 연대가 창설되었다. 또한 1947년 하반기에서 1948년 상반기 사이에 3개 연대를 통솔하는 여단이 창설되었다. 둘째, 국방경비대의 병력 수가 급증하였다. 1948년 2월, 국방경비대의 수는 20,000여명에 불과하였다. 그 뒤 새로운 연대 창설에 따른 모병으로 그 수가 계속 증가하였고, 그 수는 5·10선거가 끝난 뒤에는 경찰보다 많아졌다. 셋째, 병력의 증가와 함께 국방경비대의 장비가 개선되었다. 1947년 9월 1일부터 이전까지 사용하던 일제 99식·38식 소총이 미제 M1소총·칼빈소총 등으로 교체되기 시작하였다.¹⁰⁾ 넷째, 국방경비대의 훈련이 체계화되며 강화되었다. 이전까지의 국방경비대 훈련은 각 도에 주둔한 연대별로 이루어졌는데, 1947년 11월 8일부터 4일 동안 경남 김해에서 통위부 관할하에 국방경비대 제5연대가 최초의 야외 전투기동훈련을 실시하였다. 이 훈련에는 부산 주둔 미군 제6사단으로부터 지원받은 장갑차가 동원되었고, 국방경비대 총사령관 송호성·입법의원 최동오 외 6명·각 연대장·미군 제6사단장 우트 소장 등이 참관하였다.¹¹⁾

국방경비대의 성격이 군대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전남 여수 주둔 제14연대가 창설되었다. 제14연대는 1948년 5월 광주의 제4연대 제1대대를 기간 병력으로 제14연대가 창설되었다.¹²⁾ 제14연대의 모병은 관할지역이었던 전남 동부 지역-여수, 순천, 광양, 고흥, 구례, 곡성, 보성-에서 이루어졌다. 이때의 모병은 짧은 기간에 연대를 완성시켜야 했기에 마을 단위로 책임자를 두어 배당을 하거나¹³⁾ 많은 젊은이들이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 자원입대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¹⁴⁾ 이 중에는 간혹 경찰의 수배를 피해 제14연대에 입대한 경우도 있었으나, 그보다는 오히려 마을 단위의 모병으로 제14연대는 완전하게 편성될 수 있었다.¹⁵⁾ 남로당 전남 도당에서는 비합법적으로 제14연대 세포조직을 만들어 특별당부로 관리하였다. 전남 도당에서는 조동무로 불리는 지도원을 파견하여 제14연대 조직을 관리케 하였다. 이 세포조직의 회의에는 각 대대의 세포책과 홍순석¹⁶⁾ 등이 참여하였다. 제14연대의 남로당

10) 전사편찬위원회, 1967, 『한국전쟁사1-해방과 건군』, 370~371쪽.

11) 전사편찬위원회, 1967, 앞의 책, 293쪽.

12) 이한림, 1994, 『세기의 격랑』 팔복원, 100~101쪽 ; 김영만의 증언.

13) 임태황 증언(여수 돌산 거주, 제14연대 출신), 여수지역사회연구소, 1998 『여순사건 자료집 제1집』, 182쪽.

14) 이 사례는 제14연대 주둔지였던 신월리 인근 지역의 모병에서 백야도의 많은 젊은이들이 제14연대에 자원입대한 예에서 확인된다. 백야도에서는 18명이 자원입대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증언을 했던 배창석의 증언에서 1948년 3월에 제14연대에 자원 입대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제14연대 창설일과는 다르다. 아마 5~6월경을 증언자가 착각한 것으로 생각된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 1998, 앞의 자료집, 220~221쪽.

15) 김영만도 고향인 구례로 모병을 다녔다고 증언하였다. 김영만의 증언.

16) 홍순석 - 10583. 육사 3기 출신. 경기도 출신. 연길용정사진중학 졸업. 1947년 4월 19일:제4연대. 1948년 6월 1일:제14연대. 여순사건 당시 순천 주둔 중대의 중대장. 이후 입산하여 빨치산의 지도자로 활약. 1948년 말 지리산에서 사살당함. 『임관순대장(10583)』 ; 『자력표(10583)』.

세포조직원들은 남로당의 노선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였으나, 군대라는 특성 때문에 직접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할 수는 없었다.¹⁷⁾

국방경비대의 성격이 변하면서 이를 통제하기 위한 각종 조치들이 취하여졌다. 먼저 모병과 진급제도가 개선되었다. 이때부터 국방경비대의 모병에서 출신지 경찰서장의 신원보증을 요구하였다.¹⁸⁾ 이 제도의 시행은, ‘불편부당·정치적 중립’에 기초한 무분별한 모병이 폐지되고 단선·단정에 반대할 수 있는 세력들의 입대를 사전에 봉쇄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장교의 진급은 1946년 12월 1일부터 정규 진급제도를 계획하여 제1차, 제2차 잠정진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처리하였고, 사병들은 하사관·사병심사위원회 등 각종 심사위원회가 만들어져 1947년 말부터 시행되었다. 다음으로, 국방경비대의 규율을 통제할 조직이 만들어졌다. 통위부에서는 육사에 군기과를 병설하여 1947년 10월 15일 제1기로 장교 12명과 사병 500명을 선발하여 수색의 군기학교에서 교육시켰는데, 교육은 폭동진압과 정신교육 등이었다. 셋째, 계속 대립해오던 국방경비대와 경찰·우익단체간의 화해가 시도되었다. 미군방첩대에서는 각 지부에 경찰과 국방경비대간의 충돌은 미군정과 주한 미군에 대한 불신이 될 것이므로 두 집단 사이의 화해를 시도하라고 지시하였다.¹⁹⁾ 이 때 국방경비대와 경찰간의 대립의 원인 중의 하나였던 국방경비대원에 대한 경찰의 조사·처벌을 금지되었다. 1948년 3월 15일 미군정 장관은 통위부장과 경무부장에게 각서를 보냈다. 이 각서에는 이전까지 국방경비대를 통제했던 경찰의 권한이 축소되며 높아진 국방경비대의 위상이 반영되었다.²⁰⁾

국방경비대의 통제가 이루어지는 한편, 국방경비대 내에서는 숙군이 진행되었다. 1947년 9월 미소공위가 결렬된 후 미군정은 국방경비대에서 각종 사건을 일으키는 공산주의자들을 제거하는 숙군을 전개하였다.²¹⁾ 이는 국방경비대 내에서 단선·단정 수립에 반대할 수

김영만은 홍순석이 제14연대 남로당 조직원이었다고 증언하였다. 김영만의 증언.

17) 주로 정세와 당노선 등의 토론을 했고, 5·10선거 반대투쟁을 했다고 한다. 김영만 증언.

18) 제14연대 사병들의 모집을 담당했던 장교는 뒤에 반군의 지도자가 된 김지희 중위였다고 한다. 김지희 중위는 모병때 필요했던 출신지 경찰서장의 확인도장을 “국방경비대는 사회(정치)운동을 못하니까 수배자들이 입대해도 상관없다”는 이유를 들며 무마시켰다고 한다. 김영만의 증언.

19) *Bulletin*, #12, 1947. 7. 10.

20) Headquarters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Office of the Military Governor, 15 March 1948.

21) 하우스만·정일화공저, 앞의 책, 156~158쪽. 그 이전부터 국방경비대에서 숙군이 진행되었고, 이 때 등장한 인물이 김창룡이었다. 1947년 4월 17일 소위로 임관한 김창룡은 국방경비대에서 공산주의자들을 제거한다는 명분 아래 활동하였다. 김창룡은 1947년 5월 공산주의 활동을 전개했다는 명분 아래 이병주를 체포하였다. 이병주는 만주군 출신으로 당시 군기대-헌병대의 전신-사령관을 역임하고 제7연대장으로 부임하려던 국방경비대 핵심 간부였다. 이런 인물을 소위인 김창룡이 검거했다는 점에서 볼 때 미군정의 후원이 없이는 불가

있는 세력들의 감시와 숙청을 의미하였다. 이전부터 미군 방첩대는 남로당의 국방경비대 침투를 감시하였다. 미군 방첩대에서는 각 지역 지부에 담당 지역의 국방경비대와 남로당과의 관계를 감시하고, 국방경비대의 좌익 수와 범위를 측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국방경비대에서 좌익이 규제 없이 발전한다면 혁명적으로 전환되는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국방경비대를 동원할 수 없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이었다.²²⁾ 1947년 12월부터 48년 1월 사이에 강릉 주둔 국방경비대에서는 17명의 대원들이 좌익 비밀 조직 혐의로 제거되었고,²³⁾ 48년 1월 부산 주둔 국방경비대에서는 인민혁명군에 연루된 혐의로 300명이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다.²⁴⁾ 이때의 숙군은 국방경비대 총사령관 송호성도 찬성하지 않는 가운데 이루어졌다.²⁵⁾

남한만의 단선·단정이 추진되면서 각지에서는 여기에 반대하는 투쟁이 전개되었다. 특히 1948년 4월 3일 제주도에서는 단선·단정에 반대하는 무장봉기가 일어났다. 미군정은 4·3 항쟁 초기에 각도에서 경찰을 차출, 경찰을 동원한 진압작전을 전개하였다. 당시 제주도 모슬포에는 국방경비대 제9연대(연대장 : 김익렬 중령)가 주둔하고 있었으나 진압작전에 참여하지 않은 채 주변 경계와 정보수집만을 하였다. 제9연대는 4월 27일 순찰활동을 시작했으나, 5월 7일까지 국방경비대와 유격대 사이의 전투는 일어나지 않았다.²⁶⁾ 제9연대장 김익렬 중령은 오히려 평화적 해결을 시도하였고, 4월 28일 중산간지대인 구덕국민학교에서 유격대를 이끌었던 김달삼과 평화협상을 성공하였다.²⁷⁾ 평화협상의 성공은 경찰의 음모로 물거품이 되었다. 그 결과 유격대와 경찰 사이의 대립은 격화되었고, 제주도의 치안상황은 5·10 선거를 치르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미군정은 경찰만으로 진압할 수 없게 되자 국방경비대를 진압작전에 동원하였다. 제주도 주둔 미군사령관으로 부임한 브라운 대령은 기자회견에서 “딘 군정장관의 명령으로 제

능한 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때의 숙군은 국방경비대 전체 차원이 아닌 제1연대 차원에서 진행되었고, 국방경비대원의 정치참여 금지를 어겼다는 이유에서 진행되었다.

22) *Bulletin*, #14, 1947. 7. 24.

23) *G-2 P*, #721, 1947. 12. 30~12.31 ; *G-2 P*, #737, 1948. 1. 19~1. 20.

24) 육군본부, 1980, 348쪽.

25) 1947년 10월 국방경비대 총사령관 송호성은 한 신문과의 대담 중 思想問題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하였다. 지금 남조선 상태로 봐선 남으로 어느 기관에든지 ‘그거(공산당원을 지칭:인용자)’없는 데는 없을 줄 내 안단 말야. 경비대에라구 없다구 내 부인 못하지요. 허나 덮어놓고 ‘그거’라고 모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단 말야. 張三李四하지말구선 어디에 어떤 놈이라고 꼬집어 보란 말야. 그렇지는 못하구서 ‘그걸’보는 것은 사람을 ‘그걸’루 맨드는 거나 다름없단 말야. 『새한민보(1-12)』 1947년 10월 하순(『한국현대사자료총서』 7권, 502~503쪽).

26) *HQ, USAFIK, G-2 WEEKLY SUMMARY*(이하 *G-2 Weekly*), #137, 1948. 4. 23~4. 30 ; *G-2 Weekly*, #138, 1948. 4. 30~5. 7.

27) 제민일보, 『4·3은 말한다』 2권, 전예원, 143~144쪽.

주도의 치안 회복이 제주도에 온 목적이며, 속히 진압시킬 것이며, 제주도 봉기의 원인 규명에는 흥미가 없고 진압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²⁸⁾ 미군정의 강경 진압에 반대했던 제9연대장 김익렬 중령은 연대장 직에서 해임되었고, 1948년 5월 6일부로 통위부 인사참모 박진경 중령이 후임 연대장으로 임명되었다. 박진경 중령은 미군정의 방침대로 초토화 작전을 전개하였다. 5월 10일부터 국방경비대의 진압작전은 시작되었고, 국방경비대는 한라산의 서에서 동으로 소탕전을 전개하였다. 6주간의 작전으로 4,000여명의 용의자가 체포되었다.²⁹⁾ 4·3항쟁 진압작전이 국방경비대의 성격이 군대로 변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위에서 나타나듯이 미군정은 4·3항쟁 초기에 경찰의 힘만으로 진압이 되지 않자 진압작전에 국방경비대를 동원하였다. 경찰은 해안 부근 마을의 치안활동을 담당한 반면, 국방경비대는 빨치산 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³⁰⁾

이렇듯 국방경비대의 강력한 토벌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을 때, 이에 대한 저항이 발생하였다. 5월 21일 국방경비대 제9연대원 41명이 자신들의 무기·장비·탄약 5,600발을 가지고 탈영한 뒤 모슬포 부근의 대정면 경찰지서를 습격하였다. 미군정은 이 같은 사건이 일회성에 그칠 것으로 기대하였다.³¹⁾ 미군정의 예상과는 달리 1948년 6월 18일 초토화 작전을 지휘했던 제9연대장 박진경이 암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 제9연대원 탈영 사건과 함께 동족을 살상하는 작전에 반대하는 국방경비대원들의 저항이었다.

박진경 암살사건을 계기로 전군 차원의 사상검열(Screening)이 이루어졌다.³²⁾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은 이전부터 진행되었던 숙군의 합법성이 부여된 계기였다. 이에 따라 정부 수립을 전후한 시기에 보다 강력하고 조직적인 숙군이 전개되었다. 신임 국방장관에 취임한 이범석은 공공연하게 북진통일을 표방하는 한편,³³⁾ 다른 한편으로 공산주의자들의 제거를 명분으로 숙군을 전개하였다.³⁴⁾ 1948년 8월 중순경에, 전복행위(subversive activities)의 혐

28) 『조선중앙일보』 1948. 6. 8.

29) *G-2 Weekly*, #146, 1948. 6. 25~7. 2.

30) 『조선일보』 1948. 6. 4 ; 『서울신문』 1948. 6. 4(국사편찬위원회, 『자료대한민국사』 7권, 248쪽).

31) *G-2 Weekly*, #141, 1948. 5. 21~1948. 5. 28.

32) 1948년 7월 9일부터 16일까지의 미군의 주간 동향보고 중 남한의 무장력에 관한 항목에는 “사상검열은 계속되고 있다(Screening continues)”는 내용이 처음 나오고 있다. *G-2 Weekly*, #148, 1948. 7. 9~7. 16.

33) 1948년 9월 8일 이범석 국무총리는 미국 『성조』지와의 인터뷰에서 정치적 수단으로 실패하면 전쟁에 의하여 남북통일을 완성할 것이라고 말하여 무력에 의한 북진통일을 내비쳤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공보처장 김동성은 정부 일각에서 표명된 북진 무력통일은 정부의 공식 입장과는 다르다고 해명하였다. 『동아일보』 1948. 9. 11. ; 『동아일보』 1948. 9. 18.

34) 1948년 8월 9일 국무총리 겸 국방장관에 내정된 이범석은 임시군사고문단 단장 로버츠(Roberz) 준장과의 대답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정책은 반공이 되어야 하며, 대한민국 군대는 공산주의에 끝까지 대항하는 군대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C.G, PMAG, *Notes from*

의가 있는 국방경비대원들의 검거와 조사가 잇달았다. 부산 부근에서는 11명의 국방경비대 장교가 전복행위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제10연대에서는 68명이 체포되었으며, 제1연대에서는 89명이 체포되었고, 제15연대는 102명이 체포되었다. 그 외 각 연대에서 전복행위와 관련된 국방경비대원들의 체포와 조사가 계속되었다.³⁵⁾ 이렇듯 전국 각지에서 사상검열과 숙군이 이루어졌다.³⁶⁾ 여순사건이 일어난 뒤 미군 보고서에는 다음의 논평이 실려 있다.

수개월 동안 경비대는 주로 경찰에 의해 공산주의자들의 은신처로 비난받아왔다. ... 경비대 장교들은 열심히 경비대 내에서 발견된 공산주의자들을 적발, 제거해왔다. 그들의 노력이 성공했기 때문에 적어도 6개 연대가 폭도들과 접촉하였지만, 대규모의 반군이 순천에 도착했을 때에 1개 중대만이 반군으로 탈영하였다. 공산주의자들이 경비대 내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대한민국에 위협이 되거나 경비대가 커다란 의심을 받을 만큼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 반란의 발발과 진압에서 알 수 있다.³⁷⁾

위의 보고에 나타나듯 숙군은 각 연대별로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³⁸⁾ 그리고 숙군의 여파는 제14연대의 모부대인 광주의 제4연대까지 미쳤다. 1948년 제4연대 5대 연대장으로 이성기³⁹⁾ 중령이 부임하였다. 이성기는 정부수립을 앞두고 고급하사관 등이 주동이 되어 불온한 계획을 수립한다는 혐의로 이들을 구속하였다.⁴⁰⁾ 그리고 제4연대의 숙군은 제14연대까지 이르게 되었다.

제4연대 출신으로 제14연대 창설 요원이며 이등중사로 제14연대 남로당 세포 조직 제14연대 독립대대책이며 재정책이었던 김영만이 10월 11일 체포되었다. 김영만은 4연대 근무할 당시 그의 세포 조직원이었던 제4연대원의 밀고로 체포되었다. 김영만의 체포 계획을

Conference between General Robers and Lee Bum Suk at 1600 9 August 1948, 1948. 8. 10.

35) C.G, PMAG, *PMAG Weekly Activites*, 1948. 8. 16.

36) 이외에도 1948년 8월 1일 이후 지문채취작업(fingerprinting)은 진행되며, 이 작업은 경찰의 협조 아래 이루어질 계획이었다. 9월 초순까지 대략 절반 정도의 국방경비대원 지문채취가 완료되었다. CG, USAMGIK, *Current Constabulary Affairs*, 1948. 7. 20 ; C.G, PMAG, *PMAG Weekly Activites*, 1948. 9. 13.

37) *G-2 Weekly # 163*, 10. 22-10. 29.

38) 당시 미군 고문이었던 하우스만의 에피소드는 숙군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음을 시사해준다. 하우스만은 여순사건 이전 어느날 일선부대 방문의 애로를 백선엽 정보국장에게 토로했다. 그러자 백선엽은 정보국 명의의 쇄매달을 주었다고 한다. 그 이후 어느 부대를 방문할 때 이 매달은 조선시대의 마패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 하우스만은 이 사례를 이야기하며 정보국은 그렇게 무서울 때였다고 회고했다. 하우스만·정일화 공저, 앞의 책, 187~188쪽.

39) 대표적인 극우 성향의 지휘관이다. 중국군 출신으로 왕정위부대에 소속되어 있었다. 다른 중국군 출신들과는 달리 그는 유해준과 함께 군사영어학교에 참가하였다. 1947년 4월 제1연대장으로 근무할 당시 김창룡을 정보장교로 발탁하여 제1연대 내에서 좌익 혐의자들을 체포하게 만들었던 인물이다.

40) 육군본부, 1980, 『창군전사』, 345쪽.

미리 알았던 제14연대 남로당 조직에서는 김영만이 체포당하는 것으로 조직을 지켜낼 것을 결정하였다. 당시 연대 정보계 하사로 남로당원이었던 정낙현, 김정남 등은 이미 김영만의 체포 계획을 알고 있었다. 이들은 이 사실을 김영만에게 통보하면서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해야 한다”고 말하며 김영만이 체포될 것을 권유했다고 한다. 김영만을 도피시킨다면 그에 따른 조직 수사의 확대를 우려하여 김영만의 체포로 조직 보위를 꾀했다고 한다.⁴¹⁾ 이렇듯 숙군의 여파로 제14연대 남로당 조직의 위기감은 높아지고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 제주도 파병의 문제가 놓여 있었다.

제14연대의 제주도 파병이 언제 결정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⁴²⁾ 그러나 10월 초순부터 시작된 시가전 훈련과 무기의 교체는 제14연대가 제주도에 파병될 계획임을 짐작케 하였다. 실제 출동명령은 10월 15일 우체국 전보를 통해서 내려졌지만⁴³⁾ 그 이전부터 부대 내에는 제주도 파병의 소문이 유포되어 부대원 대부분이 알고 있는 실정이었다.⁴⁴⁾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제14연대 내의 남로당에서는 숙군의 위협과 제주도 파병이라는 객관적 조건에서 적극 대응하였고, 결국 무장봉기의 길로 나가게 되었다.⁴⁵⁾ 그리고 경찰에 대항하며 동족상잔인 제주도 파병에 반대한다는 명분이 제시되었다.

III. 여순사건의 발발과 전개과정

1948년 10월 19일 새벽 전남 여수 신월리 제14연대 병영에서 여순사건이 시작되었다. 지창수 상사의 선동 연설로 시작된 봉기는 순식간에 2,000여명 이상의 병사들이 합세하였다. 제주도 파병반대와 경찰 처단을 목표로 시작된 제14연 봉기에 처음 참여한 인원은 보고자에 따라 각기 다르게 보고되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1) 김영만의 증언.

42) 다만 한 가지 단서가 될 만한 미군 보고서가 있다. 한미 연합 장교단은 10월 3일 제주도를 방문하였다. 여기서는 제주도의 상황을 토의하고 추가로 대대를 파병하기로 결정하였다. Chief PMAG, *WEEKLY ACTIVITIES OF PMAG*, 11 Oct 1948.

43) 지금까지 출동명령이 우체국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전에 유출되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왜 우체국으로 내려졌는가의 의문을 제기한다. 하지만 당시 육군의 통신수단은 지금과 같이 발달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유일하게, 그리고 비교적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 우체국의 전보였을 가능성이 크다.

44) 정두일(여수 울천 청대, 제14연대 출신) 증언, 여수지역사회연구소, 1998, 앞의 책, 193쪽.

45) 당시 남로당에서 이 계획을 사전에 알았는가가 논란거리이다. 최근 한 증언에 비추어 볼 때 남로당 전남 도당에서는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두고서 심사숙고 할 만큼의 여유가 없었던 실정이었다. 즉 10월 11일 이후부터 제14연대 내에서는 심각하게 무장봉기를 고려했을 것이나, 이 결정에 대해서 전남 도당은 정부의 탄압으로 장흥에 피신한 상태에서 어떠한 결정도 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

<표> 제14연대 여순사건 참가 인원

보고자	보고 일자	참여 인원	비고
G-2 일일보고	1948. 10. 21.	2,400여명	
김백일	1848. 10. 21	800~2,000명	
Joint Weeka		2,400명	
주한미군 제24군단	1948. 11. 10.	3,000여명	
이범석	미상	3,708명	사살:852명, 포로:2,856명, 탈출; 수백명

※ 출 전

1. G-2 Periodic Report
2. [동광일보 호외] 1948. 10. 21.
3. 『주한미대사관 보고서』
4. G-3 Section, XXIV Corps, History of the Rebellion of the Korean Constabulary at YEOSU and DAEGU, 1948. 11. 10.
5. Report on the Internal Insurrection After April, 1948, made by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Lee Bum Suk

위의 표에 나타나듯이 보고자와 보고시기에 따라 제14연대 봉기에 참여한 인원이 각기 다르다. G-2의 보고와 김백일의 보고는⁴⁶⁾ 여순사건이 발생한 직후 현장의 전투사령부가 파악한 수치이다. 이 보고들은 당시 교전이 있던 뒤 사로잡은 몇몇 포로들을 심문하여 얻은 정보였다. 이범석의 보고는 약간의 과장과 민간인들이 포함된 수치이다. 그렇기에 이 숫자가 처음 봉기에 참여한 제14연대 병사들의 수자라고 보기는 힘들다. {주한미대사관무관 보고서}와 제24군단의 보고는 각지에서 올라온 보고에 검토한 뒤 작성된 2차 보고이다.

그렇기에 1차 보고로 그 개략의 수를 파악한 김백일과 G-2의 보고와는 차이가 있다. 보고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10월 19일 최초의 제14연대 봉기에는 최소 2,000여명의 병사들이 참여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 숫자는 제14연대가 완전 편성되었을 때인 1948년 10

46) 이 기사는 당시 여순사건을 취재했던 동광신문 기자가 제일착으로 보도했던 인터뷰 내용이다. 국방부에서는 사건이 발생한 뒤 곧바로 보도 통제를 실시하였다. 이 기사는 보도 통제가 이루어지기 직전에 취재된 내용이기 때문에 신문기사 중에서 제일 신빙성이 있는 내용이다.

월 초순 병력이 약 3,000여명이었음을 감안하면 부대원의 2/3 정도가 참가한 것이었다. 이렇게 제14연대 병사들의 다수가 봉기에 적극 참여한 이유는 무엇일까? 지창수의 연설과 [제주도 출동거부 병사위원회]의 성명, 그리고 여순사건 직후 발표된 현지 사령부의 발표문에는 이들이 봉기하며 적극 참여하게 된 동기가 잘 나타나 있다.

제14연대 인사계 선임하사관 지창수는 여수경찰과 일본군이 여수에 상륙하여 공격하려 하며 동족상잔의 제주도 출동에 반대하고, 남북통일의 주장하는 요지의 연설로 병사들을 선동하였다.⁴⁷⁾ 10월 20일 [제주도 출동거부 병사위원회] 명의의 성명서에는, 제주도 애국인민을 무차별 학살하기 위한 제주도 출동에 반대하며 조선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꺾기하며, 주한미군 철수와 조국통일, 조선인민공화국지지 등을 봉기의 목표로 내세웠다.⁴⁸⁾ 여순사건이 발발한 직후 전투사령부 보도부에서는 여순사건의 원인과 실상을 ‘제14연대 하사관들은 대부분 제4연대 출신이며 과거 제4연대는 영암사건으로 경찰에 악감정을 품고 있었고, 1948년 9월 구례사건으로 경찰에 대한 감정이 더욱 악화되었다. 이러한 반경감정을 연대의 좌익사상을 가진 간부와 지방 좌익에게서 선동하여 이용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렇기에 반란병의 모든 목적지는 구례경찰서에 있었다고 하며 전남 경찰은 전부 사살할 계획이었다고 하는 바 반란병과 지방 좌익계열과 근본적으로 어떠한 연락은 없었을 것’이라고 발표하였다.⁴⁹⁾

제14연대 봉기의 첫째 목적은 제주도 파병, 즉 동족상잔의 반대하는 것이었다. 당시 일반의 여론은 동족을 살상하는 제주도의 작전에 반대하는 여론이었다. 미군정은 강경진압을 전개하였으나, 일반의 인식은 제주 4·3항쟁이 경찰의 악행으로 일어난 사건이며 동족상잔이 발생한 불행한 사건으로 이해하였다.⁵⁰⁾ 그 연장선상에서 단선·단정의 결과물로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도 부정의 대상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일반의 인식은 제14연대 봉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단독정부인 대한민국 정부는 타도의 대상

47) 지창수는 “지금 경찰이 우리한테 쳐들어 온다. 경찰을 타도하자, 우리는 동족상잔의 제주도 출동을 반대한다. 우리는 조국의 염원인 남북통일을 원한다. 지금 북조선인민군이 남조선해방을 위하여 38선을 넘어 남진중에 있다. 우리는 북상하는 인민해방군으로 행동한다”고 선동하였다. 전사편찬위원회, 1967, 앞의 책, 1967, 452~453쪽 ; [해익, 여수재성동문회 회지] 2호(여수지역사회연구소, 1998, 앞의 책, 153쪽에서 재인용).

48) [여수인민보] 1948. 10. 2(여수지역사회연구소, 1998, 앞의 자료집, 153~154쪽에서 재인용).

49) 『자유신문』 1948. 11. 8.

50) 여순사건이 진압된 뒤 국방부 인사국장이던 강영훈 중령은 여순사건의 원인에 대해 “많은 경관은 다만 묵묵히 어느날만을 기하고 있는 국군병사를 경멸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에 대한 국군병사의 반경감정은 결코 사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공산당의 모략으로 발단한 것이기는 하지만 제주사태만 하더라도 진압이 어려운 것은 경찰의 비행 때문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설국환, 「반란지구답사기」 『신천지』 3권 10호, 1948. 11(『자료총서』 8권, 339~340쪽).

으로 설정되었다. 지창수를 비롯한 봉기의 주체들은 이를 적극 활용하였다.

둘째로, 다분히 의도적일수는 있지만 경찰이 ‘친일경찰’이며 여수로 쳐들어온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 때문에 포로로 잡힌 사병들 중에는 경찰이 반란을 일으켰고 제14연대가 경찰을 진압하라고 명령받은 데서 봉기가 시작되었다고 진술하였다.⁵¹⁾ 당시 병사들과 경찰의 대립은 심하였고, 제14연대원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1948년 9월 24일에 발생한 구례사건으로 부대 안에서는 공공연하게 경찰과의 대립을 조장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이 사건은 휴가 중인 제14연대원들이 구례의 한 이발소에서 만취하여 행패를 부린 구례경찰서 수사과장의 행동을 막은 것에서 비롯되었다. 그 뒤 격분한 수사과장은 구례경찰서의 경찰들을 비상소집하여 구례읍에 머물던 제14연대 사병 9명을 구금하여 구타하였다. 제14연대에서는 이 정보를 접한 뒤 곧바로 이들을 석방시켰다.⁵²⁾ 그러나 이 사건으로 경찰과 군대와의 감정은 한층 악화되었다. 이 같은 제14연대의 분위기에다가 병사들은 지방에서 모병된 사병으로써 친일경찰로 지탄받고 있었던 경찰을 부정적으로 인식했던 반면, 자신들은 ‘건군의 주역’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에 봉기의 주도층은 병사들의 의식을 자극할 수 있는 대중적인 효용성을 지닌 반경감정을 내세웠고, 지방 출신이 다수인 사병들은 이에 쉽게 호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봉기를 주도했던 세력들의 의도와는 달리 다수의 사병들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데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정부군의 순천 탈환작전에서 187명의 병사들을 제12연대 3대대 9중대장 송호림 중위가 호령 한 번으로 생포한 예와⁵³⁾ 같이 반군 중의 일부는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 않았다.

제14연대의 봉기는 순식간에 인근의 전남 동부 지역으로 확산되었다.⁵⁴⁾ 이 확산은 다음의 과정을 거치면서 진행되었다. 제14연대 병영에서 봉기한 제14연대 병사들은 곧바로 여수 경찰과 철도경찰을 격퇴하고 여수를 점령하였다. 그 뒤 김지회의⁵⁵⁾ 지휘 아래 주력이

51) *G-2 WEEKLY #162*, 1948. 10. 15~10. 22.

52) 『육군역사일지』.

53) 백선엽, 1992, 『실록 지리산』 고려원, 178~179쪽.

54) 순식간에 동부지역으로 확산된 과정은 제14연대 주력 부대의 행로와 비슷하다. 물론 반군이 들어가기 전에 지방 좌익들이 먼저 호응하여 봉기한 경우도 있으나 대개는 제14연대의 행로와 비슷하게 진행되었다. 즉 한편으로 여수→순천→보성·곡성·구례→지리산의 행로와, 다른 한편으로 여수→광양→백운산의 행로이다. 이들 지역은 여수 주변 지역이면서 또한 제14연대 관할지역이기도 하다. 즉 제14연대 병사들의 고향이기도 하였다. 결국 향토연대의 특성이 일정하게 영향을 미친 행로일 가능성이 있다.

55) 김지회 - 10505. 함남생. 함흥농고 졸업. 육사 3기. 1947년 4월 19일:제4연대. 1948년 6월 1일:제14연대. 1949년 5월 31일:불명예 파면. 여순사건 이후 빨치산의 지도자로 활동하다 1949년 5월 사살. 『임관순대장(10505)』; 『자력표(10505)』.

김지회는 당시 남로당의 중앙당에서 관리하는 조직원이었던 것 같다. 여순사건 발발직후 김지회는 제14연대 사병들의 감시받았다고 한다. 김영만도 그의 정체를 알지 못했고 제14연대 남로당 세포모임에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김영만의 증언.

라 할 수 있는 600여명의 병사들이 여수역에서 5량의 기차와 차량을 징발하여 10월 20일 오전 9시 20분 순천으로 이동하였다. 10월 20일 아침 순천에 도착한 반군은 순천에서 경찰과 교전한 뒤 이날 오후 순천을 점령하였다. 이 때 순천에 파견되었던 제14연대 2개 중대는 선임중대장인 홍순석의 지휘 아래 반군에 합류하였다. 순천을 점령한 뒤 1,000여명 정도의 반군은 남원을 향해 북진하였다. 10월 20일 오후에 순천 북방으로 전진한 반군은 이곳에서 처음으로 정부군의 저지를 받았다. 정부군은 이정일이 지휘하는 제4연대였다. 이곳에서 2차례의 교전 끝에 정부군의 저지선을 돌파하지 못한 반군은 다시 순천 방면으로 퇴각하였다. 순천으로 돌아온 반군은 김지회의 지휘 아래 순천 주변의 곡성, 보성, 구례 등지로 흩어졌다. 10월 21일 이후 정부군의 진압작전이 강력하게 전개되자 이들은 지리산으로 입산하여 빨치산 투쟁을 전개하였다. 한편 순천 방면으로 이동하지 않고 여수에 남아 있던 제14연대 병사들의 일부는 10월 21일 광양 방면으로 이동하였다. 이들은 진압부대가 제2차로 여수를 공격하기 앞선 10월 24일 밤 5시경이 되자 백운산과 벌교 방면으로 퇴각하였다.⁵⁶⁾ 제14연대의 주력이 떠나간 상태에서 여수지역에는 지역민들만이 남아 있었다.

여순사건은 5·10사건 이전에 발생한 제주 4·3봉기와는 또 달리, 전남 동부지방이 순식간에 ‘인민공화국 지지’를 외치는 좌익 손에 넘어갔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었다.⁵⁷⁾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를 즉각 반란으로 규정하고 진압에 나섰다. 국무총리 겸 국방장관 이범석은 10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사건은 공산주의계열의 책동과 음모로 발생한 반란으로 규정하며 군대를 동원하여 강력한 토벌작전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⁵⁸⁾

그런데, 여순사건의 원인과 성격을 놓고 당시 정부와 현지 사령부는 서로 다르게 발표하였다. 이범석 국무총리는 사건 발생 직후 이 사건이 극우주의자와 공산주의자의 연합으로 발생한 성질의 반란으로 규정하였다.⁵⁹⁾ 당시 전투사령부 보도부에서는 여순사건의 발생 원인으로 반경감정을 가진 하사관들과 연대 내의 좌익사상을 가진 간부들의 선동으로 일어났으며, 그 목적지는 구례경찰서였고, 지방 좌익과는 어떠한 연락도 없었다고 발표하였다.⁶⁰⁾ 이렇듯 정부 당국과 현지 사령부의 발표가 다른 이유는, 정부는 이 사건을 정치적 목적에서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현지 사령부는 현지에서 잡힌 포로들의 심문을 통해서 얻어진 정보에 근거한 발표였기 때문이었다.

56) 김계유, 「1948년 여순봉기」 『역사비평』 1991년 겨울호, 277쪽.

57) 서중석, 1996,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 2 - 1948~1950 민주주의·민족주의 그리고 반공주의』, 역사비평사, 168쪽.

58) [자유신문] 1948. 10. 22(국사편찬위원회편, 1999, 『자료대한민국사』 8권, 792~794쪽.)

59) AMERICAN MISSION IN KOREA, *Report on the Internal Insurrection After April, 1948, made by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Lee Bum Suk.*

60) 『자유신문』 1948. 11. 8.

정부에서는 10월 21일 광주에 반군토벌 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사령관에 육군 총사령관 송호성 준장을 임명하였고, 송호성은 특별기편으로 10월 21일 하오 1시 광주에 도착하였다.⁶¹⁾ 10월 22일 이범석은 ‘반란군에 고한다’는 포고문을 발표하였다. 이 포고문에는, 제14연대의 봉기가 ‘민족적 양심과 군기를 무시한 천인공노할 죄악’인 ‘반란’이니 국법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으며, 정부는 병력을 동원하여 북으로는 남원·곡성, 서로는 화순·보성, 동으로는 하동 방면 등으로부터 지리산과 남해안 일대를 완전 포위 대파하는 동시에 일부 병력은 이미 남부 해안으로부터 상륙중에 있으며, 마지막으로 총살당하지 않을 기회로 즉시 투항하라고 요구하였다.⁶²⁾ 이렇듯 정부는 처음부터 강경진압의 방침을 정한 채 진압작전을 전개하였다.

10월 21일부터 시작된 정부군의 진압작전에는 총 5개 연대의 10개 대대와 1개 비행대(경비행기 10대), 해안경비대 함정 등이 동원되었다.⁶³⁾ 10월 20일 진압작전이 시작될 때는 3개 연대를 동원한 진압작전을 수립하였다.⁶⁴⁾ 그러나 신무기로 무장하고 잘 훈련된 반군의 저항으로 정부군의 진압작전은 처음부터 쉽지 않았고,⁶⁵⁾ 10월 21일 진압작전은 다음과 같이 재조정되었다. 광주의 제4연대는 서쪽으로부터 여수를 포위하며, 전주의 제3연대는 대전의 제2연대와 협력하여 북쪽으로부터 여수를 포위하며, 군산의 제12연대는 여수의 북서쪽을 향해 군산을 출발하며, 부산의 제5연대는 바다로부터 포위를 유지하며, 대구의 제6연대는 여수의 북쪽을 산맥을 횡단하며, 마산의 제15연대는 여수의 동쪽으로 진격하는 것이었다.⁶⁶⁾ 10월 22일 국방부 총참모장 채병덕은 기자회견에서 광주와 마산으로부터 막대한 병력을 동원하였고, 순천과 여수반도에서 압박 섬멸전의 총공격이 시작되었음을 밝혔다.⁶⁷⁾

정부군의 진압작전은 여수를 중심으로 사방을 포위하여 반군을 섬멸하는 압박 섬멸전이였다.

61) 『동광신문』 1948. 10. 23. 이외에도 주한미군사고문단의 하우스만 대위(임시군사고문단 G-3 고문관), 리드 대위(임시군사고문단 G-2 고문관), 트리드웰 대위(Treadwell, 제5여단 고문관), 프레이 대위(Frye, 제5여단 수석고문관), 채병덕 대령(국방부 총참모장), 정일권(육군 참모장), 백선엽 대령(육군 정보국장), 고중위(인용자 주: 고정훈으로 여겨짐, 육군 정보장교) 등이 광주에 도착하였다.

62) [서울신문] 1948. 10. 24.(국사편찬위원회, 『자료대한민국사』 8권, 819~820쪽).

63) 전사편찬위원회, 1967, 앞의 책, 470쪽.

64) [자유신문] 1948. 10. 22.(『자료대한민국사』 8권, 792~794쪽.)

65) 채병덕은 10월 22일 기자회견에서 발표가 늦은 이유는 갑자기 일어났고 내부적으로 급습을 당하고 적의 병력이 상상보다 컸기 때문에 많은 부대를 집중시킬 필요와 작전의 비밀로 발표가 늦었다고 말하였다. [서울신문] 1948. 10. 23. (『자료대한민국사』 8권, 820쪽).

66) AMERICAN MISSION IN KOREA, *Report on the Insurrections After April 1948, made by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Lee Bum Suk*, 1948. 12. 14 .

67) [서울신문] 1948. 10. 23(국사편찬위원회, 『자료대한민국사』 8권, 820쪽).

제5연대와 12연대의 합동작전으로 시작된 순천 공격으로 10월 22일 정부군은 순천을 탈환하였고,⁶⁸⁾ 10월 23일 여수를 향해 남쪽으로 이동하였다. 순천 지역에 있던 반군은 남서쪽으로 퇴각하여 벌교와 보성 지역을 점령하였다. 순천 방면으로 들어선 정부군이 비교적 수월하게 순천지역을 탈환한 반면, 10월 22일 하동으로부터 광양 방면으로 출동한 제15연대는 그렇지 못하였다. 제15연대는 광양의 반군과 교전에서 패배하고 연대장 최남근을 비롯한 다수의 정부군이 반군에 사로잡힌 채 하동으로 철수하였다.⁶⁹⁾ 한편 10월 22일 김종원이 이끄는 제5연대 1대대는 부산에서 LST에 승선하여 23일 아침 9시 40분 경 여수 상륙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곳에서 김종원의 독단과 반군의 저항으로 상륙작전은 실패하였고, 제5연대는 LST로 후퇴하였다.⁷⁰⁾ 10월 24일 제4연대의 1개 대대가 보성을 탈환하였고, 24일 저녁 순천에서 진격한 제6연대 1개 대대가 벌교를 점령하였다. 10월 24일 정부군은 하동과 순천으로부터 광양을 향해 진격하였고 반군은 백운산으로 퇴각하였다. 이날 송호성 총사령관은 직접 정부군을 지휘하여 여수로 진입하다 반군의 기습을 받고 후퇴하였다. 10월 25일 정부군은 여수를 계속 공격하였고, 여수의 북쪽 고지를 점령하였다. 정부군의 여수 공격은 10월 26일까지 계속되었다.

한편, 10월 25일 오전 광양의 정부군은 백운산 지역을 향하여 북쪽으로 이동하였다. 10월 25일에 광양, 하동 그리고 구례 방면에서 온 정부군은 백운산을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10월 26일 오후 동안 반군들은 백운산과, 구례 북서쪽, 지리산 지역으로 퇴각하기 시작하였다. 정부군은 여수의 두 지점으로 들어갔으며 반군과 교전하였다. 10월 27일 오후 1시에 정부군은 여수의 북쪽과 바다로부터의 공격으로 탈환되었다. 10월 27일 정부군은 여수를 탈환함으로써 여순지역의 진압작전은 마무리되었고, 이때부터 정부군의 작전은 남원, 구례, 백운산 그리고 지리산 지역의 반군들을 소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 여순사건 진압작전에는 총 140명의 장교와 4,732명의 군인들이 참가하였다.

정부군의 진압작전에는 주한 미군의 지원이 절대적인 역할을 하였다. 주한 미군 제24군단 G-2는 1948년 10월 20일 오전 9시 10분에 속보(flash report)를 받았고, 10시 15분에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방군사고문단(Provisional Military Advisory Group)으로부터 여수사건을 확인하는 보고를 받았다. 보고를 받은 뒤 제24군단 G-2와 G-3은 10월 20일 1700에 작전과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24시간 경계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날 상오 주한미군사고문

68) 이때 600여명의 포로를 잡았다고 한다. [서울신문] 1948. 10. 24(『자료대한민국사』8권, 827쪽).

69) 제15연대의 상황은 다음을 참고. 백선엽, 1992, 『실록지리산』 고려원, 181~183쪽.

70) 전투사령부는 통신수단이 미비하고 수륙양륙의 협조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상륙을 시도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

단장인 로버츠 준장 사무실에서 로버츠, 이범석, 송호성, 하우스만, 몇몇 참모들이 모여 회의를 가졌다.⁷¹⁾ 이 회의에서는 전투사령부의 설치를 결정하였다. 그 뒤 하우스만을 비롯한 미군 고문관들은 정부군의 진압작전에 필요한 모든 역할을 수행하였다. 당시 진압작전에 참여했던 하우스만의 회고처럼, 미군은 탄약·무기·식량을 비롯해 통신수단까지 제공하였다. 결국 미군의 원조가 없었다면 여순사건은 더욱 더 심각해졌을 것이다.⁷²⁾

IV. 여순사건의 영향

육군은 여순사건을 계기로 이전의 숙군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력한 숙군을 진행하였다. 여순사건은 제주도 파병에 반대한 제14연대의 봉기였지만, 다른 한편으로 군 내부에서 진행되었던 숙군에 대한 직접적인 저항이었다. 즉 단선, 단정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던 숙군이 대한민국 수립과 더욱 강화되었다. 그에 따른 여파는 제14연대에까지 미치었고, 여기에 대한 저항은 제14연대 병사들의 봉기로 이어졌다. 이렇듯 대한민국 정부와 숙군의 확대에 반대한 봉기가 일어나자 정부와 육군 당국에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적극 대처하였다.

국방부 참모총장 채병덕은 1948년 11월 21일 기자회견에서 “우선 사상이 불순한 장병의 국군은 물론 물질적으로 좌우되는 불순분자도 적발할 것”이라고 말하여⁷³⁾ 숙군의 철저한 진행을 예고하였다. 여순사건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전개되어오던 숙군계획(loyalty program:인용자)이 철저해지는 계기가 되었다.⁷⁴⁾ 숙군의 실무는 육군본부 정보국과 군기대가 담당하였다. 군기대가 숙군 대상자들을 체포하였고, 육본 정보국 특별조사과(SIS)가 그 조사를 담당하였다.⁷⁵⁾ 이밖에도 수도경찰청 사찰과가 숙군에 참여하였다.⁷⁶⁾ 이때 적용된 법은 미군정기에 만들어진 국방경비대법이었다. 1949년 3월에 대규모의 숙군은 일단락되었

71) 하우스만, 앞의 책, 171~172쪽. 백선엽은 이와 다르게 회고하고 있다. 장소는 국방부에서 긴급대책회의가 있었고, 이범석, 채병덕, 정일권, 백선엽, 로버츠, 하우스만, 리드 등이 참여했다고 회고하였다. 백선엽, 앞의 책, 164쪽.

72) Robert. Sawyer, 1962, *Military Advisors in Korea ; KMAC in Peace and War*, Washington, USGPO, 40쪽.

73) 「동아일보」, 1948. 11.23.

74) *G-2 Weekly*, #165, 1948. 11. 5~11. 12.

75) 육군 정보국은 새로 임관된 육사 8기생을 주축으로 보강되었고, 이때 육군 정보국에 근무했던 육사 8기 출신들은 박정희와 인간관계를 맺어 이후 5·16쿠데타에 참여하였다. 백선엽, 앞의 책, 1992, 209쪽.

76) 1948년 11월 29일 국방부는 숙군에서의 공로를 이유로 육군 정보처·군기대·수도청 사찰과 등을 표창했다. 『자유신문』 1949. 11. 30.

으나, 그 이후에도 사안에 따라 숙군은 지속되었다. 조사 방법은 고문에 의한 자백을 강요하는 방식이었고, 이 때문에 고등군법회의 기소자의 20% 정도가 무죄로 석방되었다.

여순사건과 숙군을 거친 뒤 ‘불평부당하고 정치적 중립’이었던 육군은 반공에 기반한 집단으로 거듭나게 되었다.⁷⁷⁾ 그 과정은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이루어졌다. 첫째는, ‘반공’이념의 정착과 주입이었다. 육군에서는 이전까지 공개적으로 표방하지 못했던 반공을 공식이념으로 병사들에게 주입하였다. 1948년 11월 20일 제1여단장 이웅준 대령은 사병훈을 만들어 사병들에게 낭독케 하였고, 12월 1일 여순사건 토벌작전 전몰장병합동위령제에서 이범석은 국군 3대 선서를 선포하였다. 사병훈과 국군 3대 선서에서는 대한민국의 군인으로 그 체제를 인정하는 정신과 반공을 명시하였다.⁷⁸⁾ 둘째는, ‘반공’을 실현할 수 있는 인적 보충이었다. 여순사건을 거친 뒤 우익청년단체 성원들이 대규모로 육군에 입대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 11월 5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우익 청년단체를 포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⁷⁹⁾ 11월 17일 오후 3시 서청·국청·청충·독청·대청·죽청 등 6개 청년단체 최고 책임자들이 경무대를 방문하여 국군 강화문제를 토의하였다. 이 모임에서는 우선 11월 말일까지 반공에 대한 준비를 일체 끝마치고 정부에 무기 대여를 요청키로 결의하였다.⁸⁰⁾ 국방부에서도 청년단체를 포섭하기 위한 모병의 실시를 계획하였고,⁸¹⁾ 12월 말 군의 중견간부의 확충책으로 과거 청년단체의 간부나 군사경험자들을 모집하여 특별훈련을 거친 후 임관시켰다.⁸²⁾ 1948년 12월 20일 200명의 서북청년회원들이 비밀리에 대전의 경비대에 입대하였다.⁸³⁾ 이렇듯 육군은 숙군을 거친 뒤 우익 청년단체 성원들을 받아들여 반공의 이념 아래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데 동원될 수 있는 집단으로 변모하였다.

여순사건을 거친 뒤 육군은 여순사건이 향토연대라는 특성 때문에 쉽게 확산될 수 있었던 점을 인식하고 적극 대처하였다. 이전까지 제주도에 파병된 제11연대를 제외하고는

77) 12월 12일 국무총리 이범석은 임시군사고문단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 사건(여순사건·대구사건:인용자)이 대한민국 군대에 ‘지울수 없는 오점’을 남겼지만, 이를 계기로 ‘반공’을 강화하겠다”고 하였다. 『국방장관보고서』.

78) 전사편찬위원회, 1967, 앞의 책, 388~389쪽.

79) 『자유신문』 1948. 11. 6.

대한민국 정부수립 직후 주한미군사고문단에서는 이범석에게 청년단체의 활용을 제안하였고, 이범석도 청년단체 활용을 계획하였다. C.G, PMAG, 『Notes from Conference between Lee Bum Suk, Mr Hwang(interpreter). Col Wright, Lt Col Voss and General Roberts』 1948. 9. 20.

80) 이 모임에는 내무부장관과 문교부장관이 동석하였다. 『동아일보』 1948. 11. 19.

81) 『동아일보』 1948. 11. 16.

82) 『자유신문』 1948. 12. 26.

83) 이들은 제주도에서 수원으로 돌아온 제9연대에 배속되었다. 그들의 입대는 서북청년회도 자들과 제2여단장과의 비밀 계획에 따른 것이었다. G-2 P, #1023, 1948. 12. 27~12. 28.

부대 주둔지의 이동은 없었다. 하지만 여순사건을 거친 뒤 각 부대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다음은 각 연대의 부대이동을 살펴본 것이다.⁸⁴⁾ 제1연대는 1949년 1월 22일 서빙고에서 경기도 양주는 의정부로 이동하였고, 제2연대는 12월 29일 대전 주둔지에서 제주도로 파병되었고, 7월 7일 인천으로 복귀하였다. 제3연대는 49년 1월 27일 전북 남원에서 서울 용산으로 이동하였다. 제4연대는 48년 11월 20일 제20연대로 개편되었다. 제5연대는 49년 7월 10일 부산에서 충남 온양으로 이동하였다. 제6연대는 49년 4월 15일부로 해체되어 제22연대로 개편되었다. 제7연대는 49년 2월 20일 충북 청주에서 강원도 원주로 이동하였다가 5월 3일 다시 춘천으로 이동하여 38선 경비를 담당하였다. 제8연대는 49년 2월 10일 강원도 원주에서 춘천으로 이동하였다. 제9연대는 12월 15일 제주도에에서 대전으로 이동하였다가 49년 2월 1일에 서울로 이동하였다. 그 뒤 49년 6월 19일 경기도 포천으로 이동하여 38선 경비를 담당하였다. 제11연대는 48년 7월 24일 제주도에에서 경기도 문산으로, 49년 5월 30일 문산에서 개성으로 이동하였다. 제12연대는 49년 1월 29일 전북 군산에서 인천으로 이동하였다가 6월 5일부로 문산으로 이동하였다. 제13연대는 49년 1월 25일 온양에서 경기도 고양 수색으로 이동하였다. 제14연대는 여순사건의 진압이 완료된 48년 10월 28일 해체되었다. 제15연대는 48년 11월 25일 마산에서 전남 여수로 이동하였고, 동년 8월 8일 순천으로 주둔지를 이동하였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1949년 상반기부터 각 연대는 부대의 주둔지 이동이 이루어졌다. 여기에는 제주도 파병 등 작전상의 필요에 의한 것도 있지만, 그 보다는 오히려 향토연대의 특성을 해체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과 관련이 있다. 또한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1949년 7월 15일 국회에서는 병역법이 통과되어 동년 8월 6일부로 공포되었다. 이 제도는 과거와 같은 모병이 아닌 20세 이상 40세까지의 대상자들에게 병역의 의무를 강요하는 것이었다.

여순사건을 거친 뒤 군의 민간사회 영역의 감시가 강화되었다. 여순사건 당시 군은 계엄령이 선포된 지역에서 모든 권한을 행사하였다. 특히 헌병대는 계엄지역에서 즉결심판권을 행사하였다. 이에 따른 문제가 야기되자 1949년 1월 8일 호남지구헌병사령관 김인경 대위는 헌병대의 즉결심판권을 엄격히 금지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련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책임자까지도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⁸⁵⁾ 2월 12일 국방부 참모총장 채병덕은 국군의 난사사건과 비행에 대하여 국민에게 사과하며 군기를 확립하겠다고 하니 군을 신뢰하라는 요지의 담화를 발표하였다.⁸⁶⁾ 4월 13일 헌병대 사령관 장흥은 헌병대의 민간인들의 취

84) 여기서는 여순사건 이전에 창설된 연대만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그 뒤에 창설된 연대에서도 6개월 정도의 시기를 두고서 부대의 주둔지 이동을 단행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85) 『자유신문』 1949. 1. 12.

86) 『자유신문』 1949. 2. 13.

체 또는 구인하는 것은 불법월권행위이며, 이를 엄격히 금지하겠다는 담화를 발표하였다.⁸⁷⁾ 그러나 ‘군의 대민사찰 금지’는 지켜지지 않았다. 5월 25일 기자회견에서 신성모 국방장관은 “앞으로는 헌병대라도 일반민간을 구속감금하지 못하게 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던⁸⁸⁾ 것에서 나타나듯이 군의 대민사찰은 계속되었다.

숙군을 단행하면서 군은 당시 민족적 요구였던 친일과 청산의 과제를 ‘반공과 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명분으로 무시하였다. 1949년 1월 29일 반민특위 부위원장이던 김상돈은 일제 때의 고등경찰관이나 악질 고관 군인들을 처벌하겠다고 천명하였다.⁸⁹⁾ 이에 대해, 2월 2일 이승만 대통령은 ‘반공투쟁이 격렬할 때 이들의 기술이 필요하므로 장공속죄토록 하라’는 요지의 담화를 발표하여⁹⁰⁾ 친일경찰과 군인들의 숙청을 반대하였다. 다음날 김상돈은 다시 “치안문제, 정부위신 문제, 인심수습 등을 예고하였으나 악질반민자처단에 있어 국군이나 경찰에 추호도 동요될 것이 없으며 동시에 인심수습에 있어서는 반민특별법을 철저히 운영함에만 있는 것을 또 언명한다”고 하여⁹¹⁾ 친일경찰과 군인을 숙청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하지만 반민특위의 검거활동이 경찰에까지 미치자 친일경찰들은 헌병대로 들어가 특위의 검거를 피하였다. 6월 29일부터 헌병대에서는 이익흥·홍순봉·안익조 등을 헌병 소령으로 특별 임관시켰다.⁹²⁾ 채병덕은 원용덕·정일권 등과 의논하여 자신이 참모총장을 그만두게 되면 원용덕·정일권 등 군 수뇌부가 모두 물러나겠다는 것을 정부 측에 전달하여, 군을 정치에서 독립시키는 데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데 성공하였다.⁹³⁾

그러나 채병덕의 ‘군의 정치적 독립’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오히려 1949년 6월 공세에 적극 개입하였다. 1949년 6월 21일부터 헌병대에서는 서울시경 사찰과의 협조 아래 국가보안법 반대와 주한 미군 철수를 주장하던 소장파 국회의원들의 검거에 착수하여 김병화·김옥주·박윤원·강육중·노일환 등의 국회의원들을 체포하였고,⁹⁴⁾ 6월 25일 국회부의장 김약수 의원을 체포하였다.⁹⁵⁾ 김구 암살사건 당시 헌병대 사령관이었던 장흥은 이 사건을 법원으로 이첩하기를 주장했지만, 국방부 참모총장 채병덕의 명령으로 부사령관 전봉덕이 직접 수사본부장으로 수사를 진행하였다.⁹⁶⁾ 이렇듯 군은 대한민국을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이

87) 헌병사편찬실, 앞의 책, 제2편, 11~12쪽.

88) 『자유신문』 1949. 5. 26.

89) 『자유신문』 1949. 1. 31.

90) 『자유신문』 1949. 2. 3.

91) 『자유신문』 1949. 2. 4.

92) 이들은 군번 15111~15113으로 임관되었다. 『육본특명』 제131호.

93) 채병덕과 반민특위 위원들과의 대립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고정훈, 앞의 책, 98~101쪽.

94) 서울시경 부국장도 아무런 보고를 받지 못한 채 국회의원들의 체포가 이루어졌다. 『자유신문』 1948. 6. 23.

95) 『자유신문』 1949. 6. 26.

승만 정권의 반대파를 제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등 현실 정치에 직접 개입하였다.

V.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요약하며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국방경비대는 미군정의 계획에 따라 각 도에 1개 연대씩 편성되었고, 향토연대로서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향토연대와 ‘군대의 주역’이라는 의식은 국방경비대가 당시 민중들에게 친일집단으로 지탄받고 있었던 경찰과 다른 성격의 집단으로 규정할 수 있는 요인이었고, 국방경비대는 경찰과 극우 성향의 우익 단체 등과 미군정기 내내 끊임없이 대립하였다.

1947년 하반기 이후 미국은 국방경비대를 증강하여 국내외 적으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할 군대로 만들 것을 결정하였다. 그에 따라 국방경비대의 성격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제14연대가 창설되었다. 이 시기에는 또한 국방경비대의 통제를 위한 숙군이 시작되었다.

한편 남한만의 단선·단정이 추진되면서 여기에 반대하는 투쟁이 각지에서 일어났다. 미군정은 제주도에서 4·3항쟁이 일어나자 국방경비대를 동원하여 강력하게 진압하였다. 국방경비대의 강력한 진압으로 탈영사건과 박진경 암살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 차원의 사상검열이 이루어졌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뒤 숙군은 더욱 강화되었다. 이 숙군의 여파는 제14연대에도 영향을 미쳤고, 다른 한편으로 제주도 파병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제14연대의 남로당 세력은 이러한 객관적 조건에서 무장봉기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다.

지창수 상사의 선동으로 시작된 봉기는 순식간에 제14연대 병사들 다수의 참여로 이어졌고, 제14연대의 주력군은 주변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정부는 이 봉기를 반란으로 규정하고 강경 진압하였다. 정부군의 강경 진압에 부딪쳐서 이들은 지리산·백운산 등지로 입산하여 빨치산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육군은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육군에서는 이전 시기의 숙군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의 강력한 숙군을 전개하였다. 이를 통해 육군은 종래의 ‘불편부당하고 정치적 중립’이었던 집단에서 ‘반공’에 기반한 체제수호의 집단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여순사건을 겪은 뒤 육군의 이전의 향토연대의 특성을 해체하기 위한 부대 이동을 단행하였다. 이는 여순사건의 발발과 확산에 이 특성이 일정하게 작용했음을 인식하고 대처

96) 장흥, 「백범 암살은 신성모의 지령」(김상웅 엮음 『패배한 암살』, 학민사, 1992, 226~227쪽에서 재인용). 전봉덕 헌병대 부사령관은 6월 25일 발표에서 “이 사건의 조사는 경찰의 원조 아래 헌병대에서 단독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하였다. 『자유신문』 1949. 6. 26.

한 것이었다. 49년 상반기에 각 연대는 본래의 주둔지를 떠나는 조치가 취해졌다. 이러한 내부 정비를 거친 뒤 군은 민간영역에 적극 개입하였고, 이는 결과적으로 군의 정치참여에 단초가 되었다.

文獻資料와 證言을 통해본 麗順事件의 피해 현황

홍 영 기(순천대 사학과 교수)

I. 머리말

‘여순사건’¹⁾은 최근까지 禁斷의 주제로 인식되어왔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직후에 발생한 가장 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무려 반세기가 지났지만 아직도 여수와 순천지역에서는 이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꺼리며 한사코 덮어두려 한다. 당시의 상황이나 자신들이 목격한 내용을 말해달라는 부탁조차 하기 힘든 실정인 것이다. 이처럼 당시의 두려웠던 기억을 현재까지 가슴에 담고 있으면서도 현지의 주민들이 이 사건을 애써 기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해방직후 좌우의 갈등과 대립은 여러 차례의 유혈충돌을 촉발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1948년 4월 제주도에서 발생한 이른바 4·3사건과, 정부수립 직후에 일어난 여순사건을 들 수 있다. 좌우익의 다툼과 혼란의 와중에서 수많은 양민들이 무고하게 학살되었음은 잘 알려져 있다.²⁾ 또한 해방공간에서 6·25전쟁에 이르는 사이에 발생한 양민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려는 시도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아직까지 양민학살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얻었다고 말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을까 한다.

양민학살에 대한 피해조사는 희생자들의 伸冤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객관적인 진실을 밝혀 역사를 바로잡아 후세에 전해주기 위해서도 매우 필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잘 잘못을 가리는 차원이 아니라 역사에서 교훈을 얻기 위한 시도인 것이다.

-
- 1) ‘여순사건’에 대한 명칭은 매우 다양한데, 본고에서는 잠정적으로 여순사건이라 부르기로 하겠다.
 - 2) 양민의 범주를 규정할 때 논란의 여지가 많으리라 생각한다. 이미 4·19혁명 직후에 활동한 「국회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특위」의 보고서에서도 양민의 범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김삼웅, 『해방후 양민학살사』, 가람기획, 1996, 178쪽). 본 발표에서도 양민의 범주가 애매하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여순사건 당시에도 좌우익에 의한 불법적인 인명 살상이 자행된 점은 분명하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가려내기 힘든 실정이므로 본 발표에서는 좌우익에 의해 저질러진 전체적인 피해현황의 파악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그런데 여순사건의 경우, 지금까지도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³⁾ 이처럼 여순사건이 주목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그것은 여순사건을 일으킨 세력이 이제 갓 출범한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을 정면으로 부정했기 때문일 것이다. 다시 말해 체제를 부정하는 反亂의 성격이 강한 까닭에 여순사건은 접근하기 힘든 주제가 되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밤 여수에 주둔하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의 좌익계 장병들이 주동하였다. 이들은 제주도출동을 거부하고서 무장폭동을 일으켜 전남 동부지역을 순식간에 장악하였다. 그 후 이들은 지리산과 백운산 등 험준한 산악지대를 근거지삼아 한반도 남부지역의 이른바 빨치산투쟁을 선도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은 발생 당시만이 아니라 4-5년 동안이나 남한사회의 저변을 뒤흔든 커다란 사건⁴⁾이었다.

본 발표는 여순사건의 연구를 위한 기초 작업의 일환으로서, 여순사건의 중심무대였던 여수와 순천지역의 피해현황을 밝히려는 것이다. 현재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이므로 발표내용이 아직은 완벽하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현재까지 파악한 문헌자료와 증언채록에서 밝혀진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하고자 한다.

II. 문헌자료에 보이는 피해현황

여순사건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알려진 자료를 잘 분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자료를 발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이다. 현재까지 피해현황을 상세하게 알려주는 자료는 그리 많지 않다. 당시 신문에 실린 단편적인 기록을 통해 종합하여 정리함으로써 대강이나마 피해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다만, 최근에 여수지역사회연구소에서 간행한 『여순사건 자료집』 1·2집을 통해 여수지역의 피해상황을 어느 정도 가늠해볼 수 있다. 아울러 미군측의 『駐韓美軍情報日誌』(주로 G-2보고서)⁵⁾도 여순사건의 피해현황을 단편

3) 여순사건과 관련된 참고문헌은 나의 글, 「여순사건에 관한 자료의 성격과 연구현황」의 부록(『지역과 전망』 11,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1999, 193-196쪽)을 참고할 것.

4) 여순사건은 제주 4·3사건과 함께 현대 한국의 60대사건의 하나로 포함되었으(김광식, 「제주 4·3사건과 여순반란사건」, 『현대 한국을 뒤흔든 60대 사건』, 신동아 1988년 1월호 부록), 「광주·전남 50대사건」의 하나로 선정된 바 있다(전남일보 1994년 9월 6일자 「여순사건-항쟁인가 반란인가」 참조).

5) 『駐韓美軍情報日誌』(나의 글, [부록]-A의 13 참조)는 그간 몇몇 자료집에 발췌·인용되다가, 1989년에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에서 완간한 바 있다. 그 중에 여순사건과 관련된 자료는 제5권에서 제7권에 수록되어 있다. 이 자료에서는 대체로 사건의 원인과 진행과정, 그리고 진압과정과 그 처리 문제, 희생자의 규모 등이 언급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면 당시 미국의 관심과 의도가 무엇이었는가를 보다 명확하게

적으로 알려준다.

당시에 간행되거나 발표된 목격기나 취재기사도 피해의 파악에 크게 도움을 준다. 玄允三 洪漢杓 등은 신문사나 통신사의 기자들로서 진압직후 현지를 방문·취재하고서 『開闢』 등 당시의 잡지에 기고하였다.⁶⁾ 그 가운데 玄允三과 李在漢의 글은 진압을 담당하는 군경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朴燦植의 글은 날짜별로 객관적인 사실만을 기록하려는 자세가 엿보인다. 民主日報 기자인 洪漢杓과 合同通信 기자인 薛國煥의 글은 언론을 통해 잘못 알려진 사실들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한 흔적이 역력하다. 계엄령이 내려진 제한된 상황에서 쓰여진 글임에도 불구하고 객관성을 유지하려한 점이 크게 돋보이는 자료라 하겠다. 이 글들은 여순사건이 마무리된 이후인 11-12월 사이에 발표되었기 때문에 사건 당시보다는 좀 더 차분하게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한표는 수십 번이나 망설이다가 자신이 목격한 내용을 참고자료로 제공할 의도아래 썼다고 한다. 하지만 자신이 본 것 역시 표면적일 뿐, 공평하고 정확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사건 당시 신문기자들은 대체로 국군과 경찰, 우익인사의 발표를 기사화한 탓에 사실과 전연 거리가 멀거나 비상식적인 내용이 없지 않다고 부언하였다.

설국환 역시 비슷한 論調를 보이며, 도망 나온 철도경찰의 엉터리 증언을 비판했다. 그는 또한 다음과 같이 현지의 상황을 전하였다.

事實 順天麗水에 들어가기 前에 우리는 叛軍과 叛徒가 放火와 強盜질을 恣行하였고 強姦과 屍體破壞를 餘地없이 하였을 뿐더러 殺害에 있어서 警察官의 全家族을 沒殺하였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나 現地의 死體에서 婦女子 老人의 屍體는 거진 볼 수 없었을 뿐더러 屍體에 손을 댄 痕迹도 별로 보지 못하였다. 다만 數人의 警察責任者와 國軍將兵의 家族을 殺害하였다는 이야기를 當事者의 口傳으로 들었을 뿐이며 이러한 것으로 미루어보아 지금 摘發에 當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에는 多少의 에누리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⁷⁾

위의 인용문에서는 반군의 만행을 일방적으로 강조하였던 당시의 신문기사와는 상당히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당시 현지에 파견된 특파원들은 진압이후의 상황이 “復讐와 私感” 또는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무서운 논리가 지배하였음을 안타까워했다. 이와 같이 잡지에 실린 글들은 신문기사에 비하여 오히려 참고할만한 점이 많다는 점에서 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6) 나의 글, [부록]-A의 4-10의 글 참조.

7) 설국환, 「叛亂地區踏査記」, 『新天地』 1948년 11·12합병호 ; 『한국현대사자료총서』 8, 돌베개, 1986, 342쪽.

목된다.

여순사건과 관련된 자료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현장사진들이다. 당시 호남 신문 사진부장이자 광양출신이었던 이경모의 사진첩 『격동기의 현장』에는 여순사건에 관련된 귀중한 사진들이 들어 있다.⁸⁾ 이 사진첩을 통하여 여순사건의 참상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방에서 6·25전쟁에 이르기까지 전남지역의 상황을 풍부하게 전해준다.

아울러 주목되는 자료로는 이른바 빨치산들이 남긴 기록을 들 수 있다. ‘빨치산자료’는 6·25전쟁 중에 미군이 노획하여 미국 워싱턴의 국립문서보관소에 미공개 상태로 소장되어 있는데, 최근에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에서 간행되었다. 여순사건과 관련하여 『빨치산자료집』 제1권에는 빨치산의 회의록·결정서·명령서·격대원의 명단 등이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제7권에는 빨치산부대가 발행한 陣中新聞이 들어 있다. 이른바 남부군의 기관지인 「승리의 길」을 비롯하여 각 道別로 발행한 신문들이다. 이러한 자료로써 여순사건에 가담한 인물들의 행적을 추적할 수 있다. 즉 14연대와 지역민 중에 입산한 사람들의 이력사항 등을 알 수 있게 됨으로써 여순사건을 일으킨 주도세력과 참여층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크게 도움을 준다. 특히, 「승리의 길」 제23호(1951. 11. 3)에 들어있는 ‘려수병란삼주년기념좌담회’의 내용이 주목된다. 당시 빨치산들의 여순사건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 신문에는 여순사건에 참여한 5명(14연대 소속 3, 순천의 민간인 남성 1, 구례의 민간인 여성 1)의 경험담이 게재되어 있다.

그밖에도 국회에서 간행한 속기록을 참고할 수 있다.⁹⁾ 이 자료는 여순사건 직후에 국회가 개원하여 그 진상을 조사한 내용이다. 국회의 질의에 대한 정부측의 답변과 자체적인 조사활동 및 수습대책을 논의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건의 전말에서 전과 및 피해상황, 그리고 수습대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특히, 계엄령의 위헌시비와 황두연 의원의 불법감금, 반군점령기 이전과 이후의 희생자규모 등의 문제가 크게 논란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사건 당시를 회고하거나 증언한 자료들이 1980년대 후반이후 갑자기 쏟아져 나왔다.¹⁰⁾ 대체로 좌익계 빨치산 인사들의 자전적 증언과 진압을 주도했던 군경 수뇌부의 회고록, 그리고 지역민들의 목격담 등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러한 자료에서는 입산 동기, 빨치산으로서 활동한 내용, 양측의 피해 현황 등도 언급되어 있다. 반면에 진압군측에 참여했던 인사들의 회고록도 참고 된다. 이들은 물론 진압의 당사자였으므로 자신들의 활동을 정당하게 평가한 반면, 빨치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서술한 경우가 많았다. 자신들

8) 『격동기의 현장』, 눈빛, 1991, 57-90쪽 참조.

9) 국회사무처, 『제1회 국회속기록』 89-124호, 1948년 10-12월.

10) 나의 글, [부록]-A의 18-35의 글 참조.

의 ‘戰果’를 내세우는 부분에서 양측의 피해상황을 살필 수 있다.

그리고 여수와 순천 등 지역적 피해를 강조하는 현지주민의 입장에서 쓰여진 글도 적지 않다.¹¹⁾ 대체로 무고한 양민의 피해가 많았다는 점과 이 사건으로 인해 지역민 전체가 ‘暴徒’나 ‘叛徒’로 오해를 받는 억울한 상황을 강조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 아울러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함께 주민들이 당한 피해조사를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지역민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는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상에서 언급한 문헌자료를 토대로 여수와 순천지역의 피해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1> 여순사건 당시 여수·순천 지역의 피해현황

구분 지역	사망	중상	경상	행방불명	이재민	소실	손해액(원)	비고(전거)
여수	1,200	800	250			1,538	3억7736만	대동신문 11/9
	1,300	900	350	3,500			37억3천만	보건 후생국
	469		510		1만명		42억2645만	『민주경찰』 3-1, 1957
순천	1,134		103	818		13	1350만	대동 11/9
	1,135	103		818			1350만	보건 후생국
여수순천	3,392	2,056		82		8,554	99억1763만	동아 49. 1/22

위의 <표 1>에 의하면 여수 순천지역의 사상자와 행방자 규모에 대해서는 알 수 있으나, 그들이 좌우 어느 편에 의해 피해를 당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표 1>의 마지막 2행에 의하면 1949년 1월 10일 현재 여순사건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자를 총 3,392명으로 발표했다.¹²⁾

이상과 같이 여수·순천지역의 경우 사망자만 최소 2,000여 명에서 최대 약 1만명 정도 발생했다는 점이다. 여기에 덧붙여 행방자를 포함한 입산자 그리고 정부군에 체포되어 사형된 인원까지 합한다면 사망자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¹³⁾ 당시 순천과 여수지역의 인구가 약 10만 명이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이 지역 인구의 1/10이 여순사건에 연루되어

11) 나의 글, [부록]-B의 25·29와 <지역중심의 연구> 42-55 참조.

12) 동아일보 1949년 1월 22일자 ; 김득중, 『이승만 정부의 여순사건 대응과 민중의 피해』, 『여순사건 자료집』 2, 여수지역사회연구소, 1999, 78쪽 재인용.

13) 당시 여순사건에 연루되어 군법회의에 회부된 숫자를 약 6천명이나 되었으나, 이것 역시 불완전한 통계라고 한다(김득중, 앞의 글, 84쪽). 이들 가운데 무기징역과 사형선고를 받은 자가 절반 정도는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군측의 G-2보고서에 의하면, 1948년 11월초 대전에 이송된 포로 847명중 사형 211명, 무기징역 107명이었으며, 11월 29일 현재 포로 1,714명중 사형 866명, 무기징역 150명이었다고 기록된 점으로 보아 그러하다(『駐韓美軍情報日誌』 6, 595·632쪽).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러한 피해가 좌우 어느 한 세력에 의해 발생했는지, 아니면 좌우세력에 의한 피해를 모두 합산한 것인지는 잘 알 수 없다. 단편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내용조차 차이가 많은데다 피해의 주체와 객체를 아예 기록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여수의 경우, 14연대 반군과 토착 좌익세력에 의해 여수경찰서장 高寅洙와 천일고무사장 김영준 등 약 100명 내외가 1주일 사이에 희생되었다.¹⁴⁾ 당시 사망한 이들은 대부분 경찰들이었으며 소수의 우익인사(한민당 대동청년단 경찰후원회장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좌익세력들이 체포한 경찰과 우익인사 중에 양심적이라고 판정받은 사람들은 일부 풀려나기도 했다.¹⁵⁾

순천의 경우에는 반군의 점령기간이 여수에 비해 짧았음에도 인명피해는 상당히 많은 편이다.¹⁶⁾ 점령 3일 만에 반군과 좌익 세력은 약 500명 내외의 경찰 및 우익인사를 처형하였다.¹⁷⁾ 그 가운데 순천경찰서장 梁癸元과 광복청년단장 李正烈 등 경찰과 우익인사 60-70여명은 경찰서 부근에서 학살당했다. 순천지역의 좌익세력이 주도한 피해자는 경찰과 청년단 등 우익인사들이었는데, 경찰 희생자가 대부분을 차지했다.¹⁸⁾

여수와 순천지역의 좌익세력은 경찰과 우익인사를 처단하면서 인민재판이라는 형식에 의지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미군측의 기록이 그러한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공산주의에 동요된 극소수의 분자들이 그들 나름의 법을 가지고 집행했기 때문에 많은 생명들이 불필요하게 희생되었고,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¹⁹⁾

여수와 순천, 벌교 등지에서는 인민재판이 실시되었다. 재판의 조직형태는 다양했지만,

14) 정한조, 『三山二水』, 삼일인쇄공사, 1965, 139쪽 및 『주한미군정보일지』 6, 540쪽 참조.

15) 朴燦植, 「七日間の 麗水」, 『새한민보』 1948년 11월 하순 ; 『한국현대사총서』 7, 돌베개, 1986, 635쪽 및 김계유, 「1948년 여순봉기」, 『역사비평』 1991년 겨울호, 271쪽 참조.

16) 특히 순천에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한 배경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원인을 검토해야 하리라 믿는다.

17) 『주한미군주간정보요약』 5,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990, 640쪽 및 라이프지 1948년 12월 6일자, 「한국에서의 반란」, 『여순사건 자료집』 2, 144-5쪽 그리고 육군본부 정보참모본부, 『共匪沿革』, 1971, 211쪽과 유관중, 「여수, 제14연대반란사건」 3, 『現代公論』 1989년 4월호, 403쪽 참조.

18) 유건호는 약 300명(『轉換期の 内幕』, 조선일보사, 1982), 이효춘은 186명의 경찰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麗順軍亂研究』,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39쪽). 반면에 미군측은 여순사건 발발후 11월 13일까지 경찰관 사망자를 총 328명으로 집계하였다(『주한미군정보일지』 6, 595쪽).

19) 『주한미군정보일지』 6, 640쪽.

민간인으로 구성되었고, 그들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었다고 한다.²⁰⁾

이상에서 보았듯이, 여수·순천지역의 반군과 좌익세력은 약 600명 내외의 경찰과 우익 인사를 처형한 것으로 추산된다. 주로 경찰이 이들의 목표가 된 데에는 뿌리 깊은 反警感情이 누적되어온 결과가 아닌가 한다. 당시 경찰들 가운데 노련한 자들은 일찍 도피했고, 직무에 충실한 신입경찰들의 피해가 오히려 많았다고 한다.²¹⁾ 처형대상이 된 우익세력으로 는 한민당관련 인물이나 부르주아지, 지주계급, 대동청년단·학련 등 우익청년단체 등이었다.

한편, 이들 좌익세력들은 진압 후에 유폐된 악의적인 소문처럼 악행을 저지른 것 같지는 않다. 물론 극히 일부의 사례에서는 매우 잔인하게 학살한 경우도 없지 않았다. 앞서의 인용문에 보이듯이, 이들이 경찰과 우익인사를 처형했던 것은 사실이나, 잔혹하고 야만적인 행위를 다반사로 자행한 것은 아니었음이 분명하다.

이제 우익세력에 의한 발생한 좌익세력의 피해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여순사건이 마무리되면서 군경 및 우익세력에 의한 좌익과 그 연루자에 대한 탄압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군경과 우익세력의 보복에 의한 양민학살이 자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의 불법행위가 문헌자료상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으나, 어느 정도의 짐작은 가능하다고 본다.

당시 현지를 답사한 기자인 洪漢杓과 薛國煥 등은 군경을 비롯한 우익세력들이 탈환된 여수와 순천지역에서 “復讐와 私感”만의 기준으로 邑民들을 취급했다고 한다.²²⁾ 미국 기자들도 국군이 야만적으로 읍민들을 취급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²³⁾

여순사건을 신속한 진압을 위해 군사작전을 주도했던 미군측도 당시 군경과 우익세력의 불법적인 행위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경찰은 일반적 원칙하에 좌익주의자들로 드러난 사람들을 체포했다. 많은 결백한 사람들이 경찰과 군인에 의해 사용된 방법들을 통하여 죽거나 투옥되었다.²⁴⁾

군경에 의해 무고한 양민들이 희생되거나 투옥되었다는 점을 작전에 참여한 미군 당국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지도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진압에 참여한 군경에 의해 너무나 황당한 봉변을 당 하기도 했다. 국회의원 황두연·검사 박찬길·여수여중 교장 송옥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²⁵⁾ 이들은 단지 이승만 정부 및 우익단체와 상이한 정치적 견해를 가졌다는 이

20) 『주한미군정보요약』 5, 661쪽.

21) 설국환, 앞의 글, 344쪽 참조.

22) 홍한표, 「全南叛亂事件의 全貌」, 『新天地』 1948년 11월호 ; 『한국현대사자료총서』 8, 347쪽.

23) 설국환, 앞의 글, 340쪽.

24) 『주한미군정보요약』 5, 714쪽.

유만으로 총살되거나 간신히 풀려났다.²⁶⁾ 이들이 희생될 정도였으니 일반 시민들의 경우에는 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진압군과 경찰은 여수와 순천을 “빨갱이소굴”로 인식했던 까닭에 주민을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진압대상으로 취급함으로써 무고한 양민의 희생이 더욱 많아졌다.²⁷⁾ 그 결과 여수와 순천의 이른바 부역자 색출과정에서 애매하게 희생된 경우가 많아진 것이다. 여수와 순천지역을 탈환한 군대와 경찰은 주민들을 모두 학교운동장에 집결시켰다. 14연대 반란군과 좌익세력 및 이른바 부역자들을 가려내기 위해서였다. 15-45세의 남자뿐만 아니라 어린 애에서 부녀자들도 끌려나왔다. 여수의 경우 鎭南館·中央校·西校, 순천에서는 北校와 農林中學校에 집결시켜 생존한 경찰과 우익세력에 의해 이른바 「심사」를 받았다.²⁸⁾ 당시 순천에서 ‘부역자’를 색출하는 과정을 목격한 라이프지 기자의 글을 살펴보기로 하자.

그들(군경 ; 필자주) 뒤에는 두 사람이 곤봉을 들고 서 있었다. 실실 웃으면서 때리던 그 두 사람이 숨을 몰아쉬기 위해 잠시 쉴 때까지 그들은 무릎 꿇고 있던 사람들의 머리와 등을 계속 때렸다. (중략) 그는 자신의 칼빈 개머리판을 휘두르며 무릎 꿇고 있던 한 남자의 얼굴을 후려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계속 후려했다가, 마침내 그는 마치 염소처럼 헬멧을 앞으로 숙인 채 돌진하더니 밟고 있던 한 희생자의 머리에 자신의 강철 헬멧을 박치기해 버렸다.²⁹⁾

무고한 주민들이 이처럼 드잡이를 당하는 절망적 상황에 대해서는 증언을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군경을 비롯한 우익세력에 의한 피해가 좌익세력의 그것에 비해 훨씬 많았으리라 추정되지만 그 구체적인 규모를 잘 알 수 없다. 다만, 여수·순천 지역의 희생자 최소 2천명 중에서 좌익에 의해 희생당한 600명 내외를 제외한 그 나머지 인원은 군경을 비롯한 우익세력에 의한 피해자로 헤아려진다. 물론 이러한 추정 역시 정확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여순사건시 여수와 순천지역의 경우 피해규모를 정확히 밝히기는 어

25) 김득중, 앞의 논문, 55-67쪽.

26) 위와 같음.

27) 李孝春, 『麗順軍亂研究--그 背景과 展開過程을 중심으로--』,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33쪽. 한편, 애양원의 설립자 손양원 목사의 딸 손동희는 진압한 후 경찰은 학생들에게 치안권을 넘겨주었으며, 우익단체인 학련에서 좌익학생에 대한 고문과 처벌이 자행되었다고 쓰고 있다. ‘원수갚기에 여념이 없던 우익 학생들도 제 정신을 잃고 살기등등했다’는 것이다(『나의 아버지 손양원목사』, 아가페출판사, 1994 ; 1998 개정판, 231쪽).

28) 박찬식, 앞의 글 및 김계유 편, 『麗水麗川發展史』, 반도, 1988, 320쪽. 한편, 각 학교 운동장에 집결한 규모는 약 1,500-2,000명선이었는데, 미군측도 이들이 모두 좌익세력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주한미군정보일지』 6, 550쪽).

29) LIFE誌 1948년 12월 6일자, 「한국에서의 반란」; 『여순사건 자료집』 2, 144-145쪽.

럽다고 생각한다. 현재까지 알려진 문헌자료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함께 더욱 많은 자료들이 공개 되어야만이 좀 더 구체적인 피해현황이 드러나리라 믿는다. 아울러 문헌자료상으로는 피해의 주체와 객체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희생자의 세부지역별 규모를 아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그리고 반군과 좌익세력의 점령기간 중에 그들의 만행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보수적 시각에서 이루어진 초기의 연구가 대부분 그러하였다.³⁰⁾ 반면에 우익계의 보복과 군경의 과잉진압 역시 그에 못지않았다는 점을 강조한 글도 적지 않다.³¹⁾ 이 문제와 관련하여 좌우의 세력이 각각 상대방을 적대시하고 처형한 원인이나 동기에 대해 주목해야 할 것이다.

III. 증언을 통해본 피해현황

앞장에서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여수·순천지역의 피해현황을 짚어보았다. 이제 현지주민들의 증언을 통해 그 피해현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보고자 한다.

여수지역의 경우에는 몇해 전부터 여수지역사회연구소를 중심으로 꾸준한 피해조사를 해오고 있다. 그 결과물이 『여순사건 자료집』(이하 『자료집』) 1·2라 할 수 있다. 『자료집』 1은 진상규명과 지역민의 명예회복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여수지역 희생자의 규모를 어느 정도 파악하였다. 여순사건이후 6·25전쟁 직후까지의 피해를 조사했는데, 이 기간에 884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조사되어 있다.³²⁾ 특히 이들 희생자의 명단과 연령, 성별, 처형장소, 피해의 주체와 객체 등이 파악되어 있어서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에 한걸음 다가설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러한 내용은 증언채록을 통해 정리한 것이므로 아직은 미흡한 면이 없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시도는 앞으로의 연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리라 믿는다.

『자료집』 1에서는 당시 여수읍내(현 여수시내권)와 面단위까지 세분하여 피해실태를

30) 현운삼, 「전남반란사건의 전모」; 설국환, 「여순반란」, 『해방 22년사』, 문학사, 1967, 253쪽; 『한국전쟁사』 1, 1967, 458쪽; 『공비연혁』, 1971, 204쪽; 김석학·임종명, 앞의 책, 51-69쪽; 유건호, 「여순반란사건」, 『전환기의 내막』, 1982, 150쪽; 『대비정규전사』, 1988, 34쪽; 손동희,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 아가페출판사, 1994; 1998 개정판, 195-197쪽 등 보수적 시각에서 씌어진 글은 한결같이 좌익계의 만행을 지적하고 있다.

31) 홍한표, 「전남반란사건의 전모」; 설국환, 「반란지구답사기」; 김계유, 「내가 겪은 여순사건」, 『전남문화』 4, 1991, 54-57쪽; 김계유, 「1948년 여순봉기」, 『역사비평』 1991년 겨울호, 289-292쪽; 고영민, 『해방정국의 증언』, 사계절, 1987, 215-216쪽; 李孝春, 앞의 논문, 33-38쪽 등.

32) 『자료집』 1, 1998, 88쪽.

파악되어 있으므로 지역별 상황의 이해에 크게 도움이 된다. 지역별 상황을 표로 작성하면 아래와 같다.

<표 2> 여수지역의 피해현황³³⁾

지역명	좌익	우익	미상	계	비고
여수시	138	238	38	414	
남 면	0	31	14	45	
돌산읍	3	36	54	93	
삼산면	1	54	60	115	
삼일면	6	16	28	50	
소라면	1	8	8	17	
쌍봉면	3	1	6	10	
울촌면	2	12	20	34	
화양면	0	9	70	79	
화정면	1	5	21	27	
계	155	410	319	884	

위의 표를 살펴보면, 좌익세력보다는 우익세력에 의한 피해가 훨씬 심각했음을 알 수 있다. 전자가 155명의 피해를 야기 시킨 반면, 후자는 410명의 피해를 발생시킨 점에서 그러하다. 이는, 피해의 주체와 객체를 어느 정도 가늠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물론 좌우익 어느 편이 가해자인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런데 여수시를 제외하고는 면 단위에서 좌익세력이 입힌 피해는 별로 많지 않다. 이는, 주민들의 원성의 대상이었던 경찰이나 소수의 우익인사를 처단한 것이었음을 의미할 것이다. 반면에 우익세력에 의한 피해는 각 지역마다 대체로 많은 편이다. 특히 삼산면과 돌산읍, 남면 등에서 희생자가 많이 발생했는데, 도서지역으로 잠입한 반군과 좌익세력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여수 삼일면 화치마을에서는 경찰이 좌익에 연루된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일가족 8명을 마을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총살하기도 했다.³⁴⁾ 그리고 여수의 경우에는 좌익세력이 경찰과 우익인사를 처형하자, 그 보복에 의한 좌익세력이나 무고한 양민의 피해가 더욱 커진 것으로 믿어진다.

위의 통계가 당시 여수의 피해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33) 이 표는 『여순사건 자료집』 1에 실린 지역별 피해실태(86-87쪽)를 참고하여 작성했다.

34) 『자료집』 2, 11쪽.

문헌자료를 통해 알려진 여수지역 피해자 약 1,200-1,300명 선에 근접할 정도의 희생자를 복원해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한편,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여수지역에서 발생한 집단학살현장과 암매장지를 찾아내었다.³⁵⁾ 현재까지 확인된 집단학살현장은 율촌지서를 비롯한 14곳이었으며, 암매장지는 호명동 야산을 비롯한 6곳이었다. 집단학살은 대체로 여수시 전역과 각 면에서 자행되었으며, 암매장지는 여수시 외곽에 주로 위치해 있다. 그리고 암매장지의 발굴을 통해 유골을 발견함으로써 학살현장을 확인했다는 사실도 주목된다. 지금까지 이러한 시도가 전혀 없어서 자칫 풍문으로 묻혀버릴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이다.

집단적인 학살은 군경과 우익세력이 ‘부역자’를 색출하는 과정에서 자주 발생했다. 당시 여수의 상황에 대하여 당시 군청 직원이었던 김계유씨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세 곳에 모인 시민들에 대하여도 살아남은 경찰관이나 우익진영 요인들이 돌아다니면서 소위 「심사」라는 것을 했는데, 시민들 중에 가담자가 눈에 띄면 뒤따른 군경에게 ‘저사람’하고 손가락질만 하면 그 자리에 서 바로 즉결처분장으로 끌려가는 판이니 누구나 산목숨이라고 할 수 없었다.³⁶⁾

지역공동체 성원 간에 자행된 ‘손가락총’은 인간성 말살과 공동체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었다.³⁷⁾ 「심사」 과정에서 ‘손가락총’이라는 말이 유행하였으며 증상모략이 난무했었다.³⁸⁾ 이로 말미암아 무고한 희생자가 더욱 많아졌고,³⁹⁾ 그 희생의 주체가 누구인지 애매한 경우가 많았음은 물론이다.

한편, 순천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체계적인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현재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에서 증언채록과 자료집 발간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여수에 비해 순천지역은 증언채록이 훨씬 어려운 실정이다. 여수는 화재로 인한 물질 피해가 많은 반면에 순천은 짧은 기간에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반군 점령기간이 3일밖에 되지 않았던 순천에서 사망자가 약 1,200명 정도나 되었다. 이는, 당시 약 6-7만명의 여수와 약 4-5만명의 순천의 인구비례로 보더라도 희생자가 많았음을 의미한다. 좌익에 의한 우익측의 희생자도 여수보다 더 많았으며, 그로 인한 우익에 의한 좌익측의 희생도 클 수밖에 없

35) 『자료집』 2, 11쪽.

36) 김계유, 『여수여천발전사』, 321쪽.

37) 김득중, 앞의 논문, 54쪽.

38) 『寶城郡史』, 1995, 414쪽 ; 이효춘, 앞의 논문, 34쪽.

39) 당시의 참상을 목격한 소설가 鄭飛石은 우리 민족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며 절망감을 토로했다. 그는 당시 문교부파견 현지조사반장으로 내려와 이 지역의 비참한 상황을 글로 발표한 바 있다(『麗順落穂』 1-3, 1948. 11. 20 ; 『여수문화』 5, 여수문화원, 1990, 32쪽).

었다. 이로 말미암아 순천지역은 증언을 통한 피해조사를 진행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약 3년 동안 피해조사를 진행하면서 어느 정도의 피해규모를 파악할 수 있었다.⁴⁰⁾ 현재까지 조사한 순천 시내권과 지역별 피해실태는 아래와 같다.

<표 3> 순천지역의 피해현황⁴¹⁾

지역명	좌익	우익	미상	계	비 고
순천시	약 500	?	38	약 1,200	
낙안면	13	약 17		약 30	
별량면		12		12	일부 수형생활중 행불
상사면	7	2?		9?	우익에 의한 피해 진술거부
서면	4	약 150		약 154	입산자 · 가족학살
송광면	2	3		5	강제입산후 행불자 7
승주읍	19	?		19?	
외서면	9	7		16	
월등면					미조사
주암면	7	약 20		약 27	입산후 행불자 40
해룡면	약 10	약 25		약 35	입산자 · 수형자 행불
황전면	3	약 15		18	
계				1,525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순천의 경우에도 여수와 크게 차이가 있지 않다. 반군이나 좌익세력에 의한 피해보다 군경을 포함한 우익세력에 의해 희생자가 많았다. 특히 군대보다는 경찰에 의한 피해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그것은 좌익에 의한 희생자중 경찰이 많았다는 점과 연관이 깊을 것이다. 좌익에 의한 경찰의 피해는 경찰의 非行과 관련된 경우가 많았다. 진압과정에서도 경찰의 非理가 그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반해 좌익은 대체로 경찰·청년단·지주 등을 대상으로 삼았으며, 종교적 갈등에 의해 기독교인이 처형의 대상이 된 경우도 있었다. 반군에 의한 피해보다는 토착 좌익세력에

40)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의 연구원뿐만 아니라 순천대 사학과 학생들과 매년 순천지역의 여순사건 피해조사를 3년째 실시하고 있다. 또 올해부터는 순천대 교육대학원에 적을 둔 교사들과도 지역별로 조사 중에 있다. 여기에 제시된 통계는 이들의 조사결과에 전적으로 의존하였음을 밝혀둔다.

41) 이 표는 『여순사건 자료집』 1에 실린 지역별 피해실태(86-87쪽)를 참고하여 작성했다.

의한 피해가 많았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좌익에 가담한 사람들은 대체로 지식층과 빈민층이 주류를 이루었고, 점령기간 동안 형식적이거나 토지개혁을 시도한 경우도 확인할 수 있었다. 피해가 심한 서면 지역의 경우 일제강점기이후 소작쟁의가 활발했는데, 일찍부터 사회주의에 대한 인식이 깊은 지역이었다. 해방 전부터 활동 중이던 김기수와 박병두 등 사회주의자의 활동과 연관되어 그 연루자 및 가족들이 이곳에서는 집단적으로 희생되었다.

뿐만 아니라 입산자도 많이 발생했는데, 순천의 시외권에서는 서면·주암면·해룡면이 그에 해당된다. 이 지역은 일찍부터 좌익지도자를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졌는데, 여수지역과 가까운 해룡면은 14연대내 좌익세력과 연계되어 있었다고 한다. 빨치산 활동으로 유명한 이영희는 바로 해룡출신이다. 또한 入山은 우익의 탄압을 피하려는 방편이었다고 생각된다. 당시 주민들 사이에는, “부역했다고 하면 총살, 안했다고 하면 타살”이라는 말이 유행했을 정도였으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순천지역의 집단학살장소는 좌우익에 의해 구분할 수 있다. 좌익에 의한 학살은 순천경찰서 주변과 순천역전광장, 낙안읍성내 낙민루앞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우익에 의한 학살은 진압 후 집결지인 北校와 농림중학교, 서면의 지서 뒤·판교·구상·솔재, 주암면 지서 부근 등지에서 주로 발생했다.

집단매장지의 경우에도 여러 곳이 거론되었는데, 북교와 농림중학교 외에 용수동 수원지부근, 생목동 이수중학교 부근, 매곡동 난봉산 자락, 조곡동 독실 뒷산, 서면의 솔재와 청소골, 판교, 구상 등지이다. 「부역」 혐의자로 몰려 마을앞 개울가나 뒷산에서 학살된 경우도 많았으며, 독실의 경우에는 희생자가 끌려가면서 장작더미를 가져갔다가 총살된 후 불태워졌다고 한다. 순천도 여수와 마찬가지로 무고한 양민들이 피해를 당한 경우가 매우 많았다는 사실을 증언채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여순사건과 관련하여 희생된 경우도 있지만, 단지 그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혹은 이른바 「부역」 혐의자로 몰려 죽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지쳐버린 심신의 상처와 한을 씻을 방법이 없었다. 오히려 이들에게는 「叛徒(반란민)」와 「暴徒」라는 멍에가 씌워졌을 뿐이다. 결국, 이들은 심적 고통과 절망감을 주체할 수 없었는데, 당시 자신들의 심정을 노래로나마 달래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를테면, 「여수부르스」의 “아버이 혼이 우는 빈터에 서서 옛날을 불러봐도 옛날을 불러봐도 재만 남은 이 거리에 부슬부슬 굶은 비만 내리네”라는 가사와 흐느끼는 듯한 곡조가 이들의 답답한 심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또는 좌우익 인사들이 처형직전에 불러 유명해진 「봉선화」나 「육자배기」, 「부용산가」 등이 유행처럼 번졌다는 사실은 피의 보복으로 얼룩진 여순사건을 기억의

저편으로 지워내려는 노력의 일환이었음을 의미할 것이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여순사건 당시 여수와 순천지역의 피해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제 피해현황을 포함한 여순사건에 관한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맺음말에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로 제14연대의 좌익계 사병들이 폭동을 왜 일으켰는가를 객관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군인들의 봉기로 비롯된 사건이 전남 동부지역 사회에 크게 확산된 배경이나 원인도 밝혀져야 한다. 다른 지역에서도 군인들에 의한 봉기가 시도된 경우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타 지역에서는 민간인들이 적극 동조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여순사건에서는 특이하게도 일부 지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던 것이다. 그러한 원인이나 배경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로 여순사건을 일으킨 구성원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요청된다. 여순사건을 일으킨 14연대의 좌익계 사병층과 좌익계 지역활동가의 행적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적은 거의 없었다. 김지화나 홍순석에 대한 단편적인 사실들이 알려져 있을 뿐 지창수 상사에 대한 행적조차 거의 파악된 적이 없다. 특히 하사관 이하의 사병들에 대한 특징과 그들이 입산한 이후에 보이는 활동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으면 한다.⁴²⁾ 아울러 지역민들이 입산한 원인과 입산 이후의 행적 등에 대한 검토 역시 병행해야 할 것이다. 여순사건의 주도인물과 참여층의 특징을 밝힐 수 있다면 사건의 진실에 한걸음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

셋째로 좌우익의 다툼 속에서 학살된 무고한 양민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본 발표에서는 여수와 순천지역을 대상으로 피해현황을 파악하는데 그쳤지만, 장차 전남 동부지역 전체를 아우른 피해조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구례·보성·광양 등지는 지리산 백운산 조계산 등을 끼고 있어서 양민학살이 많았던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여순사건의 여파가 미친 모든 지역을 포괄하는 피해조사가 절실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칭 「여순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결성하여, 일시적인 노력이 아니라 항구적인 조사와 연구 활동이 이루어졌으면 한

42) 이태에 의하면, 이진범 · 이영희 · 송관일 · 김홍복 · 김금일 등 여순사건을 일으킨 하사관 계층이 빨치산의 주력을 형성했다고 한다(『여순병란』 하, 61쪽 ; 「강동정치학원과 지리산 유격대」, 『역사비평』 1988년 가을호, 349쪽).

다. 이러한 활동은 지역 주민과 연구기관, 유관단체 등의 협조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므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타 지역 양민학살사건의 진상조사단체와 연대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여순사건에 대한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작업이 없지 않다. 이를테면, 여순사건과 관련된 문헌자료의 체계적인 정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사건이 발생한지 반세기가 지난 현재까지도 증언록이나 자료집의 간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여순사건에 관련된 문서들을 조속히 공개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경찰의 심문기록이나 보고서, 사법부의 판결문, 군 당국의 각종 자료 등이 해당된다.

그리고 지역민들이 경험하거나 목격한 내용을 증언으로 채록하는 작업도 매우 시급한 일이다. 사건의 당사자와 목격자들이 점점 줄어드는 실정이므로 더욱 그러하다. 현대사에서 증언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증언을 통해 문헌자료에서는 찾을 수 없는 “장구통”이나 “양날백이”와 같은 여순사건과 관련된 용어들을 찾을 수 있었다.⁴³⁾ 또는 진압이후 경찰의 존재를 ‘하늘과 땅에도 없는 천상천하’였다거나, 희생자의 집단매장지를 확인하는 과정, 좌우익에 의해 처형되는 상황 등도 증언을 통해 밝혀지고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정부수립직후 가장 비극적인 사건인 여순사건의 성격이 규명될 것이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명칭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 사건으로 인해 지난 반세기동안 여수와 순천은 “반란의 도시”라는 테두리 안에 갇혀 있었다. 이제 이 지역 주민들이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면서 그 어두운 그림자를 떨쳐버리고 진정 서로 용서하고 화해의 무대로 나설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43) “장구통”과 “양날백이”란 좌익과 우익 양편 모두에 협조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이러한 사실은 순천대 사학과 학생들이 채록한 증언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제3장 여순사건의 진상과 국가테러리즘

여순사건과 제임스 하우스만	206
여순사건 왜곡보도의 과거와 현재	230
여순사건의 진상과 민간인집단학살	253

여순사건과 제임스 하우스만

김 득 중(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I. 머리말

제임스 하우스만(James Harry Hausman)이 어떤 사람인지는 한국과 미국에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심지어 그의 고향에서조차 그가 한국 땅에서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인지는 알고 있지 못하다. 우리에게 그가 알려진 것은 하우스만의 회고록이 한국일보에 연재되고, 이것이 책으로 묶여 출판되면서부터였다. 이 책이 출판되면서 제임스 하우스만이 한국군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알려졌지만, 이것조차 이전부터 그의 역할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군 관계인물이나 그의 배후 역할에 주목한 언론인·정치학자·역사학자들에 한정되었을 뿐이었다.

미국에서는 하우스만 개인을 다룬 논문이 이미 2편 나와 있다. 하우스만에 대한 논문을 최초로 쓴 사람은 밀레였다. 최근 도널드 클락은 한국군 형성과정에서의 하우스만 뿐 아니라 한강교 폭파 등의 쟁점에 대해서도 언급한 글을 한 심포지움에서 발표했다.) Allan R. Millet, Captain H. Hausman and the Formations of the Korean Army, 1945~1950, Armed Forces and Society, XXIII(Summer 1997)

Donald N. Clark, 2001.5.4., Jim Hausman, Soldier of Freedom, 미시간대학교 주최 'Between Colonialism and Nationalism: Power and Subjectivity in Korea, 1931-1950' 발표문. 하우스만에 대한 글은 도널드 클락 교수가 펴낸 Missionaries, Miners, and Military Advisors: the American Experience in Korea, 1900-1950이라는 책에 수록될 부분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하우스만의 역할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이며, 이는 하우스만이 행했던 역할을 군 형성과정의 비사(秘史) 정도로만 취급하고 인식하는 데에도 일정한 원인이 있다. 하우스만이 주로 정보방면의 임무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하우스만과 가까이 긴밀한 관계를 가졌던 정일권이나 백선엽 조차 그들의 회고록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하우스만을 언급하고 있는 정도이다.) 백선엽, 1989, 군과 나, 대륙연구소출판부 백선엽, 1992, 실록 지리

산, 고려원 정일권, 1986, 전쟁과 휴전, 동아일보사 이형근, 1993, 군번 1번의 외길 인생, 중앙일보사.

정일권이나 백선엽의 책을 아무리 자세히 훑어보아도 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적다. 전직 한국군 장성들이 자신의 회고록에서 하우스만을 언급하기를 꺼렸다면, 그 이유는 하우스만이 이들 장성들과 너무나 가까운 사이여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하우스만이 너무나 많은 일을 했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여순사건 때 정보장교 자격으로 최초의 정보군 관계 대책모임에 참석했던 고정훈의 회고록에는 하우스만에 대한 많은 사실들이 나와 있다.) 고정훈, 1967, 비록 군, 동방서원. 고정훈은 해방 직후 소련군 통역으로 활동하다가, 월남하여 미군 정보기관에서 일했다. 이승만정권때는 진보당 선전간사를 지냈고, 4월혁명 뒤에는 혁신계에 몸을 담가 통일사회당 선전국장으로 활동 중, 5·16쿠데타로 체포되어 수감되었다.

하우스만은 1946년 7월 26일 남한에 첫발을 딛은 이래 국방경비대 고문관·미군사고문단장 고문을 지냈고 1950년에는 채병덕과 이승만의 군사고문을 지내면서 한국군 형성과정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는 한 사람의 키 큰 미군 대위에 불과했지만, 1960년대까지 한국정치의 배후무대에서 정력적으로 활약했다. 하우스만은 일국의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었고, 남한 ‘국군의 아버지’로 자칭했다. 자신의 회고록 제목 또한 그렇게 지었다. 어떻게 보면 당돌하게 보이는 이런 표현은, 그러나 사실에 가깝다. 아니 미군 장성이려면 모를까 어떻게 일개 미군 대위가 어떻게 그런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말인가? 하우스만의 일생은 국군의 역사, 더 나아가 군부가 수 십년 간 좌지우지했던 한국 현대사의 흐름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대부분의 정보 업무가 그렇듯 그는 베일에 싸인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는 베일에 싸여 감추어지기에는 활동영역이 너무나 컸고, 고위층의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었다.

한국현대사 연구자인 미국의 커밍스는 하우스만이 30년을 한국에서 보낸 가장 주요한 미국 요원이었으며, 미국과 한국군부 간에 그리고 이들 정보기구 간의 연결자로서 활동했다고 썼다. 커밍스는 하우스만이 ‘흔뜨기 같은 언행 뒤에 자신의 기술을 감추고 있는 교활한 공작원’이었으며, 한국판 에드워드 란즈데일이라고 주장했다.) Bruce Cumings, 1990,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 2, Princeton Univ. Press, p.285

에드워드 란즈데일(Edward Lansdale, 1908~1987)은 2차 세계대전 때 미군 정보기관인 OSS에서 근무했다. 1948년까지 필리핀군이 정보기관을 창설하는 것을 도운 그는 공군 전략정보학교에서 교관으로 일했다. 그는 공산주의 후크단 토벌에 고심하던 필리핀군의 정보 업무에 대해 조언하였고, 라몬 막사이사이 당시 국방부장관과 미군 사이에서 연락장교 역

할을 했는데, 이는 남한에서 하우스만이 했던 역할과 비슷했다. 그는 게릴라토벌, 심리작전 뿐만 아니라 시민활동, 후크 포로의 재활사업에까지 관여했다. 그 뒤 베트남에서도 군과 정부에 국내 안보문제를 조언하는 역할을 했다. 그는 냉전시대에 '강력한 미국 행동'을 추구 하면서, 필리핀과 베트남이 공산주의에 맞설 수 있도록 이 나라들을 키워냈다.

최근 한 신문 칼럼에서 박노자는 제임스 하우스만의 역할과 행동을 아는 것은 (젊은이들이) “배우지 못한 또 다른 현대사 속에 어떤 모습들이 감추어져 있는가, 그리고 한국현대사에서 대미 관계는 어느 정도 중속적이었는가”를 아는 것이며, 하우스만을 한국사 교과서에 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노자, [어두운 현대사 가리기], 한겨레신문 2001.6.11.

이 글은 그 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제임스 하우스만을 한국군의 형성과정과 연관시켜 보고자 한다. 이 같은 측면은 이미 지적되어 온 바이지만, 여기에서는 아직까지 이용되지 않았던 그의 증언을 토대로 구체적인 실상을 드러내 보이고자 한다.) 여기에서 인용되는 인터뷰 자료는 John Toland interview, 1988, Austin, Texas(하버드대 한국학연구소 소장); KBS의 하우스만 인터뷰, 1992.11.15., Austin, Texas(영어본, 국역본)이다. 하우스만의 인터뷰는 그의 활동에 대한 다른 자료들이 아직 발굴되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양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하우스만 인터뷰에는 자기 역할에 대한 과대평가가 자리 잡고 있다. 그가 한국군 형성과정과 한국정치사의 주요 고비에서 일정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나, 자기의 치부는 드러내지 않은 채 자신의 공적에 대해서만 부풀려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김점곤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하우스만의 회고록의 “신빙성이라던가 과장되는 것에 상당히 놀랐”으며, 당시 상황으로 보아서 미군이 적극 지원은 있을 수 없다고 미군의 지원을 부정했다.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의 김점곤 인터뷰, 1999년

한편 하우스만은 ‘국군의 아버지’라는 얼굴 이외에도 또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남한 반공국가 형성과정은 ‘누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될 수 있는가’라는 자격심사과정에 다름 아니었는데, 이 때 ‘좌익 빨갱이’는 너와 나를 가르고, 국민과 비국민을 결정하는 주요한 잣대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민간인학살은 국민자격을 심판하는 주요한 도구로 사용되었다. 여순사건 진압이 끝난 뒤 이승만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는 등 반공체제 구축에 전력 질주하는 바, 하우스만은 여순사건 진압작전을 주도한 인물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하우스만은 단지 배후에 있던 인물이 아니라 학살이 있을 수 있게 만든 든든한 말뚝이었다.

II. 한국부임 이전의 하우스만

이 부분은 John Toland interview, 1988, Austin, Texas(하버드대 한국학연구소 소장)에 많은 부분 의존했다.

제임스 해리 하우스만은 1918년 2월 28일 뉴저지주 러니미드(Runnemede)에서 아버지 존 하우스만(John Otto Hausman Sr.)과 스코틀랜드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건축업자이자 청부업자였는데 이름에서 나타나듯 독일계 사람이었다.

러니미드의 중학교와 뉴저지 오두본(Audubon) 고등학교에 다니던 하우스만은 그의 나이 16세에 군 입대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그의 나이로는 부모 동의를 얻지 않으면 도저히 군 입대를 할 수 없었고, 결국 그는 형의 이름을 빌어 지원하게 되었다. 원래 제임스란 이름은 그보다 6살 위인 형의 이름이었다. 원래 그의 이름은 아버지를 따라 지은 존 오토 하우스만 주니어(John Otto Hausman Jr.)였다. 그는 자신이 입대한 이유를 ‘형은 누나를 만나러 가고 혼자 남아있는 상황’ 이었고, 이런 상황에서 집은 커 보였고 ‘외로웠다’고 회고했다.

군대에 들어간 하우스만은 메인주 맥킨리 항구에 주둔하고 있던 5보병 연대에 배치되었고, 1940년에는 형의 이름을 공식적인 자신의 이름으로 사용하기로 결정되었다. 얼마간 파나마에 근무하기도 한 하우스만은 1941년 1월 24일 소위로 진급했고, 아들을 낳은 다음에는 아이오와주 데스 모인(Des Moines)항에 여성보조군(Women's Army Auxiliary Corps; WAAC'S) 형성의 임무를 맡고 차출되어 배치되었다. 이는 하우스만이 원하던 보직은 아니었으나 월급은 많았다. 하우스만의 상관은 그가 결혼했고, 아이가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이 부대에 배치한 것이었다. 그리고 하우스만은 이 부대 교육에 필요한 군사경험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다. 그 뒤 중위로 승진한 하우스만은 6개월이 조금 넘어서 다시 대위로 승진하였다. 소위에서 대위까지 6개월 만에 빠르게 승진했던 것이다.

그 뒤 하우스만은 미주리주 레오나드 우드 항구에서 활동했던 75보병 사단에 배치되어 벌지전투에서 부상병을 영국으로 후송하는 일을 맡기도 하고, 작전장교로 289보병연대 1대대에 S-3에 배치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는 본대로 귀환하게 된다. 한국에 오기 직전까지 하우스만은 펜실바니아 군사행정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얼마 지난 뒤 하우스만은 1946년 7월에 한국으로 파견되게 된다. 이 때 하우스만의 나이는 28세였다. 하우스만은 도쿄의 맥아더사령부를 거쳐,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다른 동료 군인들은 거의 모두 일본에 머물러 있고 싶어했다. 하지만

하우스만은 이들과 달리 한국에 선뜻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는 그가 한국에 대해 어느 정도 사전 지식을 갖고 호감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군인의 자세에 충실한 판단이었다.

한국에 들어와 러치장군을 만난하우스만은 점령지 군사행정은 싫다는 의향을 표시했다. 그의 부임 신고를 들은 러치는 “자네 기록을 보니 병사이므로 프라이스 대령이 국내 보안부서를 조직 중에 있으므로 프라이스 대령에게 신고하게. 우리는 지금 정치적인 이유로 보안부서 조직이란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 입장이지”하고 말했다.

미국과 소련이 남북을 각각 점령한 상태에서양측은 남과 북에 군대를 만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고, 따라서 남북에는 미소양군과 치안유지만을 위한 경찰이 있었을 따름이었다. 그래서 남한 군대는 경찰을 보조하는 경찰예비대(constabulary)로 출발했다. 하우스만은 미군정 하에서 조선경비대 창설요원으로 배속 받으면서 남한과의 인연을 시작했다.

이후 프라이스 대령에게 신고한 후 하우스만은 춘천 8연대에 배치되어, 연대를 훈련시키고 확장하는 일을 1개월 정도 맡았다. 이 당시는 경기도의 1연대만이 한국 내의 유일한 완전한 규모의 연대였다. 하우스만은 춘천 8연대의 생활에 대해 “내 군대경험 12년에 비추어 그 곳의 모든 것이 정상이 아니”라고 느끼고 있었다.) KBS의 하우스만 인터뷰, 12쪽

한편 하우스만은 춘천 8연대 활동에 대해 주기적으로 경비대 총사령관이었던 배로스(Russel D. Barros) 대령에게 보고하곤 했는데, 배로스는 하우스만의 보고서를 눈 여겨 보았다. 드디어 배로스는 하우스만을 찾아와 서울로 와서 자신의 수석보좌관 일을 맡아달라고 청하였다.) John Toland interview, p.9

1946년 8월부터 하우스만의 본격적인 활동이 서울에서 시작되었다.

III. 한국군 형성과 하우스만- ‘국군의 아버지’

하우스만은 1946년 춘천 8연대 근무를 거쳐 서울로 올라와 배로스 휘하에서 조선경비대 집행국장(Executive Officer)이자 고문관으로 근무했다. 그 뒤 경비대 총사령관이었던 배로스 대령이 제주도지사로 발령이 나고, 송호성이 아직 임명되기 전이었을 때에는 하우스만이 사실상의 사령관 대행으로 있으면서 사실상의 총사령관 임무를 수행했다. 김 하우스만 정일화, 1995, 한국 대통령을 움직인 미군대위, 한국문원, 130쪽

하우스만은 김완룡, 이지형을 시켜 미군 조직법을 번역해 군대조직법을 만들게 하는 등 군사훈련법, 군통제법, 군형법 등의 작성 과정에 깊숙이 관여하기 시작했다. 하우스만의 지휘하에 경비대에서 사용할 군사용어도 영어와 일일이 대조해가며 새롭게 만들었다.

하우스만이 국군의 전신인 국방경비대에 배치 받아 처음 느낀 것은 군대와 경찰 간의 충돌이 매우 자주 일어난다는 점과 지방 좌익의 영향으로 중앙의 통제가 제대로 먹혀들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초기 국방경비대 창설과정에서 하우스만은 철저하게 실용적인 기준을 갖고 실전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우대했다. 당시에 군대에서 실전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일본 육사를 졸업했거나 만주군 출신으로 일본제국주의 군대를 위해 복무했던 사람들밖에 없었다. 이러한 기준이 적용되자 일본군 출신들은 영달을 꾀할 수 있는 두 번째 호기를 맞았다. 이들은 국방경비대의 엘리트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형근이 그랬고, 채병덕이 그랬고, 정일권이 그랬으며, 백선엽이 그랬고, 박정희가 그러했다.) 이승만대통령은 정일권, 백선엽, 이형근 세 사람을 ‘내 어금니’라 부르며 국방을 책임질 든든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이승만은 1954년에 정일권을 참모총장, 백선엽을 1군사령관에 임명하고는 이형근에게 줄 자리가 없자, 결국 합동참모본부를 만들어 그 자리에 이형근을 임명했다. 이 세 사람은 이승만대통령의 측근이었지만, 하우스만과 친한 사이이기도 했다.

하우스만의 친한 한국군 친구들은 모두 일본군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일본군 출신들을 좋아했던 이유는 그들이 더 강한 군사훈련을 받았다는데서 찾았다. 한편 하우스만은 광복군 출신들을 상당히 무시했다. 그는 광복군이 장개석 장군의 ‘부속기계 같은 존재’였으며, ‘저속한 말로 불평할게 많다’고 하였다. KBS의 하우스만 인터뷰, 10쪽

하우스만이 광복군을 싫어했던 중요한 이유는 광복군 출신들이 일본군 출신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공산주의자를 적대했다는 사실에 있었다. 하우스만은 그 예로 송호성은 공산주의에 대해 나쁘다는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John Toland interview, pp.10~11. 하우스만은 국방경비대원들은 송호성을 총참모장으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그를 공산주의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며, 문제를 일으킨 광복군에게 송호성은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여순사건 때 이승만 정부와 미군이 이 사건의 발발 요인을 극우와 극좌세력이 연합하여 일으킨 반란으로 보는 시각과도 맥을 같이 한다. 여순사건 발발 초기에 이범석국무총리는 이 사건이 김구와 군대내 반이승만 세력이라는 극우세력과 남로당 극좌세

력이 일으킨 반란으로 설명했고, 미군은 표면적으로는 이러한 입장을 공식화하지 않았지만 김구에게 끊임없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었다. 그리고 이승만을 위협하는 김구라는 존재에 대한 시각은 김구가 죽을 때까지 계속되었던 것이다. 김득중, 2000, [이승만 정부의 여순사건 왜곡과 국회논의의 한계], 역사학연구소, 역사 연구제7호 George E. Cilley, Kim Koo, Background Information Concerning Assassination, 1 July 1949. 최근 국사편찬위원회가 공개한 이 문서에는 광주 CIC가 1948년 11월 11일 보고한 문서가 첨부되어 있다. 여순사건 직후 작성된 이 보고서는 김구가 군부 내 우익과 연대하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적고 있다. 1948년에 작성된 보고서가 김구 암살 직후 다시 등장하여 사용되었다는 점은 미국측의 김구에 대한 의혹이 그가 죽을 때까지 계속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미군 병사가 언제쯤이나 본국으로 돌아갈까 골몰할 때, 하우스만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한국문화를 익혔고 한국말도 알아듣기 시작하는 충성스런 군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국방경비대가 만들어져가고 있던 시기에 전국을 순회하면서 군 내부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던 하우스만은 한국을 이해할 수 있는 미국 군인이 되어 어느새 누구나 조언을 구하는 ‘한국통’이 되어 갔던 것이다.

광복군보다 일군·만군 출신을 우대하는 것에서 나타나듯 하우스만의 철저한 반공주의는 인사정책을 통해 구현되었다. 하우스만이 한국 사정에 밝아지면서, 미국 장군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책과 조치가 적합한지 그리고 한국군과 정치인을 움직일 수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 하우스만을 필요로 했고, 하우스만을 통해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시켰다. 한국군 장교들에게 하우스만은 작전과 군대 운영을 ‘조언(실제로는 지휘)’하는 고문관이었을 뿐만 아니라 출세와 영달을 보장해 주는 직선 코스였다. 그의 마음에 들면 승진할 수 있었지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생명도 내놓아야 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한때 채병덕 총참모장이 이범석과 가까운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그를 해임하려 한 적이 있었다. 이범석은 초대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을 겸임하고 있었는데, 그는 민족청년단이라는 큰 조직을 이끌면서 위세를 과시하고 있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범석을 견제하기 위해 일단 정부 요직에 앉힌 다음, 수많은 청년단체를 모두 해체시켜 버리고 이를 대한청년단으로 통합했다. 이범석은 자신의 사지가 찢려 나가는 아픔을 겪었지만 내각의 일원으로서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범석과 채병덕은 친한 사이이기는 했지만, 이범석이 중국에서 무기를 들여와 팔고자 했을 때 하우스만의 조언으로 채병덕이 반대하면서 사이가 틀어져 있었다. 그것을 잘 알지 못했던 이승만은 채병덕 후임으로 김석원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김석원은 이승만의 열렬한 추종자인 임영신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 그런데 하우스만은 김석원을 군인으로는 보지 않고 있었다. 하우스만은 김석원에 대해 “폭

탄이 옆에 떨어 질까봐 얼마나 떨던지”라고 하면서 그를 깔보았다.

이승만이 채병덕을 교체하려 하자 하우스만은 “대통령 각하, 만약 채병덕을 총참모장에서 해임시키고 김석원을 임명한다면 미군사고문단을 철수시킬 것입니다.”라고 말해 버렸다.) KBS의 하우스만 인터뷰, 26쪽

한국전쟁 직후에 채병덕에서 정일권으로 바뀌는 과정에서도 하우스만이 있었다. 이승만은 군인들의 사기를 높인다는 명목으로 총참모장을 교체하려 하였는데, 채병덕 후임으로 누구를 추천하느냐고 하우스만에게 물었고, 하우스만은 정일권이라 답했다.) KBS의 하우스만 인터뷰, 39쪽

물론 정일권의 미군 군사고문으로 일하게 된 사람은 하우스만이었다. 이렇게 하우스만은 군 수뇌부의 인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이는 하우스만이라는 미군 고문관이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결정적으로 보여준다.

하우스만은 “그 때 모든 사령관의 파면, 임명이 내 손을 거쳐 갔으며 내가 사령관과 미 대통령 사이를 연결해주는 사람이었고, 나는 그 두 사람의 유일한 통로였다. 내가 어떤 사람도 거치지 않고 직접 대화 가능했으며, 내가 원한다면 국방부장관과도 바로 대화가 가능했다. 그래서 내가 모르면 그런 것이 없다.”고 말하였다.) KBS의 하우스만 인터뷰, 32쪽

하우스만은 지적 능력이 뛰어난 것도, 재치가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 하우스만의 역할을 대체할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하우스만은 한국군에 많은 인맥과 경험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한 미군사고문단이 정식으로 출범할 때, 한국 근무기간을 훨씬 넘긴 하우스만은 전근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승만은 “다른 고문관은 필요치 않아. 나는 하우스만을 필요로 해”라고 말했다. 결국 미고문단장은 하우스만이 계속한국에 남아 있기를 권했고, 이미 한국어도 상당히 알고 있었고, 한국 장교들의 면면을 줄줄이 꿰고 있던 하우스만은 그대로 남게 되었다.

드디어 전쟁 중이던 1951년 하우스만은 한국을 떠나 국방부 국방정보부(DIA)로 자리를 옮겨 한국을 담당하게 되는데, 하우스만이 일했던 참모총장 고문 후임에는 짐 하웨이가 임명

되었다. 그러자 이승만은 하우스만이 있으면 참모총장 고문자리가 있고, 하우스만이 가면 참모총장 고문자리도 간다라고 하면서 하웁을 연락장교로 배치하였다.) KBS의 하우스만 인터뷰, 98쪽

하우스만의 마음에 차고 안 차고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가 공산주의 이념을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 였다. 하우스만이 좋아하고 아꼈다고 해도, 그가 공산주의자로 밝혀지면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했다. 그것도 하우스만이 사형 장면을 찍는 필름을 돌리는 앞에서. 김종석의 운명이 그랬다. 김종석은 군사영어학교를 졸업한 수재였다. 하우스만은 김종석의 군사적 능력과 군인의 자질에 대해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었고 장차 한국군을 이끌어갈 대들보로 생각하였다. 하우스만은 그를 조선경비대 내의 작전교육과에서 초대 과장으로 일하게 하였다. 하지만 여순사건 뒤 숙군 바람이 몰아치면서, 김종석은 공산주의자로 분류되어 1949년 9월 서울 부근 수색에서 처형당했다. 이 때 하우스만은 이 처형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16밀리 무비 카메라에 담았다.)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 여순14연대반란]편에 이 필름이 방영되었다.

그리고 이 필름을 ‘한국 좌익 총살 시청각 교과서’로 활용했다.

1948년 정부가 수립된 뒤부터 하우스만은 이대통령, 국방장관, 육군참모총장, 로버츠 고문단장 등이 참여하는 군사안전위원회에 참가했다. 미군이 남한에서 철수하면서 임시군사고문단([PMAG], 나중에 군사고문단[KMAG]으로 변경)이 만들어지자, 하우스만은 군사고문단장과 국군 참모총장 사이의 연락 임무를 맡았고 이승만을 면담하는 일도 찾아졌다. 이승만은 수시로 하우스만을 경무대로 불러 군사관계를 묻곤 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군대에서 당신 명령을 수행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나에게 알려 달라, 그를 교체 하겠다”라고 하였다.) John Toland interview, p.24

대통령은 개별보고서를 요구하곤 했는데, 군대의 사기문제라든지 군 조직 개편 등에 관한 보고서도 요구했지만 어떤 특정 사건, 특정 인물에 관한 보고서도 요구하곤 했다.

하우스만이 총참모장의 고문으로 있으면서 한 일은 무엇이였을까? 그는 단지 참모총장의 고문일뿐 이었으나, ‘모든 작전에 책임을 졌다.’ 사령관을 임명하는 일, 부대를 배치하고 그것이 중대, 대대, 연대이건 그들에게 임무수행을 명령한 일, 그리고 그 사령관을 감독하

는 일들이 하우스만이 했던 일이었다. 사령관이 임무를 완수했는지, 그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를 감독했고 또 그 결과를 검토했다. 게릴라 토벌작전 때에는 빨치산들을 몇 명이나 체포했는지, 죽였는지, 부상자는 몇 명인지 등을 체크하는 일도 하우스만의 일이었다.) KBS의 하우스만 인터뷰, 97쪽

결국 하우스만은 고문이었지만, 미군이 국군을 지휘하는 상황에서는 하우스만 또한 자신이 조언하는 상관을 지휘할 수 있었다.

한번은 정일권과 고문관 하우스만이 토벌중인 백선엽 부대를 조사하러 나간 적이 있었다. 그런데 빨치산이 매복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도, 정일권은 체면 때문에 예정된 길을 가자고 주장했다. 이때 하우스만은 “정, 당신은 부참모총장이고 나는 참모총장의 고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에게 이 길로 가기를 명령한다”고 말하였다.) KBS의 하우스만 인터뷰, 97~98쪽

하우스만의 이런 권능은 하우스만이라는 한 개인의 능력은 아니었다. 이러한 에피소드는 미국군과 한국군의 당시 관계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고, 하우스만은 그 집약점에 위치하고 있었다.

IV. 여순사건 진압의 계획자 - 학살의 말뚝

1948년 10월 19일 저녁 여수 신월리에 주둔하고 있던 14연대는 제주도 진압명령을 거부하고 봉기하였다. 지창수 상사가 지도한 14연대는 이날 저녁 여수로 진입하여 경찰서와 철도경찰, 관공서를 순식간에 점령했고, 다음 날 아침에는 통근기차를 이용하여 순천으로 북향했다.

광주 5연대가 여수주둔14연대 반란 소식을 처음 알게 된 것은 다음날인 20일 오전 8시 20분이었고, 이 사실이 서울에 보고된 것은 9시였다.) G-3 Section, II IV Corps, History of the Rebellion of the 14th Regiment and the 6th Regiment of the Korean Constabulary, 10 November 1948, p.2·Incl #2.(여수지역사회연구소, 1999, 여순사건 자료집2에 수록)

그런데 하우스만은 보고서와는 달리 미군이 군 반란을 처음 보고받은 것은 10월 19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짐 하우스만 정일화 공저, 앞의 책, 171쪽

이날 아침 미군사고문단장 로버츠에게 반란 소식이 보고되었고, 로버츠 고문단장은 즉시 관계자로 구성된 회의를 주최했다. 이 회의에는 미군측에서 하우스만(미 군사고문단 G-3), 존 리드(미 군사고문단 G-2), 트레드웰대위(전 5여단 고문), 프라이 대위(현 5여단 고문)가 참석했고, 국군측에서는 채병덕 국방부 총참모장, 정일권 작전참모부장, 백선엽 국방경비대 G-2 책임자, 고정훈 국방경비대 정보장교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여수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광주에 기동작전군(Task Force)를 만들기로 결정하였다.) G-3 Section, IIIV Corps, 앞의 보고서, p.3. 그런데 하우스만은 이날 고문단장실 회의에는 이범석국방부장관, 송호성 경비대사령관, 하우스만과 몇몇 고문단 참모들이 모였다고 회고했다. 김 하우스만 정일화, 1995, 한국 대통령을 움직인 미군대위, 한국문원, 171~172쪽

이 회의를 주도한 것은 미군사고문단이었다. 참모총장과 국방경비대 총참모장도 고문단장의 호출에 불려 나왔다. 왜냐하면 비록 이승만 정부가 세워지고 대한민국 정부가 독립을 선언했다 하더라도 군대 지휘권은 1948년 8월 24일 이승만-하치간에 체결된 협정에 따라 여전히 미군의 수중에 있었기 때문이다.) R. K. Sawyer, 1962, Military Advisors in Korea: KMAC in Peace and War, Washington, D.C.,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Department of the Army, p.34 ; 김 하우스만 정일화, 앞의 책, 171쪽

미군은 진압작전에 군대를 보내면서 군사고문단 장교가 꼭 대동하도록 했다. 송호성 사령관도 미군이 ‘임명’하였다. 그리고 하우스만은 송호성의 명령에 반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자문관이었다.) KBS의 하우스만 인터뷰, 19~20쪽

이로써 하우스만은 리드(Reed)와 더불어 남한에서 직접 전투작전을 지휘하게 되었다. 이는 하우스만이 이전의 국방경비대에서 활동했던 시기의 활동과도 그 성격이 약간 다른 것이었다. 하우스만은 국방경비대를 확충하고 군대를 운영하는 일에는 관여했지만, 직접 적에 대한 작전을 책임지고 주도한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하우스만은 미 임시고문단을 대표하는 작전책임자로, 그리고 송호성 총사령관의 고문 자격으로 이 기동작전군 사령부에 배속됐다. 로버츠는 하우스만에게 공식 명령 네 가지를 주지시켰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군사령부가 사태진압에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면 즉각 작전통제권을 관장할 것.

둘째, 기동작전사령부를 구성하고 적절한 감독행위를 할 것.

셋째, 결과를 신속히 고문단 본부에 보고할 것.

넷째, 면밀한 작전계획을 세워 이를 성공적으로 이행할 것.) 짐 하우스만 정일화, 앞의 책, 172쪽.

이 명령의 내용을 보면 한국군사령부가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면 즉각 작전통제권을 미군이 장악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상 한국군은 미국의 손아귀에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는 문서에서나 사용될 상당히 완곡한 표현에 불과했다. 국군은 반란군 세력을 진압할만한 교통·통신장비나 작전 경험도 전혀 없었다. 실제로 미군사고문단은 반란이 터졌을 때 무기, 군수, 훈련이 부족한 한국군이 과연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에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 순천진압작전 때 백선엽이 공지간(空地間) 무전기도 없는 상태에서 백인엽 12연대장에게 ‘반란군은 동요하여 동순천으로 이동중이다. 신속히 순천에 돌입하여 지시하는 방향으로 추적하라. 정보국장 백중령’이라고 쓴 통신문을 전투복상의 주머니에 넣어 하늘에서 떨어트려 작전을 성공시켰다는 ‘형제의 일화’는 당시 군의 장비가 얼마나 허술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사사키 하루다카, 1977, 한국전 비사제1권, 병학사, 346~347쪽

따라서 미군의 역할은 단지 군 작전을 옆에서 지켜보고 조언해주는 이상이었다. 모든 면에서 미군의 지원은 절대적이었다. 하우스만은 그의 회고록에서 “내가 그 때 공식명령으로 휴대한 임무서에는 토벌사령부가 효율적인 작전을 수행하지 못하면 내가 직접 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과, 진압사령부의 조직 및 작전과정의 운용을 위한 지휘 및 감독을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돼 있다는 것만 밝힌다”고 말한 바 있다.) 짐 하우스만 정일화, 앞의 책, 30쪽

미 임시군사고문단은 일단 기동작전군을 구성한 다음에는 장비와 물자를 실어 날랐다. 하우스만이 광주에 파견되는 것과 동시에 화차 2량에는 무기 화약 식량 등이 실려 광주로 떠나갔다. 당시 국방경비대는 대부분 일본식 38식, 99식으로 무장하고 있었고 제주도 파병을 위해 14연대 정도에만 M-1이 지급된 형편이었는데, 미군은 사건진압에 파견된 부대원들에게 모두 미24군 탄약고로부터 지원된 M-1 소총으로 무장시켰다.) 이 밖에도 81mm박격포와 실탄, 60mm박격포와 실탄 LMG(경기관총) 등이 미 24군 탄약고로부터 지원되었다.

제대로 된 비행기 한 대 가지지 못한 국군은 미군에게 수송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미군의 C47 수송기는 하루 한 번씩 서울-광주간을 오갔다. 광주에서 서울로 올리는 1일 작전 보고와 서울에서 내려오는 1일 작전 명령이 이 비행기에 실려왔고, 탄약·무기·식량 등을 수없이 실어 날랐다. 어느 하루는 쌀 6톤, 육류 20박스를 싣기도 했다. 쌀은 한국산이었지만 육류는 미국에서 가져온 것이었다. 무초 주한 미대사는 국무장관에게 “지난 10월에는 여수, 순천지역에 대한민국 사람들, 탄약, 통신장비를 수송하느라 미국 수송기가 러시를 이루었다”는 전문을 타전했을 정도였다.)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주한 미대사가 국무장관에게 보내는 전문](1949. 5. 3.), pp.1005~1006

10대의 L4 경비행기도 지원되었다. 5대는 광주에 배치되었고, 5대는 전주에 두어 부대간의 연락용으로 쓰거나, 여수·순천을 공중정찰 하는데 사용되었다.) 미국의 G-2, G-3 보고서나 Chronological Journal of Events에는 여수·순천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 대한 공중 정찰 보고가 꽤 많이 나오는데, 이것들은 모두 미군의 비행기에 의한 것이었다.

통신은 광주에 주둔한 미20연대가 갖고 있는 장비를 지원했다. 최신 무전기 M208이 작전 하루 이틀 뒤에 보급되어 작전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가끔 반란군은 경찰 전화선 껍질을 벗기고 통화내용을 도청하곤 했는데, 최신 무전기는 안전한 작전 수행을 가능하게 해주었던 것이다.

이러한 물자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수와 순천은 즉시 진압되지 않은 채, 초기에는 진압군이 반란군에 협조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사태가 위급해지자 이승만 대통령과 로버츠 군사고문단장은 반란의 진원지인 여수와 순천을 빨리 탈환하고자 시도했다. 미군 수뇌부는 “이승만 정부가 곧 전복 당할 처지에 있다. 여수는 어떤 값을 치루더라도 진압해야 한다”고 진압군을 재촉했다.) KBS의 하우스만 인터뷰, 20쪽

하지만 하우스만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하우스만은 진압작전은 순천에서 부대를 멈추고 전선을 구축하여 바다까지 밀고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 전선에는 될 수 있으면 소규모 부대만을 남겨 놓고 대부분의 부대는 북쪽으로 행진시켜 지리산을 치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했다.

하우스만이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된 것은 여순사건에 대한 그의 판단 때문이었다. 그는 이 사건이 군인과 지방좌익세력의 합세로 인해 여수에서 다른 지역으로 파급되었다는 사실을 외면했다. 그는 여수 14연대의 최초 봉기 때 골수 추종자는 불과 40명에 불과하며, 전투

에서는 첫 조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일차공격을 가해 반란군의 자만심을 꺾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반란을 일으킨 지창수를 비롯한 공산주의자들의 목적은 북한과 호응하여 남한에 항상적인 소요를 일으킬 빨치산 유격투쟁을 조직적으로 준비하는 것이라고 그는 파악했다. 하지만 여순사건의 발발은 조직적이거나 계획적인 것은 아니었다. 14연대 반란은 공산당 조직이 사전에 관련되어 있지 않았고, 여수의 공산주의자들조차 모르고 있던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순봉기는 한국전쟁 전 남한에서 일어난 최후의 대중적 봉기였다는 점에 그 중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하우스만은 여순사건을 북한과 연관 지어 사고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리산 입산을 극구 저지하려 했던 것이다.) 김 하우스만 정일화, 앞의 책, 185쪽

하우스만에게 주요한 것은 여수·순천의 신속한 탈환만이 아니라 반란군이 산 게릴라로 침투할 것이 확실해 보이는 백운산, 지리산 등의 퇴로를 우회적으로 차단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남한 정부와 무초대사, 로버츠 단장 등은 여수·순천을 탈환하는 것에 변함없는 우선 순위를 두고 하우스만의 건의를 채택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보면 하우스만의 판단이 옳았다. 14연대 반란군들은 지리산 등에 입산했고 장기 게릴라 투쟁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우스만이 판단을 내리게 된 근거는 그릇된 것이었다. 여순사건 이후에 본격화되는 게릴라투쟁은 사전에 계획된 것이라기보다는 상황에 이끌려 벌어진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여수 진압작전에는 38선 경비임무를 맡은 부대를 제외한 남한의 거의 모든 대부대가 참가함으로써, 한국군은 처음으로 연합작전 경험을 얻게 되었다. 이전에 있었던 군대와 경찰 간의 마찰은 이제 군의 압도적 우위로 결판났다. 사건이 발발한 요인에는 친일 경찰에 대한 경비대의 반감이 작용했기도 했거니와, 진압작전 과정 자체를 군대가 완전히 주도했기 때문이었다. 분규를 진압하는데는 소규모 화력이 아니라 정규군의 압도적화력이 역시 중요했다. 미국이 제공한 화력 덕분에 진압군은 순천을 24일, 여수를 27일 완전히 제압했다.

그러나 여순사건 진압은 14연대 반란군과 진압군만에 한정된 전투는 아니었다. 진압군 작전은 정규 14연대 반란 군인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시민을 반란군으로 간주하고 이들을모두 적으로 삼는 무차별적인공격이었다. 그 결과 여순진압작전은 무수히 많은 민간인 희생을 불러왔다.) 김득중, 2000, [여순사건 당시의 민간인 학살], 성대경 엮음, 한국현대사와 사회주의, 역사비평사

10월 27일 여수 전 시내를 포위하면서 작전을 시작한 진압군은 기관총을 난사하며 잔여 세력의 저항을 제압하는 동시에 시민을 집밖으로 몰아내고 민가를 살살이 수색했다. 반란군으로 의심되는 조금의 저항이라도 보이면 기관총을 쏘아댔고, 조금이라도 의심나면 사살되었다.

순천과 여수를 점령한 진압군은 제일 먼저 전 시민을 국민학교 같은 공공장소에 모이도록 명령했다. 나오지 않으면 반란군으로 간주된다는 말을 듣고는 만일 진압군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감에서 모두 모이라는 장소에 나왔다.) 전남일보 광주전남현대사 기획위원회, 1991, 광주전남현대사2, 실천문화사, 154쪽.

당시 심사의 기준이 된 것은 교전중인 자, 총을 가지고 있는 자, 손바닥에 총을 쥔 흔적이 있는 자, 흰색 지까다비(地下足袋, 일할 때 신는 일본식 운동화)를 신은 자, 미군용 군용팬티를 입은 자, 머리를 짧게 깎은 자였다. 주민들 가운데 흰 고무신을 신고 있는 사람도 반란군으로 간주되어 끌려 나왔다. 의심되는 사람의 변호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진압군의 협력자 색출과정은 12월 중순까지 약 한 달 반 동안이나 계속 되었고, 이 때문에 시내는 공포분위기로 완전히 뒤덮였다. 위헌적인 계엄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협력자 색출과정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나 방법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진행되었고,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인간의 기본권리조차 무시되었다.

이 과정에서 혐의 사실을 증명하는 주위 정황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이나 기준은 찾아볼 수 없다. 협력자 색출은 단지 믿음직하지 못한 혐의만으로도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여순사건 당시 진압군에 의해 희생된 인명의 숫자조차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

이러한 유혈 과정 속에서 이승만 정권은 소장파 국회의원들의 반발을 무시하고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다. 반공체제 확립의 법적 지주를 마련한 셈이었다. 학교에서는 학도호국단이 만들어졌고, 좌익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보도연맹(保導聯盟)에 가입해야만 했다. 보도연맹 가입자들은 한국전쟁 직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좌익수들과 함께 제1차적인 학살 대상이 되었다.

여순사건이 종결된 뒤 미 국방부는 ‘효율적이고 신속한 진압작전의 공로’를 인정해 1949년 1월 10일 하우스먼에게 미 공훈장을 주었다. 이 훈장은 은성무공훈장 다음가는 4번째 서열쯤의 훈장이었고, 전시가 아닌 평상시에 이런 훈장은 드문 일이었다. 아니, 미군은

당시 남한 상황을 전시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우스만의 훈장에는 학살의 공도 포함되어 있을까?) 육사 7기 특별반에서 훈련을 받다가 기동작전군에 포함되어 미군과 한국군의 통역을 담당했던 고정훈도 여순사건 뒤에 공을 인정받아 대위로 특진했다.

하우스만이 국방경비대와 국군에서 활동하던 시기는 남한에 반공국가가 세워지는 때였다. 이승만 정권은 미국의 경제적·군사적 도움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했다. 1949~50년 사이에 미국무성과 주한미대사관을 오고간 문서의 대부분은 인플레이션 억제와 이승만이 병력 과잉임없는 물자 지원요구로 채워져 있다.

한국전쟁 때 패주하던 이승만과 채병덕 총참모장이 미국 개입 소식을 듣고 감격스러워했고 그래서 군 작전권을 대전에서 종이쪽지 하나로 맥아더에게 헌납한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결과였을지 모른다.

미국의 정치적·군사적 지원으로 남한은 반공국가의 모양을 점점 갖추어 갔지만 제주도 와 여수에서는 이승만의 남한단독정부수립에 반대하는 봉기가 일어났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인명이 죽었다. 얼핏 국군·경찰·청년단에 의해 자행된 것으로 보이는 이러한 학살의 배후에는 이 사실을 묵인한 미국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남한에서 가장 강력한 반공조직체이자 반공이데올로기의 보루로서의 대한민국 군대가 만들어진 것은 여순사건 뒤 대대적으로 실시된 숙군 때부터였다. 숙군과정을 주도한 김창룡은 만주에서 헌병으로 근무하면서 수많은 독립운동가와 공산주의자들을 검거한 경력이 있었고, 북한에서 소련군을 피해 구사일생으로 남하했다고 주장한 사람이다.

김창룡이 주도한 숙군 과정은 빨갱이 사냥 이상의 것이었다. 김창룡은 이승만 대통령을 직접 면담하고 그의 두터운 신임을 얻으면서 군대 내부에 침투한 빨갱이에 대한 사냥을 마음 놓고 자행했다. 단지 반공이라는 이유만 있는 것은 아니어서, 사적인 원한이 있는 사람, 자기에게 마음 들지 않는 인간을 가차 없이 숙청했고 이를 통해 자신의 권력을 움켜쥘 수 있었다.

김창룡의 뒤에는 이승만이 있었지만, 김창룡은 하우스만에게도 직접 보고하고 있었다. 그리고 하우스만은 숙군 상황을 매일 매일의 일일보고를 통해 이승만에게 보고하였다.) 짐 하우스만 정일화, 앞의 책, 34쪽

김창룡과 하우스만은 반미·반일 성향을 가진 공산주의 박멸에 뜻을 같이하고 있었고, 열성적이었다. 김창룡은 군내부의 숙청뿐만 아니라 보도연맹원 학살 등 한국전쟁을 전후한

민간인학살을 직접 주도하고 시행한 인물로서 ‘스네이크 김’으로 악명을 떨친 인간이다. 하지만 이런 악명은 하우스만에게도 해당되어야 할 것 같다. 한번은 무쵸 주한 미대사가 재판도 없이 제주도에서 민간인 20명을 총살한 사실을 보고 받고 놀란 적이 있었다. 그 때 하우스만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다. “이것은 좋은 신호이다. 과거에는 이같은 민간인 200명 또는 더 이상이 집단으로 처형되었는데, 이제 숫자가 20명으로 줄었다. 이것은 진보이다.” 라고. 무쵸조차 더 이상 할 말을 잃었던 이 의연한 대답은 그의 황폐한 정신 상태를 가늠할 수 있게 해준다. 무쵸 대사는 이 말을 잊을 수가 없었고, 나중에 워싱턴에서 하우스만을 다시 만났을 때, “자네가 당시 그렇게 말했다네”라고 상기시켜 줄 정도였다.) KBS의 하우스만 인터뷰, 23~24쪽

이런 그의 심성 때문에 그는 미군들 사이에서조차 ‘무서운 사람’으로 꼽혔다. 김창룡이 ‘스네이크’였다면, 하우스만은 이 뱀이 활개치고 놀 수 있는 공간과 담력을 키워준 ‘대사형(大蛇兄)’이었다.

하지만 하우스만은 자신의 손에 붉은 피를 묻히려고 하지는 않았다. 민간인학살을 지켜보고 옆에서 이 과정을 점검하던 다른 미군 장교들과 같이, 하우스만 또한 학살현장을 목격했지만 스스로가 학살에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군인들이 민간인을 학살하는 장면에 대한 언급도 그러하다.

경비대 군인들이 마을 주민을 데리고 가서 나무 막대기에 묶어 놓고 끝이 뾰족한 대나무 막대기로 어떻게 사람을 죽이냐를 보여주면서 주민을 처형했다. 또 주민들에게 구덩이를 파게 한 뒤 구덩이 가에 서게 하여 다른 주민들이 대나무 막대기로 그 사람을 찔러 구덩이에 빠뜨린다. 그러나 대나무는 상처만 내지 실제로 죽이지는 못하므로 경비대 군인들이 구덩이에 넘어진 주민들 위에 석유를 부어 산채로 태워 죽이곤 했다. 제주도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자행되었다.) KBS의 하우스만 인터뷰, 24쪽

하우스만은 경비대 군인들이 자행한 학살을 단지 ‘목격’만 하고 자신의 손은 하얗게 남겨두었을까?

물론 하우스만은 학살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우스만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 수천명의 공산당을 처형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어보았을 때, 이는 “모르는 일”이라며 잡아떼었다. 다시 질문이 이어졌지만 하우스만의 대답은 “잔학 행위는 없었다” 였다. KBS의 하우스

만 인터뷰, 41~42쪽

하지만 공산주의자는 죽여도 좋다 라는 하우스만의 반공주의는 끈질긴 것이었다. 1948년 6월, 제주도 9연대에서는 문상길 중위가 그의 부하와 함께 박진경 연대장을 사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다음 달 박진경 대령 암살범인 문상길 중위와 그의 부하들은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언도 받았다. 문상길은 "부하들이 암살했다... (하지만) 내가 주모자가 됐다. 어쨌든 박대령의 죽음은 당연하다"고 감옥에서 말했다고 한다.

박진경은 일본 외국어학교 출신으로서 영어를 잘 해 미군으로부터 신임을 받았다고 한다. 군정장관 딘은 그를 총애하여 직접 진급 계급장을 달아주려 제주도로 내려올 정도였다. 박진경은 이에 부응하여 15세 아이를 사살하는 등의 무차별 체포 작전을 폈고, 이는 도민의 반감을 불러 일으켰다. 박진경을 쏜 군인은 "박대령의 30만 도민에 대한 무자비한 작전 공격에 대해 불만을 갖지 않을 수 없다"라고 재판정에서 말하였다. 사정이 이러했기 때문에 인권옹호연맹이나 법학가동맹은 국가와 민족을 해치는 민족반역자를 총살한 동기를 참작하여 감형하라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상길은 몇 달 뒤 사형되었다.

전임 9연대장이었던 김익렬은 처형 광경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총살형은 수주일 후에 수색에서 집행되었다. 3인은 총살장에서도 평소와 별다른 점이 없이 하나님께 "우리들의 영혼을 받아들이시고 우리들이 뿌리는 피와 정신이 조국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하여 밑거름이 되게 하소서" 하고 기도 드렸다고 한다. 그리고 최후에는 대한민국 만세 삼창을 한 후 '양양한 앞길'하는 군가를 부르면서 형을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또 해괴한 것은 참관한 하우스만 대위가 다가가 넘어진 시체에다 자기 피스톨을 꺼내 난사했다는 것이다. 하우스만 대위는 경비대 정보책임자로 박진경 대령과 절친한 친구였으며 미군정장관 딘 장군에게 박대령을 추천한 장본인이었다. 총살 현장의 광경은 참관자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제민일보 4.3취재반, 1994, 4.3은 말한다2, 전예원, 351~353쪽

문상길의 처형은 군 내부 좌익세력 척결의 신호탄이었다. 하우스만이 한 짓이 여기에 그친다면 그래도 다행이겠지만, 이후의 역사는 그렇지 않았다.

한국전쟁 때 남하하기 시작한 인민군이 파죽지세로 서울을 압박했을 때였다. 대통령은 라디오로 서울을 지킨다는 허위방송을 전국민에게 떠든 채 몰래 달아나 버리고, 채병덕은 사무실에서 위스키를 비워가며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인 6월 28일 새벽 2시 30분 경 한강인

도교가 폭파되었다. 미8군에 의하면 국군 9만 8천 명 가운데 한강을 건너온 군인은 불과 2만 4천 명 뿐이었고, 경찰 병력 중 피난 간 사람은 4,500명에 불과했다. 다리 위에서는 피난 가려는 시민의 행렬이 끝도 없이 이어져 있었고 인민군을 피해 피난 가던 국민들은 모두 수장되었다. 어떤 미군 장교는 이 폭파로 인해 5~800여 명이 죽었을 것이라 추정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초대 육사교장이었던 이형근은 현장을 목격한 뒤, 유엔군의 도강을 막기 위해 인민군이 선수를 친 것으로 생각했을 정도였다.

누가 한강교 폭파의 명령을 내렸는가? 이승만 정권은 전쟁 중이던 1950년 9월, 폭파 책임을 물어 최창식 공병감을 적전비행죄(敵前非行罪)로 몰아 사형까지 시켰지만, 최창식 부인 옥정애의 재심청구 요청으로 1964년 10월 결심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한강교 폭파의 책임은 채병덕 총참모장에게 그 죄가 돌아갔다.)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68, [한강교의 조기 폭파], 한국전쟁사2, 244~252쪽

최창식에서 채병덕으로 죄인이 바뀌었지만, 두 경우 모두 정치적 희생양에 불과했다는 점은 공통된다.

그럼 진짜 명령자는 누구인가? 당시 미군사고문단장 로버츠는 퇴역을 맞아 한국을 떠나 있었고, 라이트(Wright)부단장은 일본에 있었다. 또한 책임을 맡아야 할 선임 통신장교인 찰스 스튜리스는 자신은 한국에 관해 아는 것이 없다며 하우스만에게 전권을 위임한 상태였다. 사실상 하우스만이 최고 책임자였던 것이다.) 하우스만은 자신이 사령관 대행을 맡았던 두 가지 경우를 기억했는데, 한 번은 배로스가 제주도지사가 되어 경비대사령부를 자신이 책임져야 했을 때와, 한국전쟁 직전 로버츠단장이 떠나 버린 후 고문단장 대행이 되었던 경우이다. 짐 하우스만 정일화, 앞의 책, 130쪽

5·16 후재심판결에서는 채병덕을 한강교 폭파의 명령권자로 밝혔는데, 채병덕의 고문관은 하우스만이였다. 또한 하우스만은 자신은 한강교 폭파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하였다.) 짐 하우스만 정일화, 앞의 책, 204쪽

그는 김백일이 폭파명령을 내렸다고 증언했지만, 김백일은 하우스만의 지휘를 받는 입장이었다.) 한강교 폭파에 대한 하우스만의 증언은 John Toland interview, pp.32~35; KBS의 하우스만 인터뷰, 37~38쪽을 참조. 여기에는 짐 하우스만 정일화, 1995, 한국 대통령을

움직인 미군대위, 한국문원에서는 언급하지 않은 한강교 폭파의 책임자를 김백일로 지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증언은 김백일이 다리 폭발을 중지시키려고 장창국과 정래혁을 급히 현장으로 보냈다는 말을 뒤에 듣고 한 증언이라 생각된다.

한강교는 하우스만이 다리를 건너자마자 폭파되었는데, 하우스만이 단지 행운아이었기 때문일까?

당시 최창식 공병감의 미군측 고문이었고 나중에 충무무공훈장까지 받았던 크로포드(Richard I. Crawford) 육군소령은 폭파 당시 최창식은 자신과 같이 썰차를 타고 다리를 건너기 직전이었으며, 나중에 최창식의 누명을 벗겨주려 했으나 하우스만이 입 다물고 있다고 말했다고 증언하였다. 크로포드는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최병덕에게 폭파 지시를 내린 것은 ‘미군 장교’였고, 그는 국군 참모총장의 고문이었다고 증언했다.

크로포드소령의 증언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Maj. Crawford tried to clear poor Col. Choe, but his superior told him to keep his mouth shut and not to meddle in Korean affairs. His superior was none other than Captain James Hausman, an officer junior in rank but with connections with the right people. Maj. Crawford stated that it was "an American officer" who told the ROKA chief of staff, Gen. Chae Byong Duk to blow up the bridge. Maj. Crawford never mentioned the officer by name but he said that it was a captain who was advisor to the ROK Army Chief of Staff - i.e., Captain James Hausman - the Father of the South Korean army." <http://www.kimsoft.com/2000/han-craw.htm> 이외에도 <http://www.kimsoft.com/1997/hangang.htm> ; <http://www.kimsoft.com/1997/hausman.htm> 을 참조.

만약 한강교 폭발로 서울시민 몇 백 명의 생명을 일시에 빼앗은 사람이 채병덕이라면, 그 사람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었던 사람은 바로 하우스만이었던 것이다.

V. 한국정치사와 하우스만의 개입

하우스만은 이승만 정권시기에 한 사람의 미군 대위에 불과했지만 그의 영향력은 실로 막대한 것이었다. 이승만 정권 초기에 하우스만은 장관들만이 참석하는 국무회의에 미국인의 신분으로 참석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KBS의 하우스만 인터뷰, 85쪽

그는 한때 경무대에 들어앉아 살기도 했는데, 그것은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대통령이

부르면 언제나 응하기 위해서였다.

하우스만은 10여 년이 넘게 이승만 대통령을 도와주기도 했지만, 그를 권좌에서 끌어 내는 최후 통첩을 한 것도 하우스만이였다. 3·15부정선거에 항의하는 데모가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에서 불붙자 미국 정부는 이승만을 더 이상 남한의 통치자로 머물러 있게 하지 않았다. 이에 하우스만은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송요찬을 통해 미국의 지지 철회를 통고하였다. 하우스만은 송요찬에게 “당신이 가서 미국 정부는 경무대의 탱크를 철수시키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알려라”라고 말했다. 이것은 이승만 정권의 종말을 알리는 발언이었다. 당시 하우스만은 송요찬의 고문이었다.) KBS의 하우스만 인터뷰, 47쪽

이승만 정권 몰락 후 1960년 7·27선거를 통해 들어선 장면을 하우스만이 지원하지 못했던 것은 이후 군부정권의 등장과 관련하여 미국의 대한정책에 대한 미묘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정권을 획득한 민주당 신과의 수장이었던 장면총리는 이전정권이 그랬던 것처럼 하우스만에게 군사자문 역할을 부탁하였다. 하지만 미 대사관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장면은 “일등병으로부터 장군에 이르기까지 한국군을 돕기를 꺼리지 않았던 하우스만이 총리인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은 대단히 섭섭한 일이다”라고 토로했다고 한다.) 짐 하우스만 정일화, 앞의 책, 43~44쪽

이제까지 이승만을 도왔던 하우스만이 장면 정권을 도우면 안 된다는 미국의 결정은 장면 정권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5·16쿠데타 당시 미국이 장면총리의 도피사실을 알고있으면서도 이를 은폐함으로써, 쿠데타를 성공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박태균, 2001, [5·16쿠데타와 미국 - 비밀해제된 미국 문서를 중심으로], 역사비평 여름호 참조.

장면 정권은 4월혁명에서 제기된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요구를 수용할 것인가, 아니면 이를 물리치고 확고한 지배력을 다시 회복할 것인가 의기로에 처해 있었다. 장면 정권시기의 정책들-한미경제협정과 데모규제법·반공법의 2대 악법-은 기본적으로 4월혁명을 거스르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학생과 혁신세력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무능력 또한 갖고 있었다. 이 때 등장한 박정희와 육사 8기생을 중심으로 하는 군부는 미국에게 확실히 새로운 카드가 될 수 있었다. 그리고 미국은 여러 경로를 통해 이미 쿠데타 음모를 감지하고 있었다.

미국대사 특별보좌관이라는 공식 직함을 가지고 있던 주한 CIA 지부장 피어드 실버는 장도영을 만나 쿠데타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타진한 적이 있는데, 이는 하우스만이 건네준 정보였다.) 쿠데타 직후 미국 CIA활동에 대해서는 피어드 실버, 1983, 서브 로자-미국 CIA비밀공작부, 인문당, 205~221쪽을 참고.

군대 내부 사정에 정통했던 하우스만이 군부의 쿠데타 음모를 누구보다 더 잘 수집할 수 있었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하우스만은 1960년 3월 1일, 한국 군부 내의 쿠데타 기도를 상부에 보고했으며, 이런 정보는 “나 이외에 누구도 그런 정보를 입수할 수가 없다”라고 증언했다.) KBS의 하우스만 인터뷰, 62쪽

군부 쿠데타 주모자인 박정희는 여순사건 때 광주에 내려와 작전참모로 일한 적이 있었다. 그는 여순사건이 진압된 뒤에 군부 내 남로당 프락치 혐의로 11월에 체포되어 사형에 처해질 운명이었는데, 자신이 알고 있던 남로당 조직체계를 밀고하고 하우스만과 김창룡·원용덕·백선엽 등의 만주군관학교 출신들이 구명운동을 벌임으로써 생명을 건졌다.) 김점곤은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박정희가 군부 내의 남로당 총책이었다고 증언했다. 김점곤은 박정희가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고, 얘기하지 못했던 군부 내 남로당 조직체계를 박정희가 알려주었기 때문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어떻게 박정희가 군부 내 ‘총책’이 되었는지, 산하 조직 없는 총책이 있을 수 있는지, 왜 총책의 지위를 가진 자를 살려야 했는지는 아직도 의문으로 남아 있다.

쿠데타가 일어난 직후인 5월 18일 박정희는 미8군에 있는 하우스만의 집을 찾아왔다. 박정희는 자신의 공산주의 경력을 해명하려 했으나, 하우스만은 이미 알고 있는 얘기였기 때문에 더 이상 그의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었다. 하우스만은 박정희와 만난 뒤 바로 자진해서 미국으로 날아가, 미 육군 참모총장, 합참의장, 국무성, CIA에 박정희와 한국 상황에 대해 브리핑했다.

하우스만은 “그 당시 나는 한국전문가였고, 하우스만이 그렇게 말했다면 그렇다고 나를 믿고 신뢰”했었기 때문에 미국 정·관계에 박정희를 신임하도록 얘기할 수 있었다.) KBS의 하우스만 인터뷰, 51~52쪽

하우스만은 한국 상황과 박정희에 대한 훌륭한 정보를 제공한 보답으로 미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공로표창을 수여받았다.

VI. 맺음말

하우스만은 커밍스가 얘기하는 ‘한국군의 아버지’로서 뿐만 아니라 ‘학살의 방조자이자 수행자’로 역사에 기억되어야만 할 것이다. 한 쪽이 비교적 공식적인 역사였다면, 하우스만이 관여한 학살의 역사는 지금까지 은폐된 어둠의 역사였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군의 형성은 반공체제의 형성과정이었고 이는 또한 국민에 대한 폭력적 편가르기이자 학살을 의미했다. 이승만 정권은 반공체제를 굳건히 하는 과정에서 군에 대한 숙군을 실시했고, 그 결과 군대를 가장 강력한 물리적 기구로서 이용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한국군의 형성과정은 반공주의를 그 중심적 이데올로기로 하고 있었다. 반공체제 구축과정은 평화롭고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국가폭력기구를 전면에서 사용하면서 국민과 비국민을 구별했고,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학살은 반공체제 구축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반공체제 형성의 굳건한 지원자이었던 하우스만은 1981년 한국 땅을 떠났다. 1946년에 한국에 왔으니 참으로 긴 세월이었다. 하지만 전두환, 노태우라는 2세대 군부인맥은 그 후에도 10년이 넘게 남한을 통치했다.

하우스만이 한국 땅을 떠날 때, 수도방위사령부 시절부터 아주 친하게 지내던 보안사령관 노태우 육군중장은 1981년 6월 24일, 하우스만을 불러 두 명이 같이 찍은 사진이 들어 있는 기념패를 하우스만에게 주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제임스 H. 하우스만, 유엔군 사령관 특별고문 - 신생국가에서 오늘날 대한민국까지의 부침 동안 옆에서 큰 도움을 준 영원한 친구에게. 1981년 7월 1일”

한국군 창설과정 때부터 군에 관여한 하우스만이 보면 전두환·노태우 같은 군인은 꼬맹이 같은 인간이었을지도 모른다. 군사정권이 수십 년을 지배했던 한국에서 그는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배후 실력자’로서 활동했고, 미국과 한국에서 수많은 훈장을 수여 받았다. 그 훈장들은 그가 흘린 땀에 대한 보답이었을까, 아니면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의 피의 대가였을까? 이승만의 반공극우체제는 물론이거니와 박정희-전두환-노태우로 이어지는 군부독재와 50년간 이루어졌던 민간인학살의 핏방울이 그가 뿌려 놓은 유산이었다고 말한다면 지나친 얘기일까?

1981년 7월 1일 군사고문직을 떠나면서, 하우스만은 한편으론 “궁지를 느꼈지만, 사랑을 키워온 한국과 친구들을 떠나면서 매우 큰 슬픔을” 느꼈다고 한다. 그가 느낀 궁지는 무엇이고, 그에게 한국은 무엇이며 그의 한국인 친구들은 누구였을까?

하우스만은 1987년 영국 테임즈 텔레비전과의 인터뷰에서 카메라가 꺼지자 한국인을

가리켜 ‘일본인보다 더 나쁜’, ‘야비한 놈(brutal bastard)’이라고 하였다.) Bruce Cumings, 1990,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 2, Princeton Univ. Press, p.285

그가 몇십년 동안의 한국생활에서 드러내지 않았던 인종주의적 편견이 백인의 카메라 앞에서 솔직하게 발설되었던 것이다. 한편 그는 이런 야비한 한국인에게 “처형된 시체에 가솔린을 뿌리는 방법과 그렇게 하여 공산주의자 처형방법과 비난을 은폐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에 대해서는 긍지를 느꼈다. 백색 미국인으로 야비한 황인종의 나라 한국에 와 적색 공산주의자의 씨를 말리는 법을 가르쳐 준 하우스만, 그는 부시가 태어나고 주지사를 지냈던 남성의 고향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1996년 10월에 죽었다.

여순사건 왜곡보도의 과거와 현재

정 지 환(월간 '말'지 전문기자 겸 기획위원)

I. 프롤로그 : 칼-마이던스 기자의 5가지 시각

1948년 12월 6일자 <라이프>지에는 「한국에서의 반란」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그해 10월 19일 밤 한반도 남단에서 발생해 일주일 동안 지속된 ‘비극적 사건’에 대한 한 외신기자의 현지 보도였다. 필자는 기사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눈 뒤 번호를 붙여 보았다.

- (1) 아직 미군복 차림이던 반군들과 그 추종자들은 ‘북조선인민공화국’의 깃발을 올렸고, 피로 물들었던 수 일 동안 이승만 정부의 남한 일부 지역을 통치했다. 반군들이 산야로 잠입하기 전, 적어도 일시적으로 정부군에 퇴각하기 전까지, 라이프지의 칼-마이던스 기자는 이 야만적인 결과를 기록하기 위해, 카메라를 들고 현장에 있었다. ‘평화스런 천국’(peaceful heaven)을 의미하는 순천(順天)에서, 반군 지도자들은 시 교도소 문을 열고 정치범들로 하여금 보복 상대를 색출하도록 하기 위해, 시 전역에 걸쳐 집집마다 자신들을 안내하도록 했다. 이 같은 도움으로, 반군들은 정부군이 10월 23일 순천을 탈환할 때까지 500명의 시민과 100명의 경찰들을 살육했다.
- (2) 그런데 이번에는 정부군의 차례였다. 라이프지의 칼-마이던스는 (정부군의) 보복이 시작됐을 때, 공포 속에서 이를 지켜봤다. 그는 타전(打電)했다. “이제 정부군은, 산야로 도망갔다 돌아온 몇몇 경찰의 도움을 받아, (반군의) 잔혹성을 다시 잔혹하게 보복하고 있다. 우리가 순천에서 아녀자들과 함께 큰 운동장의 측선(側線)에서 지켜보는 동안, 그들의 남편과 아들들은 (정부에 대한) 충성도를 검열 받고 있었다. 셔츠가 벗겨진 4명의 젊은이는 무릎을 꿇은 채 애원하고 있었다. 한 사람은 기도하는 형상으로 자신의 두 손을 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애원하던 그 두 손이 그의 입과 코로 들어간 것은 (정부군의) 권총 손잡이가 그의 이빨들을 후려쳤을 때였다.”
- (3) 순천이 피로 물든 처음 며칠의 공포 시기엔, 그 어떠한 관계자들도 감히 관련 사체를 요구할 수 없었는데, 이는 그렇게 하는 것이 생존자와 죽은 자 간의 신원확인을 통해, 공산주의자나 정부 그 어느 쪽으로부터도 즉각적인 보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나중에 안전하게 되었을 때, 여자들은 (통통) 부어 오른 시체더미에서 관련 사체를 찾기 위해 눈물을 흘리며 큰 운동장을 돌아다녔는데, 이는 보기 쉽지 않은 장면이었다. 그들이 자신의 관련 사체를 찾았을 때, 처음에는 망연자실했다가 나중에는 통곡 속에 광란했다.

우리는 이 세 부분의 글에 각각 (1) 반란군의 봉기와 살육 (2) 정부군의 잔혹한 보복

(3) 민중의 눈물과 통곡이라는 제목을 붙여볼 수 있거니와, 그것은 1907년 보스턴에서 태어난 이 미국인 종군기자 칼-마이던스라는 제3자의 눈에 비쳐진 여순사건의 ‘객관적 인상’이기도 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칼-마이던스가 나중에 고국으로 돌아간 뒤 <눈에 비치는 그 이상의 것(More than meets the eye)>이라는 제목의 단행본을 쓰면서 여순사건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는 점이다.

(4) 이 반란은 반도의 최남단에 주둔하고 있던 남조선군 연대안의 소수 공산당 세포가 야음을 틈타 그들의 장교를 살해하고 장기간에 걸쳐 인민을 계속 학대해 온 정치가와 경찰에 대한 불만을 터트리자 시민이 폭동에 가담하게 된 것이 원인이었다.

한편 칼-마이던스는 이 책을 통해 여순사건의 악몽을 회고하면서 다음과 같은 대목을 ‘가장 무섭고 두려운 장면’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5) 그리고 나서 4일 후 3명의 기자와 함께 내가 시내에 들어갔을 때 전 시민이 학교 운동장에 모아져 앉혀져 있었다. 이곳에서 폭동을 진압했던 정부의 군대가 반란자들의 잔학행위와 같은 짓의 야수성과 정의를 무시한 태도로 오히려 그들보다 더한 보복행위를 자행하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그 광경을 여자와 아이들이 가만히 보고 있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내가 가장 무섭고 두려운 징벌의 장면을 말하라고 한다면, 보고 있는 아녀자들의 숨막힐 것 같은 침묵과 자신들을 잡아온 사람들 앞에 너무나도 조신하게 엎드려 있는 모습과 그들의 얼굴 피부가 옥죄어 비틀어진 것 같은 그 표정-그리고 총살되기 위해 끌려가면서도 그들은 한마디 항변도 없이 침묵으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한 마디의 항변도 없었다. 살려 달라는 울부짖음도 없고 슬프고 애처로운 애원의 소리도 없었다. 신의 구원을 비는 어떤 중얼거림도 다음 생을 바라는 한마디의 호소조차 없었다. 수세기가 그들에게 주어진다 해도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어떻게 울 수조차 있었겠는가.

다소 긴 이 인용문의 마지막 문장에서, 우리는 칼-마이던스가 말하고자 했던 ‘눈에 비치는 그 이상의 것’이 결국 ‘폭력에 의한 인간성 파괴에 대한 환기와 경고’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는 물론이고 지금까지도 한국 언론에선 여순사건에 대한 이런 ‘다양한 시각’과 ‘본질적 통찰’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칼-마이던스의 시각을 기준으로 한다면, 한국 언론은 여전히 (1) 반란군의 봉기와 살육만을 부각시켜 왔을 뿐 (2) 정부군의 잔혹한 보복과 (3) 민중의 눈물과 통곡에 대해선 애써 외면해온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순사건의 (4) 원인과 (5) 본질에 대한 본격적 논의는 아예 엄두조차 못 내고 있는 실

정이다.

우선 한국 언론의 주류를 자처하는 대다수 매체조차 여순사건에 관한 한 단세포적 인식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이제라도 한국언론은 좌우대립이라는 극한적 상황에서 ‘항변 없는 침묵’ 속에 죽어가야만 했던 민초들의 역사를 향한 ‘소리 없는 호소’에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할 것이다.

II. 여순사건 전후 한국 언론의 상황과 논리

여순사건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부정 일변도의 인식의 1차적 근거는 언론보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언론보도에 대한 고찰은 여순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한 ‘첫 단추 바로 끼우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 실제로 여순사건에 대한 정부와 군 당국의 발표는 주로 언론을 통하여 국민에게 전달됐다. 하지만 정부발표와 언론보도 중에는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 상당히 많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홍영기, 『여순사건에 관한 자료의 성격과 연구 현황』, 163p)

여순사건에 대한 한국 언론의 보도행태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우선 1948년 정부 출범 당시 언론활동을 규정하고 제한했던 외부적·제도적 상황에 대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1948년 당시 언론계에 철저히 관철됐던 정부 당국의 언론검열 조치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정부 당국은 8월 15일 정부 수립 후 언론에 대한 7개 조항 지침을 제정하였다. 이 7개 조항 지침은 대한민국의 국시와 정부시책을 위반하는 기사, 정부를 모략하는 기사, 공산당과 이북 북괴정권을 인정하거나 비호하는 기사, 허위의 사실을 날조하여 선동하는 기사, 우방과의 국교를 저해하고 국위를 손상시키는 기사, 자극적인 논조나 보도로써 민심을 소란시키는 기사, 국가의 기밀을 누설하는 기사 등의 게재를 금지시킨다는 내용이였다.(강준만, 『권력변환』, 326-327p) 분단 대치와 좌우대립이라는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한다고 해도 이러한 ‘보도지침’은 언제든지 언론보도에 재갈을 물릴 수 있는 통제수단으로 표변할 가능성이 있었다. 더욱이 전남 일원에는 계엄령까지 발포된 상황이었다.

아울러 여순사건 초기에 정부는 철저한 보도 관제를 시행했다. 실제로 여순사건이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사건이 발생한 지 3일이나 지난 뒤인 10월 22일부터였다. 한편 이 과정에서 기자들이 힘겹게 현장을 취재하고도 사진이나 기사 등을 압수당한 사례도 발생했다.

“27일까지는 비교적 순조롭게 촬영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가 걱정이었다. 사진과 원고를 군에서 검열

당해 빼앗길지 모른다는 생각과 더욱 더 걱정되는 것은 여수에서 광주 본사까지 원고를 보내려면 결사대를 조직하여 송고해야만 했으니 이 일은 보통문제가 아니었다. ‘어차피 한번 죽지 두 번 죽나’하는 결의를 다지고 가까스로 순천까지는 29일에 도착하였으나 광주까지 가는 일이 또 다시 문제였다. 교통이 완전 차단되었던 것이다. 몇 번의 검문을 거쳐 31일 밤에 가까스로 광주에 도착했으나 찍은 사진 대부분을 검열에 걸려 빼앗기고 말았다. 나로서는 생명을 걸고 찍은 사진들이며 순천에서 광주까지 입산한 반군들의 기습을 받으며 사선을 돌파하여 가져온 사진들인데 아쉽게 한이 없었다.”(이경모, 『사선 넘으며 촬영한 동족상잔의 비극』, 52p)

그러나 여순사건에 대한 왜곡보도를 단순히 언론의 외부적·제도적 문제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사실 언론의 사명은 끈질긴 확인취재와 냉철한 비교분석을 통해 객관적 사실과 사회적 본질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데 있다. 그러나 여순사건 당시 대다수 한국 언론은 그러한 언론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정부와 군 당국의 발표만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모습을 보였다. 여순사건에 대한 보도행태를 언론의 내부적·주체적 상황에서 동시에 고찰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거니와, 그런 점에서 다음과 같은 지적은 적절하고 타당하다.

지금까지도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순사건 인식은 당시 정부가 왜곡해서 발표한 내용 - 경찰이나 우익인사에 대한 흉악한 처단, 소요와 혼란을 부추기는 좌익 활동, 진압군인에 대항한 학생들의 극렬한 저항, 이에 대한 정부나 진압군의 정당한 응징조치 등 - 과 여러 부분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많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희생시킨 여순진압 작전의 실상이나 불법적인 계엄령 그리고 양민학살의 실상 등 여순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측면들은 아직까지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김득중, 『이승만 정부의 여순사건 왜곡과 국회논의의 한계』, 『역사연구』, 153p)

우선 당시 언론은 여순사건의 전개과정을 지켜보면서 그 원인에 대한 냉정한 분석을 수행해야 했다. 설사 정부의 발표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가져보는 것이 당연했을 것이다. (1) 왜 다수의 군인들이 소수의 남로당 계열 군인들의 선동에 넘어갔는지, (2) 왜 다수의 지방 주민들이 이들의 반란에 가세했는지, (3) 왜 일부 진압부대 군인들이 도리어 반란군에 합류했는지 등이 바로 그것이다. 실제로 당시에도 그런 ‘상식적 의문’을 제기한 기자가 있었다.

이 사건의 현지로 가면서 우리가 먼저 알고자 한 것이 왜 제14연대라는 적지 않은 국군의 병사가 반란을 일으키었는가 하는 의문이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답은 서울서 우리가 들은 한 공산당원과 극우파의 공동 전략으로 일으킨 것이라는 것이었으나 만일 이 단순한 해석을 그대로 믿는다면 반란의 가능성은 비단 제14연대 뿐은 아니라는 결과 버려지는 것이며 따라서 금반 사건은 좀더 상세한 설명 없이는 이해하기 곤란한 것이다.(설국환, 『반란지구 답사기』, 『신천지』, 1948년 11월호)

그러나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당시 대다수 한국 언론은 ‘상식적인 의문’을 제기하거나 ‘좀 더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독자와 국민이 여순사건의 원인과 배경을 제대로 파악하기란 애초에 불가능했다. 앞에서 칼-마이던스의 분석을 살펴보았거니와, 14연대 반란의 원인과 배경은 다음과 같은 진술과 무관치 않다.

여순사건은 봉기를 일으킨 주체세력인 군과 경쟁관계에 있던 경찰과의 갈등도 작용했지만 제주 4·3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거부하면서 발발한 것에서도 잘 나타나듯이 분단정권 반대, 친일과 척결 등 해방 후부터 쌓인 여러 불만이 폭발된 것이었다.(김득중, 앞의 글, 150p)

우리는 여기서 군인과 경찰의 대립, 친일과 척결의 미흡 등이 여순반란의 근인(近因)과 원인(遠因)으로 작용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거니와, 이에 대해서는 두 개의 인용문으로 간략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우선 1948년 10월 23일 서울발 광주행 열차에서 국방부 인사국장 강영훈 중령이 합동통신 설국환 기자에게 털어놓은 말을 들어보자.

사회경제의 혼란에서 오는 일부 행정관리 내지는 경찰의 부패를 곁에 보면서 국군병사들은 완전히 목표를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군의 고민은 경찰 측에서 왕왕 말하듯 하는 국군의 불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입의 부족을 비행으로써 보충하는 많은 경관은 다만 묵묵히 어느 날만을 기하고 있는 국군병사를 경멸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에 대한 국군병사의 반경(反警)감정은 결코 상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공산당의 모략으로 발단한 것이기는 하지만 제주상태만 하더라도 진압이 어려운 것은 경찰의 비행 때문입니다.

강영훈 중령의 발언에서, 당시 경찰이 부패와 비행을 저지르면서도 도리어 국군을 경멸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이에 대한 군인들의 반감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다음은 『조선일보 70년사』에 기술된 여순사건 관련내용을 읽어보자.

1948년 9월 22일, 일제시대에 일본에 협력하여 악질적으로 민족배반행위를 하였던 친일분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제정 공포되고, 이에 따라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특별검찰위원회·특별재판위원회가 설치된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의 비협조로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전라남도 여수와 순천에서 국방경비대(국군의 전신)의 일부가 반란을 일으키는 충격적 사태가 터진다.(『조선일보70년사』 2권, 113p)

이 글의 ‘이런 분위기 속에서’라는 대목에서 잘 알 수 있듯이, 반민특위에 대한 이승만의 비협조 때문에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도 여순사건의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당시 대다수 언론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그렇다면 당시 언론이 여순사건을 좀 더 객관적으로 다룰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다음에 소개하는 인용문이 그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제시한다.

1947년 말에 이르러서는 좌익계 신문들은 명맥만을 유지한 채 거의 사라졌지만, 미국이 한국문제를 UN에 단독으로 상정하여 점차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이 추진되면서 좌익계 신문은 물론 대부분의 중도계 신문들과 일부의 우익계 신문들까지도 이에 반대하는 논조를 보임으로써, 점차 단독정부를 지지하는 일부 신문·언론인들과 자주적 통일국가를 염원하는 신문·언론인들 간 사이의 대립이 첨예화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신문들 사이의 대립은 김구와 김규식을 중심으로 한 남북협상을 계기로, 이를 지지하는 신문·언론인과 이를 반대하는 신문·언론인으로 명확히 드러났다. 그러나 남북협상이 무위로 돌아가고 남한만의 총선을 통한 단독정부가 수립되면서 자주적 통일국가를 염원하던 대부분의 신문들은 폐간되었고 일부 신문들은 살아남기 위해 급격히 논조를 변화시키게 되었다.(박용규, 『미군정기 중간과 언론』: 설의식의 <새한민보>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언론2』, 173p)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945년 해방 직후에만 하더라도 다수파를 형성하던 좌익계 신문은 1948년 정부수립 당시에는 거의 소멸되는 운명을 맞는다. 이러한 언론의 불균형 현상은 당시 민중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기에는 역부족이 아닐 수 없었다. 실제로 미군정 공보부가 1946년 7월에 실시한 대규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70%가 자신이 좋아하는 사상으로 ‘사회주의’(참고로 자본주의 13%, 공산주의 10%)를 꼽았으며 85%가 ‘대의기구를 통한 모든 인민의 지배’가 바람직한 정부형태라고 응답했다.

따라서 자신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할 언론을 갖지 못한 민중은 계기만 주어진다면 언제라도 폭발할 가능성을 안고 있었으며, 또한 대다수 한국 언론은 언제라도 민중을 배반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III. 여순사건 왜곡보도의 과거

여순사건이 터지자 한국 언론은 이승만 정부와 군 당국의 발표를 검증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기사화하는 행태를 보였다. 그러다 보니 이승만 정부의 정치적 의도에 철저히 이용당한 것은 물론이고 그 과정에서 숭한 오보를 양산할 수밖에 없었다.

우선 이승만 정부는 여순사건 주체세력 조작을 통해 이 사건을 철저하게 자신들의 정치적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한 전화위복(?)의 수단으로 활용했다. 처음에는 1948년 10월 1일 발생한 ‘혁명의용군사건’과 10월 19일 발생한 여순사건이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처럼 여

론을 조작함으로써 최대의 정적이었던 김구를 견제하려 했으며, 나중에는 반란의 실질적 주체가 14연대 장병들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조직된 민간 좌익이라고 몰아감으로써 예상치 못한 주민들의 대규모 반란 동참에 따른 정부의 실정에 대한 비난과 진압과정에서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

(1) 여순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고도 공개하지 않고 있던 정부는 이틀이 지난 10월 21일 오전 11시 이범석 국무총리의 발표를 통해 처음으로 이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다. 이 범석은 여순사건을 ‘공산주의자가 극우정객들과 결탁해 일으킨 반국가적 반란’이라고 규정했다. 다음은 이 발표에 대한 두 신문의 보도이다.

이번 국군이 일으킨 반란의 주요 원인과 폭동 성질은 수식 전에 공산주의자가 극우의 정객들과 결탁해서 반국가적 반란을 일으키자는 책동이였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소령으로 진급하여 여수 연대장으로 가게 되었으며 방금 신문 중에 있는 오동기라는 자로 이자는 하사관 훈련의 기회를 포착해서 젊은 하사관의 단순한 심리를 선동하고 일방으로 극우진영의 국외 외국내의 실의 정객들과 간접 연락을 취하여 러시아 10월혁명과 비슷한 전국적인 반란을 기도했던 것이다.(서울신문 1948. 10. 22)

천인공노할 공산주의 도당의 패악은 물론 여기에 국가민족을 표방하는 극우파가 가담하여 최악적 행위를 조장시키고 사리를 위해 합한 것은 가증한 일이다. 인류의 자유평화를 파괴하고 폭동으로서 정치적 기도를 달성하려는 세력이 성공되는 법이 없다. 이 죄상이 앞으로 전부 폭로되는 날 대중은 더욱 분개할 것이며 정부는 이와 같은 죄상 폭동을 용인하지 않는다.(자유신문 1948. 10. 22)

이범석 국무총리는 다음날인 10월 22일 ‘반란군에 고한다’는 제목의 포고문에서도 반란군이 “일부 그릇된 공산주의자와 음모정치가의 모략적 이상물”(서울신문 1948. 10. 24)이 되었다고 언급했다. 이날 김태선 수도경찰청장도 ‘혁명의용군사건’ 수사발표를 통해 여론몰이를 거들고 나섰다. 한편 거의 모든 언론이 이 두 발표를 천편일률적으로 대서특필했는데, “소위 혁명의용군 사건은 그 주모자 최능진, 오동기, 서세중, 김진섭 등이 남로당과 결탁하여 무력혁명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고 김일성 일파와 합작하여 자기들 몇 사람이 승배하는 정객을 수령으로 공산정부를 수립하려고 공모”했다는 것이 그 요지였다.

여기서 잠깐 새롭게 혁명의용군사건의 주모자로 떠오른 최능진이란 인물이 누구인지 살펴보자. 최능진은 수사 당국에 의해 ‘유엔감시 하의 남한정부 수립을 방해하고 남북협상이 실패한 후에는 마지막 수단으로 국방경비대를 이용하여 무력혁명을 감행하려 한 인물’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그는 남북협상에 나서려는 김구·김규식을 남한 우익진영이 ‘공산주의자’로 매도하고 비난했음에도 이에 대항하지 못하는 남한 청년들은 다 썩었다고 분개한

민족주의자에 불과했다.(연합신문 1949. 2. 9) 결국 1948년 제헌의회선거 당시 동대문 갑구에 출마하여 감히 ‘국부 이승만’과 겨루었던 최능진을 한번 손봐주려 했던 수사는 선거운동원으로 참가했던 군인을 신원보증했던 오동기로 이어졌고, 여순사건이 오동기가 근무했던 14연대에서 일어나게 되자 최능진에게 무력혁명의 죄까지 뒤집어씌우게 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승만 정부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은 채 연막을 피우며 ‘극우의 정객’ ‘국가민족을 표방하는 극우파’ ‘음모정치가’, ‘혁명의용군 주모자가 숭배하는 정객’이라고 표현한 사람이 과연 누구를 겨냥한 것인지 금방 눈치 챌 수 있다. 물론 그 인물은 해방정국에서 이승만의 최대 정적이었던 김구였다. 이승만 정부는 최능진이 주장했던 단독정부 수립반대, 남북협상 등의 정치적 입장이 김구와 한독당의 노선과 상당한 친화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그러나 ‘혁명의용군사건’은 나중에 조작된 사건이었음이 증명되었다. 당장 재판과정에서 무력공산혁명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으며(유건호, 『여순반란사건』, 『전환기의 내막』, 163~164p), 국방부도 오동기가 ‘무고하게 역적의 죄인’이 되었다고 인정한 것이다. 국방부 기록에 따르면, 오동기가 생면부지인 최능진과 결탁하고 14연대의 김지회와 반란을 음모하기에는 14연대장 시절부터 한국전쟁 동안 일체 좌익에 협력하지 않는 등 행동거지가 너무나 명백했다고 한다.(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1: 해방과 건군』, 488p)

이승만 정권은 여순사건을 활용하여 우익 지배층 내부를 재편하고 이승만의 의지가 관철될 수 있는 안정적인 정치지형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다. 정부는 여순사건을 정부의 실정에서 비롯된 밑으로부터의 저항이 아니라 일부 우익세력에 의한 쿠데타적 행동으로 국민에게 광고함으로써 이를 계기로 정치세력을 재편하는데 활용하려고 했다. 그러나 여순사건을 이용하여 정적을 압살하려던 이승만 정부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다.(김득중, 앞의 책, 165p)

이승만 정부가 ‘오동기 → 최능진 → 김구’라는 허구적 삼단논법을 통해 여순반란의 주체를 조작하려던 시도는 실패했지만, 이 과정에서 정부의 발표를 일방적으로 독자에게 전달함으로써 대다수 한국 언론은 이승만 정부의 충직한 나팔수로 이용되었다. 이러한 과오는 여순사건이 전개되는 과정이나 이후에도 고쳐지지 않은 채 반복되었다.

(2) 이승만 정부는 ‘우익과 공산주의자 연합에 의한 반란’이라는 기존의 논리가 먹혀들지 않는 데다 여순사건이 장기화되자 반란의 주체세력을 이번에는 ‘민간인 공산주의자’로 몰아나가기 시작했다. 이른바 ‘민간인 주동설’을 유포하기 시작한 것이다.

김형원 공보처차장이 총대를 댔다. 그는 일반 국민들이 여수 14연대가 반란을 일으키

고 민중이 여기에 호응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사실은 ‘전남 현지에 있는 좌익분자들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소련의 10월혁명 기념일을 계기로 일대 혼란을 야기시키려는 음모를 획책하고 그들이 일부 군대를 선동하여 일으킨 것’이라고 주장하였다.(서울신문 1948. 10. 29) 다시 말해 반란의 주체는 14연대 장병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조직된 민간 좌익들이라는 것이 발표의 요지였다. 그렇다면 정부의 입장이 이렇게 갑자기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

공보처장의 발표는 정부 조직의 한 부분인 국군 내부로부터 반란이 처음 일어났다는 점을 애써 외면함으로써 반란의 초기 주체가 국군임을 부정하고 그 책임을 민간인에게 떠넘기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다. 또한 이 발표는 우익과 공산주의자들의 연합으로 사건이 발생했다는 정부의 초기 발표를 사실상 수정하고 사건의 주체를 민간인 공산주의자로, 14연대 군인은 이에 종속되는 지위로 파악한 것이었다.(김득중, 앞의 책, 167p)

정부가 이 사건을 민간인 공산주의자 주동의 폭동으로 명백히 규정하면서 필연적으로 그 파장은 북한 공산주의세력으로까지 번져나가지 않을 수 없었다. 실제로 국방부는 여수와 순천에 대한 진압을 완료한 이후인 11월 3일 ‘전국 동포에게 고함’이란 벽보를 전국에 살포했는데, 여기에는 “민족적 양심을 몰각한 공산도당의 조직과 명령을 통하여…대한민국 정부를 파괴”, “소련제국주의의 태평양 진출정책을 대행하려는 공산당 괴뢰정권의 음모”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평화일보 1948. 11) 이에 대한 김득중의 발언은 시사적이다.

여순사건의 주체에 대한 규정은 이런 식으로 냉전적 설정으로 이동했다. 실제 사실이 어떠했는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런 사실을 확인할 여유나 의지를 갖고 있지 못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뒤바뀔을 통해 내부 갈등의 책임을 밖의 확인되지 않은 실체에게 떠넘김으로써 지배층의 실정을 은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는 점이다. 또한 이 사건이 기본적으로 내부갈등 때문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사주로 몰아감으로써 사건 주체의 정당성을 박탈해버리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었다.(김득중, 앞의 책, 169p)

여순사건의 주체세력을 ‘확인되지 않은 외부’로 설정할 경우, 더욱이 그것이 북한 공산주의세력으로 상정될 경우, 현지 주민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대응정책이 전개되리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다. 실제로 이승만 대통령은 11월 4일의 담화에서 “모든 지도자 이하로 남녀아동까지라도 일일이 조사해서 불순분자는 다 제거하고 조직을 엄밀히 해서 반역적 사상이 만연되지 못하게 하며 앞으로 어떠한 법령이 혹 발표되더라도 전 민중이 절대 복종해서 이런 비행이 다시는 없도록 방위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른바 ‘민간인 주동설’과 ‘북한 사주설’은 여수와 순천에 대한 진압작전과 곧이어 벌여

진 협력자 색출과정에서 현지 주민들에 대해 가해진 엄청난 희생을 정당화시켜준 요인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일제시대의 만주토벌을 연상케 한 초토화 작전과 협력자 색출은 14연대가 점령했을 때보다 더 큰 인적·물적 피해를 남겼다. 사실 진압이 시작되기 전 14연대 주력 부대는 모두 여수와 순천을 빠져나갔으며 소수의 군인과 이 지역 좌익활동가들 그리고 분 위기에 편승에 합류한 청년들만이 남아 있던 상태였다. 그러나 진압군의 작전은 전 시민을 반란군으로 간주하고 이들을 모두 적으로 삼는 무차별적인 공격이었다. 이 과정에서 무고한 주민들이 수없이 죽어갔음은 물론이다.(김득중, 『여순사건 당시의 민간인 학살』, 『한국현대사와 사회주의』, 304p)

(3)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살벌했는가는 1948년 순천 갑구 국회의원 황두연, 순천지청 검사 박찬길, 여수여중 교장 송옥 등 사회지도급 인사들마저 반란의 ‘수괴’로 몰리어 총살당하거나 ‘빨갱이’로 몰렸다는 사실에서도 충분히 짐작된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차석 검사였던 박찬길 검사는 순천이 진압된 직후 경찰에게 총살당했다. 엄격한 법의 기준에 따라 사건을 처리해서 올곧은 판사로 이름이 나 있던 그의 죄목은 반란군에 협조하여 인민재판에서 재판장을 담당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혐의는 나중에 국회에서 근거 없이 조작된 것임이 밝혀졌다. 박찬길 검사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게 된 까닭은 사실 그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던 현지 경찰 등이 올린 조작된 정보 때문이었다.

당시 언론은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폭로하거나 막지 못했다. 도리어 언론은 국회의원까지 순식간에 ‘빨갱이’와 ‘반도’로 만들어 죽음의 구렁텅이로 내몰았다. 당시 대표적인 극우언론 평화일보가 그 악역을 담당했다.

평화일보는 10월 30일 ‘순천반란지구 인민재판에 국회의원 황두연이 배석 판사로 활약’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현역 국회의원이 인민재판에 판사로 참가했다는 보도는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러나 이런 기사와 소문은 전후 사실에 대한 확인이 없이 조작된 기사였다. 세월이 한참 지난 뒤에야 김효석 내무부장관은 국회에서 황 의원이 인민재판에 배석했다는 점은 허위라고 인정했지만, 이 오보로 황 의원은 진압 직후 다짜고짜 특별조사국에 끌려가 구타를 당하고 취조를 받아야만 했다. 김득중은 당시의 국회속기록을 인용하여 당시의 정황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황 의원이 인민재판에 참가했다는 평화일보 10월 30일자 기사는 이미 3일 전인 27일 순천에서 이지웅 기자가 보낸 것이었다. 양우정 사장은 “이런 악질행동을 한 자를 숙청하는 의미”로 대대적으로 보도하라고 지시했으나 황 의원의 아들 황현수가 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사건을 부인했고, 국회 출입기자도 사실이 아

니라고 하여 게재가 보류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29일 중앙청 출입기자와 양우정 사장은 사실임이 틀림없다고 다시 주장하였고 사장은 황 의원에 대한 기사를 실을 것을 지시했다. 이와 같은 신문게재 경위는 배후에 깔린 정치적 목적을 의심하게 하였다. 더욱이 이 기사를 송고했던 이지웅 기자는 인민재판에서 석방된 어떤 시민한테서 황 의원 혐의사실을 들었을 뿐이고 다른 확인절차를 취했던 것도 아니었다.(김득중, 앞의 글, 318p)

참고로 이 사실을 처음 보도한 평화일보 양우정 사장은 이승만과 가까운 인사였다. 놀라운 것은 황 의원의 누명이 벗겨진 후에도 평화일보가 악의적 보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점이다.

여수여중 송옥 교장은 사건 초기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다가 갑자기 반란의 총지휘자로 보도되기 시작했다. 여학교 교장이 반란의 수괴라는 내용은 납득하기 어려웠지만 도리어 이 점이 세간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정부의 강경한 진압을 부추겼다. 송옥 교장이 여순사건의 민간인 수괴로 알려지게 된 것은 정일권 육군총참모부장의 10월 26일 발표를 통해서였다. 당시 국제신문, 조선일보, 세계일보, 민주일보, 동광신문 등 대다수 신문이 이 사실을 보도했으며, 이 사실은 지금도 국방부의 <한국전쟁사>에 ‘정사’로 기술돼 있다.

그러나 최근 그것은 잘못된 보도였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송옥 교장은 좌익이 아니라 양심적 우익인사라는 것이다. 송 교장이 어떤 사람인가는 살벌한 계엄령하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취조를 받기 위해 군기대로 넘어갔을 때 여수의 각 학교와 학생단체에서 그의 석방을 탄원하는 진정서를 냈다는 사실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던 우익인사였던 송옥 교장이 반란군 수괴로 잘못 알려진 것은 봉기군이 그의 대중적 인기를 이용하기 위해 강제로 인민대회 연사 명단에 이름을 집어넣은 사실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편 정부와 군의 발표를 일방적으로 기사화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오보도 속출했다. 대표적인 오보는 10월 24일 여수를 완전 탈환했다는 보도(조선일보, 동아일보, 동광신문, 호남신문 등 주요 일간지)와 14연대 반란군을 이끌었던 소대장 김지회를 전격 체포했다는 보도(동광신문)이다. 여수를 완전히 탈환한 것은 10월 27일이었다. 특히 군 당국이 한 지방지 기자에게 김지회를 체포했다고 제보함으로써 그 기사가 국내외에 전승됐다가 곧 바로 낭설이라고 정정하는 촌극을 빚었다.

(4) 여기서 반드시 또 하나 언급해야 할 것은 학생들의 봉기참여에 대한 정부 당국의 발표와 언론의 보도태도이다. 언론은 “홍안의 여학생들이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죽창 혹은 총을 들고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무려 남녀학생의 80%가 반란군에 가담

해 싸웠다는 설이 유포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언론은 정부보다 한술 더 떠 윤색과 작문까지 시도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환상의 여학생 부대’ 신화라고 할 수 있다. 이 신화의 창조(?)에는 특히 동아일보와 소설가 박종화의 역할이 컸는데, 박종화는 한 지방신문에 실린 기사를 윤색해 전혀 새로운 작품(?)을 창조했다. 그가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 ‘원작’은 동광신문 1948년 11월 2일자에 실린 기사 중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관군이 여수시가에 돌입하였을 때 조그마한 여학생 하나가 “아저씨!”하고 뛰어나와서 한 병사한테 달려들었는데 그 병사는 인민군에 납치되어 있던 여학생인줄 알고 “걱정 마라! 적은 우리의 손아귀에 있다” 하고 외치자마자 스카트 밑에 감추었던 권총을 쏘아서 그 병사를 죽인 예가 있다.

당시에 떠돌던 소문을 전한 이 짧은 기사를 박종화는 소설가 특유의 문체로 정리해 동아일보 1948년 11월 21일자에 실었다. 「박종화 남행록(완)」이라는 제목의 이 글을 보자.

작전참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공산주의 사상이 한번 머리에 들어가면 어떻게 사람이 지독하게 되는 것을 아십니까? 여수 진주에서 생긴 일인데 여학생들이 카빈총을 치마 속에 감추어 가지고 우리들 국군장교와 병사들을 유도합니다. 오라버니! 하고 재생의 환희에서 부르짖는 듯 우리들을 환영합니다. 무심코 앞에 갔을 때는 벌써 치마 속에서 팡! 소리가 나며 군인들은 쓰러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끔찍한 일을 보십시오. 이것들은 나이 겨우 열여덟, 열아홉 살 되는 것들입니다. …(중략)… 이러한 여중학생 몇 명을 잡아다가 고문을 했습니다. 그 꼴을 보느라고 너는 충살이다 위협했더니 처음엔 부인을 하며 영영 울다가 하나, 둘, 셋 하고 구령을 불려서 정말 충살하는 듯한 모양을 보였더니 ‘인민공화국 만세’를 높이 부릅니다. 기막힌 일이 아닙니까? 평시에 학교 교육이 얼마나 민족적인 육성에 등한시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남는 노릇이옵시다. 학교에 다닙네 하고 공산주의의 이념만을 머리에 집어넣는 공부를 한 셈이옵시다.

이 ‘환상의 여학생 부대’ 신화는 5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좌익의 부정적 이미지로 일반 국민의 뇌리에 강렬하게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진압군과 정부, 그리고 언론과 지식인이 퍼뜨린 여학생 반란가담의 진상은 1949년 봄 여수군 장학사 오길언이 여수여중에서 열린 여수지역 교원세미나에서 발표한 ‘반란사건에 대한 조사보고’에 의해 당장 바로잡힌 바 있다. 오 장학사는 항간에서 떠돌고 있는 이 소문이 사실무근한 낭설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교부의 지시를 받고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재를 확인해 보았는데, 조사한 결과 여학생 가운데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하였다. 총을 들고 가담했다면 죽거나 군 당국에 처형당하거나 군법회의에 넘어갔어야 하는데 그런 사람은 없었다는 것이었다.(반충남, 앞의 글)

사실 병기교육 한번 받아보지 못했던 학생들이, 그것도 여학생이 요소요소에 배치되어 정규군과 맞서 일사불란하게 싸웠다는 말 자체가 우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진압군은 이들의 저항을 ‘조직적이고 극렬한 저항’으로 묘사했지만 실상은 진압군의 공격을 즉창이나 총으로 방어하는 데 급급한 ‘비조직적이고 무모한 저항’일 뿐이었다. 이것이 바로 ‘환상의 여학생 부대’ 신화의 전말이다.(반충남, 『여순반란사건, 인민재판은 없었다』, 월간 <말> 1998년 11월호)

결국 진압군이 학생들의 ‘완강한 저항’을 강조하게 된 것은 10월 23일과 24일에 있었던 정부 1차, 2차 진압작전의 무리한 전개와 그 실패를 면피하기 위한 시도였다. ‘민간인 주도설’ 발표와 함께 ‘환상의 여학생 부대’ 신화는 정부와 군의 ‘토벌작전식 진압’을 정당화시켜 주었다. 실제로 여수 진압 시 국군은 육·해·공을 동원한 입체작전을 펼쳤다. 비행기가 정찰 활동에 동원된 이후 바다에서는 해군의 사격이 있었으며 시내에서는 81밀리 박격포와 30밀리 중기관총을 사용하였다. 이때 일어난 화재는 전 시가를 검은 연기로 뒤덮었고, 여수는 죽음과 공포의 도시로 바뀌었다.

(5) 이승만 정부는 민간인에 대한 무리한 진압에 따른 비판의 목소리를 냉전논리로 잠재웠다. 윤치영 내무부장관이 11월 8일 북한의 최소한 8개 도시에서 공산지배에 반대하는 광범한 폭동이 일어났으며 원산에서만 6천명이 학살됐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발표한 것이다. 물론 이것 또한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아니었다. 당시 미군은 북한에서 소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대규모의 조직된 저항이 있었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는 신뢰를 보내지 않았다. 결국 윤치영 장관의 ‘허황된 발표’는 남한의 여순사건이 가져올 신생 정부의 위약성과 정통성 부재를 외부의 북한정권에 대항한 더 큰 규모의 반란에 관심을 돌리게 함으로써 문제를 회피하려 했던 것이다.(김득중, 「이승만 정부의 여순사건 왜곡과 국희논의의 한계」, 173p)

그것은 ‘1948년판 북풍사건’이라 할만 했거니와, 거의 모든 일간지가 이 사건을 일제히 1면 또는 사회면을 통해 대서특필했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와 언론의 여순사건 왜곡을 지켜보면서 다음과 같은 진술에 귀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여순사건의 많은 사실들은 과장되거나 은폐되고 근거 없이 확대되면서 어느 것이 사실이고 어느 것이 허위인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의 신화가 되었다. 당시 신문은 기본적 사실 확인도 없이 보도했고, 이후 관련 기록들은 한쪽의 일방적 시각 밑에서 서술되었다. 여순사건 연구가 먼저 사실에 대한 규명부터 출발하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김득중, 「여순사건 당시의 민간인 학살」, 362p)

IV. 여순사건 왜곡보도의 현재

2001년은 여순사건 발생 53주년이다. 그런데 여순사건 53주기를 기념하기 위해 제작 중이던 다큐멘터리 장편영화 「애기섬」의 제작이 한 언론사의 ‘색깔논쟁’에 의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전 인류와 한민족이 냉전과 대립으로 얼룩진 20세기와 결별하고 화해와 통일을 향해 나아가기로 약속한 21세기 벽두에 발생한 이 사태는 여순사건 왜곡보도가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임을 확인시켜준 사례이다.

다큐영화 「애기섬」은 2000년 7월부터 촬영에 들어가 2001년 9월까지 모든 제작을 마치고 10월 19일부터 여수와 순천에서 상영될 예정이었다. 1시간 20분 길이로 제작 중이던 이 영화는 홍영기 순천대 사학과 교수의 안내로 여순사건 당시 반대편에 서 있던 관련자 등을 찾아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는 논픽션과, 한 평범한 가족의 비극을 재현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화해를 모색하는 픽션의 요소를 동시에 갖추고 있다.

이 영화는 제작 당시부터 파문이 끊이지 않았다. 여수와 순천에 있는 재향군인회와 상이군경회 등 15개 보수단체가 공동성명을 내고 문제를 제기했으며 군의 향토사단 역시 제작과정에 개입했다. 이 과정에서 시나리오 내용이 일부 수정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기는 했지만, 영화제작이 중단될 정도의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다. 문제는 전혀 엉뚱한 곳에서 발생했다. 한 언론사가 이 영화에 대해 ‘사상검증’을 제기하고 나서면서 ‘공든 탑’은 와장창 무너졌다.

<월간조선> 2001년 10월호는 영화 「애기섬」을 “여순 14연대 좌익 반란사건을 통일운동의 성격을 띤 것처럼, 그리고 국군의 진압을 양민학살로 부각시키고, 국군이 함포사격으로 양민 1천명을 죽였다고 조작한 영화”라고 규정했다. 이 기사를 작성한 우종창 <월간조선> 기자는 그 근거로 고등학교 국정 국사 교과서와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가 펴낸 <한국전쟁사>에 적혀 있는 여순사건 관련 기록을 제시하는 한편 몇몇의 취재원과 나눈 대화내용을 소개했다.

그러나 필자는 <월간조선>의 이러한 단순명쾌한(?) 결론은 ‘도그마적 역사인식’과 ‘부실한 확인취재’에 바탕한 함량미달의 결과물일 뿐이라고 판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해 단순하고 고정적인 역사인식에 바탕해서 사고와 판단을 전개하면 총체적이고 탄력적인 상황인식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말이다.(예컨대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어 미궁에 빠져 있던 김구 암살 사건의 경우 최근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면서 그 진상이 점차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우 기자는 역사에 대한 정의와 개념도 이렇게 유동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할 것이다.)

우선 우종창 기자의 기사를 정독해 보니, 논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은 대략 다섯 가지로 정리된다.

(1) <월간조선>은 “국군이 함포사격으로 양민 1천명을 죽였다고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월간조선>은 기사에서 “이 영화에서는 역사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건이 고증을 거쳐 사실로 확인된 것처럼 묘사하는 장면이 일부 등장한다. 이는 역사의 왜곡이 아니라 역사의 조작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국군이 여수시에 함포사격을 했다는 장면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우종창 기자는 자신이 제기한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국방부 문의를 통해 얻은 답변, 한 여수지역 6·25참전자회 관계자와의 인터뷰, <한국전쟁사>에 실린 관련 기록 확인, 종군기자단의 기록 확인 등 4가지 근거를 제시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방부 문의를 통해 얻은 답변: “해군 함정이 출동하였으나 포격 여부는 밝혀진 바가 없다.”
- 한 여수지역 6·25 참전자회 관계자와의 인터뷰: “함포사격은 처음 듣는 얘기이다.”
- <한국전쟁사>에 실린 관련 기록 확인: “함정에서 박격포를 쏘았다는 내용은 있지만 함포사격은 아니다.”
- 종군기자단의 기록 확인: “그런 기록이 없다.”

그러나 함포사격 사실여부는 차치하고 우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취재의 수준과 범위가 너무나 부실하고 협소하다는 점이다. 우선 자신의 주장에 유리한 기록만을 취하거나 그런 취재원만을 만난 것이 아니냐는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왜냐하면 진압작전 시 함포사격을 했다는 증언이나 기록은 곳곳에 있기 때문이다.

우선 <월간조선> 기자는 국방부 관계자나 여수지역 6·25 참전자회 관계자만 만나기 전에 이 지역 향토사학자 김계유 씨의 증언부터 점검해야 했다. 김씨는 ‘당시 대한민국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군사력을 동원하여 여수를 삼면에서 포위한 뒤 반군도 없는 거리에, 6만명의 동포가 살고 있는 거리에 무차별 포격을 가하고 장갑차를 앞세워 전 시민을 포로로 삼은’ 진압작전의 현황을 다음과 같이 증언한 바 있다.

“육지에서는 사방에서 콩 볶는 것 같은 총 소리! 파아 파아 파아 하고 쉴 새 없이 뿜어대는 기관총 소리! 쿠웅 쿠웅 쿠웅 하고 천지를 뒤흔드는 박격포 소리! 바다에서는 아무데나 용서 없이 쏘아대는 함포사격 소리! 하늘에서는 귀를 찢는 비행기의 굉음! 좌우간 이 순간의 여수는 마치 지구 최후의 날을 연상케 하는, 바로 그것이었다.”(김계유, 「내가 겪은 여순사건」, 『여수문화』 제5집)

한편 <월간조선>이 1993년 발간한 <한국현대사 119대 사건>에 여순사건 관련 원고를 게재했던 주인공이자 종군기자단의 일원이었던 이경모 씨(당시 호남신문 사진부장)는 자신의 회고문에서 이런 글을 남겼다.

“여수탈환은 10월 24일부터 시작되었다. 송호성 장군이 진두지휘를 하며 공격하였으나 워낙 반군의 반격이 심하여 첫 번째 공격은 실패하고 말았다. 26일 밤에 새로 투입된 장갑차를 앞세우고 재공격을 시작하여 곧바로 여수시 외곽에 진입한 국군은 27일 새벽녘에 함포사격을 시작하면서 전세를 유리하게 역전시키게 되었다.…함포사격이 끝난 뒤의 여수 시가지는 계속 불타고 있었으며 27일 밤의 여수 시가지 야경은 대낮의 살기 편 상황이 언제였냐는 듯 아름답기만 하였다.”

한편 흥미로운 것은 1948년 10월 28일자 조선일보 기사에도 ‘함포사격’이라는 말이 등장한다는 사실이다.

26일 대한민국 육군총사령부 발표에 의하면 여수에 대하여 2면 공격으로 남방으로부터는 여수항에 머물러 있는 해군 함정에서 발사하는 37밀리 함포의 탄막 엄호하에 수륙양면작전을 써서 여수상륙에 성공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월간조선>은 영화 「애기섬」을 ‘역사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건이 고증을 거쳐 사실로 확인된 것처럼 묘사한 영화’라고 단정 짓기 이전에, “함포사격이 있었다”는 다양한 증언과 기록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이것에 대한 면밀한 고증과 객관적 검토의 절차를 밟아야 했다.

(2) <월간조선>은 영화 「애기섬」의 제목으로 따온 ‘애기섬’이 보도연맹 학살장소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번에는 두 가지의 근거가 제시됐는데, 국방부 문의를 통해 얻은 답변, 한 여수지역 6·25참전단체 관계자와의 인터뷰가 바로 그것이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국방부 문의를 통해 얻은 답변 : “그런 역사적 기록이 없다.”
- 한 여수지역 6·25 참전단체 관계자와의 인터뷰 : “여순사건 무렵 애기섬에서 희생자가 있었다는 증언은 있지만 보도연맹 학살사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만 보더라도 이 논거의 질은 너무나 부실하다. “역사적 기록이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역사적 기록”이 없다는 것이 곧바로 ‘역사적 사실’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

진 않기 때문이다)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불확실한 증언(달리 표현하면 “정확한 사실은 모른다”는 고백이기 때문이다)만을 근거로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것은 기사로서 성실한 자세가 아니다. 따라서 <월간조선>은 여수지역 시민단체가 수년에 걸친 현장발굴과 증언채취를 끝낸 뒤 정리한 다음과 같은 보고서부터 읽어야 할 것이다.

“여순사건이 종료되자 정부는 전국적으로 좌익 성향자들을 ‘국민보도연맹’에 가입시키고 이들을 관리하였는데 여수지방의 보도연맹원들은 거의 여순사건 관련자들이었다. 사건 후 2년이 지나지 않아 6·25가 터지자, 정부는 전국에 걸쳐 이들 보도연맹 가입자들을 제거하기 위해 집합시키고 이들을 처형하였다. 울촌, 소라, 삼일, 쌍봉과 여수의 내륙지방은 여수경찰서 무덕관에 집결시킨 후에 경남 남해도 남단에 있는 애기섬으로 끌고 간 후 총살하고 수장하였는데 당시 관계자의 증언에 의하면 약 120명 이내로 추정된다.”(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순사건자료집2』, 16p)

(3) <월간조선>은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 내용 등을 열거한 뒤 “이 영화가 국군진압을 양민학살로 지나치게 부각시켰다”고 주장했다.

“장면 21 : 이른 새벽. (10월) 23일 순천이 탈환됐다. 군경은 부역자를 색출한다는 이름으로 피의 보복을 시작했다. 그냥 죽어야만 했다. 의심만 가도, 손가락질만 당해도 아무런 저항도 없이 죽어야만 했다. 눈먼 총부리의 역사. 이것이 한국사의 최대 비극, 집단 민간인 학살의 시작이 될지는 역사도 모르고 있었다. 그 시절의 군인과 경찰은 삶과 죽음의 감별사였다.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신적인 존재였다. 초등학교에 수천 명씩을 모은 뒤 정확한 판단도 없이 의심만 가면 그 자리에서 수십명씩 죽었다.”

그러나 앞에서 칼-마이던스 기자의 증언에서도 확인했듯이, 이 내용은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들이다. 다소 내용이 길긴 하지만 당시 현장에 있었던 향토사학자 김계유 씨의 말을 들어보자.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끌려왔던 사람들은 곧 ‘심사’라는 것을 받게 되었다. 그제서야 여기 끌려온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생존 경찰관을 선두로 우익진영 요인들과 진압군 병사로 이루어진 5~6명의 심사요원들이 시민들을 줄줄이 앉혀놓고 사람들의 얼굴을 쑥 훑고 다니가다 ‘저 사람’ 하고 손가락질만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교사 뒤에 파놓은 구덩이 앞으로 끌려가 불문곡직하고 즉결처분(총살)되어 버렸다. 그 자리에는 일체 말이 필요 없었다. 모든 것이 무언(無言)인 가운데 이루어졌다. 사람을 잘못 봤더라도 한번 찍혀 버리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임사호천(臨死呼天)이라고 사람이면 누구나 죽게 되면 하늘을 부른다고 했다. 그때 여수 사람들의 심정이 바로 그랬다. 이런 공포 분위기 속에서 정문에서는 간혹 소탕작전에서 잡혀오는 것으로 보이는 파리한 물골의 앓된 젊은이들이 2~3명씩, 혹은 4~5명씩 묶여와 교사 뒤로 끌려가면 어김없이 탕탕 하는 기분 나쁜 총소리가 뒤따라 사람들의 가슴을 얼어붙게 했다.(김계유, 「1948년 여순봉기」, 『역사비평』 겨울호, 283~284p)

실제로 이날 진압과정의 지나쳤다는 고백은 당시 진압군 측에서도 나온 바 있다. 백선엽 장군은 <실록 지리산>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지도자들의 성화로 조급하게 이뤄진 작전으로 시가지에 대한 무차별 포격이 이뤄져 많은 시민의 희생을 낳았다”고 일부나마 그 잘못을 시인했다. 따라서 영화 「애기섬」이 “국군의 반란군 진압을 근거도 없이 비방”(〈월간조선 2001년 10월호, 225p)했다는 <월간조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근거 없는 비방’이 아닐 수 없다. 아울러 <월간조선>은 여순사건 당시 조선일보에 실린 이런 기사를 가슴에 손을 얹고 읽어보기 바란다.

나는 상사의 명령으로 순천탈환전에 참가했을 때에도 솔직히 말하면 반군에게 아무런 증오감도 느끼지 않았다. …그러나 정작 순천시에 돌입하여 시가 대로상에 동지들의 시체가 늘비하게 널려 있는 것을 보고 나서는 병사들이나 나 자신이나 별안간에 불길 같은 증오감이 솟아올랐다. 하지만 순천을 완전 점령한 지 금에도 나는 ‘점령’이라는 말을 결코 쓰려고 하지 않는다. 동족간에 자국 내에서 일어난 반란을 진압하는데 점령이 무슨 점령이란 말인가? 나로서는 피눈물 나는 싸움이었다.(조선일보 1948. 11. 23. 「정비석 : 여순낙수(2)」)

(4) <월간조선>은 또 하나의 편향적인 왜곡보도를 하는데, 종군기자인 이경모의 사진 중에서 자신의 주장에 유리한 것만을 가져다가 소개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우종창 기자는 “여수시 탈환작전 때 종군기자단은 군을 따르고 있었다. 진 호남신문 사진부장 이경모 기자도 종군기자의 한 사람이었다”고 언급한 뒤 “그가 찍은 한 장의 사진, 아기를 업은 채 경찰관 남편의 시신을 찾고 있는 사진은 이 사건의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단정했다. <월간조선>은 실제로 이 사진을 기사 첫 페이지에 소개하기도 했다. 원래 이 사진의 출전은 이경모의 사진집 <격동기의 현장>인데, 문제의 사진은 이 책의 66쪽과 67쪽에 걸쳐 수록돼 있다.

그런데 이 사진 바로 뒤에는 또 다른 성격의 사진이 있거니와, “경찰은 반란군에 쫓겨 후퇴하면서 가둬두고 있던 좌익 사상범 용의자들을 무차별 학살하고 갔다. 서울대 법대에 다니다 고향에 내려와 은신하고 있던 김영배(당시 21세)가 그런 희생자 중의 하나였다. 그의 가족들이 광양과 순천의 경계에 있는 덕례리 골짜기에서 아들의 시신을 찾아내 거두고 있다”는 설명이 붙어 있는 사진이 바로 그것이다. 이와 관련, 김영배와 친구인 이경모는 자신의 회고문에서 “그는 어려서부터 서로 잘 아는 사이로 결코 공산당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당시의 대학생활에 환멸을 느끼고 고향에 내려와 공부를 하다가 대학 사정이 좀 안정되면 다시 상경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가 좌익 사상범 용의자로 광양경찰서에 예비 검속되어 반란군에 쫓겨 후퇴하던 경찰관에 학살당한 것 이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더욱이 이 원문 사진집의 뒤표지에는 한 사진작가의 이런 발문이 적혀 있다는 사실을 <월간조선>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경모의 사진들은 이미지의 힘을 통해 8·15 해방에서부터 여수·순천사건을 거쳐 6·25에 이르는, 한국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고리들을 우리의 눈앞에 또렷이 부각시켜 준다. 물론 사진이 항상 진실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사진이 진실을 말해주는 경우는 어떠한 편향된 의도나 오해에도 물들지 않고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할 때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경모의 사진들은 감동적이기도 하고, 섬뜩하기도 하며, 때로는 우울하기도 한 여러 장면들을 통해 역사적 진실을 편향 없이 보여준다.

결국 <월간조선>은 한 사진기자가 ‘편향 없이 객관적 입장을 견지한 채 기록한 역사적 진실’마저 놀랍게도 ‘편향되게 악용하는’ 모습을 노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월간조선>의 보도태도에서 두려움과 동정심이 동시에 느껴지는 대목이다.

(5) <월간조선>은 기사에서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 ‘공산주의자들이 남한의 5·10 총선거를 교란시키기 위해 일으킨 무장폭동’이라고 규정한 제주4·3사건을 이 영화에서는 4·3 항쟁이라고는 용어를 사용, 폭동을 의거 수준으로 미화시켰으며 여순 14연대 반란사건도 그냥 여순사건이라 호칭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월간조선>은 고등학교 교과서 수준의 고정된 역사인식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시비를 걸기 이전에 다음과 같은 ‘한탄’과 ‘분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전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이영일 소장은 “고등학교 국정 교과서에도 ‘여수순천10·19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다. 사회단체와 연구학자들이 50년 만에 어렵게 바로 세운 ‘여순사건’을 <월간조선>이 다시 ‘여순반란사건’으로 만들어 놓았다. <월간조선>은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 하고 있다”고 한탄했다. 지역사회의 민감한 정서 때문에 사건 발생 53년이 지난 올해 겨우 출범한 여순사건 유족회 여수지역 회장 김상태씨는 “유족의 아픔을 이해한다면 더 이상 색깔론으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라며 분노했다.(나권일, 『시사저널』, 2001. 10. 25.)

이 기사의 제목이 「10·19 여순 ‘영화불발’ 사건」이거니와, <월간조선>은 여순사건이 국사교과서 197쪽 도표에 분명히 ‘여수순천10·19사건’이라고 객관적 용어로 기술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할 것이다. 더욱이 <월간조선>이 ‘전가의 보도’로 삼고 있는 국사교과서를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전향적으로 개편하려던 시도를 ‘색깔 논쟁’을 동원해 좌절시킨 장본인이 정작 조선일보 아닌가. 애시당초 그들에게 교과서 타령을 할 자격이 없었다는 말이다.

문민정부 시절 조선일보가 불을 지르면서 ‘더러운 논쟁’(?)에 휘말려들었던 이른바 ‘국사교과서 준거 안 파동’의 전말은 이렇다.

1993년 9월 교육부는 제6차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국사교육 내용전개 준거안 연구위원회’(위원장 이준희 서울시립대 교수)를 구성하고 9명의 연구위원을 임명했다. 이들은 7개월에 걸친 공동연구를 통해 국사교과서 개편작업을 추진했으며, 마침내 1994년 3월 18일 심포지엄을 열고 연구위원 전원합의로 확정한 ‘준거안’을 발표했다. 특히 현대사 부분 준거안 중에서도 새롭게 보강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시선을 끌었다.

-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좌우합작 운동이 어떻게 전개됐는가를 기술하고, 9월 총파업과 10월항쟁에 대해 간략히 언급한다.
- 반민법 제정, 농지개혁 등 건국 초기의 활동과 제주4·3항쟁, 여순사건 등을 이해하게 한다.

이 준거안은 당시 역사학계의 학문적 업적과 수준을 객관적으로 반영한 것이었다. 이는 중앙일간지 중에 유일하게 심포지엄에 직접 참석한 문화일보 기자의 보도에서도 확인된다. 그가 쓴 기사의 제목은『국사교과서 민족사관 중심 개편 -일제잔재 청산·독립운동사 대폭 보강』이었다.¹⁾ 그러나 문제는 전혀 엉뚱한 곳에서 발생했다. 조선일보가 특유의 ‘마녀사냥’ 전술을 동원해 시비를 걸기 시작한 것이다. 1994년 3월 20자 조선일보 기사는 이렇게 시작된다.

“해방 직후 4·3 제주도 봉기, 여순반군투쟁, 영남봉기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투쟁 속에서 민중은 현명한 지혜를 발동하여 도시대중시위, 농촌봉기, 산악유격전, 파업농성 등 다양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86년 8월 18일자 서울대 자민투의 기관지 <해방선언>에 실린 기사 내용이다. 그 비슷한 시기에 서울대 곳곳에서는 여순반란과 4·3사건을 ‘반제반봉건민중항쟁’, 6·25한국전쟁을 ‘민족해방전쟁’이라고 주장하는 대자보가 나붙었다.

조선일보의 ‘눈부신 활약’(?)을 필두로 한 수구언론의 여론조성 속에서 준거안은 먹살잡이를 당하기 시작했다. 특히 조선일보는 준거안 전체의 맥락을 읽기보다는 ‘항쟁’이나 ‘사

1) 새로운 준거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 일제가 자행한 민족말살 정책, 일본어 사용 강제, 신사참배 강요, 일본식 성명으로의 개조, 황국신민화 정책 등을 설명하되, 이 과정에서 노골적인 친일세력이 형성되었음을 설명한다. • 일부 민족지도자들이 일제 말 일제의 황국신민화 운동과 침략전쟁에 협력하였음을 간략히 기술한다. • 광복 후 친일파 청산, 토지개혁, 통일국가 건설이 민족의 과제였음을 이해하게 한다. 이 부분이야말로 아마도 준거안 중에서 조선일보가 가장 두려워했던 내용이 아니었을까.

건'이나는 등 용어 문제를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졌다. 동시에 「주사파 등 80년대부터 새 작업」, 「북한 선전자료 복사판 우려」 등의 기사를 통한 전형적인 '색깔논쟁'을 유발해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었다. 세계일보 등 일부 언론이 “역사에서의 ‘고정관념’과 ‘이념편향’을 모두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학자가 만든 시안을 매카시즘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우려를 표명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연구위원 중 한 명이었던 정재정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교수는 1998년 발간한 저서 <한국의 논리 - 전환기의 역사교육과 일본인식>에서 “인신공격성의 비난과 사상공세적인 위협이 난무하였다. 학문과 교육을 논한다는 자세가 크게 흐트러졌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교과서 문제에 정치와 여론의 입김이 너무 직설적으로 파고들었다. 이 점은 앞으로 역사교육의 독자성과 중립성을 확보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적지 않은 명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토로했다.

‘마녀사냥’에도 논리가 있다고 한다. 그 중의 하나가 ‘빛과 어둠의 논리’이다. 그것은 우리가 흔히 쓰는 ‘흑백논리’라는 말과 상통하는데, 조선일보가 펼쳤던 색깔논쟁에서 다음과 같은 대목이 연상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악은 선의 존립을 위해서 그리고 악한 영혼은 마땅히 제거되어야 할 대상으로 간주했던 것이다. 이러한 논리와 정당화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은 선을 위해서 이단이나 마녀라는 악을 학살하는 일에 대해서 아무런 죄의식을 가지지 않았다. ...선악에 대한 기준이나 잣대도 없이 또는 터무니없는 잣대로 선악을 재단했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내용이 주로 자신을 위한 일로 채워져 있다. 그것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옹호하는데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기들을 비판하거나 순종하지 않는 무리는 이단으로 처형해 버리면서 자기들의 선악 논리를 정당화시켜 나갔던 것이다.(오성근, <마녀사냥의 역사>, 108~109p)

V. 에필로그 : 냉전에서 화해로 가는 길목의 3가지 삽화

(1) 손으로 꼽을 정도로 그 수가 적긴 하지만, 기자들 중에는 비교적 객관적으로 취재한 사람도 있다. 민주일보 기자 홍한표와 합동통신 기자 설국환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들의 글에는 기존의 일간지가 잘못 보도한 사실들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한 흔적이 역력하다. 계엄령이 내려진 극한적 상황에서 쓰여진 글임에도 불구하고 객관성을 유지하려 한 점이 돋보인다. 물론 이 글들은 여순사건이 마무리된 시점인 1948년 11, 12월 사이에 발표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차분해질 수 있었을 것이다.

특히 설국환은 취재를 하면서 비판적 시각을 잃지 않는다. 예컨대 순천에서 도망 나온

경찰관이 둘러대는 엉터리 증언을 간파한 뒤 현지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전달했다.

“사실 순천여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반군과 반도가 방화와 강도질을 자행하였고 강간과 시체파괴를 여지없이 하였을 뿐더러 살해에 있어서 경찰관의 전 가족을 몰살하였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나 현지의 사체에서 부녀자 노인의 시체는 거진 볼 수 없었을 뿐더러 시체에 손을 댄 흔적도 별로 보지 못하였다. 다만 수인의 경찰책임자와 국군장병의 가족을 살해하였다는 이야기를 당사자의 구전으로 들었을 뿐이며 이러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지금 적발에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에는 다소의 예누리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설국환, 『반란지구답사기』, <신천지> 1948년 11.12월호 합병호)

반군의 만행을 일방적으로 강조하였던 당시의 신문기사와는 상당히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냉철했던 설국환도 세월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던 모양이다. 냉전시대로 들어서면서 반공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 것이다. 그는 사건 당시 썼던 내용을 수정·보완한 글을 1965년 발표했다. 그런데 이 글에 「공산반도의 만행」이라는 부제가 붙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사건 당시 비교적 객관성을 갖춘 기사로 평가받았던 글이 반공적인 성격의 글로 둔갑해 버리고 말았다. 1960년대의 냉전적 사회분위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2) 금단의 성역에 간혀 있던 여순사건이 대명천지에 얼굴을 내밀었다. 198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여순사건 당시를 회고하거나 증언한 자료들이 갑자기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대체로 좌익계 빨치산 인사들의 자전적 증언, 진압을 주도했던 군경 수뇌부의 회고록, 지역민들의 체험이나 목격담 등이 주류를 이루었다. 좌익계와 현지 주민들의 증언이나 목격담이 간행될 수 있었던 것은 민주화운동의 성장과 관련이 깊을 것이다. 1987년 6월 항쟁을 승리로 이끈 시민들의 자신감이 출판계에 영향을 줌으로써 그 동안 금기시되었던 빨치산 관련 책들이 그야말로 봇물처럼 터져 나올 수 있었다.(홍영기, 앞의 글, 167p)

빨치산 수기물 등에 대한 언론과 출판의 뜨거운 반응은 대단했던 모양이다. 여순사건을 소재로 삼은 대하소설 『태백산맥』의 작가 조정래의 다음과 같은 토로에서 우리는 당시의 분위기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렇듯 어렵게 취재를 해가며 제1부 세 권을 단행본으로 내놓았다. 그리고 해가 바뀌어 6월 항쟁이 일어났고 뒤따라 ‘6·29항복’이 있었다. 세상이 조금 달라지면서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다. 다시 한 해가 바뀌면서 그 물결을 타고 빨치산 수기물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대중 잡지들도 서로 다투어 옛 빨치산들을 찾아내 기사를 써 내느라 정신없이 번잡을 피웠다. 약삭빠른 상업주의의 본색이었다.”(조정래, 『<태

백산맥> 창작보고서」, <작가세계> 95년 가을호, 109p)

(3)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에 따라 ‘온풍’은 ‘냉풍’으로 급변하였다. 1994년 북핵사찰 문제로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덩달아 여순사건을 다룬 대하소설 <태백산맥>이 수난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그해 4월 11일 8개의 극우단체가 작가 조정래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며, 때맞춰 <월간조선>도 5월호에 「소설 <태백산맥> 조정래의 현대사 왜곡」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색깔공세에 합세했다.

이러한 변화는 53년 전에 일어났던 여순사건이 과거의 사건으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시대와 대화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것은 동시에 여순사건 왜곡보도를 극복해야 할 과업이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여순사건의 진상과 민간인집단학살

이 영 일(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조사2국장) 1)

I. 여순사건의 영향²⁾

1948년 10월 19일 저녁, 전라남도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가 제주도 봉기를 진압하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봉기를 일으켰다. 제14연대 하사관 그룹은 제주도로 파병되어 동족을 죽일 수는 없다며 총구를 이승만 정권으로 돌렸다.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하는 신생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진지 두 달이 지났을 때였다. 14연대 하사관들이 주도한 봉기는 금세 일반 장병들의 동의를 얻으며, 다음날 여수와 순천을 점령했고 곧이어 전남 동부지역 수 개 군으로 번져 나갔다. 여수와 순천에서는 봉기군의 엄호 아래 인민위원회가 재건되었고 기초적인 '인민행정'이 실시되었지만, 진압군이 즉각 투입되어 23일은 순천이, 27일은 여수가 완전히 진압되었다. 하지만 여수와 순천이 진압되었다고 해서, 봉기군이 완전히 전멸한 것은 아니었다. 14연대 봉기군과 남조선노동당 등의 지방 좌익 세력 등은 부근의 산악지대인 지리산에 입산하여 빨치산투쟁을 계속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남쪽에 세워진 뒤 2개월 만에 일어난 여순사건은 1946년 미군정 하에서 일어났던 '대구 10월항쟁'이나 '제주 4·3항쟁'보다 훨씬 더 큰 정치·사회적 영향을 남긴 사회에 미쳤다. 특히 반이승만 정치세력에 대한 지배정권의 공세는 여순사건을 계기로 급속하게 강화되었고, 한반도 남쪽을 지배했던 미군의 철군정책도 변화되었다.

미군은 14연대 군인 봉기를 진압하는데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10월 20일 국방부장관과 군 수뇌부와 함께 긴급회의를 가진 미군은 광주에 토벌사령부(Task Force)를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봉기 진압을 위해 최신 군사 장비를 지원하는 한편 군사고문단원으로 하여금 작

1) 글쓴이 이영일은 (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 소장을 거쳐 현재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2국장(<http://www.jinsil.go.kr>)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전국의 민간인학살문제를 지원하고 있는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전국사회단체협의회'(www.genocide.or.kr)에서는 집행위원장으로, 국가폭력을 주 의제로 설정하고 있는 '동아시아평화인권국제학술회의 한국위원회'에서는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2) 김득중, 2002, 「여순사건과 민간인학살」, 『제6회 동아시아평화인권국제학술회의 여수대회 자료집』, 155~158쪽 참조.

전과 정보 분야에서 국군을 '지휘'했다.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봉기에 맞서 미군은 진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고, 그 덕분에 여순탈환작전은 빠른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³⁾ 14 연대 봉기와 뒤이은 빨치산투쟁으로 이승만정권의 위기가 눈앞에 펼쳐지자 미군 철수는 1949년 6월말에야 비로소 이루어졌다. 미군의 군사적 도움과 정치적 후원 없이는 이승만정권의 불안정성이 해소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도 분명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반대파를 관제 공산당으로 몰아 처벌할 수 있다는 소장파의 우려와 강력한 반대를 뿌리치고 여순사건 뒤 한 달 보름 만에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다. 1949년 1월부터 9월말까지 형무소에 수감된 사람들 중 80% 이상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되어 있었다.⁴⁾ 국가보안법은 현재까지도 남아있는 반공국가 유지의 가장 중요한 법적 제도이다.

한편 군대의 사회적 영향력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해졌다. 여순사건 진압에는 대북경계와 제주도 진압병력을 제외한 전 군대가 작전에 투입되었다. 이를 통해 연합작전의 경험을 익힌 국군은 국방경비대 시절 경찰에 억눌려 지내던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 경찰뿐만 아니라 전 사회에 압도적인 규정력을 갖게 되었다.⁵⁾ 군인들이 반역적 봉기를 일으켰다는 사실은 이승만정부가 즉각적으로 좌익 혐의 군인들을 숙청하고 군대를 반공 이데올로기로 무장시키는데 좋은 구실로 이용됐다. 숙군으로 처벌된 장병 숫자는 당시 전체 군 병력의 5%나 되었고⁶⁾, 이 공백은 해방 후 난립했던 청년 테러 단체의 젊은 조직원들이 대거 군에 들어옴으로써 메꾸어졌다. 이들은 1946년부터 반공투쟁의 최전선에서 활약하던 반공주의자들이었다. 이러한 인적 기반을 기초로 한국군은 한국전쟁을 거친 뒤에는 가장 강력한 반공 조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여순사건을 철저히 진압한 이승만정권은 국제공산주의세력과 북한의 침략성을 전면에서 내세우면서 11월 초에 극우인사들을 포함한 반이승만세력을 대대적으로 검거하는 한편 반공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한 주민통제체제를 하나씩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1949년에는 가구 구성원 외에 다른 사람이 집에 머물면 경찰서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는 유숙계(留宿

3) 여순봉기에 대한 논문을 최초로 발표했던 桶口雄一은 여순봉기가 미군에 반대했던 봉기임을 상기시키며, 여순봉기가 국민당을 지원했던 미국과 싸운 중국 인민의 투쟁 그리고 프랑스 제국주의와 싸운 베트남 독립해방투쟁과 공통의 과제를 가진 투쟁이었다고 평가했다(桶口雄一, 1967, 「麗水·順天蜂起」, 『朝鮮研究』62, 37~38쪽).

4) 『한성일보』 1949.12.4; 『국도신문』 1949.12.24.

5) 여순사건을 진압한 군 장교들-송요찬, 함병선, 백선엽, 김점곤, 박정희 등-은 이후 주요 요직을 거치며 한국사회의 중심인물로 활동했다(桶口雄一, 1976, 「麗水·順天における軍隊蜂起と民衆」, 『海峽』4, 社會評論社, 74쪽).

6) 1961년 5·16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는 여순사건 진압을 위한 토벌사령부의 일원으로 광주에서 활동했지만, 봉기가 진압된 직후에는 좌익혐의로 체포되어 사형을 언도 받았다. 그러나 군부내 좌익조직 명단을 제공한 것과 만주군 출신의 군 지도부와 제임스 하우스만(James Hausman)이라는 미 군사고문단원의 구명운동으로 생명을 건지게 되었다.

届)제도를 실시했고, 좌익들을 선도하고 회개시킨다는 명목으로 보도연맹(保導聯盟)을 조직했다. 1949년 1월에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호국군을 편성하여 4개 여단을 창설하였다. 각 학교에는 군 장교가 파견되어 준군사조직인 학도호국단을 만들었다. 이승만정권은 여순사건 이후 학계, 교육계, 언론, 공무원, 사법계 등에 대한 대대적인 좌익색출작업을 계속 벌여 혐의자들을 쫓아냈다.

이 같은 좌익색출과 치밀한 주민통제체제의 확립은 정권 존립의 위협에 처했던 이승만정권이 여순사건을 성공적으로 진압함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킨 자신감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언제 솟구칠지 모르는 봉기에 대한 사전예방책이었다.

이승만정부는 여수와 순천이 진압된 직후부터 반공체제의 확립을 더욱 더 적극적으로 진행시켰는데, 다음 해에 발생한 김구 암살과 국회프락치 사건으로 가장 강력했던 반이승만세력이 완전히 숙청되면서 이승만반공체제는 안정화의 길로 들어섰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이승만정권이 공산주의자 척결을 자신들의 목표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공산주의자들뿐만 아니라 이승만정권에 반대하는 세력 일체를 척결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런 입장은 여순사건 초기부터 적용되었다. 봉기에 협력했다는 혐의를 받은 관련자들이 모두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던 것은 아니었다.

여순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아무런 재판도 없이 단지 14연대 봉기에 협력했다는 혐의만으로 국민학교 운동장이나 해안 절벽, 산기슭에서 죽어갔다. 누가 죽었는지, 누가 죽었는지, 왜 죽어야만 하는지도 분명히 밝히지 못한 채 55년 동안이나 이 사실이 침묵 속에 묻혀 왔다는 사실은 민간인학살이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한국 사회와 현대사 속에 깊이 각인된 구조라는 점을 일깨워 준다. 아무리 죽은 사람들이 죄 없이 죽어갔다고 해도 '빨갱이'라는 죄로 죽어갔다면 어느 누구도 더 이상 입 밖에 낼 수 없는 얘기가 되었던 것이다. 심지어는 여수, 순천 지역 출신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사상이 의심스럽다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점에서 여순사건은 봉기의 측면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학살의 측면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이라 할 수 있는데, 학살은 봉기 실패에 따른 결과였다.

여순사건은 지역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14연대 봉기군이 들어왔을 때에는 우익 인사와 경찰들에 대한 처형이 이루어졌고, 진압작전 때에는 협력자를 색출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원한으로 협력자를 지목하여 처형하는 바람에 지역사회는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다. 나서면 다친다(=생명을 잃는다)는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진보적 사회운동의 싹은 잘려져 버리고 이데올로기에 일부러 냉담한 태도가 번졌다.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여순사건에 대한 신문 보도 등을 통해 한국 사회 전체가 유혈적

인 좌우갈등을 간접 경험하였다. 해방직후 나타났던 좌우 대립은 이제 일방적인 좌익세력 척결로 바뀌었고,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공포심과 적대감도 또한 높아져 갔다. 여순사건에서 나타난 유혈적 갈등과 민간인 학살의 양상은 2년 뒤 한국전쟁에서 전면화 되었다.

여순사건은 이승만정권의 반공국가형성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남한의 반공국가는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더욱 고정화되고 강화되었다. 여순사건과 이후의 한국전쟁은 남한사회가 작동하는 원형을 만들었던 것이다.

II. 여순사건의 진상

1. 당시 전남지방을 중심으로 한 남한사회의 사회적 배경

해방초기 전남의 대부분 지역은 46년 전반기부터 우익의 우세로 기울어지고 있었다. 미군의 진주로 인민위원회 조직이 해산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조선공산당이 불법화되면서 전남지역에서도 좌익세력이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전남의 동부지방은 해방초기부터 사회경제적인 조건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우익세력에 비해 좌익세력의 힘이 약한 지역이었고 이러한 영향으로 좌익세력이 별다른 활동을 벌일 수 없었기 때문에 미군에 의한 탄압 역시 미미한 정도였다. 따라서 동부지방에서는 좌우익간의 공존관계가 1948년 초까지 지속되고 있었다.

1948년 2월 6일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입북을 저지당함으로써 남한만의 단독선거가 거의 확실해지자 민족민주전선과 남로당은 2월 7일을 기해 유엔 한위반대 남조선총파업위원회의 명의로 전국적인 파업과 파괴, 시위, 동맹휴교 등을 선전 선동해나갔다.

경인지역 일대를 비롯하여 경남북, 전남북,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인 규모로 파업, 파괴, 시위, 맹휴 지역이 확대되어 갔으며 이에 따라 전국적인 교통과 통신망, 각 생산기관, 행정기능이 일시 마비되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 전남지방에서는 습격과 테러사건과 같은 큰 사건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5.10 제헌선거를 위한 유권자 및 입후보자 등록이 1948년 3월 30일부터 시작됨으로써 남로당을 중심으로 한 단선단정반대투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2월과 3월에 걸쳐 전개한 이른바 구국투쟁은 4월에 들어서는 선거를 강행하려는 미군정과 이승만 한민당의 우익세력에 정면으로 대항해서 실력으로 단독선거를 저지한다는 공격적 측면이 강조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한편 미군정의 경무부장 조병옥은 예상되는 남로당의 단독선거 파괴공작을 효과적으로

저지하기 위해 4월 중순 선거를 한달 가량 앞두고 향토방위를 견고히 하기 위해 외래의 불순분자 내지 모략선동의 여지를 봉쇄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각 경찰지서 혹은 동리 가로 단위로 경찰보조력으로써 향보단 설치를 지시했다.

남로당은 남북연석회의의 결정에 따라 남조선단선반대투쟁 전국위원회를 각 시군에 조직하고 선거저지공작을 2단계로 펼쳐나갔는데 선거 실시 전까지는 선거를 파탄시키는 투쟁을, 선거가 실시되면서부터는 무효화투쟁을 전개해나갔다.

본격적인 5.10선거 저지공작은 김구, 김규식 등 단선을 반대하는 우익, 중도계 정당 사회단체들이 남북연석회의에서 돌아온 직후 김구, 김규식 명의로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5월 6일 이후부터 시작되었다. 남로당은 5월 7일을 전후해서 전국적인 파업, 파괴, 맹휴, 시위, 뼈라 살포, 경찰서 습격, 투표소습격, 우익요인 및 청년단 테러 등을 통해 격렬한 선거저지투쟁을 선전 선동해나갔다.

한편 전남동부지방에서는 구국투쟁과정의 구레, 순천을 포함한 4개군에서 5.10선거 저지투쟁이 발생하였다. 즉 1948년 3.1절을 계기로 구레의 경찰지서 및 우익습격사건, 순천의 시위군중과 우익학생과의 충돌사건을 계기로 전남동부지방의 군중들은 점차 급진화되고 있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5월 10일 제헌 선거를 전후로 해서 더욱 촉진되고 있었다. 5월에 들어 3.1절에 격렬한 대규모 시위양상을 보인 순천은 우익테러로까지 발전하고 있었으며 1946년 가을항쟁과 1948년 구국투쟁과정에서 거의 아무런 군중의 폭력사건이 나타나지 않았던 광양과 여수에서도 경찰지서와 투표소 습격사건까지 발생하였다.

고흥에서 48년 3월 29일 새벽 3시에 안재정(安在貞), 고흥남(高興南), 이모(李某) 등 3명이 대서면 지서를 습격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들은 9월 3일 수도청 경찰청에 의해 체포되었다.

그런가 하면 해외에서 돌아온 귀환동포들의 급작스런 증가와 미군정의 미곡 수집령으로 인해 군정당국에 대한 원성이 높아가고 있었다.

여수에서는 48년 7월 하순부터 8월 상순까지의 2기분 배급을 주지 않아서 8만 여수읍민의 원성이 높은 실정이었다. 식량영단 당국은 2기분 배급식량을 도정하여 분배하여야 하나 도정공장에서 이윤이 박하다 하여 도정을 하지 않아 여수 군민의 생계가 어려운 실정에 있었다. 이러한 행정당국의 실정과 더불어 48년 7월의 수해로 각 지방에 이재민들이 무더기로 발생하여 많은 재산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순천인근의 주민들은 동정을 요구하고자 救濟會를 조직하고 구제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단정단선반대투쟁이 절정을 이루었던 데다가 춘궁기가 지 겹쳤던 1948년 5월초에 광주의 4연대 1개 대대를 기간으로 하는 14연대가 여수에 창설

되었다는 점이다.

미군정기를 거쳐 1948년 8월 15일 역사적인 대한민국의 수립·선포로 한민족은 비록 반쪽이나마 일제 식민통치와 미군정 통치로부터 벗어나 정치적 독립을 달성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승만을 수반으로 하는 제1공화국의 출범은 결코 순탄한 것이 아니었다.

이승만의 정치적 지지 기반은 매우 취약했다. 그것은 지주, 보수적 언론인, 지식인을 주축으로 한 한민당, 경제를 지배하고 있던 강력한 관료체제, 단결심이 강하고 외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좌익을 제압하는 데 있어 ‘선봉장’인 경찰조직, 독촉, 대동청, 서북청 등의 청년단체, 농촌지주층, 엘리트층 중심으로 한 독촉국민회 등의 정치·청년, 사회단체 등이었다.⁷⁾

그러나 제1공화국에 가장 위협적인 세력은 공산주의자들이었다. 경비대내에는 남로당원 및 그 동조세력이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었으며 제주도에서는 아직까지 폭동이 진행 중에 있었고 미군정기의 ‘가을폭동’지역인 경상도와 전라도 지방에는 좌익이 잠재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해방이후 절정에 이른 민중들의 민생(民生)문제였다.

2. 국방경비대의 성격과 위상⁸⁾

1946년 1월 15일 제1연대 창설로부터 만들어진 국방경비대는 미군정의 대한정책이 반영된 결과로 만들어졌다. 미군정에서는 원래 장래 수립될 국가의 군대 창설을 계획하였으나, 소련의 반대를 예상한 미국의 제한으로 그 성격이 ‘경찰예비대’로 약화된 국방경비대를 창설하였다. 국방경비대를 창설하면서 미군정에서는 특별한 제한이나 사상검열이 없이 ‘불편부당·정치적 중립’을 내세우며 국방경비대원들을 모집하였다.⁹⁾ 이 때문에 국방경비대에는 다양한 세력들이 참여하였는데, 일제시기 일본군·만주군·중국군 등에서 군대 경력을 쌓았던 세력들이 참여하였고, 미군이 진주하기 전부터 사설군사단체에서 조직·활동했던 세력들도 참여하였다. 미군정은 국군준비대·학병동맹 등과 같이 해산명령을 거부했던 사설 군사단체 조직들을 군정 경찰을 동원하여 강제로 해산시켰고, 다른 한편으로 이들을 국방경비대 내부에 편입시켰다.

7) 김정원. 『분단한국사』, 동녘출판사, 1985, 143쪽, 이기하, 『한국정당발달사』, 의회정치사, 1962, 54-80쪽, G. Henkerson, 『Korea : The politics of the Vortex』, Havard Univ. press. 1968, 196쪽.

8) 노영기, 2000, 『여순사건과 군』, 『여순사건 실태조사보고서 3집』, 198~199쪽 참조.

9) 국방경비대 창설 당시 국방사령부 고문이었던 이용준은 신원조사를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미군정 관리는 군내 사찰기구의 활용 등을 이유로 내세웠고, 그 뒤의 과정에서 볼 때 미군정 관리의 말이 실행되었다.

한편 국방경비대는 만들어질 때부터 향토연대로 편성되었다. 미군정에서는 국방경비대 창설 계획인 ‘뱀부계획(Bamboo Plan)’을 수립하여 각 도에 1개 연대씩 편성하였다. 각 연대의 장교들은 통위부와 국방경비대 총사령부의 통제를 받았지만, 각 연대 사병들의 모집과 훈련 그리고 예산 운영과 활동은 지역 차원에서 해결하였다.

다양한 세력의 국방경비대 참여와 향토연대, 국방경비대는 국가가 수립되면 만들어질 ‘군대의 주역’이라는 의식 등은 국방경비대의 특성이 되었다. 특히 향토연대와 ‘군대의 주역’이라는 의식은 국방경비대가 당시 민중들에게 친일집단으로 지탄받고 있었던 경찰과 다른 성격의 집단으로 규정할 수 있는 요인이었다. 경찰은 “국방경비대는 빨갱이 소굴”이라고 비난하였고, 국방경비대는 경찰을 “일본 놈 앞잡이 하던 사람들”이라고 맞섰다.¹⁰⁾ 경찰은 미군정에 국방경비대를 비방하는 보고를 제출하였다.¹¹⁾ 이렇듯 국방경비대는 경찰과 극우 성향의 우익 단체 등과 미군정기 내내 끊임없이 대립하였다.¹²⁾

3. 봉기의 배경과 전개 과정¹³⁾

남한만의 단선·단정이 추진되면서 각지에서는 여기에 반대하는 투쟁이 전개되었다. 특히 1948년 4월 3일 제주도에서는 단선·단정에 반대하는 무장봉기가 일어났다. 미군정은 4·3 항쟁 초기에 각도에서 경찰을 차출, 경찰을 동원한 진압작전을 전개하였다. 미군정은 4·3 항쟁 초기에 경찰의 힘만으로 진압이 되지 않자 진압작전에 국방경비대를 동원하였다. 경찰은 해안 부근 마을의 치안활동을 담당한 반면, 국방경비대는 빨치산 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¹⁴⁾

이렇듯 국방경비대의 토벌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을 때, 이에 대한 저항이 제주도 모슬포 부근에서 발생하였다. 미군정은 이 같은 사건이 일회성에 그칠 것으로 기대하였다.¹⁵⁾

10) 짐 하우스만·정일화 공저, 1995, 『한국의 대통령을 움직인 미군대위』 한국문원, 138쪽.

11) 미군 방첩대는 경찰이 국방경비대 관련 보고를 어떻게 왜곡하는지를 각 지방의 방첩대 지부에 주지시키기 위하여, 광주의 제4연대에 관한 경찰의 의도적 왜곡보고 사례 7가지를 제시하였다. 이 때문에 미군 방첩대는 경찰과 국방경비대 관련 개별보고는 그 정보의 원천을 추적해야 하며, 서로를 비난하려는 것이지 파악해야 한다고 각 지부에 지시하였다. *Weekly Information Bulletin(이하 Bulletin)*, #12, 1947. 7. 10.

12) 국방경비대 제1연대 연대장 베로스(Russel D.Barrows)중령은 국방경비대와 경찰의 대립이 “일주일에 한 번꼴(about once a week)”로 발생한다고 말하였다. United States Army Forces, Korea Counter Intelligence Corps Seoul District Offices Apo 235, *Korean Constabulary, Conflict Between Korea Police and Summary of Information*, 7 Jan. 1947.

13) 노영기, 2000, 「여순사건과 군」, 『여순사건 실태조사보고서 3집』, 202~199쪽 참조.

14) 『조선일보』 1948. 6. 4 ; 『서울신문』 1948. 6. 4(국사편찬위원회, 『자료대한민국사』 7권, 248쪽).

그러나 미군정의 예상과는 달리 1948년 6월 18일 초토화 작전을 지휘했던 제9연대장 박진경이 암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 제9연대원 탈영사건과 함께 동족을 살상하는 작전에 반대하는 국방경비대원들의 저항이었다.

박진경 암살사건을 계기로 전군 차원의 사상검열(Screening)이 이루어졌다.¹⁶⁾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은 이전부터 진행되었던 숙군의 합법성이 부여된 계기였다. 신임 국방장관에 취임한 이범석은 공공연하게 북진통일을 표방하는 한편,¹⁷⁾ 다른 한편으로 공산주의자들의 제거를 명분으로 전국 각지에서 사상검열과 숙군이 이루어졌다.¹⁸⁾ 이렇듯 여순사건이 일어난 뒤 미군 보고서에는 다음의 논평이 실려 있다.

수개월 동안 경비대는 주로 경찰에 의해 공산주의자들의 은신처로 비난받아왔다. ... 경비대 장교들은 열심히 경비대 내에서 발견된 공산주의자들을 적발, 제거해왔다. 그들의 노력이 성공했기 때문에 적어도 6개 연대가 폭도들과 접촉하였지만, 대규모의 반군이 순천에 도착했을 때에 1개 중대만이 반군으로 탈영하였다. 공산주의자들이 경비대 내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대한민국에 위협이 되거나 경비대가 커다란 의심을 받을 만큼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 반란의 발발과 진압에서 알 수 있다.¹⁹⁾

위의 보고에 나타나듯 숙군은 각 연대별로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²⁰⁾ 그리고 숙군의 여파는 제14연대의 모부대인 광주의 제4연대까지 미쳤다. 그리고 제4연대의 숙군은 제14연대까지 이르게 되었다.

제4연대 출신으로 제14연대 창설 요원이며 이등중사로 제14연대 남로당 세포 조직 제

15) *G-2 Weekly, #141, 1948. 5. 21~1948. 5. 28.*

16) 1948년 7월 9일부터 16일까지의 미군의 주간 동향보고 중 남한의 무장력에 관한 항목에는 “사상검열은 계속되고 있다(Screening continues)”는 내용이 처음 나오고 있다. *G-2 Weekly, #148, 1948. 7. 9~7. 16.*

17) 1948년 9월 8일 이범석 국무총리는 미국 『성조』지와의 인터뷰에서 정치적 수단으로 실패하면 전쟁에 의하여 남북통일을 완성할 것이라고 말하여 무력에 의한 북진통일을 내비쳤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공보처장 김동성은 정부 일각에서 표명된 북진 무력통일은 정부의 공식 입장과는 다르다고 해명하였다. 『동아일보』 1948. 9. 11. ; 『동아일보』 1948. 9. 18.

18) 이외에도 1948년 8월 1일 이후 지문채취작업(fingerprinting)은 진행되며, 이 작업은 경찰의 협조 아래 이루어질 계획이었다. 9월 초순까지 대략 절반 정도의 국방경비대원 지문채취가 완료되었다. CG, USAMGIK, *Current Constabulary Affairs, 1948. 7. 20* ; C.G, PMAG, *PMAG Weekly Activites, 1948. 9. 13.*

19) *G-2 Weekly # 163, 10. 22-10. 29.*

20) 당시 미군 고문이었던 하우스만의 에피소드는 숙군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음을 시사해준다. 하우스만은 여수사건 이전 어느 날 일선부대 방문의 애로를 백선엽 정보국장에게 토로했다. 그러자 백선엽은 정보국 명의의 쇄매달을 주었다고 한다. 그 이후 어느 부대를 방문할 때 이 매달은 조선시대의 마패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 하우스만은 이 사례를 이야기하며 정보국은 그렇게 무서울 때였다고 회고했다. 하우스만·정일화 공저, 앞의 책, 187~188쪽.

14연대 독립대대책임자 재정책이었던 김영만이 10월 11일 체포되었다. 김영만은 4연대 근무할 당시 그의 세포 조직원이었던 제4연대원의 밀고로 체포되었다. 김영만의 체포 계획을 미리 알았던 제14연대 남로당 조직에서는 김영만이 체포당하는 것으로 조직을 지켜낼 것을 결정하였다. 김영만을 도피시킨다면 그에 따른 조직 수사의 확대를 우려하여 김영만의 체포로 조직 보위를 꾀했다고 한다.²¹⁾ 이렇듯 숙군의 여파로 제14연대 남로당 조직의 위기감은 높아지고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 제주도 파병의 문제가 놓여 있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제14연대 내의 남로당에서는 숙군의 위협과 제주도 파병이라는 객관적 조건에서 적극 대응하였고, 결국 무장봉기의 길로 나가게 되었다.²²⁾ 그리고 경찰에 대항하며 동족상잔인 제주도 파병에 반대한다는 명분이 제시되었다.

제14연대의 좌익들은 10월 들어 동요하고 있었다. ‘제주4·3폭동’후 제11연대장 암살사건을 계기로 미군정은 숙군을 시작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영향은 제14연대에도 파급되어 소위 ‘혁명적용군사건’²³⁾에 연대장 오동기 소령이 연루되어 구속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숙군의 와중에서 10월 15~16일경 제14연대에 여수우편국 일반전보로 10월 19일 20시에 제주도로 출동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다.²⁴⁾ 갑작스런 제주도 출동명령은 좌익들에게 ‘동족상잔’과 ‘반란’중 양자 선택을 강요했다. 한편 제14연대 내에는 제주도 폭동 진압을 위해 신식무기(M1, 카빈, 기관총)와 풍부한 탄약이 지급되었으며, 반납해야 할 구식무기(일제식 99식 소총)가 병기고에 그대로 남아있어 연대내 좌익들의 반란을 촉진시켰다.²⁵⁾

1948년 10월 19일 새벽 전남 여수 신월리 제14연대 병영에서 여순사건이 시작되었다. 지창수 상사의 선동 연설로 시작된 봉기는 순식간에 2,000여명 이상의 병사들이 합세하였다. 제주도 파병반대와 경찰 처단을 목표로 시작된 제14연대 봉기에 처음 참여한 인원은 보고자에 따라 각기 다르게 보고되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1) 김영만의 증언.

22) 당시 남로당에서 이 계획을 사전에 알았는가 논란거리이다. 최근 한 증언에 비추어 볼 때 남로당 전남 도당에서는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두고서 심사숙고 할 만큼의 여유가 없었던 실정이었다. 즉 10월 11일 이후부터 제14연대 내에서는 심각하게 무장봉기를 고려했을 것이나, 이 결정에 대해서 전남 도당은 정부의 탄압으로 장항에 피신한 상태에서 어떠한 결정도 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

23) 『한국전쟁사』, 485쪽, 육군본부, 『공비토벌사』18쪽, J.R. Merrill, 『Internal Warfare in Korea, 1948-1950』, (Univ. of Delaware, PH, D. 1982), 210쪽.

24) 『여수·여천항토지』, 307쪽 따라서 군대기밀이 외부로 노출되어 연대내의 좌익과 여수읍내의 남로당 계가 사전에 반란을 모의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았다. 그 당시 왜 ‘일반전보’로 제주도 출동명령이 하달되었는지 그 이유는 분명치 않다.

25) J. Reed, 『The Turth about the Yosu Incident』, 2쪽 J. R. Merrill. 앞의 책, 214쪽에서 재인용.

〈표〉 제14연대 여순사건 참가 인원

보 고 자	보 고 일 자	참 여 인 원	비 고
G-2 일일보고	1948. 10. 21.	24,00여명	
김백일	1848. 10. 21.	800~2,000명	
Joint Weeka		2,400명	
주한미군 제24군단	1948. 11. 10.	3,000여명	
이범석	미 상	3,708명	사살 : 852명, 포로 : 2,856명, 탈출 : 수백명

※ 출 전

1. G-2 Periodic Report
2. [동광일보 호외] 1948. 10. 21.
3. 『주한미대사관 보고서』
4. G-3 Section, XXIV Corps, History of the Rebellion of the Korean Constabulary at YEOSU and DAEGU, 1948. 11. 10.
5. Report on the Internal Insurrection After April, 1948, made by Minster of National Defense, Lee Bum Suk

위의 표에 나타나듯이 보고자와 보고시기에 따라 제14연대 봉기에 참여한 인원이 각기 다르다. 보고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10월 19일 최초의 제14연대 봉기에는 최소 2,000여명의 병사들이 참여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 숫자는 제14연대가 완전 편성되었을 때인 1948년 10월 초순 병력이 약 3,000여명이었음을 감안하면 부대원의 2/3 정도가 참가한 것이었다.

이렇게 제14연대 병사들의 다수가 봉기에 적극 참여한 이유는 무엇일까? 지창수의 연설과 [제주도 출동거부 병사위원회]의 성명, 그리고 여순사건 직후 발표된 현지 사령부의 발표문에는 이들이 봉기하며 적극 참여하게 된 동기가 잘 나타나 있다.

제14연대 인사계 선임하사관 지창수는 여수경찰과 일본군이 여수에 상륙하여 공격하려 하며 동족상잔의 제주도 출동에 반대하고, 남북통일의 주장하는 요지의 연설로 병사들을 선동하였다.²⁶⁾ 10월 20일 [제주도 출동거부 병사위원회] 명의의 성명서에는, 제주도 애국인민을 무차별 학살하기 위한 제주도 출동에 반대하며 조선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쫓기하며, 주한미군 철수와 조국통일, 조선인민공화국지지 등을 봉기의 목표로 내세웠다.²⁷⁾

26) 지창수는 “지금 경찰이 우리한테 쳐들어온다. 경찰을 타도하자, 우리는 동족상잔의 제주도 출동을 반대한다. 우리는 조국의 염원인 남북통일을 원한다. 지금 북조선인민군이 남조선해방을 위하여 38선을 넘어 남진 중에 있다. 우리는 북상하는 인민해방군으로 행동한다”고 선동하였다. 전사편찬위원회, 1967, 앞의 책, 1967, 452~453쪽 ; [해익, 여수재성동문회 회지] 2호(여수지역사회연구소, 1998, 앞의 책, 153쪽에서 재인용).

27) [여수인민보] 1948. 10. 2(여수지역사회연구소, 1998, 앞의 자료집, 153~154쪽에서 재인용).

제14연대의 봉기는 순식간에 인근의 전남 동부 지역으로 확산되었다.²⁸⁾ 그러나 여순사건은 남로당이 계획한 것도 아니고 조직적으로 준비도 되지 않은 봉기였다. 당은 미리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도할 수 없었다. 해방 후에 일어난 주요한 대중투쟁(1946년 '대구10월항쟁', 1948년 '제주4·3항쟁'과 여순사건) 가운데 그 어느 것도 중앙당이 조직적 또는 계획적으로 시작한 봉기는 아니었다. 이 점에서 대중운동을 지도·지휘한다고 자임했던 남조선노동당(1946년 11월 이전까지는 조선공산당)이 대중운동에서 수행했던 역할은 사실과 엄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당이 주도하는 조직적 봉기가 더 중요하고 '현실적' 전망이 있는 투쟁이며 운동은 당연히 당이 주도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면, 여순사건은 무척이나 '비현실적인' 봉기라고 생각하기 쉽다. 이승만정부는 이 봉기를 '폭동'이나 '반란'으로 불렀는데, 북한 또한 여순봉기가 일어났을 때 이를 단순한 폭동으로 여기고 즉각적인 지원을 하지 않았다.²⁹⁾

그런데 여순사건은 14연대 하사관 그룹에 의해 '엥터리'로 '때 이르게' 시작되었지만, 시민들이 대거 이 봉기에 합류하게 됨으로써 이 봉기는 단순한 '군부 쿠데타'가 아니라 대중봉기로 발전하게 되었던 것이고, 이런 맥락에서 여순사건은 해방공간에서 발생한 마지막 대중투쟁이라는 중요한 위상을 갖는다. 이후에는 여순사건처럼 광범한 대중투쟁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

이 확산은 다음의 과정을 거치면서 진행되었다. 제14연대 병영에서 봉기한 제14연대 병사들은 곧 바로 여수 경찰과 철도경찰을 격퇴하고 여수를 점령하였다. 그 뒤 김지회의³⁰⁾

28) 순식간에 동부지역으로 확산된 과정은 제14연대 주력 부대의 행로와 비슷하다. 물론 반군이 들어가기 전에 지방 좌익들이 먼저 호응하여 봉기한 경우도 있으나 대개는 제14연대의 행로와 비슷하게 진행되었다. 즉 한편으로 여수→순천→보성·곡성·구례→지리산의 행로와, 다른 한편으로 여수→광양→백운산의 행로이다. 이들 지역은 여수 주변 지역이면서 또한 제14연대 관할지역이기도 하다. 즉 제14연대 병사들의 고향이기도 하였다. 결국 향토연대의 특성이 일정하게 영향을 미친 행로일 가능성이 있다.

29) 여순사건을 하나의 운동이라기보다는 폭동으로 바라보는 것은 브루스 커밍스도 똑같다. 커밍스는 여순사건을 해방 후의 '좌절된 정치'에서 기인하는 '막판의 저항'으로 보고 있으며, 사건의 진행 또한 '차주전자 속의 태풍'에 불과했다고 말하고 있다(Bruce Cumings, 1990,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 2*, Princeton Univ. Press, pp.259~267). 이 같은 관점은 봉기의 직접적인 원인과 하사관 세력이 주체가 된 초기 상황에는 주목하지만, 군인'봉기'가 대중들이 합류하면서 '항쟁'으로 성격이 변화하는 점과 이에 따른 민간인학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주의를 기울인다.

30) 김지회 - 10505. 함남태생. 함흥농고 졸업. 육사 3기. 1947년 4월 19일 : 제4연대, 1948년 6월 1일 : 제14연대, 1949년 5월 31일 : 불명예 파면, 여순사건 이후 빨치산의 지도자로 활동하다 1949년 5월 사살. 『임관순 대장(10505)』; 『자력표(10505)』. 김지회는 당시 남로당의 중앙당에서 관리하는 조직원이었던 것 같다. 여순사건 발발직후 김지회는 제14연대 사병들의 감시 받았다고 한다. 김영만도 그의 정체를 알지 못했고 제14연대 남로당 세포모임에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김영만의 증언.

지휘 아래 주력이라 할 수 있는 600여명의 병사들이 여수역에서 5량의 기차와 차량을 징발하여 10월 20일 오전 9시 20분 순천으로 이동하였다. 10월 20일 아침 순천에 도착한 반군은 순천에서 경찰과 교전한 뒤 이날 오후 순천을 점령하였다. 이 때 순천에 파견되었던 제14연대 2개 중대는 선임중대장인 홍순석의 지휘 아래 반군에 합류하였다. 순천을 점령한 뒤 1,000여명 정도의 반군은 남원을 향해 북진하였다. 10월 20일 오후에 순천 북방으로 진진한 반군은 이곳에서 처음으로 정부군의 저지를 받았다. 정부군은 이정일이 지휘하는 제4연대였다. 이곳에서 2차례의 교전 끝에 정부군의 저지선을 돌파하지 못한 반군은 다시 순천 방면으로 퇴각하였다. 순천으로 돌아온 반군은 김지회의 지휘 아래 순천 주변의 곡성, 보성, 구례 등지로 흩어졌다. 10월 21일 이후 정부군의 진압작전이 강력하게 전개되자 이들은 지리산으로 입산하여 빨치산 투쟁을 전개하였다. 한편 순천 방면으로 이동하지 않고 여수에 남아 있던 제14연대 병사들의 일부는 10월 21일 광양 방면으로 이동하였다. 이들은 진압부대가 제2차로 여수를 공격하기 앞선 10월 24일 밤 5시경이 되자 백운산과 벌교 방면으로 퇴각하였다.³¹⁾ 제14연대의 주력이 떠나간 상태에서 여수지역에는 지역민들만 남아 있었다.

여순사건은 5·10사건 이전에 발생한 제주 4·3항쟁과는 또 달리, 전남 동부지방이 순식간에 ‘인민공화국 지지’를 외치는 좌익 손에 넘어갔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었다.³²⁾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를 즉각 반란으로 규정하고 진압에 나섰다.

그런데, 여순사건의 원인과 성격을 놓고 당시 정부와 현지 사령부는 서로 다르게 발표하였다. 이범석 국무총리는 사건 발생 직후 이 사건이 극우주의자와 공산주의자의 연합으로 발생한 성질의 반란으로 규정하였다.³³⁾ 당시 전투사령부 보도부에서는 여순사건의 발생 원인으로 반경감정을 가진 하사관들과 연대 내의 좌익사상을 가진 간부들의 선동으로 일어났으며, 그 목적지는 구례경찰서였고, 지방 좌익과는 어떠한 연락도 없었다고 발표하였다.³⁴⁾ 이렇듯 정부 당국과 현지 사령부의 발표가 다른 이유는, 정부는 이 사건을 정치적 목적에서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현지 사령부는 현지에서 잡힌 포로들의 심문을 통해서 얻어진 정보에 근거한 발표였기 때문이었다.

정부에서는 10월 21일 광주에 반군토벌 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사령관에 육군 총사령

31) 김계유, 「1948년 여순봉기」, 『역사비평』 1991년 겨울호, 277쪽.

32) 서중석, 1996,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 2 - 1948~1950 민주주의·민족주의 그리고 반공주의』, 역사비평사, 168쪽.

33) AMERICAN MISSION IN KOREA, *Report on the Internal Insurrection After April, 1948, made by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Lee Bum Suk.*

34) 『자유신문』 1948. 11. 8.

관 송호성 준장을 임명하였고, 송호성은 특별기편으로 10월 21일 하오 1시 광주에 도착하였다.³⁵⁾ 10월 22일 이범석은 ‘반란군에 고한다’는 포고문을 발표하였다.

10월 20일 진압작전이 시작될 때는 3개 연대를 동원한 진압작전을 수립하였다.³⁶⁾ 10월 21일부터 시작된 정부군의 진압작전에는 총 5개 연대의 10개 대대와 1개 비행대(경비행기 10대), 해안경비대 함정 등이 동원되었다.³⁷⁾ 이 여순사건 진압작전에는 총 140명의 장교와 4,732명의 군인들이 참가하였다. 그러나 신무기로 무장하고 잘 훈련된 반군의 저항으로 정부군의 진압작전은 처음부터 쉽지 않았고,³⁸⁾ 10월 21일 진압작전은 재조정되었다.

광주의 제4연대는 서쪽으로부터 여수를 포위하며, 전주의 제3연대는 대전의 제2연대와 협력하여 북쪽으로부터 여수를 포위하며, 군산의 제12연대는 여수의 북서쪽을 향해 군산을 출발하며, 부산의 제5연대는 바다로부터 포위를 유지하며, 대구의 제6연대는 여수의 북쪽을 산맥을 횡단하며, 마산의 제15연대는 여수의 동쪽으로 진격하는 것이었다.³⁹⁾ 10월 22일 국방부 총참모장 채병덕은 기자회견에서 광주와 마산으로부터 막대한 병력을 동원하였고, 순천과 여수반도에서 압박 섬멸전의 총공격이 시작되었음을 밝혔다.⁴⁰⁾ 정부군의 진압작전은 여수를 중심으로 사방을 포위하여 반군을 섬멸하는 압박 섬멸전이었다.

10월 27일 정부군은 여수를 탈환함으로써 여수순천지역의 진압작전은 마무리되었고, 이때부터 정부군의 작전은 남원, 구례, 백운산 그리고 지리산 지역의 반군들을 소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한편 정부군의 진압작전에는 주한 미군의 지원이 절대적인 역할을 하였다. 주한 미군 제24군단 G-2는 1948년 10월 20일 오전 9시 10분에 속보(flash report)를 받았고, 10시 15분에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방군사고문단(Provisional Military Advisory Group)으로부터 여순사건을 확인하는 보고를 받았다. 그리고 이날 상오 주한미군사고문단장인 로버츠 준장 사무실에서 로버츠, 이범석, 송호성, 하우스만, 몇몇 참모들이 모여 회의를 가졌다.⁴¹⁾ 이 회의에서는 전투사령부의 설치를 결정하였다. 그 뒤 리드와 하우스만을 비롯한 미

35) 『동광신문』 1948. 10. 23. 이외에도 주한미군사고문단의 하우스만 대위(임시군사고문단 G-3 고문관), 리드 대위(임시군사고문단 G-2 고문관), 트리드웰 대위(Treadwell, 제5여단 고문관), 프레이 대위(Frye, 제5여단 수석고문관), 채병덕 대령(국방부 총참모장), 정일권(육군 참모장), 백선엽 대령(육군 정보국장), 고중위(인용자 주: 고정훈으로 여겨짐. 육군 정보장교) 등이 광주에 도착하였다.

36) [자유신문] 1948. 10. 22. (『자료대한민국사』 8권, 792~794쪽.)

37) 전사편찬위원회, 1967, 앞의 책, 470쪽.

38) 채병덕은 10월 22일 기자회견에서 발표가 늦은 이유는 갑자기 일어났고 내부적으로 급습을 당하고 적의 병력이 상상보다 컸기 때문에 많은 부대를 집중시킬 필요와 작전의 비밀로 발표가 늦었다고 말하였다. [서울신문] 1948. 10. 23. (『자료대한민국사』 8권, 820쪽.)

39) AMERICAN MISSION IN KOREA, *Report on the Insurrections After April 1948, made by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Lee Bum Suk*, 1948. 12. 14.

40) [서울신문] 1948. 10. 23(국사편찬위원회, 『자료대한민국사』 8권, 820쪽).

군 고문관들은 정부군의 진압작전에 필요한 모든 역할을 수행하였다.⁴²⁾ 조기진압이 실패로 돌아가자 10월 22일 풀러 대령을 추가 파견하는 등 진압작전을 적극 지원했다. 리드와 하우스만은 사령부에 배속됐는데, 이들 외에도 각 연대에 파견된 미군 고문관들은 진압작전에 적극 개입했다. 제4연대 고문관 모어 중위와 그린바움 중위는 제4연대 1개 중대를 순천의 동강에 배치했고, 한국군 지휘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제4연대를 정비해 진압군으로 투입하거나 제5연대의 상륙작전에서 김종원을 비롯한 한국군 지휘관들이 무리한 상륙작전을 계획하자 이를 제지하는⁴³⁾ 등의 예에서와 같이 고문의 역할을 넘어서 직접 진압작전에 개입했다.⁴⁴⁾ 당시 진압작전에 참여했던 하우스만의 회고처럼, 미군은 탄약·무기·식량을 비롯해 통신수단까지 제공하였다. 결국 거의 용병과 다름없는 미군의 원조가 없었다면 여순사건은 더욱 더 심각해졌을 것이다.⁴⁵⁾

4. 진압에 참여한 주요 지휘관들의 성향⁴⁶⁾

진압에 참여한 주요 지휘관(연대장급 이상)들은 송호성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일본군이나 만주군 출신이었다. 특히, 제5여단장 김백일·제3연대 부연대장 송석하·제15연대장 최남근·육군본부 정보국장 백선엽 등은 모두 만주 봉천군관학교를 졸업했으며⁴⁷⁾ 모두는 일제가 1939년 8월에 항일빨치산을 토벌하기 위해 창설한 간도특설경비대에⁴⁸⁾ 소속된 한인 군관 출신이었다.⁴⁹⁾ 이들 중에서 제15연대장 최남근은 다른 장교들과는 달리 중도적인 입장에서

41) 하우스만, 앞의 책, 171~172쪽. 백선엽은 이와 다르게 회고하고 있다. 장소는 국방부에서 긴급 대책회의가 있었고, 이범석, 채병덕, 정일권, 백선엽, 로버츠, 하우스만, 리드 등이 참여했다고 회고하였다. 백선엽, 앞의 책, 164쪽.

42) 이때 로버츠 준장은 하우스만에게 4가지 공식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1. 한국군사령부가 사태 진압에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면 즉각 작전통제권을 직접 관장할 것, 2. 기동작전사령부를 구성하고 적절한 감독 행위를 할 것, 3. 결과를 신속히 고문단 본부에 보고할 것, 4. 면밀한 작전 계획을 세워 이를 성공적으로 이행할 것 등이었다. 하우스만·정일화 공저, 앞의 책, 172쪽.

43) Howard W. Darrow, *The YEOSU Operation, Amphibious Phase*.

44) 미군 고문관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Bruce Co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 The Roaring of the Cataract 1947-1950*, 264.

45) Robert. Sawyer, 1962, *Military Advisors in Korea ; KMAC in Peace and War*, Washington, USGPO, 40쪽.

46) 노영기, 2002, 「여순사건과 군대의 변화」, 『제6회 동아시아평화인권국제학술회의 여수대회자료집』, 183~185쪽 참조.

47) 김백일과 송석하는 5기, 최남근은 7기, 백선엽은 9기 출신이었다.

48) 사사키 지·강창구 편역, 『한국전비사』상, 1967, 병학사, 44~45쪽. 이 책에는 1941년으로 나왔으나 사실의 오류이다.

49) 이중 최남근의 이름은 없고 최근철(육군대령, 군수참모를 지냄)만 확인됐다. 그러나 그가

진압작전에 적극 참가하지 않았고, 10월 22일 광양 방면에서 반군의 기습에 포로가 됐다. 이후 그는 탈출한 뒤 진압군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으나 공산주의자로 몰려 숙군 과정에서 체포됐다. 그 뒤 재판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1949년 8월 2일 경기도 수색에서 대한민국 만세! 를 외치며 총살당했다.⁵⁰⁾

전투사령관인 송호성은 광복군 출신으로, 10월 24일 미평전투에서 보여지듯이 용감하지만 능력이 부족한 지휘관이었으며⁵¹⁾ 여순사건의 진압작전이 일단락 된 이후 총사령관에서 면직됐다.⁵²⁾ 진압 작전의 실제 지휘관은 제5여단장 김백일 대령이었다. 그는 1945년 말 백선엽, 최남근 등과 함께 월남해 군영을 졸업하여 임관한 뒤 제3연대장, 후방부대 사령관 등을 지냈다. 제3연대장 시절에는 비리와 가혹한 훈련, 남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발언 등으로 인해 연대원들의 퇴진시위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⁵³⁾ 그는 만주군 군의관(대좌) 출신인 원용덕 대령이 전투를 지휘하는 것은 무리이며 모든 부대의 지휘를 김백일 대령으로 통일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던 채병덕의 판단에 따라 제5여단장에 임명됐는데, 만주군 시절에 빨치산 토벌 경험이 있었던 까닭에 중용됐다.⁵⁴⁾ 제2여단장 원용덕은 만주군 군의 출신의 장교로 해방 후 군사영어학교에 만주군 출신들을 입대시켰다. 그는 여순사건 진압작전 때는 김백일이 지휘했던 까닭에 지휘권을 행사하지 못하다가 여순사건의 토벌작전이 완료된 후 북지구전투사령관으로 빨치산토벌전을 수행했다.

제3연대와 제12연대 그리고 제2연대는 연대장을 대신해서 부연대장인 송석하 소령과 백인엽 소령, 제2여단 군수참모 함병선이 지휘했고, 연대장들은 부대에 잔류했다. 이것은 제2여단장 원용덕이 이들을 지휘관으로 지명했기 때문이었다. 원용덕이 제3연대장 함준호

1945년말 김백일·백선엽 등과 함께 월남한 것으로 보아 최남근도 봉천군관학교를 졸업하고 간도특설대에 근무했을 가능성이 높다. 간도특설대 소속 한인들은 신주백 선생이 소지한 자료에서 확인됐다. 중요한 자료의 확인을 해준 신주백 선생의 호의에 감사한다.

50) 최남근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노영기, 「육군 창설기(1947년~1949년)의 숙군에 관한 연구」, 1998,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논문, 54~56쪽.

51) 로버츠 준장은 송호성의 건강상의 문제로 야전 지휘관으로 부적절하고 야전상황의 평가를 잘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렇지만, 그가 대한민국에 충성스러우며 많은 군인들에게 존경받는 달변가(good talker)이기 때문에 국방장관의 특사(special representative)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Headquarters Provisional Military Advisory Group, Apo 235, 12 NOVEMBER 1948.

52) 미국은 송호성이 탈락한 이유로 그가 국방경비대 내에서 김구 추종자들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문, 이범석 국방장관의 알력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다. Weeka 47, 1948. 11. 20(정용욱역음, 『Joint Weeka』, 영진문화사, 300쪽).

53) 이때 연대원들을 지휘해서 연대장 배척운동을 전개했던 장교는 제12연대장 백인기였다.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1946. 10. 6~10. 7. #349 ;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406~408쪽 ; 사사키저·강창구편역, 앞의 책, 158~160쪽.

54) 사사키저·강창구편역, 앞의 책, 337쪽.

중령이나 제12연대장 백인기 중령을 신뢰하지 않았기에 부연대장을 출동부대장으로 지명했으며⁵⁵⁾ 제2연대장은 자신의 지휘권을 확립하기 위해 임의로 연대장을 임명했다. 백인엽은 학병출신으로 일본군 소위로 근무했다. 그는 여수 진압작전이 완료된 이후 부역자를 처벌한다며 구례 일대에서 민간인 학살을 자행했다. 함병선은 평북 송덕중학을 졸업한 일본군 지원병 출신으로 낙하산 부대에서 근무했다.⁵⁶⁾

제6연대장 김종갑은 연희전문을 졸업한 일본군 학병 소위로 2년간 근무했다. 그는 해방 직후 학병동맹에 반대한 우파 성향의 학병 출신들이 만들었던 학병단에 참여했으며 이후 군사영어학교를 졸업한 경력을 지녔다.⁵⁷⁾ 제4연대장 이서가 중령은 중국중앙군관학교를 졸업한 중국군이지만 극우파 중국 군벌인 왕정위군에서 복무했다. 1947년 4월 제1연대장으로 있을 때 김창룡을 연대 정보장교로 발탁해 숙군을 시작했으며, 1948년 8월 제4연대장으로 부임해 연대내 숙군을 진행했던 극우 성향의 지휘관이었다. 제4연대 부연대장 박기병은 만주군 출신으로 1947년경 김창룡을 정보장교 추천했던 극우 성향의 장교였다. 제5연대 제1대대장 김종원은 일본군 지원병 출신으로 일본군에 복무할 때부터 호랑이이며 야만적인 사람으로 알려졌는데,⁵⁸⁾ 10월 23일의 상륙작전이 실패로 돌아가자 정보를 제공했던 여성과 아이를 포함한 몇몇 어부들은 무자비하게 구타했고,⁵⁹⁾ 진압작전이 끝난 뒤에는 부역자를 처단한다며 일본도로 민간인들을 직접 참수하기도 했다.⁶⁰⁾

이렇듯 현지에서 초기 진압작전을 지휘했던 부연대장 이상의 직위에는 과거 일본군 출신, 특히 만주에서 항일빨치산을 토벌한 경험이 있었던 만주군 출신 장교들이 중용됐다. 또한 이들은 대개 일찍부터 반공을 주장했던 극우 성향의 장교들이 주를 이루었다.

5. 이승만 정부의 정치적 대응과 국가폭력⁶¹⁾

여순사건이 정부수립 2달 만에 일어났다는 사실은 이 사건의 성격을 규정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사건을 진압하는 방식 그리고 사후처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1948년 5·10총선거와 제헌헌법 제정을 통하여 수립된 제1공화국은 남한만의 정권수립에 동의하는 이승만

55) 사사키저·강창구편역, 앞의 책, 336쪽.

56) 한용원, 『창군』, 1984, 박영사, 58쪽.

57) 육군본부, 『창군전사』, 1980년, 283~284쪽.

58) Howard W. Darrow, The YEOSU Operation, Amphibious Phase. 이 문건은 제5연대 고문관이었던 다로우 대위가 PMAG에 올렸던 보고서이다.

59) Howard W. Darrow, The YEOSU Operation, Amphibious Phase.

60)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471쪽.

61) 김득중, 1999, 「이승만 정부의 여순사건 대응과 민중의 피해」, 『여순사건 자료 2집』, 20~33쪽 참조.

과 한민당 세력의 연대로써 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남한단독정권을 반대하며 남북협상을 이끌었고 단독선거를 보이코트 한 김구는 신생 이승만 정부의 큰 우환이었다. 그는 아직도 대한민국정부를 인정하지 않은 채 제도권 바깥에 머무르고 있었지만, 국민으로부터는 민족주의의 상징으로 신망 받고 있었고 무소속 소장파 국회의원 등으로부터는 반 이승만 세력의 구심점으로 자리 잡으면서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순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있던 정부는 이틀이 지난 10월 21일 오전 11시 이범석 국무총리 발표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이범석 국무총리는 22일 ‘반란군에 고한다’는 포고문에서도 반란군이 “일부 그릇된 공산주의자와 음모정치가의 모략적 이상물”이 되었다고 언급하였는데,⁶²⁾ 국무총리가 지목한 ‘극우정객’과 ‘음모정치가’가 누구인지는 이 날 각 신문에 일제히 보도된 김태선 수도청장의 혁명의용군 조작사건 발표를 통해 분명해졌다.

여순사건의 주모자를 혁명의용군으로 지목한 정부의 주장은 내무부의 국회보고에서 사건 배후는 ‘최능진 오동기 등이 수모(首謀)로 된 혁명의용군과 좌익계열의 선동에 관련됨이 확실’하다는 것이 내무부의 입장이었다.

최능진에게 죄가 있다면 그것은 1948년 제헌국회의원선거에 동대문 갑구에서 출마하여 이승만에 대항한 죄였다. 최능진은 유엔감시 하의 남한 정부수립을 방해하고 남북협상이 실패한 후에는 마지막 수단으로 국방경비대를 이용하여 무력혁명을 감행하려한 인물로 발표되었는데, 그는 남북협상에 나서려는 김구·김규식을 남한 우익진영이 ‘공산주의자’나 ‘크레믈린의 신자’로 비난하는 민족 지도자에 대한 모욕적 언사인테도 이에 대항하지 못한 남한 청년들은 다 썩었다고 분개할 정도의 민족주의자였다.⁶³⁾

단독정부 수립반대·남북협상 등의 정치적 입장은 당시 김구와 한독당 세력이 취했던 노선이었다. ‘국부 이승만’과 감히 경쟁하려 했던 최능진을 한번 손봐주려 했던 수사는 선거운동원으로 참가했던 군인을 신원 보증했던 오동기로 이어졌고,⁶⁴⁾ 여순사건이 오동기가 근무했던 14연대에서 일어나게 되자 뜻하지 않게 무력혁명의 죄까지 뒤집어쓰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면 당시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고 있었으며 여순사건이 일어나던 당시까지도 군을 지휘하고 있었던 미군은 여순사건의 주동자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었을까?

62) 서울신문, 1948. 10. 24.

63) 연합신문, 1949. 2. 9.

64) 오동기가 구속된 것은 그가 소개하여 입대한 두 사람이 최능진의 선거운동을 도와줬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오동기는 최능진과 만난 적도 없었다.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67, 『한국전쟁사 1 : 해방과 건군』, 485~486쪽을 참고.

미군은 기본적으로 김구의 한독당 세력과 진보적인 소장파 세력을 이승만 정권을 위협하는 불안요소로 지목하고 있었다. 분명하게 밝히지는 않았지만 미군은 반란이 김구 세력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거나 김구의 쿠데타 설이 나돈다는 식으로 김구의 혐의를 계속 주목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⁶⁵⁾ 이런 기본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미군은 여순사건을 김구 세력이 일으켰다고는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여순사건의 경위에 대한 10월 23일 주한미군사령관 콜터 소장의 발표에서는 반란을 일으킨 주동자는 제주도로 떠나기 위해 대기 중이던 장교와 경비대원이라는 언급만을 하여 정부 발표와 대조를 이룬다. 대한민국 정부측을 인용하여 반란의 주모자를 일부 군인들로 국한시키고 있었고 극우정객이나 혁명의용군 등 정부가 반란의 핵심분자로 지목한 인물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⁶⁶⁾

한편 순천이 진압된 뒤인 24일 이곳을 방문하였던 서울주재 미 외교관은 반란지의 실정을 국무성에 보고하였다. 이 보고를 기초로 하여 27일 미국무성 맥더모트 대변인은 여순사건에서 남로당이 활동하였다고 발표했다.⁶⁷⁾ 이 같은 미국 측의 파악은 반란 원인, 주체세력 등의 내용에서 볼 때, 극우정객 결탁을 운운하는 당시 정부의 공식 발표와는 꽤 큰 차이가 있었다.

반란의 진원지로서 김구세력을 지목하고 이를 통해 공격을 취하고자 했던 이승만 정부의 의도는 분명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고 일반 여론도 이에 동조하지 않았지만, 정부는 반 이승만 정치세력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이승만 정권의 주요한 공격방향이었었던 것은 국회에서는 소장파 세력이었고 원외에서는 김구 등의 한독당 세력이었다.

여순사건이 14연대의 붕괴와 이에 따른 지방 좌익세력 참여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순사건 직후의 정부 대응은 김구·한독당, 소장파 세력 등의 정치적 반대세력을 고사시키려는 의도를 분명히 보여준 것이었다. 이를 통해 이승만 정부는 여순사건을 정부의 실정에서 비롯된 밑으로부터의 저항이 아니라 일부 우익세력에 의한 쿠데타적 행동으로 국민에게 광고하고, 이를 계기로 삼아 정치세력을 재편하는데 활용하려고 했던 것이다.

김구의 명백한 부인과 일반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자, 권력에서 소외된 극우정객과 공산주의자들이 합동으로 반란사건을 일으켰다는 정부의 초기 발표는 민간 공산주의자들의 행동으로 그 범위가 점차 변화하게 된다.

김형원 공보처 차장은 일반인들은 여수 14연대가 반란을 일으키고 민중이 여기에 호응

65) 이에 대해서는 서중석, 1997,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2, 역사비평사, 178~180쪽을 참고.

66) 세계일보, 1948. 10. 24.

67) 조선일보, 1948. 10. 28.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사실은 ‘전남 현지에 있는 좌익분자들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소련의 10월혁명 기념일을 계기로 일대 혼란을 야기시키려는 음모를 획책하고 그들이 일부 군대를 선동하여 일으킨 것’이라고 하였다.

즉 반란의 주체는 14연대 장병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조직된 민간 좌익들이라는 것이 발표의 요지였다.⁶⁸⁾ 이 발표는 정부조직인 국군 내부로부터 반란이 처음 일어났다는 점을 애써 외면함으로써 반란의 초기 주체가 국군임을 부정하고 그 책임을 민간인에게 떠넘기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다.

공보처장의 발표는 우익과 공산주의자들의 연합으로 사건이 발생했다는 정부의 초기 발표를 사실상 수정하고 사건의 주체를 민간 공산주의자로, 14연대 군인은 이에 종속되는 지위로 파악한 것이었다. 정부가 여순사건을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으로 선전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불똥은 북한 공산주의세력으로 번져 나갔으며, 결국 그 피해는 여수순천지역 일대의 민중이 고스란히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

진압군이 순천과 여수를 완전히 점령한 뒤인 11월 3일 국방부는 ‘전국 동포에게 고함’이라는 벽보를 각지에 살포하였다. 이 벽보에는 먼저 여순사건을 ‘민족적 양심을 몰각한 공산도당의 조직과 명령을 통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파괴’하는 것이라 비난하는 한편 ‘소련 제국주의의 태평양 진출정책을 대항하려는 공산당 괴뢰정권의 음모’라고 규정했다. 이제 여순사건은 반도 남쪽의 한 지방에서 이승만의 실정에 반항하여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소련 지배권을 확대하려는 국제 공산주의운동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⁶⁹⁾

여순사건의 주체에 대한 규정은 이런 식으로 냉전적 설정으로 이동했다. 이런 뒤바뀐 은 내부 갈등의 책임을 밖의 확인되지 않은 실체에게 떠넘김으로써 지배층의 실정을 은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또한 이 사건이 기본적으로 내부 갈등 때문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사주로 몰아감으로써 사건 주체의 정당성을 박탈해버리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었다.

이승만 대통령의 11월 4일 담화는 이러한 시각 속에서 나온 강경한 입장 표명이었다. 이 담화에서 이승만은 “모든 지도자 이하로 남녀아동까지라도 일일이 조사해서 불순분자는 다 제거하고 조직을 엄밀히 해서 반역적 사상이 만연되지 못하게 하며 앞으로 어떠한 법령이 혹 발표되더라도 전 민중이 절대 복종해서 이런 비행이 다시는 없도록 방위해야 될 것”이라는 말하였다.⁷⁰⁾ 불순분자 제거를 위해서는 어린아이까지 일일이 조사해야 한다는 강도 높은 표명은 대통령의 직위에서 맞지 않는 고압적이고 격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다.⁷¹⁾

68) 서울신문, 1948. 10. 29.

69) 평화일보, 1948. 11. 5.

70) 국제신문·수산경제신문, 1948. 11. 5.

신생정부의 근간인 군 내부에서 반란이 터져 나왔다는 것은 정부의 통치력에 결정적 흠이 될 수 있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두 달이 조금 지난 뒤에 발생한 이 사건의 처리야말로 정부의 통치 능력을 대내외에 보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나 다름없었다. 또한 반란에 민간인까지 가담했다는 것은 반란에 대한 민간인의 광범한 지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한편으로는 이승만 정부의 실정을 의미했다.⁷²⁾ 따라서 이승만 정부는 유엔의 한국 승인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지 못한 허약한 정부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을 결코 인정할 수 없었고 이를 은폐시키려는 시도가 필요했던 것이다.

정리해보면, 이승만 정부는 여순사건의 주체에 대해 맨 처음에는 ① 우익과 공산주의자의 연합이라는 초기 발표에서 ② 민간인 공산주의자가 주동이 되고 군인 일부가 일으킨 것으로 변화되었고 마지막에는 북한으로 그 화살을 돌려 ③ 소련-북한-남한의 공산주의자들로 바꾸어 발표했다. 김구 세력을 공격하려는 이승만 정부의 초기 시도가 실패한 것이 분명해지자 공산주의자들로 그 방향을 바꾸었던 것이지만, 정부책임을 회피하려 한 점은 정부의 변함없는 일관된 의도였다고 볼 수 있다.

6. 초법과 무법적인 상태의 계엄법과 국방경비법

여수순천지역에 계엄령이 선포되었다는 사실이 처음 알려진 것은 육군참모장 정일권 대령의 10월 26일 국방부 출입기자단과의 회견에서였다. 계엄령은 순천에 대한 작전이 이루어지고 있던 10월 22일 현지 사령관에 의해 처음 내려졌다.⁷³⁾ 계엄선포문에는 ‘본관에게

71) 이승만은 여순사건이 발생한지 12년이 지난 1960년 4월 15일, 4월혁명이 있기 며칠 전 다시 여순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격렬해지는 마산시위의 배후에는 공산당이 있는데, 이들이 어린아이들을 선동하고 있다며 “과거 전남 여수에서 공산당이 일어나서 수류탄을 가지고 저희 부모들에게까지 던지는 이런 불상사는 공산당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것”이라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서울신문, 1960. 4. 15. 석간). 여수에서 어린아이가 자기의 부모에게 수류탄을 던졌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이승만의 이때 담화가 처음(?)인데, 이렇게 이승만은 자기 입맛에 맞는 역사를 창조했다.

72) 여순사건은 발생에 대해 서울 AP특파원은 “이 반란사건은 지난 8월 15일에 겨우 수립된 대한민국에 대한 최초의 큰 시련이었다”라고 논평하였고 미국의 포스트지는 “이승만 박사의 정부가 반란에 대하여 확고한 태도로서 처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즉 안전과 독립을 요구하는 대한정부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그리고 동 반란사건은 한국문제가 토의를 기다리고 있는 유엔총회의 행동에 필경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라고 보도했다(경향신문, 1948. 11. 3).

73) 계엄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엄령 선포

본관에게 부여된 권한에 의하여 10월 22일부터 별명(別命)시까지 좌기(左記)와 여(如)히 계엄령을 선포함. 만일 차(此)에 위반하는 자는 군법에 의하여 사형 기타에 처함.

기(記)

1. 오후 7시부터 익조(翌朝) 7시까지 일절 통행을 금함(통행증을 소지한 자는 차한

부여된 권한'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과연 누가 이 권한을 부여한 것인지, 어떤 근거에서 부여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은 채, 반도를 은닉하거나 밀통하는 자에게는 사형에 처한다는 강도 높은 조치를 포함하고 있었다. 중앙정부가 내린 것도 아니고 현지 사령관의 판단으로 자의적으로 내려진 이 계엄령은 아무런 법적인 근거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⁷⁴⁾

국군이 순천을 완전히 점령하고 여수에 대한 공격이 감행되기 시작한 10월 25일, 계엄령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국방장관 겸임) 그리고 11명의 장관들이 참가한 국무회의에서 결정되었다. 계엄령이 통과된 후 호남방면사령관은 26일자로 여수·순천지구에 임시계엄을 선포했다. 이 선포문은 군사에 관계있는 행정·사법사무는 계엄사령관이 담당한다고 명시하였다.⁷⁵⁾ 22일 현지 사령관의 계엄령에 뒤이어 26일에 또 다시 군사령관에 의한 계엄령이 발표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는 계엄법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였다. 계엄법이 아직 제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국무회의가 이를 '제정'하고 '의결'했던 것이다. 국무위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此限)에 부재(不在)함).

2. 옥내 외의 일절 집회를 금함.
3. 유언비어를 조출(造出)하여 민중을 선동하는 자는 엄벌에 처함.
4. 반도의 소재를 알 시(時) 본 여단사령부에 보고하여 만일 반도를 은닉하거나 반도와 밀통하는 자는 사형에 처함.
5. 반도의 무기 기타 일절 군수품은 본 사령부에 반납할 것. 만일 은닉하거나 비장(秘藏)하는 자는 사형에 처함.

제5여단 사령부 여단장 육군대령 김백일(사사키 하루다카, 1977, 『한국전 비사』 제1권, 병학사, 354쪽). 당시 계엄사령관은 송호성이었는데도, 계엄령을 김백일 제5여단장이 선포한 점은 당시 계엄령선포의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준다. 한편 사사키 하루다카, 위의 책, 354쪽 ; 대한민국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67, 『한국전쟁사1 : 해방과 건군』, 460쪽 ; 육군본부 전사감실, 1954, 『공비토벌사』, 부록1쪽 등에는 이 계엄령선포문이 10월 22일 이승만대통령이 선포한 것으로 잘못 적혀있다. 김석학·임종명, 1975, 『광복 30년』 제2(여순반란편)권, 전남일보사, 168쪽에는 10월 22일 오전 내무부, 국방부 관계자와 서울에 있던 국회의원들의 연석회의에서 계엄령을 선포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를 이대통령에게 요청하여 22일 정오 계엄이 선포됐다고 나와 있으나, 이 또한 사실 파악의 오해이다. 최윤동 의원의 국회보고에 의하면 22일 비공식적으로 위원장실에 모인 수십명의 의원들은 국회를 급히 소집하고 내무, 국방위원들은 항시 대기하라는 의장의 말을 들은 다음 사태를 파악하기 위해 내무부, 국방부 보고를 듣기로 결론을 내렸다 한다. 황희찬 내무부차관과 채병덕 국방부 참모장의 보고를 들은 것은 23일이었다(『국회속기록』 제1회 제89차, 643쪽).

74) 이승만대통령은 10월 22일 “계엄령을 내렸다고 외국에서 전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사령관이 내린 것은 해당지구에만 내린 것이다”라고 하여 계엄선포 사실을 확인했다(경향신문·동광신문, 1948. 10. 23).

75) 계엄포고문은 다음과 같다. “계엄고시 대통령령으로 단기 4281년 10월 25일 순천, 여수지구에 임시 계엄이 선포되고 따라서 해당 작전지구 일대내 지방행정사무 및 사법사무로서 군사에 관계있는 사항은 직접 본관이 관장하며 특히 군사에 관계있는 범죄를 범한 자는 군민을 막론하고 군법에 준거하여 엄벌에 처할 것을 이에 고시함. 4281년 10월 26일 대한민국 호남방면 군사령관”(동광신문, 1948. 10. 28).

제출할 수는 있지만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따라서 관보의 문구로 본다면 계엄령은 명백한 헌법위반이었다.⁷⁶⁾

여수순천지역에 계엄령이 발포되었지만, 일제시대에 있었던 계엄령은 조선에서 한 번도 실제로 발포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작전을 수행하는 군 관계 인물까지도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였다.⁷⁷⁾

이런 상황을 의식해서인지 계엄령 선포 후 한 신문은 계엄령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돕기 위해서라며 계엄령을 소개하였는데, 그 내용은 일제시기 계엄령의 내용 그대로였다.⁷⁸⁾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지만 아직 계엄법은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령 없는 계엄령 선포’라는 상황에 대해 국회는 의문을 제기하고 정부를 추궁했다. 먼저 문제가 된 것은 정부가 어떤 법에 근거하여 계엄령을 발포했는가하는 점이었다.

그런데 정부에서 발포한 것은 계엄령이 분명하였으므로, 이는 헌법 5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긴급명령, 긴급재정처분’과는 다른 경우이므로 정부가 이 조문에 근거하여 계엄령을 발포할 수는 없었다. 그렇다면 헌법 64조와 72조가 사용될 수 있는 헌법조문인데, 당시에 계엄법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또한 계엄령 발포의 법적 근거로는 사용될 수 없었다.

그런가 하면 공포된 적이 없는 국방경비법도 문제이다. 미군정은 1948년 3월 17일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175호로 국회의원선거법을 공포하고 1948년 7월 12일 대한민국헌법을 제정하고 국회의장 이승만은 7월 17일 이 헌법을 공포하였다. 그리고 정부조직법(법률 제1호)도 같은 날 공포, 시행되었으며 1948년 8월 15일에는 정부의 수립을 내외에 선포하였다. 이렇게 하여 대한민국이 탄생한 것이다.

그런데 법령집을 보면 ‘국방경비법’, ‘해안경비법’은 1948년 7월 5일 공포, 1948년 8월 4일 효력발생, 법률호수 미상이라고 써어 있다. 그러나 1948년 7월 5일에 이러한 법률이 공포된 일이 없다.

76) 한편 여순지구에 내려진 계엄령 문구에는 계엄사령관이 누구인지도 분명하게 적시하지 않고 있었다. 11월 17일 대통령령 31호로 공포된 ‘제주도지구 계엄선포에 관한 건’에는 “계엄사령관은 제주도 주둔 육군 제9연대장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77) 계엄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는 구체적인 지침도 내릴 수 없었다. 제주도에 계엄령을 발포하려 했을 때, 계엄사령관 자격을 갖고 있었던 송요찬 제9연대장은 “위에서 계엄령을 내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거냐”고 물었다고 한다(제민일보 4·3취재반, 1998, 『4·3은 말한다』5, 전예원, 389쪽). 더욱이 여순지구 계엄령이 제주지역보다 더 먼저 발포되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여순지구 계엄령에 대한 자세한 법적 규정은 진압군 측도 알 수 없었을 것이다.

78) 「계엄령이란 무엇인가?」, 동광신문, 1948. 11. 9. 메이지 15년(1882)에 포고되어 1913년부터 조선에 적용된 계엄령의 내용은 김순태, 1999, 『제주4·3 당시 계엄의 불법성』, 『제주4·3연구』, 역사비평사, 172~174쪽을 참고. 동광신문은 이 법의 주요부분을 요약한 것이다.

미군정은 군정법령(남조선과도정부법령) 이외에 1946년 8월 24일 군정법령 제118호로 창설한 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제정한 '법률'을 인준(認准), 공포한 일이 있으나 그것은 1947년 5월 6일 법률 제1호에서 1948년 5월 19일 법률 제12호(조선과도입법의원의 해산)까지를 제정하였을 뿐이었다.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209호(법령 제173호의 개정)가 1948년 7월 3일에 공포되었고, 같은 법령 제210호(동결재산의 해제)가 1948년 7월 12일에 공포되었으므로 그 중간인 7월 5일에 다른 법령이 공포될 수 없고, 더구나 1948년 5월 20일로써 이미 해산된(법률 제12호) 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법률을 제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이렇게 공포된 일이 없는 법률을 법률이라고 하려니까 그 법률호수는 '미상(未詳)'이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 국방경비법을 법률인 양 적용했고, 군법 피적용자인 군인, 군속 등은 물론, 국방경비법 제32조(이적), 제33조(간첩)의 죄는 민간인에게도 적용되었다. 국민들은 이것이 법률인 줄 속아서 살아왔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법률에 의하여 처형되었다.

"국민을 속이는 사람들"이라는 소재목으로 시작하는 유현석 변호사의 법조회고는 '국방경비법'과 '해안경비법'⁷⁹⁾의 문제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국방경비법'은 미군정에 의하여 '공포'된 일이 없고, 따라서 결코 '법률'이 아닌데도 대한민국정부와 법원에 의하여 정당하게 제정. 공포된 법률처럼 적용되면서⁸⁰⁾ 특히 한국전쟁기간 동안 "아마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처형하는 데 동원되었다. 이것이 만일 공포된 일도 없는, 따라서 법률의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법'에 따라 재판을 받고 처형된 사람들은 참으로 무고하게 학살당한 피해자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국방경비법'의 문제가 반세기전, 어처구니없는 한국 역사의 한 장을 장식하는 에피소드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국방경비법'은 국가보안법은 물론 '사회안전법'을 거쳐 보안관찰법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법률에 인용. 계승되는 형태로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다. 그래서 '국방경비법'에 의해 수십 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이

79) '국방경비법'은 미군정 당시 조선경비대에 적용되는 군형법, '해안경비법'은 해안경비대에 적용되는 군형법의 형식을 띠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거의 같으며 실제로 많이 적용되어 사실상 군형법의 역할을 한 것은 국방경비법이다. 어쨌든 실제로 미군정에 의하여 공포된 일이 없으면서 미군정법률처럼 적용되었다는 점에서 이 두 '법률'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편의상 '국방경비법'이라고만 쓰기로 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글에서 말하는 '국방경비법'의 문제는 '해안경비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국방경비법의 내용은 陸軍本部, 法務五十年史(1996), 100-103쪽, 해안경비법의 내용은 海軍本部, 海軍法務五十年史(1996), 54-62쪽 참조.

80) 1962.1.20.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군형법(법률 제1003호)과 군법회의법(법률 제1004호)을 제정. 공포하면서 그 부칙(군형법 부칙 제5조, 군사법원법 부칙 제8조)에서 '국방경비법'과 '해안경비법'을 폐지하였다. 이처럼 '국방경비법'과 '해안경비법'은 군형법과 군법회의법이 공포될 때까지 군 형사법의 역할을 하였다.

우리 주변에 살아남아 있고, 나아가 이들에게 보안관찰처분의 족쇄를 채우는 근거가 되고 있다.⁸¹⁾

III. 유형별로 본 여순사건의 집단학살

여순사건과 관련한 민간인에 대한 집단학살은 해방 전후의 격동기 속에 해방 후 계급적, 민족적 모순의 해결을 둘러싸고 외세, 지배세력과 민중과의 대립이 최고 수준에서 가장 적대적 형태로 폭발된 형태의 반군과 지방좌익, 빨치산의 무장투쟁에 대한 남한 정부의 토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러한 토벌은 결국에 있어 한국전쟁으로까지 이어졌으며, 민간인에 대한 집단학살로 이어져 왔던 것이다. 이를 연대기별, 학살주체별, 피학살자별, 학살행위를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민간인학살의 연대기적 양상이다.

여순사건의 민간인에 대한 집단학살은 크게 네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반군에 의한 집단학살 시기와 진압군과 계엄 하에서의 집단학살 시기 및 토벌과정에서의 집단학살 시기, 그리고 국민보도연맹원과 정치범에 대한 집단학살 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 반군에 의한 집단학살 시기로 이는 국방경비대 14연대 반군들에 의해 자행되었는데, 이 기간의 학살은 주로 경찰과의 교전 이후 여수와 순천과 같은 소위 해방구인 점령지역에서 지역 유지들과 포로로 잡힌 경찰들이 학살을 당하였다.

2) 진압군과 계엄 하에서의 집단학살 시기인데 이는 반군에 대한 초법적인 계엄령 발동의 진압과정에서 아군인 진압군에 의해 자행되었는데, 이 기간의 학살은 주로 무차별한 진압과정과 계엄 하에서 자행된 집단학살로 무작위 다수의 민간인들이 이때 학살을 당하였다.

3) 토벌과정에서의 집단학살 시기으로써 이는 진압과 계엄상황이 끝나고도 산악지역으로 근거지를 옮긴 반군과 지방좌익에 대한 이른바 빨치산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산악부근의 마

81) 보안관찰법 부칙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국방경비법 제32조와 제33조 위반으로 복역한 사람은 보안관찰법 제2조에 정한 "보안관찰대상범죄"를 범한 것으로 보아 보안관찰처분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보안관찰처분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이 보장하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점에 관하여는 UN Doc. CCPR/C/79/Add. 6, 25 September 1992; Report on the mission to the Republic of Korea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Mr. Abid Hussain, submitted pursuant to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 1993/45. UN Doc. E/CN.4/1996/39/Add.1, 2 November 1995 참조. 이 글에서는 보안관찰법과 보안관찰처분의 문제점에 관하여는 다루지 않고 단지 '국방경비법'의 문제점만 언급한다.

을 민간인들이 피아간의 공방에 의해 학살을 당하였다. 그리고 이 토벌과정의 집단학살 시기는 한국전쟁기로 그대로 이어져 갔다.

4) 국민보도연맹원과 정치범에 대한 집단학살 시기이다. 여순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이 지역의 수많은 좌익활동가들이나 정치범들에 대해 사상 전향을 종용했고 또한 대다수의 그들은 그에 따랐던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거의가 집단학살을 당하고 마는데 여수 오동도 앞 바다 애기섬의 150여명, 대전형무소의 여순사건 관계 정치범 1,300여명이 죽임을 당한 사건이 후반기의 대표적인 학살이다.

둘째는 학살의 주체로 본 유형으로 우익 측에서는 국방군, 경찰, 우익단체 등으로 대별될 수 있고, 좌익 측에서는 14연대 반군을 주축으로 지방좌익과 빨치산으로 대별될 수 있다.

셋째는 피학살자들의 유형이다. 피학살자는 우익의 경우 군인, 경찰, 지역 유지인사들 뿐만 아니라 보도연맹원, 형무소 수감자, 부역혐의자, 공비 및 통비 혐의자, 불심검문 또는 가택수색에 의해 뚜렷한 혐의도 없이 학살의 대상이 되는 거의 전 주민 다수가 학살의 대상이 되었다.

넷째는 학살행위 유형별로 본 민간인 학살과 야만성이다. 학살행위의 유형에는 총살, 생매장, 초도화작전, 수장, 일본도에 의한 참살, 죽창에 의한 척살, 굶어 죽이기, 때려죽이기, 폭격이나 비행기에서의 기총소사 등이 있다.

위의 여순사건에 대한 민간인 학살의 형태를 시기별로 대입하여 볼 때에 그 양상은 한국전쟁 전의 작은 전쟁기인 국지전 군인 봉기 시기에서부터 전면전의 형태인 한국전쟁 전 기까지를 관통하고 있으며, 학살주체별 유형은 주로 진압군인 국방군에 의한 것이었으며 일부 반군과 지방좌익에 의한 것도 있었다. 또한 피학살자별로 본 유형은 부역혐의, 공비 및 통비 혐의 등 뚜렷한 혐의도 없이 학살의 대상이 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사건의 진원지인 여수를 비롯하여 순천, 광양, 구례, 고흥, 보성, 화순 일부와 곡성 일부 및 경남 산청까지도 학살 대상지역이었다.

이러한 비인도적인 학살의 행위에는 지금까지의 모든 죽음의 형태를 총 동원한 인권 박물관과 같아 인권 유린 야만성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여순사건 희생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다만 전라남도 보건후생부의 이재민 구호자료는 당시 여수를 포함한 7개 지역에서 2634명이 사망하고, 4325명이 행방불명됐다고 기록하고 있다. 총 7,000여명이 희생된 것으로 보이는 정부의 기록은 여수지역사회연구소가 피해실태를 조사하였거나 현재 조사하고 있는 피해 통계 추정치인 10,000여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같은 학살의 주체는 국군과 경찰에 의해 9,500여명이

었으며, 지방좌익과 빨치산에 의해 5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비율로 보면 95%의 절대 다수가 국군과 경찰이라는 소위 아군에 의해 학살 만행이 저질러졌던 것이다.

<여순사건의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 발생지역	피 학살지	피 학살자 수		학살가해자
여순사건 지역	여수	5,000	10,000 (지금까지의 실태 조사를 통한 추정치 포함)	국군, 경찰, 반군, 지방좌익
	순천	2,200		
	보성	400		
	고흥	200		
	광양	1,300		
	구례	800		
	곡성	100		
계		10,000		국군 등 : 95%
				반군 등 : 5%

※ 출 전

1. 여수지역사회연구소, 1998,『여순사건 실태조사보고서 1집』
2. 여수지역사회연구소, 1999,『여순사건 자료 2집』
3. 여수지역사회연구소, 2000,『여순사건 실태조사보고서 3집』

IV. 맺음말

한국전쟁 전 대표적 학살극이었던 여순사건은 ‘제주 4·3사건’과 함께 진압과 토벌과정에서 이뤄졌다. 여순사건은 4·3사건의 연장선에서 발생했다. 4·3사건에 대한 진압출동 명령을 받은 여수주둔 국군 제14연대가 48년 10월 19일 명령을 거부하고 봉기를 일으켰다. 14연대 병력 대다수인 2천여명의 군인이 참여한 봉기는 이 지역 좌익세력들이 가세하면서 순식간에 민군봉기로 발전했다.

그러나 여순사건 진압과 대량 학살을 겪으면서 봉기에 참여한 주력군과 좌익진영은 지리산 등으로 들어가 본격적인 유격투쟁을 전개한다. 이에 따라 전남동부지역 일대 8개시군 가운데 5개 군에서 유격전이 벌어졌고, 군·경은 남로당 게릴라 공비 토벌을 명분으로 49년 말부터 50년 초까지 무고한 민간인을 대량 학살했다.

여순사건은 기존의 정치 사회적 지형을 변화·강화시키면서 남한사회의 기본질서가 잡히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다. 그러나 여순사건이 일어난 지 55년이 지났지만, 이 사건의

사실과 실체에 대한 규명은 아직도 요원하다. 55년이 지나도록 말없이 묻혀있는 죽은 자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산 자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는 날은 언제인가?

1948년이라는 같은 해에 일어난 ‘제주4·3’은 특별법이 제정 시행되어 최종진상보고서 발표와 함께 지난 2003. 10. 31일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도 현지에서 정부 차원의 사죄를 하고 있는 현재의 움직임과 비교하여 여순사건을 돌이켜보는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여순사건의 많은 사실들은 지금까지 정부의 고의적인 축소와 은폐로 근거 없이 확대되면서 왜곡되어 왔다. 당시 신문은 사실 확인 없는 보도를 양산했고 이후 관련 기록들은 한쪽의 일방적 시각 밑에서 서술되었다. 여순사건 연구가 먼저 사실에 대한 규명부터 출발하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여순사건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지금까지의 정부의 인식의 변화와 관점은 반공적인 관점으로서 여순사건에 대한 사건의 일체를 좌익활동과 연계하여 거의 절대적으로 불온시 해 왔다. 이는 개인의 행복과 인권이 아닌 안정된 국가운영만을 중요시한 결과로서 당연하게 반변혁적 입장을 취해 온 형태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의 정부가 반공 이데올로기를 국시로 내세우면서 일체의 비판적 반정부 활동을 소위 ‘빨갱이’ 소행으로 매도하여 마녀 사냥을 해왔던 것이다. 따라서 민간인 학살의 경우에도, 좌익 및 부역 혐의와 지방 좌익의 극렬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선전해 온 것이다.

여순사건에 대한 정부의 관점이 이렇다 보니 그 피해자와 유가족은 지금까지 냉전 이데올로기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채 국민, 혹은 민족 구성원으로 대접도 못 받으면서 죽은 목숨처럼 생명을 부지해 왔던 것이다.

한반도 남한사회에서 빨갱이로 지목된다는 것은 전근대 시절의 천형과도 같았다. 빨갱이에게는 그 어떠한 처벌이나 폭력을 가하거나, 처자들에 대한 유린도 용납이 되었으며, 그들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해도 반발이 없었다. 그들이 이러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이었다. 동네가 쑥밭이 된 이후 가족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상처를 잊기 위해 일본으로 밀항을 하기도 하고, 또 자녀들이 피해를 입을까 봐 철저히 침묵하면서 살아왔다.

광주 5.18의 경우도 그러했지만, 지금까지 여순사건의 민간인 학살의 역사에서 사망자는 있으나 가해자는 불분명하고, 왜 이들이 죽음을 당하지 않으면 안되었던가에 대한 정부나 민간차원의 설명은 아직껏 제기되지 않고 있다. 사건이 55년이 지난 지금 학살의 직접적인 가해자들도 거의 사망하였고, 목격자나 피해자들도 거의 사망한 이 시점에서 이제는 가해자를 처벌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도 별로 없다. 이들은 다만 사실 왜곡에 대한 진상을 바로잡자고 주장한다. 왜곡된 것을 바로잡는 것은 피해자의 영혼을 달래는 첫걸음이 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거청산을 통해 전 국민적인 화해와 상생의 길을 갈 수 있다는 점이다.

돌이켜 보면 우리의 현대사에서 국가폭력은 끊임없이 재생산되어 왔고 재현되어 왔었다. 제주4.3에서 여순사건, 한국전쟁, 베트남 양민학살, 5.18광주민중항쟁, 민주화운동과정에서의 의문사 그리고 최근의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의 강경 진압사례는 가공스런 국가폭력이 강도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끊임없이 길들여지고 맛 들여짐을 알 수 있었다. 한반도 남한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국가 도덕성의 회복을 위해, 국가폭력은 이제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다시는 이 땅에 여순사건과 같은 엄청난 불행과 죽음으로부터 이 민족을 해방시켜야 한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전 사회적인 확산과 정착을 위해서도 이제 국가폭력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야만 한다. 소위 국가폭력에 의한 민간인학살은 한반도 남한 인권문제의 시발점이었던 것이다.

82)오늘날 여러 형태의 반인권적인 사례가 언급되고 있지만, 국가가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 주체에게 저지른 폭력, 그리고 정치권력에 의해 조장된 인종분규나 종족 갈등으로 인한 대량학살이야말로 말로 20세기 문명을 야만으로 떨어뜨린 가장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600만 명의 유대인을 집단학살 한 나치 전범들의 잔혹 행위에 대해서 뉴른베르크재판과 유럽지역의 여러 재판은 이를 전쟁범죄로 취급하여 지금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비인도적 범죄자 처벌을 하고 있고, 남아공화국은 지난 94년 350년간 지속되어 온 소수 백인통치를 종식키면서 폭력과 유혈로 얼룩진 과거 청산을 위해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설립하여 국가적 통합과 화해를 이룩해 나가는 예가 민간인 집단학살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좋은 본보기가 된다고 보여진다. 국가폭력에 의한 국가의 자의적인 권력행사를 막는 일이야말로 노동인권, 여성인권, 소수자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첫 걸음이고, 이 첫 걸음을 회피하는 모든 인권 운동이나 인권 담론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남한 인권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 국가 도덕성과 사회 건강성의 회복을 위해, 여순사건을 비롯한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학살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이다. 이제는 인권국가로서의 면모를 다지기 위해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82) 김동춘, 2000, 「민간인 학살문제 왜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나」,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심포지움 자료집』 참조.

제4장 민간인학살 특별법

제정실태와 현 주소

여순민중항쟁의 실체와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	282
조례제정권과 여순사건 조례(안)에 대하여	299

여순민중항쟁의 실체와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

허 상 수(성공회대학교 교수)

I. 사건 실체에 대한 예비고찰

항쟁이 일어난 지 벌써 55년이 경과하고 있다. 여수순천민중항쟁은 두 얼굴을 지닌다. 하나는 군인반란이며, 다른 하나는 대한민국 국군과 경찰의 전남지역 민간인 대량학살이다. 麗水順天軍人叛亂事件은 1948년 10월 19일, 전남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병사들이 병기고와 탄약고를 접수하고, 부대를 점령한 후 관공서와 중요기관을 점거하여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하는 등 전남 동부지역 일원을 장악하여 반란을 일으킴으로써 10월 27일 토벌군에 의해 진압될 때까지 9일 동안 양측의 무력충돌사건을 말한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제주도 민중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하는데 대한 일부 군인들의 ‘출동거부’로부터 시작되었음에 주목해야 한다. 제주도 출동 거부 병사 위원회의 성명서를 통해 드러난 그들의 주장은 ‘제주도 출동 절대 반대, 미군도 소련군을 본받아 즉시 철퇴, 인민공화국 수립 만세’ 등 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실체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며 체계적인 실체 파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사건 발생의 구조와 전개과정이 동일,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국가와 사회의 인식과 태도에 중대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아직도 역사의 그늘에 파묻혀 망각을 강요당하고 있는 역사적 사건의 실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접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 홈페이지(<http://www.yosuicc.com>)에는 여수 율촌면, 소라면, 화양면, 화정면, 구 쌍봉면, 구 삼일지역, 돌산읍, 남면, 삼산면 등 여수지역의 사건 상황이 소개되어 있다. 그리고 여수지역의 대표적인 민간인 학살지역만 살펴보더라도 ㉠ 율촌지서, ㉡ 신산리 취적, ㉢ 율촌 광암리, ㉣ 화치부락, ㉤ 덕양금융조합, ㉥ 쌍봉지서, ㉦ 오림동 야산, ㉧ 서국민학교, ㉨ 중산국민학교, ㉩ 화양지서, ㉪ 군내리 선착장, ㉫ 남면 우학리, ㉬ 안도 선창, ㉭ 서도 변촌해안 / 거문리 신사터 등이라고 지도에 표시되어 있다. 이외에도 여수서교 학살지, 중앙초교 학살지, 만성리 학살지, 호명리 학살지, 구량실 학살지 등이 있다. 그리고 육지뿐만 아니라 인근지역 섬에서도 민간인학살이 일어났음을 금방 알 수 있다. 희생

자 유족회만 하더라도 여수유족회, 순천유족회, 구례유족회, 보성유족회, 광양유족회, 남해 유족회와 연락처 등을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통칭 여순사건의 관련지역은 전라남도 동부 지역을 거의 망라하고 있으며 6개 시군읍에 걸쳐 발생하였음을 보여 주고 있다.

지금까지 남한 공식 입장은 ‘반란이 제주도 유격대에 대한 정부의 압력을 덜어 주기 위해서 그 이전부터 신중하게 계획된 것 이었다’라는 주장에 기초해 왔다.¹⁾ 이른바 군인반란에 대한 토벌과 진압의 정당성을 찾는 대한민국 국군의 역사인식은 시대착오적인 구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을 수 없다. 왜냐하면 토벌과 진압의 정당성과 함께 민간인학살 자행이라는 국가범죄와 국가폭력,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아무런 사과 표명이나 과거청산 의지를 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즉 ‘계획된 반란의 수습과정에서 부당한 법 집행으로 다수 민간인들의 죽음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다.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주한 미군사고문단이 취한 입장은 1948년 연말로 계획되어 있던 반란이 제주도로 이동하라는 예상치 못했던 명령이 내려지면서 채 준비도 갖추기 전에 결행되었다’라고 보았다.²⁾ 그러나 당시 정치사회적 정황, 생존자들의 증언, 대한민국 이승만 정권의 행태와 아메리카 합중국의 대외 정책 등을 종합해 볼 때 위와 같은 관변 시각은 너무나 명백한 한계와 문제점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추후 조사 작업을 통해 진위를 판가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까지 이 사건에 대한 일반의 이해는 정부에 대항한 군인반란과 그들에 의한 방화와 살인 등으로 받아들여져 왔고 이를 당연시하는 흐름이 대중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민주화의 진전과 과거청산 작업이 일정하게 진행되면서 지역 출신의 민주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구술 증언과 현장 발굴 등 귀중한 연구조사가 진척되어 반세기동안 어둠에 갇혀 있던 진실의 일단이 밝혀지기 시작하였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민간인 학살관련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청원과 입법안이 제기되었으나 아직까지 별 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입법 사례들을 재검토하고 보다 진일보한 차원에서 효율적인 입법운동을 위해서 법제정의 의의와 당위성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지적할 수 있다.

1) 육군본부 정보참모부의 『공비연혁』(1971: 202, 218), 전사편찬위원회(1967), 『한국전쟁사 I 해방과 건군』(451쪽). 참조.

2) 메릴, 존 R.(1988), 『침략인가 해방전쟁인가』, 과학과 사상, 189.

II. 여수·순천민중항쟁사건 등 진상규명 및 피해배상특별법 제정의 당위성과 시급성

지난 1996년 11월, 필자는 ‘제주4·3사건’ 문제 해결의 제도화를 위하여 특별 법안을 처음 작성하여 토론에 붙이게 함으로써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특별법’ 제정운동의 계기를 만드는데 일조한 경험이 있다. 여기에서 필자는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배상특별법이 왜 제정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1) 사회 심리적 이유, 2) 문화적 이유, 3) 윤리적 이유, 4) 역사적 이유, 5) 경제적 이유, 6) 시대적 이유, 7) 정치적 이유, 8) 법률적 이유를 거론한 적이 있다. 따라서 내용의 차이는 있겠으나 여전히 민간인학살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특별법의 제정을 위해서는 동일한 이유와 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과거청산과 진상규명운동 경험의 공유와 연대의 강화는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에 일정한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최근 이를 위한 방안의 모색과 정보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그 동안 서로의 사정과 공간적, 시간적 한계 때문에 가로 놓였던 장애물들이 제거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특히 ‘제주4·3사건’과 여수순천사건은 발생 원인과 시기가 거의 동일하다는 점에서 이후 각별한 관계 모색을 추구해야 할 적극적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변호사)는 2003년 7월 16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관련 통합 특별법 제정 권고’ 라는 제목의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통해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 관련 신청사건에 대해 이 사건에 대한 통합특별법의 제정을 권고하였다. 국가기관으로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이 결정문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점에서 통합법 제정의 필요성과 법적 타당성,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잘 보여 준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이 소론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 내용을 중심으로 민간인학살사건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논의해 볼까 한다. 물론 이 결정문은 중요한 역사적 의의와 함께 몇 가지 중대한 결점과 한계점이 없지 않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면을 통해 검토해 볼 예정이다.

1. 시대적 이유

오늘날 인권논의는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중요한 담론의 하나이다. 인권보호와 권리신장의 기회를 확장하고 심화시키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 되고 있다. 냉전 시대도 아니고 권위주의 시대도 아니며 더구나 군부독재 시대도 아닌 이 시기에 탈냉전과 민주주

의, 평화 보장과 함께 인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 새로운 접근이 전면적으로 요청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의 주문내용을 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 대하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과 관련한 진상규명과 억울한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통합 특별법의 제정을 권고합니다.” 라고 되어 있다. 통합 특별법의 제정을 정부 최고 책임자인 국무총리와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에게 권고함으로써 국가기관의 입법 의무를 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중요한 점으로 민간인들이 학살당한 것을 ‘민간인 희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희생사건을 ‘중대한 인권문제’로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를 정책과제로 삼아 ‘인권보호와 향상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검토하였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에 대한 명예회복 및 피해구제 등과 관련하여 1960년 4·19직후 국회에서 양민학살사건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과 민간인 희생에 대한 조사 경험, 최근 거창사건등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1996. 01. 05. 법률 제5148호)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2000. 01. 12. 법률 제6117호) 제정을 통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과 이를 위한 관련 민간단체·지역·언론 등에서의 문제제기 및 국가에 대한 통합 특별법 제정 촉구가 빈발하여 왔다는 ‘정치·사회적 상황’이 감안된 것이라고 되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은 III부에서 민간인 희생과 관련하여 기존의 국회 활동 결과를 검토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미 1960년대 조사활동을 벌인 것과 현재 입법 시행 중인 법과 앞으로 국회에서 검토되어야 할 입법안을 두루 제시, 소개하고 있다.

결정문은 첫째, 1960년 양민학살사건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결과를 들었다. 1960년 4월 학생혁명이후 구성된 국회에서 1960년 5월 27일 양민학살사건 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경북·경남·전남의 3개 조사반을 편성하여 민간인 희생사건을 조사한 후 그 결과와 대정부 건의안을 1960년 6월 21일, 제42차 본회의에 보고하였다. 이 조사결과는 사건의 전모와 피해에 대한 전체적이며 정확한 실정과 숫자를 파악하기에는 상당한 시일과 인원이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이었으며, 인명피해 규모는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일부지역에서 총 1,878명으로 보고되었다. 이런 국회의 조사결과 이들이 취한 대정부 건의는 ‘양민의 생명과 재산상 손해를 끼친 관련자 및 피해자와 피해상황을 조속한 시일 내에 조사하고, 관련자의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보상 제도를 설정하기 위하여 기존 법률에 의한 일사부재리 원칙이나 시효의 저촉규정에 관계없이 특별법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결정문에서는 국가공권력의 범죄행위로 인한 민간인 희생관련 특별법의 제정에 대해서

도 소개하고 있다. 여기에는 거창사건과 제주4·3사건이 있다. 첫째, 거창사건등관련자의 명예 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거창사건 등이라 함은 공비토벌을 이유로 국군병력이 작전수행 중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법 제2조 제1호)으로서 동 법은 1996년 1월 5일, 법률 제5148호로 제정되어 거창사건 등과 관련하여 공비토벌을 이유로 한 국군병력의 작전수행 중 희생된 주민과 그 유족의 명예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다(법 제3조). 거창사건 등과 관련하여 “주민들을 즉결처분하도록 명령을 하달한 명령권자와 그 명령을 수행한 자에 대하여 전장 도의를 소홀히 하여 인권을 유린한 죄를 적용”하여 1951년 12월 16일, 대구고등법원 중앙 고등군법회의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유기징역이 선고된바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 법과 관련하여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 특별조치법이 ‘거창사건’에만 국한하지 않고 ‘거창사건 등’이라고 표기하여 복수의 여타 동일, 유사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는 법률적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 법 제정 과정에 참여했던 제주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 역시 이점에 착안하여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이 법을 통한 접근 가능성을 거론한 적이 있다. 그러나 법 시행과정에서 정부는 타 지역 동일, 유사사건에 대한 적용을 완강하게 거부하거나 제지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둘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에서 ‘제주4·3사건이라 함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법 제2조제1호)으로서, 동 법은 2000. 1. 12. 법률 제6117호로 제정되었다. 동 법에서는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과 함께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다고 한다(법 제9조).

셋째,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두 개의 법안으로 ‘6·25전쟁전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안’ 및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피해자명예회복등에관한특별법안’이 있다고 한다. 이 2개 법안에 의할 경우 “6·25전쟁전후민간인희생사건이라 함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부터 6·25전쟁이 종료된 1953년 7월 27일까지 군인·경찰·국제연합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작전수행 과정에서 민간인들이 희생당한 사건이고,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이라 함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국군·경찰·그 밖의 공무원, 한국전쟁에 참가한 국제연합군, 준군사조직의 구성원, 비정규 전투조직 구성원에 의하여 작전수행 그 밖의 조직적 활동과정에서 불법적으로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민간인 학살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의 사건 규정을 보면 가해자로 전자는 ‘군인·경찰·국제연합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후자는 ‘국군·경찰·그 밖의 공무원, 한국전쟁에 참가한 국제연합군, 준군사조직의 구성원, 비정규 전투

조직 구성원'이라는 가해 주체의 구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두 법률안은 민간인 희생이 과연 '작전수행과정에서 일어난 것'인지, '작전수행과 그 밖의 조직적 활동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일어난 것인지를 구별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2. 정치적 이유

여수·순천민중항쟁 등 민간인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배상 통합특별법이 시급하게 제정, 입법화되어야 하는 정치적 이유로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민간인 집단살해의 진실접근과 명예회복의 정치적 당위성과 시급성은 이들 사건들이 전국적 성격과 국제적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예컨대 어느 특정 지역의 단일사건만이 아니다. 여수시와 순천시뿐만 아니라 구례군, 광양시, 남해군, 보성군 등 전라남도 동부지역 지리산 주변지역이 모두 사건 발생과 전개과정에서 민간인의 대량학살 등 엄청난 인적 피해와 물질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사상자 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안을 보면 '여수·순천10·19사건이라 함은 1948년 10월 19일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동 주둔 국방경비대 제14연대가 주동한 반란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10년 27일까지 전라남도 여수·순천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 및 반란군 가담자 처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서 국회에 계류 중인 동 법안에서는 위령사업을 지원하고 희생자에게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함평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 명예회복등에관한특별법안을 보면 '함평사건이라 함은 1950년 12월 6일부터 1951년 1월 14일 사이에 전남 함평군에서 공비토벌 중 500여명의 주민이 살해되고 1,450여 채의 가옥이 소실된 사건'으로서 국회에 계류 중인 동 법안에서는 위령사업을 지원하고 희생자에게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두 법률안을 보면 개별 지역에서 비교적 길지 않은 기간에 공비 또는 반란군간의 무력충돌과 진압과정, 가담자 처형과정에서 주민들이 살해되거나 희생되고 가옥이 손실된 사건에 대하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구하는 특별법의 제정을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신청 사건의 검토 배경을 통해 '2003. 07. 14. 현재 국가공권력(국군, 경찰, 국제연합군 등)에 의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관련 진정사건이 국가인권위원회에 68건이 접수되었다.'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이 검토내용에서 소개된 진정사건 이외에도

아래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국회 입법청원이나 입법안 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미루어 보아 많은 관련 인사들이 백방으로 입법운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더욱이 결정문의 검토배경을 보면 그 동안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국가기관에서 논의되고 일정한 성과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예컨대 1980년 광주사건, 1951년 거창사건, 1948년 ‘제주4·3사건’관련 특별법이 제정, 운영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즉 이들 지역이외에도 여수와 순천지역 등 전라남도 동부지역 일원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민간인 학살사건과 관련하여 수많은 인명이 국가 공권력에 의해 대살륙을 당해 왔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지역의 민간인 희생에 대한 정치적 해결은 사안의 선별적 해결이나 분리, 차별이 아니라 일괄 해결(package deal)에 의해 민간인학살 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책임자 처벌과 피해배상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3. 법률적 이유

민간인 학살사건은 한국의 인권론에서 ‘실종된 원형의 복원’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법적 검토가 필요한 이유가 있다는 강금실 변호사(현 노무현 정부의 법무부 장관)의 견해를 소개하고자 한다.³⁾

민간인 학살사건의 법률문제는 사건 전모가 조사, 확인, 규명, 폭로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의 부재’, ‘기억의 실종’이라는 점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사건에의 접근과 해결의 첫 단계는 사실 자체의 표면화, 조사, 확인, 폭로를 통한 진상 규명과 원형 복원에 있다.

민간인 학살사건은 어느 특정 지역에서의 개별사건 뿐만 아니라 한국전쟁 전후시기에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한 여러 사건들을 한데 묶어 전체를 하나의 사건 단위로 인식하여 접근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학살사건을 전체로서 조망하면서 문제들을 검토해야 통일적인 법적 성격과 지위 설정, 궁극적이고 포괄적인 해결방식을 찾아내고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은 검토 대상으로 한국전쟁 전후(주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이 종료된 1953년 7월 27일까지) 민간인 희생사건을 모두

3) 강금실(2000), 『민간인 학살사건에 관한 법적 문제점과 해결방향』,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2002), 『전쟁과 집단학살』, 자료집. 이 글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중심이 되어 2000년 5월경 구성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사건’에 관한 법률적 관점의 조사연구와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변호인단 전체 의견을 정리한 것이다.

들었으며, 이미 특별법으로 제정된 거창사건과 제주4·3사건을 제외하였다. 그리고 사건 검토를 위하여 그 전모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출발하였고, 어느 특정한 지역에서의 개별사건으로서가 아니라 한국전쟁 전후시기에 광범위하게 일어났던 여러 사건들을 종합하여 하나의 단위로서 인식하여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런 검토대상에 대한 접근법은 이미 강금실 변호사에 의해 제기된 바 있다. 그리고 민간인 희생사건의 사실관계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국가기관의 활동결과와 그에 기하여 작성된 공식적인 자료를 통하여 민간인 희생사건에 접근하려고 노력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대목은 ‘헌법상의 생명권 보장과 그 침해에 대한 구제’에 대하여 언급한 부분이다. 결정문을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한국전쟁 당시 우리 헌법에는 생명권 보장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었지만, 최근 통설과 판례(헌법재판소 1996. 11. 28. 95헌바1)는 헌법해석론으로서 생명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 (2) 한국전쟁 당시 인간의 생명권 보장은 신체의 자유를 규정한 제헌헌법 제9조 그리고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까지도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제28조(이상 1948. 07. 17. 헌법 제1호로 제정되어 1962. 12. 26. 헌법 제6호로 전문 개정되기 이전의 것) 등에서 그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할 것이다.
- (3) 또한, 공무원이 생명권을 불법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형사처벌과 더불어 국가가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27조 후단의 규정, 1948. 07. 17. 헌법 제1호로 제정되어 1962. 12. 26. 헌법 제6호로 전문 개정되기 이전의 것).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문의 취지대로 라면 ‘행위시 법에 의한 민·형사상 시효도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없이 국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의 경과로 말미암아 공소시효를 경과하여 현행 법률로서는 아무 것도 다룰 수 없다는 해석을 하고 있다. 바로 이점에서 민간인학살(Genocide) 등 반인륜범죄 등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적용을 위한 특별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와 제 12조 및 세계인권선언 제1조, 제3조, 인권의 신장과 보호를 위한 국제규약과 일련의 원칙들의 취지, 여기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미, 이것 때문에 파생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신원권(伸冤權) 등을 위해서 국가에 의한 진상규명의 필요성은 더욱 분명해진다고 지적할 수 있다.

4. 역사적 이유

역사는 항상 지배자의 손에 의해 쓰여져 왔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불미함과 치부를 감추고 가리고 지워왔다. 진상규명 법률을 제정해야 하는 역사적 이유는 반세기 이상 정사(正史)에 쓰여 있지 못하거나 왜곡되어 잘못 쓰여 있거나 잊혀진 역사를 바로 잡고 일으켜 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발 방지를 위해 기억투쟁의 성과를 교육하고 새롭게 새겨 두어야 한다.

국방부는 위와 같은 학살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특별법의 제정에 대하여 ‘법적 안정성 침해로 인한 국정문란을 초래하며, 소급입법 금지에 반하며, 구체적 증거가 없는 민간인 희생 전반적 사항에 대하여 조사한다는 것은 기존 사법체제와 맞지 않는 것이며 사실상 진상규명이 어려워 국가행정의 효율성 및 예산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군경 유가족을 폄하하게 된다’는 골자의 이유를 들어 노골적인 반대의견을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건국 55년을 맞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과거 독재시대 일부 군대와 경찰 등 국가 공권력의 불법 부당한 범죄행위에 대한 단결과 청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과거 악행과의 단결과 청산작업은 국민의 군대, 국민의 경찰을 자임하는 지금의 군대와 경찰 스스로의 의지와 각오로 구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거 군대와 경찰이 치른 오욕의 역사, 실종된 공백의 역사를 군경이 스스로 정리하고 넘어가려는 전향적 자세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앞서 소개하였듯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은 사실관계를 살펴 볼 때 민간인피학살사건을 국가공권력에 의한 생명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있다. 결정문에 따르면 “(1) 거창사건등 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면, ‘거창사건 등 이라 함은 공비토벌을 이유로 국군병력이 작전수행 중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하였는바, 이는 국가공권력에 의한 생명권 침해를 최초로 인정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제주사건에 대하여도 동일한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2)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 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에 의하면, ‘제주4·3사건이라 함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하여 국가공권력에 의한 생명권 침해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공권력에 의한 범죄 행위로 인하여 짓밟히고 침해된 인간의 권리가 어디 생명권뿐이겠는가. 민간인 학살사건의 경우 생명권뿐만 아니라, 법 앞의 인격으로서 승인을 받을 권리, 신체의 자유, 재판을 받을 권리, 실효적 구제를 받을 권리, 고문 또는 잔학·비인

도적이거나 체면을 더럽히는 대우 또는 형벌의 금지, 죄수의 권리, 이동의 자유, 자유 및 안전에 대한 권리, 자유를 빼앗긴 개인에게 인정된 권리, 결혼에 관한 권리, 가족생활의 권리에 관한 권리, 아동의 여러 권리, 명예·신용 및 사생활의 보호, 주거와 통신의 자유, 사상, 양심의 자유, 의견·표현·정보 및 전달의 자유, 정치적 활동 및 노동단체활동의 보호, 여러 가지 정치적 권리, 경제적 활동의 보호 등 여러 가지 권리와 자유의 침해와 유린 행위가 연속하여 발생하였음을 많은 역사적 사례들은 입증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특별법의 제정은 이런 인권유린과 침해에 대한 역사적 기억과 재발 방지 조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인 것이다.

5. 윤리적 이유

오늘날 당시 사건 관련자들과 당사자들은 세월이 흐르면서 삶의 시간을 마감하게 되어 점차 역사적 기억에서 멀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생이 종지부를 찍기 전에 무엇인가 족적을 남기고 가도록 하려는 구체적이며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망자에게 덧씌워진 ‘빨갱이’이라는 낙인과 불명예를 제거하고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도록 새로운 정치 환경을 만드는 게 살아남은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사람에 대한 예의이며 도리일 것이다. 더욱이 망자의 불명예와 누명 때문에 일생을 고통과 회한에 찌들게 하여 참으로 불행하고 구차한 삶을 영위하였던 희생자 유족들의 눈물을 씻어 주어야 하는 일은 살아남은 또 다른 사람들의 의무이며 책임인 것이다. 이런 도덕률을 회피하고 수수방관하는 일은 집단살해집단의 범죄행위를 눈감아 주는 제2의 범법행위이며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짓에 다름 아니다.

무릇 법의 지배는 정의의 실현을 위한 것이며 인간 사회의 근본을 정립하는데 요구되는 윤리적 삶의 최소 요건을 구비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질서의 수립을 위한 제도적 기초로서 과거청산을 위한 법의 제정은 윤리적 이유로도 정당화되어야 한다. 전쟁의 결과로, 불순한 의도의 타협의 산물로 마무리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이제부터라도 넉넉하고 윤택한 삶의 새로운 조건을 구비해 나가는데 무엇보다도 윤리적 정언에 따라 도덕적 정당성을 굳건하게 다져야 한다.

인간 존엄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접근, 사회 발전을 위한 진정한 사회적 화합과 과거청산을 위해서, 국가 도덕성의 회복을 위해서도 학살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제도적 접근은 필수적 전제이다.

6. 경제적 이유

대다수 사건 희생자 유족들과 사건 관련자들의 궁핍한 경제적 삶에도 주목해야 한다. 의료지원금이나 생활지원금의 지급이나 기타 지원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법의 제정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정당화될 수 있다. 만약 국가 공권력의 가해사실이 입증된다면 이에 따른 응분의 피해배상이나 손해배상을 통해 이들 희생자나 피해자를 위로해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치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국가의 이름으로 잘못을 인정하여 그것을 시인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경제적 배상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데 있다. 액수의 다과나 지급 시기 및 절차는 논외로 치더라도 국가범죄나 폭력의 행사에 때문에 발생한 물적, 인적 손실에 대하여 마땅한 죄의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7. 사회·심리적 이유

학살사건은 단순히 일회성에 머무르지 않는다. 사건이 일단락이 되었더라도 이로 인하여 가해자나 피해자 당사자 및 가족, 지역공동체는 엄청난 심리적, 정신적, 문화적 충격과 이로 인한 고통을 감내해야만 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놓여 있다. 즉 한편으로 사건 발생과정에서 희생당한 피해자와, 다른 한편으로 고의든 과실이든 사건에 휘말리면서 가해행위를 한 쪽 모두 심리적 해결과정이 필요하다. 일방적으로 집단살해를 당하는 지난 55년 동안 원한이 맺혀 있는 경우나 지난 세월동안 살육현장의 광기와 야만을 잊지 못하여 악몽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가해자의 경우 모두 인간성의 파괴나 해체와 같은 심리적 상처를 안고 살아 왔다고 지적할 수 있다.

나아가 탈냉전 시기에도 불구하고 냉전시대의 반공 논리와 멸공의 잣대로 국가보안법 등을 내세워 사회발전에 역행하는 이념논쟁을 부추겨 국론분열을 야기하는 보수우익반공파벌의 존재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가진 사회적 기반과 정치적 발호를 목도하면서 이들의 존재 근거 그 자체에 대한 확실하고 분명한 사건 진모의 제시를 통해 이들의 고백과 회개와 근신을 위해서도 법률 제정은 필요한 일이다.

8. 문화적 이유

인간은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만큼 너를 보살피고 귀중하게 여기는 데서 삶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다. 만약 인간이 남을 업신여기고 그의 삶을 파괴하는데 아무런 가책을 느끼

지 못하고 있다면 아무리 그가 권력과 재산을 갖는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눈총과 지적을 피할 길이 없다. 우리가 민간인 학살사건의 실제 진상을 알고자 하고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들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며 살아남은 자의 도리를 다하려고 하는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릇 인간은 문화적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III. 1980년 광주, 1951년 거창, 1948년 제주4·3사건특별법 제정과 운영의 문제점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관련 법률은 정치적 차원에서 국민화합과 민주주의 발전에 일정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이후 과거청산 작업의 대표적 사례로서 큰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사건 전모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공식 진상조사보고서 하나를 남기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이 갖는 현대 정치사에서의 비중과 의의에도 불구하고 큰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비록 민간인학살의 주모자를 내란죄와 군사반란죄로 단죄하였으나 그들은 아직도 백주에 시내를 활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거창사건등에관한특별조치법 역시 졸속 입법의 한계와 미비점을 다 같이 안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그래서 희생자 유족 등이 개정안을 제기해 놓고 있는 상태이다.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은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최초의 법원 판결을 인용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현행 법률 하에서 법원은 별다른 법적 판단을 적시할 조건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민사부 2001. 10. 26. 선고 2001가합430 판결에 의하면, “거창사건 자체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에 소멸시효제도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근거가 없고, 국제인권법상 민간인 학살행위에 대하여 소멸시효제도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결국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손해배상청구권을 부활시키는 문제는 국회의 특별법 제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으며,

(2) 또한, 동 판결에 의하면, “이른바 민간인 학살사건은 그 가해자가 한 개인이 아니라 국민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를 가지는 국가 자신이므로, 이러한 민간인 학살행위에 대하여 국가는 학살사건 이후에 적어도 첫째, 민간인학살행위의 진상을 공식적으로 규명하고, 둘째,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적절한 배상을 하며, 셋째, 학살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넷째,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임”을 언급하고,

“거창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이나 손해배상에 관한 국가의 보호조치 등을 소홀히 함으로써 희생자 유족들의 신원권 내지 알 권리 및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손해배상,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권리 등을 계속적으로 침해하여 거창

사건 유족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권리 내지 법적 이익의 침해로 인한 유족들 고유의 손해에 대하여 금전지급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시를 한 바 있다. 따라서 거창사건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정과 시행, 위 창원지법의 판결을 통해 볼 때 민간인 학살행위에 대한 소멸시효제도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명시적 조항과 함께 희생자를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입법화가 반드시 필요함을 웅변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제주4·3사건 특별법의 경우 제정 이후 3년 동안의 법 시행과정에서 빚어진 정부 주도의 진상조사 작업의 의의와 한계,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의 활동 경험, 공무원 조직으로서의 지원단(중앙)과 사업소(지역), 그리고 관민합동 협의체인 진상규명및 명예회복위원회(중앙)와 실무위원회(지역)의 운영에서 빚어졌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법령의 개정작업이 요구되고 있다. 2003년 진상조사보고서가 최종 확정되었지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런 한계와 미비점을 해소할 수 있는 내용의 법령 제정이 요구된다.

특히 김대중 정부 시절 우여곡절 끝에 입법이 실현된 민주화운동관련자등 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법과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제주4·3사건 특별법 등 과거청산과 인권보장을 위한 3개 법률 모두 실질적인 조사권한 미비 등 법령의 실제 집행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조항들을 적극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심려가 깊은 연구조사가 요망되고 있다. 나아가 추모공원사업의 의미와 한계 등 제대로 된 과거청산작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충실한 입법조치 등에도 주의를 기울여 하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특별법 개정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법 제정 작업 시 조문 축조심의를 심혈을 쏟아야 한다.

특히 희생자 심의와 관련하여 성우회(군 예비역 장성 모임) 대표 등 극우반공보수 인사들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신청 사건의 결과로 빚어진 제주4·3사건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헌법재판소 2001. 9. 27. 2000헌마238)에 의하면, 희생자로 볼 수 없는 경우를 수괴급 공산 무장병력지휘관 또는 중간간부로서 군경의 진압에 주도적·적극적으로 대항한 자, 모험적 도발을 직·간접적으로 지도 또는 사주함으로써 제주4·3사건 발발의 책임이 있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간부, 기타 무장유격대와 협력하여 진압 군경 및 동인들의 가족, 제헌선거관여자 등을 살해한 자 및 경찰 등의 가옥과 경찰관서 등 공공시설에 대한 방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자로 구분하고 있다.

얼핏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그럴 듯 해 보이는 이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일부 내용은 사건의 발생배경과 전개과정, 사태의 원인에 대한 아무런 심층 검토나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작성되어 이후 희생자 심의에 논란만 야기하고 또 하나의 좌우갈등과 이념대립, 상호불신을 야기할 소지를 안기게 만들었다.

IV.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및 피해배상 특별법 제정의 기대효과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55년 전인 1948년 10월, 여순사건이 발생하자 살인마 이승만 정권은 긴장이 조성된 분위기를 악용하여 국회를 몰아부쳐 공산주의를 불법화하고 경찰에 무제한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정부내외의 반대파를 체포하고 억류하기 위한 포석의 하나로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다(1948. 11. 20.). 이것은 한편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초기 자신의 정치적 지위에 위협적 요소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고 봉쇄하기 위해서, 다른 한편으로 이 나라를 반공국가로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적 조치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자유민주주의의 대의와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유린하고 침해하는 것이었다. 한 마디로 대통령으로써 이승만은 ‘생명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포기하고 배치하는 범죄 집단의 수괴로써 기능했다는 지적을 면하지 못하게 만드는 언행을 불사하였던 것이다.

이제 우리는 14연대사건(여수·순천군인반란)과 전남지역 민간인학살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작업의 시급성과 당위성에 대한 절박한 이유가 충분하게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우리는 과거청산과 인권신장을 위한 ‘진실과화해위원회법’의 제정이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피해배상특별법’의 제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일본제국주의시대, 미군정시대, 이승만정권시기, 군사독재시기에 발생한 비인도적 범죄, 집단살해(Genocide), 국가권력의 가혹행위(예를 들면 고문, 拷問) 등 국가범죄와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피해배상을 위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특별법 제정이 요구되고 있다. 즉 전국적으로 각계각층에서 일제 시기 일본군 성범죄, 태평양전쟁시기 집단살해, 미군정시기 집단살해, 한국전쟁시기 집단살해, 보도연맹사건, 독재시대의 각종 의문사 희생자 등에 대한 과거청산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지역적으로, 사건별로 각종 입법청원 및 제정 작업이 각개 분산적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를 위한 가시적인 별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으로 보수 거대야당의 존재, 냉전분위기의 온존, 국가보안법의 존치 등 입법운동의 전개에 적지 않은 장애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효과적인 입법노력을 통합적으로, 집단적으로, 지속적으로 전개하여야 할 때이다.

첫째, 과거 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피해배상특별법’의 제정은 국민통합과 민주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둘째, 통합특별법의 제정은 한국사회가 인권신장사회로 진입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셋째, 민간인학살사건에 대한 단죄와 처벌은 동일 사건의 재발 방지에 큰 버팀목일 될 것이다. 넷째, 과거 사건의 해결과정을 거치게 됨으로써 한국사회는 갈등조정과 타자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성찰의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참고자료 :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학살 관련 청원 및 법안 목록

1. 법안

○ 법안심사소위원회 계류법안

구 분	건 명	의안 번호	발의 및 찬성자	발의일	회부일	비 고
1	함평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에 관한특별법안	96	이낙연의원 외 31인	'00.8.4	'00.8.9	'00.12.6상정 (제215회정기회)
2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에관한 특별조치법개정법률안	456	이강두의원 외 30인	'00.12.1	'00.12.4	'00.12.15상정 (제216회임시회)
3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사상자 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안	696	김충조의원 등 7인외 33인	'01.4.6	'01.4.7	'01.4.17 상정

○ 전체회의 계류법안 및 미상정 법안

구 분	건 명	의안 번호	발의 및 찬성자	발의일	회부일	비 고
1	6.25전쟁전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 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안	793	배기운의원등 17인외 22인	'01.6.2	'01.6.2	'02.4.18상정 (제229회국회)
2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 및피해자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안	956	김원웅의원 등 47인외 1인	'01.9.6	'01.9.10	'02.4.18상정 (제229회국회)
3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 특별조치법개정법률안	1692	김성순의원 등 20인	'02.8.30	'02.9.2	

2. 청원

○ 청원심사소위원회 계류청원

구분	건명	청원 번호	소개의원	소개일	회부일	비고
1	함평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등에 관한청원	10	이낙연의원	'00.7.3	'00.7.4	
2	여순반란사건피해자명예회복에 관한청원	39	정철기의원	'00.7.28	'00.7.29	
3	문경양민학살사건피해자명예회복에 관한청원	58	신영국의원	'00.9.5	'00.9.6	
4	고양금정굴양민학살사건등진상규명및 명예회복을위한특별법제정에관한청원	113	이창복·김원웅의원	'00.11.16	'00.11.17	
5	여수·순천10.19사건진상조사및피해자 의명예회복을위한특별법제정에 관한청원	139	김충조,김경재,정철기 의원외 28인	'00.12.2	'00.12.4	
6	강화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등에 관한청원	156	김원웅, 박용호의원	'00.12.21	'00.12.21	
7	나주동창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 등에관한청원	159	배기운의원 외 18인	'00.12.27	'00.12.28	
8	산청(시천,삼장,단상)민간인학살진상 조사및명예회복을위한입법에관한청원	228	김용균의원	'01.5.12	'01.5.15	

○ 법안심사소위원회 계류청원

구분	건명	청원 번호	소개의원	소개일	회부일	비고
1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조사등을 위한통합특별법제정에관한청원	168	김원웅,이창복 의원외 17인	'01.1.19	'01.1.26	'01.4.17 상정 법안심사 소위원회부
2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조사등을위 한특별법제정에관한청원	207	김원웅의원	'01.3.31	'01.4.2	"

○ 미상정 청원

구분	건 명	청원 번호	소개의원	소개일	회부일	비고
1	나주시봉황면청천리등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에관한청원	421	배기운의원	'01.12.28	'02.1.2	
2	대전골령골집단학살진상조사등에관한청원	427	김원웅, 현경대의원 외 14인	'02.2.5	'02.2.6	
3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진상규명특별 법제정추구에관한청원	483	김원웅, 조한천의원	'02.9.24	'02.9.26	
4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진상규명특별 법제정추구에관한청원	484	김원웅의원	'02.9.24	'02.9.26	
5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진상규명특별 법제정추구에관한청원	495	이원형의원	'02.10.8	'02.10.9	
6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 및피해자명예회복등에관한특별법제정 추구에관한청원	502	김원웅의원	'02.10.16	'02.10.17	
7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 및피해자명예회복등에관한특별법제정 추구에관한청원	509	김원웅의원	'02.10.21	'02.10.23	
8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 및피해자명예회복등에관한특별법제정 추구에관한청원	508	박재욱의원	'02.10.19	'01.10.23	
9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 및피해자명예회복등에관한특별법제정 추구에관한청원	522	김원웅의원	'02.10.26	'01.10.29	
10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 및피해자명예회복등에관한특별법제정 추구에관한청원	523	김원웅의원	'02.10.26	'02.10.29	
11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 및피해자명예회복등에관한특별법제정 추구에관한청원	525	김원웅의원	'02.10.26	'02.10.29	
12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 및피해자명예회복등에관한특별법제정 추구에관한청원	526	김원웅의원	'02.10.26	'02.10.29	

※ 자료 :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 통합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자료집

조례제정권과 여순사건 조례(안)에 대하여

박 갑 주(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I. 머리말

올해 상반기부터 시작되어 100일 이상 지속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쟁취 투쟁본부’의 투쟁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의 연내 입법은 사실상 무산되는 것 같다.

이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피해자, 유족의 통한과 진상을 밝혀줄 자료, 증인들이 은폐·조작보다 무서운 시간의 흐름에 의해 사라져 가는 상황 속에서 각 지역별로 유족, 사회단체, 뜻 있는 지역정치인의 힘을 모아 조례를 통한 진상규명을 시도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여순사건 조례(안)(이하 ‘여순조례’라고 한다)도 그와 같은 시도의 일환인 바, 이 글에서는 여순조례의 합헌성, 합법성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II.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등에 대하여

1. 조례제정권의 근거와 쟁점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불리는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지방의회가 구성된 후 10여 년이 흐르는 동안 각각의 지방의회에서 수많은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몇몇 조례는 법령위반 등으로 대법원에서 다투어지기도 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집행부간의 갈등 등으로 비화되는 일까지도 발생하곤 하였다. 이는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조례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전통적으로 自主立法說과 委任立法說로 대립되어 왔는데, 오늘날 委任立法說을 주장하는 학자는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는 헌법이나 법률이 국가사무로 유보하고 있는 것이 아닌 한 국가의 지시나 후견적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 자신이 합목적적이라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자주적으로 처

리한다는 全權能性과 自己責任性에 터 잡아 지방의회가 정립하는 자주입법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¹⁾

한편 현행 지방자치제도에서 조례제정권의 실정법적 근거는 헌법 제117조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과 이에 근거한 지방자치법 제15조의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조례의 법적 성질, 실정법적 근거에 의할 때, 현행 지방자치제도상의 조례제정권과 관련된 쟁점은 그 범위와 한계(法令優位の 원칙, 法律留保의 원칙)라고 할 것이다.

2. 조례제정권의 범위

지방자치법은 제9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다시 제2항에서 자치사무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로 나누어 57개 항목에 걸쳐서 예시적으로 열거하는 包括的 授權方式을 취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조례로써 규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固有事務(自治事務)와 團體委任事務만을 의미하고, 機關委任事務에 관하여는 법령에 의한 개별적인 위임이 없는 한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며, 판례²⁾도 마찬가지 견해이다.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의 보통지방행정청의 지위에서 처리하는 국가사무이므로 지방의회가 관여할 수 없고, 따라서 조례도 제정할 수 없다는 해석은 불가피한 것이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1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는 국가사무를 열거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형식만을 본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는 이론상 동법 제11조가 열거하는 국가사무 이외의 거의 모든 영역에 미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런데 현행 법령의 해석상 위와 같은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를 구분하

1) 권영성, 헌법학원론, 신판, 1994, 263면 ; 김남진, 행정법Ⅱ, 제5판, 1996, 96면 이하.

2) 대판 1992. 7. 28. 92추31 등.

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이유는 첫째, 그와 같은 구분은 관련법령의 규정으로부터 一義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여건과 행정수요의 변화, 기술진보 등에 따라 변화될 수밖에 없어 어느 사무가 전국적인 사무인지 또는 지방적인 이해에 국한되는 사무인지 가늠하기가 어렵고, 둘째, 지난 30여 년 동안 지방의회의 주요기능을 상급 국가기관 또는 자치단체장이 대행하고 그 승인을 얻어 조례를 제정하여 왔고 자치단체장은 사실상 국가기관이었기 때문에 기관 상호간의 마찰 여지가 없었고, 따라서 위와 같이 사무를 구분할 실익도 적어 현행 법령상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가 일정한 원칙이나 기준이 없이 규정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반론으로서는 그 사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사무로, 국가적, 지방적 이해관계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단체위임사무로, 그리고 전국적 통일이 필요하고 지방적인 이해가 희박한 경우에는 기관위임사무로 각 구분할 수밖에 없으나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형식과 지방화시대를 고려할 때 조례제정권의 대상으로써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의 범위는 확대(해석)되어야 할 것이다.³⁾

3. 조례와 법령의 관계 - 法令優位の 문제

조례는 한정된 지역에 기초를 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법인 동시에 법령과 더불어 통일된 국가법질서의 일부를 형성하므로, 상위법인 헌법과 지방자치법 그리고 개별 법률과 명령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 이와 같은 원칙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판례에 의해서도 뒷받침되어 왔는데, 대법원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수익자 부담금징수에 관하여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불복절차를 訴願法에 의한 소원으로 한정된 도시계획법 제88조에 어긋나는 규정을 마련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는 달리 부담금납입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정한 광주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20조는 무효이다”라고 판시하였다(대판 1963. 2. 22. 62누348).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7조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례가 법령에 위반할 수 없음을 인정하더라도 구체적인 경우, 어떠한 법령에 위반하는가를 판단하기는 쉬운 일이 아닌데, 이와 관련하여 법령의 규정내용이 전국적 최저 기준을 정하고 있다고 새겨지고 그 이상의 규제는 각 지방의 행정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3) 박윤훈, 행정법강의(하), 국민서관, 1994, 132면.

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새겨지는 경우에는 법령의 내용을 초과하는 내용의 조례도 유효하다고 할 것인가, 즉, 超過條例가 허용될 것인가가 문제이다.

4. 法律留保의 문제

헌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는데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유보원칙의 하나인 侵害留保가 조례의 제정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가, 구체적으로는 그 침해유보에 관한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 쟁점이 되고 있다.

먼저 合憲說에서는 위 제15조 단서의 내용은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의 최소한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⁴⁾

이에 대하여 違憲說에서는 헌법은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법령우위의 원칙) 널리 조례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는데, 위 제15조 단서가 그 조례제정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⁵⁾

이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⁶⁾은 일관되게 지방자치법 제15조를 단순히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개별적 위임이 없어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단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는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의 위헌성에 관하여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이를 적용함으로써 그 합헌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개별적인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조례로써 정할 수 있게 함은 지방의회가 주민대표기관이라는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과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포괄적인 자치권을 부여한 취지(全權能性과 自己責任性)에 반하는 감이 없지 않다. 특히 지방자치의 충실화를 통한 분권화의 추진이라는 현대적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조례제정에 침해유보의 원칙

4) 김동희, 행정법Ⅱ, 신정판, 68면; 홍정선, 행정법원론(하), 제4판, 60-61면; 유지태, 행정법신론, 제2판, 688면.

5) 박윤훈, 행정법강의(하), 1997, 118면; 강구철, 행정법Ⅱ, 161면; 서원우, 전환기의 행정법이론, 1997, 261면.

6) 대판 1963. 2. 28. 63다22; 대판 1995. 6. 30. 93추76; 대판 1997. 4. 25. 96추251 등.

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한 법률의 授權은 개괄적인 것으로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조례에 대한 사법심사 또는 규범통제

현행법상 조례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으로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는 지방의회에서 결의 또는 재 결의된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3항 및 제6항에 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상급지방자치단체장이 대법원에 당해 조례안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경우로, 이때는 지방의회가 의결한 조례안 자체의 효력을 판단한다는 의미에서 일종의 사전 예방적, 추상적 규범통제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둘째는 조례가 헌법과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헌법 제107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소송의 受訴法院 및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이 이를 심사하는 경우로, 이때는 그 조례가 상위법령에 저촉되어 무효라는 판단은 당해 사건에 국한된 효력이 있을 뿐이다.

셋째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일체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 받는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III. 여순조례에 대한 검토

1. 자치사무인지 여부

여순조례를 검토함에 있어서, 먼저 여순조례가 규정하고자 하는 대상이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여순조례는 제1조에서 그 목적을 ‘여수·순천 10. 19. 사건(이하 여순사건이라 함)의 과정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의 진상규명과 유족의 명예 회복을 추진함으로써 인권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고 인권신장 및 주민화합에 이바지함은 물론 주민간의 화해와 상생을 이루는 지역공동체의 회복’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1항은 ‘여순사건’의 의미를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여수지역에서 국군·경찰 기타 공무원, 미군, 좌익단체

의 구성원에 의하여 작전수행 기타 조직적 활동과정에서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여순조례는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3조 내지 제9조에서 '여순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추진위원회' 및 '사무국'의 설치, 업무, 구성, 위원회의 운영 등을, 제10조 내지 제15조에서 진상조사의 신청, 개시, 조사방법, 진상조사결과에 따른 결정 등을, 제16조에서 명예회복 및 위령사업을 각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제정목적과 내용에 의할 때, 여순조례가 지방자치법 제11조 제1호의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제3, 4, 6호의 전국적 규모의 사무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제5호 전국적으로 기준의 통일 및 조정을 요하는 사무, 제7호의 지방자치단체의 기술 및 재정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에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하다. 다만, 동조 제2호의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인데, 그것은 여순사건이 한국전쟁 전후 전국적으로 발생하였던 수많은 민간인학살사건 중의 하나이고, 따라서 그에 대한 조사와 보상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획일적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써 제정할 대상이 아니지 않는가 하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여순조례는 목적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이에 의한 주민화합, 지역공동체의 회복에 있고, 대상이 여수지역에서의 민간인희생사건으로 지역적 제한이 있으며, 개별보상이 아니라 명예회복 및 위령사업만을 규정하고 있는바,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할 것이다.

특히 보수정치의 무관심과 외면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의 입법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적인 사건에 대해서 국한하여 진상조사와 명예회복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11조의 규정에 반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한편 현재와 같은 지방화시대에 여순사건이라는 지역적 범주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에서 包括的 授權方式으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에는 어려움이 없고, 따라서 자주입법권을 가지는 지방의회는 당연히 여순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2. 法令優位の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여순조례는 억울하게 희생된 민간인의 진상규명과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으로써 인권신장과 주민화합, 지역공동체의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헌법 제10조, 제37조 제1항에 의

해 보장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인격권 등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합헌적이고, 또한 여순사건과 관련된 상위법령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법률우위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3. 法律留保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여순조례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하는 것, 즉 侵害留保가 아니라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이에 의한 주민화합과 지역공동체의 회복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대한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특히 여순조례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 침해에 대한 회복이고 진상규명을 통한 역사왜곡의 시정이라고 할 때 헌법 제37조 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에 규정된 법률유보의 위반문제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IV. 맺음말

이상에 의할 때, 여순조례는 조례제정권의 범위인 자치사무에 대하여 법령우위와 법률유보의 한계 안에서 제정될 것이고, 추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에 대한 입법적 해결의 한 典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의 제정만이 전국적, 일반적으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1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추진을 위한 조례(안)

2003. . .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순천10.19사건(이하 여순사건이라 함)의 과정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의 진상규명과 유족의 명예 회복을 추진함으로써 인권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고 인권신장 및 주민화합에 이바지함은 물론 주민간의 화해와 상생을 이루는 지역공동체의 회복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① "여순사건"이라 함은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여수지역에서 국군·경찰 기타 공무원, 미군, 좌익단체의 구성원에 의하여 작전수행 기타 조직적 활동 과정에서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 ② "희생자"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순사건으로 인한 사망자, 행방불명자 또는 부상 등의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 ③ "유족"이라 함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여순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업무)

- ① 여순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 결정 및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여순사건 희생자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
 2. 진상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유골 발굴 및 유골의 수습에 관한 사항
 4.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 결정에 관한 사항
 5.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6. 사료관, 위령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
 7. 기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은 시의원 2인, 여순사건과 인권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고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④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⑤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⑥ 위원회에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위원회 간사는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직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 의결로 직무대행자를 정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 기피)

-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건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건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한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였던 경우
- ② 신청인은 위원에게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사무국의 설치)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는 상근위원 1인과 사무국장 1인 및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9조(실비 보상)

- ① 위원장, 상근위원, 사무국장,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및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1항을 제외한 위원에 대한 보상은 여수시각종위원회실비보상조례에 의한다.

제10조(진상조사의 신청 및 피해신고)

- ① 희생자 또는 희생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나 여순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위원회에 진상조사를 신청하거나 피해신고를 할 수 있다.
- ② 집단적 희생사건에 관하여는 일부 희생자나 희생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에 관하여 진상조사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1조(진상조사의 개시)

- ① 위원회는 제10조에 의한 진상조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여순사건으로 인한 민간인 희생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2조(진상조사 방법)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희생자 및 그 친족 기타 관계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
2. 희생자 및 그 친족 기타 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희생자 및 그 친족 기타 관계인, 관계기관, 시설, 단체 등에 대한 관련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
4. 민간인 희생사건이 발생한 장소 등에 대한 현장조사
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제13조(조사의 기간)

- ① 위원회는 최초의 진상조사 개시 결정일 이후 2년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는 기간 만료 2개월전에 시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결정) 위원회는 당해 사건에 대해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민간인 희생사건 인지 여부
2. 사건의 원인. 배경
3. 희생자 및 유족

제15조(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위원회는 제13조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6조(명예회복 및 위령사업) 시장은 여순사건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위령하며, 역사적 의미를 되살려 이와 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령공간(위령묘역, 위령탑 등) 조성
2.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사료관 건립
3. 기타 명예회복 및 위령관련 사업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위원회 규칙의 제정.공포, 위원회의 설립준비는 시행일 이전에 할 수 있다.

2. (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의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참고자료 2

여순사건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조례(안)와 관련하여 조례의 내용과 관련하여 합법성 여부에 대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검토하고자 합니다.

1. 조례의 제정대상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이 때 사무란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를 가리키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러한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한합니다(대법원 2001.11.27 선고 2001후57판결).

당해 조례(안)의 규정내용이 ‘자치사무’인지 여부가 적법성 판단과 관련하여 문제된다고 보여집니다.

2.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구별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배분의 일반적 기준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11조는 국가의 사무로 외교, 국방, 사법, 국세를 비롯하여 국가종합경제개발계획, 측량단위, 원자력개발 등 7개 종류의 사무를 열거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내의 자치사무와 법률에 의하여 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단체위임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무로서 6개 종류의 사무를 예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및 재정에 관한 사무를 비롯하여 주민복지증진, 농림, 상공업 등 산업진흥,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교육, 체육, 문화, 예술의 진흥,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 등으로 예시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전국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무는 국가사무이고, 지방의 국지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무는 고유사무, 이해관계가 중앙과 지방정부의 양자에 같이 미치는 경우는 위임 사무라고 할 것입니다.

고유사무는 지자체의 존립목적에 속하는 사무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무, 지자체의 임의적인 사무로 자자체에서 완결적으로 처리된다고 할 것입니다.

3. 당해 조례(안)와 관련하여

1) 조례 제정의 대상

현행 법체계에서는 헌법 제117조,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해 조례제정권을 규정하고 있고 다만 지방자치법 제11조에서 그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9조는 예시규정이고, 동법 제11조의 반대해석상 동 조항 각 호에 국가사무로 규정된 사무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조례의 제정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당해 조례(안)의 경우 동법 동조 각 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당해 사안은 조례의 규정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2) 조례의 한계

조례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법률유보와 법률우위의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안됩니다.

① 법률유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5조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의 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거나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닌 한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6.23.선고 92추17판결). 따라서 동 조례(안)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률의 위임이 없다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② 법률우위와 관련하여

법률우위의 원칙상 조례는 상위법규에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의 법령이란

조례의 상위규범인 헌법·법률·법규명령뿐만 아니라 헌법의 원칙이나 행정법의 일반원칙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동 조례(안)는 관련자를 처벌하거나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희생된 민간인의 진상규명과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으로써 인권신장과 주민화합, 지역공동체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제11조 제1항, 제37조 제1항에 의해 보장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인격권 등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합헌적이며, 또한 이에 관한 상위 법령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법률우위의 원칙에도 합치한다고 할 것입니다.

③ 통일적 처리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다만 동 조례(안)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에서 문제를 삼는다면 다음과 같은 사유를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동 조례(안)가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1948년부터 1953년 까지 발생한 유사사례는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이에 대한 조사와 그에 따른 보상 등의 문제는 입법을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획일적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할 대상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를 인정하게 되면 지역별로 인정되는 지역과 인정되지 않는 지역이 생기게 되어 오히려 불평등이 발생하고 국민화합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민간인의 희생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공권력행사의 불법을 판단해야 하는바, 이는 지방의회가 판단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 사안의 경우 국가가 전국적으로 발생하였던 모든 유사사례에 대해 입법을 통해 전국적인 기준과 보상 등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공히 인정되는 바입니다. 특히 이의 필요성은 진상규명과 더불어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더욱 요청된다 할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규정을 보면 제1조에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이에 의한 주민화합과 지역공동체의 회복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5조에서는 위령사업 추진 등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동 조례(안)는 책임자 처벌이나 이를 통한 보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범주 내에서는 반드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의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입법적 해결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현재 국회에서 입법이 진행되지

않고 있고, 지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국회에서의 입법을 기다리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 자명하고 더구나 그 입법여부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러한 필요성만으로 조례(안)의 제정을 위법하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침해에 대한 회복의 문제이고 진실규명을 통한 역사의 왜곡을 바로잡는 것은 헌법적 요청이므로, 자주입법권을 가지는 지방의회가 지역적 범주 안에서 이를 구현하려 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㉞ 민간인이 무고하게 희생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시 행해졌던 공권력에 대한 판단이 전제가 됨은 당연하고, 이에 대한 판단은 그에 대한 헌법내지 법률에 의해 권한이 부여된 기관에서 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책임자 처벌과 희생자 등에 대한 국가적 보상 등과 관련하여 그러한 것이고, 동 조례(안)의 취지는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상태에서 책임자 처벌·보상 등과 관련없이 덮혀졌던 진상을 규명하고 뒤늦게나마 관련자의 명예만이라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한 진상조사가 반드시 사법부의 판단이나 헌법 또는 법률적 근거가 있는 기관에 의해서만 행해져야 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4. 소견

민간인 학살과 같은 문제가 조례(안)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이러한 문제와 관련한 판례는 아직 그 예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에 대한 구분기준도 추상적이어서 이를 명확히 결론짓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위법성문제 제기의 여지를 최대한 줄이고자 몇 가지 의견을 덧붙이자면, 우선 제2조 제1항과 관련하여 그 지역적 범위를 ‘여수, 순천 등의 기타지역’으로 함으로 인해 동 조례(안)의 적용범위가 명확하지 못하고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다고 봅니다. 조례(안)은 그 지역적 효력범위가 당해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동 규정을 문리적으로 해석하면 전국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보여 지게 됩니다. 또한 ‘희생자’, ‘유족’ 범주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따라서 그 지역적 범위를 ‘여수지역’ 등으로 명확히 한정하고, 그 지역거주자에 한해 신청 또는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등(제9조 관련) 그 대상자를 명확히 한정하는 것이 위법의 여지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 조례(안)의 성격상 개별 사건법에 해당하므로 한시법으로서의 성격을 명확

히 하거나(조례의 효력기간 내지 존속기간을 한정) 위원회의 존속기간을 한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제6조 제1항을 보면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이내에 제주4·3사건 관련자료의 모집 및 분석을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 제10조 제2항에서 직권조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2조와 관련하여 신고(신청)기간 내지 조사기간을 명확히 한정하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거나, 혹은 위원회의 존속기간 내지 동 조례(안)의 효력기간을 부칙에 규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현재 시행중인 제주4·3사건 관련 조례는 법과 시행령에 의한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제주4·3사건 관련법과 시행령이 제정된 후 이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입니다.

제5장 청산하지 못한 역사, 어떻게 할 것인가?

여순사건 국가폭력의 위법성과 진상규명의 방향	316
제주4·3특별법과 과거청산	328

여순사건 국가폭력의 위법성과 진상규명의 방향

이 영 일¹⁾(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2국장)

I. 머리말

민족해방 60주년, 을사늑약 100주년을 맞는 2005년 을유년은 또한 민족사의 비극, 민족해방의 격동사인 여순사건이 발발한 57주기이기도 하다. 그동안 반세기가 훨씬 넘게 살아온 유족들도 이제서야 그토록 염원하던 민족구성원으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지난 5월 3일 여순사건을 포함한 과거사법 특별법 제정이 그것이다. 실로 57년만의 과거사법 특별법 제정 원년이 되는 해인 것이다. 비록 몇 개 독소조항이 있기는 하나 우리는 이를 통하여 예측과 전쟁, 분단과 증오로 점철된 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21세기에는 통일과 평화, 진실과 화해의 시대가 열려야한다고 믿는다.

이는 역사를 기억하는 집단만이 왜곡된 역사와 망각된 역사를 바로 잡을 수 있으며, 또한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학살자들의 명예회복이 지역공동체성을 회복할 뿐 아니라, 찢겨진 인권의 회복과 더불어 제대로 된 민족현대사의 복원을 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II. 여순사건 국가폭력의 유형과 위법성

여순사건이 정부수립 2달 만에 일어났다는 사실은 이 사건의 성격을 규정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사건을 진압하는 방식 그리고 사후처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1948년 5·10 총선거와 제헌헌법 제정을 통하여 수립된 제1공화국은 남한만의 정권수립에 동의하는 이승만과 한민당 세력의 연대로써 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남한단독정권을 반대하며 남북협

1) 글쓴이 이영일은 (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 소장을 거쳐 현재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2국장(<http://www.jinsil.go.kr>)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전국의 민간인학살문제를 지원하고 있는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전국사회단체협의회(www.genocide.or.kr)’에서는 집행위원장으로, 국가폭력을 주 의제로 설정하고 있는 ‘동아시아평화인권국제학술회의 한국위원회’에서는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상을 이끌었고 단독선거를 보이코트 한 김구는 신생 이승만 정부의 큰 우환이었다. 그는 아직도 대한민국정부를 인정하지 않은 채 제도권 바깥에 머무르고 있었지만, 국민으로부터는 민족주의의 상징으로 신망 받고 있었고 무소속 소장과 국회의원 등으로부터는 반 이승만 세력의 구심점으로 자리 잡으면서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건 직후, 반란의 진원지로서 김구 세력을 지목하고 이를 통해 공격을 취하고자 했던 이승만 정부의 의도는 분명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고 일반 여론도 이에 동조하지 않았지만, 정부는 반 이승만 정치세력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이승만 정권의 주요한 공격 방향이었던 것은 국회에서는 소장과 세력이었고 원외에서는 김구 등의 한독당 세력이었다. 결국 정부는 여순사건을 이들 세력을 제거하는 계기로 이용하려고 애를 썼던 것이다.

그러나 김구의 명백한 부인과 일반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자, 권력에서 소외된 극우정객과 공산주의자들이 합동으로 반란사건을 일으켰다는 정부의 초기 발표는 민간 공산주의자들의 행동으로 그 범위가 점차 변화하게 된다.

즉 반란의 주체는 14연대 장병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조직된 민간 좌익들이라는 것이 발표의 요지였다.²⁾ 이 발표는 정부조직인 국군 내부로부터 반란이 처음 일어났다는 점에서 외면함으로써 반란의 초기 주체가 국군임을 부정하고 그 책임을 민간인에게 떠넘기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다.

정부가 여순사건을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으로 선전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불뚝은 북한 공산주의세력으로 번져 나갔으며, 결국 그 피해는 여수순천지역 일대의 민중이 고스란히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 진압군이 순천과 여수를 완전히 점령한 뒤인 11월 3일 국방부는 ‘전국 동포에게 고함’이라는 벽보를 각지에 살포하면서 여순사건은 반도 남쪽의 한 지방에서 이승만의 실정에 반항하여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소련 지배권을 확대하려는 국제 공산주의운동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³⁾

여순사건의 주체에 대한 규정은 이런 식으로 냉전적 설정으로 이동했다. 이런 뒤바뀐 은 내부 갈등의 책임을 밖의 확인되지 않은 실체에게 떠넘김으로써 지배층의 실정을 은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두 달이 조금 지난 뒤에 발생한 이 사건의 처리야말로 정부의 통치 능력을 대내외에 보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나 다름없었다. 신생정부의 근간인 국군 내부에서 반란이 터져 나왔다는 것은 정부의 통치력에 결정적 흠이 될 수 있었다. 또한 반란에 민간인까지 가담했다는 것은 반란에 대한 민간인의 광범한 지지가 있다는 것

2) 서울신문, 1948. 10. 29.

3) 평화일보, 1948. 11. 5.

을 의미하고 한편으로는 이승만 정부의 실정을 의미했다.⁴⁾ 따라서 이승만 정부는 유엔의 한국 승인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지 못한 허약한 정부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을 결코 인정할 수 없었고 이를 은폐시키려는 시도가 필요했던 것이다.

정리해보면, 이승만 정부는 여순사건의 주체에 대해 맨 처음에는 ① 우익과 공산주의자의 연합이라는 초기 발표에서 ② 민간인 공산주의자가 주동이 되고 군인 일부가 일으킨 것으로 변화되었고 마지막에는 북한으로 그 화살을 돌려 ③ 소련-북한-남한의 공산주의자들로 바꾸어 발표했다. 김구 세력을 공격하려는 이승만 정부의 초기 시도가 실패한 것이 분명해지자 공산주의자들로 그 방향을 바꾸었던 것이지만, 정부책임을 회피하려 한 점은 정부의 변함없는 일관된 의도였다고 볼 수 있다.

1. 유형별로 본 여순사건의 집단학살

여순사건과 관련한 민간인에 대한 집단학살은 해방 전후의 격동기 속에 해방 후 계급적, 민족적 모순의 해결을 둘러싸고 외세, 지배세력과 민중과의 대립이 최고 수준에서 가장 적대적 형태로 폭발된 형태의 반군과 지방좌익, 빨치산의 무장투쟁에 대한 남한 정부의 토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러한 토벌은 결국에 있어 한국전쟁으로까지 이어졌으며, 민간인에 대한 집단학살로 이어져 왔던 것이다. 이를 연대기별, 학살주체별, 피학살자별, 학살행위를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민간인학살의 연대기적 양상이다.

여순사건의 민간인에 대한 집단학살은 크게 네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반군에 의한 집단학살 시기와 진압군과 계엄 하에서의 집단학살 시기 및 토벌과정에서의 집단학살 시기, 그리고 국민보도연맹원에 대한 집단학살 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 반군에 의한 집단학살 시기로 이는 국방경비대 14연대 반군들에 의해 자행되었는데 약 3백명에 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이 기간의 학살은 주로 경찰과의 교전 이후 여수와 순천과 같은 소위 해방구인 점령지역에서 지역 유지들과 포로로 잡힌 경찰들이 학살을 당하였다.

2) 진압군과 계엄 하에서의 집단학살 시기인데 이는 반군에 대한 초법적인 계엄령 발

4) 여순사건은 발생에 대해 서울 AP특파원은 “이 반란사건은 지난 8월 15일에 겨우 수립된 대한민국에 대한 최초의 큰 시련 이었다”라고 논평하였고 미국의 포스트지는 “이승만 박사의 정부가 반란에 대하여 확고한 태도로써 처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즉 안전과 독립을 요구하는 대한정부의 시급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동 반란사건은 한국문제가 토의를 기다리고 있는 유엔총회의 행동에 필경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라고 보도했다(경향신문, 1948. 11. 3).

동의 진압과정에서 아군인 진압군에 의해 자행되었는데 약 1만 여명에 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 기간의 학살은 주로 무차별한 진압과정과 계엄 하에서 자행된 집단학살로 무작위 다수의 민간인들이 이때 학살을 당하였다.

3) 토벌과정에서의 집단학살 시기로써 이는 진압과 계엄상황이 끝나고도 산악지역으로 근거지를 옮긴 반군과 지방좌익에 대한 이른바 빨치산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산악부근의 마을 민간인들이 피아간의 공방에 의해 학살을 당하였다. 그리고 이 토벌과정의 집단학살 시기는 한국전쟁기로 그대로 이어져 갔다.

4) 국민보도연맹원과 정치범에 대한 집단학살 시기이다. 여순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이 지역의 수많은 좌익활동가들이나 정치범들에 대해 사상 전향을 종용했고 또한 대다수의 그들은 그에 따랐던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거의가 집단학살을 당하고 마는데 여수 오동도 앞 바다 애기섬의 150여명, 대전형무소의 여순사건 관계 정치범 1,300여명이 죽임을 당한 사건이 후반기의 대표적인 학살이다.

둘째는 학살의 주체로 본 유형으로 우익 측에서는 국방군, 경찰, 우익단체 등으로 대별될 수 있고, 좌익 측에서는 14연대 반군을 주축으로 지방좌익과 빨치산으로 대별될 수 있다.

셋째는 피학살자들의 유형이다. 피학살자는 우익의 경우 군인, 경찰, 지역 유지인사들 뿐만 아니라 보도연맹원, 형무소 수감자, 제2전선 지역주민, 피난민, 부역혐의자, 공비 및 통비 혐의자, 불심검문 또는 가택수색에 의해 뚜렷한 혐의도 없이 학살의 대상이 되는 거의 전 주민 다수가 학살의 대상이 되었다.

넷째는 학살행위 유형별로 본 민간인 학살과 야만성이다.

학살행위의 유형에는 총살, 생매장, 초토화작전, 수장, 일본도에 의한 참살, 죽창에 의한 척살, 굶어 죽이기, 때려죽이기, 폭격이나 비행기에서의 기총소사 등이 있다.

위의 여순사건에 대한 민간인 학살의 형태를 시기별로 대입하여 볼 때에 그 양상은 한국전쟁 전의 작은 전쟁기인 국지전 군인 봉기 시기에서부터 전면전의 형태인 한국전쟁 전기까지를 관통하고 있으며, 학살주체별 유형은 주로 진압군인 국방군에 의한 것이었으며 일부 반군과 지방좌익에 의한 것도 있었다. 또한 피학살자별로 본 유형은 부역혐의, 공비 및 통비 혐의 등 뚜렷한 혐의도 없이 학살의 대상이 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사건의 진원지인 여수를 비롯하여 순천, 광양, 구례, 고흥, 보성, 화순 일부와 곡성 일부까지도 학살 대상 지역이었다. 또한 최근에는 경남지역의 산청과 거창 일부지역도 학살대상지역으로 파악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비인도적인 학살의 행위에는 지금까지의 모든 죽음의 형태를 총 동원한 인권

박물관과 같이 인권 유린 야만성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이와 같은 여순사건의 민간인 학살은 그 근원을 빨치산의 원조 격인 14연대 반군의 무장봉기에서부터 이야기되어야 하는바 지금까지 나타난 조사와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인 그 피해의 규모를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여순사건 지역 일대에서 여수지역 5,000명·순천지역 2,200명·보성지역 400명·고흥지역 200명·광양지역 1,300명·구례지역 800명·곡성지역 100여명으로 총 10,000여명에 이르고 있다.

또한 학살의 주체는 국군과 경찰에 의해 9,500여명이었으며, 지방좌익과 빨치산에 의해 5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비율로 보면 95%의 절대 다수가 국군과 경찰이라는 소위 아군에 의해 학살 만행이 저질러졌던 것이다.

<여순사건의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 발생지역	피 학살지	피 학살자 수		학살가해자
여순사건 지역	여수	5,000	10,000 (지금까지의 실태조사를 통한 추정치 포함)	국군, 경찰, 반군, 지방좌익
	순천	2,200		
	보성	400		
	고흥	200		
	광양	1,300		
	구례	800		
	곡성	100		
계		10,000		국군 등 : 95% 반군 등 : 5%

※ 출 전

1. 여수지역사회연구소, 1998, 『여순사건 실태조사보고서 1집』
2. 여수지역사회연구소, 1999, 『여순사건 자료 2집』
3. 여수지역사회연구소, 2000, 『여순사건 실태조사 보고서 3집』

2. 초법과 무법적인 상태의 계엄법과 국방경비법

여수순천지역에 계엄령이 선포되었다는 사실이 처음 알려진 것은 육군참모장 정일권 대령의 10월 26일 국방부 출입기자단과의 회견에서였다. 정일권은 “금번 폭동지구에 실시된 계엄령은 작전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 처리를 적절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간략하게 발표하였다.⁵⁾

계엄령은 순천에 대한 작전이 이루어지고 있던 10월 22일 현지 사령관에 의해 처음 내

5) 자유신문, 1948. 10. 27.

려졌다.⁶⁾ 계엄선포문에는 ‘본관에게 부여된 권한’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과연 누가 이 권한을 부여한 것인지, 어떤 근거에서 부여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은 채, 반도를 은닉하거나 밀통하는 자에게는 사형에 처한다는 강도 높은 조치를 포함하고 있었다. 중앙정부가 내린 것도 아니고 현지 사령관의 판단으로 자의적으로 내려진 이 계엄령은 아무런 법적인 근거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⁷⁾

국군이 순천을 완전히 점령하고 여수에 대한 공격이 감행되기 시작한 10월 25일, 계엄령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국방장관 겸임) 그리고 11명의 장관들이 참가한 국무회의에서 결정되었다. 계엄령이 통과된 후 호남방면사령관은 26일자로 여수·순천지구에 임시계엄을 선포했다. 이 선포문은 군사에 관계있는 행정·사법사무는 계엄사령관이 담당한다고 명시하였다.⁸⁾ 22일 현지 사령관의 계엄령에 뒤이어 26일에 또 다시 군사령관에 의한 계엄령이 발표

6) 계엄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엄령 선포

본관에게 부여된 권한에 의하여 10월 22일부터 별명(別命)시까지 좌기(左記)와 여(如)히 계엄령을 선포함. 만일 차(此)에 위반하는 자는 군법에 의하여 사형 기타에 처함.

기(記)

1. 오후 7시부터 익조(翌朝) 7시까지 일절 통행을 금함(통행증을 소지한 자는 차한(此限)에 부재(不在)함).
2. 옥내 외의 일절 집회를 금함.
3. 유언비어를 조출(造出)하여 민중을 선동하는 자는 엄벌에 처함.
4. 반도의 소재를 알 시(時) 본 여단사령부에 보고하여 만일 반도를 은닉하거나 반도와 밀통하는 자는 사형에 처함.
5. 반도의 무기 기타 일절 군수품은 본 사령부에 반납할 것. 만일 은닉하거나 비장(秘藏)하는 자는 사형에 처함.

제5여단 사령부 여단장 육군대령 김백일(사사기 하루다카, 1977, 『한국전 비사』 제1권, 병학사, 354쪽). 당시 계엄사령관은 송호성이었는데도, 계엄령을 김백일 제5여단장이 선포한 점은 당시 계엄령선포의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준다. 한편 사사기 하루다카, 위의 책, 354쪽 ; 대한민국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67, 『한국전쟁사1 : 해방과 건군』, 460쪽 ; 육군본부 전사감실, 1954, 『공비토벌사』, 부록1쪽 등에는 이 계엄령선포문이 10월 22일 이승만대통령이 선포한 것으로 잘못 적혀있다. 김석하·임종명, 1975, 『광복 30년』 제2(여순반란편)권, 전남일보사, 168쪽에는 10월 22일 오전 내무부, 국방부 관계자와 서울에 있던 국회의원들의 연석회의에서 계엄령을 선포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를 이대통령에게 요청하여 22일 정오 계엄이 선포됐다고 나와 있으나, 이 또한 사실 파악의 오해이다. 최윤동 의원의 국회보고에 의하면 22일 비공식적으로 위원장실에 모인 수십명의 의원들은 국회를 급히 소집하고 내무, 국방위원들은 항시 대기하라는 의장의 말을 들은 다음 사태를 파악하기 위해 내무부, 국방부 보고를 듣기로 결론을 내렸다 한다. 황희찬 내무부차관과 채병덕 국방부 참모장의 보고를 들은 것은 23일이었다(『국회속기록』 제1회 제89차, 643쪽).

7) 이승만대통령은 10월 22일 “계엄령을 내렸다고 외국에서 전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사령관이 내린 것은 해당지구에만 내린 것이다”라고 하여 계엄선포 사실을 확인했다(경향신문·동광신문, 1948. 10. 23).

8) 계엄포고문은 다음과 같다. “계엄고시 대통령령으로 단기 4281년 10월 25일 순천, 여수지구에 임시 계엄이 선포되고 따라서 해당 작전지구 일대내 지방행정사무 및 사법사무로서 군사에 관계있는 사항은 직접 본관이 관장하며 특히 군사에 관계있는 범죄를 범한 자는 군민을 막론하고 군법에 준거하여 엄벌에 처할 것을 이에 고시함. 4281년 10월 26일 대한민국 호남방면 군사령관“(동광신문, 1948. 10. 28).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는 계엄법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였다. 계엄법이 아직 제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국무회의가 이를 ‘제정’하고 ‘의결’했던 것이다. 국무위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는 있지만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따라서 관보의 문구로 본다면 계엄령은 명백한 헌법위반이었다.⁹⁾

여수순천지역에 계엄령이 발포되었지만, 일제시대에 있었던 계엄령은 조선에서 한 번도 실제로 발포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작전을 수행하는 군 관계 인물까지도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였다.¹⁰⁾

이런 상황을 의식해서인지 계엄령 선포 후 한 신문은 계엄령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돕기 위해서라며 계엄령을 소개하였는데, 그 내용은 일제시기 계엄령의 내용 그대로였다.¹¹⁾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지만 아직 계엄법은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령 없는 계엄령 선포’라는 상황에 대해 국회는 의문을 제기하고 정부를 추궁했다. 먼저 문제가 된 것은 정부가 어떤 법에 근거하여 계엄령을 발포했는가하는 점이었다.

그런데 정부에서 발포한 것은 계엄령이 분명하였으므로, 이는 헌법 5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긴급명령, 긴급재정처분’과는 다른 경우이므로 정부가 이 조문에 근거하여 계엄령을 발포 할 수는 없었다. 그렇다면 헌법 64조와 72조가 사용될 수 있는 헌법조문인데, 당시에 계엄법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또한 계엄령 발포의 법적 근거로는 사용될 수 없었다.

그런가 하면 공포된 적이 없는 국방경비법도 문제이다. 미군정은 1948년 3월 17일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175호로 국회의원선거법을 공포하고 1948년 7월 12일 대한민국헌법을 제정하고 국회의장 이승만은 7월 17일 이 헌법을 공포하였다. 그리고 정부조직법(법률 제1호)도 같은 날 공포, 시행되었으며 1948년 8월 15일에는 정부의 수립을 내외에 선포하였다. 이렇게 하여 대한민국이 탄생한 것이다.

9) 한편 여순지구에 내려진 계엄령 문구에는 계엄사령관이 누구인지도 분명하게 적시하지 않고 있었다. 11월 17일 대통령령 31호로 공포된 ‘제주도지구 계엄선포에 관한 건’에는 “계엄사령관은 제주도 주둔 육군 제9연대장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10) 계엄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는 구체적인 지침도 내릴 수 없었다. 제주도에 계엄령을 발포하려 했을 때, 계엄사령관 자격을 갖고 있었던 송요찬 제9연대장은 “위에서 계엄령을 내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거냐”고 물었다고 한다(제민일보 4·3취재반, 1998, 『4·3은 말한다』5, 전예원, 389쪽). 더욱이 여순지구 계엄령이 제주지역보다 더 먼저 발포되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여순지구 계엄령에 대한 자세한 법적 규정은 진압군 측도 알 수 없었을 것이다.

11) 「계엄령이란 무엇인가?」, 동광신문, 1948. 11. 9. 메이지 15년(1882)에 포고되어 1913년부터 조선에 적용된 계엄령의 내용은 김순태, 1999, 「제주4·3 당시 계엄의 불법성」, 『제주4·3연구』, 역사비평사, 172~174쪽을 참고. 동광신문은 이 법의 주요부분을 요약한 것이다.

그런데 법령집을 보면 '국방경비법', '해안경비법'은 1948년 7월 5일 공포, 1948년 8월 4일 효력발생, 법률호수 미상이라고 써어 있다. 그러나 1948년 7월 5일에 이러한 법률이 공포된 일이 없다.

미군정은 군정법령(남조선과도정부법령) 이외에 1946년 8월 24일 군정법령 제118호로 창설한 조선과도입법위원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인준(認准), 공포한 일이 있으나 그것은 1947년 5월 6일 법률 제1호에서 1948년 5월 19일 법률 제12호(조선과도입법위원회의 해산)까지를 제정하였을 뿐이었다.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209호(법령 제173호의 개정)가 1948년 7월 3일에 공포되었고, 같은 법령 제210호(동결재산의 해제)가 1948년 7월 12일에 공포되었으므로 그 중간인 7월 5일에 다른 법령이 공포될 수 없고, 더구나 1948년 5월 20일으로써 이미 해산된(법률 제12호) 조선과도입법위원회에서 법률을 제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이렇게 공포된 일이 없는 법률을 법률이라고 하려니까 그 법률호수는 '미상(未詳)'이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 국방경비법을 법률인 양 적용했고, 군법 피적용자인 군인, 군속 등은 물론, 국방경비법 제32조(이적), 제33조(간첩)의 죄는 민간인에게도 적용되었다. 국민들은 이것이 법률인 줄 속아서 살아왔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법률에 의하여 처형되었다.

"국민을 속이는 사람들"이라는 소재목으로 시작하는 유현석 변호사의 법조회고는 '국방경비법'과 '해안경비법'¹²⁾의 문제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국방경비법'은 미군정에 의하여 '공포'된 일이 없고, 따라서 결코 '법률'이 아닌데도 대한민국정부와 법원에 의하여 정당하게 제정. 공포된 법률처럼 적용되면서¹³⁾ 특히 한국전쟁기간 동안 "아마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처형하는 데 동원되었다. 이것이 만일 공포된 일도 없는, 따라서 법률의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법'에 따라 재판을 받고 처형된 사람들은 참으로 무고하게 학살당한 피해자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국방경비법'의 문제가 반세기전, 어처구니없는 한국 역사의 한 장을 장

12) '국방경비법'은 미군정 당시 조선경비대에 적용되는 군형법, '해안경비법'은 해안경비대에 적용되는 군형법의 형식을 띠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거의 같으며 실제로 많이 적용되어 사실상 군형법의 역할을 한 것은 국방경비법이다. 어쨌든 실제로 미군정에 의하여 공포된 일이 없으면서 미군정법률처럼 적용되었다는 점에서 이 두 '법률'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편의상 '국방경비법'이라고만 쓰기로 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글에서 말하는 '국방경비법'의 문제는 '해안경비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국방경비법의 내용은 陸軍本部, 法務五十年史(1996), 100-103쪽, 해안경비법의 내용은 海軍本部, 海軍法務五十年史(1996), 54-62쪽 참조.

13) 1962.1.20.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군형법(법률 제1003호)과 군법회의법(법률 제1004호)을 제정. 공포하면서 그 부칙(군형법 부칙 제5조, 군사법원법 부칙 제8조)에서 '국방경비법'과 '해안경비법'을 폐지하였다. 이처럼 '국방경비법'과 '해안경비법'은 군형법과 군법회의법이 공포될 때까지 군 형사법의 역할을 하였다.

식하는 에피소드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국방경비법'은 국가보안법은 물론 '사회안전법'을 거쳐 보안관찰법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법률에 인용, 계승되는 형태로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다. 그래서 '국방경비법'에 의해 수십 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이 우리 주변에 살아남아 있고, 나아가 이들에게 보안관찰처분의 족쇄를 채우는 근거가 되고 있다.¹⁴⁾

III. 향후 진상규명의 방향과 과제

여순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진상규명운동 8년, 반세기에 비해 결코 긴 시간이라 할 수는 없다. 시간적으로 57년이라 함은 1초도 안 걸리는 단어이지만 이는 20,805일이었으며 499,320시간이나 되었던 것이다. 청춘이 백발이 되고 백골이 되어 구천을 떠돌아 헤 맨지 어언 반세기가 넘는 장구한 세월이었다. 강산이 바뀌어도 다섯 번이 넘게 바뀌어 이제 그 흔적조차 찾아보기 힘든 형극의 세월이었으리라.

그러나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 법이고 진리는 반드시 바로 세우는 날이 있다 하였다. 역사 바로 세우기와 과거청산운동을 위해 위원회 구성, 법 개정, 유족회 강화, 학살지 및 전적지의 사적지화, 전 국민적인 재교육 기관인 사료관 건립, 역사적 재조명과 재해석 및 성격 규정, 정명 작업 등의 여순사건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정작 이제부터라고 본다.

첫째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 국가위원회, 어떻게 구성해 갈 것인가이다.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포함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 국가위원회는 오는 12월 1일을 목표로 발족될 예정이며, 현재 시민사회진영의 의견을 포괄하지 못한 채 정부 중심의 준비기획단이 가동되면서 일정을 추진하고 있다. 위원의 인선 및 직제, 예산, 시령 제정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과거사위원회가 바르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과거 국가인권위원회의 출범 사례에 서처럼 현재의 준비기획단을 해체한 후, 과거사위원회 사무처가 활동하기 전에 사무처를

14) 보안관찰법 부칙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국방경비법 제32조와 제33조 위반으로 복역한 사람은 보안관찰법 제2조에 정한 "보안관찰대상범죄"를 범한 것으로 보아 보안관찰처분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보안관찰처분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이 보장하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점에 관하여는 UN Doc. CCPR/C/79/Add. 6, 25 September 1992; Report on the mission to the Republic of Korea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Mr. Abid Hussain, submitted pursuant to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 1993/45. UN Doc. E/CN.4/1996/39/Add.1, 2 November 1995 참조. 이 글에서는 보안관찰법과 보안관찰처분의 문제점에 관하여는 다루지 않고 단지 '국방경비법'의 문제점만 언급한다.

구성하기 위한 과거사위원회 규칙으로 ‘과거사위원회 사무처 준비단’을 독자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는 실질적인 민관합동준비기획단의 성격이 되어 매우 효과적인 방안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위원장과 위원을 조기에 선임하고 이를 토대로 사무처장을 빨리 임명하여 직제와 운영에 관한 모든 것들을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항들은 진실규명과화해를위한기본법 부칙 제1조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이기도 하다. 이는 특별법 제정 과정이 매우 힘든 정치권과의 투쟁에서 얻어낸 성과인 만큼, 위원회가 예정된 일정대로 출범하는 것보다는 올바르게 구성되어 제대로 출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는 몇 개 조항에 걸쳐 심각한 문제 조항이 있는 법 개정 작업이 동시에 수행되어야 한다. 소위 진실과 화해를 위한다는 특별법이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 조사한다는 조항이 그것이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학계와 법조계 및 공무원과 성직자로 제한하여 시민사회 진영과 언론계를 포괄하지 못한 채 다양한 민족구성원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한 조항 또한 그것이다.

이는 특별법을 통해 지난 잘못된 과거사를 바로 잡아나아 감으로써 갈등과 대립이 아닌 민족사의 진실과 화해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가장 치열하게 이 운동과 사업을 전개하였던 시민사회진영과 언론 단위가 배제되었다는 것에 다른 아닌 것이다.

셋째는 이제 여순사건의 피해 당사자인 피학살자 유족들이 스스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한다. 문제 해결의 방안으로 여순사건 대상지역 뿐 아니라, 전국의 민간인학살 사례지역의 유족들이 단일 대오로 더 강하게 묶여져야 한다. 지난 1960년도 전국유족회의 조직처럼 광범위하고도 강고한 전국 조직화와 더불어 정치 세력화는 향후 다양한 형태의 정치 세력에 밀리지 않는 기본 대오이며,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가장 큰 동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유족들의 광범위한 전국 조직화, 이는 올바른 과거사를 정리하는 정치력에 다른 아닌 것이다.

넷째는 추모위령사업의 조례 제정과 학살지, 전적지의 사적지화이다.

최근 대전 산내학살의 골령골 개발이나 경북 경산 코발트학살 사건의 학살지 개발사업의 예에서처럼 자치정부나 민간 기업에 의해 더 이상 학살지, 전적지가 무분별하게 난개발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살아 있는 역사의 현장이며, 복원되어야 할 역사이기 때문이다.

다섯째는 진상조사 이후 민간인학살에 대한 추가 진상보고서 보완작업이나 사료관 운영을 위한 정부출연기금의 과거사 연구재단 설립이다. 이는 교과서나 각종 정부기록 간행

물에 반영사업으로 연계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또한 역사적 교훈의 확립이란 취지에서도 여순사건은 그 동안 정부의 심한 왜곡으로 인해 국민들이 전혀 잘못 알고 있어서 교과서를 통한 전 국민적인 재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섯째, 사실규명과 운동의 성과로의 이행이다.

여순사건 민간인학살의 문제가 단순한 한풀이 역사로만 노정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최근 제주4·3항쟁이나 거창양민학살사건은 특별법이 통과되어 시행되었다. 그러나 특별법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모든 일이 끝난 것은 아니다. 사실규명을 위해 당시의 중요한 한 흐름이었던 변혁적 이데올로기와 그것을 위해 싸웠던 운동가들의 모습을 찾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왜, 여순사건이 발생했는가와 여순사건의 진정한 해결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셈이다. 또한 현재의 동학농민혁명과 광주민중항쟁, 제주4·3항쟁이 전국적인 행사가 되지 못하고 지역에 국한하는 행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살펴봐야 한다. 제주4·3뿐 아니라 동학농민혁명과 광주민중항쟁에 대한 현재의 운동성과가 모든 사람에게 돌아가는 방식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이다. 이를 위해 여순사건의 역사적 재조명 및 재해석과 더불어 여순사건의 성격 규정과 정명 작업도 아울러 이루어져야 한다.

일곱째, 여순사건의 문제를 해결함은 피학살자의 인권 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은 물론 진정으로 국민적 화해와 상생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명백한 잘못이 인정될 때에는 정부는 공식 입장 표명 등에 대해서 정신적인 명예회복뿐 아니라 물질적인 피해배상도 반드시 최소한의 성의가 따라야 하는 것이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인명이 살상되었는데 그것도 무고하게 죽었는데도 이를 애써 무시함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IV. 맺음말

결론적으로 여순사건은 제주 4·3사건과 함께 진압과 토벌과정에서 이뤄졌다. 하지만 여순사건의 희생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아직도 불분명하다. 다만 정부의 자료는 총 7,000여명이 희생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 기록은 여수지역사회연구소가 피해실태조사 통계 추정치인 10,000여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중 95%의 절대 다수가 국군과 경찰이라는 소위 아군에 의해 학살 만행이 저질러졌던 것이다.

여순사건이 일어난 지 57년이 지났지만, 이 사건의 사실과 실체에 대한 규명은 아직도 요원하다. 이제서야 특별법이 제정되어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시작되려 하기 때문이다. 57년이 지나도록 말없이 묻혀있는 죽은 자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산 자

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울려 퍼질 수 있는 날은 언제인가?

1948년 같은 해에 일어난 제주4·3은 특별법이 제정 시행되어 최종 진상보고서를 발표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정부 차원의 사죄를 하고 있는 현재의 움직임과 비교하여 여순사건을 돌이켜보는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전국 인구 1%의 정치력으로 제주4·3을 돌파해 낸 제주도민의 역량을 우리는 의미 있게 그리고 유심히 보아야 한다.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해내기 위한 유족들의 끈질긴 의지와 과거사 청산에 대한 시민사회 진영과 지역 언론들의 치열한 역사의식 및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제주도민들의 역량은 아무리 칭찬을 해도 그 지나침이 없을 것 같다.

여순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제주4·3이 그 귀감이 된다고 본다. 여순사건의 문제를 확실하게 풀고자 하는 유족들의 주체적인 의지는 물론 지역의 학계를 비롯한 시민사회 진영 및 언론 자체가 이 문제에 대한 보다 치열한 역사의식과 애향심으로 시대정신에 충실할 때에만 여순사건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으리라 보기 때문이다. 이제는 지방자치 정부와 시민사회진영이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

제주4·3특별법과 과거청산

김 창 후(제주4·3연구소 전 소장)

I. 머리말

과거청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5·18민중항쟁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문제가 화두로 부각되며 과거청산에 대한 논의의 물꼬가 트였지만 청산되어야 할 과거사가 적시되고, 관련 법률이 제정되며 법적·제도적으로 활발한 청산작업에 착수하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사회는 일제의 강점과 해방, 곧 이어진 민족분단, 그리고 긴 군사독재시기를 거치며 참혹한 시련을 겪었다. 그러나 이렇게 파행을 거듭한 우리 역사에서 부정적으로 축적·형성된 학살과 탄압, 인권유린의 실상들은 은폐되고 왜곡된 채 또 다른 희생과 억압만을 강제해왔다.

최근 이런 우리들의 부정적인 인적·물적·법적·제도적 유산을 청산해 더 이상 사회갈등요인으로 작용치 못하게 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로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거창특별법, 제주4·3특별법, 민주화운동보상법, 의문사진상규명법, 진실규명과화해를위한기본법(과거사법),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등에관한진상규명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들이 제정돼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과거청산은 정치·사회적 변화에 따른 체제이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또한 우리와 유사한 과거청산의 역사를 갖고 있는 프랑스, 독일, 러시아, 칠레,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사례에서 보듯 과거청산은 한 번에 완결되지 못하는 특징이 있다. 그 이유야 다양하지만 과거사에 대한 진상과 책임 규명이 피해자집단이나 사회일반의 요구수준에 미치지 못해 시간이 흐르다 다시 이슈화되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이와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먼저 과거청산의 의미를 검토하고, 과거청산에 대해 지금까지 제시된 주요 원칙들 중 중요한 주아네 보고서의 인권옹호 기준과 광주 5원칙을 간단히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 사례로 제주4·3특별법이 2000년 1월 공포된 후 지금까지 이 법에 따른

제주4·3사건에 대한 과거청산의 성과와 향후과제를 살펴본 후, 결론으로 우리 사회에서 과연 올바른 과거청산의 길은 어떤 것인가 하는 점을 같이 생각해볼 것이다.

II. 과거청산의 의미와 원칙

1. 과거청산의 의미

과거청산의 근본적 목적은 잘못된 과거사를 정리하고 극복하려는 것이다. 과거청산의 의미와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지만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과거청산에 대해서는 주로 우리 사회의 민주적 개혁을 요구하는 인권·사회·학술·법조 단체에서 다양한 관심을 표명하며, 굴곡의 우리 과거사에 대해 줄기찬 청산운동을 벌여 왔다. 이들은(박원순, 조현연, 김동춘, 안병욱, 이재승 등) 과거청산을 “구정권의 권력남용으로 인한 비리와 인권유린에 대한 일정한 정리”에서부터, “일제시기 친일·부일행위에 대한 정리”까지 시기를 거슬러 올라가며 과거청산의 내용과 시기를 규정했다.

또한 최근에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서울대(안병직 외)에서 <역사와 기억-과거청산과 문화정체성 문제의 사례별 연구>를 수행해 세계의 과거청산 사례에 대한 본격적인 학문적 접근을 시도했다. 이들은 이 연구의 결과물로 『세계의 과거사 청산』(안병직 외 10인, 2005, 푸른역사)을 발행하기도 했다. 이들은 과거청산의 의미를 비교적 쉽고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선 그 의미를 ‘과거규명’과 ‘과거성찰’의 두 가지로 파악하고, “첫째 ‘과거규명’은 은폐·축소·왜곡 또는 금기시된 과거사의 진상을 밝혀내고, 그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시행함을 뜻한다. 다시 말해 과거규명은 사건의 진상과 아울러 이에 대한 책임의 규명, 가해자의 처벌, 피해자의 보상과 복권, 명예회복 등을 포함한다. 그런 점에서 그것은 사법적 또는 정치적 측면에서의 과거청산인 셈이다. 둘째 과거청산의 또 다른 의미는 ‘과거성찰’로 이는 불행한 과거사에 대한 진상규명의 차원을 넘어 그에 대한 비판과 반성, 애도와 치유의 노력을 의미한다. 과거성찰의 측면에서 보면 과거청산은 단순히 죄와 벌, 처벌 및 보상과 관련된 사법적 혹은 정치적 문제만은 아니다. 그것은 역사의식과 역사인식, 가치와 윤리, 문학과 예술의 문제이자 동시에 기념일, 기념물 등 공식·비공식적 기억과 기념문화의 문제이다. 아울러 과거성찰의 측면에서 보면 과거청산은 단지 가해자 혹은 피해자로서 과거사에 직접 연루된 특정 당사자 개인이나 일부집단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 국가나 한 사회 구성원 전부, 나아가 후속세대 전부의 문제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2. 과거청산과 관련한 기존 논의

가. 주아네 보고서의 인권기준

우리가 인권을 옹호하고 신장하는데 적합한 과거청산의 기준을 말할 때 주아네의 보고서를 참고할 수 있다. L. 주아네는 유엔인권위원회의 <차별방지 및 소수자 보호 소위원회>에서 소위원회 결의 제1995/35호에 따라 준비한 최종보고서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과거청산의 원칙들을 제시했다(그 내용은 『민주법학』 제11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편, 1996).

그 중 중요한 것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① 피해자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가 진실을 알 권리 ② 공정한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그 활동의 보장 ③ 진상조사기록의 보존과 공개 ④ 책임자 처벌에 대한 요구 ⑤ 국제법원, 외국법원에 대한 관할권 보장 ⑥ 공소시효, 사면, 비호권 등의 배제와 제한 ⑦ 국가의 배상 의무(원상회복, 피해배상, 재할조치) ⑧ 국가의 상징적 조치(국가책임에 대한 공식인정,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복권의 공식선언, 기념 및 연례적인 추모, 역사교재 및 인권교재에 관련 사실 수록) ⑨ 재발 방지(관변폭력집단의 해체, 비상입법과 비상법원의 폐지 등

나. 광주민주화운동의 청산 5원칙

1980년 5월 광주민중항쟁부터 시작하여 1997년 말 민주적 정권교체가 확정되기까지의 민주주의와 정의의 실현을 위해 투쟁한 역사적 운동을 보통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지칭한다. 이 시기 무소불위의 독재정권에 대항해 시민들은 정치적 좌절을 딛고 광주학살의 최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민주적 정권교체를 이룩했다. 20년에 가까운 어둠의 시대에 광주민중항쟁 유족은 물론, 부상자, 구속자를 포함해 전국의 시민단체는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등 ‘광주문제 해결 5원칙’을 제시하며 일련의 사회운동을 전개했다. 당시 제기된 청산 5원칙은 다음과 같다.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배상, 명예회복, 정신계승을 위한 기념사업

III. 제주4·3특별법과 과거청산

1. 제주4·3특별법의 실행과 4·3항쟁의 과거청산 현실

4·3특별법이 2000년 1월 공포된 후, 이 법에 따라 각종 위원회가 설치되고, 희생자 신고(최종 신고 된 희생자수: 14,028명, 보고서의 추정 사망자수: 2만5천~3만 명)가 이루어졌다. 또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이후 ‘보고서’)』 작성기획단이 구성돼 자료 조사 및 분석에 들어가 2003년 10월 정부의 공식 보고서가 발행되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도 현지에서 이 해 10월 31일, ‘저는 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과거의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제주도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고하게 희생된 영령들을 추모하며 삼가 명복을 빕니다’ 하고 국민과 제주도민들에게 사과해 희생자들을 신원(伸冤)했다. 우리 과거청산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쾌거였다. 그러나 이렇듯 보고서의 발간과 대통령의 사과가 겉으로 볼 때는 대한한국의 불행한 과거에 대한 청산의 역사에 획기적인 이정표를 하나 세운 듯 보이나, 속을 들여다보면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 문제점은 4·3특별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잉태하고 있었고, 이러한 사례는 우리만이 아니라 과거청산의 역사를 갖고 있는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볼 수 있다.

원래 과거청산의 방향과 내용은 권위적 정권에서 민주적 정권으로 이행될 때 그 이행과정의 성격에 좌우되며, 과거청산작업이 올바르게 수행되려면 국민적 합의 속에 국민적 청산의지가 수행되고 확산되어야 한다. 민중봉기나 국민의 압도적 지지 속에 민주정부가 탄생해 ‘급격한 이행’을 시행할 경우, 인적청산과 피해배상, 국가적 기념을 주요 내용으로 한 특별법이 탄생해 적극적·원칙적으로 청산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어렵사리 타협적 민주정부가 들어선 ‘완만한 이행’의 경우에는 청산대상자들이 정치적으로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협적 조치와 법안이 만들어 지고 청산작업은 파행을 거듭한다. 우리는 현재 후자에 속한다 할 수 있는데, 체제이행을 통해 국가폭력은 저지했지만 국가로 하여금 과거의 국가폭력을 스스로 인정하게 하는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럴 경우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보듯 정부는 애초부터 책임자 처벌과 배상은 아예 무시하고 소극적 진상조사를 실시한 후 위령사업을 행하고, 유족들에게는 신원과 약간의 생계비 지원으로 모든 책임을 다했다고 한다. 완만한 이행은 장기이행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하는 말이 이 말에 다름 아니다.

2. 성과

가. 정부의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발간

- ① 이 보고서는 해방과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우리 땅에서 벌어진 민간인 집단학살(Genocide)에 대한 우리 정부 최초의 공식적(official) 입장 표명이다. 이 보고서에서 정부는 4·3항쟁 당시 국가폭력으로 무고한 민간인이 집단학살 됐음을 인정했다.
- ② 시민사회단체, 언론 및 유족들이 끈질기게 벌인 진상규명운동이 비로소 열매를 맺어 진실투쟁을 위한 사회공동체 재결집의 초석이 되었다.
- ③ 제주사회를 반세기 동안 억누르던 이데올로기의 망령이 사라져 붕괴됐던 전통적 마을 공동체 복구의 시발점이 되었다.
- ④ 향후 유사한 법안(과거사 정리법 등) 처리의 시금석이 되었다.

나. 제주4·3평화공원 조성 및 제주4·3유적 보존·복원/집단암매장지 발굴 사업

- ① 제주4·3평화공원 조성으로 4·3항쟁은 집단학살의 아픈 역사를 넘어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세계에 전파하는 성스런 사건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 ② 제주도에는 4·3유적이 600여 개소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중 중요유적 일부를 보존·복원하는 사업은 4·3항쟁의 현장으로서 항쟁의 진실을 전 세계에 알림은 물론 제주4·3평화공원과 연계해 평화와 인권의 성지로 거듭나게 됨을 의미한다.
- ③ 집단암매장지 발굴사업은 희생자의 신원을 위한 으뜸사업으로, 4·3항쟁 당시 집단학살의 실상을 널리 알려 인명의 소중함을 후세들에게 전파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체득케 한다.
- ④ 향후 유사한 사업(과거사 정리법 등에 따른 후속사업) 시행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희생자 신원

- ① 대통령의 국가폭력에 대한 대국민 사과는 이데올로기의 족쇄에 묶여 연좌제 등의 온갖 피해를 당했던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첫걸음이었다.
- ② 대통령의 사과는 보고서의 7개 건의사항 즉, 제주4·3평화공원 조성 지원·추모기념일 제정·보고서를 평화 인권자료로 활용·생계가 어려운 유족 생계비 지원·집

단암매장지 및 유적 발굴 지원·진상규명 및 기념사업의 지속 사업을 지속하게 해 주는 근거가 되었다.

- ③ 대통령의 사과는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전국 각지에서 발생했던 유사한 민간인 학살사건들에 대해 진상을 규명해 정부의 잘못을 가림으로써 사회정의를 세우고 우리의 밝은 미래를 기약케 하는 초석이 되었다.

3. 과제

가. 4·3특별법의 개정

4·3특별법은 인권법을 표방하고 탄생했다. 그러나 완만한 이행기의 타협의 산물로 고고성을 올린 4·3특별법은 보고서가 발행되고 희생자 심사가 마무리되어 가는 2005년 말 현재, 일각에서는 신원법(伸冤法)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4·3 관련단체와 유족들은 이번 국회 회기 내에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해 작업을 벌이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제주4·3사건의 정의를 명확히 함

(개정안) “제주4·3사건”이라 함은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서청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단정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② 희생자 및 유족의 범위를 확대함

(개정안) “희생자”라 함은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후유장애가 남아 있는 자, 구금된 사실이 있는 자 또는 수형자로서 제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유족”이라 함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하고,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민법상 친족 범위 내에 있는 사실상의 유족 중에서 제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으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③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집단 학살지, 암매장지 조사 및 유해 발굴 수습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④ 위원회는 추가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6월 이내에 『제주4·3사건 추가진상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

(개정안) “委員會는 진술서 제출 요구, 출석 요구, 감정의뢰, 실지조사, 동행명령 등 위원회의 추가 진상

조사 방법 및 권한에 관하여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위원회는 제6조 제1항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월 이내에 『제주4·3사건 추가진상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보고서 작성 작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제주4·3사건 추가진상조사 보고서 기획단> 또는 <제주4·3사건 추가진상조사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매년 4월 3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함

⑥ 정부는 <제주4·3평화인권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함

(신설)

ㄱ. 정부는 제주4·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 등을 수행할 <제주4·3 평화인권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출연은 다른 법률에 의한 기금의 출연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ㄷ. <제주4·3 평화인권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
2. 추모사업 및 유족 복지사업
3.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과 관련한 문화·학술 활동
4.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ㄹ.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주4·3 평화인권재단>의 사업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ㅁ. <제주4·3 평화인권재단>의 독립성은 보장된다.

⑦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에 불구하고 별도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⑧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하여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준하여 특례 혜택을 부여하도록 함

⑨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희생자 및 유족은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의 문제점 보완

① 역사청산 의식의 결여

보고서의 작성 작업은 4·3의 원인이나 배경, 경과 등을 나열하는 것만도 아니며, 미시적 역사관으로 사건의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들춰내는 것만도 아니다. 이 작업은 한 시대의 불행한 역사를 청산하는 것이다. 개개의 진상에 대해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춘 전문가들이 분명한 평가 작업을 수행해야 진상이 규명될 수 있다. 과거청산의 역사를 가진 다른 나라에서도 청산 작업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양상을 달리해 다시 거론되기 때문에 '역사의 청산' 문제는 '청산의 역사'를 동반한다고 하나, 진상은 규정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보고서는 제주도 도처에서 집단학살이 자행됐다는 점을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

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쩔 수 없이 공권력이 행사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과잉진압을 해 많은 민간인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몰타기식 서술이 도처에 산재해 있다. 이런 식의 서술법은 용어 선택의 문제에도 가해져 ‘초토화작전-->강경진압작전, 집단학살-->살상’으로 정부 입맛에 맞게 순화(?)되고 말았다.

② 바른 이름(正名) 찾기(4·3의 성격 규명)

보고서는 특별법에 근거하여 ‘제주4·3사건’이란 명칭을 사용했다. 보고서에서 사용한 ‘사건’의 의미는 ‘과거에 있었던 특정한 일’을 말하는 일반적 개념이다. ‘4·3의 바른 이름을 찾기’는 사실 ‘4·3의 성격규명’에 다름 아니다. 보고서에서 4·3의 역사적 성격규정이 유보된 것은 시대상황의 탓일 수도 있다. 향후에는, 특별법에 4·3의 발발 시점을 1947년 3월 1일로 정했듯이 1947년 상황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져 4·3 정사(正史) 정립의 단초가 놓여 져야 할 것이다.

③ 학살 책임자 규명

과거청산이 원만히 이루어지려면 가해자를 명확히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보고서에는 수괴급으로 이승만(대통령), 조병옥(경찰 책임자), 함병선, 송요찬(현지 군책임자), 미국 등을 상징적으로 언급하는 수준에서 그쳤다. 제주도에서 국가폭력으로 민간인이 집단학살 되었다는 것을 정부가 인정하면서도 학살의 책임자 규명에는 소홀한 것이다.

④ 희생자의 선별

4·3특별법은 ‘사망자·행방불명자·후유장애자’를 희생자로 규정하고 있다. 원래 이 규정 자체가 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아무 근거 없이 이루어져 문제점으로 남았었는데, 보고서도 이 규정을 그대로 인용하는데 그치고 있다. 물론 이 규정은 행불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수형인(불법재판 희생자, 형무소 재소 희생자)’도 희생자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 단서를 마련하기는 했다. 그러나 실상 보수우익 세력들의 끝없는 방해로 당시 법적 근거도 없는 소위 군사재판으로 희생되거나 행불된 희생자들의 희생자 인정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며, 우익들이 당시 좌익 사상을 가진 수괴급을 문제 삼자 헌법재판소도 우익의 손을 일부 들어주는 형식으로, ‘▽ 수괴급 공산무장병력 지휘관 또는 중간간부로서 군정의 진압에 주도적·적극적으로 대항한 자 ▽ 모험적 도발을 직·간접으로 지도 또는 사주함으로써 제주4·3사건 발발의 책임이 있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간부 ▽ 기타 무장유격대와 협력하여 진압 군경

및 동인들의 가족, 제헌선거 관여자 등을 살해한 자 및 경찰 등의 가옥과 경찰관서 등 공공시설에 대한 방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자'를 판결문에 희생자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함으로써 희생자 선정에 악영향을 끼쳤다.

학살은 좌익에 의한 것이든 우익에 의한 것이든 정당화될 수 없다. 집단살해방지조약에서 말하는 살해는 인간 일반에 대한 것이지만 어떤 특정한 정치적 성향을 가졌다면 선별해 버린다면 그것은 국제인도법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할 수 있다. 민주적 정권으로의 완만한 이행은 이렇게 곳곳에 문제점을 다시 심어놓아 결국 앞의 4·3특별법 개정 조항에서 보듯 추가진상조사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발전해버렸다.

IV. 맺음말

4·3특별법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로 하여금 공식 보고서를 채택케 하고, 정부를 대신한 대통령의 사과도 받아냈다. 또한 4·3특별법은 제정 후 유사 법률의 제정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4·3특별법의 태생적 한계인 가해자 처벌과 배상의 원칙의 부재는 제2, 제3의 과거청산을 불러올 소지를 애초에 안고 있었고, 그 결과 주아네 보고서가 급했듯 국가의 상징적 조치나 재발 방지 프로그램이 부재해 4·3특별법의 성과물 자체를 당대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해서는 과거청산을 경험한 기존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를 참고할 수도 있고, 외국의 사례들을 폭넓게 수합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우리에게 맞게 활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과거청산이 공적 차원의 '집단기억'을 만드는 행위이고, '기억 만들기' 측면의 과거청산은 현재와 미래의 필요성에 의해 과거를 해석하는 정치적 행위라는 사실을 명심한다면, 완만한 이행기의 우리가 갈 길은 자명하다. 이제 시작이다. 다시 특별법을 쟁취하던 초심으로 관련단체나 유족들은 돌아가야 한다. 4·3진상조사 보고서가 대통령이 무엇을 사과해야 하는가 하는 내용도 불투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국가가 정치적·사회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언급도 일체 없다는 총체적인 혹평도 있지만 곳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이다.

4·3특별법이 개정안을 상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아직 싹도 틔워보지 못한 과거사 정리법도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물론 이들 개정안 자체도 주아네 보고서나 광주 5·18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지만 이 모든 과정이 인권과 평화를 우리 땅에 뿌리내리기 위한 힘들지만 소박하고, 우리 모두가 힘차게 가야 하는 길임을 명심할밖에 없다.

제6장 학살·청산·화해

여순사건과 민간인학살	338
여순사건과 군대의 변화	353
여순사건과 4·3항쟁에서의 민간인 학살 유형	365

여순사건과 민간인학살

김 득 중(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I. 여순사건의 영향

1948년 10월 19일 저녁, 전라남도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가 제주도 봉기를 진압하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봉기를 일으켰다. 제14연대 하사관 그룹은 제주도로 파병되어 동족을 죽일 수는 없다며 충구를 이승만 정권으로 돌렸다.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하는 신생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진지 두 달이 지났을 때였다. 14연대 하사관들이 주도한 봉기는 금세 일반 장병들의 동의를 얻으며, 다음날 여수와 순천을 점령했고 곧이어 전남 동부지역 수 개 군으로 번져 나갔다. 여수와 순천에서는 봉기군의 엄호 아래 인민위원회가 재건되었고 기초적인 ‘인민행정’이 실시되었지만, 진압군이 즉각 투입되어 순천은 23일, 여수는 27일에 완전히 진압되었다. 하지만 여수와 순천이 진압되었다고 해서, 봉기군이 완전히 전멸한 것은 아니었다. 14연대 봉기군과 남조선노동당 등의 지방 좌익 세력 등은 부근의 산악지대인 지리산에 입산하여 빨치산투쟁을 계속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남쪽에 세워진 뒤 2개월 만에 일어난 여순사건은 1946년 미군정 하에서 일어났던 ‘대구10월항쟁’이나 ‘제주4·3항쟁’보다 훨씬 더 큰 정치·사회적 영향을 남한 사회에 미쳤다. 특히 반이승만 정치세력에 대한 지배정권의 공세는 여순사건을 계기로 급속하게 강화되었고, 한반도 남쪽을 지배했던 미군의 철군정책도 변화되었다.

미군은 14연대 군인봉기를 진압하는데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10월 20일 국방부장관과 군 수뇌부와 함께 긴급회의를 가진 미군은 광주에 토벌사령부(Task Force)를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봉기 진압을 위해 최신 군사 장비를 지원하는 한편 군사고문단원으로 하여금 작전과 정보 분야에서 국군을 ‘지휘’했다.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봉기에 맞서 미군은 진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고, 그 덕분에 여순탈환작전은 빠른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¹⁵⁾ 14

1) 여순봉기에 대한 논문을 최초로 발표했던 樋口雄一은 여순봉기가 미군에 반대했던 봉기임을 상기시키며, 여순봉기가 국민당을 지원했던 미국과 싸운 중국 인민의 투쟁 그리고 프랑스 제국주의와 싸운 베트남 독립해방투쟁과 공통의 과제를 가진 투쟁이었다고 평가했다(樋口雄一, 1967, 『麗水·順天蜂起』, 『朝鮮研究』62, 37~38쪽).

연대 봉기와 뒤이은 빨치산투쟁으로 이승만정권의 위기가 눈앞에 펼쳐지자 미군 철수는 1949년 6월말에야 비로소 이루어졌다. 미군의 군사적 도움과 정치적 후원 없이는 이승만정권의 불안정성이 해소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도 분명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반대파를 관제 공산당으로 몰아 처벌할 수 있다는 소장파의 우려와 강력한 반대를 뿌리치고 여순사건 뒤 한 달 보름 만에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다. 1949년 1월부터 9월말까지 형무소에 수감된 사람들 중 80% 이상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되어 있었다.¹⁶⁾ 국가보안법은 현재까지도 남아있는 반공국가 유지의 가장 중요한 법적 제도이다.

한편 군대의 사회적 영향력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해졌다. 여순사건 진압에는 대북경계와 제주도 진압병력을 제외한 전 군대가 작전에 투입되었다. 이를 통해 연합작전의 경험을 익힌 국군은 국방경비대 시절 경찰에 억눌려 지내던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 경찰뿐만 아니라 전사회에 압도적인 규정력을 갖게 되었다.¹⁷⁾ 군인들이 반역적 봉기를 일으켰다는 사실은 이승만정부가 즉각적으로 좌익 혐의 군인들을 숙청하고 군대를 반공 이데올로기로 무장시키는데 좋은 구실로 이용됐다. 숙군으로 처벌된 장병 숫자는 당시 전체 군 병력의 5%나 되었고¹⁸⁾, 이 공백은 해방 후 난립했던 청년 테러 단체의 젊은 조직원들이 대거 군에 들어옴으로써 매꾸어졌다. 이들은 1946년부터 반공투쟁의 최전선에서 활약하던 반공주의자들이었다. 이러한 인적 기반을 기초로 한국군은 한국전쟁을 거친 뒤에는 가장 강력한 반공조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여순사건을 철저히 진압한 이승만정권은 국제공산주의세력과 북한의 침략성을 전면에서 내세우면서 11월 초에 극우인사들을 포함한 반이승만세력을 대대적으로 검거하는 한편 반공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한 주민통제체제를 하나씩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1949년에는 가구 구성원 외에 다른 사람이 집에 머물면 경찰서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는 유숙계(留宿屆)제도를 실시했고, 좌익들을 선도하고 회개시킨다는 명목으로 보도연맹(保導聯盟)을 조직했다. 1949년 1월에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호국군을 편성하여 4개 여단을 창설하였다. 각 학교에는 군 장교가 파견되어 준군사조직인 학도호국단을 만들었다. 이승만정권은 여순사건 이후 학계, 교육계, 언론, 공무원, 사법계 등에 대한 대대적인 좌익색출작업을 계속 벌여 혐

16) 『한성일보』1949.12.4; 『국도신문』1949.12.24.

17) 여순사건을 진압한 군 장교들-송요찬, 함병선, 백선엽, 김점근, 박정희 등-은 이후 주요 요직을 거치며 한국사회의 중심인물로 활동했다(樋口雄一, 1976, 『麗水・順天における軍隊蜂起と民衆』, 『海峽』4, 社會評論社, 74쪽).

18) 1961년 5·16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는 여순사건 진압을 위한 토벌사령부의 일원으로 광주에서 활동했지만, 봉기가 진압된 직후에는 좌익혐의로 체포되어 사형을 언도 받았다. 그러나 군부내 좌익조직 명단을 제공한 것과 만주군 출신의 군 지도부와 제임스 하우스만(James Hausman)이라는 미 군사고문단원의 구명운동으로 생명을 건지게 되었다.

의자들을 쫓아냈다.

이 같은 좌익색출과 치밀한 주민통제체제의 확립은 정권 존립의 위협에 처했던 이승만 정권이 여순사건을 성공적으로 진압함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킨 자신감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언제 솟구칠지 모르는 봉기에 대한 사전예방책이었다.

이승만정권은 공산주의자들이 인간을 마구 죽이는 짐승과 다를 바 없으며, 소련 지령을 추종하고 독립 국가건설을 방해하는 매국노로 간주했다. 정부는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혐오감을 국민들에게 유포시키면서, ‘빨갱이는 죽여도 좋다’라는 인식을 널리 퍼뜨려 학살의 기초를 마련했다.¹⁹⁾

이승만정부는 여수와 순천이 진압된 직후부터 반공체제의 확립을 더욱 더 적극적으로 진행시켰는데, 다음 해에 발생한 김구 암살과 국회프락치 사건으로 가장 강력했던 반이승만 세력이 완전히 숙청되면서 이승만 반공체제는 안정화의 길로 들어섰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이승만정권이 공산주의자 척결을 자신들의 목표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공산주의자들뿐만 아니라 이승만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 일체를 척결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런 입장은 여순사건 초기부터 적용되었다. 봉기에 협력했다는 혐의를 받은 관련자들이 모두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던 것은 아니었다.

여순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아무런 재판도 없이 단지 14연대 봉기에 협력했다는 혐의만으로 국민학교 운동장이나 해안 절벽, 산기슭에서 죽어갔다. 누가 죽었는지, 누가 죽었는지, 왜 죽어야만 하는지도 분명히 밝히지 못한 채 50년 동안이나 이 사실이 침묵 속에 묻혀 왔다는 사실은 민간인학살이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한국 사회와 현대사 속에 깊이 각인된 구조라는 점을 일깨워 준다. 아무리 죽은 사람들이 죄 없이 죽어갔다고 해도 ‘빨갱이’라는 죄로 죽어갔다면 어느 누구도 더 이상 입 밖에 낼 수 없는 얘기가 되었던 것이다. 심지어는 여수, 순천 지역 출신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사상이 의심스럽다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점에서 여순사건은 봉기의 측면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학살의 측면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이라 할 수 있는데, 학살은 봉기 실패에 따른 결과였다.

여순사건은 지역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14연대 봉기군이 들어왔을 때에는 우익 인사와 경찰들에 대한 처형이 이루어졌고, 진압작전 때에는 협력자를 색출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원한으로 협력자를 지목하여 처형하는 바람에 지역사회는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

19) 봉기세력의 폭력에 대한 이승만정권의 반공주의적 재생산과 선전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Chong-myong Im, 2001, "Violence in the Representation of the Yosun Incident", Seoul, Center for Korean History, Institute of Korean Cul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History*.

다. “나서면 다친다”(=생명을 잃는다)는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진보적 사회운동의 싹은 잘려져 버리고 이데올로기에 일부러 냉담한 태도가 번졌다.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여순사건에 대한 신문 보도 등을 통해 한국 사회 전체가 유혈적인 좌우갈등을 간접 경험하였다. 해방직후 나타났던 좌우 대립은 이제 일방적인 좌익세력 척결로 바뀌었고,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공포심과 적대감도 또한 높아져 갔다. 여순사건에서 나타난 유혈적 갈등과 민간인 학살의 양상은 2년 뒤 한국전쟁에서 전면화 되었다.

여순사건은 이승만정권의 반공국가형성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남한의 반공국가는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더욱 고정화되고 강화되었다. 여순사건과 이후의 한국전쟁은 남한사회가 작동하는 원형을 만들었던 것이다.

II. 여순봉기의 우발성과 지속의 불가피성

여순사건이 미친 영향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여순봉기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일어난 봉기는 아니었다. 봉기를 일으킨 것은 14연대 군인 중에서도 장교가 아닌 남로당 세포 하사관들이었다. 당시는 전혀 봉기를 일으킬 만한 정세가 아니었지만 서서히 다가오는 숙군의 위협을 느낀 하사관들은 동족상잔의 과병을 거부한다는 명분을 갖고 최후의 방법으로 봉기를 선택했던 것이다. 지창수를 우두머리로 하는 하사관들은 ‘제주도파병 결사반대’와 ‘분단정권 반대’ 등을 내세우며 봉기하였는데, 봉기 이유 중의 하나에는 그 동안 갈등관계에 있던 경찰을 타도하자는 내용도 들어 있었다.

봉기를 주도한 하사관그룹은 14연대 군인들의 사기를 높이고 시민들의 참여를 촉진하려는 의도에서 “이승만이 일본으로 도피했다”, “인민군이 남으로 내려오고 있는 중이다”는 소문을 유포시켰다.

이 같은 정치적 명분과 호소는 대부분 농민 출신이었고 경찰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14연대 일반 장병들에게 쉽게 다가올 수 있었기 때문에 장병들 대다수는 즉각 동의했다. 14연대는 다음날 새벽과 오전에 걸쳐 여수와 순천을 각각 점령했다. 14연대가 시내로 들어오자마자 그 동안 지하에 숨죽이던 좌익세력은 인민위원회와 노조 등의 조직을 복구한 다음,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었던 친일파·경찰·극우청년단원들을 처단하는 한편, 토지분배를 주장하거나 양곡을 배급하고 금융 대부를 하는 등의 초보적인 인민행정을 실시했다. 인민위원회 정책은 분단정권 반대, 친일파 척결 등의 정치적 주장뿐만 아니라 충분한 식량배급을 통하여 실제 생활의 정책면에서도 차별성을 분명히 보여주었다.²⁰⁾ 특히 식량문제는

20) 황남준, 1987, 「전남지방정치와 여순사건」, 『해방전후사의 인식』3, 한길사, 458~468쪽.

일반 민중의 생계를 위협할 정도로 열악한 상태였다. 미군정 때부터 시작된 미곡수집은 경찰이 전면에서 나서서 담당했는데, 경찰은 가장 강력한 친일파 집결처였다. 친일 경찰의 재등장과 이를 이용한 미곡수집은 당시 민중의 가장 강한 불만이었다. 인민위원회 정책은 이승만정권에서 실시됐던 정책에 대한 완전한 거부였고, 새로운 질서의 수립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이런 까닭에 14연대가 여수와 순천을 점령하고 있는 동안, 시민들은 14연대의 봉기와 인민위원회 정책을 크게 반기었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은 봉기를 예상하여 사전에 마련된 것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남로당의 정책을 14연대 봉기라는 상황에서 펼친 것이었다. 사실 남로당 중앙이나 도당은 사전에 14연대 봉기 사실을 전혀 알고 있지 못했고, 심지어는 여수, 순천지구당 핵심당원들조차 군인들이 시내에 진입하고 나서야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수소문할 정도였다.²¹⁾

이처럼 여순사건은 남로당이 계획한 것도 아니고 조직적으로 준비도 되지 않은 봉기였다. 당은 미리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도할 수 없었다. 해방 후에 일어난 주요한 대중투쟁(1946년 ‘대구10월항쟁’, 1948년 ‘제주4·3항쟁’과 여순사건) 가운데 그 어느 것도 중앙당이 조직적 또는 계획적으로 시작한 봉기는 아니었다. 이 점에서 대중운동을 지도·지휘한다고 자임했던 남조선노동당(1946년 11월 이전까지는 조선공산당)이 대중운동에서 수행했던 역할은 사실과 엄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당이 주도하는 조직적 봉기가 더 중요하고 ‘현실적’ 전망이 있는 투쟁이며 운동은 당연히 당이 주도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면, 여순사건은 무척이나 ‘비현실적인’ 봉기라고 생각하기 쉽다. 이승만정부는 이 봉기를 ‘폭동’이나 ‘반란’으로 불렀는데, 북한 또한 여순봉기가 일어났을 때 이를 단순한 폭동으로 여기고 즉각적인 지원을 하지 않았다.²²⁾

그런데 여순사건은 14연대 하사관 그룹에 의해 ‘엥터리’로 ‘때 이르게’ 시작되었지만, 시민들이 대거 이 봉기에 합류하게 됨으로써 이 봉기는 단순한 ‘군부 쿠데타’가 아니라 대중봉기로 발전하게 되었던 것이고, 이런 맥락에서 여순사건은 해방공간에서 발생한 마지막 대중투쟁이라는 중요한 위상을 갖는다. 이후에는 여순사건처럼 광범한 대중투쟁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

21) 윤기남, 1997, 「내가 겪은 여순사건①」, 순천시사편찬위원회, 『순천시사』, 813쪽.

22) 여순사건을 하나의 운동이라기보다는 폭동으로 바라보는 것은 브루스 커밍스도 똑같다. 커밍스는 여순사건을 해방 후의 ‘좌절된 정치’에서 기인하는 ‘막판의 저항’으로 보고 있으며, 사건의 진행 또한 ‘착수전자 속의 태풍’에 불과했다고 말하고 있다(Bruce Cumings, 1990,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 2*, Princeton Univ. Press, pp.259~267). 이 같은 관점은 봉기의 직접적인 원인과 하사관 세력이 주체가 된 초기 상황에는 주목하지만, 군인‘봉기’가 대중들이 합류하면서 ‘항쟁’으로 성격이 변화하는 점과 이에 따른 민간인학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주의를 기울인다.

여순사건에서 ‘대중들’은 공산주의라는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갖고 투쟁에 나섰던 것은 아니었다. 대중들이 봉기의 주체로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실제 생활에서 경험한 생활상의 핍박과 어느 정도의 민족적 대의 때문이었는데,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는 바로 이 점에서 대중과 융합할 수 있었고 당 조직의 주위로 대중을 흡수할 수 있었다.

여수와 순천에 있던 지방 좌익세력들은 투쟁의 전망이 불투명했기 때문에 이 봉기를 군인들만의 봉기로 한정시키려 했지만, 봉기의 확산을 막을 수 없었다. 지하에 숨죽이던 조직들은 상부 조직의 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모두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고, 특히 경찰이나 극우세력 척결에서 나타난 과격함을 제어할 수도 없었다.

여수와 순천에서는 인민위원회가 다시 만들어졌다. 봉기 당시에 세워진 인민위원회는 해방직후에 만들어진 조직을 복구한 것이었지만, 일부 시위자들은 북쪽에 세워진 사회주의 정권을 지지하면서 인공기를 게양하기도 했다.²³⁾

인민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된 며칠간의 ‘반역의 정치’는 순천이 10월 23일, 여수가 27일에 정부군에 의해 완전히 진압되면서 끝을 맺었다. 하지만 여순사건이 이것으로써 끝을 맺었다 라고는 말하기 어렵다. 여순 탈환은 봉기군을 여수·순천 등의 읍 지역에서 구례 등지의 산악지대로 쫓아버린 것에 불과했다.

한편 여순사건에 주요한 역할을 했던 14연대 장교인 김지회, 홍순석 등이 지리산에서 국군 매복에 걸려 1949년 4월에 사살되었지만²⁴⁾, 이것 역시 여순사건이 끝난 시점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이들의 죽음으로 여순사건이 종결되었다고 보는 것은 몇몇 지도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으로써 그들의 영웅적 투쟁을 기억하게 만들기는 하지만 대중의 참여라는 여순사건의 주요한 힘에는 주의를 돌리지 않게 한다. 여순사건은 초기에는 군인이 주도하였지만, 이후에는 지방 좌익세력과 대중들이 봉기에 참가하면서 주체세력으로 커나갔다.

봉기군이 지리산 일대에서 빨치산 활동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지방좌익과 대중들의 인적 충원과 물질 지원 때문이었고, 이런 지원이 가능했던 것은 여순사건을 폭발시켰던 사회적, 정치적 과제들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고 오히려 이승만정권의 강압적 정치가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이승만 정부를 곤란하게 했던 빨치산의 항상적 전투상황은 1949년 집중적인 동계토벌작전으로 거의 붕괴될 때까지 계속되었다.²⁵⁾

23) 브루스 커밍스, 2001,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현대사』, 창작과 비평사, 311쪽.

24) 『자유신문』, 1949.5.1. 김지회나 홍순석은 14연대 봉기를 일으킨 주모자는 아니었지만 두 사람이 남로당 세포원인 것이 밝혀지면서 이후 항쟁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25) 14연대 봉기군이 지리산에 입산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남한의 빨치산 투쟁은 1949년 겨울의 대대적인 토벌작전으로 거의 붕괴되었다. 그 뒤 한국전쟁 때 인천상륙작전으로 인민군이 후퇴하면서 다시 지리산 지역에서는 인민군 낙오병과 지방 좌익들이 빨치산 투쟁을 전개하는데, 이들을 1949년의 ‘구빨치’와 구별하여 ‘신빨치’라고 부른다.

그런데 빨치산 활동이 어느 정도 소강상태로 들어간 뒤에도, 여순사건의 후과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여순사건으로 군인과 민간인들이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많은 사람들이 처형을 당했지만, 보도연맹원들과 형무소에서 복역하던 사람들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직후 인근 야산 같은 곳으로 끌려가 참혹한 죽음을 당했던 것이다.

한 사건의 성격을 규정짓는 것은 초기의 상황도 아니고 특정한 정세의 단면도 아니다. 여순사건은 14연대 군인들의 봉기로부터 시작되었지만, 대중들이 적극 참여하면서 이 투쟁의 주체가 되었다. 또한 진압과정에서부터 시작된 민간인 대량학살은 10월 27일 여수진압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사건이 파급된 인근 지역에서 계속 이루어졌으며, 한국전쟁 초기까지도 집단학살이라는 형태로 계속되었다.

III. 여순사건의 실패와 보복으로서의 민간인학살

여순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정부는 이 사건을 극우정객과 극좌세력이 연합하여 일으킨 반란이라고 발표했다.²⁶⁾ 가장 위협적인 정적이었던 김구세력을 반란의 진원지로 지목하여 공격하고자 했던 이승만정부의 의도는 김구가 관련설을 부정하고 일반 여론도 동조하지 않아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이후 정부는 이 봉기를 지역의 민간 공산주의자들이 일으켰다고 바꾸어 설명했다. 정부의 입장변화는 여수에 대한 초기 진압작전이 실패하고 지방좌익 세력과 대중들이 대거 가담하면서 불안감이 정권을 위협할 정도로 커지자 취해졌는데, 반체제세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하여 위기를 돌파하려는 이승만정부의 책략은 곧이어 여순봉기의 주체를 소련과 북한을 포함하는 외부의 좌익 반체제 세력으로 설정하게 했다.²⁷⁾

이승만 정부는 있지도 않은 가상의 봉기 주체를 창조하는 것을 통해 수세적인 위치를 벗어나 적극적인 공세를 취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승만정부의 대응은 공산주의자들이야말로 ‘진짜 적’이라는 미국의 인식과 합치되는 것이었다. 이승만 정부는 내부 갈등의 책임을 밖의 확인되지 않은 실체에게 떠넘김으로써 지배층의 실정을 은폐하는 효과를 거두는 한편

26) 극우와 극좌세력이 연합해 ‘혁명의용군’을 조직하고, 정부 전복 음모를 꾸몄다는 발표는 이런 가운데 나온 것이었다. 그러나 혁명의용군은 실체가 없는 허상의 군대였다.

27) 진압군이 순천과 여수를 완전히 점령한 뒤인 11월 3일 국방부는 ‘전국 동포에게 고함’이라는 벽보에서 여순사건을 ‘민족적 양심을 몰각한 공산도당의 조직과 명령을 통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파괴’하는 것이라 비난하는 한편 ‘소련제국주의의 태평양 진출정책을 대항하려는 공산당 괴뢰정권의 음모’라고 규정했다. 이제 여순사건은 반도 남쪽의 한 지방에서 이승만의 실정에 반항하여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소련 지배권을 확대하려는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평화일보』, 1948. 11. 5).

봉기를 외부의 사주로 몰아감으로써 사건 주체의 정당성을 박탈해버리었다.

이승만대통령의 11월 4일 담화는 이러한 시각 속에서 나온 강경한 입장 표명이었다. 이 담화에서 이승만은 “모든 지도자 이하로 남녀아동까지라도 일일이 조사해서 불순분자는 다 제거하고 조직을 엄밀히 해서 반역적 사상이 만연되지 못하게 하며 앞으로 어떠한 법령이 혹 발포되더라도 전 민중이 절대 복종해서 이런 비행이 다시는 없도록 방위해야 될 것”이라는 말하였다.²⁸⁾ 불순분자 제거를 위해서는 어린아이까지 일일이 조사해야 한다는 강도 높은 담화는 고압적이고 격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다.²⁹⁾

여순봉기의 진상과는 전혀 상관없는 정적 공격과 이념적 색깔 씌우기를 계속 진행하면서, 정부는 본격적인 진압작전을 위한 법적인 준비도 마련했다. 그것은 계엄령이었는데, 계엄령은 순천 작전이 이루어지고 있던 10월 22일 현지사령관에 의해 처음 내려졌다. 계엄령 각 조항의 내용은 시민에 대한 통제가 대부분이었다.³⁰⁾ 결국 계엄령은 민간인 통제의 용이한 수단으로써 활용되는 한편 군이 압도적 지위를 가지고 진압작전과 점령 이후의 수습조치를 취하는데 활용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국군이 순천을 완전히 점령하고 여수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기 시작한 10월 25일, 계엄령은 ‘국무회의’ 결의를 통해 공포됐다.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 제13호로 발표된 계엄령은 “여수군 및 순천군에서 발생한 군민 일부의 반란을 진정하기 위하여 동지구를 합위지경(合圍地境)으로 정하고 본령 공포일로부터 계엄을 시행할 것을 선포한다”고 하였다.³¹⁾ 이 ‘계엄선포에 관한 건’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국방장관 겸임) 그리고 11명의 장관들이 참가한 국무회의를 통해서 결정되었다. 계엄령이 통과된 후 호남방면사령관은 26일자로 여수·순천지구에 임시계엄을 선포했다. 이 선포문은 군사에 관계있는 행정·사법사무는

28) 『국제신문』·『수산경제신문』, 1948. 11. 5.

29) 이승만은 12년이 지난 1960년 4월 15일, 4월혁명이 있기 몇일 전 다시 여순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격렬해지는 마산시위의 배후에는 공산당이 있는데, 이들이 어린아이들을 선동하고 있다며 “과거 전남 여수에서 공산당이 일어나서 수류탄을 가지고 저희 부모들에게까지 던지는 이런 불상사는 공산당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것”이라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서울신문』, 1960. 4. 15. 석간). 여수에서 어린아이가 자기의 부모에게 수류탄을 던졌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이승만의 이 담화가 처음인데, 이런 방식으로 이승만은 자기 기억을 만들어내며 역사를 창조했다.

30) 계엄령은 ①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통행을 금하며, ② 옥내외의 일절 집회를 금하고, ③ 유언비어를 만들어 민중을 선동하는 자는 엄벌에 처하며, ④ 반도를 은닉하거나 밀통하는 자는 사형에 처하고, ⑤ 반도의 무기 기타 일절 군수품을 은닉하거나 비장(秘藏)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사사키 하루다카, 1977, 『한국전 비사』 제1권, 병학사, 354쪽; 대한민국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67, 『한국전쟁사1:해방과 건군』, 460쪽; 육군본부 전사감실, 1954 『공비토벌사』, 부록1쪽).

31) 『관보』 제10호, 1948. 10. 25. 여수순천지구 계엄령은 발포 후 3개월 10일이 지난 1949년 2월 5일 대통령령 제51호로 해제되었다.

계엄사령관이 담당한다고 명시하였다. 현지 사령관의 10월 22일 계엄령에 뒤이어 26일에는 또 다시 군사령관에 의한 계엄령이 발포된 셈이다.

그러나 당시는 계엄법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였다. 계엄법이 아직 제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국무회의가 이를 ‘제정’하고 의결했던 것이다. 국무위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는 있지만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따라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제정’했다는 관보의 문구로 본다면 계엄령은 명백한 헌법위반이었다.³²⁾

계엄령은 그 내용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고 종류도 여러 가지여서 혼란스럽게 사용되었지만, 그럼에도 계엄령이 발포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여순사건 진압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승만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한 뒤에 김완룡법무관을 불러 “임자가 가서 한달 안에 그 빨갱이들 전부다 재판해서 토살하고 올라오라, 그럼 계엄령을 해제 하겠다”라고 말했다고 한다.³³⁾ 군과 경찰 등은 협력자(‘부역자’)를 색출하면서 가담자를 제대로 구별하지도 않은 채 의심되는 사람은 자세한 조사나 재판도 없이 즉결처분하였다. 군경이 이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규정자체가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사용된 계엄령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여순진압작전에서 ‘인권’은 아득히 먼 나라의 이야기였다. 협력혐의가 있다는 다른 사람의 지적만으로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 의심받아 사형 당하는 무법천지가 되었는데, 계엄령은 이런 일을 군경이 할 수 있게끔 한 ‘마법의 카드’였다.

일제시대조차 한 번도 실시된 적이 없는 계엄령 발포는 정부가 군대라는 물리력으로 국민에 직접 대결하는 것을 의미했다. 이는 이승만정권의 지지기반이 허약했으며 군대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위기를 탈출할 수 없었음을 잘 보여준다. 탈법적인 계엄령 발포를 호도하기 위해 이인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정부 각료들은 국무회의에서 계엄령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등 국회에서 거짓말과 자기모순으로 일관했다.³⁴⁾

여순사건에서의 민간인학살은 위와 같은 이데올로기적, 법적 조치가 마련된 기초 위에서 이루어졌다. 민간인학살은 여수와 순천에서만 일어난 것도 아니었고, 이 지역이 진압되면서 종결된 것도 아니었다. 빨치산 활동이 시작되면서 민간인학살은 구례 등 지리산 일대 지역에서 계속 이루어졌고, 여순사건 관련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다음해에도 이들에 대한 처형(학살)은 계속되었다. 당시 재판은 재판으로서의 형식조차 갖추고 있지 못했는데, 이들 수감자들은 한국전쟁 직후 형무소에서 끌려나와 인근 야산 등지에서 또다시 대량학살의 운명을 맞게 된다.

32) 제민일보 4·3취재반, 1998, 「부록1 왜 ‘4·3계엄령’은 불법인가」, 『4·3은 말한다』5, 전예원.

33) MBC(문화방송) 「이제는 말할 수 있다」팀 인터뷰, 1999.

34) 이에 대해서는 김득중, 2000, 「이승만 정부의 여순사건 왜곡과 국회논의의 한계」, 역사학연구소, 『역사 연구』제7호를 참조.

먼저 진압작전 과정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을 살펴보자. 진압군의 순천·여수작전은 봉기를 빨리 진압해야 한다는 정치적 목적에서 빚어진 과잉작전이었다. 순천에 있었던 김지휘가 지휘하는 14연대 군인들과 여수지역에 남아 있던 지창수 지휘하의 14연대 군인들은 본격적인 진압이 시작되기 전에 진압군의 포위망을 뚫고 백운산과 벌교방면으로 이동했다.³⁵⁾ 남아 있던 사람들은 소수의 군인과 이 지역의 좌익 활동가들 그리고 분위기를 따라 14연대에 협력하고 있었던 청년들이었다. 그러나 진압군의 작전은 정규 14연대 군인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시민을 반란군으로 간주하고 이들을 모두 적으로 삼는 무차별적인 공격이었다.

진압군은 순천과 여수작전에서 시가지를 포위 압박하면서 진입해 들어갔다. 불안감을 느낀 시민들은 시내를 벗어나려 했으나 진압군은 이를 막았다. 순천과 여수를 점령한 진압군은 제일 먼저 전 시민을 국민학교 같은 공공장소에 모이도록 명령했다. 순천에서는 23일 시민들을 북국민학교에 모이게 했다. 여수에서 진압군은 26일 화성기로 모이라고 방송하였는데, 시민들은 진압군이 젊은 사람만 보면 총살하는 장면을 많이 보았고, 나오지 않으면 반란군으로 간주된다는 말을 듣고는 만일 진압군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감에서 모두 모이라는 장소에 나왔다.³⁶⁾ 길거리에는 골목마다 무장군인들이 총을 들고 서서 이탈자를 감시하였다. 줄에서 이탈하면 반란군으로 간주하여 쏘버린다고 경고하였다.

진압군은 먼저 사건 가담자라고 판단되면, 학교 건물 뒤편 등의 즉결처분장에서 개머리판, 참나무 몽둥이, 체인으로 죽이거나 곧바로 총살했다. 나머지 사람들은 수용되어 채심사를 받거나 계엄군, 경찰에 넘겨져 심문과 재판을 받았다. 나중에 ‘백두산 호랑이’이라는 악명을 얻은 김종원은 중앙국민학교 버드나무 밑에서 일본도를 휘두르며 혐의자들을 즉결 참수했다.³⁷⁾

봉기군에 협력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지목하는 일은 반란에서 살아남은 그 지역의 경찰·우익인사·우익단체 청년들이 맡았고, 이들이 가리킨 단 한 번의 손가락질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사를 갈랐다.

협력자 색출의 후유증은 사건이 종결된 뒤에도 계속해서 여수시민들을 괴롭혔는데, 그 이유는 누가, 어떻게 참여했는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나 자세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35) 전남일보 광주전남현대사 기획위원회, 1991, 『광주전남현대사』, 실천문화사, 153쪽; 김계유, 1991, 「1948년 여순봉기」, 『역사비평』 겨울호, 277쪽; 백선엽, 1992, 『실록 지리산』, 고려원, 180·186쪽.

36) 광주전남현대사 기획위원회, 앞의 책, 154쪽.

37) 김낙원, 1962, 『여수향토사』, 여수문화원, 71쪽.

상태에서 색출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당시 심사의 기준이 된 것은 교전중인 자, 총을 가지고 있는 자, 손바닥에 총을 켜 흔적이 있는 자, 흰색 지까다비(地下足袋. 일할 때 신는 일본식 운동화)를 신은 자, 미군용 군용팬티를 입은 자, 머리를 짧게 깎은 자였다. 주민들 가운데 흰 고무신을 신고 있는 사람은 반란군으로 간주되었다. 흰 고무신은 지방좌익세력에게 처형당한 우익인사 김영준이 운영하는 천일고무공장에서 제조한 것이었는데, 봉기 기간에 인민위원회가 이를 배급했기 때문이었다. 또 국방경비대가 입고 있던 군용 표시가 있는 속옷을 입고 있는 사람도 혐의대상이었다. 진압된 뒤 겉옷은 버릴 수 있지만 속옷은 갈아입지 못했을 것이라는 추측에서였다.³⁸⁾

이렇게 심사는 외모나 다른 사람의 고발, 개인적 감정에 의한 중상모략, 강요된 자백 등의 기준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억울하게 처벌받는 것이 많았다.³⁹⁾ 협력자 색출과정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나 방법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다. 계엄령이 내려져 있던 상황이라도 군이나 경찰이 수많은 인명의 생사를 자의적으로는 결정할 수 없다. 그러나 여순에서는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인간의 기본 권리조차 무시되었다. 협력자 색출은 단지 믿음직하지 못한 혐의만으로도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협력 혐의를 받았던 사람들이 모두 봉기에 협조하였거나 공산주의자는 아니었다. 협력자 색출 당시 사상적으로나 행동에서 좌익에 진정으로 동조했던 사람들도 있었으나 이들의 수는 많지 않았다. 순천지역 국회의원 황두연, 순천 검사 박찬길, 여수여중학교 교장 송옥 등의 지방 유지급 인사들은 봉기군에 협력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경찰과 사이가 좋지 않고 정부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간신히 생명을 건지거나 처형되었다.⁴⁰⁾ 미군사고문단원으로 진압에 적극 개입했던 하우스만조차도 순천 경찰이 “본격적으로 복수하러 나섰고, 수감포로와 민간인들을 처형하고 있다 …… 여러 명의 친정부 민간인들이 이미 살해되었으며 시민들은 우리가 적만큼이나 나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보고했을 정도였다.⁴¹⁾

협력자로 분류된 사람들 대부분은 사상적인 교육도 못 받은 사람들이었다. 단지 며칠에 불과했지만 14연대의 물리력을 배경으로 지방 좌익세력이 행정을 장악하고 통치하는 상

38) 이태, 1994, 『실록소설 여순병란』(하), 청산, 45~47쪽.

39) 군경은 가담자를 색출하기 위해 시민들로부터 투서를 받기도 했는데, 개인감정 등에 따라 생사함을 잡는 허위투서가 난무하여 무고한 민간인들이 수없이 희생당해야 했다. 당시 한 기자는 군경의 이런 조폭한 처리는 결과적으로 민원을 살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다(홍한표, 1948, 「전남반란사건의 전모」, 『신천지』 11월호).

40) 이에 대해서는 김득중, 2000, 「여순사건 당시의 민간인 학살」, 성대경 엮음, 『한국현대사와 사회주의』, 역사비평사, 317~335쪽을 참고.

41) “Yeosu Operation, Amphibious Stage”, G-2 Intelligence Summary No.166, 1948년 11월 5~12일.

황에서 일반 시민들은 군과 좌익세력에 협조할 수밖에 없었다. 좌익세력이 내세운 정치적·경제적 주장들이 일정하게 시민들의 공감을 얻은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 전체가 봉기에 가담한 혐의가 있다거나 공산주의자로 보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진압군에게 비친 여수는 완전한 좌익 소굴이었다.⁴²⁾

여수의 경우, 국민학교에 모였던 혐의자들은 밤중에 몰래 끌려나와 호명동 야산이나 만성리 굴 앞에서 집단 학살되었다. 만성리에서는 11월 초순 125명을 총살하였다. 경찰은 장작더미에 5명씩 묶어 놓은 후 그 위에 장작더미를 또 놓아가며 5층을 만든 다음 휘발유에 불을 붙여 화장하였다.⁴³⁾

무리한 진압작전과 공포 분위기에서 이루어진 협력자 색출과정은 경찰을 ‘하늘과 땅에도 없는 천상천하’로 여기게 했지만, 한편으로는 겉으로 함부로 드러낼 수 없는 내면화된 반감을 불러일으켰다. 지역 공동체 성원간에 이루어진 ‘손가락 총’으로 공동체는 완전히 붕괴되었고 이로 인해 이루어진 공포와 죽음 뒤에는 인간불신이 내면화되었다.⁴⁴⁾ 좌우익을 오가며 협력했던 사람들을 지칭하는 ‘장구통’이나 ‘양날백이’ 같은 말은 여순사건의 소용돌이에서 생존이 얼마나 힘들었던 것인가를 드러내는 동시에 그러한 삶의 방식에 대한 혐오 또한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⁴⁵⁾

여순사건의 진압작전 과정에서는 인명피해와 함께 가옥이나 재산피해도 엄청나게 발생했다. 여순사건이 진압된 직후 전남도 보건후생당국은 여순사건으로 인한 11월 1일까지의 인명, 재산피해를 처음으로 집계했는데, 사망자는 2,600여 명이 넘고, 중경상자는 약 1,500명, 행방불명이 825명으로 인명 피해만도 5천여 명에 달했다. 5천여 호의 집이 완전히 파괴되었고 피해액은 37억 원이 넘었다.⁴⁶⁾ 한편 중앙청에서 파견된 조사관들이 보고한 피해상

42) 광주전남현대사 기획위원회, 위의 책, 163~164쪽. 여수 신월동의 김봉륜은 “여순사건 당시 좌익에 진정으로 봉사했던 사람들은 극소수일 겁니다. 다만 그들이 주장이 심한 현실고에 시달리고 있는 시민들에게 많은 공감을 주었던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고, 모든 물자를 그들이 쥐고 있는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반란군에 봉사한 사람도 다수 있었죠”라고 증언하고 있다. 진압작전에 참가했던 장교인 백선엽도 그의 회고록에서 “나는 지금도 당시 그렇게 많은 ‘빨갱이’가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단순가담자의 대부분은 핵심 좌익계 인물들의 선전과 현실적인 신변의 위협 속에서 나름대로 살길을 찾아 나섰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하였다(백선엽, 1992, 『실록 지리산』, 고려원, 192쪽).

43) 여수지역사회연구소, 1999, 『여순사건 자료집』2, 14~16쪽.

44) 이 때의 심리적 상흔으로 여수, 순천지방에는 아직까지 서로 결혼하지 않는 집안이 있다고 하며(김석학·임종명, 1975, 『광복30년』, 전남일보사, 261쪽), “여수에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당시에 나돌았다(광주전남현대사 기획위원회, 위의 책, 164쪽).

45) 홍영기, 1999, 「여순사건에 관한 자료의 성격과 연구현황」,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지역과 전망』제11집, 일월서각, 192쪽

46) 『호남신문』, 1948. 11. 5. 『대동신문』, 1948. 11. 9일자에도 이 통계가 실려 있으나 『호남신문』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황을 보면, 1월 10일까지 인명 피해가 5,530명이고 가옥 피해는 8,554호로써 재산피해는 약 100억 원에 달했다. 긴급한 구호가 필요한 인원만도 6만 7,332명이었다.⁴⁷⁾

여수 주민들은 주위 친척들이 죽어나가고 생계 수단도 없어져 다가올 추위도 피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피해가 봉기 군인들에 의해 생긴 것이 아니었다는 점에 있다.⁴⁸⁾ 가장 큰 피해는 진압군이 시내를 장악하는 과정과 그 다음에 발생했다. 길가의 집들과 주요 건물들은 진압과정에서 생긴 총탄 자국으로 벌집 뚫어지듯 상처가 났다. 여수에 진압군이 들어왔던 26일 여수 서시장, 27일의 충무동 시민극장 주변의 화재는 여수 시내 중심가를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었다. 이 불 때문에 가옥은 2천여 호가 불탔고, 피해액만도 100억 원에 이르렀다.⁴⁹⁾

이 화재의 원인에 대해 진압군은 봉기군이 최후발약으로 석유를 뿌리고 달아나면서 방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수에 남아있던 봉기군은 이틀에 걸쳐 방화할 수 있는 전투력이나 여력을 전혀 갖고 있지 못했다. 또한 불이 난 시각은 어두워진 때라 진압군의 박격포로 화재가 나기도 어려웠다. 26일의 불이 난 서시장은 서국민학교에서 25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는데, 당시 서국민학교에는 진압군이 주둔하고 있었다.⁵⁰⁾ 불이 났을 때 소방서장이 불을 끄려고 사람들을 모으자 5연대장 김종원이 총대로 서장을 구타하여 쫓아냈다는 증언은 이틀 동안 여수 중심가를 전소시킨 이 불이 진압군의 의도적인 방화였다는 추측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불을 끄러 나갈 수 없었고 여수 시민들은 두 눈 뜬 채 집과 재산이 불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또한 27일은 시내에서 저항이 거의 사그라진 뒤였다.

한편 진압 후 협력자 색출과정에서 즉결처분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후 군사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 이미 많은 사람들이 협력자 색출과정에서 즉결처분을 받게

47) 『동아일보』, 1949. 1. 22.

48) 여수 지역의 경우, 봉기세력에 의한 인명 피해는 최소 90명에서 최대 150명이었고, 재산 피해는 14연대가 산악지대로 도망가면서 가져간 금융기관의 현금과 쌀 정도였다. 국방부는 반란군이 여수에서 3,550만 원, 순천에서 500만 원 등 총 4천만 원을 가져갔다고 발표했고, 다른 지방에 보내려고 여수항에 내렸던 쌀 5천 석 가운데 약 천여 석이 없어진 것은 반란군이 가져간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외의 다른 심각한 재산 피해는 없었다(김계유, 1991, 「내가 겪은 ‘여순사건’」, 『월간 예향』 1월호, 175쪽; 여수지역사회연구소, 1998, 『여순사건 실태조사보고서』 제1집, 86쪽; 「10월 29일 국방부 발표 제6호」, 『평화일보』, 1948. 10. 30; 『서울신문』, 1948. 11. 9; 『조선일보』, 1948. 11. 2).

49) 『조선일보』, 1948. 11. 21; 『서울신문』·『독립신문』, 1948. 11. 9. 여수가 순천보다 재산피해가 더 컸던 것은 이 화재 때문이었다.

50) 광주전남현대사 기획위원회, 앞의 책, 156쪽. 당시 제주특별작전에서는 태워 없애고, 굶겨 없애고, 쏘아 없애는 삼광삼진(三光三盡)방식이 사용되었는데, 여수진압작전에서도 불을 질러 진압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나 탈출 또는 반항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총살당했다.⁵¹⁾ 혐의자로 체포된 시민들은 광주나 대전 등 군법회의가 설치된 곳으로 이동되었다. 미군 트럭에는 남녀 젊은이뿐만 아니라 60세가 넘는 늙은이와 어린 학생까지 실려갔다. 한 여학생은 인공기를 들고 협력한 혐의를 받았고, 한 수염 난 노인은 3·1운동 때의 투사였지만 인민위원장을 지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으려 갔다.⁵²⁾

재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죄의 경중이 가려진 것은 아니었다.⁵³⁾ 재판은 짧은 시일 내에 ‘근절’과 ‘응징’의 방침 하에서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11월 4일부터 25일까지 광주, 순천, 대전, 여수 등지에서 다섯 차례의 고등군법회의가 열려 691명에 사형을 언도하는 등 총 1,931명이 재판을 받았다.

이후 대전군법회의의 결과만을 보도한 1949년 2월의 한 신문 기사에 따르면 1월 22일까지 대전에서는 모두 9차례에 걸쳐 재판이 열려 4,750명이 재판을 받았고, 이 가운데 20%는 혐의가 없어 불기소 석방되었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이 기사는 군법회의의 혐의자와 불기소 석방자로만 나누어 놓았고, 혐의자는 1년형, 5년형, 20년형, 사형 등의 형 종류만을 나열했을 뿐 구체적인 해당 인원수를 적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량에 따른 구체적인 인원은 파악하기 어렵다.

재판이 끝난 뒤에는 사형이 시시때때로 집행되었다. 광주 제1차 고등군법회의에서 사형언도를 받은 12명에 대한 사형집행은 11월 16일 오후 3시 광주군 지산면 계금산 산록에서 이루어졌다. 제5여단 사령부 군기대에 의하여 집행된 사형 장면에는 ‘반도에 대한 응징’의 의미로 신문기자가 입회하였다.⁵⁴⁾ 대전의 육군중앙군법회의에서 사형언도를 받은 224명 가운데 사형 50명에 대한 사형집행도 11월 27일 오전 10시 40분 대전에서 실시되었다.⁵⁵⁾

사형집행은 다음 해에도 계속되었다. 한국전쟁 때 인민군이 압수한 미군 문서에 따르면, 1949년 1월 17일 대전형무소에서는 14연대 출신 군인들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었다고

51) 『동광신문』, 1948. 11. 6. 순천·여수를 점령한 진압군은 혐의자들을 현장에서 사살했다. 10월 25일 여수에서는 600명의 반란군이 체포되었다고 하지만, 이 날 저녁 10시 40분 대전에 도착한 반란군은 400여 명에 불과했다(G-3 Section, II IV Corps, *History of the Rebellion of the 14th Regiment and the 6th Regiment of the Korean Constabulary*, 10 November 1948). 구례지역 국군 12연대는 지리산 노고단 일대에서 소탕전을 전개하여 11월 4일 약 400명의 포로를 광주 대전으로 압송하였지만, ‘막대한 수의 포로를 현지에서 처벌’했다(『동광신문』, 1948. 11. 7).

52) 정광현, 「반란지구 진압 후의 모습」, 『주간 서울』제14호, 1948. 11. 15.

53) 군법회의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제주4·3사건 희생자 유족회 등, 2002, 「제주4·3 군법회의 수형인을 통해 본 국가폭력과 인권」을 참고.

54) 『서울신문』·『자유신문』, 1948. 11. 19.

55) 『서울신문』, 1948. 11. 30. 한편 『독립신문』, 1948. 11. 21일자 11월 23일에 1차로 8명, 2차로(일자 미정) 20여 명이 처형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다. 미군 장교의 지시로 사수 10여 명을 보강하여 이루어진 처형은 네 차례에 걸쳐 모두 69명의 군인들을 총살했다. 이들 대부분은 18세 가량의 젊은 청년들이었다. 총살 장면을 기록한 문서는 사형수들이 총살될 말뚝으로 끌려왔을 때 군가를 불렀고 피살당한 수감인 대다수가 자기들은 무죄라고 말했다고 적고 있다.⁵⁶⁾ 총살형을 받고 집행장에 끌려온 군인들의 한 쪽은 공산주의에 대한 마지막 송가를 불렀고, 다른 한쪽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였다. 이는 대중운동으로서 여순사건이 갖고 있는 복합적 성격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이승만 정부는 보도연맹원들을 집단학살함으로써 여순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학살은 한국전쟁 시기까지 이어졌다. 여수지역의 보도연맹원들 대부분은 여순사건 관련자들이었는데, 이들을 여수경찰서 무덕관에 집결시킨 뒤 경상남도 남해도 남단의 애기섬으로 끌고 간 뒤 120여 명을 총살하여 수장하였다.⁵⁷⁾

형무소에 수감되었던 관련자들도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군경에 의해 집단 학살되었다.⁵⁸⁾ 전쟁 직후인 1950년 7월 초순과 중순 두 차례에 걸쳐 군경은 대전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재소자들 가운데 사상범만을 골라 7,000여 명을 집단 처형했다.⁵⁹⁾ 경찰과 헌병은 미리 과녁은 큰 구덩이 앞에 재소자들을 일렬로 세워 놓고 번갈아 가며 사격을 가했다. 죽은 뒤에는 군경 책임자가 확인 사살을 했고, 한 쪽에서는 다음 재소자들이 실려 올 때까지 구덩이 파는 작업을 했다. 미군은 전 과정을 지켜보았고 이 광경을 사진으로 남겼다. 대전형무소 집단처형의 피해자 중 많은 수가 여순사건 관련자였다.⁶⁰⁾

여순사건과 관련하여 과연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진압과정에서 처형되었고, 집단학살되었는지 그리고 재판을 받았는지는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다. 진압과정에서 처형된 사람들의 숫자는 여수지역사회연구소 등의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재판을 통해 처형된 숫자는 아직도 불분명하다.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어떤 죄목으로, 어떤 형을 받았는지에 대한 최종적인 재판 결과를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자료 발굴과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56) 「검거된 군인들의 총살의 건(1949. 11. 17), 제2여단장 고문 육군소좌 아르노 뽀. 모우이츠 보고 총집에서」, 『로동신문』, 1950. 8. 11.

57) 여수지역사회연구소, 1999, 『여순사건 자료집』2, 15~16쪽. 이 밖에도 여수 해안지역 곳곳에서 보도연맹원들에 대한 수장이 이루어졌다.

58) 『제민일보』, 1999. 12. 24 ; 『한국일보』, 2000. 1. 6.

59) 『국민일보』 2002.4.30.; Allan Winington, 1950, *I Saw Truth in Korea*, London, People's Press Printing Society, pp. 5~7.

60) 대전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제주4·3 관련자는 7년 형을 선고받은 300여 명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여순사건 관계자는 1,000여 명을 넘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민일보』 2000. 1. 11.; 『한국일보』, 2000. 1. 8·9. : 『한겨레21』292호, 2000.1.20일자.

여순사건과 군대의 변화

노 영 기(조선대 강사)

I. 머리말

국가에서 군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한국현대사에서 군대는, 한국전쟁 전후한 시기의 민간인 학살,¹⁾ 1961년 5·16쿠데타, 1980년 5월 학살 등과 같이 본래의 임무와는 정반대되며 비인도적인 잘못을 저질렀다. 왜, 군대가 그 본연의 임무와 정반대되는 일을 저질렀을까?

그 답은 군대가 겪었던 역사 속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1948년 5월 제주도에서 시작된 군대의 민간인 학살은 그 잘못을 되돌아볼 겨를이 없었다. 오히려 뒤이어 발생한 여순사건에서 군대는 강경 진압작전을 전개했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확실한 체제 수호의 물리적 기구로 재정비됐다. 그 결과 민간인 학살과 같은 행위를 죄의식 없이 저지를 수 있는 집단으로 변했다.

하지만, 여순사건은 군대에서 발생한 ‘반란’이라는 사건 발생 당시 정부가 규정했던 이상의 사실 접근이 허락되지 않았다. 이는 수십 년 동안 한국사회를 억눌렀던 반공이데올로기와, 한국 정치를 지배했던 집단이 군부였기 때문이었다. 그렇기에 군대와 관련된 여순사건에 대한 자료의 접근조차 쉽지 않았다. 최근 한국사회의 민주주의가 진전된 결과 여순사건의 실체에 대한 사실적 접근이 시도됐고, 그동안 가려졌던 많은 진실들이 밝혀졌다. 또한 수십 년 동안 침묵을 강요받았던 관련자들의 증언이 나오고 있으며, 관련 자료들이 새롭게 발굴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성과와 자료에 바탕하여 여순사건의 발발과 과정, 그 영향에 대해서 군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군대가 본래 임무에서 벗어난 잘못을 저지른 이유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1)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학살 실태보고서』, 2001.

II. 여순사건의 배경과 발발

1948년 5월 4일 전남 여수에서는 광주의 제4연대 제1대대를 기간 병력으로 제14연대가 창설됐다.²⁾ 모병은 제14연대의 관할지인 전남 동부 지역-여수, 순천, 보성, 벌교, 광양, 구례-에서³⁾ 이루어졌다. 경찰 수배를 피해 청년들이 입대하기도 했으나 마을 단위의 모병으로 제14연대는 완전 편성됐다.⁴⁾ 10월 초순경부터 제14연대에는 M1소총을 비롯한 각종 신무기와 56만발의 탄약이⁵⁾ 보급됐으며 시가전 연습 등 토벌작전에 대비한 훈련이 진행됐다. 또한 제주도 파병의 소문이 널리 퍼져 연대원 대부분이 알고 있었다.⁶⁾

1948년 10월 19일 제14연대는 아침부터 LST에 선적작업을 시작해 저녁까지 계속했다. 병영에는 순천 주둔 2개 중대와 여수항의 300명을 뺀 2,000여명이 있었다.⁷⁾ 연대장 박승훈 중령과 부연대장 이회권 소령⁸⁾은 여수항에 있었다. 이날 저녁 연대 인사계 지창수 상사의 제주도 파병을 거부하는 선동으로부터 봉기는 시작됐다.

처음 봉기에 참여한 인원은 다르게 파악됐다. 주한미군사령부 정보참모부는 400-500명으로 추정했다.⁹⁾ 제5여단장 김백일은 800-2,000명으로 발표했으며¹⁰⁾ 5여단사령부에서는 600-800명으로 보고했다.¹¹⁾ 주한미군 제24군단 작전참모부는 2,000명으로 파악했다.¹²⁾ 다양한 보고와 병영에 있던 수를 종합하면 2,000여명 정도가 봉기에 참가했을 것이다. 이처럼

2)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1-해방과 건군』, 1967, 327쪽 ; 이한림, 『세기의 격랑』, 1994, 팔복원, 100~101쪽 ; 김영만(金永萬)의 증언.

3) 제14연대 관할지는 반군의 경로, 그리고 여순사건의 확산 지역과 거의 일치한다. 물론 제14연대가 직접 진주하지 않은 지역도 있었다. 하지만, 제14연대가 여수지역을 중심으로 향토에서 창설된 연대이며 사병들 대다수가 이 지역 출신이라는 점이 제14연대의 봉기가 인근 지역으로 순식간에 확산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정부에서도 여순사건의 진압이 완료된 뒤 국방경비대의 향토연대의 특성을 없애는 주둔지 이동을 단행했다. 이점에도 대해서는 후술.

4) 임태황 증언(여수 돌산 거주, 제14연대 출신),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순사건 자료집 제1집』, 1998, 182쪽. 김영만도 고향인 구례로 모병을 다녔다고 증언했다. 김영만의 증언.

5) Headquarters 5th Brigade, Summary of Event, 1948. 10. 20. 0700.

6) 정두일(여수 울천 청대, 제14연대 출신) 증언, 여수지역사회연구소, 1998, 앞의 책, 193쪽.

7) RG 407/270/5516, Entry 427 File # 306, CHRONOLOGICAL JOURNAL OF EVENTS, 1948. 10. 18-11. 7, P. 3. 1개 연대의 정원은 3, 000여 명이었다.

8) 박승훈과 이회권을 비롯한 제14연대 장교들은 1949년 2월 10일부로 불명예 파면됐으나 박승훈과 이회권은 1949년 6월 22일부로 복직됐다. 「국방부특명」 제13호, 1949. 2. 8. ; 「육군본부특명」 제136호, 1949. 7. 2.

9)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1948. 10. 20~10. 21. #968.

10) 「동광신문 호외」 1948. 10. 21.

11) Headquarters 5th Brigade, Summary of Event, 1948. 10. 20. 0700.

12) G-3 Section, XXIV Corps, *History of the Rebellion of the Korean Constabulary at YEOSU and DAEGU*, 1948. 11. 10.

당시 병영에 있던 연대원 대다수가 봉기에 참가한 배경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제주도 파병이 원인이었다. 1948년 5월 21일, 제주도 주둔 제9연대원에서는 41명이 탈영했으며,¹³⁾ 6월 18일에는 진압작전을 지휘했던 제9연대장 박진경 중령이 암살당했다.¹⁴⁾ 이 두 사건은 국방경비대의 강경진압과 동족상잔(同族相殘)에 반대한 것이었다.¹⁵⁾ 그러한 인식은 제14연대에도 반영되어 제주도 파병 거부를 선동하는 봉기에 다수가 참여했다.

군경(軍警)의 대립이 또 다른 원인이었다. 국방경비대 창설 때부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군경충돌이 발생했다.¹⁶⁾ 1948년 9월 20일 수도경찰청장 김태선이 ‘군대와 경찰은 표리일체가 되어 국방과 치안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니 망국을 기도하는 모략적 선전에 속지 말기를 바란다’는¹⁷⁾ 경고문을 발표할 정도로 심각했다. 연대 창설 때부터 제14연대는 반경감정(反警感情)이 높은 부대였으므로 ‘경찰이 폭동을 일으켰다’는 거짓 선전은 연대원들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¹⁸⁾

제9연대의 사건 이후 각 연대에서는 사상검열과 숙청이 계속됐으며, 정부 수립을 전후해 많은 군인들이 조사 받거나 체포됐다.¹⁹⁾ 제4연대 출신의 제14연대 창설 요원인 김영만은 10월 11일 체포됐다. 체포 사실을 미리 알았던 연대 정보계 하사 정낙현, 김정남 등은 김영만에게 체포될 것을 권유했다. 김영만을 도피시키면 수사가 확대될 것을 염려해 그를 체포시켜 남로당 조직의 보위를 꾀했다.²⁰⁾ 그러나 제주도 파병을 앞둔 제14연대 남로당 조직의 위기감은 높아졌다.²¹⁾ 이렇듯 여러 가지 요인은 봉기가 일어나는 배경이 됐고, 이 봉기에 연대원의 대다수인 2,000여명 정도가 참여했다.

13)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1948. 5. 22~5. 24, #842 ; 제민일보 4·3 취재반, 『4·3은 말한다③ : 유혈사태 전초전』, 1995, 전예원, 106~137쪽.

14)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1948. 6. 17~6. 18, #863 ; 제민일보 4·3 취재반, 앞의 책, 195~220쪽.

15) 鄭東熊, 「動亂 濟州의 새 悲劇 - 朴大領 暗殺犯 裁判記」 『새한민보』 1948. 10. 상순(김남식·이정식·한홍구 엮음, 『한국현대사자료총서』 7권, 618쪽).

16) United States Army Forces, Korea Counter Intelligence Corps Seoul District Offices Apo 235, Korean Constabulary, Conflict Between Korea Police and Summary of Information, 7 Jan. 1947.

17) 「서울신문」 1948. 9. 21.

18)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1948. 10. 21~10. 22. #969.

19) 부산에서는 11명의 국방경비대 장교 조사받았으며, 제10연대의 68명·제1연대의 89명·제15연대의 102명 등이 체포됐다. C.G, PMAG, PMAG Weekly Activites, 1948. 8. 16.

20) 김영만의 증언.

21) 이태, 『여순병란』 상, 1994, 청산, 157~160쪽.

III. 제14연대의 경로와 진압군의 대응

병영을 벗어난 반군은 경찰의 저항을 무너뜨리고 여수를 장악했다. 10월 20일 오전 9시 30분경 반군의 주력부대는 기차와 트럭에 나누어 타고 순천으로 향했는데, 그 지휘는 김지회 중위가 맡았다.²²⁾ 순천역에 반군이 도착하자 선임중대장 홍순석 중위가 지휘하던 제14연대 2개 중대가 반군에 가담했다.²³⁾ 순천 주둔 2개 중대가 합류한 뒤 반군은 순천을 공격했다. 10월 20일 오전 광주에서 파견된 제4연대 1개 중대는 반군으로부터 순천경찰서를 보호하기 위해 동천의 서쪽에 배치됐으나 이들도 반군에 가담했다.²⁴⁾ 반군과 교전했던 순천 경찰은 수와 무장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한 채 패했고 순천도 반군의 수중에 들어갔다.

순천을 장악한 반군은 3개부대로 재편했다. 약 1,000의 주력 부대는 남원을 향해 북쪽으로, 일부는 보성과 벌교 방면으로, 그 나머지는 광양을 향해 진격했다.²⁵⁾ 남원 방면으로 진출했던 반군은 학구에서 진압군과 교전한 뒤 순천으로 철수했고, 보성과 벌교 방면으로 나갔던 반군은 순천 남쪽의 4개 경찰지서-별량, 낙안, 조성, 벌교-를 습격한 뒤 보성 부근에서 진압군과 교전했다. 광양 방면으로 진출한 반군은 제15연대를 기습해 연대장을 사로잡는 등 진압군을 패퇴시켜 하동으로 철수케 만들었다. 그러나 반군은 진압군의 토벌이 거세지자 지리산과 백운산 지역으로 들어가 빨치산 활동을 시작했다. 여수에 남았던 잔류부대는 10월 20일 오후 3시 여수 중앙동에서 열린 인민대회에 참가했으며²⁶⁾ 10월 23일 제5연대의 상륙작전과²⁷⁾ 10월 24일 미평 전투 등에서 정부군을 패퇴시켰다. 이들은 정부군의 진

22) 김계유, 「1948년 여순봉기」『역사비평』, 1991년 겨울호, 264쪽.

23) 김영만의 증언에 따르면, 김지회는 몰랐던 반면 홍순석은 제14연대 남로당 조직 모임에 참석했다고 한다. 아마 김지회는 중앙당, 홍순석은 전남 도당 소속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김영만의 증언.

24) Headquarters 5th Brigade, Summary of Event, 1948. 10. 20. 1200 ; Headquarters 5th Brigade, Summary of Event, 1948. 10. 21. 0120. 미군 고문관들-모어(Mohr) 중위와 그린바움(Greennbaum) 중위-이 배치했다. 이들은 제4연대가 반군에 가담하자 포로가 됐으나 제14연대 하사관 유창남의 도움으로 풀려난 뒤 부대로 복귀해서 정부군의 진압작전에 도움을 주었다.

25) 순식간에 동부지역으로 확산된 과정은 제14연대 주력 부대의 행로와 비슷했다. 물론 반군이 들어가기 전에 지방 좌익들이 먼저 호응하여 봉기한 경우도 있으나 대개는 제14연대의 행로와 비슷하게 진행됐다. 즉 한편으로 여수→순천→남원·보성·광양→보성→구례→지리산의 행로(김지회 지휘 부대)와, 다른 한편으로 여수→광양→백운산→지리산(지창수 지휘 부대)의 행로이다. 이들 지역은 여수 주변 지역이면서 또한 제14연대 관할지역이기도 하다. 즉 제14연대 병사들의 고향이었고, 향토연대의 특성이 일정하게 영향을 미친 행로일 가능성이 높다.

26) 지창수는 병사 대표로 연설했다.

27) 이때 김종원이 선임했던 제5연대 제1대대 제1중대장 박태서 중위(일본군 지원병 출신)가

압작전이 강력해질 것을 예상해 10월 24일 밤을 틈타 백운산과 별교 방면으로 퇴각했다.²⁸⁾ 여순사건이 발생하자 정부와 미군에서는 신속하게 대응했다. 10월 20일 상오 주한미임시군 사고문단 단장 로버츠 준장 사무실에서 국방장관 이범석, 육군 총사령관 송호성, 주한미임시군단(PMAG) 단장 로버츠, 국방부 고문 하우스만을 비롯한 미군 고문단 참모들이 모여 긴급회의를 갖고 1차로 광주에 기동작전군사령부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²⁹⁾ 송호성은 특별 기편으로 10월 20일 오후 1시 광주 비행장에 도착했고,³⁰⁾ 공식중인 제5여단장에 김백일 대령을 임명하며 진압부대를 편성했다.³¹⁾

이범석은 10월 21일에 이 사건은 반란이며 강력한 토벌작전을 전개하겠다고 했다.³²⁾ 다음날 이범석은 ‘반란군에 고한다’는 포고문을 발표하여, 제14연대의 봉기가 ‘반란’이니 국법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으며, 총살당하지 않으려면 즉시 투항하라고 요구했다.³³⁾ 주한미대사 무초(Muccio)와 주한미군 사령관 쿨터(Coulter)도 고문단장 로버츠에게 가능한 빨리 여수와 순천을 탈환하도록 압박했고, 로버츠는 송호성에게 보낸 훈령(Letter of Instruction)에서 ‘정치적, 전략적으로 여수와 순천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탈환해야 한다’고 압력을 넣었다.³⁴⁾ 결국 어떤 비용을 들이더라도(at all cost) 여수와 순천은 탈환돼야만 한다는 분위기가 토벌사령부에 형성됐다.³⁵⁾ 정부는 ‘투항 아니면 총살’ 그리고 신속한 진압방침을 정한 채 막대한 병력을 동원한 압박 섬멸전의 공격을 시도했다.³⁶⁾

결과적으로 정부와 미군 그리고 현지 지휘부의 신속하고도 강경한 진압방침은 이후 반군이 후퇴한 상황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한 무리한 진압작전을 강행하게 만들었고, 동시에 여수를 비롯한 인근 지역에서 부역자를 처벌한다며 민간인들을 즉결심판하게 만든 원인이 되었다.³⁷⁾ 그런데, 부역자를 심판한다는 명분 아래 자행된 즉결심판이 언제, 누구에 의해서

반군의 총격에 사망했다고 한다. 육군사관학교 제5기 생회, 『육사 제5기 생』, 1990, 148쪽.

28) 김계유, 「1948년 여순봉기」 『역사비평』 1991년 겨울호, 277쪽.

29) 짐 하우스만/정일화 공저, 『한국의 대통령을 움직인 미군대위 : 하우스만 증언』, 1995, 한국문원, 171~172쪽.

30) 송호성과 함께 주한미군사고문단 장교-하우스만 대위(PMAG 작전 고문), Reed 대위(PMAG 정보 고문), Treadwell 대위(전 제5여단 고문), Frye 대위(현 제5여단 고문)-들과 한국군 참모-채병덕 대령(국방부 총참모장), 정일권 대령(육군 참모장), 백선엽(육군 정보국장), 고정훈 중위(육군본부 정보국 장교)-들이 광주 송정리 비행장에 도착했다.

31)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459쪽.

32) 「자유신문」 1948. 10. 22(국사편찬위원회편, 1999, 『자료대한민국사』 8권, 792~794쪽).

33) 「서울신문」 1948. 10. 24(국사편찬위원회, 『자료대한민국사』 8권, 819~820쪽).

34) 「로버츠 준장이 전투사령관 송호성 장군에게 : Letter of Instruction」 1948. 10. 21.

35) James Housman, 「ANSWER TO QUESTIONS ON THE YOSU REBELLION」 『James Housman Biography』(미공간물).

36) 「서울신문」 1948. 10. 23(국사편찬위원회, 『자료대한민국사』 8권, 820쪽).

37) 여순사건 당시의 민간인 학살과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김득중, 「여순사건

만들어졌는지 분명하지 않다. 다만, 한 가지 단서로 찾을 수 있는 것은 10월 26일 발포된 계엄령이다. 하지만, 그 역사를 추론한다면, 일제 시기 만주에서 자행된 항일빨치산 토벌작전에서 그 원형을 찾을 수 있다. 일제는 만주에서 항일빨치산을 토벌하며 ‘暫行懲治盜匪法’을 공포했다. 이 법의 제7조와 제8조에는 군대사령관이나 고급 경찰관이 토벌 시 사태가 급박할 때는 자신들의 재량에 의해 ‘臨陳格殺’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 법은 토벌 부대장이 소위 비적을 토벌했을 때 부대장의 재량에 따라 전장에서 사형시킬 수 있음을 공공연하게 인정한 것이었다.³⁸⁾ 정부 진압군의 주요 지휘관들이 대개 일본군이나 만주군 출신이었음을 상기한다면, 만주에서의 토벌작전이 그대로 이어져 여수 등지에서 재현됐을 가능성이 높다.

진압부대의 편성은 신속한 진압 방침이 반영됐다. 10월 21일 진압부대는 육군 5개 연대-3연대의 2개 대대, 4연대 3개 대대, 6연대 1개 대대, 12연대 3개 대대, 15연대 1개대-와 비행대(육군대위 김정렬/L형 연락기 10대) 그리고 수색 대대(육군대위 강필원/장갑차 부대)로 편성됐다.³⁹⁾ 하지만 지휘권 문제로 불만을 품었던⁴⁰⁾ 원용덕이 직속 부대인 제2연대를 허가 없이 이동시켰고,⁴¹⁾ 반군의 저항이 의외로 완강하자 10월 22일에 부산의 5연대가 추가 배치됐다.⁴²⁾ 당시 육군은 총 15개 연대였는데, 38선 경비연대(제1연대와 제8연대)와 제주도 주둔부대(제9연대와 제11연대), 그리고 제14연대를 제외하면 총 10개 연대였다. 10개 연대 중에서 7개 연대가 진압부대로 출동했으며, 제2연대를 제외한 대전 이남의 모든 부대가 동원됐다. 이러한 편제는, 여수-남원을 축으로 하여 가까운 곳의 모든 부대를 이동시켜 신속히 진압하겠다는 것이었다.⁴³⁾

10월 21일 수립된 작전은 진압부대가 주둔지로부터 이동하여 여수-남원의 도로를 따라서 반군을 고립시킨 다음 진압하는 것이었다.⁴⁴⁾ 그러나 진압작전은 예상과는 다르게 전개

당시의 민간인 학살」(성대경 엮음, 『한국현대사와 사회주의』2000, 역사비평사, 300~364쪽.)

38) 滿洲國史編纂刊行會 編, 『滿洲國史』(總論)(東京, 滿蒙同胞援護會, 1970), 329쪽(尹輝鐸 著, 『日帝下「滿洲國」研究-抗日武裝鬭爭과 治安肅正工作-』, 1996, 一潮閣, 116쪽에서 재인용).

39)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459~460쪽.

40) 백선엽, 『실록 지리산』, 1992, 고려원, 173~174쪽.

41) 제2여단장 원용덕은 협조적이거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일권이 직접 송호성의 명령서를 가지고 대전으로 찾아갔다. 「하우스만(Hausaman) 대위가 로버츠(Roberts) 장군에게」 1948. 10. 21.

42) 이날 풀러(Fuller) 대령이 참모역할을 하기 위해 광주로 급파됐다. G-3 Section, XXIV Corps, History of the Rebellion of the Korean Constabulary at Y대SU and DAEGU, 1948. 11. 10.

43) 「로버츠 준장이 전투사령관 송호성 장군에게 : Letter of Instruction」 1948. 10. 21.

44) 「로버츠 준장이 전투사령관 송호성 장군에게 : Letter of Instruction」 1948. 10. 21 ; 「ANSWER TO QUESTIONS ON THE Y대SU REBELLION」, 『James Housman Biography』.

됐다. 이전까지 연합 작전의 경험이 없었고, 병참과 연락 등의 많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다. 10월 22일 하동에서 여수지역으로 진격하던 제15연대는 광양에서 반군의 매복에 기습당해 연대장이 사로잡히는 일이 일어났고, 이날 밤에는 정부군끼리 총격전을 벌이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⁴⁵⁾

진압군은 병력을 집중시켜 10월 22일에 순천을 탈환한 뒤 여수 탈환작전에 돌입했다. 정부군은 10월 24일 보성과 벌교를 진압하고, 동시에 하동과 순천으로부터 광양을 향해 진격했으며 반군은 백운산으로 퇴각했다. 이때의 진압작전은 제4연대는 여수의 서쪽, 제3연대와 제2연대 여수의 북쪽, 제12연대는 여수의 북서쪽, 제5연대는 바다, 대구의 제6연대는 여수의 북쪽 산맥, 제15연대는 여수의 동쪽 등지로부터 진격하는 것이었다.⁴⁶⁾ 10월 24일 수색대대와 장갑차 그리고 제3연대를 앞세우고 토벌사령관 송호성이 직접 여수 진입에 시도했으나 반군의 매복에 걸려 사령관의 부상과 중군기자의 사망 등의 피해를 남긴 채 후퇴했다. 10월 25일 다시 진압군은 장갑차와 박격포의 지원사격을 앞세우고 여수에 진입을 시도했다가 철수했다. 10월 26일 들어서 비로소 진압군은 여수에 진입할 수 있었고, 10월 27일 여수를 완전 탈환할 수 있었다.

IV. 진압부대의 주요 지휘관과 미군의 역할

진압 부대의 주요 지휘관(연대장급 이상)들은 송호성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일본군이나 만주군 출신이었다. 특히, 제5여단장 김백일·제3연대 부연대장 송석하·제15연대장 최남근·육군본부 정보국장 백선엽 등은 모두 만주 봉천군관학교 졸업했으며⁴⁷⁾ 모두는 일제가 1939년 8월에 항일빨치산을 토벌하기 위해 창설한 간도특설경비대에⁴⁸⁾ 소속된 한인 군관 출신이었다.⁴⁹⁾ 이들 중에서 제15연대장 최남근은 다른 장교들과는 달리 중도적인 입장에서 진압작전에 적극 참가하지 않았고, 10월 22일 광양 방면에서 반군의 기습에 포로가 됐다. 이후 그는 탈출한 뒤 진압군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으나 공산주의자로 몰려 숙군 과정에

45)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464쪽.

46) AMERICAN MISSION IN KOREA, Report on the Insurrections After April 1948, made by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Lee Bum Suk, 1948. 12. 14.

47) 김백일과 송석하는 5기, 최남근은 7기, 백선엽은 9기 출신이었다.

48) 사사키저·강창구편역, 『한국전비사』상, 1967, 병학사, 44~45쪽. 이 책에는 1941년으로 나왔으나 사실의 오류이다.

49) 이중 최남근의 이름은 없고 최근철(육군대령, 군수참모를 지냄)만 확인됐다. 그러나 그가 1945년말 김백일·백선엽 등과 함께 월남한 것으로 보아 최남근도 봉천군관학교를 졸업하고 간도특설대에 근무했을 가능성이 높다. 간도특설대 소속 한인들은 신주백 선생이 소지한 자료에서 확인됐다. 중요한 자료의 확인을 해준 신주백 선생의 호의에 감사한다.

서 체포됐다. 그 뒤 재판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1949년 8월 2일 경기도 수색에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며 총살당했다.⁵⁰⁾

전투사령관인 송호성은 광복군 출신으로, 10월 24일 미평전투에서 보여지듯이 용감하지만 능력이 부족한 지휘관이었으며⁵¹⁾ 여순사건의 진압작전이 일단락된 이후 총사령관에서 면직됐다.⁵²⁾ 진압 작전의 실제 지휘관은 제5여단장 김백일 대령이었다. 그는 1945년 말 백선엽, 최남근 등과 함께 월남해 군영을 졸업한 뒤 임관한 뒤 제3연대장, 후방부대 사령관 등을 지냈다. 제3연대장 시절에는 비리와 가혹한 훈련, 남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발언 등으로 인해 연대원들의 퇴진시위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⁵³⁾ 그는 만주군 군의관(대좌) 출신인 원용덕 대령이 전투를 지휘하는 것은 무리이며 모든 부대의 지휘를 김백일 대령으로 통일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던 채병덕의 판단에 따라 제5여단장에 임명됐는데, 만주군 시절에 빨치산 토벌 경험이 있었던 까닭에 중용됐다.⁵⁴⁾ 제2여단장 원용덕은 만주군 군의 출신의 장교로 해방후 군사영어학교에 만주군 출신들을 입대시켰다. 그는 여순사건 진압작전 때는 김백일이 지휘했던 까닭에 지휘권을 행사하지 못하다가 여순사건의 토벌작전이 완료된 후 북지구전투사령관으로 빨치산 토벌전을 수행했다.

제3연대와 제12연대 그리고 제2연대는 연대장을 대신해서 부연대장인 송석하 소령과 백인엽 소령, 제2여단 군수참모 함병선이 지휘했고, 연대장들은 부대에 잔류했다. 이것은 제2여단장 원용덕이 이들을 지휘관으로 지명했기 때문이었다. 원용덕이 제3연대장 함준호 중령이나 제12연대장 백인기 중령을 신뢰하지 않았기에 부연대장을 출동부대장으로 지명했으며⁵⁵⁾ 제2연대장은 자신의 지휘권을 확립하기 위해 임의로 연대장을 임명했다. 백인엽은 학병출신으로 일본군 소위로 근무했다. 그는 여수 진압작전이 완료된 이후 부역자를 처벌한다며 구례 일대에서 민간인 학살을 자행했다. 함병선은 평북 송덕중학을 졸업한 일본군

50) 최남근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노영기, 「육군 창설기(1947년~1949년)의 숙군에 관한 연구」, 1998,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논문, 54~56쪽.

51) 로버츠 준장은 송호성의 건강상의 문제로 야전 지휘관으로 부적절하고 야전상황의 평가를 잘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렇지만, 그가 대한민국에 충성스러우며 많은 군인들에게 존경받는 달변가(good talker)이기 때문에 국방장관의 특사(special representative)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Headquarters Provisional Military Advisory Group, Apo 235, 12 NOVEMBER 1948.

52) 미국은 송호성이 탈락한 이유로 그가 국방경비대 내에서 김구 추종자들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문, 이범석 국방장관의 알력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다. Weeka 47, 1948. 11. 20(정용욱 엮음, 『Joint Weeka』, 영진문화사, 300쪽).

53) 이때 연대원들을 지휘해서 연대장 배치운동을 전개했던 장교는 제12연대장 백인기였다.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1946. 10. 6~10. 7. #349 ;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406~408쪽 ; 사사키저·강창구편역, 앞의 책, 158~160쪽.

54) 사사키저·강창구편역, 앞의 책, 337쪽.

55) 사사키저·강창구편역, 앞의 책, 336쪽.

지원병 출신으로 낙하산 부대에서 근무했다.⁵⁶⁾

제6연대장 김종갑은 연희전문을 졸업한 일본군 학병 소위로 2년간 근무했다. 그는 해방 직후 학병동맹에 반대한 우파 성향의 학병 출신들이 만들었던 학병단에 참여했으며 이후 군사영어학교를 졸업한 경력을 지녔다.⁵⁷⁾ 제4연대장 이성가 중령은 중국중앙군관학교를 졸업한 중국군이지만 극우파 중국 군벌인 왕정위군에서 복무했다. 1947년 4월 제1연대장으로 있을 때 김창룡을 연대 정보장교로 발탁해 숙군을 시작했으며, 1948년 8월 제4연대장으로 부임해 연대내 숙군을 진행했던 극우 성향의 지휘관이었다. 제4연대 부연대장 박기병은 만주군 출신으로 1947년경 김창룡을 정보장교 추천했던 극우 성향의 장교였다. 제5연대 제1대대장 김종원은 일본군 지원병 출신으로 일본군에 복무할 때부터 “호랑이”이며 야만적인 사람으로 알려졌는데,⁵⁸⁾ 10월 23일의 상륙작전이 실패로 돌아가자 정보를 제공했던 여성과 아이를 포함한 몇몇 어부들은 무자비하게 구타했고,⁵⁹⁾ 진압작전이 끝난 뒤에는 부역자를 처단한다며 일본도로 민간인들을 직접 참수하기도 했다.⁶⁰⁾

이렇듯 현지에서 초기 진압작전을 지휘했던 부연대장 이상의 직위에는 과거 일본군 출신, 특히 만주에서 항일빨치산을 토벌한 경험이 있었던 만주군 출신 장교들이 중용됐다. 또한 이들은 대개 일찍부터 반공을 주장했던 극우 성향의 장교들이 주를 이루었다.

여순사건이 발생하자 미군은 즉각 개입했다. 광주에 리드와 하우스만을 비롯한 전현직 미군 고문관들을 파견했고,⁶¹⁾ 조기진압이 실패로 돌아가자 10월 22일 풀러 대령을 추가 파견하는 등 진압작전을 적극 지원했다. 리드와 하우스만은 사령부에 배속됐는데, 이들 외에도 각 연대에 파견된 미군 고문관들은 진압작전에 적극 개입했다. 제4연대 고문관 모어 중위와 그린바움 중위는 제4연대 1개 중대를 순천의 동강에 배치했고, 한국군 지휘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제4연대를 정비해 진압군으로 투입하거나 제5연대의 상륙작전에서 김종원을 비롯한 한국군 지휘관들이 무리한 상륙작전을 계획하자 이를 제지하는⁶²⁾ 등의 예에서와 같이 고문의 역할을 넘어서 직접 진압작전에 개입했다.⁶³⁾ 또한, 미군은 탄약·무기·식량을

56) 한용원, 『창군』, 1984, 박영사, 58쪽.

57) 육군본부, 『창군전사』, 1980년, 283~284쪽.

58) Howard W. Darrow, The YOSU Operation, Amphibious Phase. 이 문건은 제5연대 고문관이었던 다로우 대위가 PMAG에 올렸던 보고서이다.

59) Howard W. Darrow, The YOSU Operation, Amphibious Phase.

60) 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471쪽.

61) 이때 로버츠 준장은 하우스만에게 4가지 공식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1. 한국군사령부가 사태 진압에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면 즉각 작전통제권을 직접 관장할 것, 2. 기동작전사령부를 구성하고 적절한 감독 행위를 할 것, 3. 결과를 신속히 고문단 본부에 보고할 것, 4. 면밀한 작전 계획을 세워 이를 성공적으로 이행할 것 등이었다. 하우스만·정일화 공저, 앞의 책, 172쪽.

62) Howard W. Darrow, The YOSU Operation, Amphibious Phase.

비롯해 통신수단까지 제공했다. 미군의 원조가 없었다면 여순사건은 더욱 더 심각해졌을 것이다.⁶⁴⁾

V. 맺음말 - 여순사건이 남긴 것

10월 27일 정부군이 여수를 탈환함으로써 진압작전이 완료됐다. 이 사건을 거친 뒤 군대와 대한민국 정부는 체제 정비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 제14연대 출신들이 주축을 이룬 빨치산 토벌전을 계속하는 한편, 여순사건이 발생한 원인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갔다.

우선, 군대내 반체제 세력들을 제거하는 숙군을 과감히 진행했다. 군 정보국 외에도 헌병대, 국방경비대와 관련 정보를 수집했던 경찰-그 중에서도 사찰과-이 수사에 참여했다.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부대나 계급에 상관없이 체포됐다. 10월 26일부터 시작된 숙군에는 8명의 고급장교들을⁶⁵⁾ 포함해 총 2,245명-장교 85명, 1009명의 사병, 1160명의 민간인-이 체포·구금됐다. 1949년 3월 12일까지 총 1,475명-장교 214명, 사병 1,261명-이 체포됐으며,⁶⁶⁾ 5월 1일부터 25일까지 다시 1,884명이 체포됐다.⁶⁷⁾ 그 뒤로도 숙군은 계속됐다. 용의자들에게는 예비 검속의 의미인 국병경비법⁶⁸⁾ 제18조 ‘반란기도죄’가 주로 적용됐다.⁶⁹⁾

여순사건의 또 다른 원인이었던 반경감정을 없애며 경찰과의 협력이 시도됐다. 여순사건의 진압 때부터 정부에서는 군경협력을 강조하며⁷⁰⁾ 여순사건의 원인이 군경대립이라는

63) 미군 고문관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Bruce Co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 The Roaring of the Cataract 1947-1950, 264.

64) Robert. Sawyer, Military Advisors in Korea ; KMAC in Peace and War, 1962, Washington, USGPO, 40쪽.

65) 국방부 참모 2명과, 공병단(Engr Bn) 사령관(최창언), 제14연대장(박승훈), 4여단 참모장(최남근)과 병기단(Ord group) 행정장교 등이 포함됐다.

66) 이날까지 74-장교 24명, 사병 50명-명이 체포되지 않았다. CG, PMAG, ACTIVITIES WEEKLY OF PMAG. 1949. 3. 14. 3월 3일 기자회견에서 국방부 총참모장 채병덕은 총 1,496-장교 326명, 사병 1,170명-명을 숙청했다고 발표했다(『자유신문』 1949. 3. 1.).

67) 이들 외에도 석방됐으나 감시당하는 병사가 23-장교 19명, 사병 4명-명, 체포가 임박한 감시자들은 841명-장교 127명, 사병 714명-이었다. CG, PMAG, ACTIVITIES WEEKLY OF PMAG. 49. 5. 31.

68) 최근 4·3항쟁 관련 심포지움에서 법학자들은 ‘국방경비대법’이 공포된 바 없는 정체불명의 법률이기 때문에 재판조차 불법이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경주, 「재판을 받을 권리와 국가 긴급권 - 제주 4·3 수형자명부를 중심으로」, 『제주 4·3 ‘군법회의 수형인’을 통해 본 국가 폭력과 인권』, 2002년 ; 이재승, 「소위 제주4·3관련 군법회의 재판은 재판인가?」, 『제주 4·3 ‘군법회의 수형인’을 통해 본 국가 폭력과 인권』, 2002년.

69) 「고등군법회의명령」에 나와 있는 기소자는 총 371명이었다. 이들의 85% 이상인 316명이 반란기도죄로 기소됐다. 노영기, 「육군 창설기(1947년~1949년)의 숙군에 관한 연구」, 1998,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논문, 41~56쪽.

것은 낭설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⁷¹⁾ 그리고 1948년 11월 27일 서울에서는 정부 관료들이 참관한 군경간의 친선행사가 열렸다.⁷²⁾ 이후 경찰은 숙군과 빨치산 토벌작전 등에서 군대에 협력했고, 반민특위의 활동이 경찰에 미치자 친일경찰들은 군대를 도피처 삼아 특위의 검거를 피했다.⁷³⁾

셋째, 1949년 상반기에 38선을 경비하던 제1연대와 8연대를 제외한 모든 연대가 도의 경계를 넘어서 주둔지를 이동했다.⁷⁴⁾ 이전까지 제주도에 파병됐던 제5연대와 제11연대를 제외하고는 이동이 없었던 점에서 볼 때 이례적인 일이었다. 제주도 파병같이 작전상의 필요에 의한 것도 있었지만, 그 보다는 향토연대의 특성을⁷⁵⁾ 해체하려는 목적 때문이었을 것이다.

넷째, 여순사건을 거치면서 손실된 병력의 보충이⁷⁶⁾ 우익청년단체 성원들의 입대를 통해 이루어졌다. 여순사건 직후부터 우익청년단체는 정부에 무기를 대여해 줄 것을 요청했고,⁷⁷⁾ 국방부에서도 청년단체를 포섭하는 모병을 계획했다.⁷⁸⁾ 1948년 12월 말 청년단체의 간부나 군사경험자들을 모집, 특별훈련을 거쳐 임관시켰다.⁷⁹⁾ 1948년 12월 20일 200명의 서북청년회 회원들이 비밀리에 대전의 경비대에 입대했다.⁸⁰⁾ 이렇듯 여순사건을 겪은 뒤 이전의 마을별 모병이 철폐되고, 대신에 대한민국을 수호할 수 있는 우익청년단체를 대상으로 한 모병이 진행됐다. 이것은 숙군과 함께 군대가 체제 수호의 기구로 변모하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반공을 내세우며 무슨 일이든 수행할 수 있는 집단으로 군대가 변모해가는 것임을 뜻한다.

70) 군대와 경찰의 책임자인 국방장관과 내무장관은 함께 10월 26일 광주의 제5여단사령부(군대)와 제8관구경찰청을 연달아 순시하며 협력을 강조했다. 『서울신문』 1948. 10. 29 ; 10월 28일 이승만은 군경간의 협력을 강조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동아일보』 1948. 10. 28.

71) 1948년 11월 13일 정부대변인 김동성 공보처장은 군경간의 대립은 낭설일 뿐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동신문』 1948. 11. 13.

72) 『한성일보』 1948. 11. 28.

73) 1949년 6월 29일부로 육군에서는 이익흥(李益興), 홍순봉(洪淳鳳), 안익조(安益祚) 등을 헌병 소령으로 특별 임관시켰다. 『육본특명』 제131호. 이들외에도 대표적인 친일경찰인 전봉덕과 노덕술도 헌병으로 특별임관했다.

74) 노영기, 「여순사건과 군」 『여순사건 제52주년 기념 학술회의 :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새로운 해법』, 2000, 순천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42~43쪽.

75) 각 연대는 중앙에서 장교 보충과 자금 원조만 받았을 뿐 사병모집과 훈련 등은 자체 해결했다. 사사키 저·강창구 편역, 앞의 책, 131~132쪽.

76) 미군사고문단장 로버츠는 10월 22일에 채병덕에게 보낸 편지에서 병력을 50, 000명을 유지하려는 것이 미국의 계획이며, 즉시 14연대를 재창설할 것을 제안했다. 「주한미임시군사고문단장 로버츠 준장이 국방부 총참모장 채병덕에게」 1948. 10. 22.

77) 이 모임에는 내무부장관과 문교부장관이 동석하였다. 『동아일보』 1948. 11. 19.

78) 『동아일보』 1948. 11. 16.

79) 『자유신문』 1948. 12. 26.

80)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1948. 12. 27~12. 28, #1023.

1948년 11월 20일 호국군이 창설됐고, 1949년 4월 22일 학도호국단이 만들어졌다.⁸¹⁾ 또한 비상수습책의 일환으로 1948년 겨울, 중등학교 체조교사들에게 군사교육을 이수시켜 예비역 소위로 임관시킨 뒤 학도호국단의 배속장교로 배치했다.⁸²⁾ 이러한 준군사조직의 조직과 훈련 통하여 군대는 민간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시켰다. 또한 계엄령이 선포된 지역에서 군은 경찰을 대신해 대민사찰, 특히 생사여탈권이었던 즉결심판권을 행사했다.

여순사건을 거치면서 이승만 정권 역시 체제를 재정비할 수 있었다. 우선 1948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켜 극우반공체제를 확립했다.⁸³⁾ 그리고 1948년 12월 31일로 예정됐던 주한미군의 철수가 연기됐고, 결국 1949년 6월 29일에서야 비로소 주한미군은 철수했다.⁸⁴⁾

여순사건은 군대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⁸⁵⁾ 하지만 이를 계기로 군대는 재정비할 수 있게 됐으며, 본격적으로 체제 수호의 물리적 기구로 기능할 수 있게 됐다.

81) 中央學徒護國團, 『學徒護國團十年誌』, 1959, 75쪽.

82) 국방부, 앞의 책, 1984, 152쪽.

83) 서중석,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 2 - 1948~1950 민주주의·민족주의 그리고 반공주의』, 1996, 역사비평사.

84) 주한미군이 철수한 뒤에도 주한미군사고문단(KMAG)가 남아서 한국군의 무장과 훈련 등을 감독했다.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된 미국내부, 그리고 이승만과 미국의 논의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Bruce Co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 The Roaring of the Cataract 1947-1950, 380~386.

85) AMERICAN MISSION IN KOREA, Report on the Insurrections After April 1948, made by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Lee Bum Suk, 1948. 12. 14.

여순사건과 4·3항쟁에서의 민간인 학살 유형

김 창 후 (金昌厚 제주4·3연구소 부소장)

I. 머리말

1948년 10월 19일 여수 신월동에 주둔했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가 반란을 일으켰다. 반란의 표면적인 이유는 제주 민중에게 총부리를 겨누게 될 제주도 과병을 반대한다는 것이었다. 그 후 이러한 이유로 하여 여순사건은 4·3항쟁 때문에 발발했다는 단순 논리가 등장하기도 했다. 두 사건의 발발 원인이나 미군정·이승만 정부의 토벌 과정은 아주 흡사한 면이 있다. 그러나 사건 전체를 살펴볼 때 지역차이만큼 다른 점도 많다.

4·3항쟁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연구와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4·3 진상규명과 제주도민의 명예회복을 위한 4·3특별법이 제정되어 현재 정부차원의 각종 위원회가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에 반해 여순사건은 연구는 물론 진상규명을 위한 지역민들의 투쟁도 최근에야 활성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글은 두 사건에서의 지금까지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미군정 및 이승만 정부의 대응과 그에 따른 민간인 학살의 여러 유형들을 간략히 살펴볼 것이다. 아울러 사건 전개 및 토벌과정에서의 상호 연관성 등 필요한 부분은 그때그때 별도로 다루게 될 것이다.

II. 미군정 및 이승만(李承晩) 정부의 대응

여순사건과 4·3항쟁에서 민간인 학살 문제를 거론할 때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미군정 및 이승만 정부가 사건 발발 직후 두 사건을 어떻게 보았는가 하는 점이다. 이는 사건 주체 문제와 연관되면서 그 후 초기 토벌과정에서의 차이로도 나타나기 때문이다.

두 사건은 우연히, 혹은 어떤 하나의 계기에 의해서 촉발된 것이 아니었다. 4·3을 “해방 당시 제주도에서 전개되었던 사회·경제적 상황 및 미군정의 대한반도 정책에서 파생된 제주도의 정치적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발생했다¹⁾”든지, “4월 3일의 봉기는

1) 梁漢權, 「제주도 4·3폭동의 배경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88.

미군정·경찰·서청의 탄압에 대한 제주도 민중들의 방어적 항쟁으로 시작되었으며.....2)” 한 것이나, 여순사건을 “여순사건이 일어난 데에는 군과 경찰의 알력이 작용하기도 하였지만 제주 4·3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거부하면서 발발한 것에서도 잘 나타나 있듯이 분단정권 반대, 친일과 척결 등 해방 후부터 쌓인 불만이 폭발한 것이다3)”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두 사건의 발발 원인은 해방 직후 미군정 및 이승만 정부의 온갖 실정 문제가 실타래처럼 엉켜 총체적으로 폭발한 것이었다. 그러나 두 사건의 발발 원인이 흡사한 반면 사건의 주체는 달랐다. 여순사건이 제14연대 소속 국방경비대원들의 주도에 일부 지역 좌익이 가담한 군대의 반란 사건인 반면 4·3은 일정 부분 제주도민의 심정적 지지를 바탕으로 남로당 제주도위원회의 주도 아래 발발한 민간인 항쟁이었다. 이런 주체의 차이 때문에 미군정 및 이승만 정부는 두 사건을 달리 보았고, 초기 대응도 달랐다.4)

이승만 정부는 10월 19일 여순사건이 발발하고 다음날 순천으로 확대되어가자 즉각 미군사고문단의 주도 아래 회의를 열어 광주에 기동작전군(Task Force)을 편성하기로 결정하고, 곧 장비와 물자를 광주로 실어 나르는 등 ‘군사작전’으로 빠른 해결을 시도했다. 아울러 이승만 정부는 사건의 주체를 발표하였는데, 처음에는 ‘우익과 공산주의자의 연합’이라 했다가 다음에는 ‘민간인 공산주의자가 주동이 되고 군인 일부가 일으킨 것’으로 변화하다 마지막으로 북한으로 화살을 돌려 ‘소련-북한-남한의 공산주의자들’로 그 방향을 바꾸었다.5)

그러나 이승만 정부는 사건의 원인이 정부의 실정에 있다는 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반면 미군정은 4·3이 발발하자 즉각 각 도의 경찰청에서 경찰 병력을 1개 중대씩 차출하여 8개 중대 17,00여 명을 제주도로 파견할 것을 승인하고, 4월 5일에는 제주경찰감찰청에 제주비상경비사령부(사령관 경무부 공안국장 金正浩)를 설치하여 ‘경찰작전’으로 4·3을 해결하려 했다. 김정호는 제주도에 부임한 직후 기자회견담회에서 4·3에 대해 사건 발발의 원인인 악질 친일경찰 처벌 등 미군정의 실정 문제는 일체 거론하지 않고, “나는 이번 폭동 사건이 제주도민의 주동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육지부에서 침입한 악질 불량도배들이 협박·위협 등으로 도민을 선동시켜 야기된 것이라고 인정한다” 고 했다. 김정호는 사건의 주체를 외부 (좌익)도배들로 지목하고, 그들의 선동에 도민들이 부화뇌동한 것이 바로 4·3이라고 규정했다.6)

2) 朴明林, 「제주도 4·3민중항쟁에 관한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1988.

3) 김득중, 「이승만 정부의 여순사건 인식과 민중의 피해」, 『여순사건 자료집』 제2집, 여수지역사회연구소, 1999.

4) 미군정 및 이승만 정부의 사건 초기 대응의 차이가 어디서 온 것이냐를 고려할 때 물론 시공간적 차이도 일정 부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나 토벌과정을 살펴볼 때 중요한 요인은 역시 사건의 주체 문제이다.

5) 김득중, 앞의 글.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의 사건을 보는 시각의 차이는 토벌작전의 차이를 가져왔다. 즉 ‘여순사건--> 군사반란--> 군사작전--> 즉각토벌, 4·3항쟁--> 민간인 폭동--> 경찰작전--> 장기토벌’이라는 등식으로 토벌작전이 수행됐다. 이 과정에서 여순사건인 경우 경찰은 군의 작전에 동참했지만, 4·3에서 제9연대장 김익렬은 제주도사건이 경찰과 제주도민의 갈등으로 보아 초기에는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며 작전에 참여하지 않았고 평화회담을 통해 사건을 큰 인명피해 없이 해결하려 했다.

III. 제주도에서의 국방경비대 초기 토벌작전과 브라운 대령의 4·3 진압책

4·3이 발발하자 군정장관 딘소장은 4월 18일 제59군정중대 군정장관 맨스필드 중령(John Mansfield)에게 국방경비대를 동원한 최초의 대규모 토벌작전을 지시했다. 그러나 딘소장은 “대규모 공세에 앞서 불법집단의 우두머리와 접촉하여 그들에게 항복할 기회를 주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라⁷⁾”고 명령함과 동시에 “미군은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⁸⁾”고 주문했다. 이런 딘소장의 명령에 따라 무장대와 접촉에 나선 국방경비대 제9연대장 김익렬은 한라산 일대에 뼈라를 뿌려 “사건 계속은 이 이상 유해무익이므로 향토의 평화회복을 위하여 하루바삐 손을 잡자”고 호소했다.

4월 27일 미제24군단 작전참모 타이첸 대령(A. C. Tyschen)의 지시를 받은 슈 중령(M. W. Schewe)이 제주도에 내려와 맨스필드 중령, 제20연대장 브라운 대령(Rothwell H. Brown), 제주도 주둔 제20연대 책임장교 가이스트 소령(Geist), 한국군 제5연대 고문관 드루스 대위(De Reus) 등과 제주도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이때 브라운 대령이 맨스필드 중령에게 주한미국사령관의 지시사항⁹⁾을 전달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경비대는 즉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 물론 미군정은 4·3의 경우에도 여순사건과 마찬가지로 주체를 북한으로 돌리는 발언을 한다. 경무부장 趙炳玉은 6월 23일 담화를 통해 “(4·3의) 근본원인은 실로 조선의 소련 연방화 내지 위성국화를 기도하는 공산당의 남조선 파괴공작에 가담한 자들의 총선거 방해공작에 불과했던 것”이라고 했다. (『동아일보』, 1948. 6. 24).

7) U.S. Army Forces in Korea, “Cheju-Do Operations”, 18 April 1948.

NARA RG 338, U.S. Army Forces in Korea, 1945-1949, Entry No. 11070, Box No. 84.

8) U.S. Army Forces in Korea, “Report of Activities at Cheju-Do Island”, 29 April 1948.

NARA RG 338, U.S. Army Forces in Korea, 1945-1949, Entry No. 11070, Box No. 68.

9) 앞의 자료.

- b. 시민들의 모든 무질서 행위는 종식되어야 한다.
- c. 게릴라 활동을 신속히 약화시키기 위하여 경비대와 경찰 사이에 확실한 결속이 이루어져야 한다.
- d. 미군은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4월 27일 12시 30분, 작전회의가 끝나자 곧 제1차 작전에 들어갔다. 이어 다음날에도 작전을 벌여 4개 마을로 군 병력이 진입했다. 3, 4, 5차 작전은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예정되었다. 이러한 작전의 목적은 “마을로 통하는 모든 출구를 봉쇄하고 가옥을 수색하여 숨겨진 무기, 삽, 곡괭이, 도끼, 전선절단기 등을 찾아내고 또 용의자, 단체 조직가, 공산주의자들을 색출하는 것이었다.”¹⁰⁾ 경비대는 작전에 참여하고, 경찰과 군대 사이에도 확실한 결속을 이루라는 군정장관의 지시에 따라 경찰도 군대의 감독 하에 작전에 참가하여 민간인들을 수색했다. 그러나 마을에 젊은이는 거의 없었고 밖에서도 눈에 띄지 않았다. 작전결과는 부정적이었다. 사실 4월 27일 시작된 이 최초의 토벌작전은 민간인 대량학살로 이어지는 이후의 작전과 비교해 볼 때 대규모의 공세작전을 벌였으면서도 ‘순찰활동’에 지나지 않았다. 인명 살상도 없었다. 이 작전의 주목적은 다음날 있을 4·28 평화회담에 경비대의 무력을 보여줌으로써 무장대 지도부가 투항하도록 하는 미군정의 강온 양면작전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데 있었다.

그러나 미군정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4·3 초기의 이러한 평화적 해결 노력을 강경토벌 정책으로 바뀌버렸다. 그 결과 4·28 평화회담에서 김익렬 제9연대장과 무장대 총책 김달삼 간에 합의했던 합의사항의 이행은 경찰의 방해로 무산되었고, 5월 6일, 제9연대장이 김익렬에서 박진경으로 바뀌면서 제주도민들은 초토화작전에 의한 토벌 대상으로 내몰리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한편 “나는 원인에 대하여 흥미가 없다. 나의 사명은 진압시키는 것뿐이다. 내가 평정에 성공한 다음 다시 폭동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나의 책임이 아니고 조선인 행정기관의 책임이다¹¹⁾”는 강경발언으로 유명한 미제6사단 제20연대장 브라운 대령은 4·3 발발 초기 진압작전을 기획하고 실행에 옮긴 핵심인물이었다. 앞에서 보았던 4월 27일 경비대 최초의 작전에서부터 깊이 토벌작전에 관여한 브라운 대령은 5월 중순부터 7월 한국을 떠나기 전까지 제주도에 상주하면서 약 5,000명의 제주도민들을 접촉하여 ‘1948년 5월 22일~6월 30일까지 제주도 활동보고¹²⁾’라는 보고서를 미군정청에 냈다.

10) 앞의 자료.

11) <조선중앙일보>, 1948. 6. 8.

12) U.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Report of Activities at Cheju-Do Island During 22 May-30 June, 1948", 1 July 1948.
NARA RG 338, U.S. Army Forces in Korea, 1945-1949, Entry No. 11070, Box No. 68.

이 문건은 4.3의 원인, 경과, 진압책, 폭도 재조직을 막기 위한 방안, 제주도 남로당 등이 포괄적으로 언급된 4.3에 대한 미군정의 의도가 가장 잘 드러난 자료이다. 그는 제주도 남로당 조직을 건설하기 위해 타도에서 6명의 조직책이 파견됐는데 현재 500-700명의 동조자들¹³⁾이 이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주민 6-7,000명이 남로당에 가입되어 있으나 이들 대부분은 남로당의 배경이나 목적을 잘 아는 것도 아니고, 공산주의 사상을 잘 이해하거나 이런 단체에 가입하려는 열망도 없는 것이 분명하다고 보았다.

브라운 대령은 또한 4.3의 원인을 완곡한 표현이긴 하지만 응원경찰이 섬에 도착했을 때 효율적으로 근무하도록 하지 못한 것, 제주도 경찰을 효율적으로 재조직하라는 것, 주민들을 보호해야 할 경찰과 경비대, 군정청의 일부 인사들이 무능력했다는 것 등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복합적인 원인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제주도에서 5.10 단선이 거부되고, 강경진압에 나서기 시작한 박진경 연대장이 부하들에게 암살당하던 시점에서 미국의 국익이 어디에 있는가를 명확히 알고 실천한 인물이었다. 그에게 경찰의 잔학성 등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제주도의 미제59 군정중대가 결단력 있는 행동을 취해 도민들에게 군정청이 무엇인가 건설적인 대안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다.

브라운 대령은 5월 22일 폭동진압책을 채택하여 경찰과 경비대의 임무를 명확히 구분했다. 그 후의 토벌작전에서 나타나는 경찰은 해안마을을 보호하고, 경비대는 중산간지역에서 무장대를 소탕한다는 군경의 역할 구분은 이때 결정된 안이었다.

브라운 대령은 제주도 활동을 마감하며 군정장관에게 폭도들의 재조직을 막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건의했다.

1. 최소한 1년 동안 섬에 경비대 1개 연대를 주둔시킨다.
2. 제주도 경찰을 효율적이고 훈련된 경찰로 재조직한다.
3. 다음과 같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미국식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다.
 - (1) 공산주의의 해악을 적극적으로 입증한다.
 - (2) 미국식이 제주도의 미래와 건전한 경제발전에 시금석임을 보여준다.
 - (3) 공산분자들의 선전선동 주장에 대해 효과적인 역선전을 벌인다.
4. 제주도 행정기관을 가능한 한 부패와 비효율성이 없는 기관으로 만든다.

브라운 대령의 활동을 지원하던 군정장관 딘소장은 보고를 받고 제59군정중대 군정장관에게 제주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떤 수단이라도 강구할 것이니 브라운 대령의 건의를 철저히 실천하도록 명령했다.

13) 무장대 인원이 얼마였나 하는 것은 보고자나 시기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미군정이 이렇게 제주도 상황을 정확히 파악했으면서도 6월 18일 박진경의 살해를 고비로 토벌작전은 소강상태로 들어갔다. 제주도에서의 학살은 주로 이승만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발생했다. 그렇게 된 것은 미국이 얼마 남지 않은 군정기간 내에 무리하게 강성토벌을 벌이는 것보다 그것을 이승만 정부에게 넘기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¹⁴⁾

IV. 민간인 학살

1 초토화작전의 시작

제14연대장 박승훈 중령이 육군총사령부로부터 제주도에 파견할 1개 대대를 조속히 편성하라는 작전명령을 받은 것은 10월 15일이었다. 제14연대참모부가 명령에 따라 다음날까지 1개 대대의 편성을 마쳤다. 제주도에서는 10월 11일 제주도경비사령부(사령관 제5여단장 金相謙 대령)가 설치되고, 10월 17일에는 제9연대 연대장 송요찬이 “군은 한라산 일대에 잠복하여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하는 매국 극렬분자를 소탕하기 위하여 10월 20일 이후 군 행동 종료 기간 중 전도 해안선부터 5Km 이외 지점 및 산악지대의 무허가 통행금지를 포고함. 만일 차(次) 포고에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그 이유여하를 불구하고 폭도배로 인정하여 총살에 처할 것임”이라는 포고를 발표하였다.¹⁵⁾ 이 포고령은 제주도에 곧 감행될 본격적인 초토화작전의 서막을 알리는 것이었고, 제14연대 1개 대대의 제주도 파병은 결국 이 작전에 소요될 병력이었다.

10월 19일 밤 파병부대가 여수항에서 LST에 승선하기 직전 지창수의 선동으로 제14연대의 반란이 시작되었다. 반란은 27일 오후 3시경 정부 진압군인 기동작전군이 여수시내를 완전 탈환하기까지 8일간 계속되었다. 이승만 정부는 여순사건을 토벌을 계기로 국회를 위협하며 정치적 입지의 강화를 노렸다. 불법적인 계엄령¹⁶⁾이 발포되었고, 부역자 색출 과정에서 여순지역은 물론 그 인근지역의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됐다. 군 내부에서는 본격적인 숙군작업이 진행됐다.

옥석을 가리지 않는 숙군작업은 제주도에서도 진행돼 11월 초 9연대 장병 1백여 명이 불법 처형됐다. 11월 13일 새벽 2시께 조천면 교래리를 포위한 토벌군들은 집집마다 불을

14) 서중석, 『조봉암과 1950년대』하, 역사비평사, 2000, 667쪽.

15) 『동아일보』 1948. 10. 20.

16) 이에 대해서는 각주 3)의 김득중의 글과 김순태, 『제주 4·3 당시 계엄의 불법성』, 『제주 4·3 연구』, 역사비평사, 1999 가 참고된다.

지르고 놀라 뛰쳐나온 주민들에게 무차별 사격을 가했다. 초토화작전의 시작이었다. 제주도의 초토화작전은 11월 17일 계엄령¹⁷⁾이 발포되면서 더욱 가속화되었다. 제주도에서는 다음 해 2월까지 중산간지역에 거주하는 민간인들을 중심으로 가장 많이 희생되었다.

2. 민간인 학살의 유형

여순사건이 발발하고 제주도에서 초토화작전이 벌어지던 1948년 겨울 이후 민간인 학살 실태를 조사하거나 증언을 듣다보면 인간이 과연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치떨림에 종종 할 말을 잃곤 한다.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온갖 죄악상이 여과 없이 증언자의 입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이다. 여성들은 잡혀가면 우선 빨가벗기고 장작으로 두들겨 패기부터 했다… 전기고문에 물고문을 다했다… 쇠쫓매로 사정없이 두들겨패더라… 손톱 밑을 땃가지로 쑤시며 고문하더라… 스탈린 비행기태우기 등 국적불명의 이름을 가진 온갖 고문도 다했다… 마을을 온통 불 지르고, 주민들을 공터에 모아놓고는 무차별 사격을 가해 학살했다. 그것도 모자라 확인사살을 하고, 그 위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살아남은 게 어느 집 누구다.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이런 유형의 민간인 학살은 어느 곳에서나 흔하게 벌어져서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러나 우리는 연구와 조사를 위해 이 시기 민간인 학살을 유형화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강정구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의 실태>¹⁸⁾라는 글에서 이 시기 학살의 양태를 유형화했다. 그는 학살 유형을 연대기적 분류, 학살 주체에 따른 분류, 피학살자에 의한 분류, 학살행위에 따른 분류 등 네 가지로 분류했다. 이러한 분류를 참고하여 여순사건과 4·3에 맞게 세부 항목을 재정리하여 유형화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대기적 분류- 1947년 제주도 3·1사건 ~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입산금지 해제-특정계기를 기준으로 시기를 나눈다.

둘째, 학살 주체에 따른 분류- 미군, 남한 국방군과 그 산하 특별기관(특무대 등), 경찰, 서북청년회, 한청, 대청, 학련 같은 비정규 무장대, 북한 인민군 등, 빨치산, 지방 좌익.

셋째, 피학살자에 의한 분류- 평택 이남의 보도연맹원 및 예비검속자, 형무소 수감자, 제2전선 지역주민, 피난민, 부역혐의자, 공비 및 통비 혐의자, 뚜렷한 혐의 없이 학살대상

17) 제주도에 내려진 계엄령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많은 법적 논란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앞의 김순태의 글이 참고된다.

18) 강정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의 실태」, 『전쟁과 인권- 학살의 세기를 넘어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학살 심포지움, 200.6.21.

이 된 불특정 다수의 민간인.

넷째, 학살행위에 따른 분류- 총살, 생매장, 초토화작전에 의한 불태워죽이기, 수장, 일본도에 의한 참살, 굶겨죽이기, 각종 고문에 의한 참살, 폭격이나 비행기에서의 기총사격.

위의 분류는 제주도의 경우 한국전쟁 기간 북한인민군에게 점령당했던 지역이 아니라서 각 분류에 따른 세부항목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여순사건과 4·3에서의 민간인 학살 유형을 거의 망라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와 여순 지역 유관단체의 노력으로 많은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 글에서는 지면 관계상 각 사례는 예로 들지 않겠다. 다만 문제는 향후 위의 분류를 보완해나가면서 해당 항목에 따른 각 사례를 충실히 하는 일일 것이다.

V. 향후 과제(맺음말에 대신하여)

여순사건과 4·3항쟁은 이승만 정부가 정치적 기반 확보를 위해 많은 민간인을 학살한 사건이다. 두 사건은 많은 점에서 흡사하지만 사건의 지속 기간 등 또한 많은 점에서 다른 것도 사실이다. 여순사건은 사건이 일어난 지 8일 만에 사실상 종결되고 사건의 주체들은 지리산 등지로 피신해 빨치산 투쟁으로 이승만 정부에 대항했다. 반면 4·3은 미군정 시기에 발발해 브라운 대령 등 미군정 요원들이 사건의 해결 방안 등을 모색했으나 사건의 종결은 이승만 정부까지 이어지며 대규모 민간인 학살을 낳았다. 최근에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의 민간인 학살 문제에 많은 유족과 학계의 관심이 쏠리면서 많은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졌다. 4·3의 경우 진상규명 특별법이 제정되어 활동을 하고 있으나 사건의 원만한 해결의 길은 요원하기만 하다. 여순사건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이런 현실에서 두 사건 조사·연구의 향후 과제는 진부하지만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더 많은 자료 확보의 문제이다. 특별법이 제정된 4·3의 경우에도 군경의 자료는 전무한 형편이다. 그러다 보니 군경 작전이나 명령계통 등 주요 부분 연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둘째, 경험자들의 체험을 인터뷰 등을 통해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정리하는 일이다.

셋째, 현재까지 입수되거나 조사된 자료들(문헌자료, 인터뷰 자료, 영상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정리하는 일이다.

넷째, 유족들은 물론이고 관련단체가 정부에 조속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일이다. 여순사건인 경우 올바른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4·3의 경우와 같이 한시바빠 특별법이 제정되

어야 한다.

제7장 진실과 화해의 역사를 위하여

해방 후 빨치산 무장투쟁의 역사	375
성문화된 관습형법? - '국방경비법'의 인권문제	390
지리산과 민중의 역사	418
지역운동과 여순사건	434
麗順事件에 관한 자료의 성격과 연구 현황*	445

해방 후 빨치산 무장투쟁 역사

김 무 용(역사학연구소 연구실장)

I. 머리말

1945년 8월 15일, 조선이 일제로부터 해방되자 민중들은 사회변혁의 전면에서 나서 즉각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해방은 민중들에게 새로운 국가건설의 희망을 안겨주었다. 민중들은 일제시기 비타협적으로 투쟁해 왔던 사회주의자들과 결합하면서 건국준비위원회, 인민위원회를 비롯한 자신들의 정권기관을 세워 나갔다.

그러나 해방은 민중운동세력이 주체적인 힘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란 점에서 불완전한 것이었다. 일제는 비록 타도되었지만, 곧 이어 전개된 미국의 점령정책은 험난한 길을 예고해 주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선공산당을 비롯한 변혁세력은 국제관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2차 세계대전의 산물인 미소 협조에 의한 임시정부 수립을 기본방침으로 설정했다.

모스크바 3상결정은 연합국의 합의와 원조를 바탕으로 조선의 독립을 보장함으로써 조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었다. 미소공위는 평화적 방법으로 정권수립이 가능한 가장 확실한 길로 전망되었다. 좌익을 비롯한 민중운동 세력은 이에 따라 당분간 미소공위 활동을 통한 임시정부 수립에 노력하는 미군정과 일정하게 협력하였다. 따라서 좌익은 47년 2차 미소공위 결렬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정부 수립을 전망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47년 2차 미소공위가 결국 미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무기 휴회되자, 미소공위 성공에 의한 민주주의 정부 수립을 기대하던 좌익은 지금까지의 전술을 전면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되었다. 특히 48년 들어 남한 단독정부 수립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이러한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었다.

민중운동세력은 이에 지금까지의 합법 투쟁에 비합법, 폭력투쟁을 결합시켜 나갔으며, 이러한 투쟁은 점차 미군정, 지배세력과의 직접적이고 최종적 투쟁형태인 무장투쟁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무장투쟁은 미소공위 결렬 이후 통일정부 수립이 어려워진 조건에서 민중들이 최종적으로 선택한 길이었다.

II. 해방 후 무장투쟁의 전개과정

1. 야산대의 조직과 활동

해방후 무장투쟁의 기운은 이미 46년 10월 인민항쟁에서 비롯되었다. 10월 인민항쟁에 참여했던 민중운동 세력은 미군정의 탄압 때문에 합법적인 공간에서 활동할 수 없어 산악 지대로 들어가 생활했는데 산사람으로 불려졌다. 당시 한 잡지는 산사람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원수들의 발광적 발악으로 각 지방에서 애국투사들에 대한 박해와 체포령은 의연히 계속되었다. 이때부터 지목된 투사들은 집과 처자를 버리고 지하로 들어갔다. 아지트를 산속에 설치하고 거기서 생활하게 됨에 따라 이때부터 그들의 이름이 산사람으로 불려졌다.”(50년 3월 『인민』)

남로당의 무장투쟁전술은 48년 2·7구국투쟁과 50선거 반대투쟁을 계기로 발전하였다. 특히 47년 제2차 미소공위 결렬 후 남로당을 비롯한 좌익세력에 대한 탄압은 남로당의 전술을 무장투쟁으로 바뀌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남로당의 모든 정치활동 등이 불법으로 탄압받고 지하에서 비합법활동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서 투쟁전술을 무장투쟁으로 전환해야 했다. 특히 유엔결의에 의한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분쇄하는 일은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투쟁만으로는 어려운 것이었다. 단독정부수립을 적극 저지해야 하는 남로당 으로서는 무장투쟁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 2차 미소공위 결렬 후 평화적 정권획득의 전망이나 가능성이 점점 어려워지는 조건으로 이러한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리하여 48년 2·7구국투쟁을 계기로 야산대가 조직되면서 무장투쟁이 부분적으로 채택되기 시작하였다. 남한 단독선거를 저지하기 위해 남로당이 주도한 2·7구국투쟁은 전국적 규모로 전개되었다.

2·7구국투쟁에서 서울에서는 행동대, 지방 당에서는 무장부대로서 야산대가 본격적으로 조직되기 시작하였다. 주로 당원가운데서 군사경험이 있거나 10월 인민항쟁 때 지하로 들어가 활동하던 사람들이 중심이 되었는데, 대개 한개 군의 50-100명 정도였다. 야산대는 38소총, 장도, 칼 또는 군경으로부터 탈취한 무기로 무장하였다.

야산대는 당의 무장부대로서 당 조직체계에 따라 조직되었다. 당시 지방당의 조직은 비합법 체제로 전환되었으므로 도당 위원회의 규모를 줄이고 도내를 2,3개 지역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지구 블록을 만들어 한개 블록이 몇 개 군을 지도하도록 운영되었다. 때문에

도당에는 야산대를 조직 운영하는 기구로서 도 사령부를 설치하고 도당부위원장이 겸했다. 각 지구 블록에는 야산지구 사령부, 각 시구군당에는 00야산대를 두는 3단계 조직으로 편성되었다. 야산대는 2·7구국투쟁 이후 3·1절 기념투쟁, 5·10선거반대투쟁, 8·25 지하서명 투표투쟁, 인공기 게양투쟁 등에 참여하여 활동하였다.

5·10선거 반대투쟁 때에는 선거반대 선전운동을 위주로 하는 선전 선행대와는 별도로 각 지방 당에서는 백골대, 유격대, 인민청년군 등의 소규모 무장부대가 조직되어 운영되었다. 이들의 공격대상은 경찰서를 비롯한 관공서, 언론기관, 우익진영 인사, 선거위원 등이었다.

야산대는 아직 당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보조소단으로 이용되었다. 당시 부분적이거나 합법적인 활동공간이 남아 있었다. 야산대가 부분적으로 폭력투쟁, 무장투쟁을 벌였지만, 아직 본격적인 무장투쟁전술의 채택이나 무장투쟁 단계로 이행하지는 않았다. 좌익의 투쟁전술이 무장투쟁으로 전환되는 계기는 제주도에서는 4·3민중항쟁, 육지에서는 여순봉기가 계기가 되었다.

1) 유격전구의 형성

육지에서는 48년 10월, 여수봉기를 계기로 무장투쟁이 조직되었다. 여순봉기를 일으킨 세력들이 순천, 광양 등 산악지대로 들어가 무장투쟁을 전개, 유격전구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여수 봉기세력들은 봉기에 참여한 병사들이나 무장한 인민들을 중심으로 장기적이고 조직적인 항쟁을 전개하기 위하여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광범한 유격전구의 형성을 계획하고 있었다. 반란군의 일부는 순천을 장악하고 계속 벌교, 고흥, 보성 방면으로 진격하였고, 다른 부대는 구례, 곡성, 남원 등으로 북상하면서 2천명 규모의 무장세력을 형성하여 백운산과 지리산 등에 거점을 확보하였다. 무장투쟁의 근거지를 구축한 지리산 중심의 빨치산 부대는 점차 활동영역을 확대하여 부근의 함양, 하동, 순천, 구례, 남원 등에서 15개의 경찰서를 점령하였다. 여수, 나주, 고흥, 보성, 광양, 나주, 벌교 등지도 유격대가 점령하여 세력이 확대되었다. 지리산 유격전구 안에서는 인민위원회가 부활되어 부분적으로 토지개혁이 일시나마 실시되었다. 전남일대 유격대들은 당시 민중들의 지지를 얻고 있었는데 이 점이 지속적인 무장투쟁을 가능하게 하였다.

경북을 중심으로 한 산악지대에서도 48년 12월 2일 대구 국방군 제 6연대의 병사들이 봉기하여 산으로 들어가면서 무장투쟁이 전개되었다. 이들은 금천, 침곡, 달성, 팔공산, 예천, 봉화, 경산, 밀양, 함양, 경주 등지의 각 산악지역을 근거로 인민무장대와 함께 활발한

유격전을 전개했다. 12월 6일 대구 연대의 일부가 지리산 유격대 토벌 작전에 참여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봉기하여 산으로 들어가 이 지역의 빨치산 세력은 더욱 확대되었다.

강원도 산악지대의 빨치산 활동은 5월 초 강릉군 사천면 지서 급습과 강릉 용연사 주둔 형사부대의 습격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오대산 지구에 강력한 유격전구를 형성한 빨치산 세력은 11월 5일 삼척군 말로지서를 공격하여 무기를 빼앗고, 계속 평창, 원주 방향으로 진출하였다. 이 지역 빨치산 부대는 오대산과 태백산을 중심으로 영월, 제천, 봉화, 단양, 영주의 일부 지대를 활동무대로 삼았다. 이렇게 형성된 대표적 유격전구는 다음과 같다.

1. 호남 유격지구는 나주, 영광, 함평, 장흥 등 주로 동남지역이었다. 대부분 평야지대 고산도 최고 800미터 정도로 지리적으로 불리한 곳이었다. 그러나 지리산 유격대와 협동작전을 할 수 있었다.

2. 지리산 유격지구는 후에 남한 유격대의 총본산으로 남으로 백운산 북으로 덕유산을 연결하는 전남, 경남, 전북의 산악지대에 걸쳐 있는 지역이었다. 경남이 산청, 함양, 거창, 함천, 창녕, 하동, 진주, 함안, 사천, 남해, 전남북의 무주, 장수, 임실, 남원 등 중소도시까지 영향이 미쳤다.

3. 태백산 유격지구는 북으로 태백산과 소백산 국망봉을 중심으로, 남으로 안동, 청송에 이르는 지역이다.

4. 영남 유격전구는 경북 경주, 영천, 영일, 청도 등 대구 주변과 경남의 양산, 울산, 동래, 부산 주위의 산악지역에 형성되었다. 이밖에 제주도 유격전구가 있었다.

2) 인공기 계양투쟁

단정수립을 반대해 온 힘을 쏟았던 남로당은 5·10 선거를 통해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자 이를 적극 부정하는 투쟁을 벌여 나갔다. 이와 함께 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된 뒤에는 이를 지지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여나갔다. 따라서 이러한 투쟁은 비합법적인 투쟁의 성격을 띠었다.

북한에서는 9월 12일 인민공화국 수립 경축대회를 개최할 것을 각 지방 당조직에 지시하였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남로당은 인공기 계양투쟁을 전개하였다. 이에 따라 투쟁은 10월 5일 새벽을 기해 개성, 인천, 대구, 광주 등 여러 지방에서 일제히 인공기가 계양되고 인공 만세의 전단이 배포되기도 했다. 남로당은 또한 인공을 지지하고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투쟁으로 48년 11월 30일 2시간 총파업을 단행하였다.

이 무렵 남한 전역에서는 전단 배포, 지서 습격, 시위, 봉화 등 비합법 활동을 위

주로 한 투쟁이 계속되었다. 당시 남로당은 무장투쟁이 유일한 투쟁전술임을 느끼고 있었다.

“남조선 인민들에게는 소위 합법적 투쟁이라고는 있을 수가 없다. 놈들은 소위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이란 일제시대에도 볼 수 없던 악법을 만들어 더욱 인민학살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인민들의 정치활동이란 모조리 무력으로써 탄압되어 무장적 항쟁을 인민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한 까닭으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호하는 투쟁으로부터 시작하여 일상적인 세미한 경제적 요구에 이르기까지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은 무력반격의 형태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

3) 조국전선의 결성

남로당에서는 49년에 들어와 남한에서 미군철수와 인공수립을 목표로 하는 투쟁을 벌여 나갔다. 이러한 투쟁은 남한에서 이승만 정권에 대한 공격을 더욱 강화하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49년 6월에는 ‘조국통일 민주주의 전선’이 결성되고, 남로당과 북로당이 합당하여 ‘조선노동당’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조국통일 민주주의 전선 결성대회가 49년 6월 15일에서 28일까지 평양 모란봉 극장에서 남북의 71개 정당, 사회단체 대표 704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이 대회에서 조국전선의 강령이 결정되었으며, 남북조선의 제정당, 사회단체가 전체 인민들에게 보내는 선언서가 채택되었다. 주요 내용은

1. 평화적 통일 사업을 조선인민 자체로 실천하자
2. 미군의 철퇴요구
3. 유엔한국위원단의 철퇴요구
4. 남북선거의 동시 실시
5. 입법기관 선거를 49년 9월에 실시
6. 남북 경찰, 보안기관은 선거지도위원회의 관할 아래 넘어오며 제주폭동과 유격운동 진압에 참가한 경찰대 해산
7. 선거에서 수립된 입법기관은 인공의 헌법을 채택하고 정부수립
8. 남북 군대를 인공정부가 연합시킨다. 폭동진압, 토벌에 참가한 부대의 해산 등이었다.

이 선언서에서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은 마지막 부분이었다. “만일 반동이 고집하고 평화적 통일사업을 방해하는 때에는 그는 조선인민의 처단을 면치 못할 것이다. 조선인민은 조국의 통일과 민주화와 독립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서 장애를 주는 모든 놈들을 자기의 길에서 능히 소탕할 것이다.” 즉 한반도의 통일과 독립을 위해서는 폭력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조국전선 결성대회 둘째 날인 6월 27일에는 지리산 유격전구 유격대 지휘자 및 전사 일동으로부터 온 메시지가 소개되었다.

“미국제 카빈과 엠완에서는 탄환이 빗발치듯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제 박격포의 포탄들은 머리 위에 작렬하고 있습니다. 미국제 비행기는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화국 남반부 살진 지역을 원쑤의 손에서 해방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형제들을 도살, 학살의 참경에서 구출할 것을 맹서하고 일어난 우리들은 이르는 곳마다 원쑤를 못뜨르면서 용감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동무들의 시체를 넘어 우리들은 전진에 전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활동구역은 나날이 장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병력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들은 1천 메터의 험준한 산악에서 백설과 싸워 이겨냈습니다. 주립도 피곤도 우리들에게는 아무런 타격도 줄 수 없습니다.”

그 뒤 7월 13일에 열린 ‘조국전선’ 제2차 회의에서는 평화통일선언서에 대한 각 정당, 사회단체와의 사업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여기에서 ‘조국전선’에 가입하지 않은 정당, 사회단체의 결정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내기로 하였는데, 매우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에게는 다른 길이 없다. 우리 조국 남반부와 인민들을 미제국주의자들에게 팔아먹은 매국역도들의 민족분열정책과 식민지예속화정책을 견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조국이 남반부와 남반부 인민들을 미국과 이승만 매국역도로부터 구출하는 국토완정, 조국통일독립의 길을 걷든지 하는 것이요, 세 번째 길을 없다. ... 인민의 힘은 역도들의 힘보다 거대하며 위대하다. ...”

4) 9월 공세

1949년 6월 말 조국전선이 결성된 뒤 무장투쟁이 보다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1949년 7월부터는 무장투쟁을 보다 조직적이며 대규모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인민유격대가 편성되었다. 이때부터 인민유격대를 각 지구별 3개 병단으로 편성했는데 오대산 지구를 제1병단, 지리산 지구를 제2병단, 태백산 지구를 제3병단으로 하였다.

제2병단의 조직체계는 총사령부(사령관 이현상) 밑에 4개연대로 편성되었고 각 연대는 몇 개 군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지역을 갖고 있었다.

제6연대 : 총사령부의 경호연대로 지리산에 본부를 두고 산청군, 함양군, 구례북부, 남원군 일대에서 활동

제7연대 : 백운산에 연대 사령부를 두고, 순천 남부, 곡성 북부, 하동, 광양, 구례 남부에서 활동

제8연대 : 조계산에 본부를 두고, 순창군, 화순군, 곡성 남부, 순천 북부에서 활동

제9연대 : 덕유산을 중심으로 무주, 장수, 거창군 일대에서 활동

제2병단은 겨울로 접어들면서 3개 지대로 재편하여 2개 지대는 전남·북의 평야지대, 1개 지대는 이현상 총사령관의 지휘 하에 지리산에서 활동하도록 하였다.

제3병단의 경우 49년 8월 초에 김달삼을 사령관, 남도부를 부사령관으로 3백여 명이 경북 안동, 영덕 경계선에 상륙하여 경북 동해안 일대에서 활동했다.

제1병단(이호제 부대 또는 제1군단)은 49년 9월 6일 이승엽의 지시에 따라 강동정치학원의 학생 약 360여 명으로 편성되어 남파되었다.

인민유격대의 편성과 함께 남한의 각 지방 당조직에서는 무장투쟁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다. 49년 7월 조국전선이 결성된 남한의 당조직을 지도하던 서울 지도부에서는 지방당에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렸다.

‘결정적 시기가 불원간 도래한다. 결정적 시기를 맞이하기 위하여 각 지방당은 정권 접수를 위한 준비를 하라. 또한 인민군이 진격하게 되므로 각 도당은 해방지구를 1,2개 확보하라. 모든 당조직은 군사조직으로 개편하고 결정적 투쟁을 전개하라.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바치고 집 있는 사람은 집을 바쳐서 무기를 준비하라.’

7월 8일 조국전선의 선언서가 전달되자 서울지도부와 시당에서는 ① 8월 20일에 대한민국정권 수립 ② 9월 1일 박헌영이 선거위원장으로 서울에 도착, ③ 9. 20 총선실시, ④ 9월 21일에 서울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중앙정부가 수립되는 날 등의 선전선동을 했다.

9월 공세라는 구호는 조국전선에서 발표한 평화통일 선언서에 9월에 입법기관 선거를 실시하자는 내용 때문에 나온 것이다. 전남도당에서는 서울 지도부의 지시에 따라 조직을 무장투쟁 형태로 바꾸었다. 지역에 따라 북부(노령산)과 광주 및 지리산 지구로 구분하고 야산대를 확대, 강화하여 유격대를 편성했다. 지리산 지구는 제2병단에 3개 지역(구례, 곡성, 광주)을 넘겨주었다. 북부지구인 노령지구에서는 각 세포위원장과 열성당원 약 3백 명을 입산시켜 유격훈련을 가르쳤다.

지리산과 태백산 지구의 인민유격대가 3개 병단으로 편성되고 각 도당 지방당 조직이 군사체제로 개편된 뒤 무장투쟁은 보다 강화되었다. 모든 당 조직은 지도부의 일부를 자기 지역의 산악지대로 이동시켜 무장투쟁을 지휘케 했다. 현지에서 직접 지휘하여 ‘00현지당부’라 불리기도 했다. 지방당에서는 서울 지도부의 지시에 따라 “멀지 않아 해방된다. 북으로부터 인민군이 넘어온다.”는 등의 선전으로 당원들을 입산시켜 야산대와 인민유격대를 확대했다.

무장유격대는 처음에는 낫과 칼과 같은 원시적인 무기로 활동했는데 점차 카빈, M1, 경기관총, 중기관총, 박격포로 무장하게 되었다. 지리산 지구에서는 무기를 수리하고 폭탄을 만드는 철공장도 운영했고, 무전대와 촬영기대가 제2병단 사령부에 배속되어 있었다. 그 밖에 유격대는 옷을 만들고 수선하는 재봉틀과 오락용 악기들도 마련되었다. 또 해방지구에서는 등사판을 이용하여 신문과 각종 인쇄물을 발행하여 빨치산과 부락 인민에게 배포하는 선전, 선동활동도 벌였다.

남로당 서울 지도부에서는 지리산 지구에 문화공작대로서 남로당 문화부장 김태준과 시부 유진오, 음악부 유호진, 영화부 홍순학 등 작가, 예술인으로 구성된 문화공작대를 파견하기도 하였다.

빨치산이 이처럼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유격지구 인근에 사는 민중들의 지원과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빨치산들이 민중의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무장투쟁이 가능했다. 당시 노동당 기관지는 이러한 사정을 말해주고 있다.

“남반부의 농민대중이 각 전구의 유격대에 열렬한 동정과 원호를 하고 있는 것은 다음의 사실로 우리는 명백히 알 수 있다. ... 49년 8월 인민들로부터 식량 2천여 말과 옷가지 2천 600여 점, 현금 97만원이 자진 원조되었다. 그리고 11월에 이르러서는 식량 1만 2, 900여말, 옷가지 3,500여 점, 그리고 현금 6,300여만 원을 자진 원조하였다. 이승만 도당이 각처의 산간부락을 파괴, 방호하고 그곳의 농민들을 강제 축출하는 것은 기실 농민들과 유격대와의 연락을 단절하려는 발악에서 나온 것이지만, 가면 갈수록 유격대를 원호하는 농민들의 열정과 애정은 높아가고 있다.”

또 노동당 기관지에서는 인민들이 빨치산 투쟁에 헌신적으로 참여하는 사례도 소개하고 있다.

“강원도 영월군 상도면 내덕리의 신태순 노인은 자기의 아들 셋과 딸, 며느리를 모두 빨치산으로 보내고 그 60 노인은 늙은 마누라와 같이 태백산, 백운산, 문수산의 험한 길을 하루도 빠짐없이 넘나들면서 후방연락에 헌신 분투하다가 원수들에게 붙잡혔으나, 최후까지 원수들에게 굴치 않고 원수의 총탄을 받아 애국적 선혈을 뿌리면서 ”빨치산들아! 용감한 아들딸들아! 잘 있거라. 싸워서 이겨다오! 사람들아, 우리의 보배를 지켜다오!“라고 외친 것은 그 산 사실의 하나이다. 신태순 노인은 젊은 빨치산들에게 ‘빨치산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던 인민의 모범이다.”

무장유격대는 부분적이거나 점령지역에서 토지개혁을 실시하였다.

“49년 10월에 들어서 벌써 45개소의 면사무소와 많은 반동지주의 가옥이 없어졌다. 11월에 이르러서는 경북의 봉화, 안동, 영주, 성주 등지에서 22회의 농민폭동이 일어났으며, 전남북 일대에서는 담양, 영광, 보성, 장성, 남원, 구례, 나주, 임실, 고창 등지에서 24회의 농민투쟁이 전개되었다. 11월 중 토지개혁을 위한 폭동에 참가한 농민의 수는 4만 2,900여 명에 달했다. ... 10월 29일 전남 담양군 수북면의 46개 부락에서는 4천여 명의 농민들

이 유격대원 70여명의 원조아래 악덕지주들을 인민재판에서 준엄하게 처단하고 토지의 무상분배를 실시하였다. 같은 날 영광군 대마면에서도 농민들이 무장대에 호응하여 토지개혁을 단행했다. 11월 6일에 봉화군 선채면에서 2천여 명이 같은 날 영덕군 지품면에서 700여 명이, 22일에는 함평군 해보면에서 1천여 명이 유격대와 함께 봉기하여 지주의 토지를 무상으로 분배했다.”

5) 아성공격

지리산 유격대를 비롯 현 빨치산들은 9월공세를 계기로 보다 직접적인 공격을 전개하였다. 빨치산들은 강동정치학원 출신 유격대들과 합류하여 이른바 ‘아성공격’(牙城)을 전개하였다. ‘아성공격’이란 관공서, 공공기관이 밀집되어 있는 도시 또는 경찰서, 군사령부 등에 대한 정면공격을 의미한다. 49년 7월 이후 전개된 ‘아성공격’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7월 9일 : 경북 영천의 무장유격대가 청도군의 경찰지서와 면사무소 습격

7월 22일 : 경북 영천-군위간 터널을 지나는 경주발 안동행 열차를 세워 놓고 차안의 군경을 사살하고 무기 탈취, 신평면에서 경비용 전화선과 전주 20개 절단

8월 9일 : 동래군 정광면 경찰지서와 면사무소 방화

8월 16일 : 소백산 유격대가 죽령역을 한때 점령

8월 23일 : 거창경찰서, 군청, 재판소를 점거하고 잡혀 있던 좌익사범을 탈출시킴.

8월 24일 : 영일군 죽장면에서 전주 20개 절단한 뒤 면사무소 습격, 각종 서류 탈취, 강원도 삼척군 가목 경찰지서를 파괴

8월 25일 : 양산의 상북면, 양산면에서 군농회 회장, 민보단장을 비롯 수명의 공무원 살해

9월 1일 : 지리산 유격대가 합천읍을 공격하여 경찰서, 읍사무소, 금융조합, 우편국, 군 경지정여관 등을 파괴

9월 7일 : 당성군 화원면에서 군경 30여 명 살해. 영천군 자양경찰지서 습격

9월 9일 : 협천군 용주 경찰지서 공격

9월 15일 : 순천방면에서 여수행 군경열차를 공격하여 군수품 약탈

9월 16일 : 문경군 동노 경찰지서 공격

9월 23일 : 장흥읍에 침입한 유격대가 경찰서와 군지휘부 파괴

9월 25일 : 무주군 부남 경찰지서 습격

9월 27일 : 나주경찰서, 군농회, 금융조합 등에 방화, 함평경찰서 습격, 광주소방서 습격후 방화

10월 8일 : 150명의 유격대가 무주서 습격, 경관 2명 살해, 지서, 면사무소, 금융조합

방화. 같은 날 150명이 곡성경찰서 습격, 경무계장 외 2명 살해, 경찰서 본관과 관공서 4동에 방화.

10월 중순 : 안동읍 옥동 국민학교에 주둔한 국군 3사단 22연대를 습격, 10명 사살, 박격포 1문, 소총, 실탄 3천여 발, 군복, 철모 등 탈취

그러나 겨울철에 들어서면서 추위가 닥치고 유격대의 거점인 산악지대와 민간부락과의 연계가 원활히 되지 않자 빨치산들은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반면 유격대에게 불리한 계절을 이용하여 군과 경찰은 강력한 동계 토벌작전을 실시했다. 동계토벌작전을 무장 유격대에게는 큰 타격을 주었다. 호남 유격전구에서는 군경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게 되자 산에서 마을로 침투하고 큰 부대를 소부대로 분산시켜 피해를 줄이는 방법을 썼다.

6) 유격대 격파

무장투쟁이 9월 공세를 계기로 확대, 강화되는 것은 북에서 내려온 강동정치학원 출신 유격대들이 활동하는 것과도 관계된다. 48년 10월 여순봉기가 일어나자 군경병력들이 호남 지구에 집중되어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강동정치학원 출신 유격대 180명이 11월 17일 오대산 지구로 침투했다. 그 뒤 ‘조국전선’ 선언문이 발표된 뒤 9월 공세를 전후하여 10차례에 걸쳐 모두 2,400여명이 남파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49년 6월 : 약 4백명의 유격대가 오대산 지구에 투입

49년 7월 : 약 2백여명 유격대가 오대산 방면으로 침투

49년 9월 : 김달삼을 사령관으로 한 3백 여명의 유격대가 안동, 영덕 경계선에 침투

49년 9월 초순 : 이호제가 지휘하는 인민유격대 제1군단 360명이 태백산을 통해 침투

49년 11월 6일 : 약 1백여 명의 유격대가 배를 타고 경북해안으로 침투

50년 3월 24일과 26일: 양양, 양구, 인제 부근에서 대기 중이던 유격대 김상호, 김무련 부대의 약 7백 명이 침투

9월 초순 이호제 부대의 남파과정은 다음과 같다.

9월 6일 강동정치학원 학생 약 360명을 5개 중대로 하여 ‘조선인민유격대 제1병단’(단장 이호제)를 편성했다. 이들 가운데는 정치위원 박치우, 참모장 서철 등 강동정치학원 간부들이 포함되었다. 개인장비로는 M1소총, 실탄 150발 등이었다. 9월 7일 강동정치학원 소재지인 승호역에서 위장을 위해 화물 기차편으로 양양에 도착했다.

38선을 돌파할 때는 인민군으로 하여금 국국에 먼저 총격을 가해 점전하게 해서 국군 병력을 탄 곳으로 유인한 다음 통과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38선을 넘어선 이들은 낮에

자고 밤에 행군하면서 여정으로 오대산, 전봉산, 태백산을 넘어 남진했는데, 정찰중대를 앞장서게 하고 1열중대로 침투했다.

49년 8월 안동지구에 침투한 김달삼 부대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8월 말 : 김달삼, 나훈, 성동구 등 3백여 명이 의성경찰서와 무기고, 우편국, 금융조합 등에 방화, 경찰관 6명 사살, 트럭 2대 약탈

10월 중순 : 안동을 옥동초등학교 주둔 국군 3사단 22연대 습격

11월 초순 : 9월 태백산에 침투한 제1병단과 제3병단이 합쳐 3개 대대 편성하고 11월 8일에는 일월산에서 경찰과 교전, 경관 수십 명 사살

11월 25일 : 안동의 화학산에서 군군 25연대와 전투, 장병 7명 살해, M1 7정과 군모 등 탈취, 일월산에서 경찰과 전투, 11명 사살.

50년 1월 21일 : 1병단 1대대는 영덕군 영해지서, 제2대대는 창수지서를 동시에 기습하여 경관 28명 사살, 면사무소, 금융조합, 양곡창고 등을 불태웠다. 금융조합 금고에서 현금 한 배낭을 탈취, 그밖에 99식 소총, 카빈 소총 수정과 식량 70가마, 옷가지 등 탈취

50년 1월 24일 : 경북 영양군 포도산서 국군 제3사단 소속부대를 기습, M1소총, 권총 등 10여 정 탈취

50년 2월 1일 : 경북 영덕군 형제봉에서 군군 17연대와 전투, 국군 130명 살상, 중기 1정, 경기 3정, M1 소총 30여정, 군모 등 탈취

50년 2월 중순 : 경북 청송군 뒷산에서 유격대 1병단 1.2.3 대대 전병력과 국군 제3사단 소속부대가 3시간 교전, 국군 10여명 살상, 카빈 2정, 5만분의 1지도 탈취

50년 3월 1일 : 강원도 백암산에서 국군 제3사단 소속부대와 교전, 군모, 식량, 무기 등 탈취

그 뒤, 이들은 김달삼과 남도부의 지휘에 따라 남한 유격사업에 대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건의하기 위해 월북할 것을 결심하고 북향하던 중 강원 정선군 나랑천 부근에서 국군 제8사단 소속부대의 공격을 받아 나훈 외 10여명이 전사했다.

이 때 김달삼 부대를 도우려고 북에서는 김상호를 대장으로 한 3백여 명의 유격대를 3월 24일 오대산 동대령 경계선으로 침투시켰고, 3월 26일 김무현을 대장으로 하는 3백 50명의 유격대를 홍천군 기린면 경계선으로 침투시켰는데 국군의 공격을 받아 남하하지 못했다. 김달삼과 남도부 등은 4월 3일까지 월북하였다

이와 같이 9월 공세를 전후로 빨치산 부대들이 벌였던 활동 결과를 남로당에서는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연동원 인원 : 37만 6,401명

교전횟수 : 6,768회

사살 : 1만 103명

각종무기탈취 : 4,260점

탄환 탈취 : 31만 1,700발(49년 4월부터 11월까지의 전과)

7) 유격투쟁의 약화

무장 유격대들은 군경의 강력한 동계 토벌작전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으나, 1950년 대에 들어서도 부분적인 투쟁을 계속했다. 49년 12월 27일에는 당 중앙위원회에서 「전 당 원에게 보내는 편지」, 50년 1월 9일에는 조국전선 중앙위원회에서 ‘전체 조선인민과 전조선 애국적 정당, 사회단체와 전체 애국적 인사 및 사회 활동가에게 고하는 호소문’이 발표되었다. 빨치산에게 이 편지와 호소문은 전투의 지시문이며 격렬문이었다.

1950년에 들어서면서 지리산을 비롯한 경북, 전남 산악지대에서 무장투쟁이 다시 시작되었다. 지리산 빨치산들은 50년 1월 1일 산청군, 화개면에서 국군 70여 명을 기습, 30분 만에 소탕하고 기세를 몰아 3일에는 화개, 지곡, 산청, 오곡 4면을 공격, 군경특수부대 70여 명을 격멸하였다. 경북 부대는 1월 2일에 영주, 영천 합동부대를 편성하여 경주 어림산에서 군경 6개 중대를 격파하고 210명을 사살하였으며, 21일에는 태백산 부대가 공동작전을 세우고 경북 영덕군 영해, 창수, 병곡, 축산, 지품 5개 면을 한꺼번에 농민들과 더불어 주둔 국군 및 경찰 시설, 우익인사, 가옥 등을 파괴하고 양곡을 인민들에게 분배한 다음 군경의 응원부대와 전투를 벌였다.

남로당 부위원장이었던 이기석은 50년 초, 무장투쟁의 특징을 ‘인민들의 호응결기가 대개 동반되었고 또 그 활동이 대규모적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50년 초 빨치산 투쟁의 전과는 다음과 같이 발표되었다. ‘3월 중 유격대 동원횟수 1,962회, 교전횟수 1,038회 군경사살 570명, 반동숙청 459명, 농민대회 300여회, 해설집회 1,274회, 출동연인원 6만 2,793명이었다.

4월에는 동원횟수 2,948회, 교전횟수 1,423회, 군경사살 2,868명, 반동숙청 666명, 해설집회 942회, 무기탈취는 박격포 3문, 기관총 2문, 소총 220여 정이었다.

이러한 활동은 49년 10월과 거의 비슷한 것이었다. 5월에 들어서는 제2대 국회의원 선거인 5·30선거를 저지하기 위한 무장투쟁이 경남 산청을 비롯한 각 지방에서 일어났다. 5월 10일 충남 대덕을 중심으로 한 중부 지구 유격대, 12일은 웅진유격대, 15일은 경북 청도 부대, 16일에는 지리산 부대(함양지구), 정읍지구의 전북부대, 경북 봉화지구의 태백산부대, 18일에는 전남 장흥지구의 전남 서남부대, 19일에는 경북부대, 20일엔 충북괴산부대, 23일

엔 강릉지구의 오대산부대 등 소부대 규모의 유격대가 5월 30일까지 선거를 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을 벌였다. 이들은 일부 지방에서 먼 사무소와 선거사무소를 파괴하기도 했다.

2. 한국전쟁과 무장투쟁

1) 인민군 남침과 무장투쟁

1950년 6월 25일 남조선 해방을 목표로 하여 한국전쟁을 개시한 노동당은 다음 날,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전시체제의 최고 권력기관으로 군사위원회(위원장 김일성)를 조직하였다. 김일성은 이날 밤 평양방송을 통해 해방전쟁의 승리를 위해 남북한 인민들이 총궐기해야 한다고 호소하면서 빨치산 등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남반부 남녀 빨치산에게: 유격운동을 한층 맹렬히 더욱 용감히 전개하며... 해방구를 확대하며 또는 창설하며 적의 후방에서 적들을 공격, 소탕하고 적의 작전 계획을 파탄시키며 적의 참모부를 습격하고 철도, 도로, 교량과 전신 전화선 등을 절단 파괴하며 각종 수단을 다하여 적의 전선과 후방연락을 차단하고 도처에서 반역자들을 처단하며 인민위원회를 복구하고 인민군대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산악지대에 활동하고 있던 빨치산들은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하고 계속 내려가 낙동강까지 진격하는 과정에서 인민군과 협동작전을 벌이거나 무장투쟁을 벌였다. 대표적으로 지리산의 이현상부대, 경북도당 책임자인 배철이 지휘하는 유격대, 강정수가 지휘하는 동해안 유격대를 비롯하여 경남 산청지구의 지리산 유격대, 함양지구 유격대, 산청, 하동, 김해 일대에서 활동하던 남해안 지리산 유격대, 제주도 인민유격대 등이 활동하였다.

2) 점령지역의 당 재건과 무장투쟁

1950년 6월 28일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하자 군사위원회 위원장 김일성은 평양방송을 통해 「우리 조국 수도 서울 해방에 제하여」라는 제목으로 인민군과 서울 인민들에게 보내는 축하연설을 하였다. 김일성은 연설에서 6월 28일 상오 11시 30분 서울이 ‘해방’되었다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전체 조선인민에게는 전쟁을 조속한 시일 안에 승리를 종결시키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하여 인민군에게 협조

할 것과 ‘미해방지구 인민’은 빨치산 활동을 전개하여 후방을 교란시키고 도처에서 인민폭동을 일으켜 군수 물자수송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야겠다. 또한 ‘해방된 서울시민들’은 민주질서를 속히 수립하며 복구건설에 착수하고 인민위원회를 조직하고 인민군대를 적극 원조해야겠다.”

김일성은 또한 서울시 임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에 이승엽을 임명했다는 것을 밝혔다. 이승엽은 박헌영의 지시를 받으면서 인민군 점령지역에서 당재건을 비롯한 모든 사업을 총지휘했다.

‘점령지역에서의 당재건은 행정구역에 따라 중앙, 도, 시, 군, 면의 순위로 하향식 방법에 의해 당위원회를 먼저 조직했다. 중앙에는 남한의 당사업을 총체적으로 지도하는 중앙당 지부격인 ‘서울지도부’를 두었다. ‘점령지역’이 확대되자 서울지도부의 일부를 대전에 파견하여 ‘대전지도부’를 꾸렸다. 이때의 당 간부들을 ① 북에서 파견된 북로당계 ② 월북했던 남로당계 ③ 출옥한 전 남로당 간부 ④ 빨치산 출신 ⑤ 현지당원 등이었다. 이때 중앙당에서 임명한 각 도당 간부는 다음과 같다.

서울시당 : 위원장 김웅빈

경기도당 : 위원장 박광희

충북도당 : 위원장 이성경, 부위원장 정해수

충남도당 : 위원장 박우현, 부위원장 유영기

전북도당 : 위원장 방준표, 부위원장 조병하

전남도당 : 위원장 박영발, 부위원장 김선우

경북도당 : 위원장 박종근, 부위원장 이영섭

경남도당 : 위원장 남경우, 부위원장 김삼홍

3) 인민군 후퇴와 유격대 조직

서울을 점령한 인민군은 8월 15일을 ‘제2해방의 날’로 정하고 계속 남진하여 낙동강까지 전선을 확장시켰다. 그러나 국군의 강력한 저항과 유엔군의 대거 참전으로 전세가 인민군에게 불리해진 상황에서 노동당은 점령지역에서 병력을 후퇴시켜야 했다. 노동당은 인민군 전선 사령부에 후퇴명령을 내리는 한편 9월 중순 지방당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1. 전세가 불리하여 후퇴한다. 2. 당을 비합법적인 지하당으로 개편할 것 3. 유엔군 상륙때 지주가 되는 모든 요소를 제거시킬 것 4. 군사시설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은 파괴할 것 5. 산간지대 부락을 접수하여 식량을

비축할 것 6. 입산경험자 및 입산활동이 가능한 자는 입산시키고 기타 간부들은 일시 남강원도까지 후퇴케 할 것.”

이에 따라 각 도당위원회에서는 각 군당에 같은 지시를 내리고 9.28을 전후하여 모든 조직들을 자기 도내의 산악지대로 이동시켰다. 그리고 입산한 사람들을 규합, 여러 개의 유격대를 조직했다. 유격대 편성은 지방민청원과 자위대원, 북에서 파견된 내무서원, 정치보위부원, 정치공작대원 또는 후퇴하지 못한 인민군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서울시당에서는 중앙당의 지시로 다른 지방당과는 달리 유엔군이 인천상륙작전을 하기전인 8월 초순부터 서울 방어전에 대비한 준비를 서둘렀다. 시당에 특수부를 만들고 각 구역당별로 특수자위대를 조직했다. 각 구역당 위원장을 특수자위대 대대장으로 하여 구역당 산하 직장 및 가두세포들에게 특수자위대 중대를 편성하였다. 세포위원장이 중대장을 맡았다.

특수자위대는 중대 단위로 서울시당 특수부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했는데 자위대의 총지위자는 서울시당 위원장 김웅빈이었고 이승엽도 앞장섰다. 이들은 각종 소총과 부상병의 무기, 후퇴하는 인민군의 무기 등으로 무장했는데 방어전에 필요한 사제폭탄, 수류탄 등도 가지고 있었다.

서울시에 있던 인민군은 9월 23일을 전후해서 후퇴를 했고 북에서 파견된 공작원과 구역당 간부들도 27일 아침 각 구역당별로 후퇴했다. 그러나 특수자위대는 이승엽의 ‘사수하라’는 명령에 따라 그대로 버티었다. 성북구역당의 경우를 보면 특수자위대 약 50명은 혜화동 로터리와 보문동, 동소문동에 바리게이트를 구축하고 대항하다가 9월 27일 밤 가평 쪽으로 후퇴했다.

경기도당에서는 청평, 가평 등으로 이동하면서 노출되지 않은 핵심당원들을 서울에 다시 투입시키려고 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인민군의 경우 호남지구에 들어갔던 제 4,6,7,9,10 사단의 주력부대는 퇴각로가 막히자 소백산과 태백산맥을 이용하여 북상했으나 약 1만 명은 지방 유격대에 합류하였다.

유엔군이 38선을 넘어 북진하게 되자 미처 후퇴하지 못한 북한지역 지방당 들에서도 유격대를 조직하였다. 이들은 산악지대에 근거지를 마련하고 유엔군 점령지역에서 활동을 벌였다. 대표적으로 구월산에 근거지를 둔 황해도 인민유격대, 고원군 인민유격대, 문천군 인민유격대, 정평 인민유격대, 맹산 인민유격대, 인제군 인민유격대, 최상을 인민유격대, 대동군 청년군위대, 강기석 유격대, 안주 소년군위대, 길주 소년군위대, 함주 소년선봉대, 선천 애육원 소년군위대 등이 활동하였다.

4) 6개 도당회의와 남부군 조직

남한지역에서 활동하던 빨치산들은 인민군의 후퇴에 따라 산악지대에 근거지를 마련하고 당의 지휘를 받아가며 무장투쟁을 벌였다. 49년 하반기에 인민유격대 2병단을 편성하여 무장투쟁을 벌여오던 이현상 부대는 인민군의 남진과 함께 광범한 지역에서 전투를 벌였다. 이현상 부대는 유엔군의 9.15 총반격으로 지리산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북상하여 50년 11월 중순 강원도 세포군 후평리에 도착하였다.

당시 후평리에서 인민군과 유격대를 편성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이승엽은 이현상과 여운철 등과 함께 남한지역의 당사업과 무장투쟁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여운철에게 6개도당의 지도권이 위임되었고, 이현상에게는 유격대의 통일적 지도권한이 부여되었다. 이승엽은 후평리에 모인 유격대와 인민군 후퇴, 민간인들로 구성된 유격대에 독립 4지대, ‘남반부 인민유격대’,(통칭 남부군)라는 명칭을 부여했다. 이현상의 지휘 아래 남하한 인민유격대는 승리사단 인민여단 혁명지대와 그 직속부대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50년 12월 태백산맥을 타고 충북 단양지구로 내려와 문경경찰서를 습격하였다. 유엔의 공격을 받고 제천지구로 이동했다가 52년 2월초 속리산으로 내려와 활동하다가 덕유산으로 들어갔다. 덕유산에 들어간 이현상은 여운철과 함께 51년 5월 중순 송치골에서 6개 도당회의를 열어 병단을 통합하여 사단제로 개편하고 군사적 유일체제를 보장하기 위해 지리산에 통일적인 지휘 본부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6개 도당회의 이후 남한의 유격투쟁은 이현상이 총지휘하게 되었다. 당의 경우 6개 도당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남부지도부를 구성, 여운철이 책임을 맡았다.

6개 도당회의가 있기 전까지 각 도당은 독자적으로 당사업과 무장투쟁을 벌여왔는데, 그 조직은 다음과 같다.

충남도당 : 위원장 남충렬은 대둔산을 중심으로 사령부 밑에 백두산부대(320), 대덕부대(130), 대전부대(100), 함둔산부대(100), 가야산부대(130), 압록강부대(100), 청천강부대와 사령부 직속의 공병부대, 통신경찰중대를 편성하였다. 충남 빨치산은 12월 7일 대둔산에서 전북 완주군 운주면 피몽리로 거점을 이동하였다. 남충렬은 중공군이 계속 남진할 것이라고 판단, 가야산 부대 80명을 천안방면으로 침투시켜 중공과 합동작전을 벌일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전북도당 : 도위원장 방준표는 도당지휘부를 화문산으로 이동시켜 전북 유격대를 조직했다. 사령관 방준표, 부사령관 조병하였고, 직속부대로는 이택부대(60), 보위부대(150), 백학부대(70), 돌진부대(60), 광산부대(50), 학소부대(40), 기포부대(120)가 있었다.

그리고 사령관 아래 제1정치사령, 제2정치사령이 있었다. 제1정치사령은 전주시당 유격대(70), 김제군당 유격대(50), 임실군당 유격대(310), 순창군당 유격대(260), 완주군당 유격대(150), 익산군당 유격대(100), 금산군당 유격대(150)를 지휘했다. 제2정치사령은 정읍군당 유격대(60), 고창군당 유격대(590), 부안군당 유격대(160)를 맡고 있었다.

경남도당 : 지리산에 들어가서 인민군 후퇴병들로 ‘303부대’, ‘102’부대를 만들었는데 후에 불꽃사단을 편성했다. 사단장은 6·25때 북에서 경남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파견된 김의장이고 참모장은 노영호였다.

전남도당 : 백아산에서 전남인민유격대를 조직하고 도당 부위원장 김선우가 사령관이 되었다. 그밖에 경북에서는 6·25때 내려온 남도부 부대가 활동하고 있었고, 경북도당 위원장 박종근이 따로 유격대를 조직했었다.

5) 제2전선과 유격지대 활동

1951년 5월 중순 덕유산에서 6개도당회의 결정에 따라 각 도당유격대는 이현상의 남부군 지휘아래 들어가고 빨치산 부대의 개편도 이루어졌다. 남부군은 사령관 이현상, 부사령관 이영회를 중심으로 제1전구(전북북부와 충남)와 제2전구(전북 남부)로 나뉘어졌다. 제1전구는 충남빨치산 5백 70명을 68사단(사단장 고관수), 전북 북부지방 빨치산 7백 명을 45사단으로 개편했다. 제2전구는 전북 남부에 있는 각 유격대를 46사단, 53사단으로 개편했다. 제1전구 사령관은 김명곤이며, 정치주임은 이희영이었다. 남부군 직속부대는 81사단(정치위원 김삼홍), 92사단, 602사단 이었다. 그리고 경남지구에서 조직된 불꽃사단과 각 지방 무장부대를 조직하여 57사단을 편성, 남부군에 소속시켰다.

남부군은 국군과 유엔공세에 대항하여 각 도당 빨치산을 통일된 지도체제에 묶어 무장투쟁을 벌이려 하였다. 그러나 전남 도당의 경우는 남부군 통제에 들어갈 것을 거부하고 독자적인 행동을 벌였다. 남부군은 경남 산청군 삼장면 조개골에 거점을 두고 무장부대를 지휘했다.

남한지역에서 빨치산 부대들이 남부군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있을 때 북한은 인민군의 재침입과 받을 맞춰, 남한의 유격대가 제2전선의 역할을 수행하는 지령을 내렸다. 즉, 각 도당 조직들을 군사 활동을 위주로 한 지대로 개편하도록 했다. 도당위원장이 지대장 또는 정치부지대장이 되어 인민군의 진격에 호응하는 유격투쟁을 벌이게 하였다.

그리하여 50년 12월, 51년 1월과 3월 등 몇 차례에 걸쳐 유격지대로의 개편에 관한 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총참모장 남일, 작전국장 유성철 등의 지령문이 각 유격대에 보내

졌다. 이때의 지령에서는 유격지대를 다음과 같이 편성하도록 했다.

제1지대 : 소백산 지구에서 활동하는 유격대로 편성한다.

제2지대 : 충남 유격대와 충북 유격대, 그리고 원주지방의 홍사민 연대로 편성하고 제1거점을 지리산, 제2거점을 덕유산, 제3거점을 계룡으로 설정하고 활동범위는 상주, 보은, 청주지구까지를 활동범위로 한다.

제3지대 : 울산, 일원산, 안동 일대에서 활동하는 유격대로 구성한다.

제4지대 : 지대장에는 이현상, 정치부지대장에는 김선우를 임명하며, 전남, 전북지구의 유격대로 편성하고 제1거점을 지리산, 제2거점을 덕유산, 제3거점을 운장산에 두고 활동범위는 곡성, 구례, 하동, 산청, 진주, 마산지구로 한다.

제5지대 : 지대장에는 김원팔, 정치부지대장은 남경우를 임명하며 경남유격대와 청도동부지구 유격대로 편성한다. 거점은 운문산, 지리산, 관용산에 두고 청도, 울산, 동래, 밀양, 마산, 김해, 부산, 산청 등 지구를 활동구역으로 한다.

제6지대 : 무주, 옥천, 영동, 금산, 보은 등을 활동구역으로 한다.

그러나 당시 형편상 지령과는 달리 충남도당이 6지대, 경남도당이 8지대, 전북도당이 7지대, 경북도당이 3지대, 지리산의 이현상이 4지대로 편성되고, 2지대는 조직되지 못하였다.

제1지대는 50년 11월초 이승엽이 직접 조직한 유격 제1, 제2, 제3 여단을 주축으로 김응빈을 지대장, 박승원을 정치부 지대장으로 하여 51년 1월 하순 강원도 오대산지구로 들어와 활동했다. 그 뒤 국군의 공격을 받아 타격을 입고 일부는 북으로 올라갔다. 제1지대는 약 1천 명으로 서울, 경기도 출신들이었다.

제6지대는 50년 9월 29일 춘천에서 약 3백 명으로 조직된 제929부대가 11월 중순 제6지대로 개편되었다. 51년 1월 중순 남하, 3월 말에 월북했다가 다시 5월 인민군 남진을 이용, 충북 일대로 침투했다. 7월에 속리산에 입산했으나 지대장 이하 간부급이 전사함으로써 부대는 흩어지고 말았다. 일부가 충남도당 유격대와 합류하여 대둔산 지구에서 제6지대를 다시 편성하였다. (지대장은 충남도당위원장 남충렬)

그러나 이러한 지대개편의 지시는 당시 열악한 통신수단 때문에 전달되지 못했다. 51년 4월 23일 지대개편 지령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423부대를 조직하여 내려 보냈으나, 충북 속리산에서 충북도당 부위원장인 송명현에게 전달하고 지리산에 도착한 것은 거의 10월이 되어서였다. 따라서 이현상이 남부군을 해체하고 4지대로 개편한 것은 이때였다

6) 휴전회담과 유격대 체제 개편

전선은 51년 중반에 접어들어 38선에서 방어에 주력하는 장기전 태세로 넘어갔으며 7월 7일부터 휴전회담도 시작되었다. 이에 노동당은 남한 지역에서 제2전선 역할을 수행하던 빨치산 유격대 체제를 당 사업을 주로 하는 지구당 체제로 개편하기로 결정했다. 노동당은 51년 8월 31일, 중앙정치위원회를 열고 ‘미해방지구에 있어서의 우리 당사업과 조직에 대하여’라는 94호 결정서를 채택하였다.

94호 결정서에서는 지금까지의 빨치산 투쟁을 평가하고 지구당으로의 개편을 지시했다.

“조국해방전쟁 과정에 있어 당 단체는英勇한 투쟁을 전개했으나, 자기 임무를 당이 요구하는 수준에서 수행하지 못했다. 전쟁시작후 1년이 지났으나, 빨치산의 투쟁은 결정적인 성과를 얻어내지 못했으며, 대중을 조직하여 폭동을 일으키지 못했다. 이것은 당 정치노선과 정책은 옳았는데 남한 안의 단체들이 잘못해서 그러한 것이다. 특히 당영량을 보존해서 닥쳐오는 정세에 적합하도록 강력한 투쟁을 지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당사업 강화를 위해 종래의 행정지역에 따른 조직체를 일단 보류하고 잠정적으로 5개 지역을 설정하여 각각 지구조직 위원회를 조직하여 일체 당사업을 지도한다. 제1지구는 서울, 경기도 전지역, 제2지구는 강남원도, 제3지구는 충청남북도, 제4지구는 경상북도와 울진군 및 낙동강 이동의 경남 밀양, 창녕, 양산, 울산, 동래, 부산지역, 제5지구는 낙동강 이서의 경남도, 전남북도 전지역 및 제주도와 충남의 논산군 지구 등으로 설정한다.”

이러한 중앙당 정치위원회의 결정서는 당시 별다른 연락수단이나 북과의 효과적 통신유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남한의 재산 현지 당들에 즉시 전달되지 못했다. 그래서 52년 중반에 가서야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다.

94호 결정이 가장 늦게 전달된 곳은 전북(지리산)이어서 제5지구당은 1년 뒤인 52년 10월에 조직됐다. 제5지구당은 52년 10월 지리산에서 이현상, 박영발, 방준표, 김삼홍 등이 모여 제5지구당 구성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 지구당개편에 관한 중앙당 지시는 이현상이 덕유산에서 전달받았기 때문에 지리산으로 돌아와서 회의를 열게 된 것이다. 회의에서 이현상, 김삼홍과 박영발, 방준표 사이에 심한 의견대립이 있었다. 이현상과 김삼홍은 중앙당의 결정대로 제5지구당을 만들어 각 도당을 해체하고 소 지구당을 조직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반해 박영발과 방준표는 중앙당의 지시가 정식 문건이 아니며, 도당을 해체하라는 것은 중앙당이 남한 실정을 모르고 결정한 것이라 반대했다.

결국 의견통일을 보지 못하고 중앙당의 지시와는 달리 도당 해체없이 제5지구당을 구성하게 되었다. 위원장은 이현상, 부위원장에는 박영발이 뽑히고 그 아래에 조직부(부장 조병하), 선전부, 유격지도부(부장 박찬봉), 기요과, 통신과, 경리과 그리고 김지회 부대 등 직속부대를 두었다. 조직위원회는 이현상, 박영발, 김삼홍, 김선우, 조병하, 방준표, 박찬봉으로 구성했다.

이처럼 노동당은 남한지역의 지하당과 유격대를 제2전선 역할을 하도록 당사업보다는 군사활동 위주의 지대로 바꾸었다가 다시 휴전을 대비하여 당 위주의 지구당으로 개편하는 지시를 내렸다. 중앙당의 기대와는 달리 점차 어려운 처지에 빠졌다.

특히 51년 11월 백선엽 전투사령부가 남원에 설치되고 12월부터 52년 3월까지 동계 토벌작전을 벌이자 호남 일대 유격대는 큰 타격을 받았다.

7) 111호 결정: 산에서 도시와 농촌으로

노동당 중앙연락부(부장 배철)는 52년부터 남한의 빨치산을 지원하기 위해 금강정치학원 출신과 무장부대들을 내려 보냈다. 그러나 대부분 기대만큼 큰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이에 노동당 정치위원회에서는 당조직과 무장투쟁 문제를 토의하고 11호 결정을 채택하였다. 여기에서는 남한 정세와 휴전회담을 전망한 장기대책으로 지금까지 지구당 사업과 무장투쟁을 평가하고 새로운 결정을 지시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각 지구당이 중앙과의 연락사업을 진행시키지 못해 중앙당의 결정이 제 때 전달되지 못했다.

② 무장투쟁에만 편중하고 당조직사업에 소홀했다.

③ 각 유격부대가 대부대로 집결하여 참호를 파고 수일간에 걸친 정규적 진지전을 전개하는 경향이 있다.

④ 이는 경찰과 헌병조직이 널리 분포된 불리한 조건에서 당과 유격대에 불리한 결과를 준다.

노동당은 이러한 평가에 따라 유격투쟁, 지하당 사업, 합법, 비합법의 결합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제시했다.

유격투쟁 : 유격대는 인민과 연결되고 당의 지도를 받아야 하며 불필요한 모험적 전투는 피하되 그렇다고 너무 소극화되고 위축되어 자진 소멸되어서는 안된다.

지하당 사업 : 각급당 지도부는 산으로 올라가지 말고 중요산업부문과 노동자, 농민, 군부 속에 당 조직을 강화하고 그 토대위에서 지구당 지도부를 도시로 진출시키도록 한다.

합법·비합법의 결합 : 합법과 비합법 투쟁 방법의 결합을 경시하는 것은 당을 힘쓸 수 없는 ‘중증환자 병환’으로 몰아넣는 격이 되며 지하에 숨어 있는 일반대중과는 아무런 관계를 가지지 않고 무위도식하며 합법적 기회를 포기하는 것도 역공세준비에 유해할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지금까지의 지구당 사업과 무장투쟁 전술에서 새로운 전환을 의미했다.

즉 산에서 도시와 농촌으로 진주하여 활동하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당시 전선이 38선에서 완전히 교착상태에 들어가고 전방에 배치된 국군병력이 후방으로 배치되어 대대적인 토벌작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이러한 결정이 제대로 추진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대부분의 무장투쟁 세력은 111호 결정을 전달받고도 주로 산악지역을 거점으로 싸울 수밖에 없었다.

8) 휴전 후의 빨치산

1952년 중반기 이후에도 비록 약화되기는 했지만 빨치산들의 투쟁은 계속되었다. 대표적으로 지리산 지구(5지구당 산하 김지희 부대, 이영희 부대), 회문산 지구(전북도당 산하 무장부대), 속리산 지구(3지구당 빨치산), 운장산 지구(전북도당 빨치산), 백운산 지구(전북도당 유격대), 덕유산 지구(경남도당 유격대), 신불산 지구(제4지구당 남도부 지대) 등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었다.

1953년 휴전 후 빨치산 부대들은 장기적인 활동을 고려하여 사상무장을 강화하고 부대를 소규모로 편성하여 운영하였다. 53년 9월에 들어 지구당은 소규모로 독자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 시기에 빨치산은 주로 지리산 지구, 덕유산 지구, 회문산 지구, 형제봉 지구, 모후산 지구, 전남 동부지구, 영광, 장흥지구, 운장산 지구에서 활동했다. 이에 따라 군의 작전도 지리산, 덕유산, 회문산 등 빨치산의 근거지를 공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1954년 2월에는 지리산지구에는 조국출판사, 지리산 주재당, 경남도당, 중부소지구당, 남원, 임실군당, 995부대, 727부대, 야지공작대, 이영희 부대가 있었고, 백운산 지구에는 전남도당, 전남부대, 남태준 부대, 광양, 순천부대가, 덕유산 지구에는 전북도당 남부지도부, 순천군당, 김제군당, 정읍군당, 고창, 부안군당이, 백아산 지구에는 전남서부도당, 백아산 지구당, 광주시당, 곡성군당, 광용철 부대가, 화학산 지구에는 전남 남부주재당, 두봉산 소지구당, 중부지구기동대가, 운장산 지구에는 복수연대가 있었다.

1954년 2월부터 3월 말까지 박전투사령부의 작전이 실시되었는데 여기서 빨치산의 부대장, 위원장 등의 많은 지휘관들이 전사하였다. 이로 인하여 빨치산은 다시 조직적 편재를 시도하게 되었고 54년 4월경에 이르면 지리산에는 925, 727부대, 남원군당 등 8개 부대가, 백운산에는 전남도당, 향미연대가, 덕유산에는 전북도당 등 5개 부대가 있었고 그 외에도 운양산, 자작산, 회문산, 모후산, 화학산 등에 두 개 내지 3~4개의 부대가 존재하였다.

1954년 4월부터 5월에 이르기까지 군의 작전으로 인하여 많은 수의 빨치산 전투부대들이 사라졌다. 54년 5월 군의 작전이 끝났을 때 빨치산의 남아있던 부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리산 지구에는 조국출판사, 삼승부대, 남원군당이, 덕유산에는 향미연대, 노영호부대, 임실, 진안군당이, 회문산에는 남부지도부, 변산주재당, 부안·정읍·순창·소령군당이, 백운산에는 남태준부대, 삼승부대가, 화학산에는 남부주재당, 서부도당이 있었다.

1955년 초 남한 지역의 빨치산은 남한 전체를 5개 지구당으로 운영하는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었으나, 경기지역의 제1지구당과 충청지역의 제3지구당은 세력의 거의 약화되었다. 강원지역의 제2지구당, 영남지역의 제4지구당, 호남지역 제5지구당 빨치산 부대들이 활동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에서도 호남지역의 제5지구당의 빨치산들이 가장 끈질긴 투쟁을 전개했다. 이들은 주로 지리산, 덕유산, 회문산 등지에서 활동하였다.

1955년 2월에 이르러 빨치산의 세력은 약화되었으나 7월 이후 분산해 있던 빨치산들은 다시 집결하여 조직을 복구하고 점차로 활동을 강화하였다. 경찰의 작전이 55년 후반기부터 시작되어 56년까지 실시되었는데, 이 작전으로 55년 조국출판사, 전북도당, 전북의 남원, 정읍군당, 전남 남부 지도부 등의 부대가 없어졌다. 군경의 자료에 따르면 56년 12월 31일 현재, 43명의 빨치산이 활동하고 있었다.

III. 맺음말

해방 후 무장투쟁을 바라보는 시각은 여러 갈래로 나뉘고 있다. 극좌 모험적 투쟁이라는 주장에서부터 북과 남, 빨치산과 토벌군 모두 잘못됐다는 허무주의적 경향에 이르기까지 평가가 다양하다.

그러나 빨치산 무장투쟁을 바라보는 관점은 왜 빨치산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싸웠고, 또 투쟁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해방 후 빨치산 무장투쟁의 경험과 역사로부터 무엇을 성찰해야 할 것인가 하는 현재적 관점도 바로 여기서 출발하여야 한다.

무장투쟁은 무엇보다 해방 후 지배세력과 민중 사이에 벌어진 기나긴 대결의 연장선상에 놓여있다. 무장투쟁은 해방 후 계급적, 민족적 모순의 해결을 둘러싸고 외세, 지배세력과 민중과의 대립이 최고수준에서 가장 적대적으로 폭발된 형태이다. 따라서 무장투쟁에서 나타난 엄청난 피해와 희생만을 중시하여 문제의 본질을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 한정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무장투쟁은 민중들이 거대한 외세와 지배세력의 물리력에 정면으로 대결하면서 새

로운 국가건설과 조국의 통일을 쟁취하려고 한 투쟁이었다. 무장투쟁은 외세와 지배세력에 의해 민족독립과 민중권력의 건설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기에는 어려운 조건에서 나온 최후의 선택이었다. 우리 현대사에서 무장투쟁이 차지하는 위치와 그것이 제시하는 현재적 의미도 바로 여기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45-60)』, 1988
김광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기치를 높이 들고 구국투쟁에 총궐기한 남조선 인민들의英勇적 투쟁」, 『근로자』 2호, 1949.1
김남식, 「1948-50년 남한내 빨치산 활동의 양상과 성격」, 『해방전후사의 인식』, 한길사, 1989
내무부 치안국, 『대한경찰전사 제1집:민족의 선봉』, 1952
육군본부 전사감실, 『공비토벌사』, 1954
육군본부 정보참모부, 『공비연혁』, 1971
이기석, 「남반부 인민유격대의 영웅한 구국투쟁」, 『인민』, 1950.8
이승엽, 「조국통일을 위한 남반부 인민유격투쟁」, 『근로자』 1호, 1950.1
이승엽, 「원수들의 ‘동기토벌’을 완전 실패시킨 영웅한 남반부 인민유격대와 그들의 당면 임무」, 『근로자』 6호, 1950.3
『조선중앙연감』, 1950
조희영, 「애국적 무장투쟁의 선두에 선 남반부 청년들」, 『청년생활』, 1949.8

성문화된 관습형법? - '국방경비법'의 인권문제

조 용 환(변호사)

I. 머리말

"1962년 1월 20일 군형법(軍刑法)이라는 것이 나오기 전까지 의심 없이 시행되던 '국방경비법', '해안경비법'이라는 법률은 6.25전쟁 중에 특히 위력을 떨치던 법률이다. 이 법률에 의하여 처형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그 수는 알 길도 없거니와 그 중에 얼마나 무고하고 억울한 사람이 있는지는 아마 상상도 못하리라. 그런데 그 '국방경비법'이라는 것이 법률도 아니었다고 하면 놀랄 사람이 한둘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대한민국 법률이 아니었다.

1945년 8월 9일 일본이 포츠담선언을 수락하고 항복하자 태평양미국육군총사령부는 북위 38도선 이남의 조선에 군정을 선포하고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을 설립하여 군정법령(제141호부터는 남조선과도정부법령)을 공포·시행하였다. 그중에는 현재까지도 유효한 것이 있다. 미군정은 1948년 3월 17일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175호로 국회의원선거법을 공포하고 1948년 7월 12일 대한민국헌법을 제정하고 국회의장 이승만은 7월 17일 이 헌법을 공포하였다. 그리고 정부조직법(법률 제1호)도 같은 날 공포·시행되었으며 1948년 8월 15일에는 정부의 수립을 내외에 선포하였다. 이렇게 하여 대한민국이 탄생한 것이다.

그런데 법령집을 보면 '국방경비법', '해안경비법'은 1948년 7월 5일 공포, 1948년 8월 4일 효력발생, 법률호수 미상이라고 써어 있다. 그러나 1948년 7월 5일에 이러한 법률이 공포된 일이 없다.

미군정은 군정법령(남조선과도정부법령) 이외에 1946년 8월 24일 군정법령 제118호로 창설한 조선과도입법위원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인준(認准), 공포한 일이 있으나 그것은 1947년 5월 6일 법률 제1호에서 1948년 5월 19일 법률 제12호(조선과도입법위원회의 해산)까지를 제정하였을 뿐이었다.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209호(법령 제173호의 개정)가 1948년 7월 3일에 공포되었고, 같은 법령 제210호(동결재산의 해제)가 1948년 7월 12일에 공포되었으므로 그 중간인 7월 5

일에 다른 법령이 공포될 수 없고, 더구나 1948년 5월 20일로써 이미 해산된(법률 제12호) 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법률을 제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이렇게 공포된 일이 없는 법률을 법률이라고 하려니까 그 법률호수는 '미상(未詳)'이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 국방경비법을 법률인 양 적용했고, 군법 피적용자인 군인·군속 등은 물론, 국방경비법 제32조(이적), 제33조(간첩)의 죄는 민간인에게도 적용되었다. 국민들은 이것이 법률인 줄 속아서 살아왔고 허구 많은 사람들이 그 법률에 의하여 처형되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위원회나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한다고 하지만 도시 법률인지, 아닌지는 누가 판단하는 것일까? ...¹⁾

II. '국방경비법', 왜 문제인가

"국민을 속이는 사람들"이라는 소재목으로 시작하는 유현석 변호사의 법조회고는 '국방경비법'과 '해안경비법'²⁾의 문제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국방경비법'은 미군정에 의하여 '공포'된 일이 없고, 따라서 결코 '법률'이 아닌데도 대한민국정부와 법원에 의하여 정당하게 제정. 공포된 법률처럼 적용되면서³⁾ 특히 한국전쟁기간 동안 "아마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처형하는 데 동원되었다. 이것이 만일 공포된 일도 없는, 따라서 법률의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법'에 따라 재판을 받고 처형된 사람들은 참으로 무고하게 학살당한 피해자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국방경비법'의 문제가 반세기전, 어처구니없는 한국 역사의 한 장을 장식하는 에피소드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국방경비법'은 국가보안법은 물론 '사회안전법'을 거쳐 보안관찰법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법률에 인용. 계승되는 형태로 지금까지

1) 유현석, '책에 없는 시시한 이야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창간호, 역사비평사(1993), 109-110쪽.

2) '국방경비법'은 미군정 당시 조선경비대에 적용되는 군형법, '해안경비법'은 해안경비대에 적용되는 군형법의 형식을 띠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거의 같으며 실제로 많이 적용되어 사실상 군형법의 역할을 한 것은 국방경비법이다. 어쨌든 실제로 미군정에 의하여 공포된 일이 없으면서 미군정법률처럼 적용되었다는 점에서 이 두 '법률'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편의상 '국방경비법'이라고만 쓰기로 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글에서 말하는 '국방경비법'의 문제는 '해안경비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국방경비법의 내용은 陸軍本部, 法務五十年史(1996), 100-103쪽, 해안경비법의 내용은 海軍本部, 海軍法務五十年史(1996), 54-62쪽 참조.

3) 1962.1.20.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군형법(법률 제1003호)과 군법회의법(법률 제1004호)을 제정. 공포하면서 그 부칙(군형법 부칙 제5조, 군사법원법 부칙 제8조)에서 '국방경비법'과 '해안경비법'을 폐지하였다. 이처럼 '국방경비법'과 '해안경비법'은 군형법과 군법회의법이 공포될 때까지 군형사법의 역할을 하였다.

살아남아 있다. 그래서 '국방경비법'에 의해 수십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이 우리 주변에 살아남아 있고, 나아가 이들에게 보안관찰처분의 족쇄를 채우는 근거가 되고 있다.⁴⁾

따라서 이 글에서는 '국방경비법'의 문제점과 '국방경비법'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법원의 태도를 살펴봄으로써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들의 억울한 인권유린을 바로잡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III. 미군정법령과 관보

1. 미군정과 관보

일본이 연합국에 항복한 후인 1945년 9월 7일 맥아더 대장은 태평양미국육군총사령부 명령의 포고(proclamation) 제1호를 발표하여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지역을 점령"하고 그 "지역과 동지(同地)의 주민에 대하여 군정을 설립"함을 선언하였다. 9월 9일 조선총독 아베(阿部信行)가 맥아더를 대리한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 하지 중장에게 항복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일제의 조선통치는 막을 내리게 되었으며 9월 12일 아놀드(Achibald V. Arnold)소장이 군정장관으로 임명되어 3년에 걸친 미군정이 시작되었다. 미군정은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이라는 이름으로 군정에 필요한 모든 법령을 관보를 통하여 발표하였다. 미군정의 관보는 일반적인 근대적 관보와 달리 독특한 방식으로 발행되었는데, 이것이 오늘날 미군정관보에 대해 여러 가지 오해를 낳는 원인이 되고 있다. 관보 연구자인 최정태 교수는 미군정관보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대체로 통용되는 근대적 관보의 특징을 보면 먼저 관보의 명칭아래 법령 및 인사사령 등 조목별로 모든 기사를 한 곳에 통합하고 여기에 발행호수와 일자를 명시하여 정기적으

4) 보안관찰법 부칙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국방경비법 제32조와 제33조 위반으로 복역한 사람은 보안관찰법 제2조에 정한 "보안관찰대상범죄"를 범한 것으로 보아 보안관찰처분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보안관찰처분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이 보장하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점에 관하여는 UN Doc. CCPR/C/79/Add. 6, 25 September 1992; Report on the mission to the Republic of Korea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Mr. Abid Hussain, submitted pursuant to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 1993/45. UN Doc. E/CN.4/1996/39/Add.1, 2 November 1995 참조. 이 글에서는 보안관찰법과 보안관찰처분의 문제점에 관하여는 다루지 않고 단지 '국방경비법'의 문제점만 언급한다.

로 매일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군정관보는 통합된 내용을 담은 관보형체가 없다. 그러므로 관보자체에 발행호수와 일자를 기입할 수도 없다. 다만 세부적으로 법령이나 사령, 행정명령 등에 일련번호와 일자를 각각 기입하여 관보의 명칭을 빌어 발행한 것이 본 관보의 특징이다. 이는 곧 주제 중심 내지 각 부서별로 분산하여 생산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미군정청관보' 제1호, 제2호라고 하는 자료는 찾아 볼 수 없는 것이다."⁵⁾

이처럼 미군정은 법령을 비롯한 모든 활동을 관보의 이름으로 발행하여 주지되도록 하였으나 내용 및 부서에 따라 독립해서 편성, 발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로 통일된 관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모든 관보에는 최종발행자인 군정장관이 일일이 서명하여 발행하였으며 관방총무과가 발행을 주관하였다.⁶⁾ 미군정이 발행한 관보는 관보의 머리부분에서 그 관보로 공포하는 법령의 종류와 번호를 밝히고 있고 그 내용에서도 법령의 호수를 명시하고 있다.

2. 미군정의 법령체계와 '국방경비법'

가. '군정법령'의 종류

미군정기에 시행된 법령의 유형에는 태평양미국육군총사령관 포고(Proclamation), 남조선과도정부 법률(Public Act),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 군정청법령(Ordinance), 행정명령(Executive Order), 부령, 훈령, 관리령 등의 7가지가 있었다. 흔히 이를 총칭하여 보통명사로서 "미군정법령"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가운데 "군정청법령(Ordinance)"이라는 고유명사를 가진 별개의 법령과 구별해야 한다. 어쨌든 군정의 성격상 미군정시대의 최고의 효력을 가진 법령은 태평양미국육군총사령관 포고였다. 맥아더 사령관의 명의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공포된 포고는 자기 휘하의 미국 육군 제24군단(군단장 하지 중장)을 남한지역에 파견하여 군정을 실시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공포한 것으로, 미군정의 권한은 미국육군의 위계체계상 태평양미국육군총사령관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므로 이 포고가 최고법으로서 효력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⁷⁾ 그 다음으로 오늘날 법률의 효력을 가진 것이 남조

5) 崔貞泰, 한국의 官報, 亞細亞文化社 (재판 1994), 119쪽.

6) 崔貞泰, 앞의 책, 117-118쪽.

7) 앞에서 본 태평양미국육군총사령부포고 제1호는 "군정을 설립"한다면서 제1조에서 "조선북위38도선 이남의 지역과 동주민에 대한 모든 행정권은 당분간 본관의 권한하에서 시행함."이라고 선언하였다. 1945년 9월 20일 군정청은 "...민주주의정부를 건설하기까지의 과도기간에 있어서 38도선 이남의 조선지역을 통치, 지도, 지배하는 연합국총사령관 아래서 미군에

선과도정부 법률(Public Act)과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 군정청법령(Ordinance)이다. 군정청 법령(Ordinance)은 좁은 뜻에서 '군정법령'이라고도 하는데, 군정장관이 자기의 권한으로 제정. 공포하는 것으로 미군정시대 입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⁸⁾ 남조선과도정부 법률은 군정법령 제118호에 의하여 설치된 조선입법기관(제3조)인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제정하고 군정장관의 인준을 받아 공포된 법률을 말한다. 군정법령 제118호에 의하면 입법의원의 직무는 "일반복리와 이해에 관계되는 사항 및 군정장관이 의탁한 사항에 관하여 법령을 제정"하는 것이지만 그 직무권능, 즉 입법위원이 제정한 법령은 "군정장관이 동의하여 합법적으로 서명날인하고 관보에 공포하는 때"에 법률의 효력이 있다(제5조). 행정명령은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장관실에서 발하는, 말하자면 대통령령과 유사한 것이며 부령(department order)은 군정장관의 지시 또는 지령에 따라 각부의 장이 발령하는 것으로 농무부령, 상무부령, 체신부령, 노동부령, 사범부령이 있다. 훈령(bureau order, instruction)은 법무국, 보건후생국, 재무국 국장이 하는 명령 또는 판사에 대한 훈령, 검사에 대한 훈령, 법무국장 지령 등을 포함하며 마지막 관리령(管理令 또는 管財令, custody order)은 군정청 관재처의 재산관리관이 한 명령을 말한다.⁹⁾

나. '군정청법령'과 '법률'의 효력

외형만으로 볼 때 남조선과도정부법률은 이름 그대로 법률(Public Act)이며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Ordinance)은 '법령'(Ordinance)으로 법률보다 효력이 하위에 있

의하여 설립된 임시정부인 것이다. 군정청은 남조선에 있어서 유일한 정부 ...”라고 선언하였다. 金哲洙, 韓國憲法史, 大學出版社(중판 1989), 24쪽; 朴燦杓, '韓國의 國家形成: 反共體制樹立과 自由民主主義의 制度化, 1945-48', 高麗大學校 大學院 박사학위논문 (1995.8.), 74쪽에서 인용. 이러한 근거로 미군정은 법령을 공포하여 시행하였으며 제헌헌법은 부칙 제100조에서 "현행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하여 미군정법령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수용하였다.

8) 따라서 이 글에서 별다른 설명 없이 '군정법령'이라고 표기하는 것은 영문으로 "Ordinance"라고 표기하는, 군정청법령을 말한다. 유현석 변호사의 글에 나타나 있듯이 군정법령은 제141호부터는 "남조선과도정부 법령(South Korean Interim Government Ordinance)"이라는 이름으로 공포되었다.

9) 崔貞泰교수에 따르면 "발행이 확인된 미군정관보의 내용을 정리하면 포고 16건을 비롯하여 법령 219건, 임명사령 136건, 민직, 해임사령 117건, 행정명령 26건, 공고 52건, 일반고시 8건, 통첩 및 통보 17건, 헌장 및 선포령 4건, 부령 및 지령 106건, 규칙 14건, 남조선과도정부법률의 27건으로서 모두 51종 742건"이라고 하면서 앞의 책, 125-148쪽에서 이를 정리해 놓고 있다. 그리고 이 책 147쪽에서는 역시 국방경비법과 해안경비법을 "1948년 7월 5일 공포된 '법령호수미상'의 '남조선과도입법의원 법률'로 기재하고 있다. 그러나 1997년 12월경 두 차례에 걸쳐 글쓰기와 한 전화통화에서 최정태 교수는 '국방경비법'과 '해안경비법'이 공포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확인하였다.

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법률은 또 형식적으로 입법기관을 통과한 것인 반면, 법령은 군정청에서 단독으로 발령한다는 점에서 법률이 더 우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미군정청이 법령의 제정, 공포를 통하여 입법권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실정이었다.¹⁰⁾

다. 미군정의 '죄형법정주의'

포고 제1호는 제1조에서 "조선 북위38도 이남의 지역과 동 주민에 대한 모든 행정권은 당분간 본관의 권한하에서 시행함"이라고 하고 제3조에서는 "주민은 본관 및(及) 본관의 권한하에서 발포한 명령에 조속히 복종할 것(事). 집령군에 대하여 반항행동을 하거나 또는 질서보안을 착란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용서 없이 엄벌에 처함"이라고 하고 제6조에서는 "이후 공포하게 되는 포고, 법령, 규약, 고시, 지시 및(及) 조례는 본관 또(又)는 본관의 권한하에서 발포하여야 주민의 이행하여야 될 사항을 명기함." 이라고 하고 있다. 이 포고는 따라서 남한지역의 입법, 사법, 행정권을 모두 태평양미국육군총사령관이 가지고 군정을 시행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동시에 "주민이 이행하여야 될 사항"은 "이후 공포하게 되는" 법령에 의하여 "명기"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명시적으로 공포되는 법령에 주민이 복종할 의무가 있다는 원칙을 선언하였다.

한편 1945년 10월 9일 공포한 군정법령 제11호는 제3조에서 "어떠한 사람이든지 그(其) 행위에 대하여 그 범행당시의 현행 법률에 처벌한 조문이 명백히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면 죄명을 정하거나 판결을 언도하거나 형벌을 가하지 못함." 이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이른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기하여 미군정청은 모든 법령을 미군정청관보(Official Gazette)에 공포하였으며 이렇게 공포된 법령은 군정장관의 사전의 인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보에 공포된 후 10일이 지나서 법령이 효력을 발생하게 하였다.¹¹⁾

라. 공포된 군정법령과 법률

미군정청은 수립이후 1945년 9월 24일 군정법령 제1호 "위생국 설치에 관한 건"을 공포한 이래 1948년 8월 12일 마지막으로 공포한 제219호 "법령 제119호의 개정"에 이르기까지 219개의 군정법령을 공포하였고, 남조선과도입법위원회는 모두 33건의 법률안을 심의하여

10) 文光三, '美軍政期 憲法史', 韓國憲法史(上) (韓泰淵, 葛奉根, 金孝全, 金範柱, 文光三 共著),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8, 313-362쪽 참조.

11)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1946.1.19. 법령기타법규의 공포, 공포형식에 관한 건.

18건을 통과시키고 15건을 미결로 남겨 둔 상태에서 해산하였다. 입법의원에서 통과된 18건 가운데 13건은 군정장관의 인준을 받아 공포되어 법률로 효력을 발생하였고 5건은 군정장관의 인준을 받지 못하여 법률로 공포되지 않았다. 효력을 발생한 13건 중 12건은 남조선과도입법의원 법률로 공포되었고 나머지 한 건은 군정법령 제88호(신문 및 기타 정기간행물 허가에 관한 법령 개정)로 공포, 시행되었다.¹²⁾

현재 미군정법령(Ordinance)을 공포한 관보는 제1호부터 제219호까지 모두 남아 있고 그 제목이 무엇이며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져 있다. 마찬가지로 입법의원에서 제정한 법률(Public Act) 제1호부터 제12호까지는 물론, 입법위원의 모든 속기록이 남아 있어 어떠한 의안이 심의되었는지 분명하게 알려져 있는 실정이다.

마. '국방경비법'의 문제

문제는 이처럼 분명히 확인되어 있는 219개의 군정법령과 12개의 과도입법의원 법률 가운데 '국방경비법'과 '해안경비법'이라는 제목과 내용을 가진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데서 시작한다. 그렇다면 '국방경비법'과 '해안경비법'은 어째서 미군정법령으로 간주되고 적용될 수 있었을까.

국방경비법이 효력 있는 미군정법령일 수 있으려면 다음 두 가지 가운데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첫째는 미군정이 어떤 이유로 법령번호를 붙이지 않고 국방경비법과 해안경비법을 관보로 공포한 경우이고 둘째는 법령 제219호 이후에 예컨대, 법령 제220호와 제221호로 국방경비법과 해안경비법을 공포하였으나 그 관보가 사라진 경우이다. 어느 경우든지 미군정 스스로가 법령은 공포되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대한민국 헌법 또한 죄형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었으므로 만일 국방경비법이 공포된 일이 없다면 국방경비법은 법률의 효력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는 두 가지 모두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첫째로 미군정이 굳이 법령의 번호를 붙이지 않고 '국방경비법'과 '해안경비법'만을 따로 공포할 이유가 전혀 없다. 또 군정법령을 공포한 다른 모든 관보들은 남아 있는데, 국방경비법과 해안경비법을 공포한 관보만 없어질 까닭이 없고 비록 그 관보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미군정의 활동을 기록한 다른 자료 어디엔가에는 그런 법령이 공포되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의 경우 역시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미군정청이 1948년 8월 12일 법령 제219호를 공

12) 金赫東, 南朝鮮過渡立法議院의 設置背景과 運營實態에 관한 研究, 檀國大學校 大學院 박사학위논문, 1995년 참조.

포하였는데, 대한민국정부가 수립한 8월 15일이 되기 전에 국방경비법과 해안경비법을 제정. 공포할 리가 없고 하였다면 그 관보들만이 없어질 리도 없으며 미군정의 역사기록에 나타나지 않을 리 없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미군정이 마지막으로 공포한 법령이 제219호라는 사실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IV. 국방경비법, 법인가?

1. '남조선과도정부법률'이 아닌 국방경비법

국방경비법을 수록하고 있는, 국내의 모든 법령집¹³⁾에는 '국방경비법'이 '해안경비법'과 함께 "남조선과도정부 법률"로서 "1948년 7월 5일 공포, 법령호수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여기서 "남조선과도정부 법률"이란 앞에서 본 것처럼 1946년 8월 24일자 미군정법령 제118호에 의하여 설치된 조선과도입법위원회에서 제정하여 군정장관의 인준을 받아 공포된 법률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방경비법이 남조선과도정부법률(Public Act)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 법이 적어도 미군정이 제정 공포한 군정법령(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Ordinance)은 아님을 뜻하는 것이다.

그런데 1948년 5월 10일의 제헌국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국회가 구성되어 헌법제정을 비롯한 법률제정 작업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조선과도입법위원회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국방경비법이 공포되었다는 1948년 7월 5일 이전인 1948년 5월 20일 남조선과도정부법률 제12호에 의하여 해산하였다. 따라서 조선과도입법위원회가 해산하고도 한 달 반이 지난 7월 5일에 조선과도입법위원회가 만든 법률이 공포된다는 것은 우선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더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조선과도입법위원회는 약 1년 반 동안의 활동기간 중 이 법을 제정한 일이 없는 것은 물론, 심의조차도 한 일이 없다.¹⁴⁾ 다

13) 지금까지 발견한, '국방경비법'을 수록하고 있는 법령집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1954년에 발행된 文星堂판 增補 六法全書이고 그후 법진들에 계속하여 실리고 있다. 소송과정에서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정부기관이 편집한 법령집가운데에는 법제처와 법원행정처가 1969년에 발행한 군정법령집에 국방경비법과 해안경비법이 실려 있다. 그러나 大韓法政協會編纂, 現行 法令總集, 大韓出版文化社(1951); 文星堂판 六法全書(1953년)에는 이들 법령이 실려 있지 않다. 특기할 것은 국방경비법과 해안경비법을 수록하고 있는 모든 법령집들이 예외 없이 '국방경비법'을 "1948년 7월 5일공포"된 "법령호수미상"의 "남조선과도정부법률"로 기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14) 金赫東, 앞의 논문 참조. 이 논문은 '남조선과도입법위원회'의 모든 속기록을 조사하여 심의의 대상이 된 안건을 검토하여 정리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국방경비법이나 해안경비법과 같은 것은 남조선과도입법위원회에서 심의의 대상이 되었던 일조차 없다.

시 말하면 남조선과도정부법률로 법령집에 수록되고 통용되어 온 국방경비법이 남조선과도정부법률이 아니라는 사실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2. 1948년 7월 5일에 공포되지 않은 국방경비법

국방경비법을 수록하고 있는 모든 법령집은 예외 없이 법령호수 '미상', 그리고 공포일은 "1948년 7월 5일"로 기재하고 있다. 그런데 미군정청 관보의 목차¹⁵⁾를 보면 이날 국방경비법과 해안경비법이 공포된 일은 없다. 앞서 유현석 변호사의 글에서 보았듯이 1948년 7월 3일 군정법령 제209호가 공포되었으며 7월 12일 제210호가 공포되었을 뿐, 7월 5일에는 어떠한 법령도 공포된 일이 없고 공포될 수도 없었다. 따라서 이 또한 국방경비법이 제정 공포된 일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기존의 법령집에 이 법의 공포일도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별 문제이지만 그 공포일이 명백히 1948년 7월 5일로 기재되어 있고 그렇게 통용되어 왔는데 그 날짜에 공포되지 않은 사실이 증명된 이상 '국방경비법'의 지금까지 통용되어 온 효력근거는 무너졌다고 보아야 하며, '국방경비법'을 정당한 법률로 '추정'하는 근거는 번복되었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할 것이다.

3. 국방경비법이 수록된 '법령집'의 문제점

어떤 법령이 과연 제대로 제정, 공포된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제기될 경우, 일차적으로는 그 법령의 제정주체인 국가기관이 발행하는 공인된 법전(예컨대,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또는 '법령연혁집')에 의할 것이며, 그래도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관보에 의하여 그 공포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만일 어떤 이유로 관보가 멸실되어 공포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입법기관의 속기록과 법령 공포기관의 활동기록 등을 살펴봄으로써 그 공포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국방경비법과 해안경비법이 공포되었음을 밝혀주는 미군정관보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로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에 제정주체가 아닌 개인 또는 기관이 비공식으로 편집한 미군정법령집에 "남조선과도입법의원 법률"로 실려 시행되었고 각종 법률에 인용되고 법원에 의하여 적용되면서 법률의 효력을 의심받지 않은 채 지금까지 왔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같이 국방경비법과 해안경비법을 "남조선과도입법의원 법률", "1948년 7월 5일 공포", "

15) USAMGIK, Official Gazette (원주문화사 영인, 미군정청 관보 1-4권, 1991).

법령호수미상”이라고, 명백히 사실과 다른 내용을 표기하고 있는 점을 보면, 국방경비법과 해안경비법을 처음으로 법전에 올린 사람조차도 그 효력근거를 제시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이 법에 관하여 설명하는 자료들 가운데 “1948년 7월 5일 공포지시”¹⁶⁾라고 설명하는 것들도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처음부터 이 법이 공포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추측할 수도 있다.

4. 미군정의 관보와 법령집

현재 법무부와 대법원은 국방경비법과 해안경비법을 공포한 미군정관보를 “찾을 수 없다”는 말로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관보를 “찾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그 관보는 처음부터 없었다고 보아야 할 충분한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미군정청이 발행한 법령집에도 국방경비법이나 해안경비법은 수록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국내에 있는 미군정당국이 발행한 법령집들로는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가 발행한 군정법령집(軍政法令集)¹⁷⁾과 미군정청 각부령집(美軍政廳 各部令集)¹⁸⁾, 그리고 南朝鮮過渡政府발행 軍政法令集 제1권 내지 제4권¹⁹⁾이 있는데 미군정당국이

16) 戰史編纂委員會, 韓國戰爭史 1권(1967), 346쪽은 국방경비법을 1946년 1월 3일 군정청법률고문으로 취임한 손성검이 6개월에 걸친 연구와 기초작업 끝에 만들었다고 하면서 “이리하여 국방경비법은 1946년 9월에 미군정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포하게 되었다. 동법은 제1편 총칙, 제2편 죄, 제3편 군법회의, 제4편 잡칙으로 구성되었다. 그후 제3편 군법회의를 일부 수정하여 1948년 7월 5일 공포지시에 의하여 동년 8월 4일 유효하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1946년 9월에 국방경비법이 공포된 일도 없고, “1948년 7월 5일 공포지시”라는 것도 무엇을 말하는지 애매하다.

17) 법원도서관 소장, 청구기호 340.031 한 17 ?c.2. 법원도서관 등록번호 91258호, 1995.1.20. 구입등록.

18) 법원도서관 소장, 청구기호 340.031 제75? c.2. 법원도서관 등록번호 91257호, 1995.1.20. 구입등록. 이 부령집에는 전체적으로 통일된 목차는 없으나 “布告, 行政命令, 노동부령, 농무부령, 법무국령, 보건후생부령, 사법부령, 상무부령, 재무부령, 체신부령, 외국무역규칙, 재산소청위원회 수속규칙, 중앙가격규칙, 중앙경제위원회규칙, 중앙식령규칙, 인사행정규칙, 기타”의 순으로 따로 기재한 목차와 함께 시기순으로 편철되어 있다. 그중 布告부분에는 태평양미국육군사령부 포고 제1호 내지 제4호,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포고(Declaration) 제3, 4호,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 포고(Proclamation)가 포함되어 있고 행정명령부분에는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명의의 Executive Order 제1호내지 제24호, 선포(Declaration) 제6, 7호), 야행금지령(Curfew), 명령(General Order) 제8호, 총감실명령(Commission Order) 1호, 공포(Declaration) 제2호가 포함되어 있으며 명령(Federal Order) 제8호는 이에 위반한 경우 “징계처분”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각부령집에도 국방경비법과 해안경비법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19) 서울대학교 법학도서관 청구기호 343.5 H193g v.1-4.

직접 발행한 이들 법령집에도 국방경비법과 해안경비법이라는 이름의 법령이 실려 있지 않다는 사실은 이들이 미군정에 의하여 제정 공포된 일이 없을 뿐 아니라, 미군정에 의하여 법령의 효력을 가진 것으로 취급된 일도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그것을 공포한 관보도 없고 미군정 스스로 만든 법령집에도 올라 있지 않고 미군정 스스로도 법령으로 인정한 일이 없는, 정체불명의 법령들이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한국인들이 임의로 만든 법령집에 "남조선과도정부법률, 1948년 7월 5일 공포 법령호수 미상"이라는 허위의 정보를 달고 기재되어 법률로 시행되어 온 것이다. 이처럼 국방경비법과 해안경비법은 법령으로서 가져야 할 공적인 근거가 전혀 없고 또한 있을 수도 없는, 매우 이상한 '법령'이며 오직 비공식적인 법전을 근거로 대한민국의 법집행과 적용이 쌓여온 "정문화된 관습형법"이 되어 있는 것이다.

5. 국문판법령집과 영문판법령집의 차이

중요한 사실은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 편찬된 미군정법령집가운데에도 국문판에는 국방경비법과 해안경비법이 수록되어 있으나 영문판에는 이것들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1971년 한국법제연구회에서 편찬한 미군정법령총람²⁰⁾은 국문판과 영문판의 두 권으로 되어 있는데 국문판에는 남조선과도정부 법률 항목에서 법률 제12호 다음에 '법령호수 미상'으로 국방경비법과 해안경비법이 수록되어 있지만, 영문판에는 실려 있지 않은 것이다. 미군정법령상 미군정 시대에는 모든 공문서가 영문과 국문으로 발행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영문이 없는 군정법령이란 생각할 수 없는 것이며 이 또한 국방경비법이 미군정에 의하여 제정 공포된 일이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6. 미군정의 활동기록과 국방경비법

가. 자료대한민국사

국사편찬위원회가 편찬하여 발행한 '자료대한민국사'²¹⁾는 "광복에서 정부수립까지 3개년에 걸친 미군정기간의 편년체 편찬"으로 미군정시대의 모든 중요한 사건과 자료들을 포함하고 있고 특히 제7권은 1948.5.1.부터 8.15.까지 자료를 수록하고 있는 것으로, 대한민국

20) 韓國法制研究會, 美軍政法令總覽 國文版; 英文版 (1971).

21) 國史編纂委員會, 資料 大韓民國史, 제1권 내지 제7권.

정부기관이 편찬한 미군정기의 공식기록이다.

1948년 7월 3일²²⁾에 관한 기록을 보면 미군정법령 제209호가 공포된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그 근거는 "미군정청 관보 법령 제209"로 표시되어 있다. 그런데 7월 5일의 기록²³⁾을 보면 국회의 헌법초안 검토 등 이날 일어난 중요한 사건이 모두 기록되어 있으나 '국방경비법'이나 '해안경비법'과 같은 낱말은 나타나지도 않는다. 또 7월 12일에는²⁴⁾ 미군정법령 제210호가 공포되었다는 기록이 나타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이날 "통위부 참모총장 이형근"이 기자회견을 한 내용인데, 그는 "이미 통위부가 기구개혁을 실시 중이다. 군사기구니 만큼 상세한 내용은 발표하기 어려우나 통위부는 정부의 한 部로서 이미 명시되어 있는 바이다." 라고 말했다. 이것은 이미 국회에서 진행 중이던 정부조직법 제정작업 과정에서 통위부를 개편하여 국방부로 하고, 그 산하에 육군, 해군, 공군을 두기로 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정부조직법, 법률 제1호 제17조 참조)²⁵⁾. 정부조직법은 1948년 7월 17일 법률 제1호로 국회를 통과하였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에서 사용할 국방경비법을 보면 이미 국회에서 통위부를 국방부 산하 육군으로 개편하게 되어 있는데도 국방부라는 말은 등장하지도 않고 '통위부장'이 군법회의를 설치하게 한다는 등 당시의 정세와 전혀 맞지 않는 용어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쨌든 수천 쪽에 이르는 자료 대한민국사 제1권 내지 제7권의 어느 부분에도 국방경비법과 해안경비법이 미군정에 의하여 공포되었다거나 미군정이 이러한 법령을 공포하려고 준비했다는 말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 자료는 미군정 당시 모든 법령의 공포내용과 국방경비대 및 해안경비대의 내부 조직변화 등 세세한 내용까지 수록하고 있는데, 국방경비법과 해안경비법이 정상으로 공포된 법령이라면 과연 한 마디 단어조차 언급되지 않을 수 있을까 의문스럽다.

나. 미군정 활동보고서

'국방경비법'의 제정 주체인 미군정의 기록은 어떠한가. 미군정의 기록 가운데 가장 참고할 만한 것은 미군정청이 1945년 9월부터 1948년 8월에 이르기까지 34차례에 걸쳐 달마다 발행한 보고서이다.²⁶⁾ 이 보고서들은 각 권마다 매우 방대한 양으로 그 달에 남한에서

22) 자료 대한민국사 제7권, 460쪽.

23) 자료 대한민국사 제7권, 470쪽 이하.

24) 자료 대한민국사 제7권, 519쪽.

25) 자료 대한민국사 제7권, 532쪽.

26) 이 보고서는 제1권부터 제5권까지는 "연합군최고사령부(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가 펴낸 "일본과 한국에서의 비군사부문활동 요약보고서(Summation of

일어난 미군정관련 중요한 사항을 세세하게 수록하고 있고 미군정이 그 달 그 달 공포한 법령들 역시 중요한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 방대한 자료에도 조선경비대와 해안경비대에 적용되는 균형법으로서 '국방 경비법'과 '해안경비법'이 제정, 공포되었다는 기록은 역시 나타나지 않는다. 예컨대, 제33권은 1948년 6월의 기록이며, 제34권은 제48년 7월부터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수립, 즉 미군정종료까지를 다루고 있는데 각각 6부(PART), 약 200쪽 내외의 방대한 양으로 되어 있고,²⁷⁾ 제5부 제3장 법적 문제(Legal Affairs)는 "법령과 명령들(Ordinances and Orders)", "법률 의견", "행형기구", "한국 법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경찰과 조선경비대 및 해안경비대에 관한 사항은 제4장 국립경찰 부분에서 다루고 있다. 1948년 6월의 보고서를 보면²⁸⁾ 그 달 공포된 주요 법령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행정명령(executive order) 제22, 23호 및 각 부서의 명령, 그리고 군정법령(Ordinances) 제198호, 제199호, 제200호, 제201호, 제202호, 제204호가 공포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1948년 7, 8월의 보고서²⁹⁾를 보면 법령 제203호 및 제205호 내지 제219호까지, 그리고 행정명령 24 내지 28호가 제정 공포된 사실이 기록되어 있으나 국방경비법이나 해안경비법과 같은 것은 언급조차 찾을 길 없다.

그밖에도 미군정에 관한 역사자료들은 많이 남아 있다. 방대한 양의 미군정 정보보고서(G-2보고서)³⁰⁾를 비롯하여 수많은 자료들이 발행되어 있으나³¹⁾ 이 모든 기록 어디에도

Non-Military Activities in Japan and Korea)"로, 제6권(1946.3.)부터 제15권까지는 "미군태평양최고사령부(Commander-in-Chief, United States Army Forces, Pacific)"이 발행하는 "한국에서의 미군정활동 요약보고서(Summation of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Activities in Korea)"로 되어 있고, 제23권(1947.8.)부터 제34권까지는 "주한미군사령부 미군정청(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이 발행한 "남조선과도정부활동(South Korean Interim Government Activities)"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있다. 흔히 관련 학술논문이나 연구서에서 "Summation"이라는 표제로 인용되는 자료가 바로 이것이다.

- 27) 제1부는 기본적인 측면들(BASIC ASPECTS)로 제1장 인구와 대외관계, 제2장 귀속재산을 다루고 있고 제2부는 생산과 공급(PRODUCTION AND SUPPLY)으로 제1장 농업, 임업과 어업, 제2장 물가, 제3장 산업생산, 제4장 광업, 제5장 할당과 분배, 제6장 수입과 수출, 제7장 노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공서비스(PUBLIC SERVICE)를 다루는 제3부는 제1장 운송, 제2장 통신, 제3장 공공재, 제4장 공공노무를 다루고 있다. 제4부는 재정(FINANCE)으로 제1장 정부재정, 제2장 비정부재정이며 제5부는 정부와 정치(GOVERNMENT AND POLITICS)로 제1장 행정, 제2장 정치상황의 발전, 제3장 법적 문제(Legal Affairs), 제4장 국립경찰, 제5장 남북사이의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6부 사회문제는 제1장 공공건강과 복지, 제2장 교육, 제3장 언론과 여론, 제4장 조선청년단, 제5장 여성 활동을 다루고 있다. 이 보고서들의 체제는 앞에서 본 3단계 변화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

28) Summation Vol. 33, 153-154쪽.

29) Summation Vol. 34, 203-204쪽.

30)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G-2 Weekly Summary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영인, 주한미군 정보일지; 주한미군 주간 정보요약, 1988).

국방경비법과 해안경비법을 공포했다는 기록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국방경비법과 해안경비법은 실제로 공포될 수 있는 것이었을까.

V. 국방경비법의 법형식상 모순

1. 조선경비대, 군대였나?

대한민국 국군의 육해군은 미군정의 조선경비대와 해안경비대를 모체로 한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1948년 7월 17일 제헌국회가 법률 제1호로 통과시킨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국방부 산하에 육. 해. 공군을 설치하였으며, 정부수립후인 같은 해 9월 미군정의 조선경비대는 대한민국 육군으로, 미군정의 해안경비대는 대한민국 해군으로 잠정 편입되었고 1948년 11월 법률 제9호 국군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식으로 국군이 조직되었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볼 때 미군정의 조선경비대와 해안경비대가 대한민국 육해군의 모체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미군정도 이를 염두에 두고 조선경비대와 해안경비대를 조직하여 강화시켜 왔던 것으로 보인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조선경비대와 해안경비대를 당연히 군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것이 바로 국방경비법과 해안경비법 문제를 고려하는 데 빠지기 쉬운 함정이다. 왜냐하면 미군정 당시 국방경비대와 해안경비대는 적어도 법 형식상으로는 군대가 아니라 경찰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2. 조선경비대와 해안경비대의 변천

미군정은 1945년 11월 13일 법령 제28호에 의하여 국방사령부(國防司令部)를 설치하고 그 산하에 군무국을 설치한다. 이 계획에 따르면 국방사령부 산하에 육군부와 해군부로 구성되는 군무국(Bureau of Armed Forces)을 두게 되어 있었다.³²⁾ 그러나 이 계획은 맥아더 사령관과 미국 합동참모부의 반대에 부딪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군사비부담 증가가 우

31) 예컨대, 신복룡 편, 韓國現代史關係 美國官文書資料集 上, 下 (原主文化社, 1992); 신복룡 편, 韓國分斷史 제1권 내지 제6권 (原主文化社, 1991); 정용욱 편, 解放直後 政治.社會史 資料集 제1권 내지 제6권 (다락방, 1995);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사자료집 시리즈 등이 있다.

32) 당시 미국 국무성은 신탁통치구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미군 점령당국은 이에 반발하면서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 및 점령군과 군정의 조기철수 방침을 가지고 있었다. 점령당국은 미국 정부의 사전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이처럼 군정설 계획을 수립한 다음 사후에 맥아더를 통해 본국정부의 승인을 요구하였다. 朴燦杓, 앞의 논문, 113-114쪽 참조.

려되고 치안유지를 위한 무장력은 경찰로 충분하기 때문에 군대를 창설할 필요가 없으며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는 상황에서 군대의 창설은 미소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³³⁾ 그 대안으로 미국 합참본부는 "소규모의 경찰보조기구"를 창설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조선(국방)경비대는 문자 그대로 "조선경찰예비대(Korean Constabulary)"로 되었던 것이다.³⁴⁾ 실제로 1946년 5월 서울에서 열린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소련대표단은 남한의 "국방"이름을 가진 군사기구에 대하여 강력히 반발하였다.³⁵⁾ 이는 4대국의 신탁통치를 거쳐 통일된 국가를 수립한다는 모스크바 회담의 합의에 어긋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미군정은 남한 단독의 군대창설계획을 백지화하고 1946년 6월 15일 법령 제86호에 의하여 "국방부"를 "국내경비부"로 개칭하고 "군무국"을 폐지하였으며 군무국 산하에 육군부와 해군부를 두도록 한 군정법령 제28호 제2조 또한 폐지하였다.³⁶⁾ 이렇게 함으로써 조선경비대와 해안경비대는 "군대"가 아니라 "일반경찰과 같은" "경찰보조기구"임을 명백히 하게 된 것이다. 왜냐하면 "군대"는 독립된 국가만이 가질 수 있는 주권의 상징이기 때문에 당시 미군정의 분할점령아래 있던 남한은 군대를 가질 수 없는 존재였던 것이다.³⁷⁾

이처럼 미군정 기간 동안 조선경비대와 해안경비대는 "소규모의 경찰보조기구"로 출발하여 점차 강화되면서 군대로서 실질적 성격을 갖는 쪽으로 변해 갔지만 법형식으로는 여전히 "국방"을 담당하는 군대가 아니라 "국내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예비대(Constabulary)로 규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3. 국방경비법과 조선경비대의 법형식상 모순

이처럼 조선경비대와 해안경비대는 법 형식에서 국방을 맡은 군대가 아닌 국내치안을 맡은 "경찰예비대"였는데 반하여 국방경비법과 해안경비법은 그 법 자체가 명시하고 있듯

33) 특히 미국 합참본부는 국방군창설문제가 한국의 독립실행이라는 국제적 공약과 관련된 미결문제들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군대를 창설하려는 조치를 연기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경찰보조기구를 창설하는 뱀부계획(Bamboo Plan)이 수립되었다. 朴燦杓, 앞의 논문, 114쪽.

34) 안진, 미군정기 억압기구 연구, 새길, 1996, 163쪽.

35) 徐柱錫, '한국의 국가체제 형성과정',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학위 논문(1996.2.), 125쪽 참조.

36) 陸軍本部, 앞의 책, 88-89쪽.

37) 남한단독정부 수립방침이 결정되면서 1947년 10월 이후 남한의 군대창설문제가 미국 정부 및 군정당국에서 계속 논의되었다. 그러나 1948년 2월 맥아더는 군창설이 시기상조이며 조선경비대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보고하였고 합참본부는 1948년 3월 조선경비대 증강을 승인하였다. 이후 조선경비대는 사실상 군대의 성격을 강화해 가지만, "경찰예비대"인 법형식은 변치 않고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朴燦杓, 앞의 논문, 307-308 쪽 참조.

이 성격은 '군형법' 및 '군사법원법'으로 군대에 적용되는 특별법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군형법과 군사법원법에 해당하는 국방경비법이 미군정 당시 군대가 아닌 조선경비대와 해안경비대에 적용될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미군정이 이를 제정 공포하는 것도 불가능했다고 보는 것이 이치에 맞을 것이다.

4. 미군정 당시의 법원과 재판: 군사재판소와 군사재판

미군정 당시 미군에 대하여는 미군의 헌병재판소(Provost Courts)가 관할권을 행사하고 한국인에 대하여는 민간인과 경찰, 조선경비대와 해안경비대원을 포함하여 한국인 재판소가 원칙으로 재판을 담당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미군의 헌병재판소가 관할권을 행사하였고 재조선 미국육군의 안전과 명예, 연합국 군인이나 국민, 재산이 관련된 범죄에 대한 재판권은 별도로 군사재판소(Military Court)를 설치하여 관할권을 행사하였다.³⁸⁾ 그리고 이 모든 법원을 합쳐서 "조선점령재판소"라고 하였다.³⁹⁾ 이 '군사재판소'는 당시 군법회의 또는 군률법원 등으로 번역되었는데⁴⁰⁾ 따라서 미군정은 한국인에 대하여 군사재판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언제든지 미군 헌병재판소에 이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굳이 조선경비대와 해안경비대원을 위한 별도의 군법회의를 설치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이처럼 군정기간 동안 남한지역에서 주권을 가진 기관으로 권력을 행사한 군정당국이 점령군으로서 자체의 군사재판소를 가지고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군사재판소에 의한 재판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굳이 국방경비법과 해안경비법을 공포할 필요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38) 법원행정처, 法院史, 1995, 172-173쪽.

39) 군정법령 제21호 (1945.11.2.) 제2조는 "북위38도 이남조선의 모든 재판소는 조선의 법령, 미국대평양육군총사령관의 포고의 제규정 및 조선군정장관의 모든 명령 及 법령을 주의 시행할 것(事,) 이(此) 목적을 위하여 여사한 모든 재판소로 자에 육군점령재판소를 구성함. 본령의 조문에 의하여 여사한 재판소에 미국 또(又)는 연합국의 군인 또는 관리에 대하여 재판관할권을 부여하든가 또는 재조선미국육군이 설립한 군사위원회, 헌병재판소 기타 육군재판소에 부여한 재판관할권을 박탈치 못함." 이라고 하여 당시의 모든 재판은 범형식상 군사재판으로 규정하였다.

40) 이러한 미군정법령의 근거에 의하여 미군정당시 조선경비대와 해안경비대에도 군법회의가 설치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 '군법회의'는 국방경비법과 해안경비법에서 설치하게 하고 있는 '군법회의'와는 성격이 다른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海軍本部, 앞의 책, 6쪽 참조.

VI. '국방경비법'의 내용과 형식의 문제

1. 미군정법령의 형식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가 발행한 군정법령집(軍政法令集)을 보면 미군정이 제정 공포한 법령들은 시기별로 일관된 형식을 갖추어 구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을 공포한 관보 역시 일관된 틀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⁴¹⁾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 ①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 군정청 법령 제1호부터 제99호까지의 관보는 특별한 양식이 없이 법령의 호수와 공포일자, 미군정장관의 기명이 기재되어 있다.
- ② 법령 제100호(1946.7.25.자)부터 법령 제123호까지는 관보의 각 쪽마다 상단에 두 줄의 횡선을 그은 다음 그 사이에 영문으로 "Official Gazette USAMGIK Ordinance No.100 25 July 1946"과 같이 미군정관보라는 표시와 법령호수 및 날짜가 표기되어 있다.
- ③ 법령 제124호(1946.11.13.자)부터 법령 제211호까지는 위에서 본 관보 상단에 기재된 영문표기에 덧붙여 관보 각 쪽마다 하단에 두 줄의 횡선을 그은 다음 그 사이에 "軍政廳官報 法令 第124號 一九四六年 十一月 一三日"과 같이 한자로 미군정관보의 표시 및 법령호수와 날짜가 표기되어 있다.
- ④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 군정청 법률 제1호 내지 제12호까지는 관보 각 쪽마다 상단에 두 줄의 횡선을 긋고 그 사이에 "Official Gazette, USAMGIK Public Act No.1 6 May 1947"이라는 표기 및 하단에 역시 두 줄의 횡선을 긋고 그 사이에 "軍政廳官報 法律 第1號 一九四七年 五月 六日"과 같이 미군정관보라는 표시 및 법률의 호수와 날자가 기재되어 있다.
- ⑤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 군정청 법률 제1호 내지 제43호까지는 법령 끝에 공포일을 기재한 다음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By Direction of the Commanding General 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이라는 표

41) 96 가합 4201 손해배상청구사건, 1997.11.1.자 검증조서. 이 법령집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들이 제정공포된 순서대로 편철되어 있다. ①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 군정청 일반고시 제7호, ②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 군정청 법령 제1호 내지 제140호, ③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141호 내지 제211호까지 (법령 제180호와 제181호 사이에는 1948.5.10.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 포고(Proclamation)가 포함되어 있다.), ④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 군정청 법률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제정한 것) 제1호 내지 제12호, ⑤ 1948.3.8.자 군정청 관보 법령개정표.

시를 한 다음 군정장관의 이름이 기명되어 있다.

- ⑥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 군정청 법률 제44호부터 제134호까지는 "재조선미국육군사령관의 지령에 의하여" 라는 문구가 없고 공포일만 표시한 다음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또는 "조선군정장관대리 미국보병대좌"라는 표시가 있고(제83, 84호, 128내지 130호) 그 다음 조선군정장관 또는 군정장관대리의 이름이 기명되어 있다.
- ⑦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 군정청 법률 제135부터 제174호, 제176호부터 제199호까지는 법령의 끝에 시행기일이 명시되어 있고 그 다음 "우 건의함(recommended) 민정장관 안재홍, 우 인준함(Approved)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아취. 엘. 러취"의 표시가 되어 있다.
- ⑧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 군정청 법률 제175호 및 제200호 내지 제211호까지는 "우 건의함(recommended) 민정장관 안재홍"의 표시는 없이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아취. 엘. 러취"의 표기가 되어 있다.
- ⑨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 군정청 법률 제1호 내지 제12호의 경우에는 법률 공포일 다음에 "南朝鮮過渡立法議院에서 右와 如히 制定함(Duly enacted by the Korean Interim Legislative Assembly). 南朝鮮過渡立法議院議長 金奎植. 右 同意함.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이라는 표시 및 그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2. 국방경비법의 형식과 내용

여러 법령집에 실려 있는 국방경비법 (및 해안경비법)을 보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미군정법령에 시기별로 뚜렷하게 드러나는 제반 특징들이 어느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방경비법과 해안경비법이 정식 공포된 법령이라면, 비록 그 판보 자체는 찾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형식과 내용에는 앞에서 본 시기별 특징과 일치하는 부분이 적어도 한 가지는 반드시 들어 있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위에서 본 특징들은 그냥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법령의 공포일자과 주체, 절차를 밝히는 핵심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없는 도저히 정당한 법령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곧, 국방경비법과 해안경비법이 군대를 창설하려고 준비하던 미군정 초기에 법안의 초안으로 마련되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군대창설이 수포로 돌아가고 조선경비대를 '경찰'조직으로 환원하면서 결국 초안으로 끝나고 말았음을 증명하고 있다 할 것이다.⁴²⁾

42) 국방경비법의 용어에도 이것이 정식법령으로 공포되지 않고 초안으로 마련된 것임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당시 상황에서 사용된 일이 전혀 없거나 다른 미군정법

3. 공포일과 효력발생일의 모순

모든 법령은 국민을 상대로 일정한 형식과 절차에 따라 공포되어야만 법령으로 성립하여 효력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미군정법령의 경우에는 "군정장관의 사전의 인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보에 공포된 후 10일이 지나서 효력을 발생하게 되어 있었다.⁴³⁾ 그런데 국방경비법을 수록하고 있는 모든 법령집은 "1948년 7월 5일 공포, 8월 4일 효력발생"이라고 기재하고 있어 미군정법령의 일반적인 효력발생규정에 어긋나게 되어 있고 다른 미군정법령과 달리 "공포일로부터 효력을 발함"이라거나 혹은 언제부터 효력을 발한다는 명문규정도 포함하지 않고 있다. 물론 모든 미군정법령에 항상 부기되어 있는 군정장관의 서명 혹은 인준표시가 유독 국방경비법과 해안경비법에만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어쨌든 국방경비법에는 효력발생일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고 달리 군정장관의 사전 인가가 있었다는 근거도 없으므로 만일 정당하게 공포되었다면 공포일인 1948년 7월 5일부터 10일이 지난 7월 15일부터 효력을 발생해야 하는 것이지 같은 해 8월 4일부터 효력을 발생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이 또한 국방경비법이 제대로 공포된 법령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VII. 국방경비법에 대한 법무부와 법원의 태도

1. 법무부의 주장: 법률의 '추정'?

국방경비법이 미군정의 법률이라고 완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법무부는 국방경비법의 효

령들과 모순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경비법은 군법회의를 설치하는 근거 조항에서 행정부의 수반을 가리키는 용어로 "정부수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제42조). 그러나 미군정법령은 초기에는 "군정장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후기로 오면 "군정장관"과 "행정수반" 또는 "행정부최고책임자"라는 용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예컨대, 1947년 3월 20일 남조선과도입법의원 법률 제1호로 제정된 "법령 제102호(국립서울대학교 설립)제7조의 개정" 제1조는 국립서울대학교 이사회를 "군정장관(군정이후에는 행정부최고책임자)이 임명한 이사으로써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947년 8월 20일 제정된 남조선과도입법의원 법률 제5호(제13, 22, 61조)와 1948년 3월 17일 공포된 군정법령 제56조는 "행정수반"이라는 말을 쓰고 있으며 1948년 5월 4일 공포된 군정법령 제192호와 1948년 8월 2일 공포된 군정법령 제213호는 "군정장관 또는 그 권한을 계승한 행정수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이처럼 국방경비법이 사용하는 "정부수석"이라는 용어는 당시 미군정법령의 관례와도 맞지 않고 이미 대통령제 헌법구조의 채택이 확정된 1948년 7월 5일의 상황에서 사용할 수도 없는 용어였던 것이다.

43) 법령기타 법규의 공포, 공포형식에 관한 건 2조.

력근거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국방경비법이 공포된 것은 사실인데 그 근거가 되는 관보를 찾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면서, 대한민국의 각종 법률에서 국방경비법을 인용하고 있는 점, 그리고 법원이 아무런 의심 없이 국방경비법을 적용했던 사실⁴⁴⁾에 비추어 국방경비법이 미군정의 법령으로 공포된 사실이 '추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특기할 것은 법무부가 국방경비법의 제정 작업에 참여했다는 사람들의 진술을 제시하고 있는 점이다. 이들의 주장을 인용하여 법무부가 주장하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⁴⁵⁾

"1946.1.15. 국가방위의 임무를 담당할 국방경비대가 창설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가방위 및 경비대대 규율유지의 필요상 1946.6.15. 미군정법령에 의해 조선경비법이 공포되어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선경비법은 미육군전시법을 그대로 번역한 결과 시행과정에 많은 흠결이 발생하여 그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방경비대 초대 법무처장인 김완룡 참위가 국방경비법 제정작업을 시작하였고 2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마침내 국방경비법이 1948.7.5. 제정. 공포되고, 같은 해 8.4.부터 효력을 발생하여 조선경비법을 대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

"...위 조선경비법은 그 구체적인 내용 및 적용례는 알 수 없으나 [군형법과 군형사절차에 관한 입법]으로 1946.1.3. 군무국장 아아고(Argo) 대령의 의뢰에 의하여 미군정청 법률고문으로 있던 손성겸에 의하여 기초되었던 것으로 1946.6. 미군정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위 조선경비법은 6개월간의 짧은 기간에 우리나라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미 육군전시법을 그대로 번역한 결과 그 시행과정에 흠결이 생기자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그 미비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국방경비대 초대 법무처장인 김완룡 참위가 Baross 중령으로부터 미군 육군형법인 'Articles of War' 원전을 인도받아 국방경비법 제정작업을 담당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국방경비법의 제정과정에서 한미간의 문화적 차이로 의견충돌이 있었는데, 일례로 당시 사령관인 Baross 중령은 미 육군형법에 있는 계간죄를 법조항에 넣도록 하였으나 당시 김완룡 참위가 '동방예의지국에서는 계간이란 있을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사령관의 부관인 James H. Hausman과 협조한 후 법초안에서 동 조항을 삭제하였던 것입니다...."

44) 한국전쟁 당시 군법무관으로 복무한 유현석 변호사에 의하면, 당시에도 군법무관들 사이에도 국방경비법은 그 근거가 없는 무효의 법률이라는 말들이 있었다고 한다.

45) 대법원 97 누 7240, 보안관찰처분취소청구 사건(원고 안학섭, 피고 법무부장관)의 법무부장관 답변서. 陸軍本部, 앞의 책 98-99쪽에도 비슷한 내용이 실려 있다.

2. 법무부 주장의 모순

위에서 본 법무부의 주장과 그 주장의 바탕이 된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른 것이다.

가. 조선(국방)경비대 및 해안경비대의 설치에 관한 법령

이미 본 바와 같이 조선경비대 및 해안경비대의 설치에 관한 미군정법령은 법무부가 주장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 미군정은 남한지역에서 독자적인 군대를 창설할 계획을 세우고 1945년 11월 13일 군정법령 제28호를 공포하여 국방사령부를 설치하고 그 아래에 육군과 해군부, 그리고 이들을 관장하는 군무국을 설치하였다. 1946년 3월 29일에는 법령 제64호를 공포하여 국방사령부를 국방부로 개칭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군대를 설치하려던 미군정당국의 시도는 미국 합참본부의 반대와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소련의 항의로 무산되고 1946년 6월 15일 법령 제86호가 공포된다. 법령 제86호는 국방부를 '국내경비부'로 개칭하고 육해군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만든 군무국을 폐지하면서 조선경비대 및 해안경비대를 설치하게 되는데 "1946년 1월 14일부로 국내치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선정부 예비경찰대를 준비할 목적으로..."하는 것이었다(제2조). 국방부와 군무국을 폐지한 이 법령에 의하여 그 당시 시점에서 미군은 남한만을 따로 떼어 분리 독립시킬 의사가 없음을 천명하는 한편 조선(국방)경비대 및 해안경비대는 '군대'가 아니라 '경찰'예비대임을 분명히 하였다. 법령 자체가 "경찰예비대를 설치할 목적"임을 분명히 하고 있고 그 영문명칭도 "Korean Constabulary"였던 것이다. 따라서 1946년 6월 '조선경비법'이라는 것은 제정. 공포된 일이 없고 법 형식상 조선경비대의 성격이 군대로 바뀌지도 않았다.⁴⁶⁾

나. '계간'의 문제

법무부의 주장과는 달리 '국방경비법' 제50조는 범죄가운데 분명히 '계간(鷄姦)'을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무부가 제시하는 이유들은 아마도 미군정당국이 군대 설치를 전제로 하여 그에 적용할 법률의 초안을 준비하는 내부 사무처리과정에서 있었던 논의였을 가능성은 있겠지만, 국방경비법의 실제와는 전혀 동떨어

46) 군정법령 제86호 제4조는 '조선경비청에 관한 규정'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규정'에 지나지 않을 뿐이며, 법률의 효력을 가진 '조선경비법'과 같은 법령이 제정된 일은 없다.

진 것이다. 이처럼 법무부가 국방경비법이 미군정법령으로 제정 공포된 경위로 내세우는 내용 자체가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국방경비법이 공포된 일이 없음을 반증한다고 할 것이다.

다. 관보와 '추정'의 문제

국방경비법을 공포한 미군정의 관보를 찾을 수 없을 뿐이라는 주장도 합리성이 없다. 이 주장은 없어진 미군정관보가 많고 미군정에 관한 기록이 부족하여 미군정청이 공포한 법령의 숫자를 모른다거나 혹은 법령의 숫자는 알더라도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져 있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다거나 하는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보았듯이 미군정이 발행한 관보 가운데에는 비록 누락된 것들이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법률의 효력을 가진 군정법령(Ordinance) 제1호 내지 제219호와 과도입법의원법률(Public Act) 제1호 내지 제12호는 하나도 남김없이 언제 어떤 내용으로 공포되었는지 밝혀주는 관보가 존재하며, 미군정 스스로 발행한 법령집에도 국방경비법과 해안경비법은 수록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미군정의 어떤 기록에도 이들이 공포되었음을 직간접으로 밝혀주는 자료는 없다는 점에서 미군정의 관보 가운데 누락된 것이 있을 수 있고 국방경비법을 공포한 관보가 누락되었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법률에 국방경비법이 인용되어 있고 법원이 국방경비법을 의심 없이 적용해 왔다는 사실 역시 국방경비법의 공포사실을 추정하는 근거는 될 수 없다. 군형법과 군법회의법, 사회안전법과 국가보안법 등 대한민국 국회가 제정한 각종 법률이 국방경비법과 해안경비법을 인용하고 있고, 대한민국 법원이 수많은 사건에서 이들을 적용하여 재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국방경비법과 해안경비법이 "남조선과도입법의원 법률"로 "1948년 7월 5일 공포"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남조선과도입법의원 법률이 결코 아니며 1948년 7월 5일 공포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 그렇다면 국방경비법과 해안경비법이 미군정법령으로 공포되었음을 "추정"하는 전제사실은 이미 무너졌으며 따라서 이들이 언제 어떤 근거에 의하여 공포되었는지를 밝히지 않는 이상 법령의 효력을 인정할 근거는 없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법원 : 억지와 무시

가. 대법원의 판결

법원의 태도 역시 법무부의 태도와 다르지 않다. 이 문제가 제기된 소송에서 법원은 재판부에 따라 문제의 판단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본질적으로는 법무부와 비슷한 논리로 과감하게 국방경비법이 미군정법령으로서 공포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은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 ① "군정법령 제86호는 그 제4항에서 조선경비대의 규율을 위한 법규(Articles for Government of Korean Constabulary), 즉 조선경비법 또는 국방경비법의 제정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⁴⁷⁾
- ② "군정장관은 ... 남조선과도정부 법률...과는 별도로 그 자신의 직권에 의하여 군정청 법령 또는 남조선과도정부 법령(South Korean Interim Government Ordinance)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었고, 또한 이와 같이 제정된 법령들을 군정청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 외에 다른 형태 또는 매체를 이용하여 공포할 수 있었다."⁴⁸⁾
- ③ "국방경비법...은 ... 그 제정 및 공포의 경위에 관하여 관련자료의 미비와 부족으로 불분명한 점이 없지 않으나, 그 효력발생일로 규정된 1948.8.4.부터 실제로 시행되어 온 사실 및 관련 미군정 법령과 정부수립 후의 군형법, 군법회의법의 규정내용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은 당시의 법규에 따라 군정장관이 1948.7.5. 자신의 직원에 의하여 남조선과도정부 법령(South Korean Interim Government Ordinance)의 하나로 제정하여 군정청관보에 게재가 아닌 다른 방법에 의하여 공포한 것으로 보여진다."⁴⁹⁾

47) 대법원 1999.1.29. 선고 98 두 16637 보안관찰처분 취소청구 사건 (원고 김선명, 피고 법무부장관), 제2부 (주심 조무제대법관).

48) 같은 판결.

49) 대법원 1999.1.26. 선고 98 두 16620 판결, 보안관찰처분 취소청구 사건(원고 안학섭, 피고 법무부장관); 1999.2.9. 선고 98 두 17586 판결, 제1부(주심 서성대법관). 앞서 본 98 두 16637 판결에서 대법원 제2부 판결문은 이와 관련하여,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구 국방경비법은 군정장관이 1948.7.5. '남조선과도정부법령'의 일부로 제정하여 군정청 관보게재가 아닌 다른 형태 또는 매체의 방법을 통하여 공포하였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라고 하고 있다.

나. 대법원판결의 모순

대법원판결은 그 희망과 달리 국방경비법과 해안경비법의 존부에 관한 논쟁을 제대로 끝내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군정법령 제86호 제4조를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군정법령 제86호 제4조는 "조선경비청에 관한 규정이茲에 제정되며 및(及)其는 상시 및 도처에서 조선경비대를 관리함"이라고 하고 있다.⁵⁰⁾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조선경비청에 관한 규정"일 뿐이며 법률의 효력을 가진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이것이 경우에 따라 국방경비법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될 수 있다고 보더라도, 문제는 국방경비법이 실제로 제정. 공포되었는가 하는 문제에는 아무런 해답을 내려 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더구나 군정법령 제86호는 "국방부"를 "국내경비부로 개칭"하고 국내경비부의 군무국을 폐지하면서(제1조) 조선경비대는 "국내치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선정부예비경찰대를 준비할 목적"임을 명시하고(제2조) 해안경비대는 "조선연안해상의 근해안 및 도서순찰을 유지하기 위한"(제3조) 것임을 명시하여 군대가 아님을 선언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법령에서 말하는 "조선경비청에 관한 규정"이 이를 군대로 간주하는 군형법과 군사법원법의 근거조항이라고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 보인다.

둘째, 군정장관이 남조선과도정부 법률과는 별도로 "그 자신의 직권에 의하여 군정법령 또는 남조선과도정부 법령(South Korean Interim Government Ordinance)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계속하여 보유"하였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제정된 법령들을 군정청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 외에 다른 형태 또는 매체를 이용하여 공포할 수 있었다"거나 "군정청관보에의 게재가 아닌 다른 방법에 의하여 공포"하였다는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미군정은 포고 제1호와 군정법령 제11호에 의하여 죄형법정주의를 선언하였으며 모든 법령은 관보를 통해서 공포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정장관이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 외에 다른 형태 또는 매체를 이용하여 공포"하였거나 "다른 방법에 의하여 공포"하였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미군정은 어떠한 종류의 법령이든지 모두 관보를 통해서만 공포하였던 것이다.⁵¹⁾

50) 군정법령 제86호 제5조는 "조선해안경비청에 관한 규정이 자에 제정되고 及其는 상시 및 도처에서 조선해안경비대를 관리함."이라고 되어 있다.

51) 위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법무부는 미군정이 관보를 통하지 않고도 법령을 공포하였을지 모른다는 추상적인 주장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이며, 실제로 관보를 통하지 않고 공포한 법령의 사례 등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대법원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러한 허위의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국방경비법의 효력을 인정하

셋째, 특히 주목할 것은 이 판결들이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국방경비법을 남조선과도입법위원의 법률(Public Act)이 아니라 미군정법령(Ordinance)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앞에서 거듭 본 것처럼 국방경비법은 "남조선과도입법위원 법률, 1948년 7월 5일 공포, 법령호수 미상"이라는 전제 아래 법률의 효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어 왔고 대한민국의 국회가 법률에 인용하거나 법원이 재판에 적용해 왔다. 그런데 대법원이 국방경비법에 관하여 남조선과도입법위원이 제정한 법률(Public Act)이 아니라 "미군정법령(Ordinance)"이라고 한 것을 보면, 대법원은 지금까지 전해져 온 국방경비법의 효력근거가 잘못된 것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방경비법이 "미군정법령(Ordinance)"이라고 판단하려면 그 근거를 제시했어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지금까지 "남조선과도입법위원 법률"이라고 잘못 알려진 경위는 무엇인지, 그리고 남조선과도입법위원 법률이 아니라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밝혔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공포한 관보는 왜 존재하지 않는지, 원래는 있었는데 후에 없어진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인지, 나중에 없어졌다면 언제 어떤 경위로 관보가 없어졌으며 국방경비법을 공포한 관보가 그중에 포함된다 고 보는 근거는 무엇인지, 처음부터 관보가 없었다면, 관보에 의하여만 법령을 공포해 온 미군정의 원칙과 관행에 위배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관하여 사실적 근거와 논리적 추론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방경비법'을 공포한 "다른 형태나 매체" 혹은 "다른 방법"이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밝혀야 한다.⁵²⁾ 그러나 대법원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조건 "미군정법령(Ordinance)"으로 추정된다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아무런 설명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⁵³⁾

넷째, 국방경비법이 1948년 7월 5일 공포된 것이 사실이라고 대법원이 주장하려면, 완벽할 정도로 남아 있는 이 시기의 미군정활동에 관한 제반 기록에서 국방경비법이 공포된 사실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앞에서 보았듯이 미군정

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 52) 국방경비법은 대한민국정부 수립후에 대한민국의 법원에 의하여 적용되었다. 그런데 제헌헌법 부칙 제100조는 "현행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군정법령이라고 하더라도 제헌헌법에 저촉되면 효력을 가질 수 없는 데, 제헌헌법 제9조 제1항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었으므로, 만일 미군정이 관보에 의하지 않은 "다른 방법" 또는 "다른 형태나 매체"로 이를 공포하였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밝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될 수 있는 것인지를 검증해야 하는 것이다.
- 53) 김선명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재판부는 국제민사사법공조법에 따라 미국 국방부와 국립문서보관소에 사실조회를 하자는 원고들의 증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것이 공포되었음을 추론할 하등의 증거도 없이, 오히려 그 반증만이 제출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법령으로 공포되었다고 "추정"하면서 정작 가장 확실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을 미국의 자료에 대한 증거조사는 거부하는 것은 법원이 이 문제의 진실을 은폐하고자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기간을 통털어 '국방경비법', '해안경비법'과 같은 단어조차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뜬금없이 군정장관이 "다른 방법" 혹은 "다른 형태나 매체"로 이를 공포하였다고 단정을 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결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사실과 다른 것은 물론 논리적인 정합성도 갖추지 못한 채 국방경비법이 "공포된 것이 사실일 것"이라고 단정해 버리는 대법원의 "판결"은 이 문제에 관한 논쟁을 덮어 버리려는 것일 뿐, 진실을 확인하여 바로잡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⁵⁴⁾

VIII.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국방경비법'과 '해안경비법'은 미군정에 의하여 공포된 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혹은 이들이 미군정에 의하여 공포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

54) 앞서 본 대법원 98 두 16637호 판결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1998.9.10 선고 97 구 53542판결은 앞에서 본 대법원판결과 같은 이유 외에 매우 특이한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이 판결의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물론 이와 같이 국가의 기간조직이 미처 형성되기 전의 비상시기에, 오늘날의 통상적인 입법과정으로 볼 수 있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비상한 절차와 수단으로 법률이 제정되어 통용되었을 경우, 과연 그에 대하여 법률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철학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적어도 그것이 오랜 동안 우리나라 일반국민에 의해 유효한 법률로 승인되어 그 규범력을 인정받아 왔다면, 법적 안정성이라는 법의 이념의 요청에 비추어 볼 때, 이제 와서 수십년을 거슬러 올라가, 그 당시와 같은 혼란시기에 오늘날과 같은 완벽한 입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흠을 들어 그 법률의 규범력을 전면적으로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 따라서 국방경비법은 비록 혼란기에 오늘날과 같은 완벽한 입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 후 대한민국의 법질서에 적법하게 조입(租入)되어 일반국민에 의해 그 규범력을 승인받은 유효한 법률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

그러나 이 판결이유는 문제의 본질을 회피한 이상한 논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국방경비법의 준부와 효력에 관한 논쟁을 미군정법령 전체에 대한 법철학적 논쟁으로 바뀌치고 있다. 국방경비법의 문제는 당시 비상시기에 비상한 절차와 수단으로 제정되어 통용된 미군정법령 일반에 대한 것이 아니고, 관보에 의하여만 법령을 제정공포하였고, 또한 그 효력근거로 제시되어 온 내용이 모두 사실과 다르다는 점, 그리고 군정법령과 남조선 과도정부 법률로 국방경비법이 공포된 일이 없다는 미군정 당시의 법령체계에 따라 판단할 때 이를 법률로 볼 수 없다는 문제제기인 것이다. 둘째, 공포된 일이 없는 형벌법규가 대한민국의 법질서에 "적법하게 조입(租入)"되었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도대체 "조입"이란 용어가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이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공포된 일이 없는 부존재의 법률이라도 국가기관이 착오로 적용하면 정당하게 공포된 법률로 변한다는 것인지, 공포되지 않은 법률을 법률인 것처럼 적용해 온 것과 '법적 안정성'이 무슨 관계에 있는지, 국가권력이 그대로 적용해 왔으니 국민은 그 적용대상이 되어 피해를 본 것일 뿐인데, "일반국민에 의해 그 규범력을 승인"받는다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다. 이는 민법과 상법에서 인정하는 관습법 또는 사실인 관습의 개념과도 다른 것이며, 특히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형사법의 영역에서 어떻게 성립할 수 있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 없다.

한 어떠한 사실적, 논리적 근거도 발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미군정 초기, 남한에 독자적인 군대를 조직하려고 법령 제28호를 공포한 이후에 미군정이 군대조직을 전제로 하여 미국의 군형법을 번역하여 초안을 작성하였던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곧이어 미군정 자체의 사정과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소련의 반발 등으로 인하여 그 작업은 포기되고 독자 군대창설을 전제로 한 법령 제28호가 폐기됨으로써 조선경비대와 해안경비대는 경찰예비대로 법적 규정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이 군대임을 전제로 한 국방경비법과 해안경비법을 공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미군정이 발간한 관보나 법령집에 국방경비법이 실려 있지 않은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경비법을 공포한 미군정관보는 있을 수가 없으며, 실제로 완벽하게 보관되어 있는, 군정법령을 공포한 미군정관보들은 물론, 미군정의 공식활동 기록과 그 당시의 모든 관련기록에 국방경비법과 해안경비법의 근거는 찾을 수 없는 것이다. 요컨대, 국방경비법과 해안경비법을 공포한 미군정의 관보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국방경비법을 공포한 미군정의 관보는커녕 그 사실을 암시하는 자료조차도 하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국방경비법은 어떤 경위로 법령집에 수록되고 미군정 당시 남조선과도입법위원이 제정한 법률로 적용되어 올 수 있었을까. 이 부분에 관하여는 아직까지는 자료를 찾을 길이 없다. 다만 추측하건대,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께 미군정이 철수함으로써 미군정에 의하여 설치된 군사재판소는 더 이상 존속할 근거를 상실한 반면, 정식으로 국군이 창설되어 군의 규율을 유지하고 통제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리고 제주도 4.3 사건 등 내전을 방불케 하는 격렬한 좌익의 투쟁에 군을 동원하여 진압하는 과정에서 군형법과 군법회의법의 필요는 더욱 강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방경비법은 제32조와 제33조에서 민간인에 대한 재판권을 군법회의에 부여하고 있었으며 더구나 단심으로 재판을 할 수 있게 하였으므로⁵⁵⁾ 당시 진압과정에서 체포한 '좌익사범'을 처단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과정에서 처음에는 군법회의를 유지하는 근거로, 나중에는 좌익을 진압하는 방편으로 군에서, 이미 초안을 만들어 놓은 국방경비법과 해안경비법을 적용하기 시작하여 한국전쟁을 거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법률로 받아들여진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볼뿐이다.

55) 국방경비법 제32조는 "적에 대한 구원, 통신연락 또는 방조"를 처벌하는 조항이고 제33조는 간첩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여하한 자든지"라고 하여 군법피적용자가 아니어도 처벌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는 상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결국 단심제로 운영되었다. 이 조항에 의하여 특히 한국전쟁기간 동안 북한군에 협조하였다는 혐의로 군에 체포된 민간인들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재판하여 처형하는데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한 시대에 국가의 기본법 역할을 했던 '법률'이 사실은 공포된 일도 없는, 따라서 무효의 법률이라는 강력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그 의문에 대하여 아무런 진실규명을 하지 않은 채 지금도 그것이 유효한 법률임을 전제로 하여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결코 웃지 못할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므로 과거의 피해자들 문제는 접어 두더라도 바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국방경비법'의 진상은 밝히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국가는 마땅히 모든 자료와 정보를 조사하여 공개하고 진상을 밝힐 의무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타난 태도로 미루어 볼 때, 정부와 법원은 아직도 역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진실을 밝힐 만한 의지도 능력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이 문제를 국가차원에서 밝히고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는 국회의 국정조사권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학계의 관심과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지리산과 민중의 역사

이 영 일(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2국장)¹⁾

I. 머리말

이 글은 지리산과 민중의 한 맺힌 역사를 개론적으로 서술해 보면서 1948년에서 1953년까지의 한국전쟁 전후에 지리산을 주변으로 하는 일대에 남북 학살 양 주체에 의해 저질러진 민간인 학살에 대한 양태를 중심으로 한정된 자료와 문헌을 통해 다양한 기준에 의해 분류하고 분석을 시도해 보기로 한다.

첫째는 연대기적 분석이다. 이는 1948년 2월 5·10 단독선거를 분쇄하여 민족분단을 막고 통일국가를 수립하기 위하여 무력투쟁을 공식적으로 선포한 2·7 구국투쟁이라는 ‘작은 전쟁’에서부터 6·25 한국전쟁이 끝나는 1953년 정전까지의 전 기간에 걸쳐 특정 계기를 기준으로 나누어 각 기간의 양민학살 양태를 분석한다.²⁾ 둘째는 학살주체를 기준으로 한 분석이다. 학살주체는 미군, 남한 국방군이나 그 산하 부대인 특무대 등 특별기관, 경찰, 서북청년단과 같은 비정규무장대, 북한 인민군을 주축으로 한 북한점령기관 일반, 빨치산, 지방좌익으로 대별 될 수 있다. 셋째는 피학살자를 기준으로 한 분석이다. 피학살자는 평택 이남의 보도연맹원, 형무소 수감자, 제2전선 지역주민, 피난민, 부역 혐의자, 공비 및 통비 혐의자, 국민 방위군이나 불심검문 또는 가택 수색에 의해 뚜렷한 혐의가 없이도 학살의 대상이 되는 불특정 다수 민간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넷째는 학살행위에 따른 분류이다. 이에는 총살, 생매장, 초토화 작전에 의한 불태우기, 수장, 일본도에 의한 참살, 굶어 죽이기, 때려죽이기, 폭격이나 비행기에서의 기총사수 등에 따른 분류를 하며 덧붙여 학살의 야만

1) 글쓴이 이영일은 (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 소장을 거쳐 현재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2국장(<http://www.jinsil.go.kr>)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전국의 민간인학살문제를 지원하고 있는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전국사회단체협의회(www.genocide.or.kr)’에서는 집행위원장으로, 국가폭력을 주 의제로 설정하고 있는 ‘동아시아평화인권국제학술회의 한국위원회’에서는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2) 한국전쟁이라는 큰 전쟁을 5단계의 소 단계로 분류하여 분석적으로 접근한 글은 강정구, “미국과 한국전쟁” 『역사비평』 1994 여름호 참조. 이를 일부 수정하여 강정구, 『분단과 전쟁의 한국현대사』 역사비평사, 1996에 같은 제목으로 실렸다.

적 행위 유형에 따른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전쟁 전후에 특히 이승만 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지리산 일대의 민간인학살이 얼마나 야만적이고 더러운 전쟁이었는지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II. 지리산과 민중의 역사

산은 저기에 저렇게 서 있으되 보는 사람, 가는 사람, 이용하는 사람에 따라 누구에게나 똑같이 다가오지는 않는다. 산은 인간의 삶이 자연과 원형으로 동화되던 원시사회를 벗어나면서부터 지배계급과 피지배 민중들에게 달리 다가왔다. 지배계급은 모든 생산 수단을 항상 독점하려 하듯이 산도 독점할 대상이었다. 자신들만이 차지할 명당자리, 목재의 산출처, 남의 생산을 바탕으로 부와 시간을 독차지하고 풍류를 즐기는 놀이터이자 사냥터였다. 그에 비해 민중에게는 지배계급의 수탈과 억압을 피하고 삶의 터전을 이루는 은신처이며 안식처이자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모색하던 ‘반역의 거점’이었다. 민중적 이상향의 세계이기도 했다.

아직 사회적 생산력이 낮은 원시경제 상태에서 수렵과 채취로 삶을 꾸려나갈 때, 산은 바로 창조의 어머니였고, 때로는 범접할 수 없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그 외경스러움이 원시신앙의 대상이었다. 천왕봉 성모신앙도 그렇게 생겨났을 것이다. 남원군 산내면에서 실상사를 지나 들어가면 함양군 마천면에 백무동이 있다. 백무동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전설에 의하면 천왕봉에 성모가 살고 있었는데 남자와 교회하여 딸을 100명 낳았다고 한다. 전설이라 여덟 명이라고도 하고 50명이라고도 하고 설이 분분하다. 이들이 처음 백무동 골짜기에서 살다가 전국으로 나가 팔도의 무당이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천왕봉에 살던 성모가 우리나라 무당의 시조할머니가 되었고, 백무동이라는 이름이 생겼다는 것이다. 그 성모를 모시고 성모사가 고려시대 조선시대 후기까지 보존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원시신앙도 계급사회가 발전하면서 지배계급에 대한 신화적 신앙으로 바뀌어 간다. 지리산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삼국사기』에는 신라시조 박혁거세의 어머니 성모를 지리산의 산신으로 받들고 나라의 수호신으로 모셔 봄가을에 제사를 지냈다고 하고, 고려에서도 고려 태조의 왕비 위숙왕후를 산신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기록들이 엮히기는 하지만 원시신앙의 유습을 계급국가를 건설한 최고 지배자의 어머니로 대치시켜 신앙의 형태를 빈 새로운 지배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신앙과 더불어 지리산 어디엔가 ‘이상향’이 있다는 설화가 이어져 내려왔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상향을 찾으러 지리산을 찾았다. 이 이상향 설화는 한편으로는 도교적인

현실도피 사상을 품고 있으면서, 왕 중심의 계급사회에 대항하여 원시농경사회를 동경하는 민중의 새로운 사회에 대한 갈망을 담고 있다. 그렇지만 민중의 ‘새로운 사회’가 산 속에서 이루어질 수는 없는 일이다. 단재 신채호는 그래서 1920년대 「낭객의 신년 만필」에서 “온 조선 사람들이 다 죽든 말든 나 한 몸, 한 가족이나 잘 살면 그만”이라는 피난심리를 조장하는 것들을 호되게 비판하며, “난을 토평할 인물은 많이 나지 않고 난을 피하려는 인사만 있으면 그 난을 구하지 못할 것이나, 우리가 모두 피난심리의 큰 적을 토벌하여야 할 것이다”고 소리쳤던 것이다.

민중에게 지리산은 먼 이상향으로만 인식되었던 것은 아니다. 지리산은 세상을 피해 들어온 화전민, 세상에 맞서 약탈을 일삼는 산적 때, 봉건체제와 일제의 침략에 저항한 변혁세력과 민족투쟁세력들, 민족해방을 내걸고 싸웠던 빨치산들의 생활터전이었고 안식처였으며 거점이었다.

전근대 농업사회에서 가뭄이 들고 재해가 생겨도 세금이나 지대 수탈이 계속되면 민중들은 자기가 살던 터를 버리고 도망하여 떠돌거나 도적이 된다. 소극적인 저항이었다. 산으로 올라가 화전민이 되기도 한다. 산 속까지 관의 수탈이 미치지 않는 것만도 삶의 보탬이 되기 때문이다. 화전으로 곡식을 얻고 산나물 산 과일, 골짜기의 물고기와 짐승 사냥으로 생활을 해 갈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긴 겨울을 나기가 쉽지는 않았다. 그럴 때 마을로 내려가 부잣집이나 관아를 터는 화적이 된다. 명화적이라고도 부른다. 화전민이 도적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횃불을 밝혀가며 도적질을 한다고 부르기도 한 이름이다.

산은 또 나무꾼, 사냥꾼, 약초꾼의 삶의 터전이기도 했다. 그리고 소극적인 저항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거사’를 모의하는 거점이기도 했고, 적극적인 항쟁을 벌이다 자기가 살던 촌락사회 보금자리에서 살 수 없어 쫓겨난 민중들을 받아 품어 새로운 삶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는 민중의 어머니 같은 존재였다.

지리산에 얹힌 민중의 역사를 간단히 한번 훑어보기로 한다.

『삼국유사』에 보면 성품이 활달하고 재물에 얽매이지 않는 영재 스님이 있었다. 만년에 장차 은거하려고 남악(지리산) 대현령에 이르렀을 때 도둑 60여명을 만났다. 도둑들이 그를 해하려 하였으나 영재는 칼날 앞에서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이 향가를 지어 불렀다. 도둑들이 감동하여 도리어 비단을 내주었으나 영재가 웃으며 “궁벽한 산중으로 들어가 일생을 살려고 하는데 재물이 무슨 소용이냐”고 하였다. 이에 도둑들은 칼과 창을 버리고 머리를 깎아 영재의 제자가 되어 함께 지리산에 숨어 다시는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김유신, 고려의 왕건이 지리산 산적을 토벌하거나, 잡았다는 기록도 있다. 이미 신라시

대 때도 지리산은 도둑들의 근거지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난을 모의하고 일으켰던 정여립과 이몽학, 이인좌가 지리산 세력과 손을 잡고 거사를 도모하려 했다.

1862년 2월 4일 단성에서 봉화를 지핀 농민항쟁은 2월 6일 진주로 번졌다. 수곡 장날을 이용하여 읍회를 개최한 농민들이 먼저 덕산장시를 치고 본격적으로 항쟁을 시작하였다. 남명 조식의 덕천서원과 산천재가 자리 잡고 있는 바로 그곳이다. 지리산과 가까운 자리이다.

1870년 이필제가 역시 덕산장터와 대원암을 근거지로 삼아 변란을 도모하였다. 밀고자의 고변으로 계획은 무산되었지만, 이필제는 네 차례나 농민항쟁과 변란을 일으켰거나 일으키려고 했던, 요즘 식으로 말하면 직업 혁명가였다.

다시 1894년 동학농민전쟁에서 지리산은 농민군 2대 장군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김개남과 관계를 맺게 된다. 제1차 농민전쟁과 ‘전주화약’을 맺고 집강소 체제에 들어갔을 때 김개남은 남원을 근거로 하여 지리산 산적과 화적 그리고 창우 재인을 묶어 용맹한 ‘천안부대’를 만들었다. 흩어져 있던 지리산 주변의 소외된 민중들이 새 세상 건설을 위한 ‘농민전쟁’ 과정에서 하나로 묶여지게 된 것이다. 지금부터 100여년전 반봉건 반침략 투쟁으로 일어났던 농민전쟁은 그 자체로서는 시대의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였지만 이후 우리 근현대 변혁운동에서 커다란 정신적 지주가 된 역사의 사건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지리산은 또한 외적이 침범했을 때 나라를 지키려던 이들이 치열하게 싸웠던 터전이기도 하다. 임진왜란 때가 그렇고, 1907년부터 1910년까지 의병전쟁 때도 그랬다. 대표적인 사람이 을사조약이후 지리산을 근거로 싸웠던 의병장 고광순이다. 그의 비가 지금 연곡사 뒤쪽 수풀 속 저 만치에 세워져 있다.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지배체제가 말기로 접어들면서 ‘민족말살정책’과 ‘병참기지화정책’을 쓰며 민족의 존재를 말살시키고 이 땅의 젊은이들을 강제노동 수용소로, 전쟁터로, 정신대로 몰아넣었다. 그 때도 지리산은 뜻있는 젊은이들을 품어 주어 식민지 민족해방투쟁을 준비하게 하였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은 되었지만 그 해방은 우리의 힘으로 식민지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며 이룬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다시 해결하여야 할 커다란 과제를 안게 된 불완전한 것이었다. 식민지 질서를 청산하고 친일파를 처단하는 일, 토지를 개혁하고 우리의 피땀으로 이룬 일본인들의 재산을 공정하게 처리하여 민족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마련하는 일, 민족해방운동에 앞장섰던 민족지도자들과 민중의 대표들이 자주적인 민주정부, 민족국가를 수립하는 일 등을 수행하여야 했다. 민족해방운동에 앞장섰던 지도자들과 민중은 이

과제를 해결하려고 치열하게 노력하였다. 그러나 38선을 중심으로 남북에는 각각 미소 군정이 수립되었고, 청산되었어야 할 친일 민족반역세력은 미군정의 비호아래 일제시대 그들이 차지했던 지위와 경제력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다. 그들은 남한에서 만이라도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 확대하려고 단독선거 단독정부 분단정권을 획책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고 자주적인 민족국가를 수립하고자 일어났던 것이 1948년 제주 4.3항쟁이었다. 그리고 그해 10월에 여수 주둔 국방경비대 14연대는 제주 4.3항쟁 진압을 거부하고 여순봉기를 일으켰다. 14연대 ‘반란군’은 김지회, 홍순석 중위의 지휘로 광양, 벌교, 구례, 곡성을 점령했지만 토벌군의 반격을 받아 지리산으로 들어가 유격전을 펼치기 시작하였다. 이들을 중심으로 1946년 ‘대구 10월 항쟁’ 이후 경찰의 탄압을 피해 입산한 사람들, 단선반대투쟁을 수행하면서 조직된 야산대들이 지리산을 중심으로 빨치산 투쟁을 벌였다. 그로부터 지난한 투쟁은 피와 좌절, 염원과 전망이 섞이며 계속되었고, 당국은 1955년 5월 23일 지리산에서 빨치산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발표를 하였다.

아주 간략하게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민중의 역사를 훑어보았다. 이렇게 보면 지리산은 그냥 산이 아니라 억압받고 착취당하던 이 땅의 민중이 좀 더 나은 삶의 조건을 만들고 나아가 조국과 민중의 자유롭고 해방된 세상을 위해 젊음을 바친 죽음의 무덤이라고도 할 수 있다.

힘들게 지리산 자락과 계곡 능선을 밟고 오르며, 지리산 갈피갈피에서 흘러 내려 강을 이루고 주변에 마을을 이루면서 살아온 이 땅 민중의 삶과 치열한 민중의 역사와 함께 지리산이 주는 자연의 아름다움, 전망이 확 트일 때의 시원함 또한 놓치지 말고 생생하게 보고 느껴야 할 소중한 것들이다. 민중적 미의식 또한 사람답게 사는 삶의 중요한 가치이며,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필요한 커다란 힘이다. 나아가 사람이 자연과 동화되어 어떻게 가장 자연스럽고 인간다운 삶을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또한 사회적 문제와 나눌 수 없는 것이다.

III. 지리산의 현대사

1. 지리산과 빨치산

해방 후 빨치산의 무장투쟁을 바라보던 시각은 여러 갈래로 나뉘고 있다. 극좌 모험적 투쟁이라는 주장에서부터 북과 남, 빨치산과 토벌군 모두 잘못했다는 허무주의적 경향에 이르기까지 평가가 다양하다.

그러나 빨치산 무장투쟁을 바라보는 관점은 왜 빨치산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싸웠고 또 투쟁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해방 후 빨치산 무장투쟁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깨달을 것인가 하는 현재적 관점도 바로 여기서 출발하여야 한다. 무장투쟁은 무엇보다도 해방 후 지배세력과 민중 사이에 벌어진 기나긴 대결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무장투쟁은 해방 후 계급적, 민족적 모순의 해결을 둘러싸고 외세, 지배세력과 민중과의 대립이 최고 수준에서 가장 적대적 형태로 폭발된 형태이다. 따라서 무장투쟁에서 나타난 엄청난 피해와 희생만을 중시하여 문제의 본질을 도덕적 윤리적 차원의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측면에 한정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무장투쟁은 민중들이 거대한 외세와 지배세력의 물리력에 정면으로 대결하면서 새로운 국가건설과 조국의 통일을 쟁취하려고 한 투쟁이었다. 무장투쟁은 외세와 지배세력에 의해 민족독립과 민중권력의 건설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기에는 어려운 조건에서 나온 최후의 선택이었다. 무장투쟁은 이런 점에서 외세와 지배세력을 폭력적으로 타도하고 새로운 국가건설과 민족독립을 바랬던 최고의 투쟁형태였다. 우리 현대사에서 무장투쟁이 차지하는 위치와 또 그것이 제시하는 현재적 의미도 바로 여기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2. 토벌과 집단학살

민간인에 대한 집단학살은 해방 전후의 격동기 속에 해방 후 계급적, 민족적 모순의 해결을 둘러싸고 외세, 지배세력과 민중과의 대립이 최고 수준에서 가장 적대적 형태로 폭발된 형태의 빨치산의 무장투쟁에 대한 남한 정부의 토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러한 토벌은 결국에 있어 한국전쟁으로까지 이어졌으며, 민간인에 대한 집단학살로 이어져 왔던 것이다. 이를 연대기별, 학살주체별, 피학살자별, 학살행위를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민간인학살의 연대기적 양상이다.

이는 1) 한국전쟁의 첫 단계인 작은 전쟁 기간 주로 제주4·3항쟁이나 여순항쟁과 같은 인민항쟁, 유격대 투쟁, 38°선상의 소규모 국지전인 남북충돌로 특징화 할 수 있는데 이 기간에 10만 명에 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이 기간의 민간인학살은 주로 인민항쟁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또 49년부터 본격화된 유격대 소탕과정에서 구사된 ‘건벽청야’ 작전 등으로 지리산과 같은 산간지역 주민들이 학살을 당하였다.

또한 2) 한국전쟁 초기의 민간인 학살의 양상은 국민보도연맹원의 학살이나 형무소의 수감자 집단학살, 미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지방좌익과 퇴각하는 인민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남한 군·경의 무차별 학살의 양상이 전개되었다.

3) 한국전쟁 후기의 민간인학살의 양상은 제2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후방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졌는데, 남한의 경우 빨치산 활동이 왕성했던 지리산 등 산간지역의 토벌작전 과정과 중국군의 참전을 계기로 급조된 국민방위군들이 기아와 질병으로 5만 여명이 죽임을 당한 사건이 후반기의 대표적인 학살이다.

둘째는 학살주체별로 본 민간인학살이다.

학살주체는 남한측에서는 미군, 국방군, 경찰, 서북청년단 등으로 대별될 수 있고, 북한측에서는 인민군을 주축으로 한 북한점령기관 일반, 빨치산, 지방좌익으로 대별될 수 있다.

셋째는 피학살자별로 본 민간인학살이다.

피학살자는 남한의 경우 평택 이남의 국민보도연맹원, 형무소 수감자, 제2전선 지역주민, 피난민, 부역혐의자, 공비 및 통비 혐의자, 국민방위군이나 불심검문 또는 가택수색에 의해 뚜렷한 혐의도 없이 학살의 대상이 되는 불특정 다수 민간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넷째는 학살행위 유형별로 본 민간인학살과 야만성이다.

학살행위의 유형에는 총살, 생매장, 초토화작전, 수장, 일본도에 의한 참살, 죽창에 의한 척살, 굶어 죽이기, 때려죽이기, 폭격이나 비행기에서의 기총사수 등이 있다.

위의 민간인학살의 형태를 지리산 일대에 국한하여 대입하여 볼 때에 연대기별 양상은 한국전쟁 전의 작은 전쟁기와 한국전쟁 전기와 후기 모두를 관통하고 있으며, 학살주체별 유형은 주로 국방군에 의한 것이었으며 일부 인민군과 지방좌익에 의한 것도 있었다. 또한 피학살자별로 본 유형은 부역혐의, 공비 및 통비 혐의 등 뚜렷한 혐의도 없이 학살의 대상이 되었으며 학살의 행위에는 지금까지의 모든 죽음의 형태를 다 동원한 것 같아 야만성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이와 같은 지리산 일대의 민간인 학살은 그 근원을 빨치산의 원조 격인 여순항쟁의 무장투쟁에서부터 이야기되어야 하는바 지금까지 나타난 그 피해의 규모를 보면 다음과 같다. 여순항쟁의 지역 일대 10,000여명·남원 지역 159명·임실 지역 1,240명·순창지역 7,028명·산청, 함양 지역 1,099명·거창 지역 719명·시천, 삼장지역 1,000여명으로 총 21,245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를 통해 볼 때에 민간인학살의 문제는 현재 한반도 남한의 현 정치사에 있어서 가장 첨예한 문제이며 거의 유일하게 영호남을 가리지 않는 전국적인 현상이었다.

또한 학살의 주체는 국군과 경찰에 의해 20,245명이었으며, 인민군과 지방좌익, 빨치산에 의해 1,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비율로 보면 95%의 절대 다수가 국군과 경찰이라는 소위 아군에 의해 학살 만행이 저질러졌던 것이다.

〈지리산 일대의 집단학살〉

사건 발생지역	피학살지	피학살자 수		가해자
여순사건 지역	여수	5,000	10,000 (지금까지의 실태조사를 통한 추정 포함)	국군, 경찰, 반군, 지방좌익
	순천	2,200		
	보성	300		
	고흥	300		
	광양	1,300		
	구례	800		
	곡성	100		
남원 지역	산내면, 구천면, 고기리	69	159	국군
	대강면	90		
임실 지역	덕치면, 옥정면, 청웅면	1,240	1,240	국군
	임실군청, 등기소	295		인민군
순창 지역	구림면 일대	1,028	7,028	국군, 경찰, 빨치 산
	쌍치면	6,000		
산청, 함양 지역	산청 금서	506	1,099	국군
	함양 유림	593		
거창 지역	신원면 일대	719	719	국군
시천, 삼장 지역		1,000	1,000(추정)	국군
계		21,245		국군 등 : 20,245 인민군 등 : 1,000

이러한 한국전쟁기에 특히 남한 땅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의 특징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추려진다.

- ① 피학살 인원이 남한 총인구의 20분의 1에 상당할 정도로 큰 규모였다.
- ② 불가항력이거나 우발적인 학살도 부분적으로는 있었지만, 명령 계통이 분명히 있는 의도적 학살, 조직적 학살, 준비된 학살이 큰 비중을 점했다. 이 점에서 남한에서의 학살은 전시를 틈타 벌어진 ‘국가 후원적 대량 살해’ 범죄요 국가 테러리즘 그 자체인 측면이 컸다.
- ③ 동족에 의해서든 미군에 의해서든 무고한 죽음, 죄 없는 죽음이 엄청나게 많았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전쟁기의 민간인 학살은 거의가 무고한 것이라 할 만했다.
- ④ 피학살자에게 ‘죄’가 있는 경우라면 남·북 정권 어느 일방에 대한 정치적 반대자였거나 반대의 혐의 또는 개연성이 있다는 것뿐이었고, 그것은 결코 ‘죽을 죄’는 아니었다. 따라서 그런 경우의 처형·‘숙청’·살해는 단연코 불법적 조치요 억울한 죽음인데, 그런 유의 학살이 부지기수로 많았다.

- ⑤ 좌·우익 쌍방에 의한 동족학살의 본질은 ‘이데올로기적 학살’ 또는 ‘정치적 학살’(politicide)이었고, 미군이 저지른 학살 행위들은 부분적으로 정치적 학살의 외양을 띠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종족 학살’(좁은 의미의 genocide)이었다. 따라서 미군 주체의 학살은 ‘이족 학살’로 명명될 수 있다.
- ⑥ 좌·우익간 보복의 악순환에 의한 연쇄 학살의 양상도 많이 나타났다.
- ⑦ 어린이·노인·부녀자 등 방어 능력도 어떤 혐의의 여지도 거의 없는 약소자들에게까지 무차별적 학살이 자행된 경우가 많았다.
- ⑧ 학살 수법과 주검처리 방식이 매우 잔인하고 원시적이었다.
- ⑨ 어느 쪽이든 학살자(집단)들은 별 죄의식이 없이 자기 정당화와 합리화를 꾀했다.

3. 국가폭력과 제노사이드(Genocide)

왜 ‘양민’(良民)이 아니고 ‘민간인’(民間人)인가?

평화와 화해의 시대에 민간인학살 문제를 거론할 때 우선 지난 이데올로기의 시대에 사용되었던 ‘양민’의 개념을 재고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한국전쟁 당시에 양민증이라는 것이 존재하였다. 양민증은 형편없이 작은 종이 조각에 불과했지만 그것이 없으면 절대 외출을 할 수 없었다. 이 경우 좌익과 관련이 있는 가족, 의심을 받는 가족들 혹은 ‘통비분자’로 분류된 사람들은 양민증을 받지 못했다. 그 뿐 아니라 양민의 자격을 얻지 못한 사람들, 특히 좌익 관련자와 그 가족들은 이 엄혹한 이데올로기의 굴레 아래에서 사실상 국민, 혹은 민족 구성원으로 대접받지 못했으며, 사실상 죽은 목숨처럼 생명을 부지해 왔다.

한국에서 빨갱이로 지목되는 것은 전근대 시절의 천형과도 같다. 빨갱이에게는 그 어떠한 처벌이나 폭력을 가해도 용인이 되었고, 부녀자와 자녀들에 대한 유린도 용납이 되었으며, 그들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해도 반발이 없었다. 그리하여 전쟁 후 지난 50여 년 동안 피학살자들의 가족들과 기적적인 생존자들은 사실상 죽은 목숨이었다. 재산을 빼앗기고 망가진 몸을 갖고서 이러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이었다. 동네가 쑥밭이 된 이후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제주4.3 항쟁이나 여순항쟁의 피해자들처럼 이 상처를 잊기 위해 일본으로 밀항을 하기도 하고, 또 자녀들이 피해를 입을까 봐 철저히 침묵하면서 살아왔다. 그리하여 노근리 미군 양민학살 사건이 전국에 메아리치고, 특별법이 제정되고 각 지역에서 산발적으로나마 진상규명 활동이 본격화되는 이 시점에도 극소수의 유족을 제외하고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선뜻 나서는 사람이 거의 없다.

목격자나 기적적인 생존자들은 이제 연로하여 거의 사망하였으며, 너무 연로하여 과거의 기억도 가물가물한 상태이다.

양민이라는 것은 사상적인 순수성, 즉 세계를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구분한 다음 좌익을 악으로 보고 그러한 의심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 된다. 근대 문명사회에서 이렇게 획일적인 잣대로 사람의 양심과 생각을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양민, 불순분자의 구별은 적절치 않다. 그것은 어떤 가치를 절대 선으로 놓고 그것을 여기는 사람들을 불순한 존재로 규정하는 극도의 반공주의가 통용되는 한반도에서나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다.

따라서 국제적인 규범에서 사용되는 민간인(civilians)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유격전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민간인과 무장세력과의 구별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민간인중 아동이나 여성, 노약자 모두를 무장된 적으로 취급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양민이라는 개념을 계속 사용한다면, 누가 양민이고 누가 양민이 아닌가라는 소모적인 논쟁에 또 다시 휘말려 들어가게 된다. 동시에 그러한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양민에 대한 학살은 부당한 것이고, 양민이 아닌 사람에 대한 학살은 정당하다는 결론으로 유도될 수도 있으며, 이것은 공권력이 저지른 불법적인 인권유린을 그대로 용인하는 결과가 된다.

이제 우리는 한반도를 드리운 이데올로기의 굴레를 용인하는 양민이라는 개념보다는 민간인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우리는 국가주의의 관점에서 아니라 인권의 관점에서 한국전쟁 중 민간인학살 문제를 접근하고 있으며, 따라서 좌익 우익의 구분을 떠나 전시에 발생한 모든 억울한 죽음들, 특히 남북한 양 공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민간인 학살 문제를 이 자리에서 거론하고 있다.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학살을 저지른 국가는 현재의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고, 그들을 일반 사람들과 격리시키며, 공식 역사해석을 통해 그들의 기억을 조작한다.³⁾ 학살이라는 국가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은 국가권력의 정당성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억의 조작은 더 큰 부도덕성을 가져올 위험성이 크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인데, 진실을 덮으려면 덮을수록,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의 이야기처럼 강제로 은폐하려는 측은 더욱 더 무리한 정책과 은폐 작업을 시도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국가에 대한 신뢰를 더욱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3) Herbert Hirsch, *Genocide and the Politics of Memory*,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95, p182.

모든 형태의 전쟁 혹은 대량학살(genocide)은 인간을 동물로 전락시키는 대표적인 사례이며 인간이 얼마나 인간에 대해 잔인해 질 수 있는지, 인간이 얼마나 야만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인권의 박물관이다. 오늘날 여러 형태의 반인권적인 사례가 언급되고 있지만, 국가가 구성원인 국민에게 저지른 폭력, 그리고 정치권력에 의해 조장된 인종분류나 종족 갈등으로 인한 대량학살이야말로 말로 20세기 문명을 야만으로 떨어뜨린 가장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물리력의 독점 기구’로서 국가의 자의적인 권력행사를 막는 일이야말로 노동인권, 여성인권, 소수자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첫걸음이고, 이 첫걸음을 회피하는 모든 인권 운동이나 인권 담론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즉 국가의 자의적 권력행사의 유혹을 막아야만 사회 전 영역에서의 인권 보장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

IV. 맺음말

1. 민간인학살 문제,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가?

가. 정부의 기본입장 정립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민간인학살 문제는 분명히 전쟁범죄이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문제이다. 특히 한국전 당시 민간인학살은 국가 대 국가의 전쟁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유엔 혹은 국제적인 전쟁법 처벌 법규의 적용을 받기도 어렵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책임자인 한국정부, 그리고 미국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 제주 4·3 항쟁을 비롯하여 1950년 7월 14일 이후 발생한 미군에 의한 학살사건을 비롯한 공비 토벌 과정에서의 학살사건도 당시의 군사 작전권이 미군에게 있었으므로 학살의 최고의 책임 주체는 미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군에 의한 직접적인 학살이 아닌 대다수의 학살의 경우는 당시 주권국가로서 한국정부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일차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설사 미국이 책임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시인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의 국회와 정부, 그리고 한국인들의 집합적인 의지가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 문제 해결에 가장 중요한 관건은 정부와 대통령의 의지이다.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떤 각도에서 바라보고 있는지, 이 문제 해결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가 관건이다. 만약 한국정부가 여전히 전쟁 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사건, 혹은 과거 처럼 좌익에 대한 학살은 정당한 것이었다고 정리한다면 문제개혁의 속도는 느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노근리 사건에 대해서 최근 증언자의 증언을 번복되는 등 미국정부가 이 문

제 해결에 대한 초반의 의지를 완전히 철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미국의 태도에 대해 한국 측이 항의를 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정부가 적극성을 보였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 결국 미국과 한국 정부는 할 수만 있다면 이 사건들에 대한 대응을 회피하려 하고 있는 인상을 준다. 지금까지 제주도 43, 여순항쟁, 노근리, 기타 함평이나 문경 등지의 유족들의 요구나 청원에 대한 대응을 종합해 볼 때, 정부는 자발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갖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국민의 정부임을 선포한 현 김대중 정부, 그리고 인권 대통령을 자임하는 현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남북이 화해와 통일의 길에 나서는 이 정부가 ‘폭도’ 혹은 ‘통비분자’로 분류해 왔던 피학살 민간인에 대한 시각을 전환해야 하며, 그들의 억울한 죽음이 갖는 중요성과 심각성에 대해 더 많은 고려를 하도록 촉구할 수밖에 없다.

결국 정부가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요구와 공감대의 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다수의 국민들이 좌익에 대한 불법적인 학살이 불가피했다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것이기는 했으나 실제로 그것은 역사적 기억이 완전히 왜곡되어 왔으며, 다분히 반공주의식 일변도의 교육이나 그간의 냉전적 분위기 하에서 조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공개와 조사 작업이 선행된다면 국민의 의식이 바뀔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한 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전체적인 진실규명이다. 언론이나 학계에서 부분적으로 조사를 실시해 왔으나, 이제는 그것이 정부에 의해 주도되어야 한다. 언론, 인권단체나 지식인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려는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나. 국회차원에서의 특위구성과 특별법 제정

“한 사람이라도 국민이 억울한 형편을 당한 것은 우리 국회가 조사 시정을 의무가 있는 것이올시다”⁴⁾

“양민의 생명, 재산상의 피해를 끼친 악질적 관련자의 엄중한 처단과 피해자에 대한 피해제도를 설정하기 위하여 기존 법률에 의한 일사부재리 원칙이나 시효의 저촉규정에 관계없이 특별법으로 가칭. ‘양민학살처리 특별조치법’의 제정을 촉구 한다”⁵⁾

4) 국회 제 35회 본회 19차 회의록 중에서 곽상훈 의원의 발언.

5)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국회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국회임시회의 속기록 제42호.

각 처의 피학살 유족들은 이미 수차례나 행자부, 국방부 등에 자기 문제의 피해사실에 대한 진상조사와 피해자 명예회복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그러나 국방부 측은 “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사 자료로는 확인이 불가능하고, 국가 배상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경과로 적절한 배상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만 해 주었다. 그리고 ‘국회차원에서의 특별법 제정이 바람직하므로 그 과정에서 필요한 일이 있다면 협조하겠다’는 천편일률적인 대답만 했다. 이러한 반응은 국회 혹은 정부 차원에서 전체적인 진상규명을 할 의지를 갖지 않는 데서 초래된 예상된 반응들이었다.

현재 시 군 의회, 도의회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하여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명예회복을 추진하는 곳도 많다. 경북도의회, 경기도 의회, 그리고 함평군, 산청군, 화순군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경북도 의회의 경우 신고 된 곳 중의 극히 일부만 진상조사를 마쳤는데 그것도 단순한 피해자 실태조사일 뿐 원인조사에까지 이르지 못했다. 다른 모든 지역에서도 시, 군, 도 차원에서의 조사는 극히 제한적인 실태조사는 가능하나, 그 이상의 진상조사는 불가능하며, 진정한 진상조사가 불가능한 만큼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이나 보상 등은 불가능하다. 도의회 차원의 조사는 왜 정부에서 이 문제에 나설 수밖에 없는가 하는 점을 재차 확인시켜주고 있다.

결국 시도 의회에서는 특위가 구성되어 실태조사는 할 수 있어도 진상규명까지는 할 수는 없게 되어 있다. 그런데 만약 이 모든 사건들에 대해 국회가 사안별로 특별법을 제정하려 할 경우, 대단히 유사한 사건에 대해 동일한 과정을 반복해야만 한다. 그것은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될 것이지만 공권력의 신뢰성에도 심각한 상처를 줄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예상되는 것은 정부가 적극적이고 포괄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지 않고 단순한 민원해결 차원에서 접근하기 때문인 것으로 본다. 따라서 국회와 정부는 현재 각 지역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요구들에 대해 사례마다 특별법을 제정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국회 혹은 현재 구성단계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전쟁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위원회」를 구성하여 총체적인 진상규명 작업을 시작해야 하며, 이러한 진상규명 작업과 병행하여 특별법을 제정하여 명예회복과 배상을 해야 한다. 물론 반대편 즉 좌익과 인민군에 의한 학살도 이 기회에 함께 조사 정리해야 한다.

이미 제35회 국회에서 ‘양민학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일부 진상조사가 실시된 바 있기 때문에 역사의 계승과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과거 국회의 활동을 이 시점에서 복원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국회나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진상규명 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진실규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각계의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이미 유족회나 학계에서 조사된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 자료들 중 확인된 것은 받아들이고 보충적인 부분을 조사하

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군에 의한 학살의 사실이 발견되면, 미국 측에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제의하고, 인민군 혹은 좌익에 의한 학살의 사실이 발견되면 북한측과 공동조사를 제의할 수 있을 것이다.

다. 국가의 정보 공개

미군의 폭격에 의해 피해를 본 익산, 단양, 마산, 창녕 등지의 경우나 거창, 산청 등 국군의 초토화작전에 의해서 마을 거주민 전원이 학살당한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비교적 부담 없이 자신의 억울함으로 호소해왔고, 문제해결에서도 약간의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과정이야 어찌되었던 국민보도연맹 혹은 좌익 혐의로 수감, 처형된 사람들의 경우 남은 가족들이 그 동안 ‘빨갱이’ 가족으로서 차별과 탄압을 너무 심하게 받아왔고, 여전히 정부나 주변에서도 이러한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나서지 않고 있다. 즉 “빨갱이는 죽여도 좋다”는 이승만의 초법적인 명령이 그 이후 50년 동안 통용되는 동안 이들은 거의 숨죽이고 살아왔으며, 드러내놓고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리지도 않을뿐더러 피해를 입을까봐 후손에게조차 발설하지 않고 살아왔다.

실제 전쟁 중 민간인학살의 가장 큰 부분은 국민보도연맹 관련 피해자나 예비검속 등으로 인한 피해자, 그리고 수복과정에서 적에게 협력한 혐의로 피해당한 부역자들이다. 그리고 국민보도연맹 관련자나 예비구금자의 거의 대부분은 적극적인 좌익운동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다. 국민보도연맹 결성이야말로 사상적인 전향을 표명한 사람들이므로 국가가 아무리 전시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들을 구금하여 살해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엄청난 배신행위이다. 그리고 설사 이들이 좌익에 동조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들을 명령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처형한 것은 법의 위반이며, 일종의 국가 범죄행위이다. 이번 경북도의회 조사팀도 이 점을 의식하여 “조심스럽고 관심있게 접근하였다”는 전제하여 이 부분에 대한 처리방안도 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국가의 기밀과 관련된 극히 중요한 자료를 제외하고 전쟁 시 토벌작전 관련 각종 문서들, 군사재판에 관한 자료들, 초토화 작전에 대한 명령 지휘 계통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자료들을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이 보유하는 비밀문건 등은 각 피해자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구하도록 방치하지 말고 정부가 나서서 일괄적으로 수집하여야 한다.

라. 국가의 공식적인 사죄, 피해자 명예회복

“국가는 인명과 재산을 빼앗긴 유가족에게 생활 안전책을 강구하라. 죄 없는 양민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 보금자리인 가택마저 불살라 부모 잃은 유아며 자녀 잃은 노옹노파며 의지할 곳 없어 문전걸식 기하며 기한에 못 이겨 기사(飢死)한 자 그 수를 헤아리지 못하였고, 기천명 유가족은 집도 없이 방황하며 근 보명(保命)하였으나 국가에서는 지금까지 하등의 선후책도 없었으니 위자료 일백만원씩을 지급할 것을 호소한다”⁶⁾

민간인 학살을 포함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는 인간성에 반하는 죄(crimes against humanity), 집단학살 죄(genocide), 전쟁범죄(war crime)를 구성하여 국제형사책임을 지게 된다. 이러한 행위에는 개인책임 뿐만 아니라 국가책임도 뒤따르게 된다.

대한민국 정부는 민간인을 세 번 죽인 큰 잘못을 저질렀다. 전쟁당시의 학살이 그러하며, 60년 4.19 직후 자연발생으로 일어났던 명예회복 운동과 묘지조성운동을 5.16 쿠데타 세력이 묘를 파헤친 것이 둘째이며, 가족을 잃은 것도 억울하고 한이 맺힌 일인데, 남은 가족과 자식들에게 빨갱이의 굴레를 뒤집어 씌워서 평생을 한을 품고 살게 만든 것이 셋째이다. 특히 전쟁 당시 군대가 저지른 일은 근대 이전의 왕조체제에서는 물론, 다른 어떤 문명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비상식적인 것이었으며, 또 이후 군사정권이 각 유족회를 용공단체로 몰아 강제 해산하고 군인들이 비석을 부수고 묘를 파헤치며 개인묘로 이장하라고 요구한 것은 조선시대의 부관참시에 버금가는 야만적인 행동이며, 우리의 전통적인 효의 윤리인 죽은 자를 기념하고 제사지내는 일도 막은 반윤리의 극치라 할 것이다.

따라서 공권력의 잘못된 행사로 무고한 민간인이 학살된 사실이 확인 되는대로 국가는 이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한다. 비록 과거정권이 저지른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국민대통합의 차원에서 현 정부가 국가를 대표해서 사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학살의 책임자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의 차원에서 그치고 처벌하지는 말아야 한다.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그들 대부분도 일종의 피해자이며,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 따라서 민족 대화합의 차원에서 모두가 용서하고 화해해야 한다.

그리고 당장 시급한 것은 우선 유골수습 작업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유족들이 제사라도 지낼 수 있도록 유골을 수습하여 할 수 있다면 유전자 감식 등을 통해 죽은 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이들의 영혼을 모실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명예회복과 피해배상은 국가가 특별법을 제정해서 반드시 추진해야만 한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제주도 4.3 항쟁이나 거창 사건 등은 이 새로운 특별법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진

6) “호소문” 1960.5.25. 거창군 신원면 유가족 일동.

행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지역운동과 여순사건

이 영 일(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2국장) 1)

I. 머리말

여수는 긴 역사에 비해 비교적 운동의 토대가 척박한 곳이다. 거기에는 그만한 역사적 배경과 현실적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필자가 속해 있는 본 연구소를 비롯하여 여러 NGO들이 설립될 1995년 당시만 해도 여수는 운동의 토대가 매우 척박한 곳이었다. 지금은 여러 NGO들의 활동에 힘입어 시민운동이 상당한 약진으로 정착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당시에는 그러했다.

특히 여순사건의 후유증으로 인한 레드 콤플렉스와 연좌제 등은 대단한 금기사항이어서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함부로 나서지 말라는 주의가 지역에 팽배해 있었다. 그런가 하면 198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조성되기 시작한 여수국가산업단지 사택 중심의 도시문화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지인들이었기에 도대체 지역의 현안과 문제는 도외시한 채로 지역공동체이기를 거부하는 모래알 같은 유목민 상태였다. 그러한 토대와 조건 속에 이제는 10여개의 NGO들이 자기 활동을 하면서, 벌써 9년이라니 감회가 새로울 뿐이다.

9년이라는 세월은 참으로 많은 것을 변하게 했다. NGO들의 양질적인 시민운동의 발전 뿐 아니라,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민주화운동 했던 사람을 불온시하게 보는 일이 없으니 말이다. 아니 이제는 민주화운동 했던 사람들이 계속하여 중앙집권을 하고 있는 세상이다. 조금의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연거푸 내리 세 번 민주화운동세력들이 집권을 하고 있다. 그러니 세월이 변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1) 글쓴이 이영일은 (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 소장을 거쳐 현재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2국장(<http://www.jinsil.go.kr>)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전국의 민간인학살문제를 지원하고 있는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전국사회단체협의회(www.genocide.or.kr)’에서는 집행위원장으로, 국가폭력을 주 의제로 설정하고 있는 ‘동아시아평화인권국제학술회의 한국위원회’에서는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II. 지역의 정체성과 여수의 역사 개론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이 있다. 지역적인 것이란 지역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곧 지역의 역사와 전통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당연한 논리로 우리 지역 운동의 발전 방향은 지역의 정체성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지역이 가지는 정체성은 무엇일까를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여수의 역사는 참으로 질기고 장구한 저항과 항거의 역사이다. 예부터 물이 좋아 살기가 좋았던지 선사유적인 고인돌이 즐비한데, 그 동안 우리의 무지로 인해 도시개발과정에서 많이 훼손되고 파손되었건만, 아직도 1,500여기 이상의 고인돌이 남아 있다. 그 이후의 역사는 거의 저항과 항거의 역사로 점철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백제시대에는 사대주의의 원조인 신라의 삼국통일에 편입되기를 거부한 최후 저항지로, 麗末鮮初에는 이성계의 역성혁명에 반기를 들어 신생 조선왕국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최후 저항지로 인해, 조선조 내내 세 번이나 여수를 폐현(閉縣)하여 순천에 복속시켰다가, 다시 복현(復縣)을 하는 이른바 삼복삼파(三復三罷)의 수난을 겪게 된다.

그런가 하면 임진왜란 때에는 조선수군총사령부로 자리하여 이순신과 함께 병력은 물론이거니와 병참, 병기 등 모든 전쟁수단을 자급자족으로 실현해내면서, 그야말로 여수의 민중들은 의식주 삼중고를 겪으면서도, 죽을힘을 다해 나라를 지켜 왔던 것이다. 그래서 이순신은 여수를 비롯한 호남의 의거를 일컬어 若無湖南是無國家라고 까지 했다. 경천동지하는 구한말 동학농민혁명 대오에도 어김없이 이 땅의 민중들은 저항의 일 주체로 참여하기를 망설이지 않았고, 일제 강점시대의 독립운동에도 이 땅의 피 끓는 젊음들이 그러했다. 해방 후 현대사의 질곡인 여순사건 당시에도 제주과병을 거부하면서 민족이 민족을, 동포가 동포를 죽일 수 없다는 선동에 크게 호응한 지역의 역사는 가히 저항과 항거의 역사 그 자체인 것이다.

III. 여수의 정체성과 운동의 방향

1. 역사적 정체성과 운동의 설정

여수의 정체성은 지역의 역사가 말해주듯 언제나 저항과 항거였다. 이를 어떤 식의 표

현으로 승화해 내느냐가 우리 지역의 운동체가 담당해야 할 몫이 아닌가 싶다. 변화된 정세, 민주화시대에 우리 지역 운동의 발전방향을 지역의 정체성에서 찾아보는 것은 현 상황에서 역사의식이 부재한 NGO들의 전환적인 사고를 의미하는 것일 게다.

그러한 측면에서 1998년부터 비로소 본격화하기 시작한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사업은 여수지역의 최대의 쟁점이자 현안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지역공동체가 급속하게 붕괴되고 과거사가 해결되지 않은 채 오늘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역의 과거사를 정리하지 않고서는 오늘의 지역문제와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수년 동안 여순사건 관련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지금까지 3권의 방대한 자료집을 편찬하였으며, 위령제와 학술대회, 문화예술제를 바탕으로 지역의 여론을 움직이고 있으며 특별법 제정 작업에도 나서고 있는 것이다. 즉 타 지역의 경우에서 나타난 것처럼 여수지역에서도 1948년 여순사건 이후 구축된 지역 내의 정치적 역학구조 및 그것에 대한 주민의 피해의식 등이 오늘날 지역사회의 민주화와 시민참여를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는 점이 활동가들 사이에서 분명하게 인식된 것이다. 여순사건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나름대로의 재정적 기반을 구축하고서 지역의 당면 현안과 더불어 이러한 과거사 정리 작업을 동시에 수행한 결과, 지역운동이 어떻게 뿌리내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지역의 반민주, 반인권, 연고주의와 관료주의를 뿌리에서 접근하지 못하는 시민운동은 문제의 표층에서만 떠돌 위험성이 있다는 점이 분명하다.

2. 반민족세력 권력과 부의 재생산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작업은 지역의 기억을 모든 구성원이 공유하고, 억눌린 기억을 되살리며, 나아가 진정한 지역의 공동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라 볼 수 있다. 공동체성과 연대의식이 없이는 운동자체가 성립할 수 없듯이, 지역 주민 간에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상호 살육이 있었던 땅에서 공동체 의식이 생겨나기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사건 직후 피학살자의 남은 가족들은 '빨갱이'의 멍에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국 도처와 일본으로 거의 고향을 떠나버렸고, 그들이 남겨두고 간 토지와 재산은 '적산'이 되어 가해자들의 손으로 들어갔다. 이후 가해자들은 '반공의 투사'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되었으며, 그 권력은 곧 허다한 이권(利權), 즉 부를 가져다주었다.

여수를 비롯한 전국의 어떤 지역이든지, 그 뿌리를 캐고 들어가 보면 그 권력의 기반은 주로 일제 식민지 지배 및 한국전쟁 전후의 좌우익 갈등의 산물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지역이야말로 '현재가 곧 역사'인 곳이고,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고 있는 곳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쟁을 거치면서 지역차원에서 맹아적으로 형성되던 시민사회의 수평적인 기반과 근대적 조직운동은 모두가 꺾어져 버리고, 운동세력은 지역적 근거를 상실하게 되었다. 운동세력이 사라진 지역의 정치 사회의 공간에는 친일 인사와 관료 및 경찰, 극우 반공청년운동 세력, 권력의 꼬나풀에 기생한 기회주의적인 인사들이 조직한 각종 관변 조직들이 차지하였다. 이들은 중앙 권력과 수직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고리를 잡음으로써 권력과 물질적 부를 독점하게 되었다. 대체로 반복되는 대선과 총선, 지자체 선거에서 자신의 후보를 중앙의 여당 국회의원으로 만들어내고 이렇게 권력권에 접근한 사람들이 각종의 이권 사업을 독점함으로써 지난 50여 년 동안 물질적인 기반을 확보하였다. 오늘날 이들은 이제 지역의 사업체와 언론, 각종 학교의 이사회, 단체장과 지방의원, 관변단체 등에 진출하여 확고한 지역권력을 구축하고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여순사건을 재조명하는 사업은 매우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IV. 여순사건의 개요와 역사적 의미

1. 여순사건의 개요와 영향²⁾

1948년 10월 19일 저녁, 전라남도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가 제주도 봉기를 진압하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봉기를 일으켰다. 제14연대 하사관 그룹은 제주도로 파병되어 동족을 죽일 수는 없다며 총구를 이승만 정권으로 돌렸다.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하는 신생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진지 두 달이 지났을 때였다. 14연대 하사관들이 주도한 봉기는 금새 일반 장병들의 동의를 얻으며, 다음날 여수와 순천을 점령했고 곧이어 전남 동부지역 수 개 군으로 번져 나갔다. 여수와 순천에서는 봉기군의 엄호 아래 인민위원회가 재건되었고 기초적인 '인민행정'이 실시되었지만, 진압군이 즉각 투입되어 23일은 순천이, 27일은 여수가 완전히 진압되었다. 하지만 여수와 순천이 진압되었다고 해서, 봉기군이 완전히 전멸한 것은 아니었다. 14연대 봉기군과 남조선노동당 등의 지방 좌익 세력 등은 부근의 산악지대인 지리산에 입산하여 빨치산투쟁을 계속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남쪽에 세워진 뒤 2개월 만에 일어난 여순사건은 1946년 미군정 하에서 일어났던 '대구 10월항쟁'이나 '제주 4·3항쟁'보다 훨씬 더 큰 정치·사회적 영향

2) 김득중, 2002, 「여순사건과 민간인학살」, 『제6회 동아시아평화인권국제학술회의 여수대회 자료집』, 155~158쪽 참조.

을 남한 사회에 미쳤다. 특히 반이승만 정치세력에 대한 지배정권의 공세는 여순사건을 계기로 급속하게 강화되었고, 한반도 남쪽을 지배했던 미군의 철군정책도 변화되었다.

미군은 14연대 군인 봉기를 진압하는데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10월 20일 국방부장관과 군 수뇌부와 함께 긴급회의를 가진 미군은 광주에 토벌사령부(Task Force)를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봉기 진압을 위해 최신 군사 장비를 지원하는 한편 군사고문단원으로 하여금 작전과 정보 분야에서 국군을 ‘지휘’했다.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봉기에 맞서 미군은 진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고, 그 덕분에 여순탈환작전은 빠른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³⁾ 14연대 봉기와 뒤이은 빨치산투쟁으로 이승만정권의 위기가 눈앞에 펼쳐지자 미군 철수는 1949년 6월말에야 비로소 이루어졌다. 미군의 군사적 도움과 정치적 후원 없이는 이승만정권의 불안정성이 해소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도 분명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반대파를 관제 공산당으로 몰아 처벌할 수 있다는 소장파의 우려와 강력한 반대를 뿌리치고 여순사건 뒤 한 달 보름 만에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다. 1949년 1월부터 9월말까지 형무소에 수감된 사람들 중 80% 이상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되어 있었다.⁴⁾ 국가보안법은 현재까지도 남아있는 반공국가 유지의 가장 중요한 법적 제도이다.

한편 군대의 사회적 영향력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해졌다. 여순사건 진압에는 대북경계와 제주도 진압병력을 제외한 전 군대가 작전에 투입되었다. 이를 통해 연합작전의 경험을 익힌 국군은 국방경비대 시절 경찰에 억눌려 지내던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 경찰뿐만 아니라 전 사회에 압도적인 규정력을 갖게 되었다.⁵⁾ 군인들이 반역적 봉기를 일으켰다는 사실은 이승만정부가 즉각적으로 좌익 혐의 군인들을 숙청하고 군대를 반공 이데올로기로 무장시키는데 좋은 구실로 이용됐다. 숙군으로 처벌된 장병 숫자는 당시 전체 군 병력의 5%나 되었고⁶⁾, 이 공백은 해방 후 난립했던 청년 테러 단체의 젊은 조직원들이 대거 군에 들어옴으로써 메꾸어졌다. 이들은 1946년부터 반공투쟁의 최전선에서 활약하던 반공주의자들이었다. 이러한 인적 기반을 기초로 한국군은 한국전쟁을 거친 뒤에는 가장 강력한 반공

3) 여순봉기에 대한 논문을 최초로 발표했던 桶口雄一은 여순봉기가 미군에 반대했던 봉기임을 상기시키며, 여순봉기가 국민당을 지원했던 미국과 싸운 중국 인민의 투쟁 그리고 프랑스 제국주의와 싸운 베트남 독립해방투쟁과 공통의 과제를 가진 투쟁이었다고 평가했다(桶口雄一, 1967, 『麗水·順天蜂起』, 『朝鮮研究』62, 37~38쪽).

4) 『한성일보』1949.12.4; 『국도신문』1949.12.24.

5) 여순사건을 진압한 군 장교들-송요찬, 함병선, 백선엽, 김점근, 박정희 등-은 이후 주요 요직을 거치며 한국사회의 중심인물로 활동했다(桶口雄一, 1976, 『麗水·順天における軍隊蜂起と民衆』, 『海峽』4, 社會評論社, 74쪽).

6) 1961년 5·16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는 여순사건 진압을 위한 토벌사령부의 일원으로 광주에서 활동했지만, 봉기가 진압된 직후에는 좌익혐의로 체포되어 사형을 언도 받았다. 그러나 군부내 좌익조직 명단을 제공한 것과 만주군 출신의 군 지도부와 제임스 하우스만(James Hausman)이라는 미 군사고문단원의 구명운동으로 생명을 건지게 되었다.

조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여순사건을 철저하게 진압한 이승만정권은 국제공산주의세력과 북한의 침략성을 전면
에 내세우면서 11월 초에 극우인사들을 포함한 반이승만세력을 대대적으로 검거하는 한편
반공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한 주민통제체제를 하나씩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1949년에는
가구 구성원 외에 다른 사람이 집에 머물면 경찰서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는 유숙계(留宿
屆)제도를 실시했고, 좌익들을 선도하고 회개시킨다는 명목으로 보도연맹(保導聯盟)을 조직
했다. 1949년 1월에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호국군을 편성하여 4개 여단을 창설하였다. 각 학
교에는 군 장교가 파견되어 준군사조직인 학도호국단을 만들었다. 이승만정권은 여순사건
이후 학계, 교육계, 언론, 공무원, 사법계 등에 대한 대대적인 좌익색출작업을 계속 벌여 혐
의자들을 쫓아냈다.

이 같은 좌익색출과 치밀한 주민통제체제의 확립은 정권 존립의 위협에 처했던 이승만
정권이 여순사건을 성공적으로 진압함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킨 자신감의 결과일 뿐
만 아니라, 언제 솟구칠지 모르는 봉기에 대한 사전예방책이었다.

이승만정부는 여수와 순천이 진압된 직후부터 반공체제의 확립을 더욱 더 적극적으로
진행시켰는데, 다음 해에 발생한 김구 암살과 국회프락치 사건으로 가장 강력했던 반이승
만세력이 완전히 숙청되면서 이승만반공체제는 안정화의 길로 들어섰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이승만정권이 공산주의자 척결을 자신들의 목표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공산주의자들뿐만 아니라 이승만정권에 반대하는 세력 일체를 척결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런 입장은 여순사건 초기부터 적용되었다. 봉기에 협력했다는
혐의를 받은 관련자들이 모두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던 것은 아니었다.

여순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아무런 재판도 없이 단지 14연대 봉기에 협력했다
는 혐의만으로 국민학교 운동장이나 해안 절벽, 산기슭에서 죽어갔다. 누가 죽었는지, 누가
죽었는지, 왜 죽어야만 하는지도 분명히 밝히지 못한 채 55년 동안이나 이 사실이 침묵 속
에 묻혀 왔다는 사실은 민간인학살이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한국 사회와 현대사 속에 깊이
각인된 구조라는 점을 일깨워 준다. 아무리 죽은 사람들이 죄 없이 죽어갔다고 해도 '빨갱
이'라는 죄로 죽어갔다면 어느 누구도 더 이상 입 밖에 낼 수 없는 얘기가 되었던 것이다.
심지어는 여수, 순천 지역 출신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사상이 의심스럽다는 얘
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점에서 여순사건은 봉기의 측면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밝혀지
지 않았던 학살의 측면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이라 할 수
있는데, 학살은 봉기 실패에 따른 결과였다.

여순사건은 지역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14연대 봉기군이 들어왔을 때에는 우익

인사와 경찰들에 대한 처형이 이루어졌고, 진압작전 때에는 협력자를 색출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원한으로 협력자를 지목하여 처형하는 바람에 지역사회는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다. 나서면 다친다(=생명을 잃는다)는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진보적 사회운동의 싹은 잘려져 버리고 이데올로기에 일부러 냉담한 태도가 번졌다.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여순사건에 대한 신문 보도 등을 통해 한국 사회 전체가 유혈적인 좌우갈등을 간접 경험하였다. 해방직후 나타났던 좌우 대립은 이제 일방적인 좌익세력 척결로 바뀌었고,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공포심과 적대감도 또한 높아져 갔다. 여순사건에서 나타난 유혈적 갈등과 민간인 학살의 양상은 2년 뒤 한국전쟁에서 전면화 되었다.

여순사건은 이승만정권의 반공국가형성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남한의 반공국가는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더욱 고정화되고 강화되었다. 여순사건과 이후의 한국전쟁은 남한사회가 작동하는 원형을 만들었던 것이다.

2. 여순사건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관점

이러한 여순사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인식의 변화와 관점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반공적인 관점으로서 여순사건의 일체를 좌익 활동과 연계하여 거의 절대적으로 불온시 해 왔으며, 이는 개인의 행복과 인권이 아닌 안정된 국가운영만을 중요시한 결과로서 당연하게 반변혁적 입장을 취해 온 형태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의 정부가 반공 이데올로기를 국시로 내세우면서 일체의 비판적 반정부 반체제 활동 모두를 ‘빨갱이’ 소행으로 몰아 부치면서 틈만 나면 ‘마녀사냥’을 해왔던 것이다. 그 점에 있어서 단연 일등 공신은 보수 정책들과 논객들이었다. 따라서 여순사건의 경우에도, 좌익 및 부역 혐의와 지방 좌익의 극렬활동에 그 초점을 맞추어 선전해 온 것이다.

둘째는 변혁적, 구조적인 관점으로서 이른바 80~90년대의 운동권적 인식으로 이는 그 동안의 좌익활동에 대해 선협적 내지는 기계적인 파악의 귀결로서, 좌익 활동의 명분과 의의를 인정은 하지만 밑으로부터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문제는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해 차라리 민중의 역사라기보다는 조선공산당(남로당)의 역사에 가까운 관점을 가져온 것이다.

셋째는 인권과 평화의 관점으로서 국가폭력에 의한 여순사건을 단순하게 인적·물적 피해상황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관념적인 휴머니즘적 관점으로 빠질 가능성도 있었으나, 다행스럽게도 국가폭력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중시하면서 이에 대한 극복책을 찾아내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면서 국가와 폭력의 뗄 수 없는 관련에 주목하고 있는 점이라 하겠다.

3. 지금까지의 정부의 대응

지금까지의 이러한 초법적이고도 불법적인 여순사건을 다룸에 있어서 정부의 대응은 할 수만 있다면 사건을 최대한으로 은폐하거나 축소하려고 하였다. 그 중에서 거창양민학살, 제주4.3의 예에서처럼 극히 일부 사건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도 좌익이나 좌익 혐의자 및 통비분자를 제외한 소위 양민으로 분류되는 우익의 피해에만 국한하여 해결하려는 형식적인 시늉에 그쳐왔다 하겠다. 이는 설령 피학살자가 좌익으로 분류된 자라 하더라도 적절한 사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는 당연히 불법적인 조치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민간인학살의 문제 해결은 실제적인 진상규명과 명예회복보다는 배상이 아닌 개인적 보상에 치중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진상규명 차원이 아닌 개인적인 민원 처리 수준으로 격하되는 양상을 보여 왔다.

최근에도 2000년 7월 17일 국방부는 국민해원사업 일환으로 추진해 왔던 국방군사연구소의 민간인학살 조사를 군의 명예를 훼손한다 하여(2000년 7월 25일자 문화일보 참조) 사건을 축소·은폐 지시한 내부문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이에 대한 지역과 전국의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항의가 잇따르기도 했다.

여순사건에 대한 정부의 관점이 이렇다 보니 그 피해자와 유가족은 지금까지 냉전 이데올로기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채 국민, 혹은 민족 구성원으로 대접도 못 받으면서 죽은 목숨처럼 생명을 부지해 왔던 것이다.

V.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운동

55년 전, 여순사건으로 인해 슬하게 죽어간 원혼들을 위해 반세기가 지난 지금 각계의 노력으로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여순사건 당시 국군과 경찰이 저지른 민간인 학살의 실체와 진실을 밝히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운동은 사건의 의미와 규모에 비해 그 연구 실적과 활동이 거의 전무한 편이었다. 그러나 진상규명운동은 크게 보아 1998년 전후로 분류할 수 있는데, 98년 이전에는 주로 일부 향토사가들에 의해 명칭 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는 14연대 군에 의해 촉발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국군의 명예가 실추된다하여 ‘여순반란사건’이라 이름 하는 것을 ‘14연대 반란’ 또는 ‘여수14연대반란사건’으로 명칭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지난 1998년 사건 발발 50주년을 맞아 여순사건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여수지역사

회연구소가 피학살자 실태조사를 전면화하면서 연구와 진상규명운동이 본격화되었다. 여수 지역사회연구소는 당초 광주와 제주 및 거창의 예에서처럼 이 사건을 개별사건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을 취하여 왔다. 그러나 이들 사건들이 특별법이 제정됨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더 나아가서는 과거청산과 역사바로세우기보다는 여전히 지역적 차원의 개별사건 내지는 개별적인 민원 처리 수준으로 격하되는 양상을 보면서 전환적인 사고를 하게 된다. 역사의 기억과 복원을 위한 여순사건의 제대로 된 실체와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가폭력에 관한 해방 전후의 공간과 한국전쟁전후의 민간인집단학살사를 동시에 관통하는 폭 넓은 한국 현대사를 그 중심으로 놓지 않고서는 사건의 전모와 실체를 도저히 파악할 수 없음을 깊이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지역의 연대모임과 함께 전국연대모임을 동시에 구상하게 되는 것이다. 지역의 연대모임으로는 2001년도에 결성한 ‘여순사건민간인학살진상규명과명예회복을위한여수지역사회단체협의회’와 ‘여순사건유족회’ 및 2003년도에 결성한 ‘여순사건화해와평화를위한순천시민연대’가 구성되어 활동을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전국연대모임을 구축해 나아가고자 여순사건유족회를 중심으로 하는 전국적인 조직인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를 결성하여 전진 배치시켜 나갔다. 그러나 전국의 피해유족들과 시민단체의 개별적인 활동으로는 진상조사와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이 힘에 부쳐 전 국민적인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2000년 9월 7일 학계와 종교계, 시민단체, 유족 등이 참여하는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과명예회복을위한범국민위원회’(이하 민간인학살범국민위)의 조직을 결성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2000년 11월부터 마련 준비 중인 민간인학살 통합특별법안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부터 한국전쟁이 끝나기까지 군인·경찰·국제연합군 등의 작전 수행과정에서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것으로,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관련기관 등을 검찰에 고발하는 제재 방법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런 취지에 공감한 정치권에서도 지난 2000년 11월부터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나라와 문화를 생각하는 모임’은 두 차례의 공청회를 민간인학살범국민위와 공동 개최하는가 하면, 여야 국회의원 16명도 지난 2001년 6월 2일 ‘6·25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발의를 하기에 이른다.

민간인학살 반세기, 1960년 4대 국회에서 ‘국회 양민학살진상조사특위’가 5·16 박정희 군부 쿠데타에 의해 해체된 지 실로 40년 만에 부활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운동은 2003년 들어 더욱 더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2003년 2월, 거창에서는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운동 관계자들이 국내의 여러 정세요인을 감안할 때, 금년내로 민간인학살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향후 3년 정도는 입법이 어렵

다는 자체 정세분석 하에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전국 유족 및 활동가 수련회를 통해 특별법 입법을 위한 총력 투쟁을 결의하였다. 이를 계기로 2003년 2월 27일부터 6월 20일까지 국회 의사당 부근의 한나라당사 앞에서 114일간 장기 노숙 투쟁을 전개하면서 수많은 사업의 성과를 도출해 내었다. 3차례에 걸친 국가인권위원회의 집단 진정, 인권단체들의 지지 성명에 이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국 각계 1천인 선언 등 수많은 각급 단체들의 지지 성명이 잇따랐으며, 농성 기간중의 전주형무소와 김천형무소의 재소자 집단학살지를 발굴하여 사회 전반에 큰 반향을 일으키는가 하면, 투쟁 속보를 30호까지 발간하면서 그 동안 침묵으로 일관해 오던 각종 언론매체들이 70여 차례나 민간인학살이 보도 기사화되는가 하면, 라디오와 TV에도 30차례나 방송을 하여 40년만에 부활한 진상규명운동은 이 제서야 비로소 사회적 이슈와 공론화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 2000년부터 민간인학살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를 한 이후, 특별법 제정 입법운동에 가장 근접거리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불행히도 2003년 6월 막바지에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배신과 합의 파기로 인해 특별법 입법 운동은 일정 기간을 다시 지체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리고 지난 2003년 11월 거의 1년여 만에 가까스로 태동한 과거사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순사건특별법안을 포함한 전국민간인학살사건통합특별법안을 누더기가 된 채로 심의하여 2004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을 했건만, 또 다시 한나라당의 조직적인 반대 당론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말았던 것이다.

VI. 맺음말

결론적으로 한국전쟁 전의 대표적인 학살극이었던 여순사건은 ‘제주 4·3사건’과 함께 진압과 토벌과정에서 이뤄졌다. 여순사건은 4·3사건의 연장선에서 발생했다. 4·3사건에 대한 진압출동 명령을 받은 여수주둔 국군 제14연대가 1948년 10월 19일 명령을 거부하고 봉기를 일으켰다. 14연대 병력 대다수인 2천 여명의 군인이 참여한 봉기는 이 지역 좌익세력들이 가세하면서 순식간에 민군봉기로 발전했다. 그런 만큼 여순사건 진압에 나선 군경은 보복적인 테러, 학살, 약탈, 방화를 대대적으로 진행했다.

여순사건 희생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다만 전라남도 보건후생부의 이재민 구호자료는 당시 여수를 포함한 7개 지역에서 2634명이 사망하고, 4325명이 행방불명됐다고 기록하고 있다. 총 7,000여명이 희생된 것으로 보이는 정부의 기록은 여수지역사회연구소가 피해실태를 조사하였거나 현재 조사하고 있는 피해 통계 추정치인 10,000여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순사건은 기존의 정치 사회적 지형을 변화·강화시키면서 남한사회의 기본질서가 잡히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다. 그러나 여순사건이 일어난 지 55년이 지났지만, 이 사건의 사실과 실체에 대한 규명은 아직도 요원하다. 55년이 지나도록 말없이 묻혀있는 죽은 자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산 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울려 퍼질 수 있는 날은 언제인가?

1948년이라는 같은 해에 일어난 ‘제주4·3’은 특별법이 제정 시행되어 최종진상보고서 발표와 함께 지난 2003. 10. 31일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도 현지에서 정부 차원의 사죄를 하고 있는 현재의 움직임과 비교하여 여순사건을 돌이켜보는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리 역사는 학살의 역사적 사실 자체마저 또 다시 ‘학살’ 했다. 학살사건의 본질과 책임은 철저히 은폐, 왜곡된 채 주로 좌익 측에 의한 우익 인사의 학살 사실만이 일방적으로 강조되었고, 사실을 들추어내는 것 자체가 반국가적인 행동이 되었다. 사실을 알고 있는 자들은 ‘생존’을 위해 반세기를 침묵해야만 했다.

여순사건의 민간인집단학살은 국가의 목적 자체를 상실한 야만적 국가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대국민 테러행위로, 어떠한 명분으로도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 전쟁중이라고 해도 비무장, 비전투 민간인의 생명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 인류전쟁사의 교훈이고 제네바협약, 제노사이드 협약 등 국제 평화와 인권협정의 근본 취지일 것이다. 이것이 상실되면 전쟁의 목적 자체가 정당성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여순사건의 진실규명은 민족적 차원에서는 ‘민족정기의 회복’을 의미하는 일이다. 55년 전 이념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서 저질러진 과거의 서글프고 부끄러운 자화상을 드러내 진실을 말하고 반민족적 죄악에 대해 준엄한 역사의 심판을 내려 굴절된 역사를 바로 잡는 일이야말로 민족의 양심을 회복하고 민족정기를 고양해 내기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을 위해서는 한국현대사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이데올로기’가 아닌 ‘민족과 인권’의 문제로서 학살의 본질을 인식하려는 태도가 요구되며, 일반 국민의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수적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운동은 17대 국회에서도 계속 될 것이다. 새롭게 변화된 정치 정세와 이를 올바르게 이끌어 갈 노무현 참여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역사에는 시효만료는 있을 수 없으며, 진실을 말하지 않고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80년 광주의 민간인 학살은 일제의 잔재와 친일파를 척결해 내지 못하고 한국전쟁기 전후의 민간인 학살을 방치하거나 모른 채 해 온, 민족내부의 모순이 확대·재생산되어 온 결과에 다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

이다.

麗順事件에 관한 자료의 성격과 연구 현황*

홍 영 기(순천대 사학과 교수)

I. 머리말

해방직후 좌우의 갈등과 대립은 여러 차례의 유혈충돌을 촉발하였다. 한반도에 정부가 수립되기 직전인 1948년 4월에는 제주도에서 이른바 4·3사건이 일어났고, 정부수립 직후인 10월에는 전라남도 여수에 주둔하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의 좌익계 장병들이 지역민 일부의 지지를 받아 봉기하였다. 이른바 ‘여순사건’¹⁾이 그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직후에 발생한 가장 큰 사건이었다. 이어 1950년에는 민족의 최대 비극으로 알려진 6·25전쟁이 일어났다. 4·3사건에서 여순사건, 그리고 6·25전쟁은 징검다리나 같은 연결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가운데 6·25전쟁은 50년대부터 현재까지 상당한 연구 성과를 축적해온 편이다. 4·3사건의 경우에도 종래에는 언급조차 꺼리는 주제였으나, 최근에 이르러 자료집에서부터 구체적인 연구논저에 이르기까지 간행이 활발한 편이다. 하지만 여순사건의 경우에는 지금까지도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6·25전쟁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간단하게 언급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처럼 여순사건이 주목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그것은 여순사건을 일으킨 세력이 이제 갓 출범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정면으로 부정했기 때문일 것이다. 다시 말해 체제를 부정하는 反亂의 성격이 강한 까닭에 여순사건은 禁斷의 주제가 되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밤 여수에 주둔하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의 좌익계 장병들이 주동하였다. 이들은 제주도 출동을 거부하고서 무장폭동을 일으켜 전남 동부지역을

* 이 논문은 1996년도 순천대학교 공모과제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여순사건’에 대한 명칭은 매우 다양하다. 그 점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상세하게 언급하기로 하고, 본고에서는 잠정적으로 여순사건이라 부르기로 하겠다.

순식간에 장악하였다. 그 후 이들은 지리산과 백운산 등 험준한 산악지대를 근거지 삼아 한반도 남부지역의 이른바 빨치산 투쟁을 선도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은 발생 당시만이 아니라 4-5년 동안이나 남한사회의 저변을 뒤흔든 커다란 사건²⁾이었다.

이 글은 여순사건의 연구를 위한 기초 작업의 일환으로서, 사건과 관련된 자료와 연구 성과 등을 분석·정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자료의 성격이나 특징을 이해하고 나아가 기존 연구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봄으로써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디딤돌로 삼으려는 것이다.

그런데 역사학계에서는 여순사건에 대하여 거의 주목하지 않았다. 이에 반하여 정치학계와 향토사학계에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수준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좌우익의 갈등과 대립에 초점을 맞추거나 명칭 문제 혹은 진상규명을 강조해왔다. 이로써 여순사건의 원인이나 성격, 혹은 전개과정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한편, 문학계에서는 매우 주목할 만한 업적을 내놓음으로써 한국현대사의 그늘 속에 파묻혀 있던 여순사건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조정래의 『태백산맥』(전 10권, 한길사, 1989 ; 해냄, 1995)과 이태의 『여순병란』(전 2권, 청산, 1994)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역사적 접근에 풍부한 시사점을 던져주기도 하지만, 객관성을 입증할 수 없는 문학작품이라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여순사건에 관련된 자료의 특징을 살펴본 후 이 사건에 대한 연구시각, 사건의 배경과 원인, 사건의 전개과정과 성격 등으로 나누어 검토하겠다. 끝으로 앞으로의 연구과제를 제기하면서 이 글을 맺고자 한다.

II. 여순사건에 대한 자료의 특징과 연구시각

여순사건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알려진 자료를 잘 분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자료를 발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자료로는 이 글의 뒷부분에 소개된 [부록]-A의 참고문헌을 들 수 있다.

그 가운데 진압과 관련된 것으로는 대한민국 정부와 군 당국의 각종 발표문, 주한미군 당국의 각종 정보문서 등이 해당된다. 이 사건에 대한 초기의 대응을 보여주는 자료로는

2) 여순사건은 제주 4·3사건과 함께 현대 한국의 60대사건의 하나로 포함되었고(김광식, 「제주 4·3사건과 여순반란사건」, 『현대 한국을 뒤흔든 60대 사건』, 신동아 1988년 1월호 부록), 「광주·전남 50대사건」의 하나로 선정된 바 있다(전남일보 1994년 9월 6일자 「여순사건-항쟁인가 반란인가」 참조).

이범석 국무총리겸 국방장관의 「반란군에 대한 고시문」(1948. 10. 22)과 이승만 대통령의 「반란 경고문」(10. 23), 그리고 『駐韓美軍情報日誌』(주로 G-2보고서)³⁾ 등이 주목된다([부록]-A의 1·2·17 참조). 그런데 정부와 군 당국의 발표는 주로 언론을 통하여 이루어졌다.⁴⁾ 이러한 자료들에 의하여 당시 진압의 당위성과 진압 방법, 진압작전의 추이, 그리고 피해상황과 진압후의 현지 분위기 등을 비교적 생생하게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 많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를테면, 10월 24일을 전후하여 여수와 순천이 완전히 탈환되었다거나,⁵⁾ 여순사건을 일으킨 주체가 지방민이라는 주장이 실리기도 하였다.⁶⁾ 前者는 유엔총회의 개막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당시 한국문제가 유엔에서 논의될 의제의 하나였기 때문에, 정부당국은 여순사건이 해결되었다는 점을 내외에 천명하는 차원에서 그러한 내용이 실리게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국방부와 공보처, 현지 토벌사령부, 심지어 수도청장까지 여순사건이 이미 진압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⁷⁾

後者は 군 당국의 발표를 일방적으로 기사화 하는 과정과 관련이 깊은 것 같다. 당시 군 당국은 지역민들이 반란에 적극 가담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주로 발표하였다. 이는 처음에 반란을 야기했던 軍에 대한 비판을 피하려는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
- 3) 『駐韓美軍情報日誌』([부록]-A의 13 참조)는 그간 몇몇 자료집에 발췌·인용되다가, 1989년에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에서 완간한 바 있다. 그 중에 여순사건과 관련된 자료는 제5권에서 제7권까지가 해당된다. 이 자료에서는 대체로 사건의 원인과 진행과정, 그리고 진압과정과 그 처리 문제, 희생자의 규모 등이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면 당시 미국의 관심과 의도가 무엇이었는가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 4) 이승만 대통령과 이범석 장관의 발표문은 당시의 신문에 그 全文이 실려있으나, 신문의 상태가 워낙 좋지 않아 판독하기가 쉽지 않다. 오히려 새한민보(1948년 11월 하순 ; 『한국현대사자료총서』 7, 돌베개, 1986, 632쪽)에 게재된 기사가 참고하기에 편리하다. 여순사건과 관련된 정부당국의 다른 발표문 등도 중앙과 지방의 주요 일간지에 실려 있다. 중앙지인 조선일보와 경향신문, 그리고 지방지인 호남신문과 동광신문 등에 실린 기사는 최근에 발간된 몇몇 자료집에 그 일부가 수록되어 있다(『여수문화』 5<여수문화원, 1990> · 『14연대반란50년결산집』<여수문화원, 1997> · 『여순사건실태조사보고서』 1<여수지역사회연구소, 1998> 등 참조). 하지만 실린 자료가 극히 일부에 불과한데다 이해하기 어렵게 편집되어 있으므로 자칫 다른 내용과 혼동할 우려가 없지 않다. 따라서 여순사건에 관련된 신문기사만이라도 모두 한데 모아 자료집으로 발간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에서는 여순사건에 관한 자료집과 증언집을 간행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 5) 10월 24일자 조선일보 「順天麗水完全鎮壓」과 동아일보 「麗水, 順天 完全 奪還」 및 東光新聞과 湖南新聞의 같은 題號 「麗水順天完全奪還」 등의 기사 참조.
- 6) 예컨대, 동광신문 1948년 10월 29일자 「叛軍主力은 男女學生」, 같은 신문 11월 3일자 「國軍智異山에 集結中--麗水反亂은 地方人이 主動--」, 조선일보 10월 27일자 「麗水叛亂指揮는 女中校長」, 10월 31일자 「叛軍指揮한 宋郁逮捕」, 같은 날짜 동아일보 「叛徒魁首宋郁逮捕」, 서울신문 10월 27일자 「叛軍總指揮者 麗水女中校長」 등의 기사 참조.
- 7) 『여순사건실태조사보고서』 1, 여수지역사회연구소, 1998, 154-163쪽 참조.

군 당국의 일방적인 발표로 인해 여수여중 교장 宋郁은 반란의 주동자로 몰려 훗날 무고한 희생자의 대표가 되고 말았다.⁸⁾ 이른바 ‘민간인 주동설’의 의도적인 유포로 말미암아 이 사건이 이른바 ‘여순반란’으로 불려 지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한다. 한편, 군 당국이 저지른 대표적인 誤報로는 金智會를 체포했다는 기사를 들 수 있을 것이다.⁹⁾ 군 당국이 한 지방신문 기자에게 김지회를 체포했다고 제보함으로써 그 기사가 국내외에 전송되는 촌극을 빚은 바 있다. 따라서 신문 기사를 인용할 경우에는 기사에 대한 엄정한 사료비판이 요구된다.

당시에 간행되거나 발표된 목격기나 취재기사도 여순사건 연구에 크게 도움을 준다. 玄允三 洪漢杓 등이 『開闢』 등 당시의 잡지에 기고한 글들인데,¹⁰⁾ 이들은 대체로 신문사나 통신사의 기자들로서 진압 직후 현지를 방문 · 취재하였다. 그 가운데 현윤삼과 李在漢의 글은 진압을 담당하는 군경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朴燦植의 글은 날짜별로 사실만을 기록하려는 자세가 엿보인다. 民主日報 기자인 洪한표와 合同通信 기자인 薛國煥의 글은 언론을 통해 잘못 알려진 사실들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한 흔적이 역력하다. 계엄령이 내려진 제한된 상황에서 씌어진 글임에도 불구하고 객관성을 유지하려한 점이 크게 돋보이는 자료라 하겠다. 이 글들은 여순사건이 마무리 된 이후인 11-12월 사이에 발표되었기 때문에 사건 당시보다는 좀 더 차분하게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洪한표는 수십 번이나 망설이다가 자신이 목격한 내용을 참고자료로 제공할 의도 아래 썼다고 한다. 하지만 자신이 본 것 역시 표면적일 뿐, 공평하고 정확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사건 당시 신문기자들은 대체로 국군과 경찰, 우익인사의 발표를 기사화한 탓에 사실과 전연 거리가 멀거나 비상식적인 내용이 없지 않다고 부언하였다.

설국환 역시 비슷한 論調를 보이며, 도망 나온 철도경찰의 엉터리 증언을 비판했다. 그는 또한 다음과 같이 현지의 상황을 전하였다.

事實 順天麗水에 들어가기 前에 우리는 叛軍과 叛徒가 放火와 強盜질을 恣行하였고 強姦과 屍體破壞를 餘地없이 하였을 뿐더러 殺害에 있어서 警察官의 全家族를 沒殺하였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나 現地の 死體에서 婦女子 老人의 屍體는 거진 볼 수 없었을 뿐더러 屍體에 손을 댄 痕迹도 별로 보지 못하였다. 다만 數人의 警察責任者와 國軍將兵의 家族를 殺害하였다는 이야기를 當事者의 口傳으로 들었을 뿐이며 이러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지금 摘發에 當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에는 多少의 에누리도 있을 수 있는 것이

8) 반충남, 「여수 14연대 반란과 宋郁 교장」, 『말』 1993년 9월호 참조.

9) 이에 대한 자세한 전말은 김석학 · 임종명의 『광복30년』 제2권 여순반란편(전남일보사, 1975), 336-343쪽을 참고하라.

10) [부록]-A의 4-10의 글 참조.

다.¹¹⁾

위의 인용문에서는 반군의 만행을 일방적으로 강조하였던 당시의 신문기사와는 상당히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당시 현지에 파견된 특파원들은 진압이후의 상황이 “復讐와 私感” 또는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무서운 논리가 지배하였음을 안타까워 했다. 이와 같이 잡지에 실린 글들은 신문기사에 비하여 오히려 참고할 만한 점이 많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여순사건과 관련된 자료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현장사진들이다. 당시 호남 신문 사진부장이자 광양출신이었던 이경모의 사진첩 『격동기의 현장』에는 여순사건에 관련된 귀중한 사진들이 들어 있다.¹²⁾ 이 사진첩을 통하여 여순사건의 참상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방에서 6·25전쟁에 이르기까지 전남지역의 상황을 풍부하게 전해준다.

아울러 주목되는 자료로는 이른바 빨치산들이 남긴 기록을 들 수 있다. ‘빨치산 자료’는 6·25전쟁 중에 미군이 노획하여 미국 워싱턴의 국립문서보관소에 미공개 상태로 소장되어 있었다. 이 자료는 최근에야 기밀 해제됨으로써 일반인들의 접근이 가능해졌다. 이 자료는 최근에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에서 간행되었다.¹³⁾ 여순사건과 관련하여 『빨치산 자료집』 제1권에는 빨치산의 회의록·결정서·명령서·유격대원의 명단 등이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제7권에는 빨치산부대가 발행한 陣中新聞이 들어 있다. 이른바 남부군의 기관지인 『승리의 길』을 비롯하여 각 道別로 발행한 신문들이다. 이러한 자료로써 여순사건에 가담한 인물들의 행적을 추적할 수 있게 되었다. 14연대와 지역민 중에 입산한 사람들의 이력사항 등을 알 수 있게 됨으로써 여순사건을 일으킨 주도세력과 참여층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특히, 『승리의 길』 제23호(1951. 11. 3)에 들어있는 ‘려수병란삼주년기념좌담회’의 내용이 주목된다. 당시 빨치산들의 여순사건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 신문에는 여순사건에 참여한 5명(14연대 소속 3, 순천의 민간인 남성 1, 구례의 민간인 여성 1)의 경험담이 게재되어 있다. 전쟁 중이던 1951년 겨울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이와 같은 좌담회를 기획한 의도는 빨치산의 투쟁성과 희생정신을 다시 한번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유격대 사령관의 결론에서 여순사건의 정치적 의의와 교훈을 특별히 강조한 점에서 그러한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다. 아울러 김일성과 북한에 대한 적극적 지지를 표명한

11) 설국환, 「叛亂地區踏査記」, 『新天地』 1948년 11·12합병호 ; 『한국현대사자료총서』 8, 돌베개, 1986.

12) 『격동기의 현장』, 눈빛, 1991, 57-90쪽 참조.

13) [부록]-A의 15 참조.

반면, 미국과 이승만 정권을 격렬히 비판한 점을 통하여 이들의 南北韓觀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하겠다.

그밖에도 국회에서 간행한 속기록을 참고할 수 있다.¹⁴⁾ 이 자료는 여순사건 직후에 국회가 개원하여 그 진상을 조사한 내용이다. 국회의 질의에 대한 정부측의 답변과 자체적인 조사활동 및 수습대책을 논의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건의 진말에서 진과 및 피해상황, 그리고 수습대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특히, 계엄령의 위헌시비와 황두연 의원의 불법감금, 반군 점령기 이전과 이후의 희생자 규모 등의 문제가 크게 논란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끝으로 이범석 장관을 비롯한 정부측이 이 사건에 대하여 국회에 종합적으로 보고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 가운데 정부는 사건의 원인을 ‘남로당의 지령설’, ‘군부내 좌익의 지방좌익포섭설’과 ‘극우극좌세력의 합작음모설’ 등으로 파악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사건 당시를 회고하거나 증언한 자료들이 1980년대 후반 이후 갑자기 쏟아져 나왔다.¹⁵⁾ 대체로 좌익계 빨치산 인사들의 자전적 증언과 진압을 주도했던 군경 수뇌부의 회고록, 그리고 지역민들의 목격담 등이 주류를 이루었다. 좌익계와 현지 주민들의 증언이나 목격담이 간행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한국의 민주화운동의 성장과 관련이 깊을 것이다. 1987년 6월항쟁을 승리로 이끈 시민들의 자신감이 출판계에 영향을 줌으로써 그 동안 금기시 되어왔던 빨치산 관련 책들이 그야말로 봇물처럼 터져 나올 수 있었다. 이는, 또한 북한의 부도덕성을 간접적으로 폭로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부 당국에서도 간행을 굳이 막을 필요가 없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한 책에는 빨치산들에게 가혹한 희생만 요구하는 북한의 잔학상을 고발할 의도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¹⁶⁾

그런데 좌익관련 서적에는 자신들의 입산 동기, 빨치산으로서 활동한 내용, 남북한 당국의 자신들에 대한 처리 진말 등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한편, 현지 주민들은 좌우익에 대한 자신들의 체험이나 목격담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서술하였다. 과거에는 반공 이데올로기로 인하여 함부로 언급하지 못한 문제들을 자신들이 겪은 내용을 말하게 된 것이다.

이와 아울러 진압군 측에 참여했던 인사들의 회고록이 간행되었다. 이들은 물론 진압의 당사자였으므로 자신들의 활동을 정당하게 평가한 반면, 빨치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서술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빨치산 관련 서적이 세상에 버젓이 나오게 된 상황을 개탄하며 쓰여진 글도 없지 않다.¹⁷⁾ 따라서 보수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자료라 할 수 있

14) 국회사무처, 『제1회 국회속기록』 89-124호, 1948년 10-12월.

15) [부록]-A의 18-35의 글 참조.

16) 이태, 『남부군』 상·하, 두레, 1988 ; 1993 합본판, 14쪽.

다.

그밖에 여순사건 직후에 현지를 답사한 설국환의 글이나 당시 군 당국의 수뇌부로 참여한 짐 하우스만 대위의 글도 비슷한 시각에서 씌어졌다. 설국환의 글은 사건 직후에 썼던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증보한 것인데, 「共產叛徒의 蠻行」이라는 副題가 붙어 있다.¹⁸⁾ 이는, 60년대의 시대적 분위기 때문인지 냉전적 시각이 더욱 강화된 경향을 보여준다. 하우스만 대위의 글은 사건에 관여한 미군의 역할을 아는데 도움이 된다.¹⁹⁾ 당시 한국군 작전권이 미군에 있었다는 점, 미군의 대응조치와 사건의 원인 등이 서술되어 있다.

이상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루어진 연구 성과는 그리 많지 않다. 해방 전후의 시대적 배경이나 6·25전쟁을 다루는 과정에서 여순사건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며, 여순사건만을 다룬 全稿는 별로 많지 않다.²⁰⁾ 그런데 국내에서보다는 오히려 외국에서 더 구체적으로 논의되었음이 주목된다.²¹⁾ 이 사건이 좌우익의 충돌에 의해 일어난 데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했기 때문에 반공 이데올로기가 강력히 지배되던 1970년대까지도 국내에서 연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외국에서는 자료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연구 환경이 한결 용이하였을 것이다. 그런 까닭에 외국에서는 이 사건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여순사건을 검토한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는 대체로 네 가지 시각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²²⁾ 보수·진보·중립적 시각, 그리고 현지 주민의 피해를 강조하는 입장 등이 그것이다. 이 글에서 보수적 시각이란 반공적인 입장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였는데, [부

17) 劉官鍾, 「麗水, 第14聯隊叛亂事件」 3, 『現代公論』 1989년 4월호, 383쪽.

18) [부록]-A의 18 참조.

19) [부록]-A의 31 참조.

20) 여순사건을 다룬 구체적인 연구는 아닐지라도 비교적 長文의 글을 포함한 논문은 [부록]-B의 6·8·13·16·17·21·27·31·32·35·36·39 등이 해당된다. 그 중에서 여순사건만을 전적으로 연구한 논문은 8·13·16·17·31·32·35·36 등 8편이다.

21) [부록]-B의 <국외의 연구> 참조.

22) 여기에서는 전체적인 시각만을 언급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장에서 설명할 것이다. 한편, 정청주는 전통주의적 연구·수정주의적 연구·향토사가의 연구 등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한 바 있다(「여순사건 연구 자료소개」, 전남사회연구회 1989년 10월 21일 발표요지; 전남사회연구회회보, 『지역사회연구』 3, 1990. 1). 그는 이 발표요지를 수정·보완하여 최근에 논문으로 발표하였는데(「麗順事件 研究의 現況과 課題」, 『麗水大學校 論文集』 13, 1998), 필자는 그러한 사실을 이 글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 정청주의 글은 여순사건에 관한 주요 연구논저의 내용과 특징을 검토한 최초의 연구사 정리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효춘은, 한국정부의 공식 입장·지방민의 연구·진압과정이나 남로당에 직접 참여한 인사의 연구·총체적이고 구조적인 차원의 분석적 연구 등 대략 네 가지로 연구유형을 나누어 살펴보았다(「麗順軍亂研究」,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2-4쪽). 이효춘의 이러한 분류는 그 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국내외에서 진행된 상당수의 연구성과가 누락될 우려가 있다.

록]-B의 1-7 · 9 · 10 · 12 · 14 · 16 · 17 · 24 · 27 등이 해당된다. 이른바 우익적인 입장이라 할 수 있는데, 공산주의자들의 선동과 지령에 의해 사건을 일으켜 수많은 만행을 저지른 점이 특히 강조되어 있다. 1950년대 이후 꾸준히 발표되어 왔으며, 정부의 입장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는다.

중립적인 시각으로 쓰여진 글은 [부록]-B의 13 · 21 · 30 · 31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글에서는 이 사건을 비교적 객관적인 입장에서 검토하려고 시도하였다. 여순사건의 원인이나 성격, 전개 과정에 대한 다양한 주장을 모두 소개하고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에 주안점을 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대체로 국내의 신진연구자들에 의해 80년대 후반부터 시도되었는데, 이는 민주화운동의 성과에 힘입은 바가 컸다고 생각된다.

국외에서의 연구는 대체로 6 · 25전쟁에 이르는 내란의 한 과정이나 민중봉기(폭동)의 시각에서 이루어졌다. [부록]-B의 33-41 등이 해당되는데, 이를 진보적인 시각에서 다루어진 글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²³⁾ 이러한 글에서는 대체로 북한이나 소련의 자료 등도 광범하게 인용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런 까닭에 이들의 연구를 좌파적인 시각이라 이해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한편, 북한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이루어진 연구도 있다. [부록]-B의 8의 글이 그것이다. 북한학자의 짙막한 글인데, 미국과 대한민국 그리고 남로당 박헌영 계를 정면으로 비판한 반면에 여순사건은 애국적 군인들의 투쟁으로 미화하였다. 그런데 이 글이 1982년에 씌어진 점을 주목한다면 1980년 5월 광주민중항쟁의 영향에서 씌어진 것이 아닐까 한다.

그리고 여수와 순천 등 지역적 피해를 강조하는 현지 주민의 입장에서 씌어진 글도 적지 않다. [부록]-B의 25 · 29와 <지역중심의 연구> 42-55 등이 그것이다. 대체로 무고한 양민의 피해가 많았다는 점과 이 사건으로 인해 지역민 전체가 ‘暴徒’나 ‘叛徒’로 오해를 받는 억울한 상황을 강조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 아울러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함께 주민들이 당한 피해조사를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지역민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는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연구 성과라고는 할 수 없지만 문학계의 시각도 주목된다. [부록]-A의 24와 [부록]-C의 1-3 등이 해당하는데, 진보적인 시각에서 서술되었다. 이 가운데 조정래의 『태백산맥』은 일제하 지주-소작제의 모순이 해방직후 민중봉기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한 글이고, 나머지의 작품은 역사적 존재로서의 빨치산을 부각시키려는 의도에서 집필되었다. 특히 『여순병란』의 저자 이태는, “폐자인 반란군의 편에서 여순병란의 실상과 그 중

23) 이와 비슷한 시각에서 여순사건을 언급한 연구로는 [부록]-B의 20의 글과 박세길, 「여순봉기의 돌풍」(『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1, 돌베개, 1988)을 들 수 있다.

말을 접근해보려고 시도”하였다고 밝혔다.²⁴⁾ 이러한 글을 통하여 14연대 소속 군인들과 현지 주민 입산자들의 행적을 추적하는 데에 참고가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수적 입장의 자료와 연구는 사건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축적되어왔다. 반면에 중립적 · 진보적 · 지역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자료와 연구는 80년대 후반이후에야 비로소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다. 이 점에서 다양한 시각의 자료와 연구가 한꺼번에 분출된 시대적 배경을 아울러 인식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요컨대 여순사건과 관련된 자료와 연구는 나름대로의 특징과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특정한 입장이나 다양한 시각을 견지하는 자료와 연구성격을 더욱 엄정하게 분석 · 비판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인 연구의 단초를 열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III. 여순사건의 배경과 원인

여순사건은 명칭의 다양함만 보더라도 복잡다기한 측면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의 배경이나 원인에 대한 諸說을 파악하기에 앞서 논란이 되는 명칭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이 사건의 명칭이 다양하다는 점은 이미 지적되었는데,²⁵⁾ 일반적으로 ‘여순(여수·순천)반란(사건)’²⁶⁾이라 불려져 왔다. 최근에는 여순사건²⁷⁾이나 ‘여순병란(군란/군인폭동)’²⁸⁾이란 명칭이 사용되기도 한다. 그밖에도 ‘(여수·국군)14연대반란사건(여수국방경비대반란사건),’²⁹⁾ ‘여수 · 순천 10월19일 사건’ · ‘여순봉기’³⁰⁾ 등과 같이 매우 다양한 명칭으로 불려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건 당시에는 ‘국군(14연대)반란사건’ · ‘여순폭동’ · ‘전남(호남)사건’ · ‘반란폭동사건’ · ‘려수(여순)병란’ 등으로 불렸다.³¹⁾ 이처럼 명칭이 통일되지 못한 이유로는 그간의 연구가 충분하지 못함에도 복잡한 성격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³²⁾

24) 이태, 『여순병란』 상, 청산, 1994, 6쪽.

25) 이효춘, 앞의 논문, 1쪽.

26) ‘여순반란’이란 명칭은 1950년대 초반부터 간헐적으로 사용되다가 1960년대 중반이후 일반화된 것으로 보인다([부록]-A의 18과 [부록]-B의 43 등). 이 명칭은 반공이데올로기의 강화와 더불어 보수적 시각의 글을 통하여 보편화되었다([부록]-A의 25 · 29 · 31, [부록]-B의 1-7 · 9 · 10 · 14 · 24 등 참조).

27) [부록]-A의 27 · 33-35 및 [부록]-B의 11 · 13 · 20 · 55 등 참조.

28) [부록]-B의 7 · 8 · 27 · 31과 [부록]-C의 3의 글 참조.

29) [부록]-A의 32와 [부록]-B의 12 · 17 · 49 · 52의 글 참조.

30) 박세길,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1, 돌베개, 1988, 152쪽과 최장집 · 정해구, 『해방8년사의 총체적 인식』, 『해방전후사의 인식』 4, 한길사, 1989, 28-30쪽. 한편, 이들은 무장투쟁의 일환임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봉기라는 용어를 쓴 것으로 이해된다.

31) [부록]-A의 1-17의 글에서는 여순사건의 명칭이 매우 혼란스럽게 나타난다.

하지만 여러 명칭이 사용되더라도 사실은 두세 가지 내용으로 압축할 수 있다. 지역적 의미를 강조하는 ‘여순반란’인가 아니면 반란의 주체를 보다 명확히 하는 ‘병란(군란)’인가의 문제이다. 다시 말해 前者는 여수·순천이라는 특정지역에서 일어난 반란임을 의미하는 것이나, 그 주체를 모호하게 만드는 한계를 지닌다. 자칫 지역민들이 일으킨 반란으로 오해할 여지가 많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지역민들이 명칭을 변경해 달라고 청원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아울러 반란은 反亂 혹은 叛亂이나에 따라 의미가 상당히 다를 수 있다. 反亂은 체제를 부정하는 것인데 반하여 叛亂은 정권을 타도하려는 것이다. 여순사건의 경우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前者에 가깝다. 여순사건의 지도부가 대한민국의 체제를 정면으로 부정하였기 때문에 그러하다.

‘병란(군란)’이라는 명칭은 반란의 주체가 군대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명칭이라 할 수 있다. 병란이나 군란이란 용어는 의미가 서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다만, 병란은 하급 군인들의 반란을, 군란은 군대가 일으킨 반란이란 의미로 더욱 좁혀 이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 그렇다면 병란이 군란보다는 여순사건의 본질에 더욱 가까운 것으로 헤아려진다.

그런데 병란 앞에 지역명을 붙인다면 그것 역시 애매할 수밖에 없다. 이를테면 여순병란이나 여수병란 등의 명칭이 이 사건을 적절하게 표현한 것일까. 그것은 여수나 순천의 병사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의미일 것이나, 여수나 순천의 병사가 과연 누구인지를 알려주지 않는다. 그렇다고 병란 앞에 제14연대를 붙여도 어쩐지 어색하다. 앞에 군대를 알리는 단어가 있는데 굳이 병란이란 용어를 중복시켜 언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반란이나 병란의 ‘亂’은 전통사회에서 주로 사용하는 단어이지 현대사회와 어울리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반란이나 병란보다는 가치중립적 용어로서 사건이란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³²⁾ 예컨대, 여순사건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용어 역시 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 명칭을 통해 무슨 사건인지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다양한 명칭은 사건 당시부터 복잡한 측면이 많았기 때문에 비롯되었을 것이나, 50년대 이후 반공이데올로기가 강화되면서 지역적 특성을 강조하는 여순반란이란 명칭이 일반화된 것으로 보인다.

여순사건의 배경과 관련하여 기존의 연구에서는 먼저 지역적인 특성을 거론하였다.³⁴⁾

32) 황남준, 앞의 논문, 1987, 460쪽 및 이효춘, 앞의 논문, 2쪽.

33) 정청주는 여순사건에 대한 연구가 충분치 못하여 그 성격이나 의의가 규명되지 않은데다 매우 복잡한 성격을 내포한 까닭에 가치중립적 용어로서 여순사건이란 명칭을 사용한다고 밝혔다(앞의 논문, 71쪽의 각주 1 참조).

34) 전남지역, 특히 전남 동부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여순사건의 배경으로 언급한 연구로는 다음의 글이 참고된다. 그 가운데 황남준의 글이 가장 구체적이다.

전남 동부지역의 정치·경제·사회·지리적 특징을 통하여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검토했던 것이다. 전남 동부지역의 정치적 상황에 대하여 초기에는 우익우세 속에 좌우익이 공존하다가 47년의 간헐적 충돌을 거쳐 48년 초, 특히 5·10선거를 전후해서는 좌익의 단선 반대투쟁이 격화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회경제적 상황에 관해서는 지역적 특성이 잘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 이를테면 기존의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는 재정적자와 귀환동포의 문제, 대량 실업사태, 물가상승에 따른 생활고, 미군정의 低穀價政策 등에 대한 민중의 불만 고조는 전남 동부지역만의 상황이 아니라 전국의 일반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다만, 1946년 10월 이른바 추수봉기가 발생하지 않은 8개 郡(여수 순천 광양 구례 고흥 곡성 완도 진도) 가운데 5개 군이 동부지역에 해당한다는 지적은 주목된다.³⁵⁾ 다시 말해 보성군을 제외한 이른바 전남 동부 5郡에서는 추수봉기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 배경을 이 지역을 관할한 69군정중대의 통치방식에서 찾기도 한다.³⁶⁾ 보성군만 61군정중대의 관할일 뿐, 나머지 동부지역은 69군정중대가 자유방임적인 점령정책아래 있었던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이 지역의 좌익조직은 1948년 여순사건 당시까지 거의 온존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으로 파악하였다.³⁷⁾ 요컨대, 미군정의 점령정책의 지역별 차이에서 여순사건의 발생 요인을 찾아보았던 것이다.

한편, 지리적으로 고립된 이 지역이 전라남도의 도청소재지인 광주권과는 다른 독자적인 문화권을 형성해왔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³⁸⁾ 그래서인지 이 지역의 인민위원회는 중앙이나 광주의 지시를 거의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부각시킨 연구도 있었다.³⁹⁾ 이상의 지역적 특성 가운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회경제적 배경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있어야 할

G. Meade,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King's Crown Press, Columbia Univ., New York, 1951 ; 「美軍政의 정치경제적 인식」, 『韓國現代史의 제조명』, 돌베개, 1982, 67-70쪽.

B. Cu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Princeton Univ. Press, 1981 ; 김자동 옮김, 『한국전쟁의 기원』, 일월서각, 1986, 345-390쪽.

황남준, 「전남지방정치와 여순사건」, 『解放前後史의 認識』 3, 한길사, 1987, 435-445쪽.

전남일보, 「여순사건」, 『광주 전남 현대사』 2, 실천문화사, 1990, 94-99쪽.

이효춘, 앞의 논문, 14-25쪽.

황남준, 「해방 직후의 정치상황」, 『순천시사』 정치·사회편, 순천시사편찬위원회, 1997, 728-742쪽.

35) 황남준, 앞의 논문, 1987, 433-443쪽.

36) 브루스 커밍스, 앞의 책, 384-385쪽과 황남준, 앞의 논문, 1987, 434쪽 그리고 전남일보, 앞의 책, 94-5쪽 참조.

37) 브루스 커밍스, 앞의 책, 385쪽과 전남일보, 앞의 책, 97-98쪽 참조.

38) 황남준, 앞의 논문, 1987, 434-436쪽과 전남일보, 앞의 책, 95쪽.

39) G. Meade, 앞의 책, 185 ; 황남준, 앞의 논문, 1987, 435쪽에서 재인용.

것이다.

다음으로 사건 직전까지 군경간의 갈등과 충돌을 여순사건의 발생 배경으로 꼽는 연구가 있다.⁴⁰⁾ 1946년 2월, 미군정은 조선경비대총사령부를 설치하고서 1948년 중반까지 전국에 15개 연대를 창설하였다.⁴¹⁾ 도청소재지인 광주에는 1946년 2월에 4연대, 여수에는 4연대에서 파견한 장병들에 의해 14연대가 창설되었다(1948. 5. 4). 그런데 14연대에 파견된 창설요원들은 여순사건의 주모자였던 연대 인사계 지창수 상사를 비롯하여, 김지회 · 홍순석 중위 등 좌익계가 적지 않았다.⁴²⁾

이들은 당시 남로당의 지침에 따라 좌익성향의 병사들을 적극 모병함으로써 14연대는 좌익계가 절반이나 되었다고 한다. 더욱이 모병에 응하는 이들 중에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여수의 14연대 사병들은 종종 경찰과 충돌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구레사건이 터진 것이다. 당시 군인들은 ‘노란둥이(노랑이)’, 경찰들은 ‘검은둥이(검둥이)’라 불렀는데, 상대방의 제복 색깔에 빗대어 그렇게 부른 것이다.⁴³⁾ 상대방을 비하하는 명칭만 보더라도 군경간의 갈등이 내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군대와 경찰 사이에 대립과 충돌이 잦은 까닭은 무엇일까라는 점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그러한 점을 소홀히 해왔다. 그저 군경간의 묵은 감정에서 비롯되었다거나 급식문제를 비롯한 차별적인 처우 때문일 것이라는 막연한 추정뿐이었다.⁴⁴⁾ 따라서 이 점에 대한 천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여순사건에는 상당수의 지역민들이 직·간접으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주민들이 봉기에 가담하게 된 배경을 찾으려는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 여순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이나 동기에 대한 연구성과를 검토하고자 한다. 다양한

40) 김남식, 앞의 책, 380쪽 ; 황남준, 앞의 논문, 1987, 416-419쪽 ; 전남일보, 앞의 책, 102-107쪽 ; 이기봉, 앞의 글, 1995, 382쪽 ; 이효춘, 앞의 논문, 9쪽 ; 박명립,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2, 나남출판, 1996, 409-410쪽 등의 대부분의 글에서 군경간의 갈등과 마찰을 주요한 배경의 하나로 다루고 있다. 그런데 군경간에 충돌은 1945년 10월 남원사건이래 주로 전라도 지역에서 자주 발생하였다. 특히 광주에 소재한 5여단 예하의 관할지역에서 발생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른바 ‘영암사건(1947. 6. 3)’과 ‘구레사건(1948. 9. 24)’ 등이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될 것이다.

41) 황남준, 앞의 논문, 1987, 416-7쪽.

42) 지창수 상사 등 하사관그룹은 전남도당에서 침투시켰으며, 김지회 · 홍순석 등은 좌익사상에 가장 많이 물든 조선경비사관학교 3기 출신으로서 남로당 중앙과 연결된 인물이었다(김점곤, 『한국전쟁과 남로당전략』, 박영사, 1973 ; 1983, 185-187쪽, 김남식, 『남로당연구』 1, 1975 ; 돌베개, 1984, 380-381쪽, 한용원, 『창군』, 박영사, 1984, 86쪽, 스칼라피노 · 이정식, 한홍구 역, 『한국공산주의운동사』 2, 돌베개, 1986, 394-5쪽의 각주 108, 전남일보, 『광주전남 현대사』 2, 실천문학사, 1990, 102쪽 참조).

43) 위의 책, 103-107쪽 ; 김계유, 『여수여천발전사』, 1988, 317쪽.

44) 한용원, 『創軍』, 1984, 98-99쪽 ; 황남준, 앞의 논문, 418쪽 ; 전남일보, 앞의 책, 106쪽.

견해들이 제시되었으나, 아직까지 논란의 여지가 많다.⁴⁵⁾ 따라서 사건의 원인에 대한 諸說의 검토를 통하여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한 여순사건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남로당 지령설’과 ‘불가피한 상황 봉기설(돌출적 폭동설)’이 그것이다.⁴⁶⁾ 前者는 다시 ‘事前 決行說’과 ‘第2戰線 形成說’ · ‘미국의 介入 強度試驗 및 한국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기 위한 봉기설’로 나누어진다.⁴⁷⁾ 사전 결행설은 남로당이 1948년말에 일으킬 계획으로 군부반란을 추진하던 중 14연대에 제주도로 이동하라는 명령이 내려지자 준비도 갖추기 전에 결행했다는 주장이다. 주로 미국인 연구자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라 할 수 있다.⁴⁸⁾ 제2전선 형성설은 남로당이 14연대에 지시를 내려 제주 4 · 3사건을 주도하던 좌익세력에 대한 정부당국의 압력을 덜어주기 위해 일으켰다는 것이다.⁴⁹⁾ 이 주장은 남로당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견해⁵⁰⁾와 남로당의 지시와는 무관하게 추진되었다는 견해⁵¹⁾로 나누어진다. 미국의 개입 강도를 떠보려 했다는 세 번째 설은 당시 미군정의 정보 보고에 의한 것으로 학술적으로 검증된 것은 아니다.⁵²⁾

그런데 남로당 지령설은 당시 남로당의 군부 침투공작을 지나치게 의식한 것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한다. 1947년 7월, 남로당은 군사부를 설치한 후 군부침투공작을 시작했으며, 이듬해 5월 단독선거를 전후하여 본격화하였다.⁵³⁾ 특히 전라 · 경상도 지역에서 군부침투공작이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하지만 남로당의 이러한 전략보다는 서울로부터 먼 지역의 경우 해당지역 조직의 영향력이 더욱 크게 작용했다. 이로 말미암아 남로당의 의도와는 달리 돌출적인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제주 4 · 3사건과 여순사건이라는 것이

45) 존 메릴, 앞의 책, 189쪽.

46) 황남준은 이를 ‘반란계획설’과 ‘상황폭발설’로 나누어 설명한 바 있다(앞의 논문, 1987, 414쪽). 이로써 여순사건의 원인에 대한 제설이 모두 제시된 것은 아니며, 용어 또한 이해하기가 어려워 필자 나름대로 다시 정리해보았다.

47) 존 메릴, 앞의 책, 189-190쪽. 한편, 안종철은 발발원인을 돌발적인 사건 · 압력분산설 · 결의실험설 등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순천시사』 정치 · 사회편, 743쪽).

48) 존 리이드, 「여순사건의 진상」; 소오여, 앞의 책, 39쪽; 존 메릴, 앞의 책 189쪽에서 재인용. 존 메릴 역시 이 주장에 동조하였다. 이는, 당시 미군사고문단에서 활동했던 리이드와 그리피스 2세 등이 제기한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49)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 1967, 451쪽; 육군본부, 『공비연혁』, 1971, 202 · 218쪽; 김석학 · 임종명, 『광복30년』 2, 1975, 33쪽;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 1988, 31-38쪽 등 보수적 시각을 가진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이러한 입장을 취하였다.

50) 이기봉, 『실록 제14연대』, 1988, 218쪽; 유관중, 「여수, 제14연대반란사건」 1, 『현대공론』 1989년 2월호, 428-430쪽에서 재인용.

51) 김점곤, 「책머리에」, 『실록 지리산』, 고려원, 1992.

52) 존 메릴, 앞의 책, 190쪽의 각주 9 참조.

53) 이효춘, 앞의 논문, 11쪽.

다.⁵⁴⁾

後者の 학설은 다시 몇 갈래로 나눌 수 있는데, 군경간의 마찰과 갈등에 의해 우발적으로 일어났다는 주장, 동족상잔의 제주출동을 거부하기 위해 남로당의 말단에서 자의적으로 일으켰다는 주장,⁵⁵⁾ 군 내부의 극렬 좌익분자의 소영웅주의적 · 모험주의적 돌출행위에 의한 봉기,⁵⁶⁾ 그리고 이상에서 제시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어났다는 주장 등이 그것이다.⁵⁷⁾ 그런데 후자의 주장은 남로당이나 전남도당과 사전협의나 지시 없이 14연대의 좌익계 사병들이 일으켰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따라서 후자의 주장을 바꾸어 표현한다면 ‘南勞黨 不指令說’이라 할 수도 있다.

그런데 14연대 내의 좌익계 사병들이 남로당 중앙이나 도당의 지시없이 자의적으로 일으켰다는 최근의 연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봉기의 주동세력은 제주파병이 결정되자, 동족상잔이나 반란이나에 대한 향후의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⁵⁸⁾ 이 과정에서 제주도 현지에서의 반란과 연대 내에서의 반란, 선상반란후 북상 등 세 가지 방안 중에서 세 번째 안으로 잠정 결정되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연대 내에서의 반란으로 갑자기 변경되었는데, 그것은 선상반란의 정보가 누설되어 승선하면 곧 체포될 것을 우려하여 계획이 변경되었다는 것이다.⁵⁹⁾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기록에서 많은 시사를 받을 수 있다.

陸軍中領 朴勝薰이 赴任하여 叛亂을 計劃하던 同 部隊內 共產細胞分子를 一掃할 兼 濟州道暴動鎮壓을 위하여 應援部隊를 編成하고 1948年 10月 19日 午前(午後; 필자주) 9時 共產分子로 指目된 一個部隊를 濟州道로 輸送할 計劃을 完了하였다.⁶⁰⁾

14연대 연대장 朴勝薰 중령이 부임하여 반란을 계획하던 좌익계 사병들을 제주도로 파견하려 하자, 이에 반발하여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이들이 실제로 반란을 계획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상부에서 제주도 출동명령을 내리자, 14연대 책임자는 좌익계 사병들을 골라 제

54) 김점곤, 앞의 책, 187-190쪽.

55) 백선엽, 앞의 책, 157-158쪽.

56) 김점곤, 앞의 책, 190쪽 ; 김남식, 앞의 책, 388쪽 ; 전쟁기념사업회, 『한국전쟁사』 2, 1992, 267쪽 ; 이태, 『이현상』, 1990, 204-205쪽 ; 황남준, 『순천시사』 정치 · 사회편, 1997, 724쪽 참조.

57) 이기봉, 앞의 글, 382쪽.

58) 이효준, 앞의 논문, 28쪽 ; 안종철, 『순천시사』 정치 · 사회편, 754-755쪽 참조.

59) 위의 논문, 29쪽.

60) 정한조, 『삼산이수』, 1965, 138쪽.

주도로 파견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⁶¹⁾ 14연대의 지휘부는 숙군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말썽의 소지가 많은 좌익계 사병들을 제주도에 파견시키려는 계획을 추진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정은 좌익계 사병의 반발로 이어졌을 것이며, 사병조직을 관할하는 지창수 상사 이하 좌익계 하사관들이 자구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반란으로 치닫게 된 것이 아닐까 한다.

이 무렵 박진경 중령의 피살사건을 계기로 광주 5여단 예하의 부대들은 숙군작업에 휘말려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14연대 내부의 좌익계 장교와 사병들은 불안한 상태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와중에 제주파병 명령이 내려지자, 좌익계 하사관들은 좌익토착세력과 연계하여 봉기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해 14연대 내의 좌익계 사병들은 동족상잔을 할 수 없다는 자주적 입장과 숙군작업의 진행됨으로써 자신들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자 반란을 도모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초기의 보수적 시각에서 이루어진 연구에서는 남로당이 깊숙히 관련되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잃고 있다. 이러한 입장의 변화는 진보적이거나 중립적인 시각의 연구성과를 받아들인 때문으로 생각된다. 다만, 남로당 지도부와 도당은 여순사건을 ‘당의 거사’로 사후승인 하였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극히 회의적이고 비판적이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⁶²⁾ 그리고 북한은 여순사건 당시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다가 휴전 후에는 남로당계 숙청의 명분으로 이용하는 등 모순적인 행동을 취하였으며, 소련과는 거의 관련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였다.⁶³⁾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순사건의 배경과 원인 등을 둘러싸고 연구자간에 아직도 의견이 분분한 편이다. 최근들어 다양한 자료가 지속적으로 공개 내지 발굴되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명하는 데에는 좀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여전히 상당한 간격이 있기 때문이다.

IV. 여순사건의 전개과정과 성격

1948년 10월 19일 밤, 여수에 주둔하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가 무장폭동을 일으켰다.

61) 이 점은 김석학 · 임종명의 글에서도, “제주도출동은 제1대대로 정했으나 2 · 3대대의 소위 문제아들을 재빨리 1대대로 배속시켰다”라고 쓴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광복30년』 2, 전남일보사, 1975, 32쪽).

62) 김점곤, 앞의 책, 191-192쪽.

63) 김점곤, 앞의 책, 192-193쪽. 한편, 이기봉은 스탈린의 지시에 의해 여순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주장했으나, 그 근거는 매우 미약하다(『여순 군반란사건 스탈린의 지시였다』, 『신동아』 1995년 7월호, 383-386쪽).

14연대 내의 일부 좌익계 장병들이 여수를 점령한 데 이어 순천을 점거했으며, 나아가 광양·구례·별교·보성·고흥 등 이른바 전남 동부 6군 지역으로 순식간에 확산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일으킨 주체, 다시 말해 누가 일으켰는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약간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형편이다. 제14연대 내의 일부 좌익계 군인들이 주도했으며, 여기에 좌익단체 및 학생단체들이 적극 가담했다는 주장⁶⁴⁾에서부터 남로당 지도부⁶⁵⁾를 그 주체로 보기도 한다. 물론 사건을 처음에 일으킨 세력은 14연대 지창수 상사를 중심으로 한 좌익계 사병 40여명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다.⁶⁶⁾ 이러한 주장은 여순사건의 주체를 남로당 전남도당이 조직한 14연대내 사병조직,⁶⁷⁾ 14연대 내의 고참하사관,⁶⁸⁾ 14연대 군인,⁶⁹⁾ 등으로 파악한 연구와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사건에 가담한 참여층을 더욱 구체적으로 유형화시킨 연구가 주목을 받았다.⁷⁰⁾ 즉 지도층·행동층·단순가담층으로 세분하여 지도층은 인민위원회의 6인의 의장단과 지하좌익단체의 대표, 행동층은 지하좌익단체·청년단체·학생단체 그리고 30세 내외의 장정·날뽕팔이 행상(청소년) 등, 단순가담층은 다수의 읍민으로 파악하였다.

이들 가운데 처음부터 14연대 좌익계 사병들과 행동을 같이했던 23명의 존재는 어떻게 파악해야 할까. 이들은 흔히 여수지역 남로당 핵심분자⁷¹⁾ 혹은 좌익계 수산학생⁷²⁾들이라 여겨진다. 그런데 이들이 14연대 영내에 미리 대기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는 14연대 좌익계 사병조직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좌익세력과 사전에 모의했다는 사실을 의미할 것이다. 그렇다면 사건의 주체를 설정함에 있어서 좀더 신중해야 할 듯하다. 사건 당시부터 이른바 ‘사전모의설’이 제기된 바 있으며,⁷³⁾ 그 이후에도 그러한 주장을 받아들인 연구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다면 이 사건이 충동적 내지 무계획적으로 일어났는지,⁷⁴⁾ 아니면 지역에서 활동하던 좌익세력의 치밀한 계획아래 이루어졌는지⁷⁵⁾를 알 수

64) 육군본부, 『공비토벌사』, 1954, 13쪽.

6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 1967 ; 1977, 451쪽.

66) 황남준, 앞의 논문, 1987, 446-447쪽.

67) 김점곤, 앞의 책, 190-191쪽 ; 김남식, 앞의 책, 382쪽.

68) 존 메릴, 신성환 역, 앞의 책, 194쪽.

69) 이효춘, 앞의 논문, 2쪽 ; 전남일보, 앞의 책, 134쪽 ; 김계유, 「여순사건의 회고」, 『21세기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1998, 184쪽 등.

70) 황남준, 앞의 논문, 1987, 466쪽.

7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 1967, 455쪽 ; 육군본부 정보참모본부, 『공비연혁』, 1971, 203쪽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 1988, 33쪽 등.

72) 이태, 『여순병란』 상, 165쪽 ; 반충남, 앞의 글, 226쪽 ; 이효춘, 앞의 논문, 30쪽 ; 안종철, 『순천시사』 정치·사회편, 757쪽 등.

73) 이재한, 「전남반군의 진상」, 『개벽』 1948년 12월호 ; 『한국현대사자료총서』 6 참조.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한 면에서도 주체의 설정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여순사건이 여수에서 타 지역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주도세력의 변화유무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여수와 별교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는 계기와 주도세력이 동일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여수에서의 사건이 발발하여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오히려 주도세력이 바뀔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사건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도 지엽적이긴 하지만 논란이 되고 있다. 이른바 ‘비상나팔 신호설’이 기정사실화 되어왔으나, 정작 이 주장을 했던 연구자가 자신의 설을 번복하고서 ‘예광탄 신호설’로 전환한 것이다.⁷⁴⁾ 이제껏 예광탄 총성⁷⁵⁾과 비상나팔 소리의 先後關係를 불분명하게 언급한 연구가 많은 편이다. 당시 14연대 사병으로 여순사건에 가담했다가 지리산에 입산, 빨치산활동을 전개했던 유화렬 · 정현중 · 고송균 등은 비상나팔 소리에 따라 연병장에 집결하기로 미리 약속되었다고 밝히고 있다.⁷⁶⁾ 기존의 자료와 연구 성과를 종합해 본다면 예광탄 총성에 의해 지창수 상사 이하 40여명의 핵심 좌익세력이 무기고와 탄약고를 점령하였고, 그 다음에 비상나팔을 불어 병사들을 불러모은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봉기신호를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도 생존자들의 증언과 문헌자료를 면밀하게 재검토했으면 한다.

다음으로 반군이 점령한 지역에서 시행한 정책과 관련된 문제들을 살펴볼 수 있다. 여수의 경우에는 경찰서를 공격 · 점령하여 일단 자신들과 적대관계에 있던 세력을 격퇴한 다음, 모든 공공기관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하여 이른바 인민대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인민행정을 시행했다고 한다.

74) 이태는 이 사건이 충동적이고 무계획적으로 일어났다는 점을 강조했다(『이현상』, 205쪽). 이러한 주장은 당시 남로당 지도부나 도당에서 활동한 대부분의 사람들의 증언과 일치한다. 여순사건을 이른바 ‘충동적 돌기물’로 인식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순사건을 일으켰던 주도세력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당 중앙이나 도당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만을 강조하여 충동적이라거나 혹은 무계획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75) 여순사건 3주년을 기념하는 좌담회가 남부군이 활동하던 지리산에서 열렸다. 당시 유화렬은 제주출동소식을 전해듣고 폭동조직을 급속하게 추진한 것은 사실이나, 연대 조직위원회로부터 구체적인 계획과 과업의 지시가 하달되었음도 아울러 밝힌 바 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상당히 치밀한 계획 하에 여순사건이 추진되었음을 알 수 있다(『빨치산자료집』 7,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96, 42쪽).

76) 유관중은 자신이 처음에 제기한 ‘비상나팔신호설’을 부인하고 ‘예광탄신호설’로 바꾸었다(『여수, 제14연대반란사건』 1, 『현대공론』 1989년 2월호, 435쪽 및 같은 글 2, 같은 책 1989년 3월호, 423쪽 참조). 그는 오히려 비상나팔은 당시 연대작전주임이었던 강성운 대위가 반란을 진압하려고 불게 한 것이라 주장하였다(『여수, 제14연대반란사건』 2, 423쪽).

77) 김계유는 예광탄 총성이 무기고와 탄약고를 점령했다는 신호라고 주장했다(『1948년 여순봉기』, 『역사비평』 1991년 겨울호, 254쪽).

78) 『빨치산자료집』 7,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96, 42쪽.

여수지역은 약 일주일동안 봉기세력이 장악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경찰 · 우익정당과 청년단체 · 지주 · 자본가 등 자신들과 대립관계였던 인사들을 체포 · 구금하였다. 이른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이들을 처형하거나 방면하기도 했었다. 이러한 과정이 인민재판이라는 형식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주장과 인민재판은 적어도 여수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맞서 있는 실정이다.⁷⁹⁾

당시의 미군의 정보로도 여수와 순천, 벌교 등지에서 인민재판이 열렸다고 기록⁸⁰⁾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인민재판의 형식과 과정, 그리고 주도세력 및 대상자 등은 불분명하다. 따라서 점령지역 가운데 어느 지역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그리고 누가 인민재판을 실시했으며 인민재판의 대상이 되었는지를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인민재판과 함께 여수에서 개최된 인민대회와 관련된 문제가 언급되었다. 당시 자료뿐만 아니라 기존의 연구에서는 인민대회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그 가운데 논란이 되었던 것으로는 중앙동 로터리에 모인 시민들의 규모와 주도세력 등의 문제이다. 규모는 자료와 연구성과마다 제각각 인데, 수만 명에서 수백 명까지로 기록되어 있다.⁸¹⁾ ‘수만명설’은 당시 여수주민이 약 6-7만 명이라는 점과 중앙동 로터리의 면적을 고려하면 과장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⁸²⁾ ‘5백명설’은 오히려 축소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前者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한 반면, 後者는 주민들의 소극적인 참여를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79) 박찬식, 「7일간의 여수」; 김남식, 앞의 책, 1975; 1984, 385쪽; 김석학 · 임종명, 앞의 책, 60-67쪽. 한편, 순천에서는 인민재판에 의해 500여명이 학살되었다는 주장도 있다(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 1988, 34쪽). 순천의 인민재판은 10월 21일 오후 1시 법원 마당에서 열렸는데, 위원장 김기수 등이 주도했으며, 순천경찰서장 양계원, 광복청년단장이정렬 등이 체포되어 트럭에 매달려 물매를 맞고 끝내는 총살된 후 휴발유를 끼얹어 소각되었다고 한다(유관중, 「여수, 제14연대반란사건」 3, 『현대공론』 1989년 4월호, 389-390쪽). 그런데 이재한의 글에서는 철도역 광장에서 인민재판이 열렸다고 서술하였다(「전남반군의 진상」, 106쪽 참조). 이에 반하여 반충남은 적어도 여수에서는 인민재판이 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14연대반란50년결산집』, 여수문화원, 1997, 188-189쪽).

80) 『주한미군주간정보요약』 5, 1990, 661쪽.

81) 인민대회에 모인 숫자를 ‘수만명 내지 3-4만명설’이라 주장한 연구로는 육군본부 정보참모본부의 『공비연혁』(1971, 204쪽)과 김남식의 『남로당연구』 1(383쪽), 황남준의 앞의 논문(463쪽)이 해당된다. ‘수천명설’은 김석학 · 임종명의 『광복30년』 2(54쪽), 그리고 김계유는 『여수여천발전사』(반도, 1988, 318쪽)에서는 ‘500명설’을, 「1948년 여순봉기」(262쪽)과 「여순사건의 회고」(184쪽)에서는 ‘1천명설’을 주장했다.

82) 이효춘, 앞의 논문, 38쪽. 한편, 순천의 경우에는 1948년에 인구조사를 하지 않았으나 4만명 내외로 추산하였다(『순천통계연보』, 순천시, 1974, 27쪽).

20일 오후 여수인민대회를 주도한 세력은 여수지역의 좌익단체들이라 하거나,⁸³⁾ 14연대 봉기를 주도했던 지창수 상사와 좌익단체가 합동으로 했으리라는 주장⁸⁴⁾으로 엇갈리고 있다. 당시 인민대회를 주도한 좌익계 인물로는 李容起 · 李昌洙 · 俞穆允 · 金貴榮 · 文聖輝 · 金相烈 · 朱元錫 · 朴采英 · 徐鍾鉉 등이었다.⁸⁵⁾ 이들은 인민위원회 · 민애청 · 민주학생동맹 · 민주여성동맹 · 철도노조 · 교원노조 등을 주도한 인물들로서 일제 강점기부터 여수지역 좌익세력의 핵심인물들이었다.⁸⁶⁾ 그리고 좌익계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했다는 점도 지적된 바 있다.

이 점과 관련하여 14연대 군인들과 좌익세력이 힘을 합해 여수를 점령하는 과정과 인민대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누가 주도권을 행사했는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만약 14연대 군인들이 2선으로 후퇴했다면 그 이유와 배경 등도 살펴보아야 하리라 생각한다. 또한 적극적이건 소극적이건 인민대회에 참여했던 계층이 왜 참여했는지, 인민대회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당시 인민대회를 전후하여 여수에서는 포스터와 인공기가 게양되었고, ‘제주도출동거부 병사위원회’의 이름으로 제주도출동 절대반대 · 미군철폐 · 인공수립 등을 골자로 한 성명서가 발표되었다고 한다. 또한 인민대회에서는 북한정권 수호 · 인민위원회의 행정기관 접수 · 이승만 정권 타도와 법령 무효화 · 토지개혁 실시 · 친일악질경찰과 반동분자 숙청 등 6개 항목의 결정서가 채택되었다. 이들이 천명한 목표에 따라 활동이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과 우익인사들이 체포 · 구금되거나 처형되었다. 혹은 경찰과 민간인 가운데 양심적이라 하여 풀려나기도 했었다.⁸⁷⁾ 이로써 보건대 여순사건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한정권을 지지하는 좌익성향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다시 말해 반란적 성격과 폭동적 성격이 혼재되었다는 주장⁸⁸⁾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편, 봉기세력의 점령기간 중에 그들의 만행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보수적 시각에서 이루어진 초기의 연구가 대부분 그러하였다.⁸⁹⁾ 반면에 우익계의 보복과 군경의 과잉

83) 박찬식, 「7일간의 여수」, 『새한민보』 1948년 11월 하순 ; 『한국현대사자료총서』 7, 1986 참조.

84) 전남일보, 「여순사건」, 『광주전남현대사』 2, 136-137쪽.

85) 인민대회에 여수여중 宋郁교장이 참석했다는 주장이 있으나(김석학 · 임종명, 앞의 책, 25쪽), 실제로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한다(반충남, 앞의 글, 『말』 1993년 9월호). 그런데도 『공비연혁』(213쪽) 등 보수적 시각에 쏠려진 연구에서는 송옥 교장을 반란을 총지휘한 인물로 서술하였다.

86) 김인덕, 「식민지시대 여수지역 민족해방운동에 대한 일고찰」, 『성대사림』 7, 1991, 69-85쪽 참조.

87) 박찬식, 「7일간의 여수」 ; 황남준, 앞의 논문, 464쪽 등 참조.

88) 황남준, 앞의 논문, 460쪽.

89) 현윤삼, 「전남반란사건의 전모」 ; 설국환, 「여순반란」, 『해방 22년사』, 문학사, 1967, 253쪽 ;

진압 역시 그에 못지않았다는 점을 강조한 글도 적지 않다.⁹⁰⁾ 이 문제와 관련하여 반군과 좌익세력이 경찰과 우익인사들을 적대시하고 처형한 원인이나 동기에 대해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체포·구금중인 경찰 및 민간인 200여명을 석방하기도 했다.⁹¹⁾ 그러한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당국과 미군의 대응과정에 대해 검토한 기존의 연구도 없지 않다. 국군과 경찰이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을 날짜별 혹은 단계별로 서술하였으며, 작전의 특징도 아울러 언급하고 있다. 예컨대 진압군은 10월 21일에 반군토벌사령부를 설치한 다음, 계엄령을 선포⁹²⁾하고서 8개 연대에서 11개 대대를 차출, 여순지구에 투입하였다. 아울러 기갑연대와 항공대·군함 등을 동원하여 육·해·공 합동작전으로 10월 27일에 반군의 마지막 보루였던 여수를 탈환했다.

이러한 진압작전은 미군의 작전지휘권과 군수물자의 지원아래 이루어졌는데, 진압군은 민怨의 대상이 되었다. 진압군이 민간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진압대상으로 취급함으로써 무고한 양민들의 희생이 많아졌기 때문이다.⁹³⁾ 탈환된 지역에서는 경찰·우익인사·청년단원 등이 “復讐와 私感” 등과 주관적 기준에 의해 이른바 「부역자」를 색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손가락총”이라는 말이 유행하였으며 개인적 감정이나 중상모략이 난무했었다.⁹⁴⁾ 이로 말미암아 무고한 희생자가 더욱 많아졌고,⁹⁵⁾ 그 희생의 주체가 누구인지 애매한 경우가 많았음은 물론이다.

그리고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양민의 피해도 적지 않았으므로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을 강조하는 글이 많다.⁹⁶⁾ 이 점과 관련하여 군 당국이 과잉진압을 해야만 했던 배경이나 원

『한국전쟁사』 1, 1967, 458쪽 ; 『공비연혁』, 1971, 204쪽 ; 김석학·임종명, 앞의 책, 51-69쪽 ; 유건호, 「여순반란사건」, 『전환기의 내막』, 1982, 150쪽 ; 『대비정규전사』, 1988, 34쪽 ; 손동희,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 아가페출판사, 1994 ; 1998 개정판, 195-197쪽 등 보수적 시각에서 씌어진 글은 한결같이 좌익계의 만행을 지적하고 있다.

90) 홍한표, 「전남반란사건의 전모」 ; 설국환, 「반란지구답사기」 ; 김계유, 「내가 겪은 여순사건」, 『전남문화』 4, 1991, 54-57쪽 ; 김계유, 「1948년 여순봉기」, 『역사비평』 1991년 겨울호, 289-292쪽 ; 고영민, 『해방정국의 증언』, 사계절, 1987, 215-216쪽 ; 이효춘, 앞의 논문, 1996, 33-38쪽 등.

91) 황남준, 앞의 논문, 464쪽.

92) 계엄령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전남지역에 대한 계엄령이 국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헌시비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국회사무처, 『제1회 국회속기록』 제92호, 1948년 10월 30일자, 706쪽).

93) 이효춘, 앞의 논문, 33쪽.

94) 『보성군사』, 1995, 414쪽 ; 이효춘, 앞의 논문, 34쪽.

95) 당시의 참상을 목격한 소설가 鄭飛石은 우리 민족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며 절망감을 토로했다. 그는 당시 문교부과건 현지조사반장으로 내려와 이 지역의 비참한 상황을 글로 발표한 바 있다(『麗順落穂』 1-3, 1948. 11. 20 ; 『여수문화』 5, 여수문화원, 1990, 32쪽).

96) [부록]-B의 「지역중심의 연구」 참조.

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반군세력의 전투역량을 과대평가 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를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당시 정부와 미군은 가능한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았었다.⁹⁷⁾ 그것은 봉기세력이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과 미군정을 부정한데다 유엔에서 한국문제가 논의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제 봉기세력과 정부당국 그리고 지역민의 피해상황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를 알아보자. 지역민의 피해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나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다가 최근에 주목할만한 자료집이 간행되었다.⁹⁸⁾ 그밖에는 대체로 당시에 발표된 내용을 재인용하는데 지나지 않은 편인데, 전라남도 후생국에서 발표한 피해상황이 자주 인용되는 편이다.⁹⁹⁾ 즉 11월 1일 현재 인명 피해중 사망 2,533명, 행방불명 4,325명, 가옥소실 1,538호라는 것이다. 아래의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위의 통계와 약간의 차이가 없지는 않으나 크게 다르지 않는 경우도 있다. 다음의 자료가 그것에 해당된다.

<표 1> 여순사건시 인명 및 가옥 피해상황¹⁰⁰⁾

구분 지역	사망	중상	경상	행방불명	全潰	半潰	손해액(원)
곡성	6	2			4	6	4,500,000
구례	30	50	100		36		14,600,000
광양	57						5,000,000
여수	1,200	800	250		燒失 1,538	198	377,360,000
순천	1,134		103	818	13		13,500,000
고흥	26		41	8			
보성	80	31	30	7	3	2	2,000,000
소계	2,533	883	524	833			416,960,000

당시 여러 기관에서 발표한 피해상황을 잘 정리한 연구도 있는데, 미국인과 미군에게 는 봉기세력의 적대행위나 피해가 전혀 없었다고 한다.¹⁰¹⁾ 그리고 정부에서 국회에 보고한 자료¹⁰²⁾에 의하면, 전투회수 89회, 출동한 부대규모는 육군 4,872명과 해군 2,942명, 반군의

97) 짐 하우스만 · 정일화 공저, 앞의 책, 1995, 171쪽.

98) 여수지역사회연구소 편, 『여순사건 실태조사 보고서』 1, 1998.

99) 호남신문 1948년 11월 5일자 참조.

100) 대동신문 1948년 11월 9일자 ; 김점곤, 앞의 책, 204쪽에서 재인용.

101) 김점곤, 앞의 책, 204쪽.

병력은 약 3,700명이라 하였다. 국군의 전사 142명, 부상 189명, 행방불명 16명인데 반하여, 반군은 遺棄 시체 826구, 포로 2,856명으로 보고하였다.

이처럼 자료에 따라 피해상황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G-2보고서에서도 당시에 발표된 사상자의 규모가 매우 불완전하다고 보았으며,¹⁰³⁾ 좌익 측의 통계는 발표된 바 없으므로 당시에 정부와 군 당국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수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재산상의 피해는 통계가 더욱 불완전한 편인데, 40억여원에서 약 100억원으로 집계한 경우도 있다.¹⁰⁴⁾ 특히 여수지역은 인적·물적 피해가 극심했으며, 두 차례의 화재사건에 의해 피해액이 급증하였다. 향토사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10월 26-7일에 두 차례에 걸친 방화사건은 지금까지도 방화의 주체가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한다. 연구자들마다 반군 혹은 진압군 측으로 추정할 뿐이다. 두 차례의 불로 인해 여수 시가지는 최소한 1/4정도가 소실됨으로써 막대한 재산피해를 냈다.¹⁰⁵⁾

순천의 경우에는 물적 피해보다는 인명피해가 컸었다. 반군의 점령기간이 2-3일에 불과하였지만 희생자가 무려 500-1,000명 선으로 파악된 점¹⁰⁶⁾에서 그러하다. 순천 지역의 경우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 주목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단순히 좌우익간에 정치적 갈등이 심했던 것에서 그 원인을 찾기도 했다.¹⁰⁷⁾ 이 지역의 경우 좌우익 학생단체 사이에도 대립이 축적되어왔던 것 같다. 그 결과 반군이 순천을 점령한 후 좌익 학생들은 우익학생단체를 주도했던 인물들에게 보복을 가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손양원 목사의 두 아들이라 할 수 있다.¹⁰⁸⁾ 따라서 좌우익 학생단체 사이에 갈등과 대립이 축적된 배경을 밝히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여순사건의 성격에 대한 연구 성과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보수적 시각에서 이루어진 연구에서는 제주 4·3사건에 이은 육지에서의 제2전선을 형성하여 대한민국의 전복을 기도한 반란으로 파악하였다.¹⁰⁹⁾ 중립적 시각의 연구자들은 폭동적 성격과 반란적 성격

102) 국회사무처, 『제1회 국회속기록』 제124호, 1246-1247쪽.

103) 『駐韓美軍週刊情報要約』 5,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90, 659쪽.

104) 호남신문 1948년 11월 5일자·같은 신문 1949년 2월 8일자 참조 ; 김점곤, 앞의 책, 204쪽.

105) 미군 측은 1948년 11월에 작성한 보고서에서 여수가 4/5가 불탄 것으로 파악하였으며(『주한미군주간정보요약』, 680쪽), 10월 28일자에서는 1/4이 소실된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한다(『주한미군정보일지』 6, 550쪽). 한편, 여수의 3/5이 불탔고, 피해가옥이 수천 호이며, 이재민이 수만 명이라는 당시의 언론 보도도 참고된다(동광신문 1948년 10월 31일자·11월 2일자·11월 5일자).

106) 『주한미군주간정보요약』 5, 640쪽 ;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 458쪽 ; 존 메릴, 신성환 역, 앞의 책, 205쪽 ; 유건호, 「여순반란사건」, 『전환기의 내막』, 153쪽.

107) 황남준, 앞의 논문, 462쪽.

108) 손동희, 앞의 책, 192-214쪽 ; 이효춘, 앞의 논문, 40쪽의 각주 110 참조.

이 혼재된 것으로 보았다.¹¹⁰⁾ 진보적 시각에서는 해방이후 전개된 무장봉기의 일환¹¹¹⁾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여순사건의 경우 순수한 의미의 군인폭동인지 아니면 복합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라고 해야 할지 아직은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다. 좀 더 기초적인 자료조사와 연구가 진행되어야만 성격을 올바르게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처음에는 군인들에 의한 반란으로 시작했으나, 지역민들이 적극 참여한 민중항쟁적 요인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여순사건의 결과와 영향에 대해 언급한 연구도 없지 않다. 여순사건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반공체제로의 전환에 성공하였다는 것이다.¹¹²⁾ 즉 이 사건으로 인해 국가 보안법이 만들어졌으며, 주한미군의 철수가 당분간 연기되었고, 대대적인 숙군작업에 의해 좌익계 군인들이 척결되었다는 사실 등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보더라도 여순사건은 대한민국의 건국과정에서 중요한 획을 긋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V. 맺음말

지금까지 여순사건에 대한 자료의 성격과 연구 성과를 분석하고, 해당 주제의 연구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주로 시각의 차이라든가, 논란이 되는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이제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방향이나 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맺음말에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로 제14연대의 좌익계 사병들이 폭동을 왜 일으켰는가를 객관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¹¹³⁾ 아울러 군인들의 봉기로 비롯된 사건이 전남 동부지역 사회에 크게 확산된 배경이나 원인도 밝혀져야 한다. 다른 지역에서도 군인들에 의한 봉기가 시도된 경우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타 지역에서는 민간인들이 적극 동조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제주 4·3사건과 여순사건에서는 특이하게도 일부 지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던 것이다. 그러한 원인이나 배경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점과 관련하여 지역민들과 군인들이 참여한 동기를 따로 떼어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109) [부록]-B의 1-6 · 9-10 · 14 · 17 등의 글 참조.

110) 황남준, 앞의 논문, 460쪽.

111) [부록]-B의 8 · 20 및 박세길,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1, 돌베개, 1988 참조. 한편, 박명림은 여순사건을 ‘밀로부터의 마지막 저항’이라 표현하였다(앞의 책, 403-415쪽).

112)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2, 나남출판, 1996, 437쪽.

113) 정청주는 연구시각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하였다(앞의 논문, 85쪽).

둘째로 군경간의 갈등과 대립이 영암 구례 남원 등 주로 전라도 지역에서 심하게 나타난 이유가 무엇인지를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지역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요인이 있는지를 찾아보았으면 한다.

셋째로 여순사건의 전개과정을 기존의 연구에서는 여수와 순천 지역만을 중심으로 검토해왔다. 그러나 벌교와 보성, 구례, 광양, 고흥 등의 지역에서도 어떠한 양상이 나타나는지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외곽지역의 경우에 봉기의 주도세력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뿐만 아니라 사건의 전개과정을 시기별로 세분해 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¹¹⁴⁾

넷째로 여순사건을 일으킨 구성원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요청된다. 여순사건을 일으킨 14연대의 좌익계 사병층과 좌익계 지역활동가의 행적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적은 거의 없었다. 김지화나 홍순석에 대한 단편적인 사실들이 알려져 있을 뿐 지창수 상사에 대한 행적조차 거의 파악되지 않고 있다. 특히 하사관 이하의 사병들에 대한 특징과 그들이 입산한 이후에 보이는 활동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으면 한다.¹¹⁵⁾ 아울러 지역민들이 입산한 원인과 입산 이후의 행적 등에 대한 검토 역시 병행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여순사건에 가담하여 입산한 사병들과 지역민들의 행적을 밝힐 수 있는 자료들이 간행되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여순사건의 주도인물과 참여층의 특징을 밝힐 수 있다면 사건의 진실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 이는 여순사건의 성격과 역사적 의의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한편, 피해를 야기시킨 주체를 애매하게 처리한 자료가 많으므로 그 점을 정확히 짚어 주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여수지역사회연구소에서 간행한 자료집¹¹⁶⁾이 크게 도움을 준다. 이 자료에 의하여 여수지역 희생자 884명에 대한 피해형태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¹¹⁷⁾ 연령별 · 지역별 · 처형방법 등에 의해 분류되어 있는 것이다. 다만, 보도연맹과 6·25전쟁의 희생자도 포함된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고한 양민들의 희생자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작업도 병행되었으면 한다. 잘잘못을 가리는 차원이 아니라 역사적 교훈을 얻기 위해서라도 그러한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114) 정청주, 「여순사건 연구의 현황과 과제」, 『여수대학교 논문집』 13-1, 86쪽.

115) 이태에 의하면, 이진범 · 이영희 · 송관일 · 김홍복 · 김금일 등 여순사건을 일으킨 하사관 계층이 빨치산의 주력을 형성했다고 한다(『여순병란』 하, 61쪽 ; 「강동정치학원과 지리산 유격대」, 『역사비평』 1988년 가을호, 349쪽).

116) 『여순사건 실태조사 보고서』 1, 1998.

117) 위의 책, 86-89쪽. 한편, 『여순사건 실태조사 보고서』는 여수지역에서 발생한 희생자 800여명의 명단과 거주지 · 연령 · 성별 · 가해 행위세력 등이 수록되어 있다. 여수지역 희생자들을 구체적으로 조사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자료라 하겠다.

여순사건에 대한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할 작업이 없지 않다. 이를테면, 여순사건과 관련된 문헌자료의 체계적인 정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사건이 발생한지 반세기가 지난 현재까지도 증언록이나 자료집의 간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¹¹⁸⁾ 이러한 상황에서 본격적인 연구를 기대할 수가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정부당국은 여순사건에 관련된 문서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경찰의 심문기록이나 보고서, 사법부의 판결문, 군 당국의 각종 자료 등이 그것이다. 나아가 미국 측이 소장하고 있는 관련 자료 등도 모두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민들이 경험하거나 목격한 내용을 증언으로 채록하는 작업도 매우 시급한 일이다. 사건의 당사자와 목격자들이 점점 줄어드는 실정이므로 더욱 그러하다. 생존자들의 다양한 증언을 확보함으로써 여순사건을 보다 생생하게 복원할 수 있을 것이다. 증언을 통하여 문헌자료에서는 찾을 수 없는 “장구통”이나 “양날백이”와 같은 당시에만 사용되었던 용어를 찾을 수 있다.¹¹⁹⁾ 또는 진압이후 경찰의 존재를 ‘하늘과 땅에도 없는 천상천하’였다거나, 희생자의 집단매장지를 확인하는 과정, 좌우익에 의해 처형되는 상황 등도 증언을 통해 새로운 사실을 밝힐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사건 당시와 직후에 불려졌다는 ‘봉선화’와 ‘여수부르스’, ‘산동애가’나 ‘부용산가’ 등과 같은 노래가 유행한 사연에 대해서도 증언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증언의 중요성을 새삼스럽게 강조할 필요는 없으리라 믿는다. 이처럼 다양한 증언을 채록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경험한 지역민의 협조가 절실히 요청된다. 당시 진압군의 지휘관들이 남긴 자서전이나 회고록, 혹은 빨치산 출신들이 남긴 자료가 주류를 이룬 상황이기에도 더욱 그러하다. 이상과 같이 여순사건에 관한 자료의 내용과 특징, 그리고 기존의 연구현황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여순사건에 대한 자료와 연구물이 조금씩이나마 축적되어온 과정을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정리한 이 글이 본격적인 연구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118) 여순사건에 대한 증언자료는 간단없이 발표되어 왔는데, 중복된 경우도 없지 않다. 이에 대한 소개는 정청주의 앞의 논문, 87쪽의 주 71·72를 참고하라.

119) “장구통”과 “양날백이”란 좌익과 우익 양편 모두에 협조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이러한 사실은 순천대 사학과 학생들이 채록한 증언을 통해 알 수 있었다.

